第6代 議會

議政白書



忠淸南道議會

第6代 議會

議政白書

11810

忠淸南道議會



충 청 남 도 의 회

The Chungcheongnam-do Provincial Council

- http://council.provin.chungnam.kr -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충청남도의회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민의수렴의 터전으로서 올바르고 참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항상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며 검소한 생활에 솔선한다.

3. 우리는 의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4.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거나 특정인의 수혜를 위한 알선 등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항상 연구·노력하는 자세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구현하는데 온 힘을 모은다.

발 간 사



우리 6代 道議會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第6代 忠淸南道議會 議政白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記錄은 記憶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잊혀지기 쉬운 과거를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기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白書에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면서 정열을 쏟았던 36인의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충실한 白書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地方議政 發展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道民으로부터 신뢰받는 代議機關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땀과 지혜를 모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道議會 發展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자료 수집과 편찬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2월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 욱수

第6代 忠淸南道議會

前 半 期 議 長 團

('98. 7 ~ '00. 6)



議 長
李 鍾 洙



副議長
李 福 求



副議長
韓 昭 煥

第6代 忠淸南道議會

前 半 期 常任委員長

('98. 7 ~ '00. 6)



議會運營委員長
崔 敬 燮



行政自治委員長
尹 錫 雨



教育社會委員長
李 峻 雨



農水產經濟委員長
姜 昌 求



建設消防委員長
申 晧 均

第6代 忠淸南道議會

後 半 期 議 長 團

('00. 7 ~ '02. 6)



議 長
金 載 鳳



副議長
朴 東 允



副議長
許 榮 一

第6代 忠淸南道議會

後 半 期 常任委員長

('00. 7 ~ '02. 6)



議會運營委員長
金 文 圭



行政自治委員長
丁 淳 平



教育社會委員長
林 聲 奎



教育社會委員長
李 鎭 煥



農水產經濟委員長
鄭 龍 海



建設消防委員長
朴 贊 中

議 員

第6代 忠淸南道議會 議員 名單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李 鍾 洙 (1932. 7. 9)	천안시 제1 (자민련) · 단국대 경영대학원 졸(석사) · 자민련 충남도지부 수석부위원장 · 천안시 개발위원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충남지역부의장 · 제4대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 의장(전 · 후반기) · 제3대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장 · 제6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회의장	천안시 원성동 555-1 우성5차A 501호 자: (041)551-3856 휴: 011-409-3619
 丁 淳 平 (1958. 2.18)	천안시 제2 (자민련)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정경대학생회장)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 · 해병대 중대장 ·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 · 자민련 천안(갑)지구당 부위원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 제6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천안시 신방동 성지ⓐ201-1802 자: (041)574-0724 휴: 017-432-0724
 金 文 圭 (1950. 9.23)	천안시 제3 (자민련) ·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제4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 성환문화원 이사 ·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부회장 · 대한적십자사 성환 · 직산봉사회 자문위원 · 광성실업 대표 · 제6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 48 자: (041)581-2310 사: (041)581-2415 FAX: (041)581-2027 휴: 017-421-4488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李 鎭 煥 (1953. 7. 5)	**천안시 제4 (자민련)** · 건국대학교대학원 지방행정학과졸(석사) · 입장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천안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 부지부장 · 천안시 체육회 이사 · 재향군인회 이사 · 제6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사회위원장	천안시 쌍용동 389-3 현대ⓐ 102-903 자 : (041)573-1963 사 : (041)556-4567 휴 : 011-421-6560
 尹 錫 雨 (1951. 1.25)	**공주시 제1 (자민련)** · 충남대 행정대학원 수료 · 공동체 의식개혁운동 충남공동의장 · 주월 한국군방송국 아나운서 · 한국연설인협회 부회장 · 자민련 공주지구당 공동위원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장(후반기) · 제6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공주시 금성동 20 - 1 자 : (042)583-9441 사 : (041)856-6601 휴 : 011-433-9441
 孫 在 卓 (1936. 5. 1)	**공주시 제2 (자민련)** ·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수료 · 충청남도정 자문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장 · 공주시 개발위원회 회장 · 충남발전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충청남도의회의원	공주시 신관동 71 자 : (041)855-5321 휴 : 011-454-3533
 李 峻 雨 (1946. 7.17)	**보령시 제1 (자민련)** · 충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 보령시 새마을지회 문고회장 · 사단법인 한국 4-H연맹 보령시지회장 · 보령시 의회의원 · 제5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 제6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사회위원장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234 자 : (041)932-7319 사 : (041)933-4518 휴 : 011-899-7319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申 載 元 (1943. 4.10)	**보령시 제2 (한나라당)** · 경희대 한의과 졸 · 대천청년회의소(JC)회장 · 대천JC특우회회장 · 보령축산업협동조합장(3선)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범죄예방위원 · 제4, 5, 6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보령시 동대동 983-96 자 : (041)935-3547 사 : (041)934-1553~4 휴 : 011-455-1553
 金 載 鳳 (1939. 8.14)	**아산시 제1 (자민련)** · 온양청년회의소 3대 회장 ·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위원 · 충청남도백제문화권 개발추진위원 · 제4대 충청남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제6대 충청남도의회 의장(후반기)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의장	아산시 풍기동 231 인정프린스ⓐ101-1305 자 : (041)545-3488 휴 : 011-422-3379
 朴 應 煥 (1934. 1. 25)	**아산시 제2(자민련)** · 경희대 법과대학 졸 · 선장농협조합장 · 농협중앙회 대의원 · 아산시 농협조합장 협의회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54 자 : (041)542-0958 휴 : 017-421-0958
 姜 泰 鳳 (1946. 2. 20)	**아산시 제2(자민련)** · 동국대 식품가공학과 졸 · 아산청년회 14~15대 회장 · 아산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장 · 정우새마을금고 이사장 · 온천초, 온양중 총동창회 부회장 · 자유총연맹 아산시 지부장 · 온양로타리클럽 회장	아산시 온천동 145-5 자 : (041)545-4885 사 : (041)542-8770 휴 : 011-401-9844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李 福 求 (1945.10.17)	**서산시 제1 (자민련)** · 동국대 농학과 졸 · 서산청년회의소 회장 · 충남 새마을문고 지부장 · 민정당 서태안지구당 사무국장 · 민주평통 자문위원 · 제4, 5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 제6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서산시 읍내동 212 자 : (041)665-2692 사 : (041)665-4469 휴 : 011-401-9500
 許 榮 一 (1937. 3.17)	**서산시 제2 (자민련)** ·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졸 · 서산시 고북 · 해미면장 · 민주평통 자문위원 · 충청남도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 · 충청남도 '97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5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제6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91-12 한서ⓐ 203 자 : (041)688-3447 사 : (041)688-6000 휴 : 019-488-3447
 林 聲 奎 (1939. 9.28)	**논산시 제1 (자민련)** · 고려대 농대 졸 · 과학기술처 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생화학실 연구원 · 자민련 충남도지부 부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논산군지부장 ·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대표 · 논산군 의회의장 ·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제6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사회위원장	논산시 내동 동신ⓐ 101동 105호 자 : (041)735-7007 사 : (041)735-3644 휴 : 018-412-9009
 宋 中 彬 (1939. 10. 26)	**논산시 제1 (민주당)**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한국예총 논산시지부장 · 논산시 문화관광계장 · 논산시 체육회부회장	논산시 반월동 68 자 : (041)735-2151 사 : (041)736-7211 휴 : 011-437-9151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金 容 鎬 (1934. 5. 7)	**논산시 제2 (자민련)** · 중앙농민대 농업경영학과 졸 · 동학사 온천개발 조합장 · 자민련 논산지구당 고문 · 민주평통 자문위원 · 대영산업개발(주) 회장 · 제4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의원	논산시 부창3동 276-96 자 : (041)735-5839 사 : (041)742-6150 휴 : 011-401-2129
 宋 榮 哲 (1960. 5. 9)	**논산시 제2 (민주당)** ·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원 3년 졸업(약학박사) · 논산시 체육회 부회장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시청 범죄예방 봉사위원 · 민주당 논산, 금산지구당 상무위원 · 계룡신도시 발전협의회 고문 · (주)유일약품 대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기산ⓐ 101-1102 자 : (041)742-9971 사 : (041)741-6464 휴 : 011-409-3930
 沈 貞 洙 (1952. 6. 1)	**금산군 제1 (민주당)** · 방송통신대 농학과 중퇴 · 대전법원 조정위원 · 금산신문사 대표 · 민주평통 금산부회장 · 한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 국제와이즈맨 금산클럽회장 · 금산군 의회의원	금산군 금산읍 상리 306-8 삼호ⓐ 101-1406 자 : (041)752-0412 사 : (041)753-4905 휴 : 011-451-0412
 朴 贊 中 (1947. 3. 3)	**금산군 제2 (무소속)** · 동국대 행정학과 졸 · 前 통합민주당 금산지구당 위원장 · 제13.15대 국회의원 출마, 금산군수 출마 · 농촌문제 연구소장 · 카톨릭농민회 상임위원 ·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 대전.충남지부장 · 제6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장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61- 3 자 : (041)751-2362 사 : (041)751-2361 휴 : 016-239-9988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韓 昭 煥 (1942. 5. 2)	**연기군 제1 (자민련)** · 동국대학교 졸 · 제1.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남도정 자문위원 · 민주평통 자문위원 · 제5대 충청남도의회의원 · 제6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158 신동아ⓐ 102-1007 자 : (041)865-1231 사 : (041)865-1232 휴 : 011-465-1233
 康 華 燮 (1949. 2. 13)	**연기군 제2 (자민련)** · 대전고등학교 졸 · 화성농장 대표 · 연기축산협동조합장(2선) · 연기군체육회 이사 · (주)중부물류센타추진위원회 이사 ·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 이사 · 국제라이온스 355-D지구 마약위원장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71-2 자 : (041)866-7088 사 : (041)865-3555~7 휴 : 011-450-8606
 姜 泳 成 (1948.12.28)	**부여군 제1 (자민련)** · 부여고등학교 졸 · 자민련 부여군지구당 부위원장 · 충청남도 도정평가위원회 위원 · 민주평통 자문위원 · 새마을운동 부여군지회 지회장 · 백제문화 선양위원회 위원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90 자 : (041)834-9995~6 사 : (041)834-9993~4 휴 : 011-277-1300
 姜 昌 求 (1938. 3.15)	**부여군 제2 (자민련)**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 · 부여군정 자문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 부여군 개발위원회 부회장 · 충남발전협의회 위원 · 임천농협조합장(6선) · 제5대 충청남도의회의원	부여군 임천면 점리 63 자:(041)834-7798~9 사:(041)833-2280~3 휴:011-455-9092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柳 炳 基 (1950. 1. 15)	**부여군 제2 (자민련)** · 대전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대통령 선거인 · 민주평통 자문위원 · 부여군의회 의원 · 새마을운동 부여군 지회장 ·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자문위원장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398 자 : (041)833-2775 사 : (041)832-7333 휴 : 011-425-2775
 全 英 煥 (1962. 8. 7)	**서천군 제1 (자민련)** · 원광대 치과대학원 졸 (치의학박사) ·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수료 · 서천군 정책자문단장 · 서천 환경운동연합의장 · 서천군 발전협의회장 · 장항종합치과의원 원장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11 자 : (041)956-8933 사 : (041)956-3800 휴 : 011-550-6600
 韓 鮮 敎 (1936. 8. 21)	**서천군 제2 (자민련)** · 전북대 상과대학 졸 ·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사회과장 · 서천군 농촌지도소장 · 서천군 지역개발연구소장 · 자민련 서천지구당 부위원장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5-13 자 : (041)953-9705
 朴 泳 祚 (1952.10.15)	**서천군 제2 (자민련)** · 기독음대 졸 ·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수료 · 서천군 재향군인회장 · 바르게살기 서천군협의회장 · 장애인복지회 서천지회장 · 민주평통 자문위원 · (주)서천신문회장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63-19 자 : (041)952-2929 사 : (041)952-8003 휴 : 011-455-8001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鄭 善 興 (1938.10.12)	**청양군 제1 (자민련)** · 성균관대학 3년 중퇴 · 국가대표 배구선수 및 감독 · 충청남도체육회 부회장 · 대한민국 광복회원(유공자 자손) · 제4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61 자 : (041) 943-4747 사 : (042) 522-6485 FAX : (042)523-2612 휴 : 016-412-2611
 禹 智 命 (1943. 8.25)	**청양군 제2 (자민련)** · 충북대 약학과 졸 · 민정당 청양·홍성지역 부위원장 · 청양군 약사회장 · 제4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 제5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23 자 : (041)942-0022 942-0400 사 : (041)942-0025 휴 : 011-455-0400
 田 溶 鳥 (1940. 5.20)	**홍성군 제1 (자민련)** · 충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위원장 · (주)신영상임고문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연수원 교수 · 충청남도 청년회의소 회장 · 제4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내무위원장	보령시 대천동 37-11 보령ⓐ 나동 105호 자 : (041)935-2020 사 : (041)934-4334 휴 : 017-405-2020
 申 晧 均 (1943. 6.11)	**홍성군 제2 (자민련)**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충청남도 핸드볼협회장 ·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충청남도민주산악회 부회장 · 홍성군 체육회 부회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건교위원장 · 제6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81-4 자 : (041)641-2309 사 : (041)641-2109 휴 : 019-406-4255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李 漢 植 (1937. 3. 5)	**예산군 제1 (한나라당)** ·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 · 도덕성회복 국민운동본부 예산군지부장 · 예산군수 출마 ·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차장 · 농협중앙회 역전지점장 · 농협중앙회 연구위원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80-9 자 : (041)332-4669 휴 : 011-421-7669
 金 重 漢 (1934. 8. 8)	**예산군 제2 (자민련)** · 홍익대 법정학부 졸 · 예산군 삽교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예산군 덕산면장 · 예산군 고덕면장 · 예산군 응봉면장 · 예산군 삽교읍장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643 자 : (041)338-2866 휴 : 011-688-0548
 崔 敬 燮 (1949. 3. 3)	**태안군 제1 (자민련)**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민주평통 자문위원 · 태안군 초대의회 의원 · 태안군 청년회의소 회장 · 태안군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5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농수위원장 · 제6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65-3 자 : (041)674-3569 사 : (041)674-2044 휴 : 019-474-2044
 朴 東 允 (1950. 3. 5)	**태안군 제2 (자민련)** · 명지대 교육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 민주평통 자문위원 · 태안군 재향군인회 고문 · 2002년 꽃박람회 추진 자문위원 · 안면읍 JC회장 · 제4, 5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건교위, 기경위 위원) · 제6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142 자 : (041)673-5158 사 : (041)673-3507 휴 : 011-432-3501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張 俊 燮 (1941.12.25)	**당진군 제1 (자민련)** · 중앙대 산업기술대학원 수료 · 자민련 중앙위원 · 민주평통 자문위원 · 당진군 송악 · 정미면장, 당진읍장 · 대한적십자사충남지사 상임위원 · 제5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55-3 한성ⓐ 103-202 자 : (041)353-9310 휴 : 018-236-9310
 鄭 龍 海 (1950. 7. 1)	**당진군 제2 (자민련)** · 신성대학교 행정실무과 졸업 ·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부회장 ·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 충청남도농어촌발전 심의위원 ·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제5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 제6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농수산경제위원장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73-1 자 : (041)363-2776 사 : (041)362-2776 휴 : 011-432-2776
 金 南 鎬 (1926. 9. 20)	**비례대표 (국민회의)** · 경성공립직업학교 졸 · 농촌지도자 중앙회 회장 · 농림수산부 농정정책자문위원 · 고대 자연자원대학원 1기 동우회장 · (사단법인)충청남도 의정동우회장 · 제4대 충청남도의회의원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61 자 : (041)546-8885 휴 : 017-421-1111
 金 東 鮮 (1945. 3. 2)	**비례대표 (민 주 당)**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계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남도지부 여성특별위원회 조직위원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남도지부 불우이웃지원 본부장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1-9 자 : (041)953-8585 휴 : 016-772-7080

姓名(生年月日)	學 歷 및 主 要 經 歷	住 所/電話番號
 韓 昌 淑 (1946.10. 8)	**비례대표 (자 민 련)** · 대전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장 ·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장 · 충청남도 민주평통 상임위원 · 충청남도 여성정책 심의위원 · 공동모금회 충남지회장 · 충남장애인협회 후원회장	천안시 신부동 545 대림한들ⓐ 204-1501 자 : (041)555-7600 사 : (042)226-0403 휴 : 011-447-9864
 宋 敏 求 (1957.10. 3)	**비례대표 (자민련)** · 충남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 · (사)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장 ·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 자민련 충청남도 청년위원장 · 충청남도 4-H 연합회장 · 자민련 공주연기지구당 부위원장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109 - 2 자 : (041)857-1999 사 : (041)855-5008 휴 : 011-450-2008



第6代議員 身分變動 事項

구 분	지 역	성 명	신분변동사유	비 고
1	아산시 (제2)	朴 應 煥	• 99. 7. 12 궐원(사망) • 보궐선거에 의하여 강태봉의원 당선(99.11.15)	
2	논산시 (제1)	林 聲 奎	• 01. 3. 31 의원 사직 (자치단체장 출마) • 보궐선거에 의하여 송중빈의원 당선(01.4.26)	
3	논산시 (제2)	金 容 鎬	• 99. 11. 12 의원 퇴직 • 보궐선거에 의하여 송영철의원 당선(00. 6. 8)	
4	부여군 (제2)	姜 昌 求	• 00. 6. 30 의원 사직 • 보궐선거에 의하여 류병기의원 당선(00.10.26)	
5	서천군 (제2)	韓 鮮 教	• 99. 3. 9 의원 퇴직 • 보궐선거에 의하여 박영조의원 당선(99. 6.16)	
6	비례대표 (국민회의)	金 南 鎬	• 99. 12. 21 궐원(사망) • 예비후보자가 없어 공석	

忠淸南道議會

忠淸南道議會

議

第6代 議會

의정활동화보

忠淸南道議會







▲ 제6대 의회 의원 의정설명회(98. 7. 9)



▲ 제6대 의회 첫 임시회(제121회) 본회의 장면(의장 이종수)



▲ 제6대 의회 의원 선서 장면(98. 7. 9)



▲ 제6대 의회 개원 축하연(98. 7. 9)



▲ 의정연찬회 장면(98. 9. 9 ~ 9. 10)



▲ 의원 전산 교육 장면(99. 7월, 도 전산교육장)



▲ 일본국 웅본현 의회 우호방문단 접견(98. 8. 25)



▲ 호주연방 남호주주 죤 올슨 수상 등 방문단 접견(99. 10. 12)



▲ 고 박응환 의원 의회장 영결식(99. 7. 14)



▲ 고 김남호 의원 의회장 영결식(99. 12. 23)



▲ 제6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 장면(의장 김재봉)



▲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연석 회의



▲ 시민 · 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2001. 4. 12)



▲ 여성지도자 초청 간담회(2001. 4. 17)



▲ 후반기 의정연찬회 장면(2000. 10. 24 ~ 10. 25)



▲ 도의회 부활 10주년 기념「도의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2001. 6. 8)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부의장 접견(2000. 10. 17)



▲ 호주연방 남호주주의회간 교류협정 의향서 체결(2001. 7. 18)



▲ 도의회 부활 10주년 기념식(2001. 7. 7)



▲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2001. 10. 10)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위원장 최경섭)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워크샵(99. 12. 17 ~ 18)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면(위원장 김문규)



▲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2000. 9. 21)



▲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면(위원장 윤석우)(98. 7. 29)



▲ 대천해수욕장 욕장개발 현장방문 활동장면(99. 3. 18)



▲ 사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현장방문(98. 10. 15)



▲ 안건심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회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하고있는 장면
(99. 11. 30)



▲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위원장 정순평)



▲ 정례회를 대비한 Work-Shop(2000. 11. 15)



▲ 정보화된 위원회 회의장면



▲ 자연사 박물관 건립예정지 현장방문(2001. 12. 1)



▲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장면(위원장 이 준 우)



▲ 연기군 양지마을 현장활동 장면 (98. 8. 6)



▲ 보건환경연구원 현장활동 장면(98. 11. 28)



▲ 안건심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하고있는 모습(98. 11. 26)



▲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장면(위원장 임성규)



▲ 태안반도 사구 현장방문(2001. 2. 13)



▲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장면(위원장 이진환)



▲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2001. 8. 9)



▲ 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장면(위원장 강창구)



▲ 현장방문(내수면 개발사업소) (98. 11 .25)



▲ 농정관련 단체 · 협의회장과의 간담회(99. 11. 2)



▲ 논산딸기시험장 현장 활동 장면(99. 3. 22)



▲ 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 장면(위원장 정용해)



▲ 인공어초설치 현장방문(200. 8. 24)



▲ 농수산업 관련 기관 · 단체장 초청 간담회(2001. 3. 15)



▲ 부여 토마토시험장 현장방문(2001. 11. 27)



▲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장면(위원장 신호균)



▲ 당진 서해대교(서해안고속도로) 건설 현장방문(98. 12. 22)



▲ 논산 배수펌프장 건설 현장방문(98. 11. 26)



▲ 진산~남이간 지방도로 포장공사 현장방문(99. 3 .17)



▲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장면(위원장 박찬중)



▲ 용담댐 건설 현장 방문(2000. 11. 1)



▲ 보령화력 소방시설 현장방문(2001. 3. 15)



▲ 홍성 · 와룡천 정비사업지구 현장방문(2001. 11. 21)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면



▲ 결산검사 실시장면(98. 7. 15)



▲ 수해복구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장면(위원장 김문규)



▲ 수해현장을 찾아가 현황을 청취하는 모습



▲ 2002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조직위 현황청취(위원장 강화섭)



▲ 꽃박람회 개최지 현장방문(2001. 3. 19)



▲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치며



▲ 의회사무처 직원 토론회(2000. 3. 30)



▲ 전국 시 · 도의회 사무처 관계간 회의(2000. 3. 10)



▲ '98 의회사무처 직원 연찬회(보령 · 동백관)



▲ 6대 의회 개원준비 모습(본회의장)

일러두는 말

○ 본『議政白書』는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말까지 4년 동안 제6대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 전반을 요약·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주요 수록내용을 살펴보면

- 『第1章 沿革』에서는 충청남도의회의 初代 ~ 6代까지 연혁과 당시의 활동모습,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상황을 수록하였습니다.
- 『第2章 第6代 議會』에서는 제6대 도의회 의원선거현황, 의회구성, 의회조직, 의회권한, 의회운영 그리고 의회사무처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 『第3章 第6代 議政運營』에서는 제6대 의회의 전반적인 의정 운영으로 제121회~제160회까지 총40회에 걸친 임시회·정례회(정기회) 개최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안건심사 중심으로 발췌 서술하였고, 도정질문 및 답변과 5분 발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였습니다.
- 『第4章 議政活動 決算』에서는 제6대 도의회가 4년 동안 추진한 의정성과를 유형별로 統計化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附 錄』에서는 충청남도의 연혁과 일반적인 통계, 그리고 제7대 충청남도의회의 院 구성과 의원명단을 담았습니다.

○ 집필에서 원고정리, 그리고 편집과정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의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042-606-5045)

目　次

發刊辭 5
第6代議會 議長團 6
第6代議會 議　員 10
第6代議會 議政活動 畵報 23

第1章 忠淸南道議會 沿革

第1節 初 代 忠淸南道議會의 誕生 82
第2節 第2代 忠淸南道議會 95
第3節 第3代 忠淸南道議會 104
第4節 第4代 忠淸南道議會 111
第5節 第5代 忠淸南道議會 114
第6節 第6代 忠淸南道議會 142

第2章 第6代 忠淸南道議會

第1節 第6代 忠淸南道議會 議員 選擧現況 162
第2節 第6代 道議會 構成 167
第3節 第6代 道議會 組織 175
第4節 第6代 道議會 權限 177
第5節 第6代 道議會 運營 180
第6節 議會事務處 現況 188

第3章 第6代議會 議政運營

第1節 第121回 臨時會 201

Ⅰ. 概　　況 201

1. 開會背景 201
2. 議事日程 201
3. 案件處理現況 203

Ⅱ. 議會 活動 204

1. 本 會 議 204
2. 委員會活動 206

第2節 第122回 臨時會 207

Ⅰ. 概　　況 207

1. 開會背景 207
2. 議事日程 207
3. 案件處理現況 211

Ⅱ. 議會 活動 212

1. 本 會 議 212
2. 委員會活動 213

第3節 第123回 臨時會 222

Ⅰ. 概　　況 222

1. 開會背景 222
2. 議事日程 222
3. 案件處理現況 225

Ⅱ. 議會 活動 226
1. 本 會 議 226
2. 委員會活動 227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233

第4節 第124回 臨時會 259
Ⅰ. 槪 況 259
1. 開會背景 259
2. 議事日程 259
3. 案件處理現況 262
Ⅱ. 議會 活動 262
1. 本 會 議 262
2. 委員會活動 263

第5節 第125回 定期會 270
Ⅰ. 槪 況 270
1. 開會背景 270
2. 議事日程 270
3. 案件處理現況 277
Ⅱ. 議會 活動 278
1. 本 會 議 278
2. 委員會活動 279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301

第6節 第126回 臨時會 317
Ⅰ. 槪　　況 317
1. 開會背景 317
2. 議事日程 317
3. 案件處理現況 319
Ⅱ. 議會 活動 320
1. 本 會 議 320
2. 委員會活動 320
第7節 第127回 臨時會 322
Ⅰ. 槪　　況 322
1. 開會背景 322
2. 議事日程 322
3. 案件處理現況 325
Ⅱ. 議會 活動 326
1. 本 會 議 326
2. 委員會活動 326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330
第8節 第128回 臨時會 348
Ⅰ. 槪　　況 348
1. 開會背景 348
2. 議事日程 348
3. 案件處理現況 350

Ⅱ. 議會 活動 351
1. 本 會 議 351
2. 委員會活動 351

第9節 第129回 臨時會 360

Ⅰ. 槪　　況 360
1. 開會背景 360
2. 議事日程 360
3. 案件處理現況 364

Ⅱ. 議會 活動 365
1. 本 會 議 365
2. 委員會活動 366

Ⅲ. 5分 發言 要旨 370

第10節 第130回 臨時會 372

Ⅰ. 槪　　況 372
1. 開會背景 372
2. 議事日程 372
3. 案件處理現況 374

Ⅱ. 議會 活動 374
1. 本 會 議 374
2. 委員會活動 375

Ⅲ. 5分 發言 要旨 379

第11節 第131回 臨時會 381
Ⅰ. 槪　　況 381
1. 開會背景 381
2. 議事日程 381
3. 案件處理現況 384
Ⅱ. 議會 活動 384
1. 本 會 議 384
2. 委員會活動 385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390

第12節 第132回 臨時會 404
Ⅰ. 槪　　況 404
1. 開會背景 404
2. 議事日程 404
3. 案件處理現況 407
Ⅱ. 議會 活動 408
1. 本 會 議 408
2. 委員會活動 408
Ⅲ. 5分 發言 要旨 417

第13節 第133回 定期會 419
Ⅰ. 槪　　況 419
1. 開會背景 419

2. 議事日程 419
3. 案件處理現況 427
Ⅱ. 議會 活動 428
1. 本 會 議 428
2. 委員會活動 429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439
Ⅳ. 5分 發言 要旨 465

第14節 第134回 臨時會 467
Ⅰ. 槪 況 467
1. 開會背景 467
2. 議事日程 467
3. 案件處理現況 469
Ⅱ. 議會 活動 469
1. 本 會 議 469
2. 委員會活動 469
Ⅲ. 5分 發言 要旨 472

第15節 第135回 臨時會 473
Ⅰ. 槪 況 473
1. 開會背景 473
2. 議事日程 473
3. 案件處理現況 476

Ⅱ. 議會 活動 476
1. 本 會 議 476
2. 委員會活動 477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480

第16節 第136回 臨時會 492
Ⅰ. 槪 況 492
1. 開會背景 492
2. 議事日程 492
3. 案件處理現況 493
Ⅱ. 議會 活動 494
1. 本 會 議 494
2. 委員會活動 494

第17節 第137回 臨時會 500
Ⅰ. 槪 況 500
1. 開會背景 500
2. 議事日程 500
3. 案件處理現況 502
Ⅱ. 議會 活動 502
1. 本 會 議 502
2. 委員會活動 503

第18節 第138回 臨時會 511
Ⅰ. 槪 況 511

1. 開會背景 511
2. 議事日程 511
3. 案件處理現況 513

Ⅱ. 議會 活動 513

1. 本 會 議 513
2. 委員會活動 514

第19節 第139回 臨時會 517

Ⅰ. 槪 況 517

1. 開會背景 517
2. 議事日程 517
3. 案件處理現況 519

Ⅱ. 議會 活動 519

1. 本 會 議 519
2. 委員會活動 520

第20節 第140回 定例會 524

Ⅰ. 槪 況 524

1. 開會背景 524
2. 議事日程 524
3. 案件處理現況 526

Ⅱ. 議會 活動 527

1. 本 會 議 527
2. 委員會活動 529

Ⅲ.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530

第21節 第141回 臨時會 546
Ⅰ. 槪　　況 546
1. 開會背景 546
2. 議事日程 546
3. 案件處理現況 548
Ⅱ. 議會 活動 549
1. 本 會 議 549
2. 委員會活動 549
Ⅲ. 5分 發言 要旨 556

第22節 第142回 臨時會 557
Ⅰ. 槪　　況 557
1. 開會背景 557
2. 議事日程 557
3. 案件處理現況 561
Ⅱ. 議會 活動 562
1. 本 會 議 562
2. 委員會活動 562
Ⅲ. 5分 發言 要旨 574

第23節 第143回 臨時會 577
Ⅰ. 槪　　況 577
1. 開會背景 577

2. 議事日程 577
3. 案件處理現況 581
Ⅱ. 議會 活動 581
1. 本 會 議 581
2. 委員會活動 582
Ⅲ. 5分 發言 要旨 596

第24節 第144回 定例會 598
Ⅰ. 槪 況 598
1. 開會背景 598
2. 議事日程 598
3. 案件處理現況 605
Ⅱ. 議會 活動 606
1. 本 會 議 606
2. 委員會活動 607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617

第25節 第145回 臨時會 643
Ⅰ. 槪 況 643
1. 開會背景 643
2. 議事日程 643
3. 案件處理現況 644
Ⅱ. 議會 活動 644
1. 本 會 議 644

2. 委員會活動 645
Ⅲ. 5分 發言 要旨 647

第26節 第146回 臨時會 648
Ⅰ. 槪　　況 648
1. 開會背景 648
2. 議事日程 648
3. 案件處理現況 652
Ⅱ. 議會 活動 652
1. 本 會 議 652
2. 委員會活動 653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660
Ⅳ. 5分 發言 要旨 677

第27節 第147回 臨時會 678
Ⅰ. 槪　　況 678
1. 開會背景 678
2. 議事日程 678
3. 案件處理現況 680
Ⅱ. 議會 活動 680
1. 本 會 議 680
2. 委員會活動 681
Ⅲ. 5分 發言 要旨 688

第28節 第148回 臨時會 693
Ⅰ. 概　　況 693
1. 開會背景 693
2. 議事日程 693
3. 案件處理現況 696
Ⅱ. 議會 活動 696
1. 本 會 議 696
2. 委員會活動 697
Ⅲ. 5分 發言 要旨 707

第29節 第149回 臨時會 709
Ⅰ. 概　　況 709
1. 開會背景 709
2. 議事日程 709
3. 案件處理現況 711
Ⅱ. 議會 活動 711
1. 本 會 議 711
2. 委員會活動 712
Ⅲ. 5分 發言 要旨 717

第30節 第150回 臨時會 719
Ⅰ. 概　　況 719
1. 開會背景 719
2. 議事日程 719

3. 案件處理現況 721

Ⅱ. 議會 活動 721

1. 本 會 議 721

2. 委員會活動 722

第31節 第151回 定例會 727

Ⅰ. 槪 況 727

1. 開會背景 727

2. 議事日程 727

3. 案件處理現況 729

Ⅱ. 議會 活動 729

1. 本 會 議 729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731

第32節 第152回 臨時會 756

Ⅰ. 槪 況 756

1. 開會背景 756

2. 議事日程 756

3. 案件處理現況 757

Ⅱ. 議會 活動 757

1. 本 會 議 757

2. 委員會活動 758

第33節 第153回 臨時會 760
Ⅰ. 槪　　況 760
1. 開會背景 760
2. 議事日程 760
3. 案件處理現況 763
Ⅱ. 議會 活動 763
1. 本 會 議 763
2. 委員會活動 764
Ⅲ. 5分 發言 要旨 770
第34節 第154回 臨時會 771
Ⅰ. 槪　　況 771
1. 開會背景 771
2. 議事日程 771
3. 案件處理現況 773
Ⅱ. 議會 活動 774
1. 本 會 議 774
2. 委員會活動 774
Ⅲ. 5分 發言 要旨 781
第35節 第155回 臨時會 784
Ⅰ. 槪　　況 784
1. 開會背景 784
2. 議事日程 784
3. 案件處理現況 787

Ⅱ. 議會 活動 787
1. 本 會 議 787
2. 委員會活動 788

第36節 第156回 定例會 794

Ⅰ. 槪　　況 794
1. 開會背景 794
2. 議事日程 794
3. 案件處理現況 801

Ⅱ. 議會 活動 802
1. 本 會 議 802
2. 委員會活動 803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816

Ⅳ. 5分 發言 要旨 866

第37節 第157回 臨時會 867

Ⅰ. 槪　　況 867
1. 開會背景 867
2. 議事日程 867
3. 案件處理現況 868

Ⅱ. 議會 活動 869
1. 本 會 議 869
2. 委員會活動 869

第38節 第158回 臨時會 872
Ⅰ. 槪　　況 872
1. 開會背景 872
2. 議事日程 872
3. 案件處理現況 875
Ⅱ. 議會 活動 875
1. 本 會 議 875
2. 委員會活動 876
第39節 第159回 臨時會 882
Ⅰ. 槪　　況 882
1. 開會背景 882
2. 議事日程 882
3. 案件處理現況 884
Ⅱ. 議會 活動 885
1. 本 會 議 885
2. 委員會活動 886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895
第40節 第160回 臨時會 969
Ⅰ. 槪　　況 969
1. 開會背景 969
2. 議事日程 969
3. 案件處理現況 972

Ⅱ. 議會 活動 972
1. 本 會 議 972
2. 委員會活動 974
Ⅲ. 5分 發言 要旨 987

第4章 第6代議會 議政活動 決算

第 1節 議政 決算 995
第 2節 會期 運營 996
第 3節 豫算·決算 審議 997
第 4節 案件 接受 및 處理 999
第 5節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實施結果 1001
第 6節 道政 및 教育行政 質問現況 1002
第 7節 5分 發言 運營現況 1003
第 8節 請願 및 陳情등 民願處理 1005
第 9節 特別委員會 構成運營 1007
第10節 議員研鑽會 實施 1010
第11節 議政活動의 國際交流 1015
第12節 其他 特記事項 1022

附　　錄

第1節 忠淸南道 現況 1034
第2節 第7代 道議會議員 現況 1047

第1章 忠淸南道議會 沿革

第1節 初 代 忠淸南道議會의 誕生
第2節 第2代 忠淸南道議會
第3節 第3代 忠淸南道議會
第4節 第4代 忠淸南道議會
第5節 第5代 忠淸南道議會
第6節 第6代 忠淸南道議會

第1章 忠淸南道議會 沿革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어 그 다음해인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 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6.25동란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실시가 연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 이어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서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었다.

地方自治의 沿革

- ㅇ1948. 7. 17 헌법에 지방자치제도 도입
- ㅇ1949. 7. 4 지방자치법 제정(법률 제32호)
- ㅇ1952. 4. 25 초대 지방의회(시·읍·면)의원 선거
- ㅇ1952. 5. 10 초대 지방의회(도)의원 선거
- ㅇ1952. 5. 20 초대 충청남도의회 개원(46인)
- ㅇ1956. 8. 8 제2대 지방의회의원 선거
- ㅇ1956. 9. 1 제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45인)
- ㅇ1960. 12. 19 제3대 지방의회의원 선거
- ㅇ1960. 12. 21 제3대 충청남도의회 개원(47인)
- ㅇ1960. 12. 29 초대 민선 도지사 선거
- ㅇ1961. 5. 16 전국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 ㅇ1961. 9.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법률 제707호)
- ㅇ1988. 4. 6 지방자치법 전문개정(법률 제4004호)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정(법률 4005호)
- ㅇ1990. 12. 31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전문개정(법률 제4311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제정(법률 제4312호)
- ㅇ1991. 3. 26 전국 시·군의회의원 선거
- ㅇ1991. 6. 20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원 선거
- ㅇ1991. 7. 8 제4대 충청남도의회 개원(55인)

○ 1994.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법률 제4739호)
※ 대통령 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 지방의회

○ 1995. 6. 27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도지사(민선 제2대), 시장·군수(초대), 도의원(제5대), 시군의원(제2대)

○ 1995. 7. 11 제5대 충청남도의회 개원(61인)

○ 1998. 6. 4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도지사(민선 제3대), 시장·군수(제2대), 도의원(제6대), 시군의원(제3대)

○ 1998. 7. 9 제6대 충청남도의회 개원(36인)

第1節 初代 忠淸南道議會의 誕生

6.25사변의 동란중에도 1952년 5월 10일 최초의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가 1시, 14군의 전 투표구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총유권자 916,288인중 78.5%인 719,784인이 투표에 참가, 128인이 입후보하여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6인의 초대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 選 擧 日 : 1952년 5월 10일

□ 議員定數 : 46인

□ 任 期 : 1952년 5월 10일 ~ 1956년 8월(4년 3월)

□ 會 期 : 1회 ~ 22회

□ 初代 道議會議長, 副議長

○ 의 장 : 金 達 永(홍성)(임기 4년 : 1952. 5. 10 ~ 1956. 8월)

○ 부의장 : 李 丁 雨(대전)(〃)

□ 道議會議員 名單

- 초대 도의원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ㅇ 대전시 : 李丁雨, 崔錫煥, 宋錫濂(李鎭洛)
- ㅇ 대덕군 : 宋禮憲, 姜仁煥
- ㅇ 연기군 : 崔秉億, 姜泰鎭
- ㅇ 공주군 : 金永沃, 成斗基, 金達洙(尹璿炳), 嚴大燮(姜桂周)
- ㅇ 논산군 : 林承復, 金千洙, 洪　民, 朴昌來
- ㅇ 부여군 : 金健培, 金在鍊, 李戶喆
- ㅇ 서천군 : 禹熙昌, 金錫圭, 羅熙集(趙南明)
- ㅇ 보령군 : 卜連奉, 朴鍾淵, 李相樂
- ㅇ 청양군 : 兪忠植, 池聖壁
- ㅇ 홍성군 : 金智鉉, 朴泰富, 金達永
- ㅇ 예산군 : 趙瑢鎬, 尹世熙, 李升鍾
- ㅇ 서산군 : 張慶淳, 李相禧, 朴鳳燮, 吳順南, 祭相根
- ㅇ 당진군 : 車萬基, 申鉉九, 宋之源
- ㅇ 아산군 : 洪淳徹(曺鳳煥), 元容泰, 李成珪
- ㅇ 천안군 : 李鍾泰, 洪昶植, 劉載仁(任晩宰)

※ 초대 도의원중 천안의 劉載仁의원은 작고하였고 대전시 宋錫濂의원, 공주의 金達洙, 嚴大燮의원, 서천의 羅熙集의원, 아산의 洪淳徹의원 등 5인은 1954년 5월 제3대 민의원 출마를 위하여 사퇴하였다.
결원된 6인(작고1명, 민의원출마를 위한 사퇴 5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1954년 9월 30일 보궐선거를 실시 대전의 李鎭洛의원 등 ( )안의 의원들이 선출되었다.

□ 初代 忠淸南道議會議員 尊影



□ 初代 道議會의 사진 스크랩



▲ 초대 도의원과 도 간부공무원



▲ 초대 도의회 개원 당시 도청 청사 전경



◀ 초대 도의회 2주년 기념식



기념식 참석 도의원 ▶



◀ 초대 도의회 회의광경

□ 初代 道議會 관련 자료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地方自治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四千二百八十二年七月四

大統領 李承晩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범석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金孝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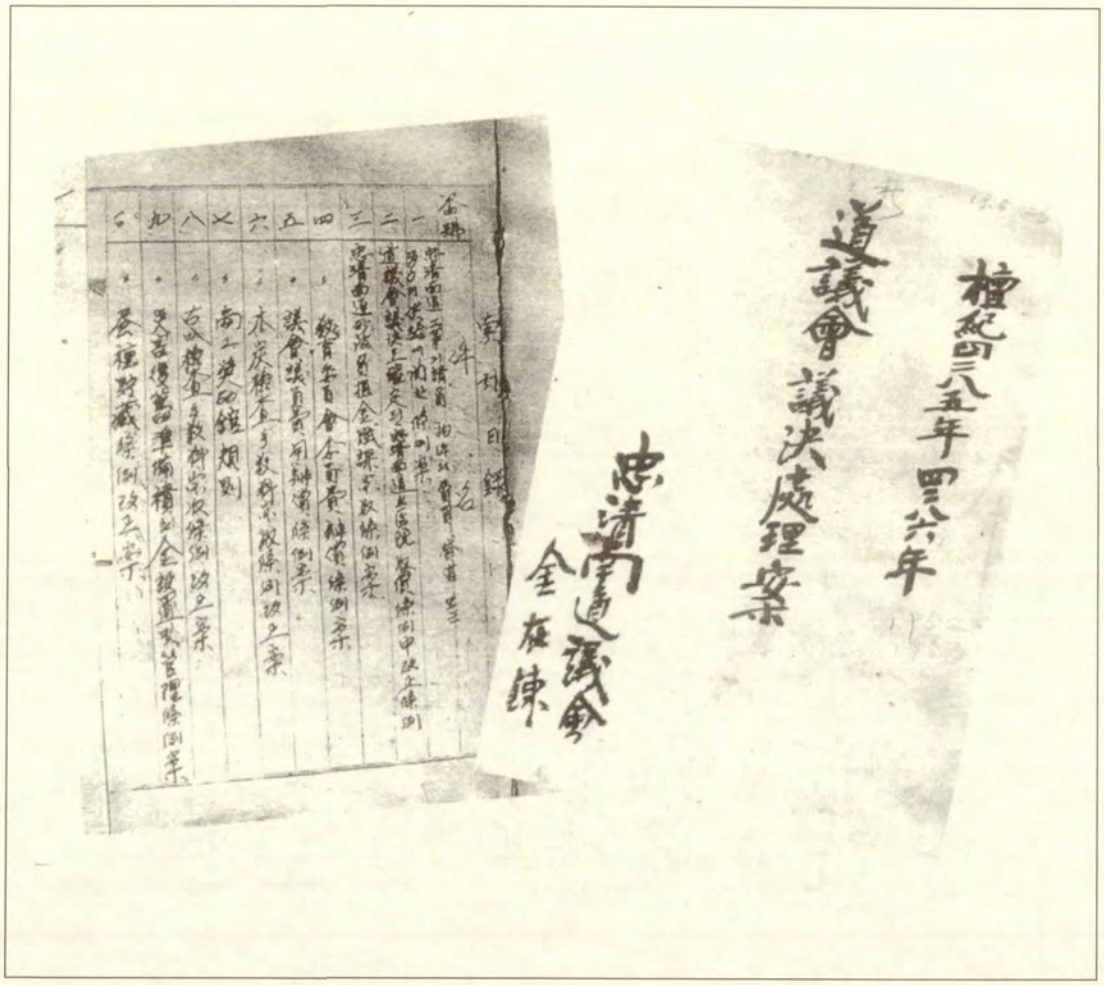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林炳稷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申性模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金度演

▲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문('48. 7. 4)

이 법에 의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道制, 府制, 邑面制 등은 모두 폐지되고, 우리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 서울특별시·도와 시·읍·면의 자치 2계층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장을 분리하는 기관대립형, 시·도지사는 임명제, 시·읍면장은 의회 간선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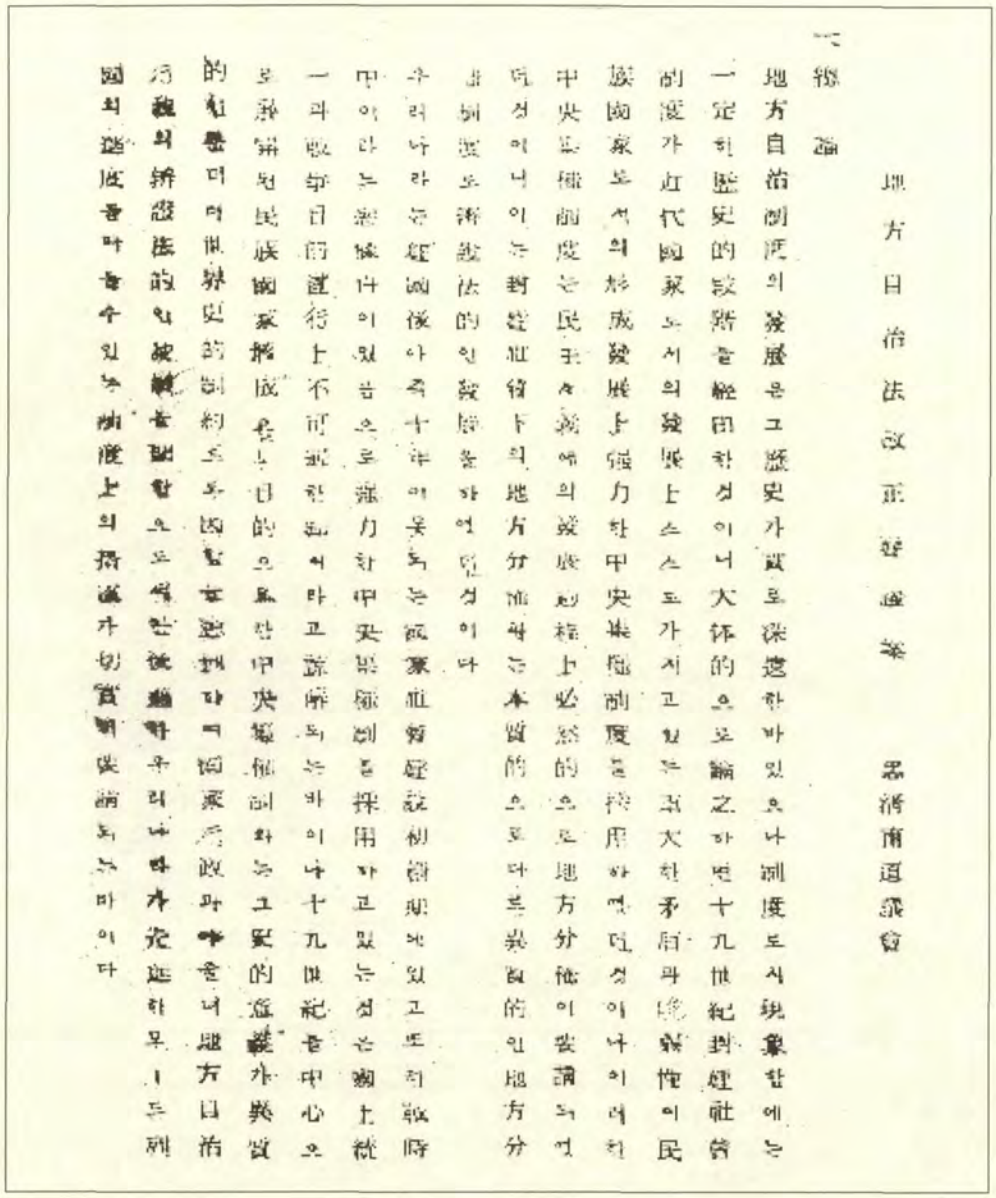
▲ 초대 도의회 안건목록('52~'53)

忠淸南道 工事의 請負物件의 賣買貸借 또는 努力의 供給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목록을 수록



▲ 초대 도의회 경과록('54)

초대 도의회 2주년·3주년간 의원명부·부의안건별 의결사항 일람표·징계·감사 사항 등을 수록



地方自治法改正建議案

忠淸南道議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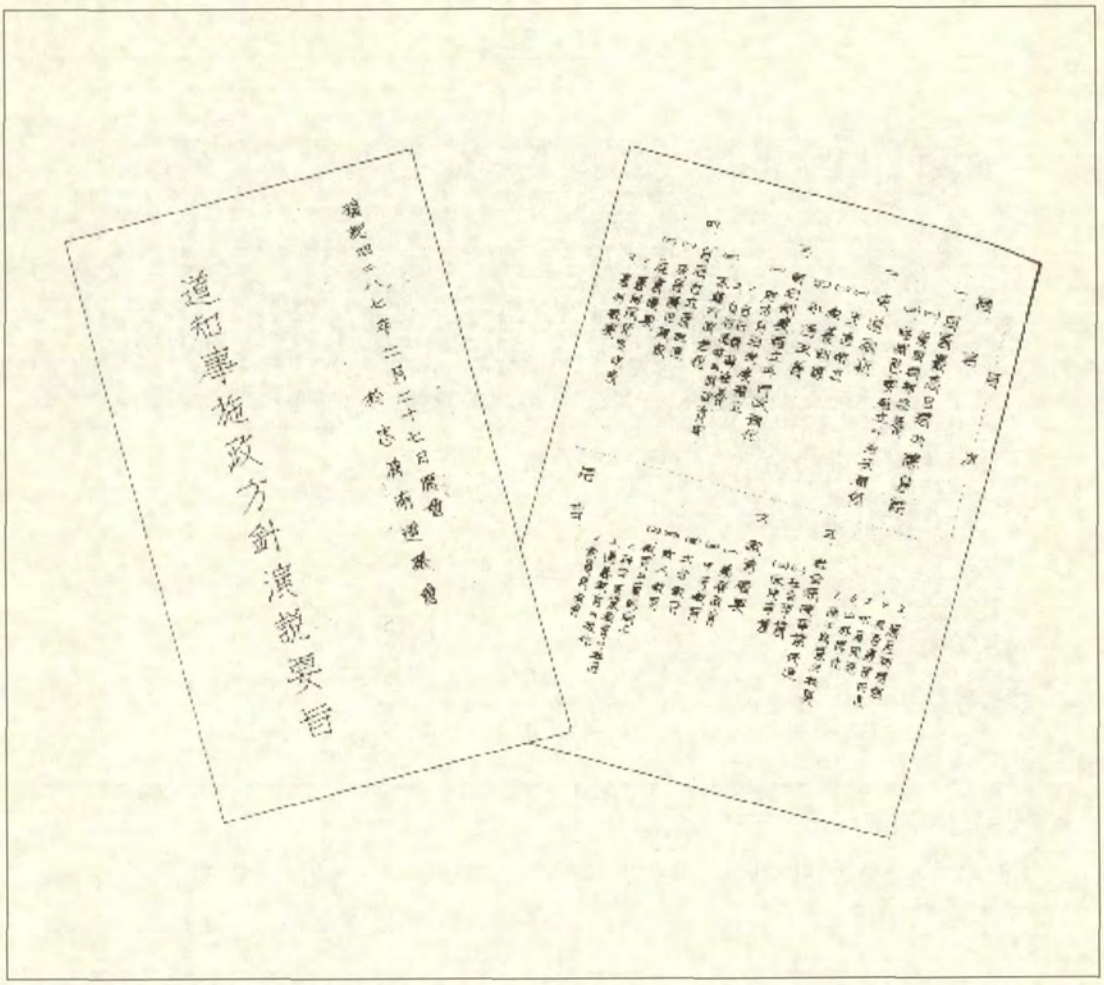
一、緒論

地方自治制度의 發展은 그 歷史가 貴로 深遠한 바 있으나 制度도시 現象함에는 一定한 歷史的 段階를 經由한 것이니 大体的으로 論之하면 十九世紀 封建社會 制度가 近代國家로서의 發展上 强力한 中央集權制度를 採用하여 國家와 民族의 統一을 期하고 있는 것은 大체 承認이 되는 바이나 이러한 中央集權制度는 民主主義에의 發展過程上 必然的으로 地方分權이 要請되어 지는 것이니 이는 封建的 殘存의 地方分權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發展的인 地方分權을 意味하여 말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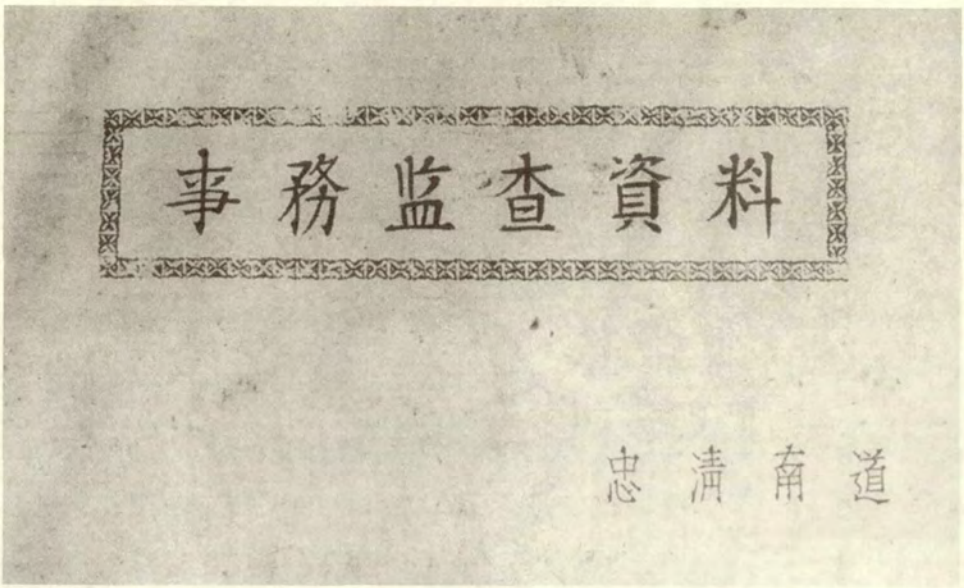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解放後 아직 十年에 못되는 短期間 經過로 初創期에 있고 또한 戰時中이라는 特殊한 事情이 있음으로 强力한 中央集權制를 採用하고 있는 것은 勿上 統一과 戰時目的遂行上 不可避한 點에 있다고 認識되는 바이나 十九世紀를 中心으로 發展된 民族國家構成을 目的으로 한 中央集權制와는 그 質的 差異가 있음을 明白히 認識하여 民主主義的 制度로 國家政治와 地方自治를 調和시킴으로써 地方自治의 發展을 期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現行地方自治法은 이 點에 있어 많은 缺陷이 있음을 發見하고 이 法律의 改正을 要望하는 바이다 現行地方自治法의 缺陷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54)

초대 도의회에서 채택한 지방의회 권한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 '54. 2. 27 도의회 개회시 밝힌 도지사 시정방침 요지



▲ 사무감사자료('55)

'55년 충청남도에서 작성·제출한 각 과별 경비집행·세입 등에 관한 감사자료

□ 言論에 비친 初代 道議會

1952. 4. 12 대전일보

忠南道議員立候補統計

三對一의競爭率

定員四六名에 一二七(女子二名)名登錄

모의원입후보등록은 모일부터 모일까지 모일간 모일간 모일간

1952. 9. 15 대전일보

撤去建議案可決

그러나對象者店舖完備後

道議會

十四日오전十시四十분開催된제七차도의회는상정된의안을전부통과하고오후四시四十분에산회하였다

△元容泰議員(牙山)=朝鮮戰亂相본시장은九、二八수복후어제시장을중심으로당시거주상인들에게차시다모철거같것완비된연후에철거케하자는건설분위의성안이가결되어도지사에게진의할것으로나학을보고하오一시산회하였다한편금十五일부터는모정김시장철거문제를위계감사등점검하여속히철거하도록건의하였다

議員發言要旨

△元容泰議員=牙山市場은九、二八수복후어제시장을중심으로당시거주상인들에게차시다모철거같것완비된연후에철거케하자는건설분위의성안이가결되어도지사에게진의할것으로나학을보고하오一시산회하였다한편금十五일부터는모정김시장철거문제를위계감사등점검하여속히철거하도록건의하였다

△朝鮮戰亂相본시장은九、二八수복후어제시장을중심으로당시거주상인들에게차시다모철거같것완비된연후에철거케하자는건설분위의성안이가결되어도지사에게진의할것으로나학을보고하오一시산회하였다한편금十五일부터는모정김시장철거문제를위계감사등점검하여속히철거하도록건의하였다

1953. 10. 31 대전일보

追加豫算 그대로 通過

道議會

第2節 第2代 忠淸南道議會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된 제2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 720,673인중 626,575인(86.9%)이 투표에 참가했다.

도의회 의원정수는 45인으로 123인이 입후보하여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도지사는 초대와 마찬가지로 임명제를 유지하였다.

□ 選 擧 日 : 1956년 8월 13일

□ 議員定數 : 45인

□ 任　　期 : 1956년 8월 ~ 1960년 12월(4년 4월)

□ 會　　期 : 23회 ~ 50회

□ 第2代 道議會議長, 副議長

〈第1期〉

- 의 장 : 李 升 鍾(예산)(임기 1년 : 1956년 8월 ~ 1957년 8월)
- 부의장 : 李 相 禧(서산)(〃)

〈第2期〉

- 의 장 : 崔 秉 億(연기)(임기 2년 4월 : 1957년 8월 ~ 1959년 12월)
- 부의장 : 李 相 禧(서산)(〃)

〈第3期〉

- 의 장 : 兪 忠 植(청양)(임기 4월 : 1959년 12월 ~ 1960년 4월)
- 부의장 : 李 相 禧(서산)(〃)

〈第4期〉

- 의 장 : 兪 忠 植(청양)(임기 8월 : 1960년 4·19직후 ~ 1960년 12월)
- 부의장 : 李 相 禧(서산), 姜 九 鉉(홍성)

□ 道議會議員 名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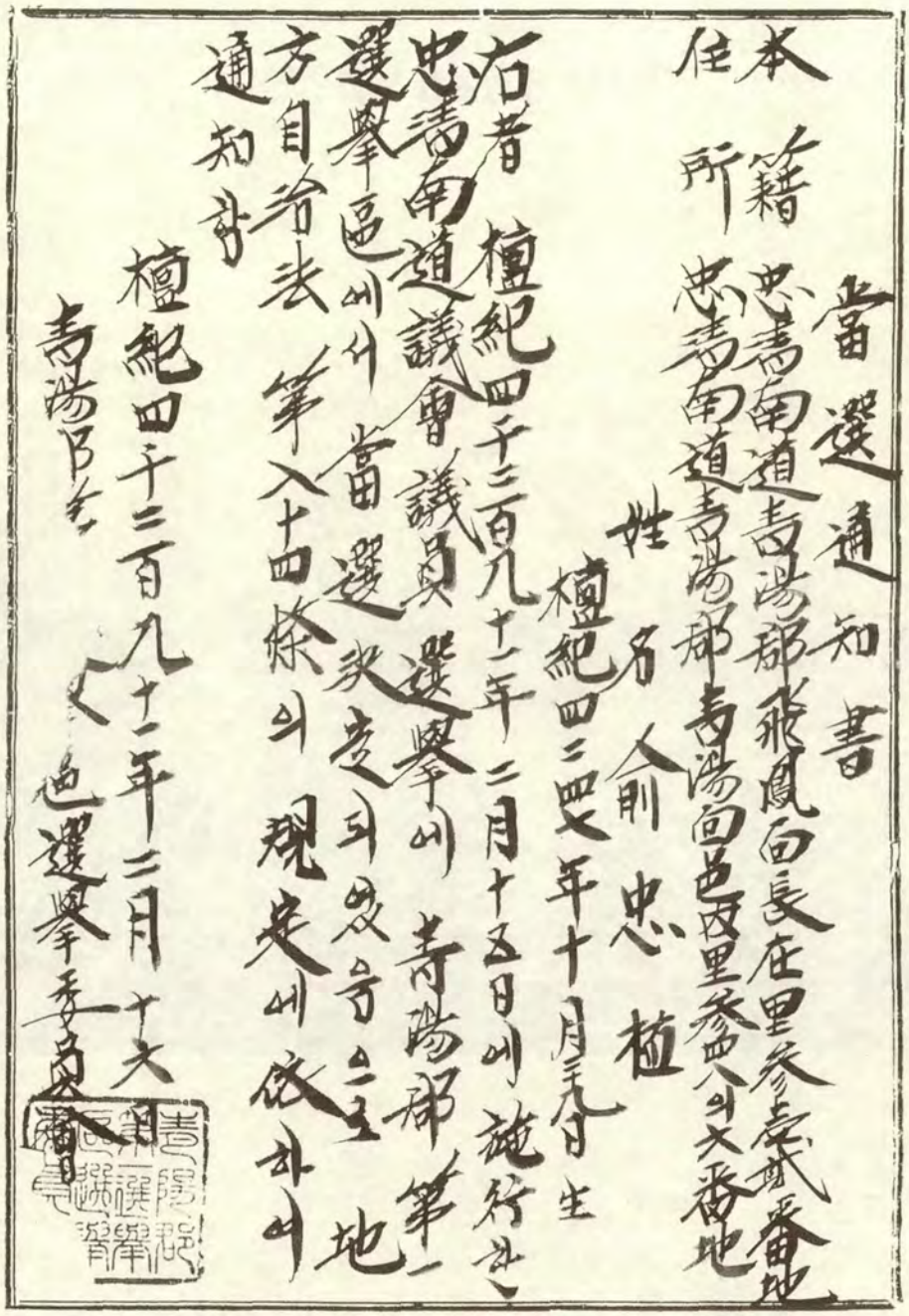
- 제2대 도의회 의원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대전시 : 朴春景, 下鍾九, 宋秉熹
- 대덕군 : 姜仁煥, 朴影培
- 연기군 : 崔秉億, 林鵬洙
- 공주군 : 金永沃, 李元圭, 朴 璨, 洪龍八
- 논산군 : 朴昌來, 鄭寬浩, 姜麟秀, 朴炳鮮
- 부여군 : 太官童, 宋斗燮, 趙俊九
- 서천군 : 羅燾英, 趙南明, 韓億洙
- 보령군 : 李永雨, 黃命顯
- 청양군 : 兪忠植, 任東先
- 홍성군 : 金滿俊, 姜九鉉, 金榮漢
- 예산군 : 李升鍾, 李昇求, 崔翼模
- 서산군 : 李雲宰, 孫昌洙, 柳濟豊, 李相禧
- 당진군 : 崔炳麒, 李相念, 兪殷相, 宋之源
- 아산군 : 方周鉉, 曺鳳煥, 金德成
- 천안군 : 安長勳, 任晩宰, 吳 椿

□ 第2代 忠淸南道議會議員 尊影



□ 第2代 道議會 當選通知書


當選通知書

本籍 忠淸南道 靑陽郡 飛鳳面 長庄里 參拾貳番地

住所 忠淸南道 靑陽郡 靑陽面 邑內里 參拾八의 大番地

姓名 俞 忠 植

檀紀四三四五年十月三日生

右者 檀紀四千二百九十二年二月十五日에 施行된 忠淸南道 道議會 議員 選擧에 靑陽郡 第一選擧區에서 當選 決定되었음을 玆에 通知함

檀紀四千二百九十二年二月十六日

靑陽郡 第一選擧區 選擧委員會

□ 第2代 道議會 本會議 이모저모



▲ 본회의



도정연설 ▶



◀ 안건심의

□ 道政監査 및 常任委 活動









□ 言論에 비친 第2代 道議會

1956. 8. 15. 대전일보



二代道議員當選者全貌判明

自由黨系八七%

與黨側의壓倒的勝利로歸結

當選者名單

無投票當選10名

初代議員中 12名이再選

1956. 8. 21. 대전일보



九月三日로決定

道議會召集에關心

正副議長에 李·俞氏說

1956. 11. 25 대전일보

不當支出을追窮

230萬圜豫備費支出案否決

議會道

一般회계豫備費 지출안건을 심의의결키위하여 개최된 二十四일의 임시도의회 제二차본회의에서는 행정부의豫算소치가 무책임하다는이유로 의회비특별판공비三十만환및 시무비 모본청특별판공비二백만환의豫備費지출안건을 본회의의결로서 부결시켜버렸다 이와같은의회의 「비」로一결의는 소수파인 민주당 의원들의 치열한대당국공세와여기에호응하여 여당의원들이합세함으로써 이루어진것인데 또 되는 이날부당지출이라는 결정하고 변상하라는 특박하였다 이후의 행정당국의 사후조치가주목을끌게 되었다 이날안한시간반에 걸쳐서는 난 되의 격론과 당국간의 공의응답요지는 다음과같다

△姜仁煥(白▮大德)內務委員長의審査結果報告▮내무분위 심시보고대 로 별의없이 채택(附議第一 미이로된議에비 동 앞으로 ▮議會辭公費)

△朴昌來(무▮論山)이 렇게처리할것인가 법적조처에대해서 행정당국

△崔炳기(民▮瑞山)사 해주시않는다니 대단히 당황하지않을수없다 자 체법에의하면 불승인 경우 법적에서가 없어대 단곤난이다 법적근거를 아직결이없구해보지못했 다는 최병기의원의 말이다 그럼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주목된다 (正式動議)

△崔炳기(民▮瑞山)사 선에 三▮▮▮▮▮▮▮▮ 누가 ▮▮▮▮▮▮▮▮ 있는지 내무부에서 알아보아서 알아야된다고 생각한다 한다 야기는 한다 가 막연 △金永沃(무▮公州) 처리해본 적이 있는데 이 의원의 말이다 밝혀야된다 수저하는 데 한번 이다 원주인 요면 공개하라 반드시 하나라 에서 어떤 있는가 이 아심을 갖지않을수없다 부당지출이다 변상해야 된다 무차례에 처 어떠케처리한것인지 명 마한적지출전모 알아야 한다 내무국장의 책임있 는답변을 들기를 바라 △朴局長▮瑞山(내무국장) 지출한 경우 법적에서가 없어대 단곤난이다 법적근거를 아직결이없구해보지못했 다는 최병기의원의 말이다 그럼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주목된다 (正式動議)

△崔炳기(民▮瑞山)▮▮▮▮▮▮▮▮

1959. 7. 8 대전일보

追加豫算案通過

異議없이 4分에 處理

道議會

六日의 道議會에서는 一般의 예산심의에 이어 본회의에서는 철원서처리예를 어갔는데 一、扶餘世道面 의금강인 안축제 중지요망二、교육회관 건립보조요청三、석탄연료조합의 보조요청등은 집행부에서 선처하도록 이송하였다

1958. 4. 16 중도일보

道議員補궐選擧

大田、論山等五月15日實施

第3節 第3代 忠淸南道議會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붕괴되고 민주당의 제2공화국이 수립되어 실시된 제3대 도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 총유권자 1,137,184명중 781,935명(68.8%)이 투표에 참가하여 188명의 후보자중 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8명의 당선자가 확정되었다. 한편 12월 29일 실시된 최초의 도지사 선거는 이기세(4대) 도지사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3대 도의회는 의회가 구성된지 6개월도 안되어 1961년 5월 16일 5.16사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가 전면 중단되었다.

□ 選 擧 日 : 1960년 12월 12일

□ 議員定數 : 48인

□ 任　　期 : 1960년 12월 ~ 1961년 5월(6개월)

□ 會　　期 : 51회 ~ 53회

□ 第3代 道議會議長, 副議長

- o 의　장 : 林 憲 世(공주)(임기 6월 : 1960년 1월 ~ 1961년 5월)
- o 부의장 : 朴　　璨(공주)(　　〃　　)

□ 道議會議員 名單

- 제3대 도의회의원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ㅇ 대전시 : 李文鎬, 兪永植, 金潤植, 徐完錫
- ㅇ 대덕군 : 宋泰燮, 朴鎭穆
- ㅇ 연기군 : 陣雄植, 金泰龍
- ㅇ 공주군 : 林憲世, 李紀永, 朴 璨, 金鳳泳
- ㅇ 논산군 : 劉忠烈, 尹己炳, 金容弼. 朴鳳鎬
- ㅇ 부여군 : 金鍾牛, 宋斗燮, 趙森九
- ㅇ 서천군 : 申文燮, 崔雲集
- ㅇ 보령군 : 李永雨, 金顯璞
- ㅇ 청양군 : 李哲雨, 韓晳元
- ㅇ 홍성군 : 張箕翼, 金應柱
- ㅇ 예산군 : 朴昌植, 李會榮, 李鍾漢, 尹南儀
- ㅇ 서산군 : 趙濟顯, 明華燮, 李鍾伸, 賈敬魯
- ㅇ 당진군 : 姜永植, 洪顯先, 朴燦成, 李貞植
- ㅇ 아산군 : 黃明秀, 方周鉉, 池泰永, 林或善
- ㅇ 천안군 : 許萬錫, 黃圭英, 李義伯, 金永錫

□ 第3代 忠淸南道議會議員 尊影



□ 第3代 道議會 本會議 이모저모



▲ 시정연설



▲ 본회의 장면

□ 第3代 道議會 對外活動







▲ 재일교포 북송반대 궐기대회

□ 第3代 道議會 관련 자료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四號

軍事革命委員會는 祖國의 現實的인 危機를 克服하고 國民의 熱望에 呼應하기爲하여 다음과같이 布告한다

一、軍事革命委員會는 檀紀四二九四年五月十六日午前七時를 期하여 張勉政府로부터 一切의 政權을 引受한다

二、現民議院과 參議院그리고 地方議會는 檀紀四二九四年五月十六日午後八時를 期하여 이를 解散한다 但事務處要員은 存續한다

三、一切의 政党 社會團体의 政治活動은 此를 禁한다

四、張勉政權의 全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逮捕한다

五、國家機構의 一切의 機能은 軍事革命委員會에 依하여 이를 正常的으로 執行한다

六、모든 機關과 施設의 運營을 正常化하고 如何한 暴力行爲도 이를 嚴斷한다

檀紀四二九四年五月十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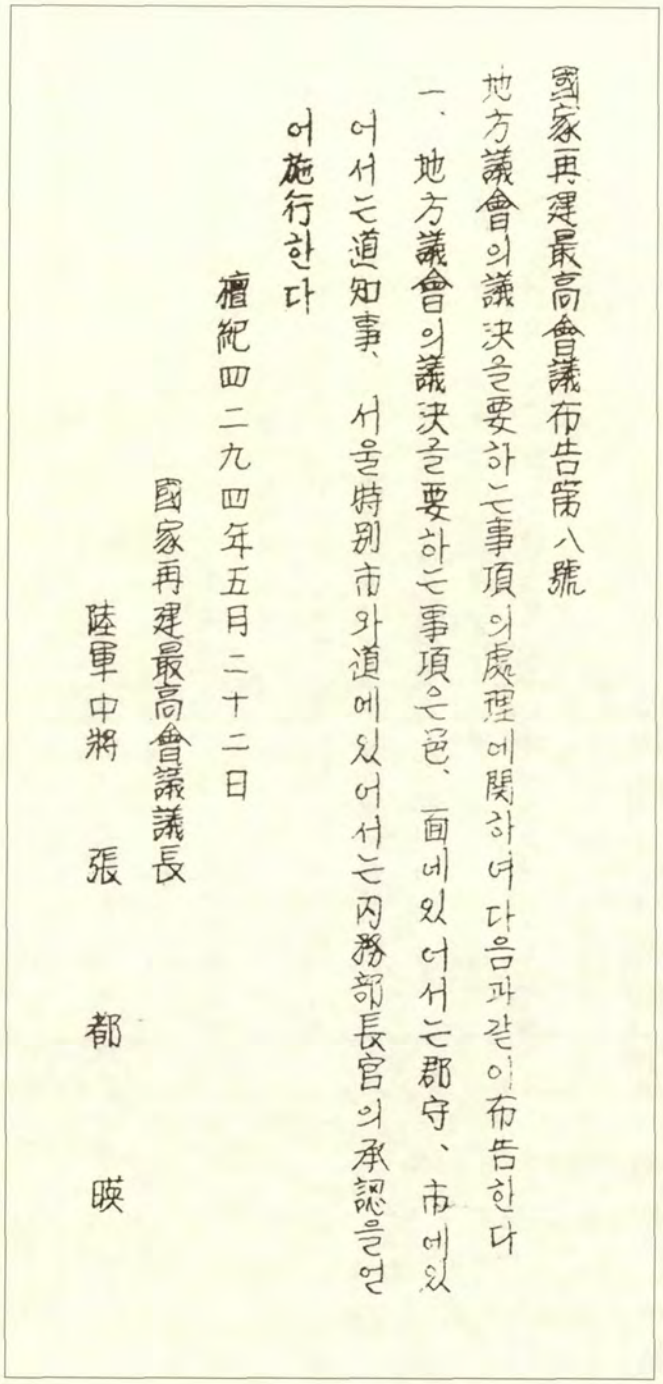
軍事革命委員會議長

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張都暎

▲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61. 5. 16)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 5. 16 오후 8시를 기해 지방의회를 해산, 사실상 지방자치가 중단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第八號

地方議會의議決을要하는事項의處理에關하여다음과같이布告한다

一、地方議會의議決을要하는事項은邑、面에있어서는郡守、市에있어서는道知事、서울特別市와道에있어서는內務部長官의承認을얻어施行한다

檀紀四二九四年五月二十二日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

陸軍中將 張 都 暎

◀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61. 5. 22)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읍·면은 군수, 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言論에 비친 第3代 道議會

1960. 12. 14. 대전일보



道議員選擧總合初判

民主17新民7無所屬21

瑞山一個區未定、舊自由黨進出顯著

地方長官選擧布陣再檢討

與過半數未達로 地方組織大幅化

自治制瘫痪可能性도

1960. 12. 23. 대전일보



無所屬이 壟斷할 道議會

議長團選出結果로 나타난 展望

林議長新任談

感情止揚코 民意를 反映

道政發展에 最大努力을 할터

副議長엔 朴燦氏

三次決選投票서 26票로

道議員들 也한 不滿
小規模水利事業策定

1961. 3. 8 중도일보

道議員選擧結果 거의 判明
當選確定四百8 4名
無二一九·民一九三·新民六七名

1960. 12. 15 중도일보

道廳內에 戒嚴事務所設置



道議事務室을 쏘기로

17日上午趙參謀長等一行과 協議코 決定

문사령관으로 선하가 부탁구어진지 이틀째되는 十七일상오중남북도 계엄사무소장으로 임명된제三군사령관 (金鍾元) 소장에하고 급강교단일행은 참모장趙대령인솔하에 본도도청육방문하고 계엄사무소를도청내에설치하는데 관한구체적인 협의를하고 늦어도이날하오三시까지 지방의회해산으로 모든필요한계엄의회의각종사무실에 설치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사진은 조참모장과 一행과 협의광경)

이날상오九시경 도지사 수사대통이 도청대에 자동차를 타고 도청에 도착하였는데 이날아침 동문앞에는 미리부터 대기하고 있던 각단체의 사람들이 고한마루터에 가득한인사들 고한마루터에 가득한인사들 고한마루터에 가득한인사들

第4節 第4代 忠淸南道議會

1991년 4월 15일 시.군 기초의회가 개원되고 같은 해 6월 20일 제4대 도의원선거가 도내 5개시 15개군에서 일제히 실시됨으로써 5.16으로 중단 되었던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

18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제4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 1,180,314인중 813,730(68.9%)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55인의 도의원이 선출되었고, 7월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졌다.

□ 選 擧 日 : 1991년 6월 20일

□ 議員定數 : 55인

□ 任　　期 : 1991년 7월 ~ 1995년 6월 30일(4년)

□ 會　　期 : 54회 ~ 92회

□ 第4代 道議會 議長, 副議長

<전반기>

- 의　장 : 李 大 熙(보령군)(임기 2년 2월 : 1991년 7월 ~ 1993년 8월)
- 부의장 : 金 容 鎬(논산군), 金 高 盛(연기군)

<후반기>

- 의　장 : 李 大 熙(보령군)(임기 1년 10월 : 1993년 8월 ~ 1995년 6월)
- 부의장 : 金 容 鎬(논산군), 李 鍾 洙(천안시)

□ 道議會議員 名單

- 제4대 도의회의원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o 천안시 : 文性珪(尹用一), 李鍾洙, 孟致鎬
- o 공주시 : 金善泰, 羅榮珍
- o 대천시 : 朴鍾武, 李時雨
- o 온양시 : 金載鳳, (金鍾煥)
- o 서산시 : 李福求, 李甲俊
- o 금산군 : 金顯根, 崔源植, 梁熙喆
- o 연기군 : 李基鳳, 康基世, 金高盛
- o 공주군 : 具興書, 柳在元, 趙日東
- o 논산군 : 朴元來, 孔 均, 金容鎬
- o 부여군 : 劉載甲, 李準喆, 趙吉衍
- o 서천군 : 宋善奎, 羅信燦, 李相敦
- o 보령군 : 姜信國, 申載元(吳瓚圭), 李大熙
- o 청양군 : 鄭善興, 禹智命
- o 홍성군 : 徐重喆, 金榮昶, 田溶鳥
- o 예산군 : 李根容, 韓道源, 李東旭
- o 서산군 : 姜模俊, 金珍經, 金基興
- o 태안군 : 金世鎬, 朴東允, 金成振
- o 당진군 : 李弘根, 金鍾成, 金左泳
- o 아산군 : 全泳俊, 李元昌, 金南鎬
- o 천안군 : 金文圭, 張基日, 李傑宰

- 제4대 의원 신분 변동 사항 -

구 분	지 역	성 명	신분변동사유	비 고
1	보령군(제2)	吳 瓚 圭	• 92. 12. 22 의원직 상실	• 보궐선거에 의하여 申載元의원 당선(93.4.9)
2	천안시(제1)	尹 用 一	• 93. 2. 12 의원직 상실	• 보궐선거에 의하여 文性珪의원 당선(93.4.9)
3	온양시(제2)	金 鍾 煥	• 94. 9. 13 의원직 상실	• 보궐선거 미실시

※ 의원 정수는 55인이나 온양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 미 실시로 명부에는 54인임.

□ 第4代 忠淸南道議會議員 尊影



□ 第4代 道議會 議政活動의 이모저모



▲ 30년만에 부활된 충청남도의회 현판식 ('91. 7)



▲ 道議會 開院記念('91. 7. 8)



▲ 육군 제32사 부대 위문 ('94. 2)



▲ 계룡출장소 하수종말처리장 현장 방문 ('94. 4)



▲ 제4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92. 7. 8)



▲ '94상반기 의원 연찬회(94. 2. 25)

□ 第4代 道議會 관련 자료

국 회 에 서 의 결 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을

이 에 공 포 한 다

대 통 령 노

199 0 년 12 월 31 일

국 무 총 리 서리

국 무 위 원 내무부 장 관

국 무 위 원 장 관

국 무 위 원 장 관

국 무 위 원 장 관

국 무 위 원 장 관

▲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공포문('90. 12. 31)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는 단식투쟁 끝에 개정되어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마련, '91. 6. 30이내 지방의회 구성, '92. 6. 30 이내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 실시

市·道議會 開院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民主發展의 획기적인 里程表가 될 市·道議會의 開院을 온 국민과 함께 祝賀합니다.

지난 4月 市·郡·區議會 구성에 이어 오늘 市·道議會가 出帆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가 열렸습니다.

오랜 中央集權의 시대가 가고 地方分權의 시대가 시작되었읍니다.

우리의 民主主義는 이제 튼튼한 바탕위에 섰습니다.

30년만에 온 국민의 기쁨속에 다시 실시되는 地方自治는 우리사회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는 原動力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民主主義를 地域共同體와 國民들의 일상적 삶의 현장으로부터 실현하여 이 社會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規範으로 發展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市·道議會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意見과 發展意志를 통합하여 調和와 國民和合을 실현하는 「創造의 廣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議員 여러분께서 봉사와 헌신으로 住民의 福祉와 地方의 發展을 이루는 旗手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議員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국민이 성숙한 民主意識으로 自律의 價値를 共同體 속에 구현해 나간다면 우리의 地方自治는 우람한 꽃을 피워 民主主義의 풍성한 結實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住民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當選의 榮光을 안은 議員 여러분께 祝賀의 말씀을 드리며, 議員 여러분의 훌륭한 활동으로 市·道議會가 住民을 위하여 크고 많은 일을 하여 국민의 신뢰속에 무궁히 發展하기를 祈願합니다.

1991年 7月 8日

大統領 노 태 우

▲ 시·도의회 개원 축하 대통령메세지('91. 7. 8)

□ 言論에 비친 第4代 道議會

1991. 7. 8 중도일보

The Joong-do Ilbo 1991年(檀紀4324年) 7月8日 月曜日 【日刊】

大田·忠南등 市·道의회 開院

議長내정자 脫落 "파란"

"양심에 따라 職務 성실히 수행" 議員선서



의장선출 투표 30년만에 부활된 광역의회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개회, 의장단 선출이 있었으나 곳곳에서 의장단 내정에 따른 후유이 표출돼 지방자치제가 첫 단계부터 파란을 겪었다. (金昌鎬기자)

대전시·충남의회를 비롯,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8일 일제히 개원식과 첫회기를 갖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이날 오전10시 대전시·충남의회 의사당에는 각각 본회의장에 수의 관중석과 방청석을 마련,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가운데 개원식이 열렸다.

이어 오전11시 대전시·충남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전시·충남의회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열려 의장단 선출 등 의회운영을 위한 2년간의 의정 부의장 등 의회지도부를 양산해 마무리 성격의 수반될 것을 선서했다.

이어 통합당의 박희태 의원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대전시·충남의회 의원 전원과 각 시·도의회 의장단과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 지방의회 부활을 축하했다.

이날 오전 대전시·충남의회 의원들은 각각 본회의장에 마련된 방청석에 가족들을 초청, 지방의회 부활을 축하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대전시·충남의회 의원 전원과 각 시·도의회 의장단과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 지방의회 부활을 축하했다.



대전 金斗漢의장



충남 李大熙의장

1991. 11. 28 중도일보



1991三檀紀 4324年) 11月 28日 木曜日 【日刊】

지방議員 판공비 거부

大田市·忠南道 이어 기초의회로 확산

豫算심의때 삭감키로

大田市議會

1992. 4. 19 대전매일



(2) 日曜日 西紀1992年4月19日

「議員 보좌관제」 추진 움직임

忠南道의회 서울시와 뜻 같이… 政府측과 마찰예상

서울시의회가 의원개인보좌관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지방의회가 이를 1000명이내 같아 들여 갈등 예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정당수 의원들이 지난해 의회관계부터 의회업무를 전담할 이로 처리하기 위해 의원별 개인보좌관제의 필요성을 들어 정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무부는 17일 서울시의회의 개인보좌관제 신설을 승인하면서 자치단체에 보다 개인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시간적으로나 활동영역의 한계를 느끼게하고 지방의회의 수행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거명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보수 명예직의 원칙을 벗어나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며 ▲조직개편으로 보좌관제 보다는 ▲보좌관을 통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관계자는 상당수의원이 보좌관제도입을 찬성하고있어 서울시의 의회정책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보좌관제 찬성

한편 서울시의회 개혁의원들은 지난 서울시 개최된 지방의원 직업이 정착인 국회의장과 다름없는 보좌관제 신설을 부정적이로 본다고 말하고 이러한 보좌제로 전문직공무원과 이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의정활동보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992. 6. 27 조선일보

西紀 1992年 6月 27日 土曜日

"忠南도청을 옮겨야 한다"

道議会서 공식문제 제기

"균형발전·주민편의 위해 필요"

후보지 선정 논란도 치열할듯

충남도청이전문제가 도의회를 중심으로 또다시 복각 거론되고있다.

지난 89년 1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된후 각종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등이 대전에 몰려 있는 반면 충남도청은 지리적으로 대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청이전은 단순한 소재지이전이 아니라 관련행정및 재정 금융기관의 따라 도내전체가 걸릴과 반병행이전을 불러오는 파급효과를 갖는다.

특히 이전의 당위성여부 현재 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있는 지역은 천안 공주 예산 서산 온양등 7개지역. 3선전본리이전이 지역개발효과등을 노려 이들지역이 대상지로 올랐으나 앞으로 이문제가 본격화할경우 유치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문제제기 자체를 사실상 꺼려했던 것도 그때문이다.

李鍾國충남도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한 답변에서"도청이전에 따른 지역간의 유치경쟁으로 안정과 주민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할것이라며 신중론을 편것은 사실 불필요한 일이기는커녕 매우 필요한 때문이라고 볼수있다.

도청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문제도 난제중 하나이며 의원들은 공공개발지역으로 신도시건설을 추진,개발이익금을 조성하는 한편 현 도청부지등 대전시내에 있는 도유재산을 처분하면 재원조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있다.

문제는 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듯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지선정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하는게 관건이라 할수있다.

〈金昌洙기자〉



◇지방화시대를 맞아 대전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청 이전문제가 6월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또다시 거론되고있다.

1995. 1. 27. 대전일보

"地方의회도 國際교류시대"

議政 세계화 방안 일환 大變身 모색
해외연수 擴大 대변인制 신설검토

忠南道의회 韓·日 韓·中의원연맹 창립추진

본격적인 지방화와함께 지방의회간에 국제교류시대가 열린다.

지방자치에 앞서 구태의연한 의정탈피에 나선 충남도의회(의장 李大熙)는 조만간 일본 구마모토켕의회및 중국하북성의회등과 의원연맹창립을 추진키로하는등 지방의회간 국제교류개막이 가시화되고있다.

27일 도의회가 지방의정의 내실을 기하기위해 계획한 「지방의회의 지방화·세계화방안」에 따르면 한·일, 한·중의원연맹창립을 통한 의원간 국제교류및 해외연수제 확대, 대변인제신설등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고있다.

이가운데 현재 충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협력을 조인한 일본 구마모토켕의회와는 한·일의원연맹을, 중국하북성의회와 광서성자치구의회등과는 한·중의원연맹을 늦어도 올상반기까지 창립해 상대국의원끼리 교류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들을 이들나라 의회에 종래 시찰성연수가 아닌 분야별 목적성 연수를 시켜 전문화하는동시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일본·중국을 비롯 자치제가 정착된 미국·캐나다·호주등 선진국에 장기체류형식으로 연수토록 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한·일, 한·중의원연맹창립을 위해 상대국지방의회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갖고 긍정적인 의견이 오간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의정을 재정립하고 긍정현안을 도민에게 바르게 알려 참여하는 지방의회상구현을 위해 도의원을 홍보책임자로하는 대변인제를 신설할것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의장아래 대변인실을 두고 대변인실직속으로 공보계(담당)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계획하고있다.

한편 이같은 방안은 다음달 열리는 운영위원회및 임시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申秀容 기자〉

第5節 第5代 忠淸南道議會

1995년 6월 27일 선거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거한 제5대 도의원 선거는 5개시 10개군에서 총유권자 1,270,138인중 910,465인(71.7%)이 투표에 참여하여 165인의 입후보자중 61인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비례대표 6명 포함), 1995년 7월 11일 제5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되었다.

□ 選 擧 日 : 1995년 6월 27일

□ 議員定數 : 61인(비례대표 6인 포함)

□ 任　　期 : 1995년 7월 11일 ~ 1998년 6월 30일(3년)

□ 會　　期 : 93회~120회

□ 第5代 道議會 議長, 副議長

〈전반기〉

○ 의　장 : 李鍾洙(천안시), (임기 : 1995. 7~1997. 1)

○ 부의장 : 羅信燦(서천군), 孫在卓(공주시)

〈후반기〉

○ 의　장 : 李鍾洙(천안시), (임기 : 1997. 1~1998. 6)

○ 부의장 : 鄭善興(청양군), 朴應煥(아산시)

□ 道議會 議員 名單

- 第5代 도의회 의원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천안시 : 丁淳平, 李鍾洙, 安聖哲, 鄭在澤, 張基日, 李在昌
○ 공주시 : 具興書, 孫在卓, 尹錫雨, 林吉洙, 吳明煥
○ 보령시 : 金鳳男, 李時雨, 李峻雨, 申載元(明榮植), 任暢鎬
○ 아산시 : 金載鳳, 盧允淑, 全泳俊, 李夏源, 朴應煥
○ 서산시 : 李福求, 李甲俊, 柳仁錫, 金庸鎬, 許榮一
○ 논산시 : 朴元來, 孔 均, 金容鎬
○ 금산군 : 李種烈, 柳崇烈, 吉浩一
○ 연기군 : 韓昭煥, 林海洙, 尹錫珪
○ 부여군 : 尹昌漢, 李鍾寔, 姜昌求
○ 서천군 : 宋善奎, 羅信燦, 李相敦
○ 청양군 : 鄭善興, 禹智命
○ 홍성군 : 崔重默, 申晧均, 柳濟豊
○ 예산군 : 金仁泰, 韓道源, 裵炫寧(李東旭)
○ 태안군 : 崔敬燮, 朴東允, 趙明鎬
○ 당진군 : 張俊燮, 鄭龍海, 宋日權
○ 비례대표 : 李貴順(張靜子), 河濟泓, 李大熙, 朴柄鎬, 金玉景, 朴太山

※ ( )의 보령시 明榮植의원, 예산군 李東旭의원은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보령시의 申載元의원 및 예산군의 裵炫寧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으며, 비례대표의 한나라당 張靜子의원은 자진사퇴로 같은 당소속 李貴順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하였다.

□ 第5代 忠淸南道議會議員 尊影





▲ 1995년 7월 11일 제5대의회 개원식



▲ 민선 도지사와 함께 한 제5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기념



▲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위원장 우지명)



▲ 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위원장 허영일)



▲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재봉) 보령시 오천면 호도 태양열 발전소 현장 방문



▲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구흥서) 산하의료원 현장 방문



▲ 전반기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준섭) 천안소방학교 방문



▲ 후반기 내무위원회(위원장 한도원) 공주 산성상가 화재위험 재난상황 현장 방문



▲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원래) 대천고등학교 이전부지 현장 확인



▲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조명호) 천안학생회관 신축공사현장 방문



▲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최경섭) 금산수해지역 현장방문



▲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최중묵) 산림박물관 방문 운영실태 점검



▲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갑준) 금산 수영교 가설공사 현장 방문



▲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호균) 연기군 배수펌프장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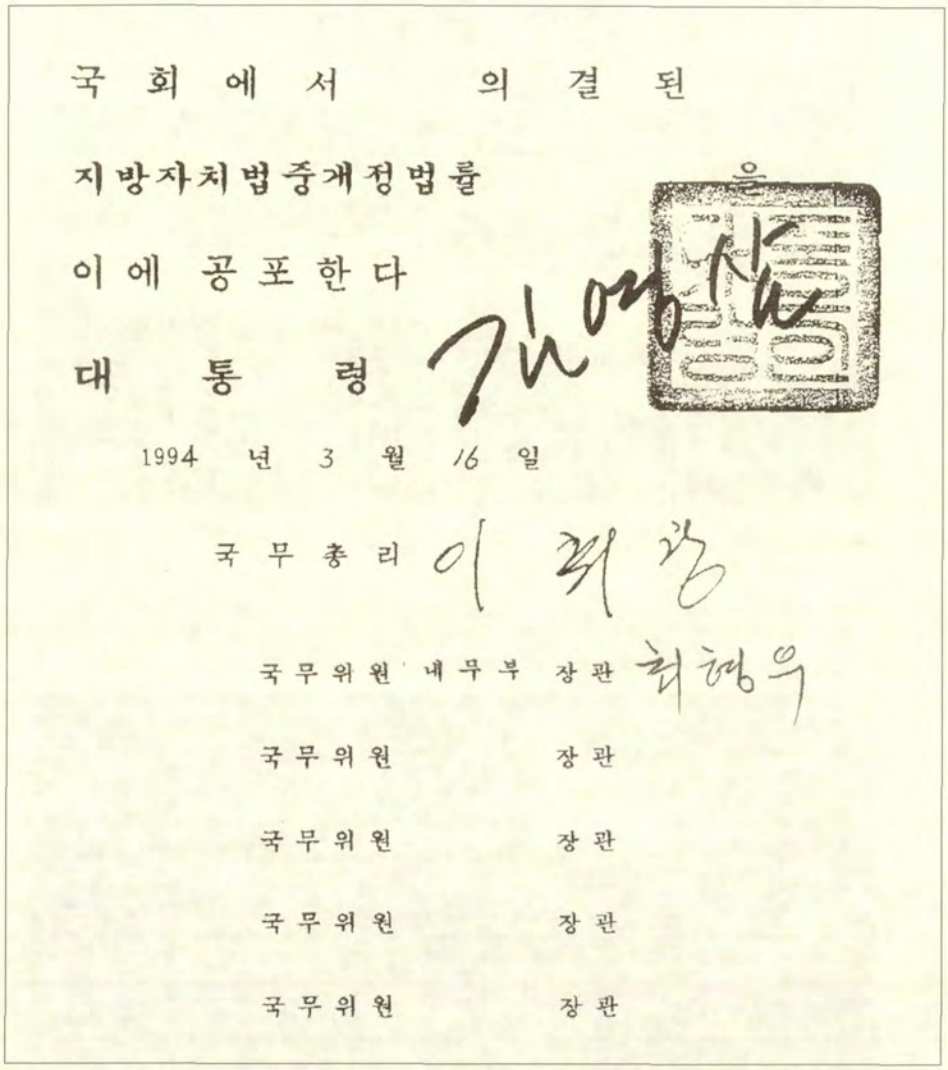


▲ 1996년 7월 5일 도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국책현안사업추진과 관련 도민과의 대화



▲ 제5대 충청남도의회 폐회를 마치고 한자리에

□ 第5代 道議會 관련 자료



국 회 에 서 의 결 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이 에 공 포 한 다

대 통 령 김영삼

1994 년 3 월 16 일

국 무 총 리 이 휘 창

국 무 위 원 내 무 부 장 관 허 행 욱

국 무 위 원 장 관

국 무 위 원 장 관

국 무 위 원 장 관

국 무 위 원 장 관

▲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 제11차 개정 공포문('94. 3. 16)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95. 6. 30이내 실시 등 민선자치시대의 개막 근거 마련

□ 言論에 비친 第5代 道議會

1995년 7월 11일

大田日報

忠南道의회 개원

의장 李鍾洙, 부의장 羅信燦·孫在卓씨

충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93회 임시회를 열어 제5대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2명의 부의장에는 羅信燦(자민련·58·서천군)·孫在卓의원(자민련·59·공주시)을 각각 선출했다.

대전광역시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에 金光熙의원, 내부위원장에 李源주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曺明珍의원, 문교사회위원장에 李寅九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沈大平충남지사·白承鐸도교육감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의정에 임할것을 선서했다.

도의회는 이에앞서 오전 10시 의장단선출에 나서 李鍾洙의원(자민련·62·천

동양일보

1995년 8월 17일

호남고속鐵 공주-논산 경유

忠南道의회 촉구 결의

충남도의회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金載暎)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호남고속철도노선을 천안-공주-논산지역을 통과하고 공주와 논산에 정차장을 설치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의 촉구결의안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 노선결정과관련, 용역을 수행한 교통개발연구원의 검토노선대안은 서울-천안-공주-논산-목포의 제1안과 천안-공주-부여-이리를 잇는 두번째안 대전-논산-목포의 세번째안 그리고 천안-충북오송-남정자-논산을 연결하는 4개안으로 되어있다는 것.

의원들은 그러나 충남도가 주장하는 천안-공주-논산을 연결하는 노선인 제1안이 이미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 발표된바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경제성이 가장 높고 소외되었던 충남권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任淳哲 기자〉

1995년 10월 19일

大田每日

大田·충남의원 90% 이상 당적보유

"내년總選 유권자 票연결「첨병」"

政黨 지방의원「모시기」



1995년 11월 25일

中都日報

道의회

市·郡감사 순조롭게 진행

초반갈등 상호신뢰·절충 통해 해결

全國최초 실시 새 이정표 정착의의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에 대한 23, 24일 양일간의 도의회의 행정감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래 전국에서 최초의 시·군감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도의회의 시·군 감사는 특히 그동안 시·군의회에서 감사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반발을 보여왔던 사안이어서 순조로운 감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와는 달리 아산시와 공주시에 대한 도의회 내부위감사는 별 탈없이 진행돼 갈등을 해소했음은 물론 시·군의회는 모두가 부담스런 상태로 수감기관과 피수감기관으로 감사에 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이날 감사는 앉으로 감사방향을 좌우한다

이 같은 도의회와 시·군의회,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은 그동안 시·군감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다.

도의회와 시·군의 감사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점에서 최초의 감사대상이었던 아산시와 공주시는 감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하고 자리매김을 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감사에 앞서 시장삼에서 도의회의원과 시장·간담회에서 이들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감사는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향후 도내 타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시·군의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호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崔丁圭기자〉

1996년 4월 30일

忠淸日報

長項항 관할이관 촉구

忠南道의회 관계부처 건의문

忠南道의회는 29일 舒川郡 長項港의 관할권을 최근 개청한 大山지방해운항만청으로 넘겨달라는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보냈다。

忠南道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4년 개항한 長項港은 64년에 국제항으로 승격돼 항만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그동안 타도에 있는 群山지방해운항만청관할로 돼 있어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群山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주민의 소외감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道의회는 이에따라 『지역발전과 연계한 새로운 항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長項港을 大山지방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남일보

1997년 12월 30일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

주민의견 도정반영위해 분주

【이명우기자】

97 도의회 결산

제5대의회의 임기 마지막 연차를 보내는 충남도의회(의장 이종수)는 경제난등 어려운 제반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민 편의를 위한 조례등 각종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도정질의등을 통해 「견제, 감시, 지원」이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며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는데 그 소임을 다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면서도 과도한 욕구나 주장에 대해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 회기도 정기회와 임시회등 9회에 걸쳐 1백18일간 운영하며 조례안 65건, 예산·결산안 9건, 동의·승인안 7건, 건의·결의안 2건, 기타 64건등 1백47건을 적기에 처리했다.

이와함께 연초 정국을 뒤흔들었던 한보사태의 최대 피해지인 충남 서북부권 경제문제와 서해안 백중사리때 해일 피해발생시 즉각 대처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한 공로도 올 회기년도의 성과중 하나이다.

도의회는 의회본연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사상 초유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5대의회를 마감하는 98년도에도 IMF체제와 경제난 극복을 대비한 의정방향 전환과 의회 임기 마무리및 6대의회 개원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

올 회기중 도의회는 예산심의에 충실해 불요불급한 예산 70억1천3백만원을 삭감하는등 주민의 세수보호에도 앞장섰으며 59건의 진정등 민원사항 가운데 51건의 민원을 수리하고 61%인 31건의 민원을 해결하는등 민의 수렴에도 앞장섰다.

이외에도 도의회는 도정의 충실한 민의수렴을 위해 의정모니터제를 운영해 95명의 의정모니터를 위촉해 4백3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고 4개과제의 의원연찬회를 개최해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도한 한해였다.

第6節 第6代 忠淸南道議會

1998년 6월 4일 선거사상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거한 제6대 도의원 선거는 6개시 9개군에서 총유권자 1,343,633인중 707,780인(60.4%)이 투표에 참여하여 78인의 입후보자중 36인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비례대표 4명 포함), 1998년 7월 9일 제6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되었다.

□ 選 擧 日 : 1998년 6월 4일

□ 議員定數 : 36인(비례대표 4인 포함)

□ 任　　期 : 1998년 7월 9일 ~ 2002년 6월 30일(4년)

□ 會　　期 : 제121회~제160회 (40回)

□ 第6代 道議會 議長, 副議長

〈전반기〉

○ 의　장 : 李鍾洙(천안시), (임기 : 1998. 7~2000. 6)
○ 부의장 : 李福求(서산시), 韓昭煥(연기군)

〈후반기〉

○ 의　장 : 金載鳳(아산시), (임기 : 2000. 7~2002. 6)
○ 부의장 : 朴東允(태안군), 許榮一(서산시)

□ 第6代 道議會 議員 名單

- 第6代 도의회 의원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ㅇ 천안시 : 李鍾洙, 丁淳平, 金文圭, 李鎭煥
- ㅇ 공주시 : 尹錫雨, 孫在卓
- ㅇ 보령시 : 李峻雨, 申載元
- ㅇ 아산시 : 金載鳳, 姜泰鳳(朴應煥)
- ㅇ 서산시 : 李福求, 許榮一
- ㅇ 논산시 : 宋中彬(林聲奎), 宋榮哲(金容鎬)
- ㅇ 금산군 : 沈貞洙, 朴贊中
- ㅇ 연기군 : 韓昭煥, 康華燮
- ㅇ 부여군 : 姜泳成, 柳炳基(姜昌求)
- ㅇ 서천군 : 全英煥, 朴泳祚(韓鮮敎)
- ㅇ 청양군 : 鄭善興, 禹智命
- ㅇ 홍성군 : 田溶鳥, 申皓均
- ㅇ 예산군 : 李漢植, 金重漢
- ㅇ 태안군 : 崔敬燮, 朴東允
- ㅇ 당진군 : 張俊燮, 鄭龍海
- ㅇ 비례대표 : (金南鎬), 金東鮮, 韓昌淑, 宋敏求

※ ( )내의 朴應煥의원은 '99. 7.12 사망으로 '99.11. 15 실시된 보궐선거에 의하여 姜泰鳳의원이 당선되었으며, 林聲奎의원은 논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1. 3. 31 의원직을 사퇴하여 2001. 4. 26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宋中彬의원이 무투표 당선되었고, 金容鎬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99. 11. 12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에서 퇴직되어 2000. 6. 8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宋榮哲의원이 당선되었으며, 姜昌求의원은 농협정관상 농협조합장과 겸직 금지조항으로 의원직을 사퇴하여 2000. 10. 26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柳炳基 의원이 무투표 당선되었고, 韓鮮敎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99. 3. 9 대법원의 형확정으로 당선무효되어 '99. 6. 16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朴泳祚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비례대표 金南鎬의원(새정치국민회의)은 지병으로 '99. 12. 21 사망하였으나 승계대상 후보가 없어 이후 공석이 되었음.

□ 第6代 忠淸南道議會議員 尊影



□ 言論에 비친 第6代 議會

1998. 7. 10. 충청일보

대전시·충남도의회 출범

대전 의장 金成九의원 충남 의장 李鍾洙의원 선출

'지역발전위해 직무 성실수행' 다짐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각각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충남도·대전시의회는 개원식에 앞서 이날 오전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했다. 충남도의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갖고 35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선거를 실시, 2차투표 끝에 자민련의 李鍾洙의원(66·천안1)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제1부의장에는 李福男의원(53·자민련·서산1), 제2부의장에는 韓昭熙의원(56·자민련·연기1)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의장 선거에서는 자민련 의원들간 사전조율에 난항을 겪어 정당의 내정자가 탈락했으며 제1부의장 선거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3차 투표까지 가서야 당선자를 확정지었다.

도의회는 10일 2차본회의를 열어 5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간사를 선출한후 조례심사등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대전시의회도 17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해 金成九의원(51·자민련·서구3)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제1부의장에 李寅九의원(57·자민련·유성1), 제2부의장에 郭秀泉의원(58·자민련·동구2)을 각각 선출했다. 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등 4개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임꼽 선출한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의원직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을 선서 했으며 李鍾洙 충남도의회의장과 金成九 대전시의회의장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벌여 나가자』고 역설했다.

/장선배·김창영기자





제3대 대전시 의회(좌)및 제6대 충남도 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선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염충열기자

1998. 7. 10. 대전일보





대전·충남 시도의회는 9일 임시회를 일제히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대전 시의회(左)와 충남도의회 민선3기 지방의원들이 의원 윤리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金舜星 기자>

지역민 팔다리 되어 주길…

대전·충남도의회 의장단 선출 이모저모

대전시 의회

조용한 가운데 진행

○…9일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3대 대전시의회 전반기의장단선출은 재적의원 1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종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속에 치러지는등 과거 1·2대 전·후반기의장단 선거때와 달리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큰 잡음없이 진행.

먼저 실시된 의장선거에서는 예상대로 3選인 金成九의원과 再選인 趙鍾國의원이 대결, 9표를 얻은 金의원이 7표를 받은 趙의원을 따돌리고 당선됐다(기권 1표). 최대 관심사인 의장투표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趙의원을 지지했던 재선의원그룹(7명)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金의원측에 줄을 댄 것으로 전해진 초선의원들측(9명)은 느긋한 표정을 보여 대조적인 입장.

갈등구조 재현 우려

○…이어 실시된 제1부의장에는 11표를 기록한 再選인 李貞九의원이 6표를 얻은 같은 再選의원인 金光熙의원을 제치고 선출됐으며 제2부의장선거에서는 初選인 郭秀泉의원이 11표를 기록해 초선 李相學의원(3표), 再選 金光熙(2표), 재선 金東瑾의원(1표)을 누르고 당선. 1·2부의장선거에서도 역시 趙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보다는 金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이 「승리」하는 형국이 빚어지자 재선그룹들의 표정은 또다시 일그러지는 분위기가 연출.특히 재선의원중 일부는 자기들중 몇몇이 감투에 연연해 빚어진 결과라며 불쾌감까지 드러냈으며 자민련지도부가 趙의원쪽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며 크게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

이때문에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장 선임을 비롯 3대 전반기 의회운영 과정에서 재선의원들과 초선의원들간에 갈등구조 재연이 우려 되고있고, 2년후에 있을 후반기 의장단선출에서도 이번 「초선-재선」대립양상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되기도.

의원에 꽃송이 달아줘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대표의장 양현수)는 이날 「4년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민의 팔다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변치 말라」면서 「첫등원하는 의원들에게 따듯한 지역주민의 뱃. 남카로운 시정의 감시, 곰곰한 살림꾼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부탁한뒤 17명 전원에게 꽃송이를 달아주기도.

충남도 의회

대이변에 흥분한 표정

○…그동안 단일후보 추대를 싸고도내 서북부와 남부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여 귀추가 주목됐던 제6대 충남도의회 의장선거에서 李鍾洙 5대 의장(64)이 예상을 뒤엎고 승리하자 「한편의 드라마」라며 흥분된 표정.

1차 투표에서는 재선이상 자민련소속 의원들의 합의추대로 내정됐던 金載鎔의원(아산)이 12표, 李鍾洙의원 9표, 孫在卓의원(공주) 6표, 鄭善興의원(청양) 4표로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없자 2차 결선투표에 돌입, 李의원이 19표를 얻어 15표에 그친 金의원을 누르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

이날 의장선거는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장까지 독식하려는 서북부지역의원들에 맞서 남부지역의원과 일부 서북부지역 의원들의 반발표까지 가세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

서북부지역의원 당혹감

○…의장선거에 이어 실시된 제1부의장선거도 3차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끝에 부의장에 내정됐던 李福求의원(서산)이 18표를 얻어 張俊燮의원(당진)에 2표차로 신승.

1차투표에서는 李福求의원이 17표로 과반수에 1표가 미달한 가운데 의외의 복병으로 나타난 張俊燮의원(당진)이 15표, 韓昭煥의원(연기)2표, 鄭善興의원 1표로 집계돼 다시 2차투표에 들어갔으나 李의원 17표, 張의원 16표, 韓의원 2표로 나타나 3차결선투표까지 가게된 것.

제2부의장투표에서는 남부의 韓昭煥의원(연기)이 20표를 얻어 14표를 얻은 申晧均의원(홍성)과 1표에 그친 李峻雨의원(보령)을 누르고 서북부지역 의원들은 의장후보내정자인 金載鎔의원에 이어 부의장내정자인 申晧均의원마저 패배했다며 당혹감을 표출. <鄭萬基·宋廷淳 기자>

대전시 의회 재선그룹 지지의원 패배 당황
충남도 2차투표끝 역전 드라마 연출

1998. 7. 25. 동양일보

충남도의회사무처 1개계 통·폐합

12% 감축 조직개편안 발표… 9명 감원키로

충남도의회사무처가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에서 각각 1개계를 통·폐합해 직원정수의 12%를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충남도의회사무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마련, 의장단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이를 통보했다.

도의회사무처는 지난 5월조직개편 조치에 따라 1개 상임위원회에서 남는 전문위원과 폐지되는 총무담당관실 경리계, 의사담당관실 의안계에서모두 9명의 직원을 감축키로 했다. 의회사무처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집행부와 같은 12%의 감축비율을 적용, 직원정수가 75명에서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기능 1명)이 감축된 66명이된다.

-도의회는 지난5월 의원정수조정에 따라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전문위원회를 통합해 내무위원회로, 농림수산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를 통합해 산업경제위원회로 조정했다. 도의회사무처의 이번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혁신적인 조직개편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동참하고 2, 3단계의 조직개편에 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원준 기자〉

1998. 8. 11. 충남일보

충남도의회 긴급 본회의



김문규 의원
(수해복구특위 위원장)



이한식 의원
(수해복구특위 간사)



최경섭 의원



장준섭 의원



김중한 의원



박용윤 의원



정용해 의원



이진한 의원



전영환 의원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특위 구성
내무위 道 조직개편안 심의 난항

충남도의회(의장 이종수)는 10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4일째 각 상임위를 속개하고 수해현장 확인 및 복구지원 특위 구성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체 회기를 당초 보다 하루 연장한 14일까지로 정했다.

도의회는 2차 긴급 본회의에서 8일 도내 서북부권에 내린 비피해를 조사하고 복구지원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최경섭 의원(자민련·태안1)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특위구성을 결의했다.

도의회는 수해복구특위 위원으로 최 의원을 비롯 김중한, 장준섭 의원(이상 내무위), 전영환 의원(교사위), 박용윤, 정용해 의원(산업위), 이진한, 이한식, 김문규의원(건설위)를 선임하고 김문규 의원(자민련·천안3)을 위원장에 이한식 의원(자민련·예산1)을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수해복구특위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수해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피해상황 파악과 이재민을 위로하고 21일간 특위활동을 통해 당진군 비롯한 수해우심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수해복구 중앙예산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구성된 수해복구특위는 광역의회 차원의 재해대책기구로는 전국최초로 만들어졌다.

이에앞서 열린 내무위에서는 감사실을 비롯한 내무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도정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도 행정조직 조례안과 2개의 개정안 및 98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에서 내무위의 소속의원들은 내무국 소관이던 총무과가 행정부지사 직속관으로 배치된 것과 정책기획정보실에 정책관리관을 둔 것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여성국의 축소를 강력히 반대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내무위 의원들은 도가 정책적 배려를 한 정책자문관제를 기존 기획실의 확대로 해석, 이를 폐지하고 여성관계국을 부활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위는 보건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상황을 보고 받고 충남명수 지정 등을 규정한 도 수질환경보존조례안과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고 추경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렸다.

보사환경국 업무 질의에서 전영환 의원(자민련·서천1)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수질환경 기초시설의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가동중단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결핵환자의 평균치료기간과 재활환자현황 및 완치환자 비율에 대해 질의했다.

한소환 의원(자민련·연기1)은 충북도의 이질환자 발생으로 전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도내 이질환자 여부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위는 도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숭통을 터줄 계획이고 소비자보호조례 개정안도 원안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건설위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이번 도내 수해복구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 활동을 벌였다.

〈이명우 기자〉

1998. 9. 11. 충청일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의 논산 강경 낭청배수펌프장 설치공사 현장 확인 모습.

현장확인 道政난맥상 파헤쳐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심도있는 질의·진지한 대안 요구 돋보여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느때보다도 심도있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해 도정의 난맥상을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에 따라 집행부의 수감자세도 한차원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민을 위한 도정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과 청양군 기초자치단체 감사와 서산의료원 법인감사를 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尹錫雨)는 그동안 누적된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자치문화관광국과 감사관실등 소관 실·국 감사에서는 조직의 활성화 방안과 내실있는 행사 개최등을 요구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李埈雨)는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여성환경국 감사에서 교육행정 발전과 환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姜昌求)는 논산시장과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등 적극적인 감사를 벌였다는 주위의 평을 받았다. 농수산경제위는 경제위기 극복과 농업부문 육성방안에 대해 분야별로 꼼꼼한 질의를 벌였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申皓均)는 6개 지역의 건설현장을 방문해 적기 시공과 완벽한 공사여부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현장방문에서 시공자들과 함께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줬다.

/장선배기자 changsb@ccnews.co.kr

1998. 12. 30. 대전매일

대전·충남 광역의회 한해 결산

의원하모니 진일보

노력하는 의정활동 "눈길"

깊이부족 감정질의 구태도

지난 7월9일 닻을 올린 대전시의회 제3대의회(의장 金成九)가 29일 제7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98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73회부터 77회까지 5회에 걸친 임시회와 1차례의 정기회를 거치며 총 1백12건의 안건을 상정,이중 1건 철회 2건 미처리를 제외한 1백9건의 안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9건은 의원발의로 조례안 3건,규칙안 1건,결의안 4건,건의안 1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표면적 성과의 이면에는 은갖 잡음이 들끓었던 2대의회에 비해 한단계 성숙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정원이 26명에서 17명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의원들이 신발끈을 동여매는데 일조했고 선발된 의원들의 구성은 40대부터 60대이르기까지 다양한 폭을 선보여 탄탄한 조직을 탄생시켰다.

의원들의 수준이 비교적 평준화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대의회까지 대전시의회는 몇몇의원들이 주도했다면 한층 젊어진 3대의회는 의원간 실력의 편차가 조금은 줄은 느낌이다.

의장선출을 놓고 초·재선간 볼거진 샅바싸움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별 탈없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도 의원들의 조신(?)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백30만명의 대표성을 각인하려는 노력도 이전의 의회와는 사뭇 달리진 양상이다. 6개월 여 동안 선보인 3대의회는 아쉬운대로 합격점을 받을 셈이다.

그러나 의정의 깊이와 색깔의 문제에서는 아직 초보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몰고 늘어지는 근성도 부족하고 그저 목청만 크면 된다는 식의 감정섞인 질의태도도 되짚어 봐야할 대목이다.

9건의 발의가 있기만 하지만 찾아 다니는 의정은 좀처럼 볼 수 없었다는 지탄도 면키 어려운 부분이다.

집행부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리는 임시회,큰 반향없는 안건처리를 제외하고 별다른 족적이 없다는 얘기다.

이와관련 시의회의 살림을 맞고 있는 李源玉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합력는 의지가 돋보였으며 소소한 안건까지 숙의를 거듭하는 태도는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회상,「그러나 의원간의 끈끈한 정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은 3대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李仁烈기자〉

현장중심 의정 성숙

주민 애로 의회차원 대처

집행부 흠집내기 옥의 티

5·6대가 교차된 충남도의회(의장 李鍾洙)는 29일 제125회 정기회 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한햇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감했다.

도의회는 민선 2기 시대 개막과 함께 역대 의회와는 달리 한껏 성숙된 집행부 견제와 협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생관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8회에 걸쳐 1백18일 동안의 회기를 개최해 조례안등 모두 1백4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1백37개소 현장 방문, 52건의 민원을 접수해 도민을 위한 대의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지난 7·8월 호우 폭우에 민첩하게 대응, 의원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수해복구지원특위를 구성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를 청취해 미흡한 정책 및 제고 개선안을 대정부에 건의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행정사무기간동안에는 1천89건의 관련 서류 요구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 오류를 잡아내며 대안을 제시, 집행부측으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덜 숙련된 의정활동 미흡으로 도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5대 의회는 마지막 연차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나타나 많은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는 수준이하의 모습을 보였으며 지난 7월 출범한 6대의회는 원구성 단계에서 불거진 의원간 갈등이 첨예화, 한동안 심한 내홍을 겪었다.

이러한 모습은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노출돼 의원간 갈등, 대집행부 흠집내기로 인한 감정싸움 양상이 업키고 설켜 기형적인 예산안을 의결하는 결과를 초래, 비난을 샀다.

소위 의원재량비의 확대 요구를 주장한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돼 올 지역소규모 숙원사업 보다 두려 5배이상 증가시켜 도민 편의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李鍾洙의장은 「주민 대표기관으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입법·감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 연찬 및 보좌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2기 시대 개막과 함께 5-6대가 교차되며 시작된 첫1년을 무난히 마친 도의회가 역대 의회와는 달리 한껏 성숙된 모습으로 견제와 협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새지평을 열어갈수 있을지는 이제부터의 노력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吳周映기자〉

2000. 8. 11. 대전일보



첫 임시회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10일 오전 11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렸다.

충남도의회 첫 임시회

충남도의회(의장 金載鳳)는 10일 제1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金載鳳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실익을 따지고 도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보좌기능을 더욱 활력화 시켜나가는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5분발언에 나선 崔敬燮의원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지정된 이후 노후 화장실마저 보수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항·포구, 해수욕장 등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없는 곳은 과감히 공원구역에서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 8. 18. 대전매일

道의회 의정활동 '눈에 띄네'

현장방문·주민의견수렴등 긍정변화 평가

제6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원구성이후 처음 열린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141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의례적인 질의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또 시간 소모적인 의견대립에서 벗어나 견제의 역할을 하는 비판의 목소리로 일관했고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정의여중고와 관련해서는 도 교육감의 출석 요구까지 하면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다.

도의회는 자연사박물관의 현지를 방문해 사업의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람객의 교통편의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을 답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동감 있는 의정을 펴 관심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도정 현안으로 부각된 환경부의 태안해안국립공원 갯벌 추가 편입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채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 사무처의 관계자는 「후반기 원구성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도의회의 변화를 예고했다. 〈勳〉

도의회 "민의대변 성숙한 의정"평가

주민이익 반영 대변자 역 '톡톡'

충남도의회(의장 김재봉)가 민의를 대변하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17일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진지한 자세로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진지한 자세로 현안사안을 밤늦게까지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지난 과거 소모적인 의견대립에서 벗어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대변자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서천 정의여중고 사태와 관련, 도 교육감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을 펼쳤다.

의원들은 또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직접 현장을 방문,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의했고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접근 도로 공사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이 돋보였다.

이와함께 태안해상국립공원구역 확대와 관련해 최경섭의원을 중심으로 11명의 의원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관리권한 이양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제출하는 등 발빠른 기동성을 보였다.

〈이준건 기자〉

2000. 8. 18. 국도일보

충남도의회 의정활동 활발해졌다

비회기중에도 자료수집·연구등 노력 돋보여

제 6대 충남도의회(의장 金範鳳)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이 일부 의원들은 비회기 중임에도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에 나서고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이 증가하는 등 입법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후반기들어 2번째 회기인 제142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1차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등 15개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다른 어느때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

도의회는 이기간 동안 안면도 골프장(교육사회위)과 연기군 지방도 확포장 공사장(건설소방위) 등에 대한 정검을 통해 충분한 현장상황을 파악했고 추경안을 심의하면서도 예결위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낭비요소와 중복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특히 입법기능을 대폭 강화해 임시회에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조례개정안 3건을 의원발의 했다. 행자위소속 의원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상정해 본회의서 통과된 '용역시행 행정절차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민자유치시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등 2건과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상정한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개정조례'등 모두 3건이다.

이는 전반기 2년동안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로 볼수 있다. 이처럼 의정활동이 새로워 진것은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9월중 의회 운영전반에 대한 세미나와 상임위원회별 워크숍 등을 개최 의원들의 연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이달말에도 비회기중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金範鳳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 직후 강조했듯이 위원회별·사안별로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의원상호간은 물론 시·군 의회와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 하겠다"고 밝혔다. <우래철 기자>

2000. 10. 7. 대전일보

道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증가

상반기 2년간 단 1건에서 이번 임시회에만 3건

입법기능 활성화 기대

제6대 충남도의회(의장 김재봉)가 후반기에 들면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개정안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법활동 기능이 활성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후반기 들어 두번째 회기인 제14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도의회는 도에서 제출한 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비롯해 조례개정안 11건 등 총 15개 안건을 상정한다.

이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해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3건으로 지난 상반기에 의회활동 관련 조례를 제외하고 단 1건(충남도 감세적 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불과했던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정순권의원(천안-자민련)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8명이 제안한 '충남도 민자유치시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충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정용해의원(당진-자민련) 등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8명이 제안한 '충남도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등이다.

이에 대해 도 의회 이강운 전문위원(행정자치)은 "일부 조례안의 경우 의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안한 것이며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과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도의원들이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는 모자를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 의회 기능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순권 의위도 "지금까지 자치단체 의회의 문제점으로 입법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매 회기때마다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개정안 등 입법안을 만들어 꾸준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8년부터 입기가 시작된 제6대 도의회는 상반기 2년동안 총 160개의 조례안을 상정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의회권한을 제외하면 단 1건에 불과했다.

〈김철석 기자〉

2000. 9. 27. 중도일보

2000. 12. 19. 동양일보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비판

2000결산 ●충남도의회



○도내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다니며 도민 권익보호에 앞장선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유동천을 찾아 수질점검을 하고 있다.

복지증진·도정발전 자치입법활동 활발

권익침해 방지정책 7건… 권익보호 앞장

충남도의회 의장 김대봉)는 올 한해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그 어느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특히 자치입법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제정 17건, 개정 58건 등 모두 75건의 조례를 제·개정, 예년 평균(46건)을 크게 웃돌았다. 도의회는 도정의 최대 현안과제인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박람회지원특위를 구성, 현재 운영중에 있다.

지난 10월 구성된 특위는 내년부터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

도의회는 최근 집행부가 혼선을 보이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내분사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점 등에 대해 시정과 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충성구제역 발생현장, 대풍피해현장 등 도내 50여곳의 사업현장을 발로 누볐다. 지난달 도정, 교육청, 시·군 등 357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이가운데 121건을 지적,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의 이해와 직결된 자연환경이 발생할 때마다 발빠르게 대처해 왔으며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대책을 촉구하는 등 7건의 정책건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구제역발생으로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의 생을 돕기위해 도의회는 여정부 건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8월에는 태안해안 기름보존지구의 국립공원편입반대 건의를 한데 이어 9월에는 공주대학교 공주문화대학과의 통합을 건의, 이를 실현시키기도 했다.

이달들어서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와 지방산업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움직임에 대해 난개발촉발 등 국토의 균형적 개발정책에 장애요

충남도의회 의장 김대봉)는 올 한해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그 어느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특히 자치입법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제정 17건, 개정 58건 등 모두 75건의 조례를 제·개정, 예년 평균(46건)을 크게 웃돌았다. 도의회는 도정의 최대 현안과제인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박람회지원특위를 구성, 현재 운영중에 있다.

지난 10월 구성된 특위는 내년부터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

도의회는 최근 집행부가 혼선을 보이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내분사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점 등에 대해 시정과 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충성구제역 발생현장, 대풍피해현장 등 도내 50여곳의 사업현장을 발로 누볐다. 지난달 도정, 교육청, 시·군 등 357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이가운데 121건을 지적,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의 이해와 직결된 자연환경이 발생할 때마다 발빠르게 대처해 왔으며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대책을 촉구하는 등 7건의 정책건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구제역발생으로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의 생을 돕기위해 도의회는 여정부 건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8월에는 태안해안 기름보존지구의 국립공원편입반대 건의를 한데 이어 9월에는 공주대학교 공주문화대학과의 통합을 건의, 이를 실현시키기도 했다.

이달들어서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와 지방산업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움직임에 대해 난개발촉발 등 국토의 균형적 개발정책에 장애요

(이해갑 차장)

hckw@dynews.co.kr

2001. 7. 9. 중도일보

지방의회 부활 10년…

'도의회 발전위한 대토론회' 개최

8일 도청 대회의실서 열려 지방의회로서는 '처음'

지방의회 부활 1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도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의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8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대토론회는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올해로 10돌을 맞아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초빙,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도의회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남대 이승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대전·충남행정학회장인 이창기 대전대교수 등 4명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안정선 공주대교수, 윤성국 중도일보 사회부장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주대 이준원 교수는 "지난 10년간 도의회는 일천한 여건 아래서도 '5분 발언제' 도입과 현장활동강화, 민생에 직결되는 주요 현안들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민의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대의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성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행태들 그대로 답습한다고 해도 잘못은 없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대 이창기 교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방의회 부활 초기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 등 긍정적인 차원에서 너그럽게 평가(86.6%)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지방의회에 대해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성(63.8%)이 남성(50.3%)보다 지방의회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김학민 교수는 "도의원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요인으로는 의회 권한의 미흡, 집행부의 비협조, 의회운영의 미숙 및 지방정치의 미성숙 등으로 설문 결과가 나왔다"며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하고 주민과의 대화노력 강화와 공정회 등을 통한 의견

이준원 교수 "도민의 대의기능 성실 수행"
김학민 교수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최병학 위원 "의회·집행부간 상호역할 중요"

수렴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연구위원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의 속성상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방임적인 관계에 있다"며 "원활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자치역량 증대와 의회와 집행부간 공동체적인 상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장기적인 도의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섭 기자

hys@joongdo.com

2001. 7. 9. 충남일보

도의회, 부활 10주년 행사 가져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재봉 의장을 비롯 전체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부활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송미옥기자 1839@cndn.co.kr

10년간 99회기, 1634건 처리

충남도의회는 7일 부활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도의회 김재봉 의장을 비롯 심대평지사와 강복환교육감이 함께 했으며 지난 1~5대 의원들도 초청되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의회가 제한된 여건속에서-집행부와 견제와 균형, 동반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며"주민본위의 열린의장을 펼쳐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도의회는 지난 52년 최초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61년 해산되어 30년만인 91년 7월8일 다시 부활해 10년째를 맞고 있다.

부활이후 도의회는 99회 회기를 운영해 1천6백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백94회의 현장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6백16건의 청원과 진정을 처리했다.

또 2백27개 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1만6백81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이 가운데 시정요구 3백50건, 처리요구 7백35건, 건의 3백54건등 1천4백39건을 조치했다.

또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지원특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특위등 9개 특별위원회를 열어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2백33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질의를 통해 지역내 숙원사업등을 해결해 나갔다.

또 의원 발의를 통해 충남도 공동상표 관리조례와 공무출장 사전 심사제 등 99건의 자치입법을 만들어 도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그동안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동훈 한국지방자치협회 명예회장, 서우선 한국의정활동연구소 소장,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무 의회 고문변호사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명우기자 mwoo2@cndn.co.kr

2001. 7. 19. 중도일보



김재봉 충남도의회 의장과 존 오스왈드 남호주주 하원의장이 양 의회간 상호 교류 및 정보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정 의향서에 서명하고 있다.

道의회·남호주 협정 체결

정기 방문·자료교환 확대

충남도의회(의장 김재봉)와 남호주 주의회(하원의장 존 오스왈드)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양 의회간 정기적인 방문 및 교류와 상호 이익을 위한 정보 및 자료 교환을 골자로 하는 교류협정 의향서를 체결했다.

남호주 주는 지난 1999년 10월 충남도와 자매결연한 주로 이번 충남도의회와 남호주 주의회간 교류협정 의향서 체결은 자치단체는 물론 의회차원에서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더욱 돈독한 선린 우호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호주주는 호주 남부해안에 위치한 인구 147만4000명에 남한의 9.9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갖고 있으며 호주산 와인의 70%를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포도 재배단지가 잘 발달된 지역이다.

한편 방문단 일행은 교류의향서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안내로 2002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장을 비롯해 아산 삼성반도체, 국립 공주박물관, 금산 인삼종합시장 등을 시찰했다.

한영섭 기자 hys@joongdo.com

2001. 12. 22. 대전매일

지역 현안·권익보호 적극

2001 충남도의회 결산

충남도의회(의장 金載鳳)는 2001년 한해 동안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민생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제156회 정례회를 폐회한 도의회는 올 한해 동안 도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은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

특히 120일 회기동안 총 91건의 안건을 처리한 도의회는 중앙정부의 불균형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11건을 채택하는 등 지역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또한 도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발로 뛰는 의정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비롯해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적자운영실태, 도내 의료원 적자운영 및 일반 병원의 경쟁력 저하, 공영개발지 분양지연 등 불합리한 도정집행사항 97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현실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피해축사의 보조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재해보상범위를 넓히는데 혁혁한 수훈을 세웠다.

지난 9, 10월에는 쌀값하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해 쌀수매가격안정 대책을 건의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에서는 수매가 보전차원에서 153억원의 재원마련을 통해 친환경비료를 구입해 농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 이면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계속 불참하는 등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있는 의원들로 인해 의회 전체가 지탄을 받기도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에 반목과 갈등을 빚어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가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한해 동안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金의장은 올해 도의회 결산에 대해

雪害지원 현실화·수매가 보전등 힘써
의원간 갈등…회의파행 구태보이기도

지난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12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정부의 활성화 대책 및 금강 상류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외국 선진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최근에 전국 최초로 호주연방 남호주의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 3월에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구마모토현과 오히타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정 감시 및 지원역할에 충실했으며,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도민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한다"며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劉孝相 기자〉

편집 = 洪美愛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156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을 결산했다.

"충남도공무원 인사불만 심각"

도정질의 경로당 지원·아산만권 개발기구 설치 주장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불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의장 金戴燾)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심대평 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도정질의를 벌였다. <관련기사 4면>

全英煥 의원은 이날 작년 12월 자신이 1백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인용하면서 인사적체와 보수체계 불만 해소책을 물었다. 그는 "공직생활중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설문에 대상자의 47.1%가 인사문제, 31.4%가 보수문제를 들었다"며 근무여건 개선과 보수향상을 주장했다.

朴贊中 의원은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거론한뒤 "충남도가 경로당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했고, 姜泰鳳 의원은 지역실정에 걸맞는 아산만권 개발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宋榮哲 의원은 계룡특례시 설치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입법추진 의사를 물었고, 韓昭煥 의원은 연기군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행원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여부 등을 물었다.

<鄭在弼 기자>

2002. 3. 14. 대전일보

충남도정 질문요지

◇전영환의원(자·서천1)=본 의원이 작년 12월중 도청소속 공무원 1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7.1%가 인사분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지무만족도에서 30-40대 공무원들과 6급이하 경력 10년 이상 공무원들도 만족도가 낮았다.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보수향상 대책이 있다면.



◇송영철의원(민·논산1)=지역주민들은 계룡특례시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감대와 붐 조성을 위해 열심이다. 우리 도에서는 행자부를 많은 위성도시와 대전의 둔산시가지처럼 환경을 고려치않고 공기업의 영리만을 추구한 개발은 실패한 개발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해야
경로당운영비 지원도 요구

◇박찬중의원(무·금산2)=향후 10년뒤에는 노인복지문제가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민선자 이후 노인복지시책으로 경로당 신·증축을 해왔다. 그런데 난방비 등 운영비를 노인들이 갹출하여 충당하고 있다. 도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지.



◇강태봉의원(자·아산2)=아산만권 개발계획이 8년간 표류하다 건교부가 연차개발키로 한 일은 잘했다. 수도권에 건설된 상대로 특례시 승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또 지사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입법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한소환의원(자·연기1)=연기군은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반면 충북도는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 연기군의 경제와 충남도의 발전, 그리고 경제의 원동력인 인구의 유출과 지역경제 누수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북도의 신도시개발에 대응해야 한다. 대규모 행원도시나 연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의향은.



2002. 4. 13. 대전매일

도의회 임시회 폐회
6대 의정활동 마감

충남도의회(의장 金載鳳)는 12일 제1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했다.

▶관련기사 3면

도의회는 이날 충남지방중소기업청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도가 제출한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 1289억원 가운데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금암지구 택지분양 대행수수료 45억7500만원 중 25억원을 삭감했다.

제6대 도의회는 지난 98년 7월 개원 이래 총 40차례의 정기회와 임시회가 열렸으며 회기일수는 모두 480일에 달한다. 〈劉孝相 기자〉

지방중기청등 현안 적극대처

충남도의회 6대일정 마감

4년동안 회의 40차례 안건 635건처리

5분발언 전무 '무늬만 의원' 등 문제도

제6대 충남도의회는 98년 7월 개원 이래 모두 40차례의 회의를 열어 총 63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도의회는 6대 임기 동안 정기회 6회, 임시회 34회를 열어 도민의 민생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12일 제160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6대 임기를 마감한 도의회는 도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했다.

도의회는 특히 중앙정부의 불균형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및 결의안 25건을 채택하는 등 지역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에서 송민구(宋敏求 농경위 · 자민련 비례대표)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충남지방 중소기업청 설치 건의문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196일 동안 도 산하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발로 뛰는 의정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기 동안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내 의료원을 현대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공영개발지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또 쌀값하락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위해 쌀 수매 가격 안정대책을 건의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기 내내 불참했음에도 의원수당 등이 계속 지급돼 왔으며, 의원들간 갈등과 반목으로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

또한 일부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단 한 차례도 안 해 의정활동의 불성실함을 나타냈으며, 올해의 경우 지방선거를 준비하느라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재봉(金載鳳)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반성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劉孝相 기자〉



12일 제160회 임시회를 끝으로 6대 임기를 모두 마감한 충남도의회는 김재봉 의장을 비롯한 36명 전체 의원들이 서명을 남기고 있다.

第2章 第6代 忠淸南道議會

第1節 第6代 道議員 選擧現況
第2節 第6代 道議會 構成現況
第3節 議會의 組織
第4節 議會의 權限
第5節 議會의 運營
第6節 議會事務處 現況

第2章 第6代 忠淸南道議會

1998년 6월 4일 선거사상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제6대 도의원 선거는 도내 6개시 9개군에서 총유권자 1,343,633인중 707,780인(60.4%)이 투표에 참여하여 78인의 입후보자중 36인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비례대표 4명 포함), 1998년 7월 9일 제6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되었다.

□ 選 擧 日 : 1998년 6월 4일

□ 議員定數 : 36인(비례대표 4인 포함)

□ 任　　期 : 1998년 7월 9일 ~ 2002년 6월 30일(4년)

□ 會　　期 : 제121회~제160회 (40回)

初代~第6代 道議員 選擧現況

구 분	초 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선 거 일	'52. 5. 10	'56. 8. 13	'60. 12. 12	'91. 6. 20	'95. 6. 27	'98. 6. 4
의원정수	46인	45인	48인	55인	61(6)인	36(4)인
입후보자수	128인	123인	188인	184인	165인	78인
경 쟁 률	2.8:1	2.7:1	3.9:1	3.3:1	2.7:1	2.4:1
투 표 율	78.5%	86.9%	68.8%	68.9%	71.7%	60.4%

※ ( )는 비례대표 의원수임

第1節 第6代 道議員 選擧現況

가. 選擧 主要事務 日程表

자치단체소관	일정	선관위소관		
선기인명부작성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13(수)			
선기인명부작성 선거인명부날인인영신고	5.14(목)	무소속후보자 추천장검인·교부(5.14~5.20)		
선기인명부작성 선거인명부날인인영신고	5.15(금)	무소속후보자 추천장검인·교부(5.14~5.20)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	5.16(토)	무소속후보자 추천장검인·교부(5.14~5.20)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	5.17(일)	무소속후보자 추천장검인·교부(5.14~5.20)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5.18(월)		불복신청 및 결정	선거기간
이의신청에 대한심사·결정·통지 선거 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5.19(화)	후보자 등록	불복신청 및 결정	선거기간
이의신청에 대한심사·결정·통지 선거 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5.20(수)	후보자 등록	불복신청 및 결정	선거기간
이의신청에 대한심사·결정·통지 선거 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5.21(목)	선전벽보·선거공보·부재자용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	불복신청 및 결정	선거기간
	5.22(금)	선전벽보·선거공보·부재자용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	불복신청 및 결정	선거기간
	5.23(토)	선전벽보·선거공보·부재자용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	불복신청 및 결정	선거기간
	5.24(일)	선전벽보 첩부		선거기간
	5.25(월)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및 투표소 공고기한		선거기간
	5.26(화)	선거공보 발송,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기한		선거기간
	5.27(수)	부재자 투표소 설비기한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확정	5.28(목)	투표용지모형 공고기한	부재자 투표 (10:00~16:00)	선거기간
	5.29(금)	투표안내문 발송기한	부재자 투표 (10:00~16:00)	선거기간
	5.30(토)	개표소 공고기한	부재자 투표 (10:00~16:00)	선거기간
	5.31(일)			선거기간
	6. 1(월)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기한		선거기간
	6. 2(화)			선거기간
	6. 3(수)	투·개표소 설비 및 투·개표 참관인 신고기한		선거기간
선거일 (06:00~18:00)	6. 4(목)	선거일 (06:00~18:00)		선거기간

나. 市郡別 道議員 選擧 投票現況

구분 / 선거별	선거구수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표인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계	투표실시	무투표	계	투표실시	무투표	계	투표실시	무투표	계	유효표	무효표			
계	32	28	4	819	718	101	1,343,633	1,170,975	172,658	707,780	677,817	29,963	463,195	60.4	95.8
천안시	4	3	1	126	99	27	251,683	188,708	62,975	88,364	85,265	3,099	100,344	46.8	96.5
공주시	2	2		66	66	-	96,865	96,865	-	64,006	61,170	2,836	32,859	66.1	93.6
보령시	2	1	1	58	28	30	86,205	44,929	41,276	28,694	27,506	1,188	16,235	63.9	95.9
아산시	2	2		64	64	-	126,142	126,142	-	70,666	67,986	2,680	55,476	56.0	96.2
서산시	2	2		60	60	-	103,297	103,297	-	62,856	60,687	2,169	40,441	60.8	96.5
논산시	2	2		64	64	-	120,149	120,149	-	73,109	69,905	3,204	47,040	60.8	95.6
금산군	2	2		36	36	-	50,504	50,504	-	33,225	30,556	2,669	16,829	65.8	92.0
연기군	2	2		35	35	-	57,942	57,942	-	37,220	35,702	1,518	20,722	64.2	95.9
부여군	2	1	1	52	28	24	71,012	32,280	38,732	22,577	21,402	1,175	9,703	69.9	94.8
서천군	2	2		47	47	-	59,575	59,575	-	40,659	38,988	1,671	18,916	68.2	95.9
청양군	2	2		31	31	-	32,291	32,291	-	22,694	21,745	949	9,597	70.3	95.8
홍성군	2	1	1	45	25	20	71,594	41,919	29,675	24,537	23,442	1,095	17,382	58.5	95.5
예산군	2	2		48	48	-	77,089	77,089	-	48,607	46,343	2,264	28,482	63.1	95.3
태안군	2	2		36	36	-	50,356	50,356	-	34,383	33,044	1,339	15,973	68.3	96.1
당진군	2	2		51	51	-	89,379	89,379	-	56,183	54,076	2,107	33,196	62.9	96.3

다. 選擧現況

(1) 부재자 우편투표

부재자 신고인수	투 표 수	기 권 수	투표율(%)
36,855	34,714	2,141	94.19

(2) 투표현황

인구수	선 거 인 수			투 표 인 수		
('98. 5.28) 현재(A)	투표실시 선 거 구 (B)	무투표 선거구 (C)	계	유 효 투표수 (D)	무 효 투표수	계 (E)
1,902,062	1,170,975	172,658	1,343,633	677,817	29,963	707,780

기 권 수 (B-E)	투 표 율 (%) (F)	유효투표율 (%) (G)	당 선 자 수		
			투표실시 선거구수	무투표 선거구	계
463,195	60.4	95.8	28	4	32

라. 候補者 登錄現況

(1) 등록상황

(단위: 명)

구 분	선출정수	등 록 자 수			경합비율
		계	남	여	
계	36	88	83	5	2.4:1
지 역 구	32	78	76	2	2.4:1
비례대표	4	10	7	3	2.5:1

마. 當選者 現況

(1) 직업별

(단위: 명)

구 분	당선자수	정당인	농업	상업	공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의사약사	회사원	기타
계	36	10	7	6	1		1	2	3	1	5
지 역 구	32	10	5	6	1		1	2	3	1	3
비례대표	4		2								2

(2) 학력별

(단위: 명)

구 분	당선자수	미기재	국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대졸	대퇴	대졸	대학원졸
계	36	1	4		3		9	1	2	13	3
지 역 구	32	1	3		3		7		2	13	3
비례대표	4		1				2	1			

(3) 연령별, 성별

(단위: 명)

구 분	당선자수	연령별								성별	
		30세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세 이상	남	여
계	36		1	2	1	8	8	7	9	34	2
지 역 구	32		1	1	1	8	6	7	8	32	
비례대표	4			1			2		1	2	2

(4) 정당별

(단위: 명)

구 분	당선자수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국민신당	무소속
계	36		3	32		1
지 역 구	32		1	30		1
비례대표	4		2	2		

바. 第6代 道議員 市·郡別 當選者 名單

○ 천안시 : 李鍾洙, 丁淳平, 金文圭, 李鎭煥
○ 공주시 : 尹錫雨, 孫在卓
○ 보령시 : 李峻雨, 申載元
○ 아산시 : 金載鳳, 姜泰鳳(朴應煥)
○ 서산시 : 李福求, 許榮一
○ 논산시 : 宋中彬(林聲奎), 宋榮哲(金容鎬)
○ 금산군 : 沈貞洙, 朴贊中
○ 연기군 : 韓昭煥, 康華燮
○ 부여군 : 姜泳成, 柳炳基(姜昌求)
○ 서천군 : 全英煥, 朴泳祚(韓鮮敎)
○ 청양군 : 鄭善興, 禹智命
○ 홍성군 : 田溶鳳, 申晧均
○ 예산군 : 李漢植, 金重漢
○ 태안군 : 崔敬燮, 朴東允
○ 당진군 : 張俊燮, 鄭龍海
○ 비례대표 : (金南鎬), 金東鮮, 韓昌淑, 宋敏求

第2節 第6代 道議會 構成現況

□ 前半期

가. 議長·副議長·委員長

(1) 議長·副議長

직 위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의 장	李 鍾 洙	천안시1	98. 7. 9	
부 의 장	李 福 求	서산시1	〃	
부 의 장	韓 昭 煥	연기군1	〃	

(2) 常任委員會 委員長

위 원 회 별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	崔 敬 燮	태안군1	98. 7. 13	
행정자치위원회	尹 錫 雨	공주시1	98. 7. 10	
교육사회위원회	李 峻 雨	보령시1	〃	
농수산경제위원회	姜 昌 求	부여군2	〃	
건설소방위원회	申 皓 均	홍성군2	〃	

(3) 特別委員會 委員長

위 원 회 명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 (제122회)	金 文 圭	천안시3	98. 8.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2회)	丁 淳 平	천안시2	98. 8. 11	

위 원 회 명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4회)	張 俊 燮	당진군1	98. 10. 21	
〃 (제125회)	孫 在 卓	공주시2	98. 12. 10	
〃 (제129회)	申 載 元	보령시2	99. 6. 2	
〃 (제132회)	金 重 漢	예산군2	99. 10. 27	
〃 (제133회)	鄭 龍 海	당진군2	99. 12. 11	
〃 (제139회)	宋 敏 求	비례대표	00. 6. 13	
〃 (제140회)	沈 貞 洙	금산군1	00. 7. 1	

나. 委員會 幹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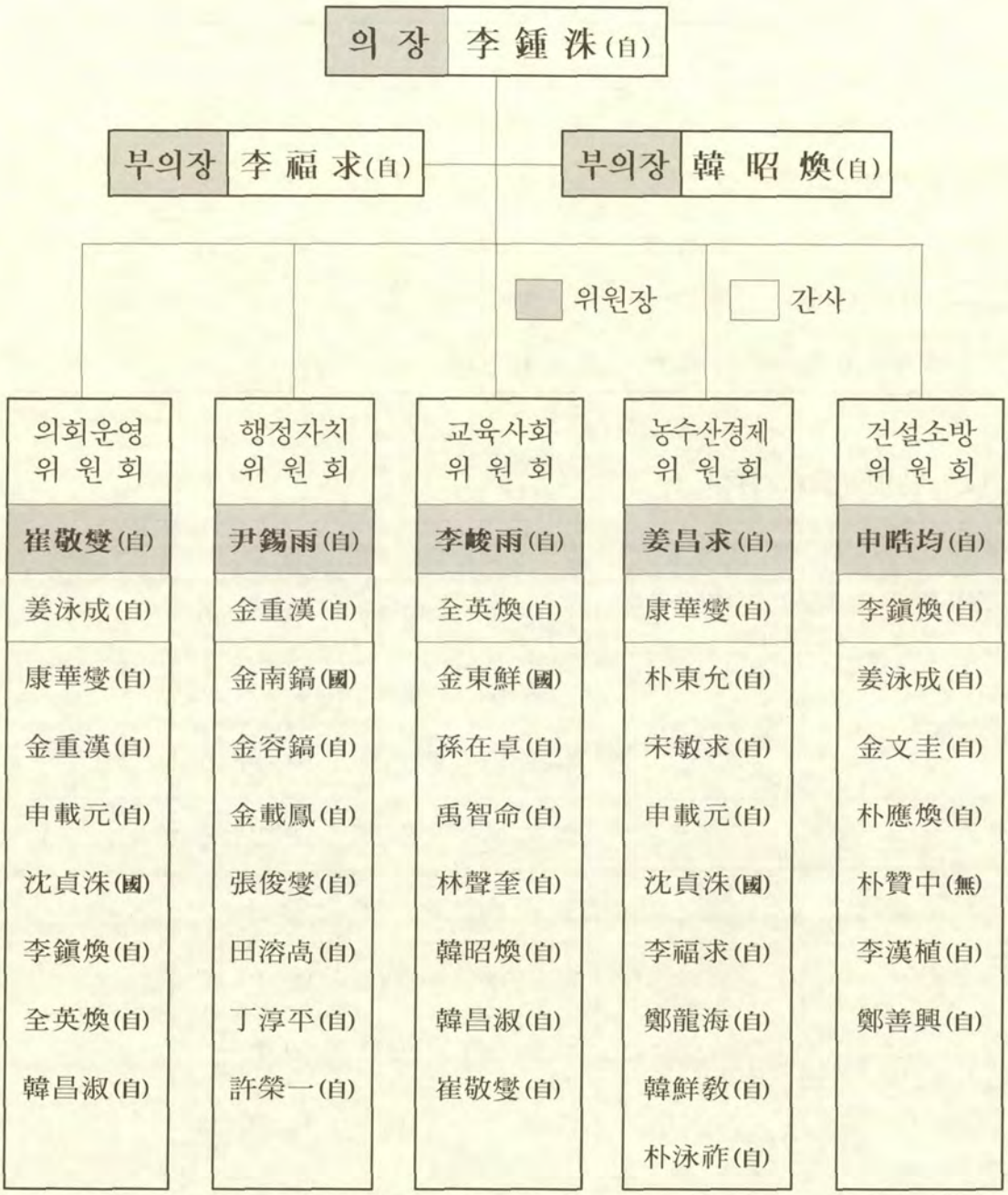
(1) 常任委員會 幹事

위 원 회 별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	姜 泳 成	부여군1	98. 7. 13	
행정자치위원회	金 重 漢	예산군2	98. 7. 10	
교육사회위원회	全 英 煥	서천군1	〃	
농수산경제위원회	康 華 燮	연기군2	〃	
건설소방위원회	李 鎭 煥	천안시4	〃	

(2) 特別委員會 幹事

위 원 회 명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 (제122회)	李 漢 植	예산군1	98. 8.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2회)	全 英 煥	서천군1	98. 8. 11	
〃 (제124회)	康 華 燮	연기군2	98. 10. 21	
〃 (제125회)	全 英 煥	서천군1	98. 12. 10	
〃 (제129회)	全 英 煥	서천군1	99. 6. 2	
〃 (제132회)	宋 敏 求	비례대표	99. 10. 27	
〃 (제133회)	李 鎭 煥	천안시4	99. 12. 11	
〃 (제139회)	朴 泳 祚	서천군2	00. 6. 13	
〃 (제140회)	宋 榮 哲	논산시2	00. 7. 1	

제6대의회 전반기 院구성 현황



※ 범례 : 自由民主聯合 - 自, 새정치國民會議 - 國, 無所屬 - 無

□ 後半期

가. 議長·副議長·委員長

(1) 議長·副議長

직 위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의 장	金 載 鳳	아산시1	00. 7. 4	
부 의 장	朴 東 允	태안군2	〃	
부 의 장	許 榮 一	서산시2	〃	

(2) 常任委員會 委員長

위 원 회 별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	金 文 圭	천안시3	00. 7. 6	
행정자치위원회	丁 淳 平	천안시2	00. 7. 5	
교육사회위원회	林 聲 奎	논산시1	00. 7. 5	의원직 사퇴
〃	李 鎭 煥	천안시4	01. 4. 18	
농수산경제위원회	鄭 龍 海	당진군2	00. 7. 5	
건설소방위원회	朴 贊 中	금산군2	00. 7. 5	

(3) 特別委員會 委員長

위 원 회 명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2회)	李 漢 植	예산군1	00. 10. 2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143회)	康 華 燮	연기군2	00. 1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4회)	張 俊 燮	당진군1	00. 12. 12	

위 원 회 명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8회)	姜 泳 成	부여군1	01. 4. 24	
〃 (제150회)	姜 泰 鳳	아산시2	01. 6. 13	
〃 (제151회)	朴 泳 祚	서천군2	01. 7. 2	
〃 (제154회)	朴 泳 祚	서천군2	01. 9. 17	
〃 (제155회)	柳 炳 基	부여군2	01. 10. 29	
〃 (제156회)	禹 智 命	청양군2	01. 12. 11	
〃 (제160회)	宋 敏 求	비례대표	02. 4. 10	

나. 委員會 幹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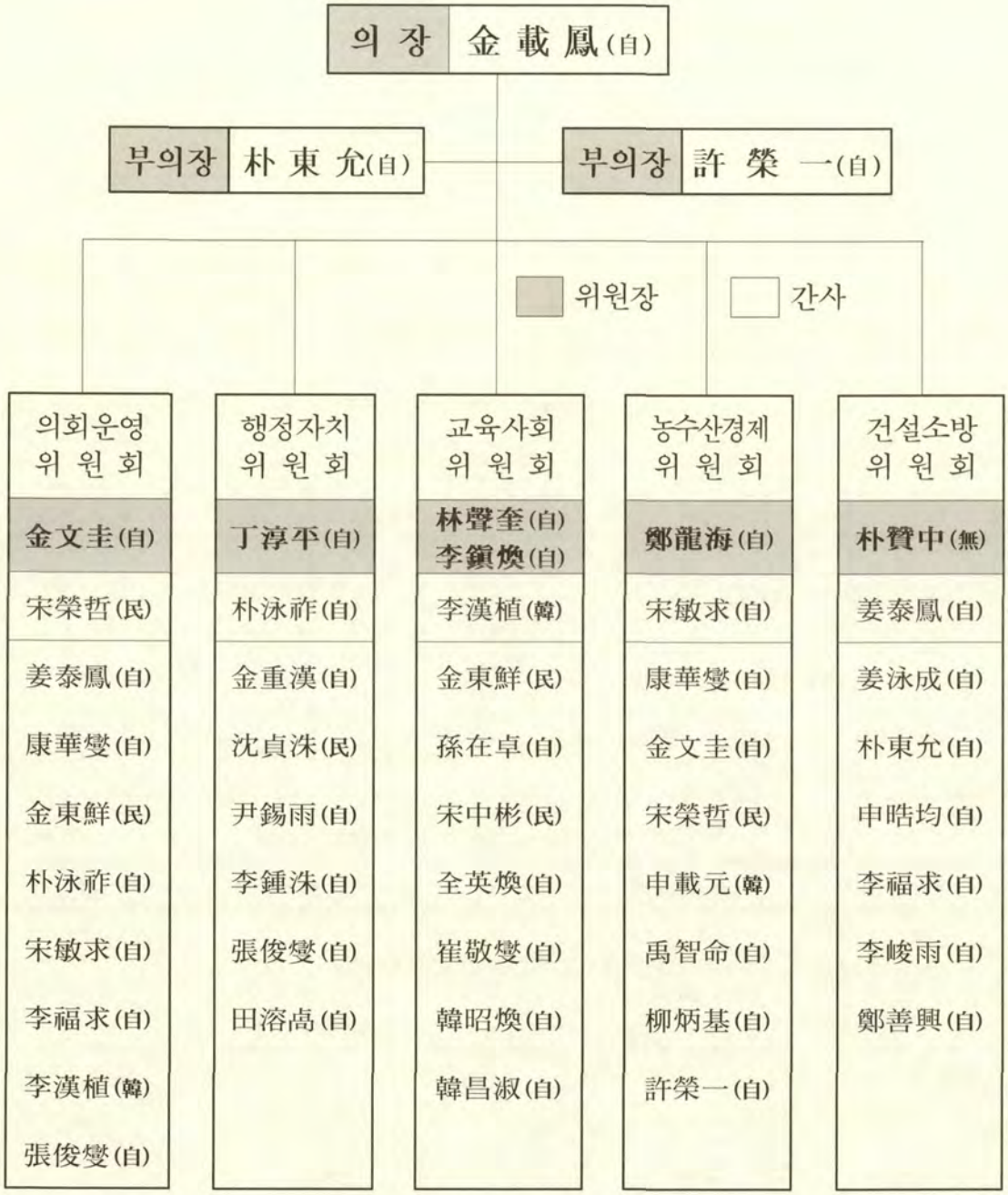
(1) 常任委員會 幹事

위 원 회 별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	宋 榮 哲	논산시2	00. 7. 6	
행정자치위원회	朴 泳 祚	서천군2	00. 7. 5	
교육사회위원회	李 漢 植	예산군1	〃	
농수산경제위원회	宋 敏 求	비례대표	〃	
건설소방위원회	姜 泰 鳳	아산시2	〃	

(2) 特別委員會 幹事

위 원 회 명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2회)	韓 昌 淑	비례대표	00. 10. 2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143회)	李 鎭 煥	천안시4	00. 1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4회)	全 英 煥	서천군1	00. 12. 12	
〃 (제148회)	宋 榮 哲	논산시2	01. 4. 24	
〃 (제150회)	韓 昌 淑	비례대표	01. 6. 13	
〃 (제151회)	柳 炳 基	부여군2	01. 7. 2	
〃 (제154회)	柳 炳 基	부여군2	01. 9. 17	
〃 (제155회)	宋 中 彬	논산시1	01. 10. 29	
〃 (제156회)	朴 泳 祚	서천군2	01. 12. 11	
〃 (제160회)	金 東 鮮	비례대표	02. 4. 10	

제6대의회 후반기 院구성 현황



※ 범례 : 自由民主聯合 - 自, 새천년民主黨 - 民, 한나라黨 - 韓, 無所屬 - 無

第3節 議會의 組織

1. 議員의 定數

도의원의 정수는 시·군(하나의 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경우에는 매 20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시·군은 2인으로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는 통합전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하고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 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는 그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는 지역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따라서 제6대도의원 정수는 지역에서 선출된 32인과 비례대표 4인을 합하여 총 3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별 도의원 정수

( )의 비례대표 포함

시군별	의원수	시군별	의원수	시군별	의원수
계	36(4)				
천안시	4	금산군	2	홍성군	2
공주시	2	연기군	2	예산군	2
보령시	2	부여군	2	태안군	2
아산시	2	서천군	2	당진군	2
서산시	2	청양군	2	비례대표	(4)
논산시	2				

2. 構 成

1998년 7월 9일 역사적인 개원을 한 제6대 충청남도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및 의회운영, 내무, 교육사회, 산업, 건설 등 5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다.

※ 상임위원회 명칭은 '98. 9. 15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내무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산업위원회 →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로 명칭 변경

가. 議 長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서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나. 副議長

부의장은 2인을 두어 의장의 유고시 의장을 대리하며 임기는 2년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다. 委員會

의회운영,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경제, 건설소방의 5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상임위원회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된다.

第4節 議會의 權限

의회의 권한을 대별하면 의결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및 자율권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議決權(地方自治法 第35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의결,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을 하거나 의회가 직접 발안권을 행사하는 등 도정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道議會 議決事項〉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行政 監視權

가.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地方自治法 第36條,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11월 20일부터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10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일정, 요령, 목적, 범위 등을 기재한 조사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득한 다음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監査 또는 調査 對象事務〉

① 도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며,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行政事務 處理狀況의 報告와 質問, 應答(地方自治法 第37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한 출석이유,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24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은 정하여진 시간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3. 選擧權

의회조직 내부의 의장 1인, 부의장 2인, 상임위원장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4. 自律權

회의 진행에 있어 개회, 정회, 휴회, 산회(폐회), 회기결정 등의 의사일정을 정하며, 회의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第5節 議會의 運營

1. 會 期

회기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4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일수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1차)과 11월 20일(2차) 2회에 걸쳐 4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2. 本會議

도의회는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회의는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표결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행하며, 일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3. 委員會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5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가. 議案의 審査

본회의에 보고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벌인다.

나. 發言

의안에 대한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다. 表決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 審査報告書 作成提出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그 소관실국을 정한다.

〈所管室局〉

('02. 6월 현재)

구 분	위 원 회 명	위원수	소 관
상임위원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9~11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소관
	행 정 자 치 위 원 회	9	• 공보, 감사, 총무, 기획, 자치문화 •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소관
	교 육 사 회 위 원 회	9	• 여성정책, 복지환경, 보건환경연구원 • 청양대학, 교육청 소관
	농 수 산 경 제 위 원 회	9	• 농림수산, 경제통상, 농업기술원 소관
	건 설 소 방 위 원 회	8	• 건설교통,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위원회	예 산 결 산 특 위	18	• 도 및 교육청 소관 예·결산안 심사
	2002 안 면 도 국 제 꽃 박 람 회 지 원 특 위	9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 대외협력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위	9	• 수해의 조속한 복구와 항구 방재대책 강구

마. 特別委員會의 設置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의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된다.

4. 議案의 處理

의회에서 논의하여야 할 모든 사안을 의안이라 하며 의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① 제안자의 취지설명 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 질의 ④ 토론 ⑤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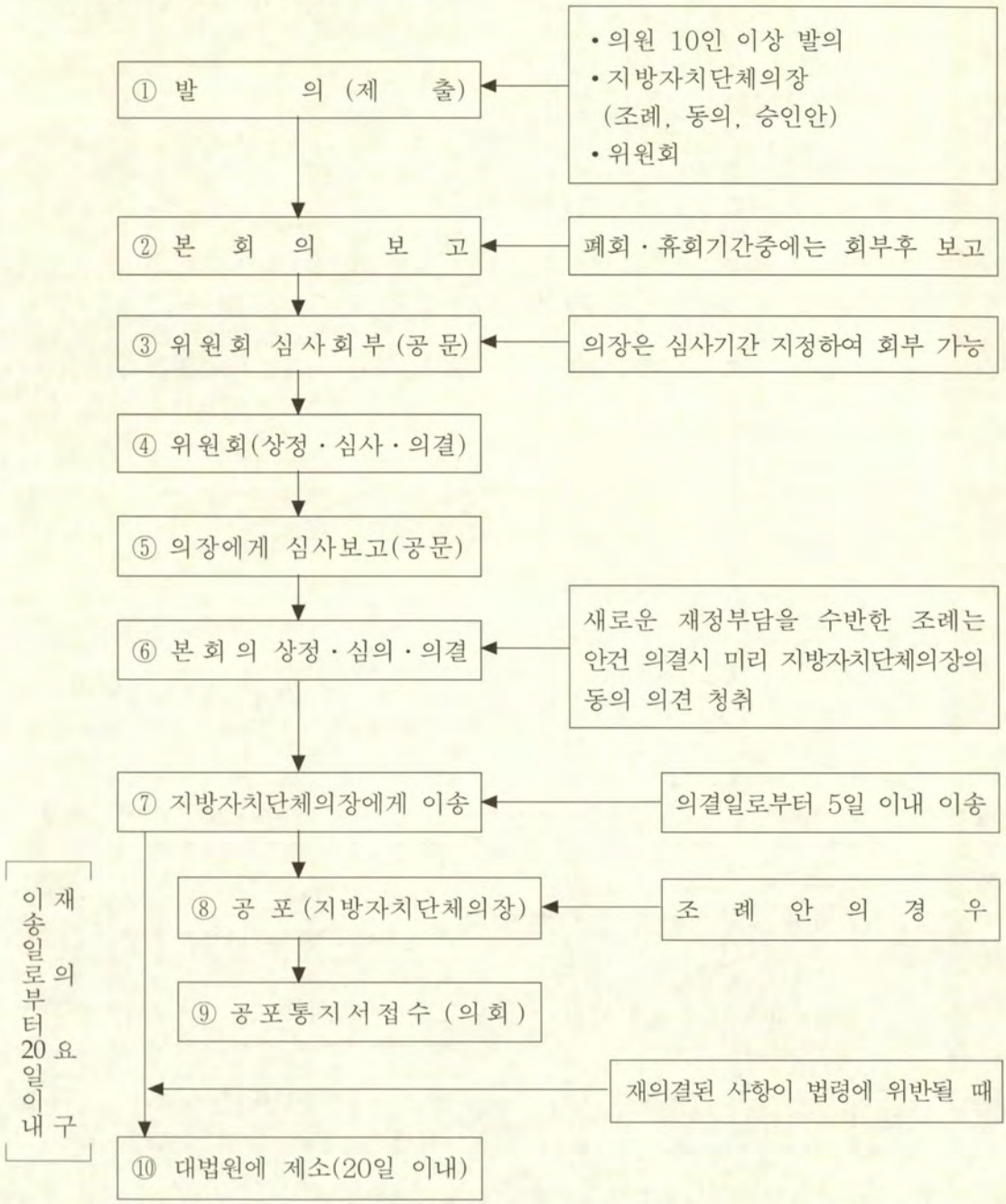
본회의에 다시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의안의 발의 및 의결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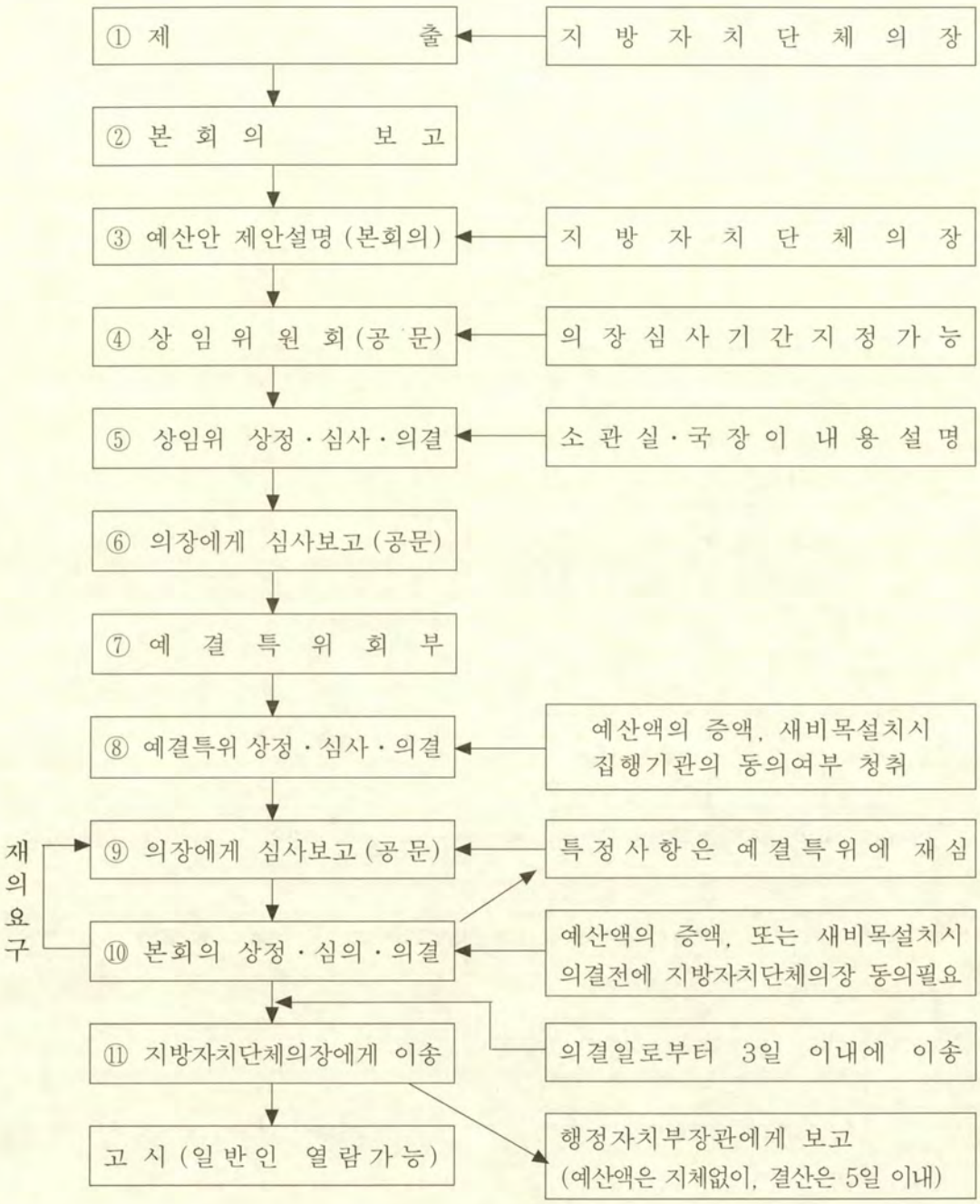
구 분	발 의	의 결
일반안건	•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교육감)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위원회	• 재적의원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장불신임안	• 재적의원 1/4 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조례안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원자격심사청구	• 재적의원 1/4 이상	•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의원징계	• 의원 10인 이상	•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비공개회의	• 의원 3인 이상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議案 處理節次

□ 條例案 等 一般案件



□ 豫算案(追更) 및 決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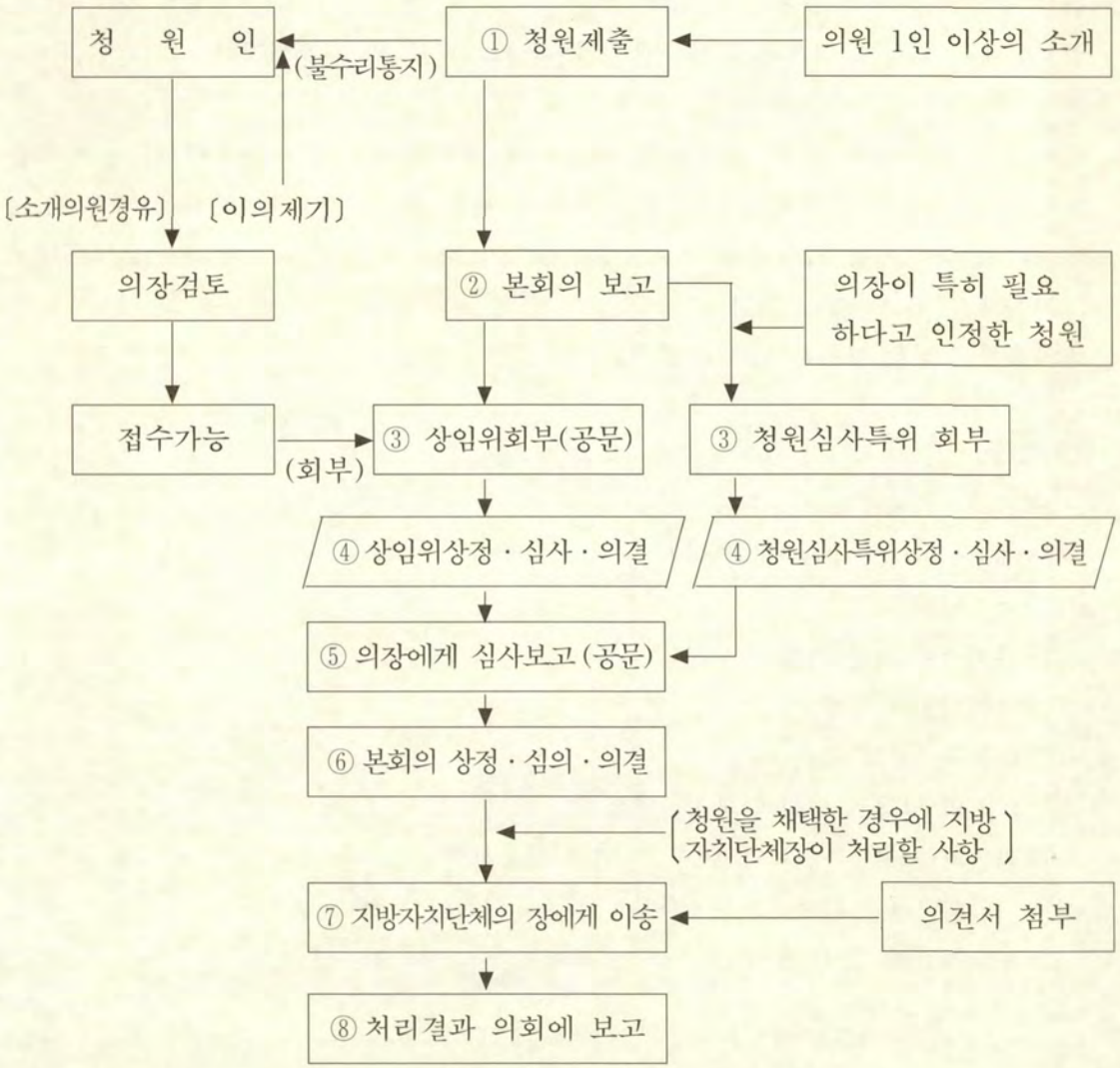

① 제 출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② 본 회 의 보 고
③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④ 상 임 위 원 회 (공 문)
의 장 심 사 기 간 지 정 가 능
⑤ 상임위 상정·심사·의결
소 관 실·국 장 이 내 용 설 명
⑥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⑦ 예 결 특 위 회 부
⑧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액의 증액, 새비목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 청취
재의요구
⑨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 문)
특 정 사 항 은 예 결 특 위 에 재 심
⑩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액의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동의필요
⑪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송
고 시 (일 반 인 열 람 가 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액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5. 請願 및 陳情書 處理

가. 請願受理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請願處理 節次



나. 陳情書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결의서, 호소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

6. 會議錄 作成

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발간하여 의원 전원에게 배부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록에 작성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會議錄〉

①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회·회의중지·산회의 일시
③ 의사일정
④ 개회식에 관한 사항
⑤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⑥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⑦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⑧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 등 제반 보고사항
⑨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⑩ 부의안건과 그 내용
⑪ 의사
⑫ 표결수

⑬ 기명·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⑭ 서면질문과 답변서
⑮ 의원의 발언보충서
⑯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委員會〉

①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② 의사일정
③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④ 출석의원 아닌 의원의 성명
⑤ 출석한 공무원·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⑥ 심사안건명
⑦ 의사
⑧ 표결수
⑨ 위원장의 보고
⑩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⑪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傍聽案內

의회사무처에서 발행하는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회의장 내에서 다음사항은 금지되어 있다.

- 회의장 안으로의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및 반입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第6節 議會事務處 現況

도의회는 그 본질적인 업무인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등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의회 회의운영과 의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 보조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 事務處의 機構

□ 事務處長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事務處長의 補佐機關

의회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법제자료담당관이 있으며, 총무담당관실에는 총무담당, 기획홍보담당, 의사담당관실에는 의사담당, 기록담당, 법제자료담당관실에는 법제자료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 人 力

○ 개원당시 인력현황

· 충청남도조례 제2164호(1991년 6월 7일)에 의하여 1991년 7월 8일 개원당시 의회사무처 정원은 총 29명으로 행정3급 1명, 행정4급 1명, 행정·별정7급 1명등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 21명 이었으며, 기능직은 9등급 6명, 10등급 2명 등 8명이었다.

○ 정원의 변동

· 1991년 12월 30일 조례 제2219호에 의거 사무직원을 29명에서 47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보좌직원 4명과 의장비서 1명, 음향장비요원 2명, 속기요원 6명, 의전용 운전요원 1명, 기타 보조인력 3명 등이다.

· 1992년 2월 10일 조례 제2223호에 의거 47명에서 57명으로 10명 증원되었는데 증원내역은 전문위원 2명과 보좌직원 2명, 속기사 2명, 의원 및 위원회의 요구자료 지원 요원 3명, 부의장실 안내요원 1명등 10명을 증원하고, 의장실 직원의 직급을 별정 7급에서 별정 5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1992년 9월 4일 조례 제22674호에 의거 57명에서 2명을 증원하였는데 증원내용은 의장 보조요원 1명과 공보전담요원 1명이다.

· 1993년 9월 1일 조례 제23230호에 의거 정원을 59명에서 64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는데 이는 경리계와 기록계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 1994년 5월 24일 조례 제2416호로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총 65명이 되었는데 이는 버스구입에 따른 운전원이 증원되었다.

·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개원후 총 36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1994년 7월 31일 현재는 65명으로 변동되었다.

· 이후 1997년 6월까지 75명으로 증원된 바 총무·의사담당관실 등 2개 담당관실과 7개 계, 운영·기획경제·교육사회·농림수산·건설교통·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실 등 7개 전문위원실로 운영되었다.

· 1997년 7월 예산결산특위전문위원실이 폐지되는 대신 법제지원업무 보강을 위하여 법제조사관실과 그 밑에 법제조사계가 신설되고, 총무담당관실의 공보계와 자료계가 통합, 공보자료계로 변경되어 2담당관, 1조사관, 6전문위원실, 7개 계로 재편되었으나, 인원은 75명으로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 1998년 9월 5일 조례 제2726호로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 인원이 66명으로 9명이 감축되어 기획경제전문위원실이 폐지되고, 총무담당관실 총무계와 경리계가 총무담당으로, 의사담당관실의 의사계와 의안계를 의사담당으로 통합하여 2개 계를 감축하였으며, 계의 명칭이 담당으로 변경되었고 농림수산을 산업으로 건설교통을 건설전문위원으로 변경되었다.

· 1999년 8월 10일 조례 제2789호에 의거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각 1명씩 3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이 63명으로 되었다.

· 2000년 7월 31일 규칙 제2816호에 의거 정원의 조정없이 법제자료조사담당관이 법제자료담당관으로 법제조사담당이 법제자료담당으로, 총무담당관실 공보자료담당이 기획홍보담당으로 변경됨과 함께 그 기능 일부가 조정되었다.

2. 事務處의 機能

□ 총무담당관실

○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
○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의회정보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 의회사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

□ 의사담당관실

○ 정례회, 임시회 집회 및 회의(위원회 포함)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종합처리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제공 및 조사연구
○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발간, 이송등 총괄처리 등

□ 법제자료담당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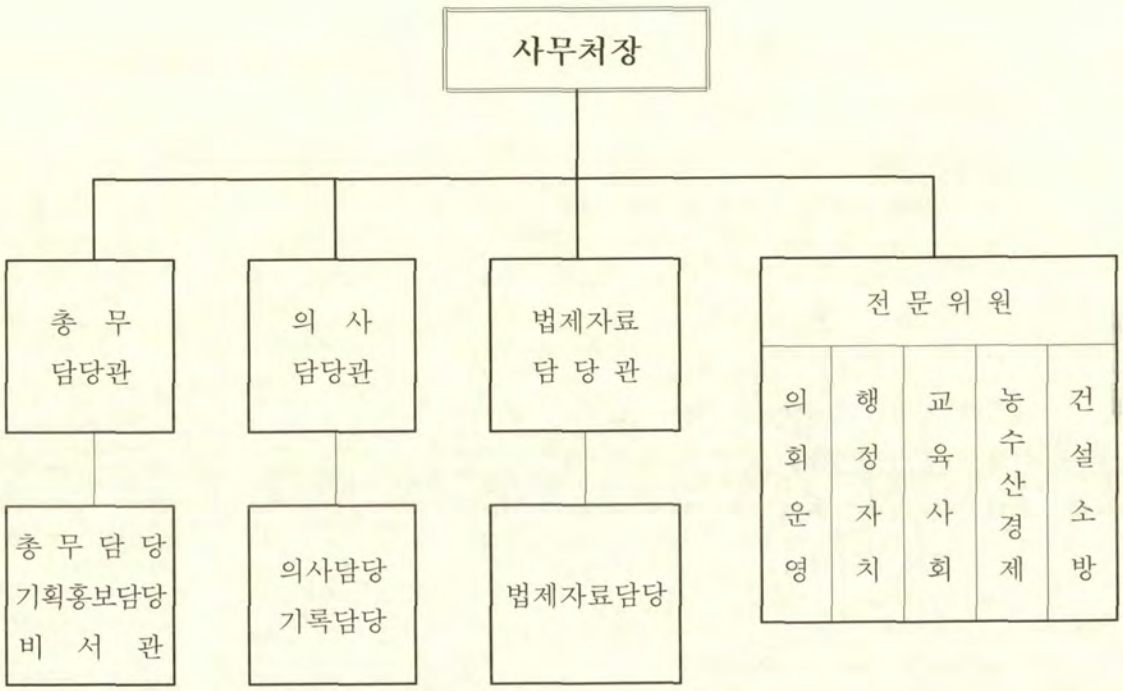
○ 도의회 관련 정책개발 연구
○ 의원입법지원
○ 지방자치제도 개선·발전 연구
○ 도의회 관련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의회관련 질의회신 및 상담
○ 의회관련 질의회신 및 상담
○ 의회관련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의회관련 법규집 관리 및 추록발간
○ 현행 법령집 및 관보 관리
○ 의회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 고문변호사 운영관리
○ 의회자료실 자료 수집 및 등록
○ 등록자료의 대출 및 보존관리

□ 전문위원실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심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의 감사, 조사활동 보좌
○ 위원회 소관 진정서 처리 등

3. 議會事務處 機構 및 定·現員現況

□ 기 구 - 3담당관 5전문위원



□ 정·현원 현황

구 분	합 계 (명)	일 반 및 별 정 직							기능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63	42	1	8	6	13	13	1	21
현 원	62 (2)	42 (2)	1	8 (1)	6	12	13 (1)	1	21

※ ( ) 내는 별정직, 부족 1명은 6급 1명

4. 廳舍施設 및 裝備

廳 舍

○ 건물 개요 - 1964.8㎡ (594坪)

- 의회본관 : 지상 4층 (1,536.6㎡)
- 도 본 관 : 3층 (본회의장 340㎡, 의원휴게실 88.2㎡)

○ 배치 현황

구 분		시 설 내 용
의 회 본 관 (1,536.6㎡)	1층 (411㎡)	· 총무 · 의사 · 법제자료담당관실, 자료실 여직원 휴게실
	2층 (237.6㎡)	·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처장실, 교육사회위, 운영위, 여성의원실, 기자실
	3층 (588.2㎡)	· 행정자치위, 농수산경제위, 의정동우회
	4층 (299.8㎡)	· 건설소방위
도 본관 (428㎡)	3층	· 본회의장 (의원석, 집행부 및 의회간부석 30, 방청석 88석) · 의원 휴게실

議政資料室

○ 개 설 : 1992.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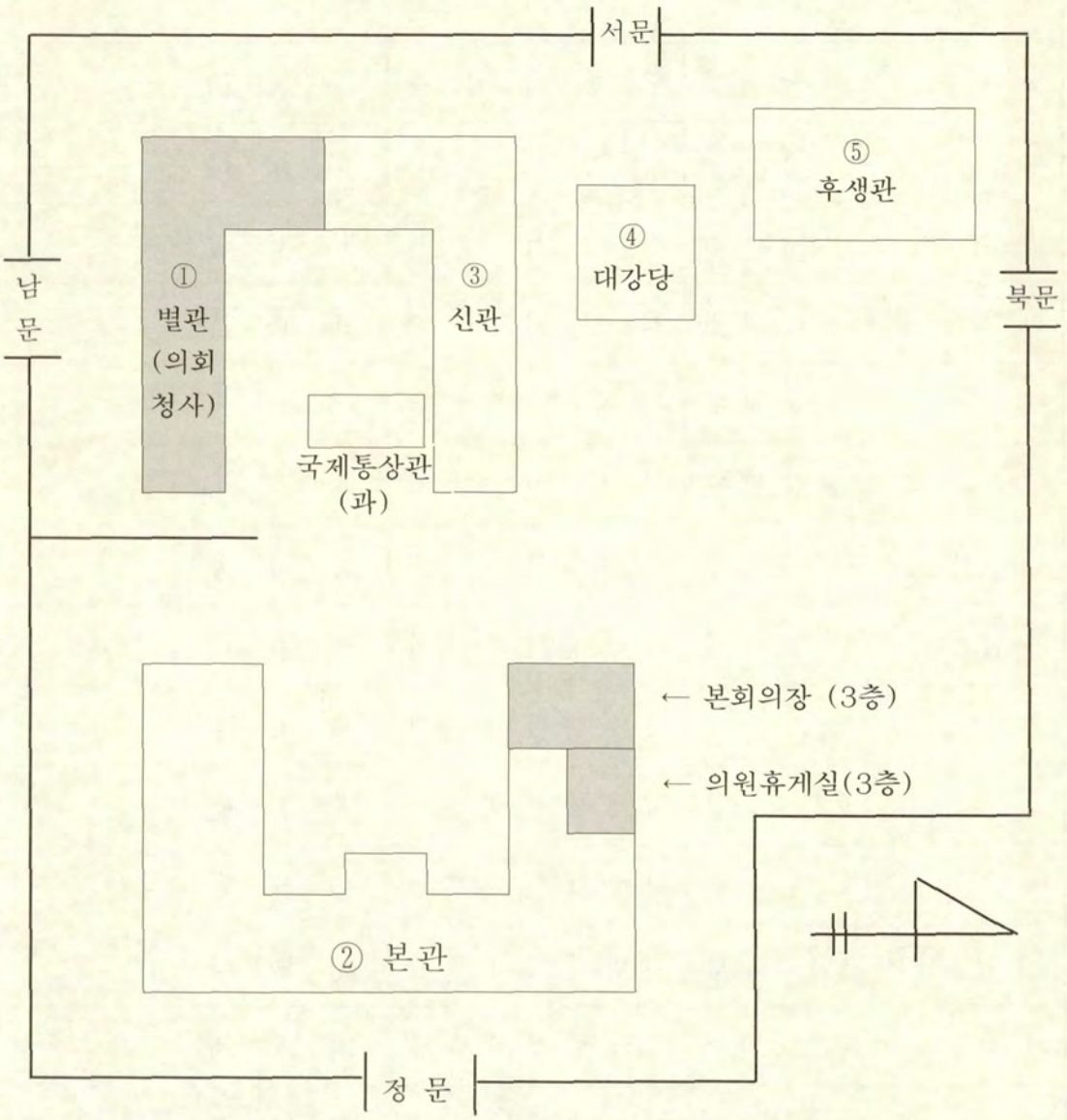
면적	서가	시청각 장비	보유장서	열람대
89.6㎡	25개	2대	11,473권	2개

※보유장서 : 의정자료 889, 일반도서 6,126, 간행물 3,026, 영상물 1,430

裝 備

명 칭	제원	수량	설치년도	비고
회의실 영상장비	-	14대	99~2002	비디오 카메라
회의실 음향장비	-	6식	99~2002	
냉 방 기	7.5/RT	5대	95~2001	
	5/RT	5대	〃	
	3/RT	5대	〃	
	2/RT	19대	〃	
전 산 망	의원용 PC	36대	1999. 12	리스(3년)
	직원용 PC	64대	98~2000	
차 량	체어맨	1대	2000	의 장
	그랜저XG	1대	2001	의전용
	뉴EF소나타	1대	〃	업무지원
	대형승합	1대	95~2002	현장활동지원
	중형승합	1대	〃	〃

청 사 배 치 도



도의회사무처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의회사무처장	지방이사관	任亨宰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洪龍杓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李聲鎬	
법제자료담당관	지방서기관	林秉哲	
의회운영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柳濟昌	
행정자치위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李康云	
교육사회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崔一鎔	
농수산경제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文明秀	
건설소방위전문위원	지방시설서기관	朴吉茂	
총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張文淳	
기획홍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黃圭燮	
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張英秀	
의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趙炳瑛	
기록담당	지방행정사무관	洪彦杓	
법제자료담당	지방행정사무관	梁炳奎	

※ 위 간부명단은 2002. 6. 30 재직을 기준으로 작성

自 治 法 規 現 況

〈總 括〉

구 분	계	조 례	규 칙	훈령·규정	예규 등
계	431	187	101	120	23
도	398	175	97	106	20
의 회	33	12	4	14	3

〈議會關聯 法規目錄〉

구 분	법 규 명
조 례 (12건)	○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 충청남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 ○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 ○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

구 분	법 규 명
규 칙 (4건)	○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충청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 충청남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규 정 (14건)	○ 충청남도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 충청남도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 충청남도의회휘장규정 ○ 충청남도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 충청남도의회포상규정 ○ 충청남도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 ○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 ○ 충청남도의회사무처직무대리규정 ○ 충청남도의회사무처사무직원인사관리규정 ○ 충청남도의회회계업무처리에관한규정 ○ 충청남도의회장에관한규정 ○ 충청남도의회자료실운영규정 ○ 충청남도의회의원사무용품관리등에관한규정 ○ 충청남도의회연구모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강 령	○ 충청남도의회윤리강령
규 범	○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규 약	○ 충청남도의회의원상호부조규약

第3章 第6代 議會 議政運營

第 1節 第121回 臨時會	第 2節 第122回 臨時會
第 3節 第123回 臨時會	第 4節 第124回 臨時會
第 5節 第125回 定期會	第 6節 第126回 臨時會
第 7節 第127回 臨時會	第 8節 第128回 臨時會
第 9節 第129回 臨時會	第10節 第130回 臨時會
第11節 第131回 臨時會	第12節 第132回 臨時會
第13節 第133回 定期會	第14節 第134回 臨時會
第15節 第135回 臨時會	第16節 第136回 臨時會
第17節 第137回 臨時會	第18節 第138回 臨時會
第19節 第139回 臨時會	第20節 第140回 定例會
第21節 第141回 臨時會	第22節 第142回 臨時會
第23節 第143回 臨時會	第24節 第144回 定例會
第25節 第145回 臨時會	第26節 第146回 臨時會
第27節 第147回 臨時會	第28節 第148回 臨時會
第29節 第149回 臨時會	第30節 第150回 臨時會
第31節 第151回 定例會	第32節 第152回 臨時會
第33節 第153回 臨時會	第34節 第154回 臨時會
第35節 第155回 臨時會	第36節 第156回 定例會
第37節 第157回 臨時會	第38節 第158回 臨時會
第39節 第159回 臨時會	第40節 第160回 臨時會

第3章 第6代 議會 議政運營

第1節 第121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의 집회공고로 소집되어, '98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8. 7. 9(목) ~ 7. 13(월), 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7. 9(목) 10:00 14:00	본 회 의 (제 1 차) 개원식	1. 의장·부의장선거 〈개원식 : 14:00〉	
'98. 7. 10(금)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제12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4개)위원선임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14:00)	
15:00	내 무 위 (제 1 차)	1. 간사 선임의 건	
15:00	교 사 위 (제 1 차)	1. 간사 선임의 건	
15:00	산 업 위 (제 1 차)	1. 간사 선임의 건	
15:00	건 설 위 (제 1 차)	1. 간사 선임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7. 11(토) 11:00	내 무 위 (제 2 차)	1.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00	교 사 위 (제 2 차)	1.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 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3.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7. 12(일)		공 휴 일	
'98. 7. 13(월) 11:00	본 회 의 (제 3 차)	1.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6. 1997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4:00	운 영 위 (제 1 차)	1. 간사선임의건 2. 제122회임시회개최계획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4.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4		
조례안	5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9	1.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2. 감표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제1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6.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7. '9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9.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8. 7. 9. 10:00)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인 김남호 의원의 주재로 의장선거를 실시하였다.

· 의장 당선자 : 이종수(천안시)

○ 의장에 당선된 李鍾洙의장은 당선인사에 이어, 본회의를 주재하고 계속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 부의장 당선자 : 이복구(서산시)
한소환(연기군)

○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8. 7. 10. 11:00) 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 상임위원회 위원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9명	9명	9명	8명
윤석우(공주)	이준우(보령)	강창구(부여)	신호균(홍성)
김중한(예산)	전영환(서천)	강화섭(연기)	이진환(천안)
김남호(비례)	김동선(비례)	박동윤(태안)	강영성(부여)
김용호(논산)	손재탁(공주)	송민구(비례)	김문규(천안)
김재봉(아산)	우지명(청양)	신재원(보령)	박응환(아산)
장준섭(당진)	임성규(논산)	심정수(금산)	박찬중(금산)
전용설(홍성)	한소환(연기)	이복구(서산)	이한식(예산)
정순평(천안)	한창숙(비례)	정용해(당진)	정선홍(청양)
허영일(서산)	최경섭(태안)	한선교(서천)	

-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회별	성 명	출신지역구
내무위원장	윤석우	공주
교육사회위원장	이준우	보령
산업위원장	강창구	부여
건설위원장	신호균	홍성

○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1998. 7. 13, 11:00)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 6건을 의결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구 분	성 명	연 령	비 고
도의원	허영일	51	서산시, 행정자치위원회
〃	정순평	40	천안시, 행정자치위원회
공인회계사	유재호	37	공인회계사
〃	신종태	32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	유재환	65	전 의회예결특위 전문위원
〃	정상동	64	전 의회예결특위 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위원회별	성 명	직 위	출신지역구
교육사회위원회	최경섭	위원장	태안
건설소방위원회	강영성	간 사	부여
농수산경제위원회	강화섭	위 원	연기
행정자치위원회	김중한	〃	예산
농수산경제위원회	신재원	〃	보령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	금산
건설소방위원회	이진환	〃	천안
교육사회위원회	전영환	〃	서천
〃	한창숙	〃	비례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8. 7. 1)	내무위	○청양전문대학 명칭변경 청양전문대학 → 청양대학	7. 13	7. 15	원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8. 7. 1)	내무위	○노동부에서 시도사무로 이양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쟁의 행위의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	7. 13	7. 15	원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8. 7. 1)	내무위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 이를 준용하고 있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의 준용규정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7. 13	7. 15	원안
5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8. 7. 1)	내무위	○정부에서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지방세제 부문에 대한 도세감면조례 개정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 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씩 경감 ※ 적용시한 : '98.5.22 이후 취득분 부터 1999년 6.30일까지	7. 13	7. 15	원안
6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교육감 (98. 7. 2)	교사위	○전국과학전람회 규정이 전국과학전람회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	7. 13	7. 15	원안

第2節 第122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22회 임시회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7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98년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8. 8. 4(화) ~ 8. 14(금), 11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8. 4(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2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98년도상반기도정업무추진상황보고 4.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98년도상반기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98. 8. 5(수) 11:00	내 무 위 (제 1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관리실,정책실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관리실,정책실소관) 3.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공보관실소관) 7.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관실소관)	
10:00	교 사 위 (제 1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체육국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국소관) 3.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도체육회소관) 4.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생활복지국소관) 5.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관실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산 업 위 (제 1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농정국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농정국소관)	
10:00	건 설 위 (제 1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교통국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98. 8. 6(목) 11:00	내 무 위 (제 2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소방본부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소관) 3.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4.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교 사 위 (제 2 차)	1. 현장방문(연기군 양지마을)	
11:00	산 업 위 (제 2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지역경제국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11:00	건 설 위 (제 2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사업기획단소관)	
'98. 8. 7(금) 10:00	운 영 위 (제 1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회사무처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11:00	내 무 위 (제 3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계룡출장소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룡출장소소관) 3.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양대학소관) 4.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청양대학소관)	
11:00	교 사 위 (제 2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교육청소관) 2.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산 업 위 (제 3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농촌진흥원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농촌진흥원소관)	
11:00	건 설 위 (제 3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교통국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98. 8. 8(토)		의 정 자 료 수 집	
'98. 8. 9(일)		의 정 자 료 수 집	
'98. 8. 10(월) 11:00	내 무 위 (제 4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감사실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실소관) 3.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내무국소관) 4.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국소관) 5.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안 7.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98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00	교 사 위 (제 3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보사환경국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사환경국소관) 3.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환경연구원소관) 4.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00	산 업 위 (제 4 차)	1.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0:00	건 설 위 (제 4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교통국소관)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14:00	본 회 의 (제 2 차)	1. 제12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2.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3.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8. 11(화) 10:00	운 영 위 (제 2 차)	1.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감사실소관)	
11:00	예 결 위 (제 1 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98. 8. 12(수) 11:00	예 결 위 (제 2 차)	1. '98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98. 8. 13(목) 11:00	내 무 위 (제 5 차)	1.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제 4 차)	1.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안	
11:00	산 업 위 (제 5 차)	1.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8. 8. 14(금) 11:00	본 회 의 (제 3 차)	1.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안 6.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98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12.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3.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 17.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 19.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27		
조례안	17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1	1.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결의안	1	1.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동의안	1	1. 1998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 타	7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2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 '98 상반기 도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5.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6. '98 상반기 교육행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7.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8. 8. 4, 11:00) '98년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와 오재욱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8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김문규(천안), 손재탁(공주), 신재원(보령), 김재봉(아산), 허영일(서산), 임성규(논산), 심정수(금산), 강화섭(연기), 강영성(부여), 전영환(서천), 정선홍(청양), 전용설(홍성), 이한식(예산), 박동윤(태안), 장준섭(당진), 한창숙(비례)

○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8. 8. 10, 11:00) 도내 서북부 지역에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긴급한 구호조치와 복구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최경섭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을 제안하여 의결하고, 김중한 의원 등 9인을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천안외 6개 시·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동안 현장점검과 피해주민 위로, 수해복구지원대책 강구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김중한 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수해특위 구성을 위한 제2차 본회의와 내무위원회의 회부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일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김중한(예산), 장준섭(당진), 전영환(서천), 최경섭(태안), 박동윤(태안), 정용해(당진), 이진환(천안), 이한식(예산), 김문규(천안)

○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1998. 8. 14, 11:00)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세출예산중에서 기획관리실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농정국소관 축산기술 교육센타 후생관 건립에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8건,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9건의 민생관련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도 지 사 (98. 7. 1)	내무위	○각종 규제의 심사 및 정비의 종합적 추진 등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 마련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규제신고센타 설치 등	8. 14	8. 17	원안
7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교 육 감 (98. 7. 2)	교사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선출 사무 관계자 수당 및 실비지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동선거인은 공무원여비규정에 해당하는 실비 지급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1일 3만원의 수당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해당하는 실비 지급 -선출장소와 동일한 시군의 선거인은 식비의 ⅓을 추가 보상하여 실비지급	8. 14	8. 17	원안
8	충청남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98. 7. 2)	교사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로 설치하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초·중등 교육법으로 함	8. 14	8. 17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9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98.7.2)	교사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비용을 정하고, 이미 정해진 제증명수수료를 국립학교 및 타 시·도 수준에 맞추어 조정 -정보공개 열람, 복사, 복제 수수료 추가 -제증명 발행수수료 조정	8. 14	8. 17	원안
10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교육감 (98.7.2)	교사위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비보상지급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8. 14	8. 17	수정
11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도지사 (98.7.28)	내무위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시 사전입법예고 제도 마련 -대상 : 지방세, 보건위생, 건축 등 -방법·기간 : 공보(도보) 게재, 20일 이상	8. 14	8. 17	수정
12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	도지사 (98.7.28)	산업위	○충남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명칭 : 사단법인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 -업무범위, 신용보증대상, 운영재산조성, 지방비출연, 조합원, 정관, 수입금처리, 기구 및 임원 등	8. 14	8. 17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3	충청남도수질환경 보전조례안	도 지 사 (98.7.28)	교사위	○목적과 정의 설정 ○도지사, 시장·군수, 도민, 사업자의 책무규정 ○수질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도지정수질환경 보전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억제, 수질환경 보전사업추진 등 마련	8. 14	8. 17	원안
14	충청남도도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7.28)	내무위	○1가구 2차량 중과제도 폐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취득 및 등록시, 취득세는 20/1000, 등록세는 50/1000의 세율적용	8. 14	8. 17	원안
15	충청남도소비자 보호조례중개정 조례안	도 지 사 (98.7.28)	산업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 -당연직(공무원) : 7명→4명-위촉직(소비자단체 및 근로자 대표) : 13명→16명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설치근거 삭제 ○위원회 의견청취 기능중 실무위원회 문구 삭제	8. 14	8. 17	원안
16	충청남도정보화 추진조례중개정 조례안	도 지 사 (98.7.28)	내무위	○정부의 조례 표준안중 필요부분 반영 ○정보화 촉진협의회 규정 일부보완 ○개인정보 보호규정 명시	8. 14	8. 17	수정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9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안	도 지 사 (98.7.28)	내무위	○행정조직 개편, 실국본부 명칭변경과 분장사무 조정, 소속기관 기능 재배치 ○현행 11실·국·본부 11직속기관 14개사업소를 → 8실·국·본부, 11직속기관, 6개사업소 조직 개편	8. 14	8. 17	수정
20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7.28)	내무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재조정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443인에서 427명을 감축 3,016인으로 조정	8. 14	8. 17	수정
21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7.28)	교사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대폭 개정된데 따라 이에 맞게 보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8. 14	8. 17	수정
22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98.7.29)	교사위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삭제 -본 교 폐지 : 1개교 -분교장 폐지 : 2개교 -유치원 폐지 : 3개교	8. 14	8. 17	원안
23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	도 지 사 (98. 8.7)	산업위	○지원센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목적, 정의, 명칭, 사무소, 사업, 재산조성, 사업의 보고 및 검사, 출연재산회수, 공무원 파견 및 겸임 등	8. 14	8. 17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4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	도 지 사 (98. 8.7)	산업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에 관련된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과 용어를 정비 - 연쇄사업자→체인사업자로 변경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중 소속기관 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일부위원 변경	8. 14	8. 17	원안

o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17

1998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1998. 7. 28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내무위원회
	회부(의결)일	1998. 7. 2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1998. 8. 14)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8. 8. 17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관리계획 내역

· 재산처분

(단위 :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위 치	필(동)수	수 량	가 액
계(2건)		-	-	-	296,682
건물	잠업사업소건물 매각사업(추가)	대전시 동구 선화동	5	187.73	10,125
토지	관광개발사업지 이주자택지분양사업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9	9,551.9	286,557

도 유 재 산 관 리 계 획

('98년도 제1회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1.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종 전			제1회 변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211	825,908	4,192,460				211	825,908	4,192,460
		건물	43	5,359.83	501,745				43	5,359.83	501,745
		기타	1	69,188	691,880				1	69,188	691,880
	1.매 입	토지	211	825,908	4,192,460				211	825,908	4,192,460
		건물	43	5,359.83	501,745				43	5,359.83	501,745
		기타	1	69,188	691,880				1	69,188	691,880
	2.교환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08	561,330.3	20,437,463				108	561,330.3	20,437,463
		건물	66	17,298.35	1,296,700	5	187.73	10,125	71	17,486.08	1,306,825
		기타									
	4.매 각	토지	108	561,330.3	20,437,463				108	561,330.3	20,437,463
		건물	66	17,298.35	1,296,700	5	187.73	10,125	71	17,486.08	1,306,825
		기타									

2. 안면도관광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종 전			제1회 변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처분	계	토지				19	9,551.9	286,557	19	9,551.9	286,557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19	9,551.9	286,557	19	9,551.9	286,557
		건물									
		기타									

ㅇ 결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5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최경섭 의원외 10인
제 안 (제출) 일 자		1998. 8. 1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98. 8. 10)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 제안이유

· 수해복구 지원사업이 의회 4개 상임위원회에 분야별로 관련되어 위원회별로 활동시 비효율과 혼선이 예상됨

· 이를 해소하고자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별첨안과 같이 긴급 구성함.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특위목적

○ 수해의 조속한 복구와 항구 방재대책 강구를 위한 의정활동 자료수집
○ 지역이재민 위로와 복구관계 주민 및 공무원 격려

□ 특위구성

○ 특위구성 :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
○ 구성시기 :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8. 8. 10)
○ 구성인원 : 9명(상임위원장 추천)

□ 특위운영

○ 활동기간 : '98. 8. 11~8. 31까지(21일간)
○ 활동대상 : 수해우심지역(천안, 아산,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활동방향
- 수해현황 파악 및 복구대책 점검
- 수해복구관련 중앙예산 지원활동
- 피해주민위로 및 복구관계 공무원 격려등

□ 현장방문계획

○ 일　　시 : '98. 8. 11~8. 15(5일간)
○ 방문지역 : 7개 시군
○ 방문인원 : 13명(특별위원9, 전문위원실3, 촬영기사1)
○ 교 통 편 : 의회버스 이용
○ 현장안내 : 해당시군 실과장
○ 활동흐름
현장도착 → 피해·복구상황 답사 → 복구·지원대책 점검 → 주민·관계공무원격려 → 현장이동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 기　　간 : '98. 8. 26~8. 28(3일간)
○ 내　　용
- 수해복구대책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건의사항

□ 소요예산 ----------3,301천원

○ 격 려 금 : 700천원
- 산출기초 : 100천원 × 7시군 = 700천원
- 지변과목(위원장 별도협의)
○ 여　　비 : 2,601천원
- 숙박료 : 41,000천원 × 9명 × 4일 = 1,476천원
- 식　비 : 25,000천원 × 9명 × 5일 = 1,125천원

第3節 第123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23회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당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영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98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8. 9. 15(화) ~ 9. 29(화), 1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9. 15(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2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의회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5. 수해복구지원에관한건의안	
'98. 9. 16(수) 11:00	행 자 위 (제 1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공보관실 소관) 2.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	
10:00	교 사 위 (제 1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 (보건복지여성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00	농 경 위 (제 1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농림수산국 소관)	
11:00	건 소 위 (제 1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소방안전본부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9. 17(목) 11:00	행 자 위 (제 2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정책기획정보실 소관)	
09:00	교 사 위 (제 2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청양대학) 2. 현장방문 - 왕진초등학교(폐교), 정산초등학교 - 청양대학, 가나안노인학교(노인복지시설)	
11:00	농 경 위 (제 2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경제통상국 소관)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소방학교, 천안소방서	
'98. 9. 18(금) 11:00	행 자 위 (제 3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교 사 위 (제 3 차)	1. 현장방문 - 서천금매복지원(노인복지시설) - 비인쓰레기매립장 - 보령웅천폐기물처리업체(화성산업)	
11:00	농 경 위 (제 3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농촌진흥원 소관)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아산소방서, 서산소방서	
'98. 9. 19(토)		의 정 자 료 수 집	
'98. 9. 20(일)		공 휴 일	
'98. 9. 21(월) 10:0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8. 9. 22(화) ~ 9. 23(수)		휴 회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9. 24(목) 11:00	행 자 위 (제 4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자치문화관광국 소관) 2.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사 위	1. 현장방문 - 계룡하수종말처리장, 논산성지원(정신요양원) - 논산교육청, 강경상업고등학교	
	농 경 위	1. 현장방문 - 테크노파크조성예정지(천안) - 부곡공단택지조성지(당진)	
	건 소 위	1. 현장방문 - 공주소방서, 논산소방서	
'98. 9. 25(금) 11:00	행 자 위 (제 5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감사실, 총무과 소관) 2.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사 위	1. 현장방문 - 신안초등학교 외도분교(폐교) - 태안분뇨처리장	
	농 경 위	1. 현장방문 - 백사장항물량장축조공사(태안)	
	건 소 위	1. 현장방문 - 보령소방서	
'98. 9. 26(토)		의 정 자 료 수 집	
'98. 9. 27(일)		공 휴 일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9. 28(월) 11:00	행 자 위 (제 6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계룡출장소 소관)	
	교 사 위	1. 현장방문 - 금산분뇨처리장, 향림원(아동복지시설) - 남인초등학교 금일분교(폐교)	
11:00	농 경 위 (제 4 차)	1.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00	건 소 위 (제 2 차)	1. 당면현안사항보고(건설교통국 소관)	
10:00	운 영 위 (제 1 차)	1. 제124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 2.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협의 3. 제125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	
'98. 9. 29(화) 11:00	본 회 의 (제 3 차)	1.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계	12		
조 례 안	6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 의 안	1	1. 수해복구지원에 관한 건의안	
기 타	5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2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충청남도의회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8. 8. 15, 11:00) '98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산업위원회를 농수산경제위원회로, 건설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동안 수해피해 현장 점검과 피해주민 위로, 수해복구지원대책 추진 등의 활동을 전개한 수해확인 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수해복구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8. 9. 21, 10:00)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박찬중(금산), 전용설(홍성), 전영환(서천), 임성규(논산), 윤석우(공주)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1998. 9. 24, 11:00) 충청남도도정신문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4건, 조례폐지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ㅇ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6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 원 장 (98.9.9)	본회의	ㅇ행정조직 전면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부서를 조정 -4개 상임위 명칭, 소관 부서 명정	9. 15	9. 15	원안
28	충청남도도정신문 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9.9)	행자위	ㅇ정무부지사 직속의 도정신문사 설립 -기구는 규칙으로 정함 ㅇ편집위원 보수개선, 광고수주사의 보상금지급 규정 마련	9. 29	9. 30	수정
29	충청남도행정조직 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9.9)	행자위	ㅇ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 소속행정기관 명칭 변경 -농촌진흥원→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관장 업무 정비	9. 29	9. 30	원안
30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9.9)	행자위	ㅇ정원책정 및 정원규정 방법 개정 -총 정원 : 3,034인 -정원구분규정 : 집행기관 정원, 교육공무원의 정원, 의회사무기구 정원 ㅇ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 현원의 경과조치 규정	9. 29	9. 30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1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9.9)	농경위	○농·어업인 시상제 개정 - 수상분야 : 대상, 부문별상, 특별상(신설)으로 구분 - 추천권자 : 도단위 모든 단체장 - 평가방법 : 1차서류 심사후 우수자에 한해서 실사평가 - 심사위원회 명칭과 위원장 변경 - 수상자 선정방법 등 변경	9. 29	9. 30	수정
32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98.9.9)	농경위	○초지법 제4조 규정(초지조성 심의위원회)삭제에 따라 ○도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9. 29	9. 30	원안

ㅇ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7

수해복구지원에 관한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1998. 8. 28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8. 9. 15)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8. 9. 15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 제안이유

ㅇ 지난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민·관·군이 총동원되어 복구사업을 열심히 전개하였으나,

ㅇ 수해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져있는 수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게 적정한 보상금이 지원 되어야 하겠음

ㅇ 또한 수해복구비 지원에 있어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원상복구가 아니라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임.

건 의 사 항

평소 국정에 분망하신 가운데에도 지난 게릴라성 집중호우 피해에 우리 충남도민에게 애정어린 관심과 따뜻한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의회에서는 호우피해가 발생한 즉시 9명의 의원으로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지역 방문과 회합 등 21일 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응급복구에 동원된 각계층의 도민을 격려하고,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항구적 방재대책 강구를 위한 의정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가 수해지역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같이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수해에 대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행정적 배려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수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아울러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대 긴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정부차원의 행정적 집행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각별한 검토와 선처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판정기준의 현실화

가. 수해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 상향조정

수해 사망·실종자 1인당 재해구호지침에 의하여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위로금을 국고 또는 의연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여타사고의 보상금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대폭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원상복구 기준에서 항구적 개량복구 기준으로 개정 재해에 대한 복구비 산정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개량복구는 중앙재해대책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시설의 완벽한 개량복구가 불가능하여 매년 수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의 지원기준을 항구적 개량복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다. 농경지 복구비 부담비율 조정

농경지 복구지원비가 2ha이상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국비15%, 지방비5%, 융자·자부담80%로 피해농가의 기대에 훨씬 미달되어 농가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국비50%, 지방비10%, 융자·자부담40%로 중앙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고, 또한 농경지 복구지원에 따른 영농규모 기준을 현행2ha에서 3ha로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라. 축산 및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기준 조정

유실폐사된 가축에 대한 입식비 지원이 치가축(새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수산증식물은 치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영세한 농가의 재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현시가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마. 주택복구비 지원기준 확대

전파된 주택에 대하여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2,000만원을 기준(보조30%, 융자 및 자담70%)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융자 및 자담비율이 높아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가보조율을 50%이상 상향 조정하고, 지원액도 현행 국민주택기준 25.7평의 실건축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2.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대상 확대

가. 재해를 입은 상업용 점포의 피해상품 및 가내수공업, 중소기업의 생산시설과 피해 공산품에 대한 지원기준 책정 재해를 입은 상업용 점포의 피해상품 및 가내수공업, 중소기업의 생산시설과 피해 공산품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재해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나. 지원대상에 하천부지 피해농작물 포함

하천부지 피해 농작물의 경우 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영세농의 재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용허가를 득한 하천부지 피해농산물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람.

3. 수해복구비 국고지원 확대

지방도, 준용하천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시설의 경우 수해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율이 50%(국비50%, 도비25%, 시·군비25%)로 되어 있어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만 되어 있는 소하천복구비를 일부 국고지원 되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1998년 9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질문1 : 안면도 관광지개발 문제점과 대책

·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가, 어느 기업이 얼마나 많은 수익성이 있다고 1조원을 투자하겠냐는 것임. 그렇다면 하루 30억 원씩 매출이 있어야 되는 것임. 또한, 지급 보증을 한다는 유니온뱅크로부터의 의향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투자회사인 인피니티 그룹의 말만 듣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그리고 안면도 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25억원 중 얼마를 출자했는지, 우리 도가 49%의 지분 참여를 하였는데 의결권도 확보하지 못하고 대외적인 공신력이 아니라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듬.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현재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충청남도 측의 이사는 누구의 추천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전력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1조 1,1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이 확정되어서 '95년 민선도지사 취임 이후에 실질적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음. 현재까지 토지매입, 공공기반시설 등에 234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고, 설립자본금 총 25억원 중에서 도에서 49%에 해당되는 12억2,500만원, 그리고 민간이 51%에 해당하는 12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11월 10일에 회사를 만들었음.

이 사업의 개발계획을 '95년도에 민선지사가 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었음. 본 주식회사의 이사가 총 5명인데 두 명이 우리 도에서 추천한 이사로서 이종현 전 정무부지사와 최승 도의 국제 자문역을 추천을 해서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음.

인피니티 그룹에서 투자선을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에 유니온뱅크 등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과 보증 관계를 협의한 바가 있으나 IMF이후에 국가 신임도의 하락에

따라서 도가 직접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도가 직접 보증을 하지 않는 투자유치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음

우리 도에서 234억원을 투자한 공공시설은 안면도 관광개발을 통한 민·관 합작개발이 아닌 분양에 의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임.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성콘도와 콘도 신축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가계약 등 어떤 결정도 된 바가 없음.

■ 질문2 : 지역개발편중에 따른 소외지역 해소방안

·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국토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어느 지역은 용역까지 마친상태로 알고 있음.

앞으로 금산~추부~대전간 4차선이 조기 완공되면 20분대로 대전인접 배후도시로서 기능이 급속도로 인구증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 이것이 편중개발의 해소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바 금산~대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에서는 개발의 기본 그 중에서 금산은 연기, 논산과 함께 금강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대도시 배후의 지원 기능 및 인삼과 관광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건설, 대전-금산간 국도 4차선의 확포장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함께 국제 인삼물류센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한방종합타운 건설은 중장기적인 금산지역의 발전 전략으로 앞으로 금산군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중부대학과 협조해서 한의과 대학 설치를 추진해 나오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인삼프로젝트팀의 인력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배치할 방침임.

마전-대전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과 대전시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

■ 질문3 : 지난 3년 동안의 경영행정 평가와 채무해소방안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의 채무도 약 8천억으로 집계되어 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으로부터 2억불의 현금차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음. 이렇게 되면 우리 도는 무려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는 것임.

본 의원은 직접투자방식의 외자유치정책으로 전환을 제시하는 바임. 이러한 재정형편 속에서 지난 임기 3년 동안의 경영행정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채무 해소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정책기획정보실장 이명수 〕

· 부채와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용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음.

외자도입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이전에 국가경제난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됨.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는 1,00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주요한 타개책으로 재특자금 등 중앙의 공공자금을 활용하고 외자도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판단됨. 특히 세부적인 차입 조건 측면에서 재특자금의 이율인 9.5%보다 높은 금리이거나 환차손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사실상 현금 차입은 어려운 입장임. 참고로 이 현금 차관은 도의 방침결정과 중앙부처의 승인에 의해 도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임.

앞으로 이 외자도입 문제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할 것임.

지난 3년간의 경영행정실적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그 동안 도에서 해온 시간관리나 조직·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평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전국적인 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음.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경영행정 마인드가 미흡하고 특히 실천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고, 근본적으로 행정에 경영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이 경영 행정은 도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고, 방침이기 때문에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4 : 산림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리방안

· 산림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도지사의 미온적인 처리에 대하여 묻겠음. 국고 9억원의 착복에 7천 만원의 뇌물까지 주고받는 산림공무원 수십 명이 구속된, 사건이 지난 6월에 발생했음. 이것은 충청남도의 산림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1만6천여 공무원 전 공직자의 수치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200만 도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준 사건임. 이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지와 이 사건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조치한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감사관 한장석 〕

· 산림 비리사건 발생으로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실이 예방하거나 미리 적발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림.

우리 도에서는 이 같은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비위에 관련된 현직 공무원 13명 전원을 지난 9월 10일 자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지휘감독자인 해당 국장을 9월 7일자 인사 발령시 지휘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인사 조치를 하였음.

또, 사건당시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면직 조치하고 전임 소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서 현재 형사소추를 받고 있음.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부조리는 태동단계부터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사전 예방 차원의 지속적인 감사 활동과 함께 부조리 적발 시에는 일벌백계로 엄중조치 하면서 연대책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정비리를 아예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 질문5 : 고용안정실업대책 범도민 협의체 구성용의

· IMF라는 국난에 처해 있음으로 인해 온 도민이 고통스럽기 짝이 없음.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경제위축으로 지역경제는 불황의 늪을 또한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음. 본 의원은 각계각층 온 도민이 참여하는 "고용안정 실업대책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대처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박한규 〕

· 실업문제는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로 중앙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기울이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총 4,040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첨단기업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취업 및 직업훈련 등에 도정의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범도민고용안정실업대책위원회는 현재 우리 도에는 지난 '94년에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 경제계, 학계를 대표하는 열 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고용심의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 심의회의 구성원과 기능을 보강해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6 :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의 문제점

· 공직에서의 인사공정성은 조직관리의 핵심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의 필수조건임을 본 의원은 생각함.

따라서 이런 기준에 어긋난 인사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대기 발령자들이 많은 그 원인도 밝혀 주시기를 바람.

그리고 또한 일부 시·군에서 도지사의 권고사항을 묵살하고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행정부지사 김수진 〕

· 구조조정은 국민정부의 개혁의지하고 거기다가 IMF사태라는 급격한 것이 상승작용을 해서 하게 되었음. 구조조정의 성격은 작은 정부 구현은 감량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의 능률성을 버팀돌로 하도록 되어 있음.

구조조정의 내용은 두 가지 인데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먼저 기능 사무의 재배분을 통해서 조직기구를 재설계하여 도 본청은 3국 8과가 줄었고 도의회사무처는 1개 전문위원실을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사업소는 8개 사업소를 없앴음. 그리고 계룡출장소는 1개과, 5계, 2사무장을 폐지했음.

이에 따른 인력증원을 보면 총 431명을 감축해서 3,475명에서 3,044명으로 축소 조정했음.

두 번째는 구조 조정인 인사 개편 문제임. 우선 감축기준을 2000년 말까지 정년퇴직 대상인 5급 이상은 40년생까지 또 6급 이하는 43년생까지 해당되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감축하는 기본 방침을 정했음. 나머지 감축 미달 인원은 직렬별로 고위직, 고령자, 선승진자 순으로 감축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했음. 인사조치는 공로연수, 명예퇴직을 권장을 하고 희망치 않을 때는 2000년 말까지 전원 대기발령하는 것으로 해서 절대로 강제성을 띠지 않았음.

각 급별 인사는 우선 실·국장과 과장까지는 지휘관인 도지사에 인사권이 전권 부여된 것임. 그리고 5급은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100% 인사를 했음. 두 번째는 새로운 도정 추진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세 번째는 늘 우리가 걱정하는 지연, 학연, 혈연을 철저하게 배제할 방침임.

인사라는 것이 원래 하다 보면 100%일 수는 없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 지사님의 인사방침임. 다만 시·군간의 교류의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인사교류협의회가 있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 인사교류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시·군간 인사 교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임.

2. 전용설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수해복구와 재해예방 대책

· 지난 달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18명의 인명피해와 170세대 5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049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음. 매년 되풀이되다시피 하는 수재를 사전에 예방대책만 잘 세웠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곤 함.

평소에 호우에 대비한 하천 정비와 수해상습지구 제방 축조 등 하천 치수사업을 허술히 했던 행정관리의 부실이 크다고 볼 때 앞으로 완벽한 재해 방지대책은 없는지.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 동안 도에서는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재해위험 시설과 재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음.

특히 상습적인 재해위험 지역의 개선을 위해 금년에도 5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컸던 것은 이번 호우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였고 아직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예산 사정상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앞으로 이번 수해를 거울삼아서 장단기 재해관리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아울러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도의 모든 행정, 재정적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질문2 : 정부예산 확보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SOC투자방침

· 현재 경제는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대량 실직으로 경기침체로 소비 둔화와 수입감소 때문에 세수차질이 발생, 정부의 재정 적자로 편성되었음.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와 지방세 세입 여건의 불투명으로 재정 운용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실업 사태 등 지방세입 여건이 불투명해 재정 운용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이명수 〕

· 우리 도가 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예산은 총 247건에 2조7,347억원으로써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도로써는 예산 확보가 우리 도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와 시·군의 간부가 총 230여 회에 걸쳐서 중앙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활동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대비해서 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기울여 나가겠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경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업인 지원 등에 3,460억, 또 실업자 대책 등으로 공공 근로사업비 528억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등에 59억 원을 투자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저소득층과 실업자 구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유리한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음.

■ 질문3 : 채무상환계획 및 지방채 운영실태

· 우리 도가 총 6,430억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의 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이 같은 현상은 각시·군도 마찬가지임. 상환능력을 넘어선 엄청난 빚을 진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방만한 운영에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특히 일부 지자체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이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과 마구잡이식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내에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운용되는 기초단체는 없는지 또한 도의 채무상환계획, 앞으로의 재정운영방침, 예산편성방향과 시·군별 재정 자립도와 부채규모, 그리고 심각한 재정부족 상태는 아닌지 말씀해 주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이명수 〕

· 박찬중 의원님께서 일부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 이 채무액은 시점이나 채무의 범위나 이 계산방식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될 수가 있음. '97년말 결산기준으로 볼 때, 우리 도와 15개 시·군의 총 채무액은 6,430억원임. 이 중에서 도가 2,377억원으로 채무 비율은 5.9%이고, 시·군은 4,053억원으로 채무 비율이 4.1%로써 우리가 흔히 쓰는 적정 채무기준인 20%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임.

앞으로 가능하면 건전 재정운영에 힘쓰면서 지역개발활성화와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다만, 이와 같은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적자재정이 오히려 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오히려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림. 그 외에 재정자립도와 시·군의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음.

■ 질문4 : 도지사 선거공약 미완료 사업 추진 대책

· 지난 민선 1기 때 도민에 약속한 공약사업 130가지 중 미완료된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난 6.4선거 시 공약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조성, 서해안에 세계적인 산학연단지조성 등 지역경제를 위한 11개 사업, 도청 이전 계속 추진 등 지역 개발사업 17개 그리고 농어촌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교육환경관광, 세계화 정보화사업 등 총 60개 사업을 공약했으며, 시·군 별로 크고 작은 사업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들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 민자유치, 외국인 투자 등 엄청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봄. 그 조달방안과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민선 1기 선거공약 사업 135건 중에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80%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청양대학 건립 등 96건으로 71%가 완료되었고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중인 사업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29건으로 현재 135건 중에서 92%인 125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민선 2기 선거공약 사항은 총 146건으로 소관 부서별로 소요재원 조달 계획, 연차별, 단계별 추진 계획 등 실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음. 다만 국가적인 경제난 등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의 실천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도민에게 최종 공표함과 동시에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임기 동안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 중에 일부가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음.

■ 질문5 : 계룡출장소의 기채 내역과 상환 계획

· 계룡출장소는 군사목적을 위한 도시건설로 지난 '89년 8월 11일, '90년 2월 17일, '91년 12월 등 3차례나 대통령이 국제수준의 전원식 군사 문화도시 건설을 약속한 바 있음.

그래서 계룡출장소는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도시개발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봄.

그런데 그간 총 예산 5,872억원 가운데 국비는 고작 327억이고, 도비 1,092억과 기채 2,074억으로 현재 1,091억 8, 600만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있으며, 금년도에 이자 원금 등 414억을 갚아야 함. 계룡출장소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모든 사업비는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채 내역과 상환 계획 등 상세한 답변을 요망.

〔 답변 : 계룡출장소장 유상곤 〕

· '90년 설치된 계룡출장소는 그 동안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왔으며, 지금도 도와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지역적인 특색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이상적인 전원 문화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개발과 보존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남북간선도로 등 8개 사업에 6,7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바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비 또는 민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부지원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계룡출장소의 채무내역은 '98년 8월 30일 현재 채무액은 896억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4억2,500만원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722억1,100만원임. 채무상환 계획은 일반회계의 경우 도비확보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 하반기에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 414억원으로 은행기채 280억원, 지역개발기금 111억원, 상환연기조치 등을 취해 채무상환의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자금운영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등으로 채무상환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음.

■ 질문6 : 보령댐 등 담수호의 수질개선 종합대책

· 4,340억원을 투자 축조한 보령 댐의 경우를 보면 수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고, 수질 환경 오염의 주범인 생활 하수, 축산 폐수 등의 종말 시설이 안된 채 계속 수질은 악화되어 물을 급수하기도 전에 지금 현재 썩어 가고 있음.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썩은 물을 급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종합적인 수질 환경 보호 대책, 그리고 담수호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 답변 : 보건복지여성국장 박경배 〕

· 보령댐의 경우는 다소 늦기는 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물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개선사업 비용으로 60억5,000만원을 부담키로 우리 도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하수처리장 고효율 정화조 등 수질 보전 기초시설 설치를 '99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보령댐의 현재 수질상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가 2.5내지 2.8ppm으로 2급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수질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령댐의 경우 최종 준공이 '99년도로 예정이 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이수목적 등을 감안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임.

서산 AB지구 등 기타 대형 담수호에 대해서는 호소별로 오염원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하수 및 축산 폐수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제반사항을 협의해서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임.

앞으로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도내 대규모 호수의 수질을 최소한 상수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3급수 수질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7 :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채무상환 방법

· 신진지구공유수면매립, 논산 내동, 천안 신부지구택지개발 등 사업으로 그 동안 발생된 이익금과 투자내역 그리고 미분양된 택지분양계획, 채무규모와 상환방법을 밝혀 주시고 '92년 1월 25일 충남도가 사업시행을 자청한 석문국가공단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미분양택지가 연말까지 분양될 것을 가정하면 약 34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익금이 미분양택지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미분양택지에 대하여는 토지용도의 변경 등 주변 여건에 부합되도록 제한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분양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임.

공영개발에 따른 채무 규모는 원리금을 다 통합해서 지역개발기금 339억원과 토특 융자금이 103억원으로 총442억원임.

석문국가산업단지는 '95년도부터 수차에 걸친 민자유치 설명회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주업체를 모집한 결과 석유화학 업종이 입주를 신청하여 왔으나 공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에 따라 공해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타 업종의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중에 있음.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 시행 방안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8 : 고위공직자 사용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

· 도 고위직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대지 8,190㎡에 15동과 아파트 4채가 있음. 이를 매각할 경우 약 30억의 투자 재원이 마련됨. 또한 1년에 연간 8,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이 자금으로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하여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

〔 답변 : 자치문화국장 차주영 〕

· 우리 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관사촌의 단독 주택 10개 동과 아파트 4개 동을 합해서 총 14개 동으로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면 도지사 공관을 포함해서 10개 동의 단독주택이 위치한 관사촌 일대를 「도사 박물관」을 그 곳에 건립을 해서 대전지역의 중심기관이었던 충청남도의 상징물로써 위상을 갖춰 충남도민 모두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어 현재로써는 매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무주택공무원 임대아파트 제공 방안에 대하여는 그 소요예산이 약 180억 정도로 막대하고 현실적 재정난 등을 감안할 때, 즉시 추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여건,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할 사안임.

■ 질문9 : 공사용역의 감리전담기구 설치 방안

· 현재 도와 시·군이 매년 발주하는 용역과 감리 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음.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가칭 「용역·공사감리단」을 설치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됨.

도와 시·도에 발주하는 용역비와 감리비 예산내역은 ?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은 현재 단순공정의 소규모 건설공사는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사 및 중요 구조물 설계 등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데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음.

감리단 구성은 도 자체적으로 구성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행 건설기술관리 법규상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22개 공정에 대하여는 전문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토록 규정되어 있음.

도 및 시·군의 설계용역비와 감리비 예산내역은 설계용역비가 348억원, 감가 301억원 등 총 649억원으로서 총 공사비의 4%에 해당되는 금액임.

이를 자치단체별로 분석해 보면 도의 경우 설계용역비가 39억원, 공사감리비가 69억원 등 총 10억원이며, 시·군의 경우는 설계용역비가 309억원, 공사감리비는 232억원으로 총 541억원임.

■ 질문10 : 농·축·수산업의 가격안정대책

· 통계에 따르면 IMF이후 농기계, 비료, 농약, 배합사료값 등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추가부담이 약 2조 5,000억원이고, 금리인상으로 인해 3,000억원의 추가부담을 하는데 비하여 농축산물 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딱한 실정임. 이에 대책은?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에서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음.

생산기반확대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16만3,000ha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자 매년 5,000여ha의 경지정리를 실시 중에 있고 채소, 과실, 화훼, 특작 등 품목별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축산단지 조성 2개소, 돼지 수출 전업농육성 887호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농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통해서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11 : 농업법인의 정부지원 현황 및 사후관리대책

· 농어촌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농업법인 수와 정부지원 총액을 밝혀 주시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이들 법인이 허위 보고로 정부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고 지원시설을 사유화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지원금으로 돈놀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법인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다 도산되는 실정으로 현재 경영체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답변 : 농림수산국장 한영희 〕

· '97년말 현재 도내 농업 법인체는 영농조합법인 540개소, 농업회사법인 336개소 등 총 876개가 있으며, 그 중 373개 법인에 대해서 1,496억원 규모의 농기계 및 보관창고, 유통, 판매 등 시설 지원을 하였음.

이 중 59%에 이르는 515개소가 정상 운영 중에 있고, 19%인 169개소가 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192개소는 사업중단, 또는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농업법인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30개 법인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 영농, 인력 및 자원, 장부 관리 등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30개 법인체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앙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보다 많은 농업법인체들에게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농업 법인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 법인의 엄격한 선정과 함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12 : 재정운용의 문제점 및 결식아동 지원 대책

· 금년도 세입금 현황을 보면 총 예산 9,236억9,0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이 지난 7월 31일 현재 수납비율이 54.7%와 37.7%로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예상됨.

정부예산 가운데 올해 시행 예산중 20%를 절감 운용토록 지시했는데, 감축된 집행내용과 취소되는 사업은 없는지?

자금부족으로 인건비 지급 사태가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아울러 '99년도 예산 확보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98년도 교육감 재량사업비 규모와 사업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경제가 어려워 직장을 잃는 실직 가장의 증가로 결식아동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임.

도내의 결식 아동 수와 그간의 지원 실태, 사후 대책은?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도 교육청은 예산액의 93.5%를 국가 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8월말 현재 수납현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8.4%인 3,451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5.5%인 1,017억원이 수납되었음. 이는 교부금이 508억원, 잉여금 480억원, 총 988억원이 미 수납된 상태이며 비율로는 11%에 해당함.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자 1일 또는 25일간 일시 차입했던 304억원에 대한 이자는 기 계상된 차입금이자 과목에서 6월말 현재 6,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7월부터 9월 8일까지 일시 차입한 280억원에 대한 이자는 12월말에 지급할 계획이고, 현재는 일시 차입한 금액은 없음.

교육부의 내년도의 예산 확보 전망은 금년도 예산액 15조8,330억원의 18,5%가 감소한 12조9,074억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우리 도의 경우는 금년도 당초 배정액 8,640억원보다 17. 9%가 감소된 7, 097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는 '97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하여 열린교육추진기획단구성 운영비, 충남학생회관 개관 운영비, 공공도서관 활성화 특별 지원금, 기타 하급기관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경비 등 9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8년도에는 15억원을 계상하여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하급기관 교육여건 개선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경비, 열린교육 우수학교 지원금 등 9월말 현재 5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비행청소년과 학생폭력 등 10대들의 강력범죄는 '97년 8월말 비행 학생 수는 2,482명이었으나 '98년 8월말 현재 1,933명으로 549명이 감소되었고, 중도탈락 학생수도 '97년 8월말 1,556명에서 '98년 8월 현재 616명으로 2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 도의 전 교직자들이 이웃 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인성교육에 힘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함.

우리 도내 결식 학생은 5,865명으로 초등학생 3,465명, 중학생 1,678명, 고등학생 722명임.

결식 학생 중 4,840명에는 일식당 2,500원씩 연 180일간의 중식비로 9억58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025명의 결식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자체 돕기나 검찰청, 독지가, 민간인, 사회단체에서 1억 7,111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결식 학생에게는 접수된 성금 중에서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계속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결식 학생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음.

3. 전영환 의원(서천군, 자민련)

■ 질문1 : 공공보건 · 의료부문의 문제점과 대책

· 공공보건 의료의 위상과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여 국민 대다수의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 서비스 등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전환으로 의료원이나 군 보건소의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임용, 공개채용과 아울러 비리척결,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이 필요함.

또한, 효과적인 업무 평가에 있어 경영 수지 평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공보건사업의 순편익 등을 고려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런 상황에서 공공보건 의료부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 보건기관은 진료기능 보다는 각종 질병예방을 주목적으로 건강증진 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등 특수질환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하는 것과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별 중점 보건의료시책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에게 의사 임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음.

보건사업 업무평가의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행정자치부의 생각대로 수익성에만 너무 치우쳐서 평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 부담 능력이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평가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앞으로 도에서 시·군 보건업무 평가 시에 평가방법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수질관리 개선 대책

· '97년도 도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 조사대상 5,478건 중 먹는 물 수질기준초과가 1,863건으로 부적합률이 34%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대부분이 소독시설 관리 운영이 미흡한 상태인바 그 개선대책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도내 간이상수도는 679개소이며 14만6,000여 명이 이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금년도에는 38개소에 2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238개소에 195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노후시설을 개량할 계획임.

또한 지하수 이용시설에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정수 시설로도 개선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 또는 음용수 이외의 타 목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임.

■ 질문3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 지난 '92년부터 42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사업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96년까지 우리 도내에 설치된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현황을 보면 총 설치 수 957개소 중에서 활용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비한 곳이 120개소에 이르고 있음

화훼단지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황과 융자 지원금의 회수실정과 아울러 향후대책은?

〔 답변 : 농림수산국장 한영희 〕

· 도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0여건의 농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일부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농산물 특성상 작목 출하시기가 한정돼 있고, 지역 내 재배품목이 다양하지 못한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관광농원은 '97년 12월 현재 60개소로 운영실태 점검결과 연간 매출액이 47억1,700만원으로서 호당 2,200만원의 다소 저조한 경영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내방객이 여름 휴가철에 편중되고, 식당·농산물 판매 위주로 경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우리 도에서는 관광농원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대표자 경영교육을 확대하고 관광회사와 연계한 밤따기, 호도줍기 등 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의 내방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건실 운영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97년까지 채소, 과실, 화훼, 특작 등 총 118개소의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음.

앞으로 농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농정사업장을 전산화하여 시설물을 설치 못지 않게 사후관리에도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4 : 교원연수 활성화 방안

·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질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는 진로지도 성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청소년 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대안은?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가 급변하는 오늘날 교사들의 연수기회의 확대와 연수내용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부전공 연수, 교육기자재에 관한 연수, 특별활동에 관한 연수 등의 활성화 대책과 학교 체육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은?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되고 핵가족화 함에 따라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불건전 유해 업소의 증가, 불량 영상물을 비롯한 각종 유해 매체물의 범람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교장, 교감 및 교육 전문직 연찬회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해 학년초에 선도를 요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교장, 교감, 교사와 결연을 맺어 지도하고 각종 수련활동과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며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협조를 위하여 매년 학부모 2, 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학생등의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힘을 쓰고 있음.

학생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직 교원에게 연수를 강화하고 종래의 연수방법을 탈피한 새로운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충청남도 교원연수원에서 주관하여 각 지역별로 분원을 설치, 운영하는 권역별 연수와 연수 내용의 일부를 과제 학습으로 운영하는 재택 연수 방법들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치교사 해소와 2001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 대비를 위한 부전공 자격 연수는 금년도부터 4년 동안에 걸쳐 1,180명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학교 체육은 본질적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람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염려가 없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개선해 나가겠음.

4.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질문1 : 수도권발전법 제정에 따른 대응책

· 우리 충청남도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설립 규제와 제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지역적 거리와 교통의 편리, 또한 각종 공업용수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 골고루 충족되어 대규모 공단이 입주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손꼽혀 왔음. 그렇지만 수도권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다면 현재 충남 북부지역에 공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그 계획을 모두 철회할 것이 분명함.

도지사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현재 아산, 당진 등 충남 북부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공단조성사업과 사업투자비가 얼마나 투여돼 있는지 또한 궁금함.

이제 수도권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충청남도는 각 시·도간 다시 한번 무한경쟁의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 집행부의 의견은?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수도권발전법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첨단업종 신·증설을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허용하자는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 예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부처 회의 시에 그 부당한 내용 등을 지적한 바 있고 또 우리 도의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 바 있음.

우리 도가 이를 반대한 이유는 우선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가, 사실은 지역의 균형개발도 있지마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외적, 내적 비용 증가 요인들로 인한 수도권 집중의 피해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임.

도내 산업단지개발면적은 총 84개소에 2,450만평으로 분양가는 평당 최저 22만 1,000원이고 최고 51만2,000원임. 가장 낮은 지역은 지금 금산지역이 가장 낮게 평가가 되고 있고 천안지방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지역임.

천안, 아산, 당진 등 도내 서북부 지역의 산업단지와 아산 국가산업단지등 7개 단지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투자된 총 투자액은 6,131억원임.

외국인전용단지는 내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500억 원을 이미 확보해 가지고 선분양 지역, 선입주가 선정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어 있음.

■ 질문2 : 금강취수원 오염실태와 수질개선 대책

·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질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지난해 " 물관리 종합대책안"을 세워 놓았으며, 도에도 금강의 깨끗한 물을 되찾기 위하여 수질개선대책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강권에 인접된 수계별 수질오염도와 인접 시·도(대전, 충북)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도는 얼마인지?

수질보존을 위하여 상류지역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현재 금강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곳은 공주의 옥룡 취수장과 부여 광역 취수장 두 개소로서 현재 이들 지역의 원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즉 BOD가 3.4 정도임.

이것은 상수, 원수 기준 이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2급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금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발생량은 1일 120만톤 정도이며, 이 중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서 발생하는 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 도가 목표로 하는 2급수 조기달성을 위해서 인근 대전광역시는 물론 충청북도 등과 협의해서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연차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근무자의 대책

· 이번 구조조정시 대기자가 몇 명이며 대기자들의 시간당 급료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세금 누수대책과 이번 인사에서 퇴출 대상이 40년생을 한계선으로 알고 있는데 41년생이 승진한 특별한 사유는?

〔 답변 : 행정부지사 김수진 〕

·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도 본청의 경우에 계룡출장소와 합산을 해서 도 본청이 1,164명인데 1,157명 현원이 그렇습니다. 계룡출장소가 89명 정원인데 현원이 107명, 이래서 실제 본청에서 48명, 계룡출장소에서 18명, 66명임. 시간당 급료가 얼마씩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4급은 1시간에 17,045원, 5급이 14,575원, 6급이 11,520원, 이 것은 대기 공무원이나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똑같음.

5급으로 승진 1명이 41년생이 하나가 됐음. 이사람은 이미 사무관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대기상태에 있던 사람임.

■ 질문4 : 도계 등 오지마을 교통문제 해소대책

· 우리 충남은 경기도, 충북, 전북 등과 인접해 있음. 그런데 도계를 넘어가는 지점에 교통편이 불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도계를 운행하는 실태를 보면, 정기 노선버스의 운행이 드물어 전세 버스 및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자가용 영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도계지역간 상호 교차운행을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마는 시·도 업체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임. 앞으로 관련 시·도 및 업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계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도계를 운행하는 영세버스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하겠음.

■ 질문5 :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편성의 문제점

·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보면 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서 495억 9,216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러한 돈을 교육현장에 투자하는 것은 형식에 그치고 주로 소모성이 많다고 느껴지는 행정비 등에 비중을 많이 두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할 것인지 ?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은 기말수당 120%, 특별 상여수당 100% 등 495억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은 교육개혁 중점과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환경구축비 등 실질적인 교육 추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88억 7,000만원, 학교운영지원비 60억원, 자산취득비, 여비 등 불가피한 행정비 4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388억원이 감액된 9,23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음. 앞으로 소모성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 운영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음.

■ 질문6 :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과 도내 대상 교원 수

·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들에 대한 퇴출 방침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이 시달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는 그에 해당되는 교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

〔 답변 : 초등교육국장 김광섭 〕

· 본 도에서는 병 휴직자, 장기병가자, 경영부실자, 복무규정위반자, 민원야기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감사와 징계를 통해서 2명, 초등교장 1명, 중등교사 1명을 퇴출한 바가 있음.

고령 교사 또 건강문제가 있는 교원 등 많은 교원들이 스스로 자리를 떠나고자 해서 내년 2월말 현재 400여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확보와 또 수급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음.

앞으로도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복무규정 그리고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해서 부적격교원이 교단에서 떠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정 관리함으로써 국제통화 기금시대의 구조조정과 교육개혁 정신에 충실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7 : 2001전국체전과 2002 소년체전 계획 및 대책

·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소년체전에서 상위입상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종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비해서 시·군 교육청 사회체육 계장을 체육전문 교사로 임명하고 전공 교사를 각 팀에 배치하여 체전의 상위 입상을 꾀해 보실 구상은 없으신지?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2001년 전국체전과 이어서 개최는 2002년 소년체전에 대한 전략으로는 현재 중학교 2~3학년이 2001년의 고등부 선수의 주역이며 초등학교 현 2학년부터 5학년이 2002년 소년체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대상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대비책으로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특기생을 발굴,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수 육성관리와 연계하여 계획적인 지도를 펼쳐 나갈 것임.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 종목의 전공 교사 배치 문제는 인사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 배치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코치를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5. 윤석우 의원(공주시, 자민련)

■ 질문1 : 도내 학생의 대전소재 고교진학 문제점과 대책

· '98년 대전소재 고교진학 학생 현황을 보면 반포중학교의 경우 졸업생 69명중 88%인 61명이 대전으로 진학을 했고, 금산 복수중학교는 56명중 68%인 38명이 대전으로 진학을 했으며, 이런 자료나 통계를 볼 때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종전 제도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98년까지는 대전 근교 거주 주민 자녀들이 대전소재 학교에 진학이 가능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어 교육감에게 융통성이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충청남도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대전이 분리 된지 9년 만인 '99년도 입학생부터 대전 지역 고교로 입학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임.

대도시 인근지역은 법에 규정한 대로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지 않을뿐 더러 교육자치를 추구하는 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음으로 개방이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밝히는 바이며, 대전으로의 진학이 허용되지 않음은 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며 우리는 이런 법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림

앞으로 우리는 교육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도시권에 비하여 보다 손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충남으로 전학하고 싶어하고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第4節 第124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24회 임시회는 도와 교육청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98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8. 10. 14(수) ~ 10. 28(수), 1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고
'98. 10. 14(수)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2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98. 10. 15(목)	행 자 위	1. 현장방문 - 홍성의료원(건립예정지), -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홍성)	
	교 사 위	1. 현장방문 - 공주여성직업보도원	
	농 경 위	1. 현장방문 - 공주채소단지	
'98. 10. 16(금) 11:00	행 자 위 (제 1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정책기획정보실, 총무과소관) 2.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제 1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보건복지여성환경국소관)	
	농 경 위	1. 현장방문 - 청풍명월충남쌀큰잔치행사(서울 양제동) -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서울 역삼동)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고
	건 소 위 (제 1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건설교통국소관)	
'98. 10. 17(토) 11:00	운 영 위 (제 1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의회사무처소관)	
'98. 10. 18(일)		공 휴 일	
'98. 10. 19(월) 11:00	행 자 위 (제 2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자치문화관광국소관) 2. '98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9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97결산안예비심사(계룡출장소소관)	
11:00	교 사 위 (제 2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소관)	
11:00	농 경 위 (제 1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2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소관)	
'98. 10. 20(화) 11:00	행 자 위 (제 3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소관)	
11:00	교 사 위 (제 3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교육청소관)	
10:00	농 경 위 (제 2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제 3 차)	1. '97결산안예비심사(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98. 10. 21(수) 11:00	예 결 위 (제 1 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 10. 22(목) 11:00	예 결 위 (제 2 차)	1. '97결산안심사(교육청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10. 23(금) 11:00	운 영 위 (제 2 차)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4개상임위소관)	
'98. 10. 24(토)		의 정 자 료 수 집	
'98. 10. 25(일)		공 휴 일	
'98. 10. 26(월) 11:00	행 자 위 (제 4 차)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11:00	교 사 위 (제 4 차)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11:00	농 경 위 (제 3 차)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11:00	건 소 위 (제 4 차)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98. 10. 27(화)	행 자 위	1. 현장방문 -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공주) - 마곡사 성보박물관(공주)	
	교 사 위	1. 현장방문 - 연기위생매립장, 천안위생매립장	
11:00	농 경 위 (제 4 차)	1. 실업대책추진상황보고	
11:00	건 소 위 (제 5 차)	1. '98주요업무현황보고(충청남도운수연수원소관)	
'98. 10. 28(수)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97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7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 5. '98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99도유재산관리계획안 7. '98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8.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2		
조 례 안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결산승인안	3	1. 19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7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동 의 안	2	1. '98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99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기 타	6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2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 '98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98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6. '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8. 10. 14, 11:00) '98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97년도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김문규(천안), 손재탁(공주), 신재원(보령), 김재봉(아산), 허영일(서산), 임성규(논산), 심정수(금산), 강화섭(연기), 강영성(부여), 전영환(서천), 정선홍(청양), 전용설(홍성), 이한식(예산), 박동윤(태안), 장준섭(당진), 한창숙(비례)

○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8. 10. 28, 11:00) 도와 교육청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7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과 '98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6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10.8)	행자위	○1964. 10. 1 제정되어 시행해온 포상 조례를 전면 개정 - 포상대상자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도외거주자및외국인)민간단체도 포함하며 종류는 모범상(감사패, 감사장), 공적상 · 창안상(표창장), 우등상(상장)으로 구분.	10. 28	10. 28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 공적심사위원회위원 7인으로 구성,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포상시기는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 동일공적에 대하여는 이중포상 금지하며 포상대상자 추천은 실·국·본부장, 시장·군수·출장소장 및 주민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7

'98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1998. 10. 8.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1998. 10.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98. 10. 28)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8. 10. 2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관리계획 내역

· 재산취득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위 치	필수.동수	수 량	가 액
합 계			19필.32동	14,105.4	845,298
토 지	소 계		19필	13,350.3	511,437
	①공산성정비	공주시 금성동	12	3,296	172,670
	②부소산성정비	부여읍 구아리	6	3,790	299,678
	③벼종자생산포장	논산 부적 마구평리	1	6,264.3	39,089
건 물	소 계		32동	755.10	333,861
	①공산성 정비	공주시 금성동	26	556.83	187,699
	②부소산성 정비	부여읍 구아리	6	198.27	146,162

도 유 재 산 관 리 계 획

('98년도 제2회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o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종 전			제2회 변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211	825,908	4,192,460	19	13,350.3	511,437	230	839,258.3	4,703,897
		건물	43	5,359.83	501,745	32	755.10	333,861	75	6,114.93	835,606
		기타	1	69,188	691,880				1	69,188	691,880
	1.매 입	토지	211	825,908	4,192,460	19	13,350.3	511,437	230	839,258.3	4,703,897
		건물	43	5,359.83	501,745	32	755.10	333,861	75	6,114.93	835,606
		기타	1	69,188	691,880				1	69,188	691,880
	2.교환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08	561,330.3	20,437,463				108	561,330.3	20,437,463
		건물	71	17,486.08	1,306,825				71	17,486.08	1,306,825
		기타									
	4.매 각	토지	108	561,330.3	20,437,463				108	561,330.3	20,437,463
		건물	71	17,486.08	1,306,825				71	17,486.08	1,306,825
		기타									

의안번호 38

'99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1998. 10. 8.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1998. 10.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98. 10. 28)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8. 10. 2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관리계획 내역

· 총 괄

(단위 : ㎡, 천원)

구 분	사 업 명	필수,동수	면적(㎡)	가액(천원)	비 고
합 계		14필, 3동	35,599.61	537,168	
취 득	소 계	8필, 1동	12,472.22	72,527	
	토 지	8	12,389	64,258	
	건 물	1	83.22	8,269	
처 분	소 계	6필, 2동	23,127.39	464,641	
	토 지	6	22,992.3	455,436	
	건 물	2	135.09	9,205	

· **재산취득**

(단위 :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위 치	필(동)수	수 량	가 액
합 계			8필,1동	12,472.22	72,527
토 지	①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편입용지매입(손실보상)	예산 신암 종경	8	12,389	64,258
건 물	①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부지내 건물매입	〃	1	83.22	8,269

· **재산처분**

(단위 :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위 치	필(동)수	수 량	가 액
합 계			6필,2동	23,127.39	464,641
토 지	소 계		6필	22,992.3	455,436
	① 보령시 시의회청사 신축용지매각	보령. 명천	5	22,628	200,426
	② 도유관사 부지매각	대전.중.선화	1	364.3	255,010
건 물	① 도유관사 건물매각	〃	2동	135.09	9,205

도 유 재 산 관 리 계 획

('9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8	12,389	64,258				8	12,389	64,258
		건물	1	83.22	8,269				1	83.22	8,269
		기타									
	1.매 입	토지	8	12,839	64,258				8	12,839	64,258
		건물	1	83.22	8,269				1	83.22	8,269
		기타									
	2.교환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6	22,992.3	455,436				6	22,992.3	455,436
		건물	2	135.09	9,205				2	135.09	9,205
		기타									
	4.매 각	토지	6	22,992.3	455,436				6	22,992.3	455,436
		건물	2	135.09	9,205				2	135.09	9,205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第5節 第125回 定期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2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8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9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 이번 정기회는 도 및 교육청의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실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8. 11. 20(금) ~ 12. 29(화), 4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11. 20(금)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25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9충청남도예산안제출에대한연설 3. '99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대한연설 4.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30	운 영 위 (제 1 차)	1.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8. 11. 21(토) ~ 11. 30(월) (10일간)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11. 26(수) 10:30	교 사 위 (제 1 차)	1.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8. 11. 30(월) 10:30	교 사 위 (제 2 차)	1.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98. 12. 1(화) 10:3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5:30	행 자 위 (제 1 차)	1.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8. 12. 2(수) 10:30	본 회 의 (제 3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8. 12. 3(목) 11:00	본 회 의 (제 4 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1998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1998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7.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8.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10.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2.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12. 4(금) 11:00	행 자 위 (제 2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 및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정책기획정보실, 공보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제 3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 및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보건복지여성환경국소관)	
11:00	농 경 위 (제 1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예비심사(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1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예비심사(건설교통국소관)	
'98. 12. 5(토) 11:00	운 영 위 (제 2 차)	1.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2.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3. 충청남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4. '99충청남도예산안예비심사(의회사무처소관) 5. '98제3회충청남도예산안예비심사(의회사무처소관)	
'98. 12. 6(일)		공 휴 일	
'98. 12. 7(월) 11:00	행 자 위 (제 3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 및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자치문화국소관)	
11:00	교 사 위 (제 4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 및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소관)	
11:00	농 경 위 (제 2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예비심사(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2 차)	1.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건설교통국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12. 8(화) 11:00	행 자 위 (제 4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 및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총무과,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소관)	
11:00	교 사 위 (제 5 차)	1. '99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98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제 3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예비심사(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제 3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소관)	
'98. 12. 9(수) 11:00	행 자 위 (제 5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 및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계룡출장소소관) 2. 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서 예산안 계수조정	
11:00	교 사 위 (제 6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및'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 (교육사회위원회소관부서 예산안 계수조정)	
11:00	농 경 위 (제 4 차)	1.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경제통상국,농림수산국,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제 4 차)	1.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소방안전본부소관)	
'98. 12. 10(목) 11:00	예 결 위 (제 1 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9충청남도예산안심사 4.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98. 12. 11(금) 11:00	예 결 위 (제 2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심사 2.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98. 12. 12(토) 11:00	예 결 위 (제 3 차)	1. '99충청남도예산안심사 2. '98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12. 13(일)		공 휴 일	
'98. 12. 14(월) 11:00	예 결 위 (제 4 차)	1. '99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심사 2. '98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	
'98. 12. 15(화) 11:00	예 결 위 (제 5 차)	1. '99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심사 2. '98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	
'98. 12. 16(수) 11:00	본 회 의 (제 5 차)	1. '99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99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 12. 17(목) 11:00	행 자 위 (제 6 차)	1.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제 7 차)	1.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제 5 차)	1. 재단법인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11:00	건 소 위 (제 5 차)	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98. 12. 18(금) 11:00	행 자 위 (제 7 차)	1.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1:00	농 경 위 (제 6 차)	1.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 소 위	1. 현지확인(종합건설사업소 본소 및 공주지소)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12. 19(토)		의 정 자 료 수 집	
'98. 12. 20(일)		공 휴 일	
'98. 12. 21(월) 11:00	행 자 위 (제 8 차)	1.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제 8 차)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2.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00	농 경 위 (제 7 차)	1.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00	건 소 위 (제 6 차)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98. 12. 22(화) 11:00	행 자 위 (제 9 차)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2.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00	교 사 위 (제 9 차)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11:00	농 경 위 (제 8 차)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건 소 위	1. 현지확인(서해대교건설현장)	
'98. 12. 23(수)	행 자 위	1. 현지확인 - 예산수덕사, 남연군묘, 서산마애삼존불상	
11:00	농 경 위 (제 9 차)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건 소 위	1. 현지확인 - 가스시설견학(대전 SK연구소)	
'98. 12. 24(목)	행 자 위	1. 현지확인 - 아산현충사, 외암리민속마을	
	농 경 위	1. 현지확인 -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8. 12. 25(금)		성 탄 절	
'98. 12. 26(토)		의 정 자 료 수 집	
'98. 12. 27(일)		공 휴 일	
'98. 12. 28(월)	농 경 위	1. 현지확인 - (주)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천안)	
'98. 12. 29(화) 11:00	본 회 의 (제 6 차)	1.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2.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3. 충청남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4.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9.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0.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재단법인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13.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5.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39		
조례안	20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4	1. 19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8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2	1.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규정안	1	1. 충청남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강령·규범안	2	1.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2.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기 타	10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25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3. 1999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제출에 대한 도정연설 4. 199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연설 5.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도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8. 19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19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2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8. 11. 20, 11:00) '9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재욱 교육감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연설을 들었으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 제12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8. 12. 1, 10:30)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화섭(연기), 이한식(예산), 임성규(논산) 의원 등 3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1998. 12. 2, 10:30)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틀째를 맞아 김문규(천안), 김중한(예산), 송민구(공주) 의원 등 3인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2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1998. 12. 3,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98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충청남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3건,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6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김문규(천안), 손재탁(공주), 신재원(보령), 김재봉(아산), 허영일(서산), 임성규(논산), 심정수(금산), 강화섭(연기), 강영성(부여), 전영환(서천), 정선홍(청양), 이한식(예산), 박동윤(태안), 장준섭(당진), 한창숙(비례)

○ 제12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1998. 12. 16, 11:00) 도와 교육청의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1998. 12. 29, 11:00)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2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8건, 충청남도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건,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동의안 2건,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등 규칙안 3건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9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교 육 감 (98.11.9)	교사위	○교육청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설치조직과 분장사무 규정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조정 ○소속기관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 ○소속기관(부서)별로 운영되어 온 기구 설치조례를 통합 제정	12. 3	12. 4	원안
40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교 육 감 (98.11.9)	교사위	○지방공무원 관리지침(교육부)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 -정원총수 : 4,722명 →4,231명	12. 3	12. 4	원안
41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교 육 감 (98.11.9)	교사위	○의사국의 조직개편 및 정수조정 -의사계+의안계⇒의사담당으로 통합 -사무직원정수 : 16명 →14명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 정함.	12. 3	12. 4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2	충청남도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교 육 감 (98.11.9)	교사위	○'99. 3. 1일자로 신설, 폐지, 분교장 개편 이전 또는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위치삽입, 변경, 삭제 - 신설 : 4개교(유치원1, 초등2, 특수1) - 폐지 및 분교장 개편 : 57개교 - 학교명칭변경 : 11개교 - 학교위치변경 : 2개교	12. 29	12. 29	원안
45	충청남도도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11.10)	행자위	※ 사정변경으로 도지사로부터 안건 철회 요청 ('98.11.19) → 안건철회 허가 ○사유 : 행자부로부터 추가 개정표준안 시달			철회
46	충청남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도 지 사 (98.11.10)	행자위	○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용 도유재산 공급 -수의계약에 의한 농지 및 폐천부지 매각 -도유관사정비, 분임재산관리관 신설 등	12. 29	12. 29	원안
47	재단법인안면도 국제꽃박람회조직 위원회설립및지원 조례안	도 지 사 (98.11.10)	농경위	○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12. 29	12. 29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8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8.11.10)	농경위	○농·어업인에게 지원효과를 높이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12. 29	12. 29	수정
49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8.11.10)	교사위	○명칭 및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보령.주교면 소재: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공주.계룡면 소재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2. 3	12. 4	원안
50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도지사 (98.11.20)	행자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 도의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용사항 규정 - 위원회 기능, 위원수 100인 내외 및 임기 2년 연임, 상임위원회 20인 내외 구성 등	12. 3	12. 4	수정
51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8.11.20)	행자위	○행자부의 도축검사 수수료원가 인하 조정통보에 따라 현실화율에 맞게 인하 조정 - 소 1두당 3천원→1천원 - 돼지 1 두당 1 천 원 → 500원	12. 29	12. 29	원안
52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98.11.20)	농경위	○도·소매업진흥법 폐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시행에 따라 - 도의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흡수 시행되어 본 조례 폐지	12. 29	12. 29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55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98.11.20)	본회의	○의회사무처설치와 기능 및 사무직원의 정원규정 보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제정 근거 마련	12. 3	12. 4	원안
56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98.11.20)	본회의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에 맞게 보완 - 원격지 회의출석 비용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변경 - 국내·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	12. 3	12. 4	원안
57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98.11.20)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참석한 증인 등에 대해 지급하는 실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보완 ○증언·진술 거부시 과태료 부과 예시문 수정 - 500만원이하→300만원이하	12. 3	12. 4	원안
58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98.11.20)	본회의	○결산검사위원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변경	12. 3	12. 4	원안
61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8.12. 8)	행자위	○불시 대형재난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사무 위탁 - 학교법인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위탁사무 관장부서 명칭 변경 - 열관리시공 및 지방공업단지관리업무: 공업기술과 - 나관리업무 : 보건위생과	12. 29	12. 29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62	충청남도도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12. 8)	행자위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장애인이 보유한 상업활동용 자동차의 도세 감면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25/100 경감 - 장애인 취득자동차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에 면허세 까지 추가 면제	12. 29	12. 29	원안
63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12. 8)	건소위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일부 조항을 관계법령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 - 기금예탁 : 자치단체 지정금고 - 기금의 용도 : 조례에 열거 - 기금회계관리 :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매회계 연도마다	12. 29	12. 29	원안
64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8.12. 8)	건소위	○충남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심의요청시 수수료징수 근거마련 ○자치법령의 절차에 맞지않던 조례 부분 정비	12. 29	12. 29	원안
66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도 지 사 (98.12.21)	행자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규정 마련	12. 29	12. 29	수정

ㅇ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54

'99 전국자치복권 발행 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1998. 11. 2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1998. 11.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1998. 12. 29)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8. 12. 29.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ㅇ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더욱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 수요 등의 지방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ㅇ '95. 7. 1부터 시작한 전국단위의 자치복권 발행을 '96~'98에 이어 '99년에도 계속 시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복지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 재원에 충당코자 함.

□ 주요골자

ㅇ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1특별시, 6광역시, 9도)
ㅇ 복권종류 : 전국자치복권
ㅇ 발행기간 : '99. 1. 1 ~ 12. 31
ㅇ 판매지역 : 전국(제일은행, 농협 및 10개 지방은행판매대행)
ㅇ 발행형식 : 3종(즉석식, 추첨식, 전자식)
ㅇ 발행회차 : 즉석식 - 1~2월, 추첨식 - 매주, 전자식 - 매주
ㅇ 발행규모 : 2,500억원(즉석식 500, 추첨식 1,000, 전자식 1,000)
ㅇ 당첨최고액 : 2천만원(즉석식), 1억5천만원(추첨식), 판매액에 따라(전자식)
ㅇ 예상수익 : 504억원

복권발행계획서(1999년도)

1. 합계

(단위 : 백만원, 백만매)

지방자치 단 체 명	발행액	발행매수	발행기간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비 고
16개시도 공동	250,000	400	99. 1. 1~ 12. 31	175,000	50,400	

2.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16시·도 공동발행)

(단위 : 백만원)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발행주기)	액면금액	발행매수	발행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계				400백만매	250,000	175,000	50,400
즉석식	1. 1~12. 31	10회	500원	100 〃	50,000	35,000	8,400
추첨식	7. 1~12. 31	24회	500원	200 〃	100,000	70,000	21,000
전자식	7. 1~12. 31	24회	1,000원	100 〃	100,000	70,000	21,000

3. 행사 기념복권발행계획

가. 행사개요

행사명	행 사 기 간	소 요 예 산			부족예산 확보계획
		계	확보가능액	부 족 액	
	없	음			

나. 복권발행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액면금액	발행매수	발행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계							
추첨식 즉석식 혼합식		없	음				

4.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의안번호 65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1998. 12. 17.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회부(의결)일	1998. 12.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1998. 12. 29)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8. 12. 29.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 주요골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

○ 지금까지의 보건의료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상의하달방식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할 필요성 제기

※ 근 거 : 지역보건법 제3조

○ 금번 수립하게되는 계획은 1999~2002년까지 4년간 활용할 계획으로서

- 장·단기 추진 목적을 명확히 하고
- 도민들에게 보건의료 목표를 제시하며
- 지방의회, 학계, 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 보건의료의 환경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도민에게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보건사업의 심층적인 평가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기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업을 전개코자 함.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진단(일반현황)

1) 의료 이용현황

○ 도내 평균 외래진료는 78.5%, 입원진료는 38.6%로서 금산군, 청양군 등은 외래진료 충족률이 낮고, 입원치료 충족률은 청양군, 예산군, 금산군, 서천군, 연기군 순으로 낮게 나타남.

2)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수는 의원 532개소, 병원 19개소, 종합병원 9개소, 3차 병원 1개소, 정신병·의원 20개소, 치과병·의원 252개소, 한방병·의원 216개소, 기타 5개소로 총 1,054개소가 도내 전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 의료기관당 인구비는 의원 3,339명, 병원 87,144명, 종합병원 203,337명, 3차병원 1,872,137명, 정신병원 91,502명, 치과병의원 7,039명, 한방병의원 8,395명임.

3) 의료보장 현황

○ 의료보장별 구성은 지역보험 54.9%, 직장보험 39.6%, 의료보호 5.5%임.

○ 의료 취약인구 중 독거노인수는 21,795명으로 1.2%, 등록장애인수는 23,995명으로 1.3%, 의료보호대상자는 102,354명으로 5.5%, 노인 부부세대는 34,112명으로 5.8%,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321세대로 0.02%를 나타내고 있음.

나.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1) 생의주기별 보건사업

○ 생의주기별 보건사업은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구체적인 목표제시 〉

사 업 명	목 표		비 고
	현 재	2002년도에는	
영 아 건 강 검 진	6.3%	10.7%	
영 유 아 예 방 접 종	71.5%	76.8%	
자 궁 경 부 암 검 진	7.9%	15.6%	
임 산 부 산 전 관 리	32.5%	57.0%	
노 인 건 강 검 진	4.0%	8.0%	

2) 서비스별 보건사업

○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만성퇴행성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공중 및 식품위생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①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총체적 도민운동으로 정착

② 영양개선사업

○ 시범 영양보건소를 1-2개 운영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과 관계있는 식품섭취조사, 건강검진,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하여 영양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③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지표의 향상을 위해 내소환자 및 집단보건교육을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우식 영구치율을 67.2%에서 2002년에는 40.4%로 감소시킴.

④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보균자 찾기, 방역소독 등을 강화하고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

⑤ 만성퇴행성질환사업

○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증진하도록 함.

⑥ 방문보건사업

○ 거동불편노인, 만성질환자 및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⑦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안전하고 건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도민에게 공급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

⑧ 의약무관리사업

○ 의료서비스의 수준향상으로 신뢰받는 의약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진료가 조성되도록 지도, 감시를 강화

⑨ 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주력하여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다. 병상수급계획

○ 도내에는 총 5,530개의 병상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지역에 71%, 군지역에 29%가 분포해 있어 군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나 인근 시·군의 병상활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음.

○ 병상수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이며, 여유 병상에 대하여는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만성병전문요양병상, 치매병상, 정신병상 등으로 기능 변화가 요구됨.
(여유병상 1,789개)

라. 보건소 육성지원 계획

1) 보건기관의 정비

ㅇ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장비개선계획

- 우리도의 보건기관은 총 417개소(보건소 13, 보건의료원 2, 보건지소 159, 보건진료소 243)가 있으나, 일부지역의 기존시설이 노후·협소한 관계로 주민이용 불편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2) 보건기관 종사인력의 수급 및 자질향상 계획

① 종사인력 수급

ㅇ 기존 인력의 전출, 퇴임 등으로 결원 발생시에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등)을 우선 확보

② 자질향상 계획

ㅇ 교육형태

- 보건복지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참여(국립보건원)
- 도 지방공무원 보건분야 과정 교육 참여
- 보건소 자체계획에 의한 교육
- 업무관련 각종학회 세미나 참여

3) 제도적 지원

ㅇ 전문인력 채용기준 강화에 대한 기준 마련

- 시군 보건소의 약사를 전문직 등으로 우선 채용하여 주민진료 및 의·약사 감시활동의 전문화와 함께 현재 대다수의 일용직인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술직렬로 점진적 정규직화 도모

마. 특화사업

1) 지역사회 고혈압 관리

ㅇ 혈압, 콜레스테롤, 비만도 측정, 뇌혈관질환 파악,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의거 고위험군 등록관리하여

○ 증가추세에 있는 고혈압성 질환의 유병률을 2002년도에는 현 수준이하로 유지

2) 치매노인 보호사업

○ 농번기에 치매환자 70명을 권역별 종합병원급에 치매전담 병실을 운영하여 입원 진료하고

○ 65세 이상 치매중증 환자 267명에 대하여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간병하고, 재가환자는 부락별 순회 방문하거나 간병소에서 책임간병을 실시

3) 재가말기환자관리시스템 구축

○ 재가환자간호, 가족관리, 투약, 임종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재가말기 환자가 임종을 편안히 맞이하도록 하고, 가족의 삶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함.

4) 의료취약지역 특수질환 발견사업

○ 공공기관과 종합병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의 특수질환을 조기에 발견

5) 건강증진서비스헌장 제정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여 혜택을 도민이 골고루 받도록 함은 물론

○ 공무원이 솔선 수범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함.

○ 규정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69

충청남도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1998. 12. 5.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1998. 12. 29)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도의회장으로 집행하여 고인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을 위로와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 의원이 재임기간중에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의회장 대상자를 현직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경우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함.

○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두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 위원은 부의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하도록 함

○ 장의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

-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 총무, 의식, 경호, 재무, 치산, 연락분과위원회를 두어 사무를 분장 집행하도록 함.

○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을 간사로 함.

○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가정의례준칙에 준하도록 함.

○ 장의비용은 장제비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을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당해 소관 의회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함.

장 제 비 기 준

사 항 별	규 격	수 량	비 고
1. 신문공고	3단 15㎝	1개사	지방일간지
2. 영결식장 설치	○ 높이 3.5m ○ 규모6m×3m	1식	
3. 영 구 차	중 형	1대	1일간
4. 헌화용꽃및근조리본등			
	- 특 대	1개	장의위원장용
가. 헌 화	- 대	15개	유족및집행위원장용
나. 흉 화	- 특 대	1개	장의위원장용
	- 대	20개	집행위원장및위원용
다. 근조리본	흑 색	200개	조 객 용
라. 장 갑	백 색	50족	종사자용
마. 영구차리본	대 형	1개	
바. 현 관	6m×1m	1개	
5. 조 화	대 형	1개	의장명의
6. 안내문 인쇄	모조32절×180g/㎡	300부	
7. 장의식 협조			
가. 경호차량		2대	
나. 조악대협조		1대	

○ 강령·규범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67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1998. 12. 5.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1998. 12. 29)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중추인 우리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커지면서 의원 스스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이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참신한 의원상을 확립하고 성숙된 의회상 정립에 정려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다짐과 노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상황속에서 더욱 엄정한 윤리관과 사명감속에 책무와 소명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인 요청이므로 이에 우리 의원들은 이를 보다 확고히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제정하여 의원들이 드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윤리강령」의 전문에 제정취지를 명시하고, 5가지의 강령을 정함

○ 「실천규범」에 있어

-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규정함.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품위유지, 청렴의무를 정함.
- 직권남용 금지,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취득행위를 금지함.
- 기밀누설금지, 겸직금지, 기부행위금지 등을 정함.
- 사례금, 회피의무, 재산등록·신고 의무에 대하여 정함.
- 회의출석 의무를 강조함.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안

우리 충청남도의회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민의수렴의 터전으로서 올바르고 참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항상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한다.

3. 우리는 의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4.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거나 특정인의 수혜를 위한 알선 등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항상 연구·노력하는 자세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구현하는 데 온 힘을 모은다.

의안번호 68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1998. 12. 5.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1998. 12. 29)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중추인 우리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커지면서 의원 스스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이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참신한 의원상을 확립하고 성숙된 의회상 정립에 정려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다짐과 노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상황속에서 더욱 엄정한 윤리관과 사명감속에 책무와 소명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인 요청이므로 이에 우리 의원들은 이를 보다 확고히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지표로

삼고자「윤리강령」과「실천규범」을 제정하여 의원들이 드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윤리강령」의 전문에 제정취지를 명시하고, 5가지의 강령을 정함

○ 「실천규범」에 있어

-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규정함.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품위유지, 청렴의무를 정함.
- 직권남용 금지,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취득행위를 금지함.
- 기밀누설금지, 겸직금지, 기부행위금지 등을 정함.
- 사례금, 회피의무, 재산등록·신고 의무에 대하여 정함.
- 회의출석 의무를 강조함.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

제1조(윤리강령준수)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사생활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금품 및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공무상의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련규정이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산등록)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의 제공이나 허례허식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와 공무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선거구 활동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나 활동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범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강화섭 의원(연기군, 자민련)

■ 질문1 : 그린벨트 관리방법 개선 대책

· 요즘 그린벨트 관리가 강화돼 온 시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도에 분포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관리시책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함.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 관내에는 4개 시·군 67.7㎢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평소 국토가 개발과 보존의 조화 속에 관리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또한 보존 관리되어야 하며, 다만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도내에 국공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은 55만8,000필지에 2,144만 6,100㎡인데 그 중에서 건물이 15만9,000㎡가 있으며 가액으로 따지면 약 8,300억정도 되겠음.

국유재산은 3만 9,000필지에 3,576만 5,000㎡인데 가액으로 따져서 약 3,362억원이 되겠음.

■ 질문2 : 청벽강변 임시도로 원상 복구 방안

· 도가 자연을 가장 표본적으로 훼손하고 복구하지 않는 곳을 지적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고자 함.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일명 청벽바위산으로 이곳은 수심이 깊고 산의 경관이 수려하기로 금강 변에서 유일한 곳으로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철새들의 낙원이요 물고기들의 보금자리로 알고 있는데, 허가도 설계도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낚시꾼과 야영객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공주, 부여, 상수도 보호차원과 희귀 철새와 물고기의 낙원을 우리 도가 말살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잘못된 것 같아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공주 청벽 강변도로는 골재 반출을 위해 '94년 4월에 임시 개설한 도로로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여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원봉리 주민 216세대 650여명이 통행하고 있으며, 산림박물관 개관으로 연 13만명의 관람객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음

도에서는 이용객등의 편의를 위하여 금강횡단 교량 가설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교량공사가 완공된 후에 강변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자연경관 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질문3 :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방법 개선 방안

· 현재, 각종 세금고지서 등 읍·면·동에서 이장, 반장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 정작 납부해야 할 본인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 방법을 우편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할 계획은 ?

〔 답변 : 자치문화국장 차주영 〕

· 그동안 고액 고지서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를 하고, 주민세, 재산세 등 소액의 고지서는 통·이장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으나 앞으로 50만원이상의 납세고지서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등 1만원내의 소액고지서는 징세비용 절감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통·이장을 통해서 전달은 하되 부락담당 공무원들이 전달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해서 고지서 전달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임.

■ 질문4 : 추곡수매 규제 해소 방안

· '97년도부터 정부가 농협을 통하여 약정수매를 실시하고 있어 그 방법은 좋으나 수매시 불필요한 규제가 있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응하지 못하는 등 수매확보와 불편함 때문에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

〔 답변 : 농림수산국장 한영희 〕

· 올해 우리 도의 추곡수매는 지난 4월에 약정 체결한 8만9,949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26만1,000석을 수매하고 있으며, 예년 보다 7일 정도

앞당겨 수매를 실시한 결과 11월 30일 현재 계획량의 68.7%인 86만7,000석을 수매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수매가 진행되고 있음.

물벼 수매는 쌀 생산 유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와 저장시설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한편 중앙에 이 같은 실정을 건의해서 물벼 수매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5 : 자치경찰제 실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8년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의회와 단체장만 지방화돼 있고, 지방적 차원의 치안질서 유지 업무 부문들이 중앙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교통, 치안 등 경찰의 주요업무를 지방화 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만 이 문제는 국회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가 조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6 : 부교재 채택관련 비리예방 대책

· 인근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교재 채택에 대한 문제가 우리 충남 교육청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하며, 사전 차단하는 방법과 해결, 예방책은 ?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학교장 책임 하에 학습교재 구입알선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교재를 특정업체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조하여 왔고, 앞으로도 학습교재 채택시에는 학교 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습교재의 선정 및 채택에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또한 부교재와 관련된 교사의 비리가 없도록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음.

2. 이한식 의원(예산군, 자민련)

■ 질문1 :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의 구체적 추진 방안

· 충남 도정의 방침으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표방하였는데 어떠한 모습이 진정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인지, 타 시도와 차별되게 계획하고 계신 사업, 미래 충남의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은 지난 '95년 민선 1기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제시해 온 도정의 캐치프레이즈임. 먼저 인간 존중의 인본행정과 경영원리에 입각한 경영행정을 통해서 정신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풍요가 함께 어울어진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하되, 특히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며, 활기찬 농어촌과 함께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의 발전으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가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신운동과 함께 우리 충남의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추구하며, 충남 NEW-HOPE 21, 4대권 개발 경영 구상, 또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등 충청남도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단기 계획들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학교폭력과 청소년문제 대처 방안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학생폭력방지 등을 위한 예산배정을 어떻게 어떠한 과목으로 학교당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98학년도에는 학교 폭력과 비행 예방을 위하여 모든 고등학교에 목적 경비로 교당 80만원씩 총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교육비 내에서 교외생활 지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99학년도에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하에서 전년도 대비 30% 축소 편성 운영하도록 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목적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우선 학교 교육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중·고등학교 당 5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는 당해 년도 포괄 사업비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음

■ 질문3 : 해외사무소의 운영실적과 축소 또는 확대 방안

· 해외사무소의 설치 목적과 그 동안 해외사무소에서 추진해 온 실적을 밝혀 주고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축소 내지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이점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박한규 〕

· 도에서는 도정의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28일에 뉴욕사무소를, 금년 1월22일에 구마모토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 생산품의 해외판로개척 지원과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금융투자 동향 등 국제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과 외국 지방 정부와의 교류협력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앞으로 해외사무소 운영은 통상기능 수행에 더 큰 비중을 두어서 국제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미주, 일본지역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외사무소가 세계화 전진 기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임.

■ 질문4 : 사립 중·고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점

· 사립학교 재정지원이 우리 후세교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 자체는 하자가 없음.

그러나 그런 사립학교재단의 법인의 자구노력이나 대응에 점수를 주고 평가해서 그 평가에 대한 차등지급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자구노력을 촉구할 계획은 ?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사학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에서는 사학법인의 자립력 제고를 위하여 오는 12월 7일에 충청남도 교원연수원에서 사립학교 정원관리 조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공립학교에 준한 정년 초과자 보조금 지원 중단, 사학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계획 등에 관한 법인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학의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고 자율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3.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질문1 : 도의 부채현황과 상환대책 및 재정자립도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 방안

· 채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그 원리는 꼭 필요한 때 얻어서 경제활동을 탄력 있게 운영하여 그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앞으로 자치행정은 주민에게 더욱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 전망은 매우 어렵게 보여짐으로 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과 건전재정 운영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대책은 ?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방채 발행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기 확충이나 비상 재해복구 등 특별한 지역 현안사업 수요에 한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재특자금 등 정부 자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상환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장기저리의 지방공공 자금의 조달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경영수익 확대 등 자주재원 확충노력과 함께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실행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 실행 등 지속적으로 초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2 : 초등교육의 장학행정체계 개선 방안

· 초등교육의 장학행정 체계에 있어 장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행정 경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석하여 획기적으로 지역 교육청에 이관하고, 도에서는 지역간의 상호 연결과 감독의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고 배치하는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지적해 주신대로 장학행정의 중첩적 업무 집행으로 인력과 경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의 업무와 도교육청의 업무를 각각 분담하되 상호 보완적인 역할수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3 : 2001 전국체전 지원실태 및 체육대상 신설 방안

· 2001년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금년도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체육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체육회 예산은 금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앞으로 선수육성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관광국장 차주영 〕

·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이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서 초 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선수 육성 등을 위한 체육회 지원 예산은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음.

또한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문화상 6개 부문 중에 체육 부문이 있고, 또 도민의 날에 수여하는 모범 도민상에도 체육부분을 시상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종료 후에도 유공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춰 가면서 이를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4 : 초·중등학교에 인명구조·응급조치 교과편성 방안

· 충남이 전국에서 제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데 응급조치를 잘못하여 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을 잃는 일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인명구조, 응급조치 방법 등을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 교과목으로 넣어서 평소 응급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넣을 생각은 ?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는 사고학생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사고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관련 교과에 특설 단원을 만들어 119 연락방법, 가정연락 방법 등을 지도하고 학교 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응급조치 능력을 지도하고 있음.

중학교에서는 체육 교과 시간에 사고와 재난을 대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교련 교과와 단체 활동 시간에 비교적 상세하게 실습을 겸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교육은 생명보호를 위해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음.

4. 김문규 의원(천안시, 자민련)

■ 질문1 : 농산물 수출증대로 농촌경제의 활력화 방안

· '97, '98년 지난 2년간 도내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량과 수출금액을 밝혀 주시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도의 시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수출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박한규 〕

· 금년도 농림수산물 수출목표는 지난해보다 20%늘어난 2억4,000만불로 설정을 하고 인삼류, 과일류, 화훼류 등 수출전략품목을 선정 중점관리 육성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 꾸준한 판로를 개척해 왔음

앞으로 수출증대 및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수출품목과 수출유망업체를 중점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유통공사, 코트라등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예산사과단지, 아람 양돈단지 등 6개 단지를 육성하고 영세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내년 3월 동경에서 열리는 후덱스 제팬과 4월 LA판촉전에 참가하여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새로운 활력과 기틀을 마련하고 점증하는 전자상거래 추세에 맞춰서 내년까지 인터넷에 모든 수출업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질문2 : 농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 대책

· 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의 총체적인 재조정을 통해서만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며 우수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음. 따라서 도내 농수산물중 품질인증을 획득한 품목과 생산농가 및 연간생산량은 얼마이며, 품질인증 농가중 취소농가 및 품목과 사후조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의 품질인증 품목 중 3개 품목이 잔류농약 검출, 이물초과 등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바 있으며,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변화가 심한 품목, 전국적으로 명성이 없는 품목, 그리고 가격차별화가 미약한 품목 등은 인증품목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아갈 계획임.

■ 질문3 : 영세 결식아동 급식문제 종합대책

· 경제위기로 빈곤·결손·실직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급식비를 못 내거나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못하는 결식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음. 도내의 결식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결식아동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은 현재 초등학생 4,682명, 중학생 1,958명, 고등학생 744명등 총 7,384명임.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본 도 예산에서 초등학생 3,033명, 중학생 1,520명, 고등학생 474명등 총 5,027명에게 9억587만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이웃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학교 자체돕기나 독지가, 민간, 사회단체성금 등으로 초등학생 1,649명, 중학생 438명, 고등학생 270명 등 총 2,357명에게 3억3,068만원을 예산외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식지원 대상학생 선정에 대하여는 현재 담임교사가 결손, 빈곤, 실직자녀 등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학교장이 선정하고 있으나 이후는 자체 중식지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할 계획임.

■ 질문4 : 시범학교 운영의 확대 방안

·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교육이며, 학생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능률적이며 효과적인가의 문제가 교육의 중요한 사항임.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어떤 교육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 시범학교의 운영은 확대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할 용의는 ?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연구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장학사 및 연구사의 지도는 물론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이 일선 학교의 우수교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권장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 체제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교육부지정의 경우 '98학년도 40개교에서 '99학년도에는 30개교로 축소되었으며, 도 지정 연구학교도 77개교에서 57개교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학교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음.

5. 김중한 의원(예산군, 자민련)

■ 질문1 : 도청 이전 계획 및 그 동안 추진 내용

· 21세기를 구상하는 시점에서 도청 이전 계획은 설계하고 있는지 궁금함.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 도민이 고루 편리하고 충남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간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96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청이전에 따라서는 당시 비용으로 2조6,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인구 20만 정도의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난 극복에 전력을 다할 때이지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시·군간에 경쟁을 하거나, 또는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도청이전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000년까지 경제난 극복에 전력을 다하도록 성원을 해 주시고, 이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현재화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림.

■ 질문2 : 도 농산물 백화점 운영 성과와 향후 대책

·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서울지역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96년 6월21일에 개장한 충남도의 농산물 백화점이 330평 규모 도비 5억원 각 시·군에서 출연한 시·군비 15억원, 회원 농협에서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출자 개점하여 현재, 금산농협이 종합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2년간 농산물 백화점 운영 실적과 또 각 시·군과 회원 농협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였는데 시·군에서 얼마만큼의 홍보와 판매 효과가 있는지?

〔 답변 : 농림수산국장 한영희 〕

· 금년도 상반기 중에 그 동안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장 관리 인원 축소 등 경영구조 개선과 이벤트 행사 등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97년도 7,800만원 적자운영에서

· 금년도 상반기 중에 그 동안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장 관리 인원 축소 등 경영구조 개선과 이벤트 행사 등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97년도 7,800만원 적자운영에서

적자폭을 1,000만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금년도 말에는 흑자 운영이 예상됨.

앞으로, 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농협, 백화점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유치 홍보전략 등을 마련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정고객 등 판로확보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효과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 개선 대책

· 병해충 공동방제는 1962년부터 시작하여 병해충 예찰결과에 따라 마을별, 들녘별로 공동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방제시 농민들의 농약중독위험 초래와 함께 방제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공동방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36년동안 반복적인 사업을 펼쳐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한영희 〕

· 병해충 공동방제는 벼멸구와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급속도로 확산 긴급 방제가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초기에 병해충의 확산을 막고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올해 약 10만ha에 24억원을 지원하여 병해충방제총동원령을 발령하고 도내전역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 있음.

다만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부재 지주 등으로 인해서 일부에서 공동방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도 있으나 이러한 취약 지역은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 조직을 활용하여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음.

■ 질문4 :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 상황

·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은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업기술원장 노태홍 〕

·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부지는 21만2,000평이고 소요예산은 697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투자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125억원을 확보했고, 금년 말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납품받을 계획이며, 편입토지 소유자 64명으로부터 매각동의서를 전부 받아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중에 있음.

내년에는 토지보상의 완료와 동시에 토목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농업테크노파크가 선진 충남 농업의 메카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질문5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건설 계획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년전 발표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많은 도민들과 관련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과연 충청남도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건설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본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대전, 공주 예산, 당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94.3km에 국비 1,314억원과 민자 1조769억원 총 1조2,083억원을 투자하여 '96년도부터 2002년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고속도로로서 설계 및 보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건설공사는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음.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6년도부터 '97년도 말까지 전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한 후 '99년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전망입니다만 현재 IMF등 경제난으로 민자유치업체 선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수 차례 방문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6. 송민구 의원(비례대표, 자민련)

■ 질문1 : 대선공약사항 중 농어가부채 해소방안 이행촉구

· 농업은 누구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 논리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농업이라고 하시면서도 그 동안 농업정책은 부재했고, 실제로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아 왔음.

농가부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농가부채를 해결해 주시겠다, 의료보험을 완전 통합해서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 제2농업 투자를 계속하겠다, 또는 그 외에도 많은 공약이 있었으나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 공약이 몇 가지 되지를 않음.

지사께서는 대통령께 대선 공약 이행촉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도 농정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펼치실 작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에서는 IMF이후 어려운 농가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1만5,000여 농가에 1,064억원을 직접 저리융자하여 지원을 하였음.

대선공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농정 실무자들과 함께 심층 검토를 해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한 내용과 건의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음.

우리 농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내년에 우리가 개장하기로 되어 있는 중부농수축산물물류센터는 유통측면에 또한 우리 농촌상품의 규격화와 포장 개선, 중간 가공제품의 생산 등 이러한 측면에서 확실한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음. 또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뒷받침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도·농 학생간 실력 차이 극복 대책

· 요즘 농촌의 젊은이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자식들의 교육문제임.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과외에 대한 문제, 또는 체벌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 자료로 실제 학생들의 과외에 또는 학교폭력에, 체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조치들을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학력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당면과제이며, 특히 충남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하고도 고통스런 교육의 현안 문제임.

교육의 선결 과제를 인성 교육에 바탕을 둔 학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의 새 학력관의 이론을 정립하고, 계획적이며 전략적인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을 하였음.

먼저 농어촌지역과 도심권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권을 제외한 농어촌권역을 중심으로 육성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이 육성 고등학교를 당해 지역의 학력신장을 위한 센터로 삼아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학교의 학력신장 없이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수학능력 시험 체제로 전환시켜 1년에 4회 내지 5회에 걸쳐 학력 경향성 검사를 실시하였음.

앞으로 향후 더욱 정진하여 교육력이 열악하여 고향을 등지고 도심지역으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인사제도 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승진 부가점 부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유능한 교사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보제도를 활성화하고, 학교 단위의 교육력 평가를 위해서 우수 학교와 그리고 수평적 평가가 아닌 종적인 성장을 측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많은 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설문조사의 목적은 교육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좀더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수집하려는 근본취지를 갖고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함.

특히,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교육이나 학교 풍토에 대한 의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인정되며, 실제 학생 지도를 위한 대책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창출해 주는 근거로서 의미있는 교육성과를 거양할 수 있음.

第6節 第126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26회 임시회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보고와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99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9. 1. 27(수) ~ 2. 5(금),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1. 27(수) 11:00	본회의 (제1차)	1. 제12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1999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4. 1999년도충청남도교육청업무계획보고	
'99. 1. 28(목) 11:00	행자위 (제1차)	1. '99업무계획보고(정책기획정보실소관)	
11:00	교사위 (제1차)	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2. '99업무계획보고(보건복지여성환경국소관)	
11:00	농경위 (제1차)	1. '99업무계획보고(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소위 (제1차)	1. '99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소관)	
'99. 1. 29(금) 11:00	행자위 (제2차)	1. '99업무계획보고(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11:00	교사위 (제2차)	1. '99업무계획보고(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00	농경위 (제2차)	1. '99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소위 (제2차)	1. '99업무계획보고(종합건설사업소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1. 30(토) 11:00	운영위 (제 1 차)	1. 제12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업무계획보고(의회사무처소관)	
	행자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교사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농경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건소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99. 1. 31(일)		공 휴 일	
'99. 2. 1(월) 11:00	행자위 (제 3 차)	1. '99업무계획보고(자치문화관광국소관)	
11:00	교사위 (제 3 차)	1. '99업무계획보고(청양대학소관)	
11:00	농경위 (제 3 차)	1. '99업무계획보고(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소위 (제 3 차)	1. '99업무계획보고(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99. 2. 2(화) 11:00	행자위 (제 4 차)	1. '99업무계획보고(계룡출장소소관)	
11:00	교사위 (제 4 차)	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99운영계획보고 2.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99업무계획보고(청양대학소관)	
11:00	농경위 (제 4 차)	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99운영계획보고 2.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건소위 (제 4 차)	1. '99업무계획보고(충청남도운수종사연수원소관)	
'99. 2. 3(수) 11:00	행자위 (제 5 차)	1. '99업무계획보고(공무원교육원, 총무과소관)	
	교사위	1. 현지확인 - 남양유업(공주), 공주농업고등학교, 쾌속후송선(보령)	
11:00	농경위 (제 5 차)	1. 충청남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99업무계획보고 2. 농업테크노파크'99업무계획보고	
11:00	건소위 (제 5 차)	1. '99업무계획보고(소방안전본부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2. 4(목) 11:00	행 자 위 (제 6 차)	1. '99업무계획보고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체육회소관) 2.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사 위	1. 현지확인(보령정심원)	
11:00	농 경 위 (제 6 차)	1. 꽃박람회(기획,시설팀)'99업무계획보고	
11:00	건 소 위 (제 6 차)	1. '99업무계획보고(충청남도소방학교소관)	
'99. 2. 5(금)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 징수조례안 4.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계	9		
조 례 안	5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4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2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99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4. '9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 보고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9. 1. 27, 11:00) '99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와 오재욱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9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다.

○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9. 2. 5, 11:00)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2건과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3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53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도 지 사 (98.11.20)	교사위	○충청남도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을 신설함에 따라 재산출연 및 운영지원 근거마련	99.2.5	99.2.5	원안
70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 1.20)	행자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 인하 조정 -취득세율: 1,000분의15→ 1,000분의100 -등록세율: 1,000분의30→ 1,000분의 2	99.2.5	99.2.5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71	충청남도유통단지 심의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9.1.20)	농경위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시행으로 유사기능위원 회 통합 운영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 위원회조례→충청남도 유통단지 심의및유통산 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99.2.5	99.2.5	원안
72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수영장개방및 사용료징수조례안	교육감 (99.1.21)	교사위	○교육활동 및 수영특기자 육성을 위하여 건립된 학생 수영장을 학생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학생, 일반인 에게 일부 개방 -휴장일에 관한 규정, 이 용·사용료 징수 및 면 제규정	99.2.5	99.2.5	원안
73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교육감 (99.1.21)	교사위	○2000년도 3월 1일자 통·폐합 계획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희망으로 '99. 3. 1자로 인근학교 통·폐합 -유치원폐지 : 화성초등 학교 병설유치원 -본교폐지 : 화성초등학교	99.2.5	99.2.5	원안

第7節 第127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127회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현장 의정활동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경섭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99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9. 3. 15(월) ~ 3. 26(금), 12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3. 15(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2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9. 3. 16(화) 11:00	행 자 위 (제 1 차)	1. 당면사항보고(정책기획정보실소관)	
11:00	교 사 위 (제 1 차)	1. 당면사항보고(보건복지여성환경국소관) 2.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1:00	농 경 위 (제 1 차)	1. '99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 2.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건 소 위 (제 1 차)	1. 당면사항보고(소방안전본부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3. 17(수) 11:00	행 자 위	1. 현장방문 - 금산보석사 문화재관리실태	
	교 사 위 (제 2 차)	1. 당면사항보고(교육청소관) 2.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농 경 위	1. 현장방문 - 충남신용보증조합, 충남테크노파크, 아산인주지방산업단지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진산~남이간지방도확·포장사업현장(금산)	
'99. 3. 18(목) 11:00	행 자 위	1. 현장방문 - 금강하구둑관광단지개발현장 - 대천해수욕장관광지개발현장	
	교 사 위 (제 3 차)	1.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업무보고청취 (교육과학연수원, 충무교육원, 임해수련원)	
	농 경 위	1. 현장방문 - 농업테크노파크, 예산정미소 - 국화시험장, 원종장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음봉~천안간지방도확·포장사업현장(천안) - 아산~선장우회도로개설공사현장(아산)	
'99. 3. 19(금) 11:00	행 자 위	1. 현장방문 - 무량사문화재관리실태 - 정림사지문화재관리실태	
	교 사 위 (제 4 차)	1.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업무보고청취 (교원연수원, 학생종합야영장, 학생회관) 2. 당면사항보고(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소관)	
	농 경 위	1. 현장방문 - 종축장, 부여토마토시험장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산정~화천간지방도확·포장사업현장(예산)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고
'99. 3. 20(토)		의 정 자 료 수 집	
'99. 3. 21(일)		공 휴 일	
'99. 3. 22(월) 11:00	행 자 위 (제 2 차)	1.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사 위	1. 현장방문 - 청양구봉광산지역시찰 - 부여은산초등학교현대화시범학교시찰	
	농 경 위	1. 현장방문 - 논산딸기시험장, 충남직업전문학교 - 부여장하경지정리지구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99. 3. 23(화) 11:00	행 자 위 (제 3 차)	1.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교 사 위	1. 현장방문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농 경 위	1. 현장방문 - 서천서면비인항, 한산모시타운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장기~의당간지방도확·포장사업현장(공주) - 왕진교가설공사현장(부여)	
'99. 3. 24(수) 10:3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9. 3. 25(목) 10:00	운 영 위 (제 1 차)	1. 제12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30	행 자 위 (제 4 차)	1.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본 회 의 (제 3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고
'99. 3. 26(금) 11:00	본 회 의 (제 4 차)	1.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4		
조례안	9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5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2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1일차)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2일차)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9. 3. 15, 11:00) '99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9. 3. 24, 10:30)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용설(홍성), 최경섭(태안), 한창숙(비례대표) 의원 등 3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1999. 3. 25, 11:00)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틀째를 맞아 강창구(부여), 심정수(금산), 신호균(홍성) 의원 등 3인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1999. 3. 26, 11:00)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건과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7건,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74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99.2.27)	교사위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98.9.19)에 따라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 조례명 개정, 직권 면직 기간의 변경	3. 26	3. 26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형사사건 기소자 휴직 명할 때 강제규정의 완화 -병역의무를 병역복무 기간으로	3. 26	3. 26	원안
75	충청남도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9.3.10)	행자위	○불용품 결정시 취득가격 1천만원이상 및 1천만원미만 이하로 조회의무화를 금액 상향조정, 소액 불용품은 조회 없이 불용 처분 -시·군 조회 15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생략 -소모품 기준 3만원→10만원으로	3. 26	3. 26	수정
76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9.3.10)	행자위	○정년단축 및 연장제도의 폐지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연장 신청 삭제 -당연퇴직일이 '99. 6. 30 일자와 '99.12.31 해당자는 '99. 6.30 에 2000. 6.30 해당자는 '99. 6.30 에 당연 퇴직됨	3. 26	3. 26	원안
77	충청남도사무위임 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 (99.3.10)	행자위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처리 조직체계를 개정된 행정조직에 부합토록 조정 -법체계에 따라 조정, 현지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는 새로이 위임 -4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환원(계룡출장소장)	3. 26	3. 26	수정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78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3.10)	행자위	○농업기술원종축장의 기능을 전환, 대전·충북과 공동 운영하게된 소방학교의 명칭을 3개시도 합의 내용으로 변경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중소기업통상지원 중심으로 개편 명칭과 분장사무 변경	3. 26	3. 26	원안
79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 지 사 (99.3.10)	교사위	○기금의 성격에 맞게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설치하여 운용토록 개정 -장학기금은 도금고, 예금종류는 선택 -기금운용관리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3. 26	3. 26	원안
80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99.3.10)	교사위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의 건축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규내에서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규제 조항들은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폐지	3. 26	3. 26	원안
81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3.10)	농경위	○수렵기간, 조수포획승인 및 수렵조수의 범위와 포획조수의 신고, 포획승인 취소 및 사용료 등의 규정은 법령과 경합 되거나,	3. 26	3. 26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조례로서 관대하게 권리가 제한되는 사항 및 새로운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사항은 행정정비 차원에서 폐지 또는 일부 삭제·완화			
82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99.3.10)	교사위	○교육여건 개선 및 구조조정에 따라 부족되는 지방교육재정에 충당하고 입찰소요경비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수수료를 징수 -등록시 1건당 1만원 징수	3. 26	3. 26	원안

Ⅲ. 道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전용설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도민의 행정서비스 만족 향상 대책

· 민선 1기 출범과 동시에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도정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대민 봉사행정의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며 도정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 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이 지난달 조사 발표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100으로 할 때, 우리 200만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39.9%로 전국 시·도 가운데 하위라는 지적을 받은 도민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200만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과연 몇 %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관광국장 차주영 〕

· 행정자치부에서 같은 시기에 이보다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내용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행정내부 사항보다는 민원인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 조사한 결과 우리 도가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억원을 교부 받은 바가 있음.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항목 등 조사기법에 따라서 상이하고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금년 1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만족도 개선기법을 확정을 하고 34개 항목의 조사문항을 확정하였고 금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서 도정신문 명예기자, 도정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해 나가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가급적 이론교육을 탈피, 실습위주의 체질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고 있음

■ 질문2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우리 도의 경제전망이 그 동안 집행부의 발표와는 달리 외부기관 조사결과 발표된 지표에 의하면 결코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외환 위기 후 고실업, 신용경색 심화, 재정사정 악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선 실업대책을 위해 4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연인원 112만명을 대상으로 385억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작년에 3,000억보다 300억원이 늘어난 3,30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종합 상사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년 한해 동안 90억달러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1월 15일 문을 연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첨단벤처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쌀 생산 종합대책을 3년 연속 풍년농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농어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사과, 복숭아, 방울토마토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표준 규격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도지사 품질 추천 농산물을 중심으로 「리콜제」도 도입할 계획임.

■ 질문3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부실 대책

· 우리 도는 지난 '92년부터 7년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총 5조 3,890억원을 투자했음. 그런데 총체적 부실과 가동률이 겨우 30%에 불과해 잘 살게 됐다는 농어촌이 모두 빚더미에 더 못살게 되었다는 것이 도민의 한결같은 여론임.

제2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준비 차원에서도 부실시공 및 관리부실 등 전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한영희 〕

· 그동안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의 성과 이면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사실임. 이러한 실정 등을 감안, 활용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부실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시설중심의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보 및 유통 판매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 시행하는 한편, 사업초기부터 세심한 자금집행 안내와 아울러 농업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기관과도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질문4 : 계룡특정시 설치 추진 및 향후 대책

· 계룡출장소는 지난 '90년 2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한 한시적으로 설치된 도 직할 출장소입니다. 계룡출장소는 당초 불가능한 인구 유입계획, 택지조성 등 무리한 사업추진과 사업비의 국비 유치 실패 등으로 그 동안 도비 1,200억원과 기채 2,100억원을 들여 택지를 조성했습니다만, 분양이 저조해서 현재 약 1,000억원의 빚을 져 매년 80억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빚으로 파산 될 수도 있다고 봄. 앞으로의 전망과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계룡출장소장 유상곤 〕

· 정부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계룡출장소 존치문제가 대두된 바 있음. 관련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자료 요구나 우리가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응토록 하겠음.

또한, 미분양된 택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가격을 평균 13% 인하하고 무이자 할부 분양, 약정 기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이자 보조, 분양 알선자의 보상금 지급, 그리고 도시 설계를 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질문5 : 도의 각종 기금 통합관리 방안

·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6개에 총 2,083억원으로 되어 있음. 충청은행 퇴출로 회수 불가능한 기금 내역과 회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만약 기금손실이 생길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 같은 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람.

〔 답변 : 정책기획정보실장 이명수 〕

· 작년말 현재 우리 도의 기금조성 규모는 모두 16개 기금에 2,084억원임.

그 가운데 구 충청은행에 예치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166억원으로 주로 유리한 기금증식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예치가 되었음.

그 동안 구 충청은행의 문제가 발행하면서 즉시 재산조회는 물론 도의 고문변호사와 부동산 가압류대책등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등 정리 절차가 남아 있음.

· 기금통합 방안으로 운영 중인 16개 기금에 대해서 이미 통합관리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도 현재 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각각 개별 법령에 근거한 기금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임.

앞으로 기금별 사업운영계획과 자금관리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6 : 현 근무지가 불투명한 고위공직자 대책

· 금년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연봉제로 연봉 대상자는 11명이 되고 성과급 소요예산은 19억6,89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명단 중 2명의 고급 공무원이 근무 부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분들의 현 근무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성과급제 실시로 절감예산액과 앞으로 성과급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정책기획정보실장 이명수 〕

· 연봉제 시행 목적은 공직 사회에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개인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성과급적 보수체계임.

현재 우리 도의 연봉제 대상자 중에서 근무부서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두 명의 공무원은 '97년 5월부터 금년 5월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에서 주로 경영행정을 연구할 목적으로 파견중인 민종기 부이사관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파견되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해외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구기찬 부이사관임. 성과급제는 금년도 처음 도입한 것으로 그 동안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연말에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평가를 해서 지급하려는 제도이며, 실지 절감액은 연말에 가서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성과급제 제도의 확대 여부는 금년도 처음 실시 성과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2. 최경섭 의원(태안군, 자민련)

■ 질문1 : 백제권 종합개발사업 변경계획과 전망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계획보다 사업구역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된 지역과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까지 민자가 8,940억 원으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내용과 유치 전망, 그리고 올해를 변경 계획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21개 사업에 총 1,094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민자 572억원의 유치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주요사업의 조정내용으로는 백제 큰길 구간을 7.2㎞ 연장해서 부여읍 저석리를 부소산성까지 연장을 하고 백제역사 재현단지내 7개의 기능촌 및 박물관의 규모 조정과 부여 전통문화학교 진입로 등의 사업이 추가되었음.

사업비는 현실에 맞도록 당초 1조4,000억원 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2조 1,000억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재원의 민자 비율을 63%에서 41%로 낮추고 국비 비율은 17% 에서 32%로 높였으며, 그 가운데 민자 유치로 계획된 사업은 백제 역사 재현단지·공주문화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 8,940억원이 되겠음.

또한,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572억원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호남고속도로 계룡 IC 건설에 520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을 민자로 분류한 것이며, 곰나루관광휴양시설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52억원 등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음. 앞으로 민자유치여건 조성을 위해 개발촉진지구지정,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도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 우리 도에서는 현 종합건설사업소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단과 계룡출장소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경영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일부 거두었다고 알고 있음. 그러나 도 공영은 300억원, 계룡공영은 1,000억원의 채무와 이자로 연리 5%내지 11.5%를 부담하는데 채무상환 방법과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고금리채무를 저리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나 도의 미온적인 대처로 막대한 도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정책기획정보실장 이명수 〕

· 지난 2월말 현재 우리 도의 공영개발 사업에 따른 총 채무액은 총 1,094억원으로 이중에 도공영개발 사업으로 인한 것이 284억원, 그리고 계룡공영개발사업에 따른 것이 810억원임.

채무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상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주로 채무상환 방법으로 우선 미분양된 토지를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고,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 자금으로 차입선을 전환해서 금리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대물변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특별분양 대책을 더욱 보완해서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채무상환과 관련해서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여러가지 유리한 재원상환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음.

■ 질문3 : 생활보호대상자 TV시청료 면제 방안

·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TV 소유자는 KBS에 등록하고 소정의 시청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고지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보호대상자, 애국지사, 상이군경 등은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내 생활보호대상자 3만 5,000여 가구중 약 50%인 1만7,000여 가구가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는 매월 4,200만원 연간 5억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안내도 되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임.

도에서 일괄 처리토록 하여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람.

〔 답변 : 정책기획정보실장 이명수 〕

·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텔레비젼 수신료를 면제해 주도록 제도화되어있어 앞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장과 사회복지사를 통한 지도와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

장애인에 대한 텔레비젼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음.

■ 질문4 : 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지역여건에 따라 초등학교가 많이 폐교되는 지역은 적의 적절한 곳에 학교를 설립, 폐교에 따른 후유증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2003년까지 200여교가 폐교된다면 그에 앞서 잔존 학생들의 전학을 대비한 기존학교에서의 대책 및 학교신설 계획을 앞당겨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우리 교육청에서는 '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현재까지 129개교를 폐교하고, 114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음.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0개교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설립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설립·추진 중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총 6개 학교임. 우리 도에서는 읍 소재지 중심부에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1개교가 있는 곳은 태안읍 지역으로 현재 51학급 규모의 태안초등학교가 있으며, 2002년도에 태안읍 지역에 1개교를 신설하고자 금년 2월에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음.

■ 질문5 : 교육기자재 현대화 방안

· 현대식 교육기자재를 투입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자 '97년부터 2002년까지 교단선진화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3,182개 학급에 첨단 교육공학 매체인 586컴퓨터 프로젝션 TV, 엔코더 등을 보급하였음. 앞으로 2002년까지 전 교실에 첨단 교육공학 매체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나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로 어려움이 많으나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3. 한창숙 의원(비례대표, 자민련)

■ 질문1 : 농어촌 여성 출산비용 지원 대책

· 여성 농·어업인은 당당한 생산의 주체이며,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땅과 바다의 어머니임.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어업을 자영업으로 간주하여 농어촌 여성의 출산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우리 도 여성 농·어업인의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기일 내에 농어촌 여성 출산 휴식 보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 동안 농어촌 여성의 출산에 따른 휴식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어촌여성출산휴식보상조례안을 마련하고, '97년 4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관련 중앙 부처와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으며, 지방 사무가 아니라는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열악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서 농어촌여성 출산휴식보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임.

■ 질문2 : 중퇴청소년 관리대책 및 대안학교 설립 · 운영

· 교육감께서는 우리 충남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정황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두 번째 최근 3년간 중퇴 청소년의 현황과 그들의 비행관련 추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도내 중퇴 청소년의 관리, 또는 보호를 위한 현행 시책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 ·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또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우리 도의 3년간 중퇴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 2,009명 '97년도에 2,873명, '98년도에는 1,572명이 중도 탈락하였으며, 이들 탈락학생 중 '97년 489명, '98년도에 380명이 학교에 복귀하였으나, 이 가운데 '97년도에 198명, '98년도에 102명이 다시 자퇴·퇴학·가출 등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을 보여 재탈락을 하였음.

이들 중퇴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역별·학교별로 「중퇴학생 대책협의회」의 철저한 운영과 복교 희망자에 대한 사전 지도는 물론 학교장 특별 지도와 후견인 결연, 1교사 1학생 결연제도 운영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복교후 부적응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와 상담후 그 결과에 따라 전학, 직업 알선, 직업훈련기관 입소 등으로의 진로지도를 하고 있음.

■ 질문3 :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소년체전 사전준비 및 경기력 향상 대책

· 현재 일반부는 우수선수로 구성이 되었고, 대학팀은 종목 구조조정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등부의 주역인 현 중학교 2, 3학년들의 종목별 경기력 현황을 파악,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소년체전에서 상위입상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우리 도에서 2001년의 전국체전과 이듬해 소년체전에 대비하여 우수 선수의 저변확대로 학교체육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현행 연계교육 체제를 재정리 조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성 종목의 연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특기학생의 관리와 진로확보를 위한 우수선수 육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

우리 도의 초·중·고등학교 선수육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초 현재 초등학교 18개 종목에 1,058개팀 6,895명을 포함하여 총 32개 종목에 1,683개팀에서 1만533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음.

4. 강창구 의원(부여군, 자민련)

■ 질문1 : 농산물의 적정 생산과 가격안정 대책

· 우리 농업의 특성상 재배 작목 및 재배면적의 자율적 조정통제가 어려워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일부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반복되어 생산된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서 일부 판매 처리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음.

농산물의 적정 생산과 가격안정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농산물은 전년도 가격동향에 따라서 재배면적의 증감폭이 크고 기상 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심해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의 적정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6개 주요품목은 재배의향등 관측정보를 농가에 알려 주어서 스스로 면적조절을 유도하고 있음.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시 보상하는 제도 도입은 현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적정재배가 되도록 유도하고 품목별·주산단지별로 계약재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가격조절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2 :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

· 친환경 농업이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술적 지원이 미흡하고 환경농업의 실천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일반 농업인들이 참여를 할 수 없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추진을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시험 연구하며, 각종 농법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해 나간다면 환경농업을 보급 확산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의 제도적 기틀마련과 육성대책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한영희 〕

· 우리 도에서는 토양, 수질오염 등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 환경농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제도는 WTO의 제한을 받지 않는 농촌지원사업인 만큼 사업효과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3 : 유아방 운영의 예산지원 확대 방안

· 각 시·군마다 대략 1개소씩 유아방에 약 2억여원의 투자를 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학교업무에 전념하라는데 뜻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음. 유아수가 대부분 15명 내외로 월 10만원 정도의 교육비 부담이 많아 입원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보조교사 1명과 조리보조원 1명을 고용하여야 운영되는데, 이들의 인건비로 최소한도 월 100만원 이상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보조교사 1명과 조리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하여 목적에 맞는 유아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보조교사와 조리사의 필요성은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구 축소와 구조 조정 등으로 정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운영비의 확대 지원은 물론, 유아방 운영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확충 지원하는 등, 유아방운영의 여건개선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에 가일층 노력을 하고자 함.

■ 질문4 : 학교 통·폐합시 버스 구입의 불합리성 개선

· 최근 학생 수의 부족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버스 구입으로 한 학교당 2~3대가 있을 수 있게 됨. 시간제 또는 계절제로 순환코스를 정하여 운영하면 경비절약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등·하교시 학생들의 집합장소를 정해서 운영한다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통합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하숙비, 통학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시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통학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통학버스를 지원할 경우는 기존버스의 순환코스를 조정 변경하여 인근학교와 연계 운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통학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음.

5. 심정수 의원(금산군, 국민회의)

■ 질문1 : 도금고 운영방식의 개선 방안

· 현행 자치법상 도의 세입·세출을 제외한 현금은 그 종류별로 구분해서 반드시 금고에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단체장으로 하여금 금고를 지정토록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명문화되어 있으면서 단체장의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음.

금고 지정의 투명성 여부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나 도금고가 성격상 전적으로 공개경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몇 가지 제한조건을 달면 현행법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결국 민선시대의 금고지정은 단체장, 은행장 등 특정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민과 은행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 전략이 바탕이 되어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지사님의 견해는?

〔 답변 : 정책기획정보실장 이명수 〕

· 도금고 약정은 다른 입찰 대상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오랫동안 중앙에서도 금고 약정 특성을 관례처럼 유지해 온 점이 있는 데다 도에서도 그 동안 나름대로 지역 경제와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고지정을 해 온 것이 사실임.

앞으로 정부차원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고 안정, 정착단계가 된다면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현행 제도와 공개경쟁 원리방식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처리하는 방안을 선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음.

■ 질문2 : 동부댐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대책

· 1972년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에서는 2010년대 충청남도 물부족 현상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명천, 수통, 용화 이렇게 금산군 관내 3개 지역을 3개안으로 만들어서 일명 동부댐 또는 금산댐이라 하여 타당성 조사를 1차 마친 줄 알고 있음.

최근에 와서는 2006년경으로 건설시기를 앞당기겠다면서 3개 후보지중 제3안의 용화지역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관련 주민들은 우왕좌왕하고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져 감은 물론 대규모 집회가 늘어나고 있음.

이렇게 벼랑 끝에 서있는 금산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동부댐은 그 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며 또 우리 도에 공식으로 통보된 사실도 없음.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의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현재로서는 댐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데에서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가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질문3 : 현충사 · 칠백의총 관리권 이양에 따른 대처 방안

· 아산의 현충사와 금산의 칠백의총 관리권 이양에 관해서는, 현충사는 국가사적 제156호이며, 금산 칠백의총은 105호로 지정돼 정부 직속으로 직접 관리해 오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권한 이양 취지에서 문화재 관리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내용임.

지금 현실도, 관리비 또는 운영비가 충분치 못해서 아우성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에서는 호국충절의 상징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대의적 명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현행대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으며, 지난 2월초 제가 직접 기획예산위원회를 방문해서 관리비용이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국민 정신적 측면을 고려해서 지방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음.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우리 도의 의견과 같이 국가관리가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서 당초의 지방이양계획을 수정, 종전과 같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문4 : 인삼제품 특별소비세 면세 대책

· 1995년 인삼사업법에서 산업법으로 1996년 홍삼 전매제에서 자율화로 되어 일반인도 자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단순가공 농산물임에도 전매품으로 분류해서 특별소비세를 아직도 부과하고 있음은 부당함.

우리 충남 금산의 염원이며, 30만 전국 경작자들의 숙원이었던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하는 이때, 인삼농민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종전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음.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한영희 〕

· 인삼 제품의 특소세 부과는 인삼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어 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98년 12월과 '99년 1월에 농림부와 재정경제부에 인삼특소세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99년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관련법규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정책적으로 특소세 인하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음.

앞으로 국회는 물론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5 : 농촌학교 학생 감소 및 학생 생활지도 대책

· 지금 충남의 영세한 시·군에서는 날로 학생 수가 끊임없이 감소되고 있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금년부터 중학교를 졸업해도 대도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고, 학사관리가 소홀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임.

더구나 교사들은 대부분 대전으로 일찍 퇴근하시니 교내 외에서는 2차 지도 내지 선도의 눈이 사라져 버려 교육 정상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교문만 나서면 유해시설이 널려 있어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쉽게 탈선하기 쉬운 현실임.

진정한 학사행정은 주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의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확실한 교육자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우리 도에서는 '89년 대전과의 분리로 인하여 나타난 열세한 교육환경속에서 실질적인 교육력 신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전국 최하위였던 우리 도의 수학능력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도 하였음.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 대도시로 학생이 전출하는 것은 농어촌학교의 열세한 교육시설과 대도시 선호 성향이 상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정든 고향을 버리고 대도시로 전출하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님.

앞으로 교육 시설의 현대화, 교원들의 의식 전환과 새로운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 등을 밀도 있게 추진하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의 대도시 지향 의식을 해소함으로써 타 시·도로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6. 신호균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안면도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보존 대책

· 안면도가 국제관광지로 개발되는 등 안면도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현재도 안면도 내에서는 규사채취 행위가 성행되고 있어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의 취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중론임.

안면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사채취 규모와 규사채취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와 규사채취 행위를 취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잔존광물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서는 안면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더 이상의 채취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상 기한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 허가취소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미 한국유리측이 자발적으로 2개 광구를 감구하였음.

앞으로 규사채취 허가와 관련 인·허가 시에는 환경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금강 골재채취에 따른 제반 대책

· 골재사업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골재채취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강골재채취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건의함. 도와 해당 시·군이 조합을 구성해서 여기에 인력, 장비를 재배치하여 상류로부터의 골재 유입량 및 하상변동 조사 등을 토대로 골재 반출 계획을 지구별로 산출하는 등 무리한 채취로 인한 금강 훼손을 방지하고 금강보호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도에서는 금강하수관리 마련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금강 하상 변동 및 종합적인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중 용역결과가 완료 되는대로 골재의 채취에 따른 금강의 훼손방지대책 등을 강구해서 「2000년 금강종합개발 및 골재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금강 골재 운영「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며, 골재부존량의 한정성 등을 감안할 때 조합을 설립할 경우 앞으로의 기구나 장비, 인력운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질문3 : 광천읍 젓갈시장 활성화 방안

· 광청읍은 광천토굴 새우젓 시장이 꾸준히 유지되어 전국 새우젓 유통량의 30%인 1,000톤, 판매액으로 약 200여억원 어치가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등 새우젓을 중심으로 한 젓갈류 거래가 최근 들어 살아나고 있으며, 새우젓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20여개소의 토굴이 있어 광천토굴 새우젓의 명성을 유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지역 주민들은 충청남도에서 제반여건이 좋은 광천읍을 전국 제1의 젓갈시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바 광천읍 젓갈 시장 육성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박한규 〕

· 그 동안 특화시장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8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47억원을 투자해서 1,600여평의 상가를 조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11월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현재 광천읍 신진리 311-1번지 등 10필지 3,500여평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질문4 : 폐교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대책

· '9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교육감께서는 '99년 3월 1일자로 32개교를 폐교하고, 2개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본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중·고교는 폐교 대상학교가 없는 것인지? 또한 폐교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하지 않고 미활용하는 폐교에 대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학교 폐교 및 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1일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개교가 추가된 총33개교를 폐교하였고, 초등학교 2개교를 천안지역에 설립하여 '99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며 중학교 폐교는 태안지역에 소재한 원이중학교 이원분교를 2002년 폐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고등학교는 폐교 계획이 없음.

우리 교육청의 폐교 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교 재산은 교육 목적으로 우선 자체 활용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유상 임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전망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매각 및 임대 추진중인 폐교를 제외한 미활용 폐교는 8개교로서 지역여건상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과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매각·임대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미활용 폐교재산은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화재, 청소년 비행장소로의 이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소 폐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조언을 참고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폐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第8節 第128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28회 임시회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99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9. 4. 30(금) ~ 5. 10(금), 11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4. 30(금)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박응환의원청가허가의건	
'99. 5. 1(토)		의 정 자 료 수 집	
'99. 5. 2(일)		공 휴 일	
'99. 5. 3(월) 11:00	행 자 위 (제 1 차)	1. 당면사항보고(계룡출장소소관)	
11:00	교 사 위 (제 1 차)	1.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제 1 차)	1.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건 소 위 (제 1 차)	1. 당면사항보고(건설교통국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고
'99. 5. 4(화) 10:00	운 영 위 (제 1 차)	1. 제1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00	행 자 위 (제 2 차)	1. 당면사항보고(자치문화관광국소관) 2.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제 2 차)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 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 등에관한조례안	
11:00	농 경 위 (제 2 차)	1. 백제방설치운영계획안(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2 차)	1.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99. 5. 5(수)		공 휴 일	
'99. 5. 6(목) 11:00	행 자 위 (제 3 차)	1. 정보화추진사항보고(정책기획정보실소관)	
	교 사 위	1. 현지확인 - 온양여자종합고등학교, 충무교육원, 삼성전자아산공장	
	농 경 위	1. 현지확인 - 태안백합시험장, 휴양림사무소	
11:00	건 소 위 (제 3 차)	1.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작성의건	
'99. 5. 7(금)	행 자 위	1. 현지확인 - 웅비탑건립현장, 국립공주박물관신축이전부지	
	교 사 위	1. 현지확인 - 가축위생연구부이전신축부지(홍성) - 홍성유일원(정신요양시설)	
	농 경 위	1. 현지확인 - 도서·연안여객선접안시설공사현장(태안)	
	건 소 위	1. 현지확인 - 부여골재채취사업현장, 청양골재채취사업현장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5. 8(토)		의 정 자 료 수 집	
'99. 5. 9(일)		공 휴 일	
'99. 5. 10(월)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안 10.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1. 백제방설치운영계획안 12.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6		
조례안	1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1	1. 「백제방」 설치운영계획안	
규칙안	1	1.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기 타	3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2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박응환의원 청가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9. 4. 30, 11:00) '99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박응환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였다.

○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9. 5. 10, 11:00) 충청남도의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4건과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7건, 백제방설치운영계획안,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8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4.20)	행자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 수출용 중고자동차등 취득자, 농공단지대체 입주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도세감면 - 1 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특례 규정 폐지 - 외국인투자지원 : 취득재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5. 10	5. 12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84	충청남도선도기업 및유망중소기업육 성등에관한조례안	도 지 사 (99.4.20)	농경위	○도내 중소기업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으로 구분 선정하고, - 효율적인 지원·육성·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10	5. 12	수정
85	충청남도신용보증 조합설립및운영의 지원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4.20)	농경위	○도내 중소기업중 제조업으로 제한된 신용보증대상을 건설업 및 도·소매업등 전업종으로 확대, 산업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10	5. 12	원안
86	충청남도백제문화 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4.20)	건소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고 기능촌 및 민속박물관 건립 등 세부사항 반영 - 위원회의 위원위촉대상자 위촉조정(당연직과 위촉직) - 위원회 위원도 20인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5. 10	5. 12	원안
87	충청남도도로보수용 장비운영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4.20)	건소위	○기본 사용료가 낮게 산정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 - 교량점검차(UB30, 0.25톤) 사용료 조정(63,550원→ 101,906원)	5. 10	5. 12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89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교 육 감 (99.4.22)	교사위	○법률에서 위임된 협의회 의구성,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 -설립기관 단위는 4급이상으로 하되 기관장 5급(상당)이하 또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기관장 4급(상당)이상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 설립	5. 10	5. 12	원안
90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99.4.22)	교사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 또는 실비징수와 일반적 운영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 -기관별 사용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10	5. 12	원안
91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99.4.22)	교사위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학교종류(기술학교)가 폐지되는 등 법규개정에 따라 개정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의 위임사무중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교육장, 학교장,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권한 위임을 확대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	5. 10	5. 12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9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99.4.22)	교사위	○초·중등교육법의 공포 시행으로 학교종류(기술학교)가 폐지되고 명칭이 변경되어 내용에 맞게 개정 -국민학교→초등학교, 기술학교는 삭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정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물품, 생산물의 불용 결정과 처분신설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물품의 불용결정(200만원 이하) 및 생산율의 매각 또는 처분 신설	5. 10	5. 12	원안
9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99.4.22)	교사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공유재산관리 사무의 위임,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위한 공유 재산의 대부·매각 -용어수정(과세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 일반지역·군지역→시의 동지역, 시·군의 읍·면 지역	5. 10	5. 12	원안
94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99. 5.4)	본회의	○지방 의회에 참여한 전직 의원들의 귀중한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동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 육성	5. 10	5. 12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88

「백제방」 설치 운영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1999. 4. 2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회부(의결)일	1999. 4.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99. 5. 10)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9. 5. 12.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도내 중소기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시장조사, 판로개척등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도의 대중국 교류 활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전담할 백제방(충청남도 상해 상품 전시관)을 중국 상해에 설치 운영코자

○ 충청남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함.

□ 주요골자

가. 설치목적

○ 중국은 무한한 자원과 인력,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서 향후 통상교류 확대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대상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외국산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중국의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 부재 및 홍보부족으로 중국 시장개척 활동에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

나. 추진경위

○ '95. 8 백제방 설치 필요성 대두
○ '95~'96 백제방 설치 검토
○ '97. 12 백제방 설치요원 중국 파견(9개월)
○ '99. 1 백제방 참가희망기업체 파악(17업체)
○ '99. 2 백제방 설치 후보지 사전답사(3명)
○ '99. 3 백제방 참가 희망기업체 회의 개최
○ '99. 4 백제방 설치 기본계획 확정

□ 설치 및 운영계획

가. 설치개요

○ 위 치 : 중국 상해
○ 명 칭 : 대내(백제방), 대외(충청남도 상해 상품전시관)
○ 설립규모 : 총 40평
○ 소요예산 : 총 182백만원(참여기업 54, 도 128백만원 부담)
○ 주요기능
-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로개척
-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 중국시장 정보수집
- 금산 인삼의 중국진출 기반조성 및 충남관광 홍보
- 국제교류 및 협력

나. 설치지역 선정배경

○ 위 치 : 중국 상해시 포동신구 죽원상업무역구
○ 장 소 : 포스 프라쟈 (POS Plaza)
- 소유자 : 한국 포스코 개발(주)
- 규 모 : 본관 34층, 상가 4층
※ 우리 도 상품 전시관 : 상가 2층

○ 배　　경

- 상해지역은 아시아의 경제·무역의 중심지역으로 부상
-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상해 포동지구 중점개발
- 사회간접시설 집중개발로 접근성 및 편리성 확보
- 위치와 건물의 인지도가 높아 상품 마케팅 활동 용이

다. 설치형태

○ 「상설전시관」+「연락사무소」형태로 운영

-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선정, 소규모로 출발

○ 구성인원 : 파견공무원 1명 + 현지채용인 2명

※ 타 시도와 차별화 하여 추진

- 타 시도의 경우 관 주도로 운영하여 업체의 관심 저조
- 우리 도는 기업의 수요에 부응, 참여업체간 협의회 구성 운영

라. 법적지위

○ 외국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사무소 설치는 중국법규상 허용치 않음에 따라

○ 현지 진출법인을 우리 도의 대행기관으로 하여 내부협약을 맺고 「상해상품전시관」에 우리도 공무원 파견

○ 외부에 대한 의사표시(계약·등록등)는 현지 법인 명의로 하고 그 외 교류활동은 우리 도 (상해상품전시관) 명의 운영

※ 대행 현지법인 검토대상 : 국제화재단, 두원공조 현지법인

○ 2000년 우리 도 상품 전시관으로 별도 법인 설립추진

마. 앞으로 추진일정

○ 공무원 파견 ..... '99. 6월

○ 중국 현지 지원법인과 내부협약 체결 ..... '99. 6월

○ 전시관 임차계약 ..... '99. 6월

○ 전시관 설치 ..... '99. 6월

○ 개　　소 ..... '99. 6월

○ 규칙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9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1999. 5. 4.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99. 5. 10)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9. 5. 12.
이 송 기 관		

□ 제안이유

○ 본회의 개의중에 심사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관심 사안등에 대하여 의원들이 5분 범위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발언제」를 도입하여 의회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5분 발언」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을 활성화 함(안 제38조의2)

-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30분의 범위안에서 의원들이 의한,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항들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
- 발언자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답변 불필요)
- 발언자는 개의일 전일가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 신청
-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합의 결정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남도의회회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5분 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도정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

③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5분 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9節 第129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29회 임시회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도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도와 교육청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99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9. 5. 24(월) ~ 6. 7(월), 1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5. 24(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2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박응환의원청가허가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9. 5. 25(화) 11:00	행 자 위 (제 1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제 1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보건복지여성환경국소관)	
11:00	농 경 위 (제 1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1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종합건설사업소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5. 26(수) 11:00	행 자 위 (제 2 차)	1. 행담도개발추진사항보고(정책기획정보실소관) 2.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정책기획정보실소관)	
11:00	교 사 위 (제 2 차)	1.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예비심사 (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제 2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2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건설교통국소관)	
'99. 5. 27(목) 11:00	행 자 위 (제 3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자치문화관광국소관) 2.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00	교 사 위 (제 3 차)	1.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예비심사 (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제 3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제 3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소방안전본부소관)	
'99. 5. 28(금) 11:00	행 자 위 (제 4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계룡출장소소관)	
11:00	교 사 위 (제 4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00	농 경 위 (제 4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농림수산국소관)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충청남도소방학교(천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5. 29(토) 11:00	운 영 위 (제 1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계룡출장소소관)	
	행 자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교 사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99. 5. 30(일)		공 휴 일	
'99. 5. 31(월) 11:00	행 자 위 (제 5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총무과, 공무원교육원소관)	
11:00	교 사 위 (제 5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청양대학소관)	
	농 경 위	1. 현지확인 - (TBI)순천향대의료창업보육센터(아산 신창) - 영인산자연휴양림(아산 영인)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서산소방서합덕파출소신축현장(당진) - 당진천수해복구(1-2공구)공사현장	
'99. 6. 1(화) 11:00	행 자 위 (제 6 차)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3.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	
11:00	교 사 위 (제 6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농 경 위	1. 현지확인 - 청양구기자시험장(청양,운곡) - 칠갑산구기자한과(청양,비봉)	
	건 소 위	1. 현지확인 - 고대면향곡저수지수해복구공사현장(당진) - 예산고덕,대천천수해복구공사현장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6. 2(수) 10:00	운 영 위 (제 2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예비심사 (의회사무처소관)	
11:00	예 결 위 (제 1 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심사 (도본청소관)	
'99. 6. 3(목) 11:00	예 결 위 (제 2 차)	1.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 (교육청소관)	
'99. 6. 4(금) 11:00	예 결 위 (제 3 차)	1.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일반,특별)심사 (도본청, 교육청소관)	
'99. 6. 5(토)		의 정 자 료 수 집	
'99. 6. 6(일)		공 휴 일	
'99. 6. 7(월)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3		
조례안	2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2	1.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1	1.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기 타	8	1. 김중한의원「5분 발언」신청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2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박응환의원 청가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6.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8. 199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9. 5. 24, 11:00) '99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박응환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심대평도지사와 오재욱교육감으로부터 도와 교육청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김문규(천안), 손재탁(공주), 신재원(보령), 김재봉(아산), 허영일(서산), 임성규(논산), 심정수(금산), 강화섭(연기), 강영성(부여), 전영환(서천), 정선홍(청양), 전용설(홍성), 이한식(예산), 박동윤(태안), 장준섭(당진), 한창숙(비례)

○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9. 6. 7, 11:00) '98년도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안을 심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 1건,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 조례개정조례안 1건, 1999년도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과 도와 교육청의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1998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구 분	성 명	연 령	비 고
도 의 원	전 용 설	59	홍성군, 행정자치위원회
〃	이 한 식	62	예산군, 건설소방위원회
〃	강 영 성	50	부여군, 건설소방위원회
공인회계사	유 재 호	38	공인회계사
〃	신 종 태	33	〃
〃	이 상 현	31	〃
전직공무원	유 재 환	65	전 의회 전문위원
〃	유 영 준	60	〃
〃	박 홍 순	63	〃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98	충청남도지방공사 의료원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도지사 (99.5.14)	행자위	○법령의 개정으로 의료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 도지사의 권한중 일부가 위임 ○행자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하여 인사, 예산, 결산 등에 관한 노사간 합의사항과 미비점 개선 보완	6. 7	6. 7	수정
100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 조례안	도지사 (99.5.27)	행자위	○도내 출신 어려운 대학생에게 숙식장소를 제공하여 학비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함	6. 7	6. 7	수정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97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1999. 5. 14.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1999. 5.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99. 6. 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9. 6. 7.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 관리계획

○총 괄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 적	가 액	비고
취 득	계	토지	21	156,900	1,281,145	
	①교환취득	토지	17	152,408	1,192,529	
	②양수취득	토지	4	4,492	88,616	
처 분	계	토지	48	86,519	1,349,592	
	①교환취득	토지	21	48,548	1,187,312	
	②양수취득	토지	27	37,491	162,280	

ㅇ 관리계획 내역

(1) 재산취득

(단위 : ㎡, 천원)

구분	사 업 명		위 치	필지	수 량	가 액
합 계				21	156,900	1,281,145
토지	교 환 취 득	소 계		17	152,408	1,192,529
		①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8	140,668	1,123,213
		②천안상록리조트진입 대체지방도로개설	천안시 수신면 장산·속창리	9	11,740	69,316
	무 상 양 수	③폐천부지 무상양수	천안시 북면·신부동	4	4,492	88,616

(2)재산처분

(단위 : ㎡, 천원)

구분	사 업 명		위 치	필지	수 량	가 액
합 계				48	85,519	1,349,592
토지	교 환 처 분	소 계		21	48,548	1,187,312
		①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예산·예산 신례원리	7	39,081	1,114,991
		②천안상록리조트진입 대체지방도로개설	천안·수신면 장산·속창리	14	9,467	72,321
	매 각 처 분	③보존부적합 폐천부지 매각	아산, 청양, 예산, 충북 청원군일원	27	37,971	162,280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유재산관리계획

('99년도 제1회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o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종전			제1회 변경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8	12,389	64,258	21	156,900	1,281,145	29	169,289	1,345,403
		건물	1	83.22	8,269				1	83.22	8,269
	1. 매입	토지	8	12,389	64,258				8	12,389	64,258
		건물	1	83.22	8,269				1	83.22	8,269
	2. 교환 취득	토지				17	152,408	1,192,529	17	152.408	192,529
		건물									
	3. 기타 취득	토지				4	4,492	88,616	4	4,492	88,616
		건물									
처분	계	토지	6	22,992.3	455,436	48	86,519	1,349,592	54	109,511.3	1,805,028
		건물	2	135.09	9,205				2	135.09	9,205
	4. 매각	토지	6	22,992.3	455,436	27	37,971	162,280	33	60,963.3	617,716
		건물	2	135.09	9,205				2	135.09	9,205
	5. 교환 처분	토지				21	48,548	1,187,312	21	48,548	1,187,312
		건물									

Ⅳ. 5分 發言 要旨

1. 김중한 의원(예산군, 자민련)

■ 충청남도의 구조조정 문제 관련

· 지난 해 9월에 실시한 1차 구조조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 공직사회와 민간 사회에서 조차도 성공적인 구조조정이었나 하고 의문시 하고 있음.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는 중앙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난 1차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내부 및 외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후유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도민과 더 가까운 행정조직과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퇴직하는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 그 능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련

· '99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은 2조1,474억원으로 '98년도 보다 무려 20.4%가 증가된 많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한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 순방은 충남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됨.

그러나 아무리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이 예산을 전 도민에게 골고루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음.

또한 지난해에 책정된 사업중 IMF의 경제여건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유보된 사업중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만도 7개 시·군에 7건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일관성있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교육시책에 대한 사항.

· 먼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로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 금년도 3월에 통·폐합된 학교가 37개교이고 9월에 통·폐합될 학교가 104개교가 되는 등 2002년 까지 201개교가 통·폐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1개교당 2억여원씩 올해만도 약 282억원의 예산절감 차원과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진면에서는 크게 좋은 면도 있다고 보나 지역의 교육·문화 공간인 자기의 모교가 없어지는데 따른 소외감과 고향생각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반발과 갈등도 많다고 봄.

■ 학교의 급식에 관한 문제.

·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급식 실시 학교에서 제공한 음식이 부패되거나 위생적이지 못하여 많은 학생이 식중독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학교자체의 음식조리와 급식의 위생처리가 미흡하다고 함.

이는 차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더욱 더 학생보호 차원에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깨끗한 물 제공, 부식의 냉장유통 등 기초적인 위생수칙 준수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

第10節 第130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130회 임시회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99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9. 7. 23(금) ~ 7. 27(화), 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7. 23(금) 11:00	본회의 (제 1 차)	1. 제1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9. 7. 24(토) 11:00	행자위 (제 1 차)	1.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0:00	교사위 (제 1 차)	1. 소규모학교통폐합관련청원서처리 2.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농경위	휴회(의정자료수집)	
	건소위	휴회(의정자료수집)	
'99. 7. 25(일)		공 휴 일	
'99. 7. 26(월) 11:00	행자위 (제 2 차)	1.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교 사 위 (제 2 차)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 7. 26(월) 11:00	농 경 위 (제 2 차)	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	
11:00	건 소 위 (제 2 차)	1.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 조례안 4.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99. 7. 27(화) 11:00	운 영 위 (제 1 차)	1. 제1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행 자 위 (제 3 차)	1.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제 3 차)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 10.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 조례안 13.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7		
조례안	13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4	1. 재선거 당선의원 선서(박영조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3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9. 7. 23, 11:00) '99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6월 16일 실시한 서천군 제2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박영조 의원을 궐원중인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9. 7. 27, 11:00) 충청남도수입증지 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11건,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폐지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ㅇ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01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99. 7. 1)	교사위	ㅇ'99. 9. 1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와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는 유치원과 폐지 또는 분교장이 개편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칭과 위치를 삽입·변경·삭제	7. 27	7. 28	수정
102	충청남도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지사 (99.7.10)	행자위	ㅇ수수료의 현실화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 금번계획은 '99년도 계획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항목을 일부 개정	7. 27	7. 28	원안
103	충청남도수입증지 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 (99.7.10)	행자위	ㅇ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문 개정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정의, 판매인 지정제 → 신고제 -판매소 표찰 부착위치를 구입자의 편의를 감안 판매인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인 의무사항 완화 등	7. 27	7. 28	수정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04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9.7.10)	행자위	○문화재보호법이 '99. 1. 29 개정되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항 개정 -위원장을 부지사→위원중에서 호선 -당연직 위원인 정책기획정보실장 삭제→관계전문가로 보강 -문화재 전문위원 10인에서→15인으로 보강	7. 27	7. 28	수정
105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9.7.10)	농경위	○선도기업은 지정당시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의 평가 기준에 따라 현지실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거치고 있는 점을 감안 -재무재표 동일적용 경우 현지실사와 융자심의위원회의 생략 -조직개편 등 여건변동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	7. 27	7. 28	수정
106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99.7.10)	건소위	○건축법의 일부규정 폐지, 도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규제조항을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정비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 건축시 도로에 2m이상 접도기준 및 건폐율 적용 배제 -건축물 용적율 완화	7. 27	7. 2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07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99.7.10)	건소위	○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위반 자동차에 대한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도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	7. 27	7. 28	원안
108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99.7.10)	건소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도지사의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동조례를 폐지	7. 27	7. 28	원안
109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99.7.10)	건소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가 삭제된 조항을 폐지,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이동식 난로사용 제한 -가스 및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시 안전주의 의무규정 등	7. 27	7. 28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10	충청남도행정조직 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7.20)	행자위	○자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2차 구조 조정 -제명을 충청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로 -기구·명칭 변경, 여성정책기능 및 여성복지기능 통합 행정부지사 직속 -자치문화국의 민방위기능을 소방 안전본부로, 농림수산국에 연안관리기능 신설	7. 27	7. 28	수정
11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7.20)	행자위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일부 정원감축 -지방공무원 총수 : 2829 (감205인) -205인을 1년차 68인, 2년차 68인, 3년차 69인 등 연차별 균분 감축	7. 27	7. 28	원안
112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7.20)	행자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장과 그 하부조직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룡출장소장의 직급규정 및 지소장의 직급규정을 삭제	7. 27	7. 28	원안
113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7.20)	행자위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민간위탁을 촉진시키는 근거 마련	7. 27	7. 28	원안

Ⅳ. 5分 發言 要旨

1. 정용해 의원(당진군, 자민련)

■ 해외연수 활동 관련

· 21C 지구촌의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도정의 세계화 역량제고와 중소기업제품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3월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 이어서 '98년도에는 일본의 구마모토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본 의원이 방문시 보고 받기로는 뉴욕사무소 개소 이래 활발한 미주지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유망품목 발굴과 함께 57개 업체 2백만달러를 상담 계약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구마모토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임.

행정기관·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지원 및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국내의 홈디퍼, 메나드 등 대형체인점과 거래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통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유치와 재미 충청도민회 청소년들의 고향순례 추진, 서산시와 클립턴시간의 자매결연 체결 알선, 미주지역 충청도민회를 현재의 9개 조직에서 20개 조직으로 확산하는 등 국제화에 앞서가는 충남도의 이미지를 미주지역에 크게 부각시키고 해외 전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음.

구마모토 소재 현지 사무소의 경우에도 현청의 한쪽방에 타국인과 함께 한방을 사용하면서 통상지원과 상담, 현지 동향조사와 정보의 처리,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 문화교류, 양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관광객 유치업무등 사무실 근무외에 현장 접촉의 업무추진에 있어, 인력, 예산과 근무환경은 열악함.

초대 파견 행정관의 처음 1~2년간은 사회제도와 관습이 틀리고, 언어장애와 가족간의 격리, 사무소 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부담감 등 고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뉴욕사무소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 2년5개월 여간의 뉴욕체류와 적응으로 이제는 도정사상 최초의 해외사무소 기능과 역할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사무소 운영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어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뉴욕사무소의 근무체제가 소장, 행정관, 통상관의 근무인력으로 행정관의 역할을 볼 때 사무소 잡무를 처리하는 직원도 없이 사무소 운영의 총괄 실무지원, 도 및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수행, 운영상황의 일일보고, 주간보고 및 지시사항 처리등 업무가 과중한 형편이었으며, 초과근무 후에도 시차상 한국의 근무시간내에 도와 업무 연락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임.

현재 총영사관 등 외무직 공무원과 국제화재단 뉴욕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주택임차비가 월 1,700~2,500달러에 방 3개 규모로 지원되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 등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형편이었으나, 우리도 파견공무원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월 790달러, 아파트 방 1개 규모의 뉴욕지역 주재공무원 약 120명중 유일하게 퀸스구지역의 자녀교육에도 문제가 많은 보안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가 우리도의 역동적인 발전상 및 21세기의 밝은 미래상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도 중소기업제품의 진출확대 및 튼튼한 교두보를 구축하는 등 도민 모두에게 공감받는 해외사무소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됨.

투자 효율을 높이고 장래를 예측한 우리의 득실을 계산한다면 인력과 예산, 행정지원과 협조등 과감한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관계관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뚜렷한 목표와 시행이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고 좀더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함.

第11節 第131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31회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99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상황 보고청취,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경섭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8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99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9. 8. 27(금) ~ 9. 7(화), 12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8. 27(금) 10:30	운영위 (제 1 차)	1. 제1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본회의 (제 1 차)	1. 제1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99. 8. 28(토) 11:00	행자위 (제 1 차)	1. 업무추진상황보고(자치문화국소관)	
	교사위	의정자료수집	
	농경위	의정자료수집	
	건소위	의정자료수집	
'99. 8. 29(일)		공 휴 일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8. 30(월) 11:00	행 자 위 (제 2 차)	1.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 3. 19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11:00	교 사 위 (제 1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복지환경국소관)	
11:00	농 경 위 (제 1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1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건설교통국소관) 2.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	
'99. 8. 31(화) 11:00	행 자 위 (제 3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기획정보실소관)	
11:00	교 사 위 (제 2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제 2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제 2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종합건설사업소소관)	
'99. 9. 1(수) 11:00	행 자 위 (제 4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계룡출장소,공보관실소관) 2.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00	교 사 위 (제 3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여성정책관실소관) 2.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00	농 경 위 (제 3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3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99. 9. 2(목) 10:0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9. 9. 3(금)	본 회 의 (제 3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9. 4(토)	행 자 위 (제 5 차)	1. 현장시찰 -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장	
	교 사 위	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의정자료수집	
'99. 9. 5(일)		공 휴 일	
'99. 9. 6(월) 11:00	행 자 위 (제 6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총무과,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소관) 2.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00	교 사 위 (제 4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보건환경연구원,청양대학소관)	
11:00	농 경 위 (제 4 차)	1.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특산품전시판매장현황점검(둔산동) 3. 중부농축산물류센타현황보고	
11:00	건 소 위 (제 4 차)	1. '99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소방안전본부소관) 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9. 9. 7(화) 10:10	운 영 위 (제 2 차)	1. 제13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본 회 의 (제 4 차)	1.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 3. '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의건(4개 상임위)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3		
조례안	5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1	1.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기 타	7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3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1999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추진상황 보고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1일차) 6.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2일차) 7.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 보고의 건(4개 상임위)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9. 8. 27, 11:00) '99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재욱 교육감으로부터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다.

○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9. 9. 2, 10:00)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용설(홍성), 전영환(서천), 임성규(논산) 의원 등 3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1999. 9. 3, 10:00)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틀째를 맞아 장준섭(당진), 강화섭(연기) 의원 등 2인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1999. 9. 7. 11:00)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 1건과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3건, '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의건(4개 상임위)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14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9.8.20)	행자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감면 등 수혜 범위 확대 ○벤처기업 최저 대부사용요율의 적용 대상 확대 ○경작용 농경지의 대부료 산정기준의 조정과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건물대부료,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의 하향 조정	9. 7	9. 8	수정
115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	도지사(99.8.20)	행자위	○도의 행정, 정치, 경제 등의 변천 사항등을 정확하게 기록 유지 ○도지사 자문기구로써 충청남도 도정기록보존관리위원회를 둠(15인 이내)	9. 7	9. 8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16	충청남도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도지사 (99.8.20)	건소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심의규정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의 사전승인 및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 폐지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위원중 선출	9. 7	9. 8	원안
117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9.8.20)	건소위	○자녀장학생 선발자격 기준중 석차에 의한 성적기준을 변경 -현행 교육부 학업성적 관리제도와 일치시켜 장학생 선발기준 보완 ○소방활동에 적극 참여한 유공대원의 자녀도 수혜 대상 ○상위법에 맞지 않은 장학기금 재원중 독지가의 헌금 내용은 삭제	9. 7	9. 8	원안
119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99.8.27)	본회의	○행정조직 개편결과 신설 또는 조정되는 기구가 발생됨에 따라 -기획정보실 사무중 일부사무를 분장하게 되는 실국단위의 정책관리관의 소관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여성정책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로	8. 27	8. 27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118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1999. 8. 2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1999. 8. 2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1999. 9. 7)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1999. 9. 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수시설인 콘도등을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산에 대하여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관리계획

○ 수정안 내역

(단위 : ㎡, 천원)

구분	제2회변경안(A)			수 정 안(B)			증 감 (A-B)		
	필지수	수 량	가 액	필지수	수 량	가 액	필지수	수 량	가 액
합계	404	3,191.137	13,271,637	201	1,807,067	6,952,354	△203	△1,321,070	△6,319,283
일반회계	177	2,604,412	10.602,551	61	1,386,893	5,017,773	△116	△1,217,519	△5,584,776
특별회계	227	586,725	2,669,086	140	483,174	1,934,579	△87	△103,551	△734,507

도유재산관리계획

(1999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종 전			제2회 변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29	169,289	1,345,403				29	169,289	1,345,403
		건물	1	83.22	8,269				1	83.22	8,269
		기타									
	1. 매입	토지	8	12,389	64,258				8	12,389	64,258
		건물	1	83.22	8,269				1	83.22	8,269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17	152,408	1,192,529				17	152,408	1,192,529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4	4.492	88,616				4	4.492	88,616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54	109,511.3	1,805,028	61	1,386,893	5,017,775	115	1,496.404.3	6,822,803
		건물	2	135,09	9,205				2	135,09	9,205
		기타									
	4. 매각	토지	33	60,963.3	617,716				94	1,447,856.3	5,635,491
		건물	2	135,09	9,205	61	1,386,893	5,017,775	2	135.09	9,205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21	48,548	1,187,312				21	48,548	1,187,312
		건물									
		기타									

도유재산관리계획

(1999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종전			제2회 변경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40	483,174	1,934,579	140	483,174	1,934,579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140	483,174	1,934,579	140	483,174	1,934,579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Ⅲ. 道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전용설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2000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책

· 우리 도의 내년도 중요 사업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국비확보 전망을 밝혀 주시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재정난 타개책으로 정무 부단체장을 경제 전문가로 스카웃 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정책기획정보실장 이명수 〕

·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년보다 빨리 지난 1월부터 7개의 대책반과 전담반을 구성해서 예산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해서 끊임없이 협의하는 등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여 왔음.

우리도 관련 예산은 신청액 2조9,000억원의 73%인 2조1,300억원이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되어 최종 심의중에 있음.

또한, 광역 부단체장에 경제전문가 임용과 관련해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고, 현재도 부산, 대구, 울산, 강원등 4개 시·도에서 경제 전문가를 부단체장으로 채용해서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일부 미흡한 측면도 함께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합한 인재가 임용되도록 하겠음.

■ 질문2 : 전국 최하위인 도내 기반시설 확충 방안

· 도의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국도 포장률은 전국 평균 98%에 비해 95% 포장으로 최하위 수준이고 상수도 보급률도 192만 도민 가운데 급수인구는 94만으로 49%, 전국평균 84%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도 설치율도 대상 4,516km 가운데 45.4%만이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전국 62%에 미치지 못하는 등 우리 도의 기반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확충하려면 무려 2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도내 취약한 기반시설의 확충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공감하면서 우리 도의 국도 확·포장률은 당초 99% 수준이었으나 간선교통망 확충을 위해 '96년도에 미개통 도로 56.5㎞를 국도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서 현재, 국도 포장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 있음.

수도 보급률 제고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계는 물 전쟁의 시대라는 예상 하에 수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령댐 계통 23만톤, 대청댐 2단계 사업 26만톤, 아산 공업용수도 2단계 13만톤, 전주권 계통 4만톤, 지방상수도 23만톤 등 총 89만톤을 확충할 계획으로 2001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음.

앞으로 하수관거 설치확대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한 하수도율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 질문3 : 방만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

· 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방만하게 운영돼 열악한 지방 재정의 잠식은 물론 형평 과세 원칙과도 배치돼 일부 주민들의 과세 저항으로 매년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951억원이 체납되고 있는바 비과세 감면 규모가 부과액의 12.3%에 해당하는 852억8,000만원이나 되고 복잡한 비과세로 과오납 발생만도 36억7,000만원이 발생, 세수에 혼선을 빚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 :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

· 조세의 감면은 공평과세에 대한 예외 조치이므로, 그 대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 목적과 국제적 환경 변화 등 사회 여건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감면 대상은 2000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대상 적용 시한 만료인 2000년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며 비과세 감면 세액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전 방안은 국가 전반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국·공유재산을 임대사용시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99년 7월에 건의하여 현재 지방세법을 개정 중에 있음.

2. 전영환 의원(서천군, 자민련)

■ 질문1 : 장·군 국가공단 사업 추진 대책

· 장·군 국가공단사업 계획은 1985년도 처음 그 계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이후 군산측 1단계 사업은 482만평 계획으로 이미 완료 단계에 있으며, 대우자동차 공장 등 수십개 업체가 입주하여 이미 공장을 가동하여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이 검토단계에 있으나 군산 측에 비해서 원래 공단 입지조건이나 항구로서의 자연조건이 아주 유리한 장항측 1단계 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 있서 지역 주민들은 전북과의 차별 개발에 따른 분노와 충남도내에서의 소외감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항측 1단계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금까지 주요 추진 상황은 어업권 보상이 95%, 진입로 개설 및 북측도류제 축조 등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토지공사, 도가 합의해서 1단계인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키로 하였고 수출자유지역 지정문제도 군산지역과 공동 지정되도록 중앙 건의 및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음.

또한, 도류제로 인하여 토사가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민이 이용하는 장항항내 준설은 매년 국가가 국비를 투자해서 준설하고 있으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 준설은 장항항 준설계획에 의거해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질문2 : 계룡신도시 분양 대책과 특정시 추진 방안

·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왔던 계룡 특정시 추진의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룡신도시의 특정시 추진과 공영개발용지의 미분양용지 해결의 한 방안으로 육군사관학교 등 군 관련 기관의 계룡신도시로의 이전 요청과 충청남도청이나 도교육청, 경찰청 등 도 관련 행정기관들의 계룡신도시로의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특정시 설치 추진상황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이 되는 인구 5만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부처의 계룡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시켜서 특정시 설치에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며 정치권에서도 지난 '98년 12월 특정시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앞으로 특정시 설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유입 등 시설치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음.

우리 도에서는 남은 택지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서 지가의 현실화, 할부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림.

■ 질문3 : 지역 보건소와 의료원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자원을 보건소 사업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임. 그리고 지역의료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아주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경제적인 이유나 인원 구조조정과 맞물려 파행운영이 잦은 상태이며, 기타 운영상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

· 일반 병·의원이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건소등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영.유아 및 노년층의 건강관리사업, 성인병 관리 및 암 검진사업, 재가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등에 우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시설의 제약,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앞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의료기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대로 시.군 보건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민간의 우수한 사업이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동시에 자원의 한계를 감안해서 국민건강증진시범사업의 확대와 기능보강사업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 중앙재원을 끌어들이는 노력에 가일층 진력해 나가겠음.

■ 질문4 : 농어촌학교 발전을 위한 대책

· 도내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농어촌의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도내 농어촌 벽지학교 및 과소규모 학교는 계속 늘어날 것인바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도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보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수업을 통한 교육력을 극대화 시키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시에는 그 동안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할 것임.

또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대도시 전출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음.

특히,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울타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설치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도시의 어느 학교 못지 않게 최신식 현대시설과 첨단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이 농촌에서 긍지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음.

현재 공주의 탄천, 부여의 은산에 시설하고 있는 현대화 시범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서산, 태안에서도 각각 1개교씩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지정하고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와 교육과정의 정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림.

3.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질문1 : 동학사 온천개발의 문제점

· 1985년도에 동학사 온천발견신고 이후 충청남도와 내무부로부터 16만2,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 받은 후, '88년 6월 국립공원계획변경으로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환경보존지구, 녹지, 임야, 농지 등으로 형성돼 있던 본 지구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개발주체측의 노력으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공주군수에게 허가되도록 노력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충청남도민은 이 지역에 명물이 생기고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금융, 토지실명제 등의 원인으로 침체돼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음.

박정자 삼거리를 고가도로로 연결하겠다는 지사님의 과거 의회 답변사실도 언제 시행될 것인지, 제2집단 시설지구로 공원계획 변경과 국토이용변경승인이 안되어 있다면 국유지 부분에 민속박물관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조합에서도 민속박물관을 지구내에 넣을 때는 사용처가 있어 시설허가를 받았을 것인즉, 개발사업권을 타인에게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 사업 결과가 100억원 이상의 이익이 있다면 개발 이익금을 도에서 산정 부과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동학사 온천개발 관련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동학사 우회도로 공사는 54% 진척된 상황에서 총 사업비 50억원중 국비와 공주시비 23억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95년 환경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99년 3월 공주시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승인 신청중으로 내년도에 착수될 예정임.

박정자 삼거리 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98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도 1호선 두마~반포간 확·포장 공사 계획상 국도 32호선과 교차되는 반포면 학봉리에 입체 교차로 설치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동학사 온천지구내 민속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박물관 건립계획을 '99년 5월 관보 및 4개 일간지에 공고해서 민간 투자시설 사업자를 모집한 바, 비영리 문화사업이라는 점과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신청자가 재단법인

「청운문화재단」 뿐으로 부득이 「청운문화재단」을 선정하게 된 것이며,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고시, 심의 등 공개적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되었음.

100억원의 개발이익 발생과 관련해서 이 일부 포함되는 국유지 1만여평의 시세 차액이 100억원이 된다고 추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투기 및 전매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으로 어디다 매각하거나 민속박물관 이외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질문2 : 해상 도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

· 충남의 자존심을 세우고 서해 어민들의 생업에도 직결되는 어업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 충남의 서해안 도계 문제에 대하여 도에서는 서해 어민들의 어업권 확보차원에서 해상도계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지사께서는 서해 주민들이 더 넓은 해상에서 마음놓고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상 경계선을 재설정할 방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의 해상 경계는 일제시대인 1914년 조정된 이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섬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관할 구역을 가르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해역이 협소하게 되는 등 다소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장항과 국화도의 해상 도계를 육상자원 못지 않게 바다자원이 귀중하게 대두되고 있는 점과 우리 도 어업인들의 어장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인접 시·도간 공동조업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상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간 합리적 관할 구역을 법적으로 설정 해 주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음.

■ 질문3 : 도로포장공사시 주민불편 해소 대책

·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 및 서해안 고속도로 신설 및 각급 국도 및 지방도 포장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국도 4호선 공주~논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중 공주, 논산 경계 지역에서부터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1구를 통과하는 2㎞ 구간에 대하여 왜 최초 설계시 보다 낮춰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만약 재시공을 한다면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해당 도로공사 구간에 도 관계자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이 함께 현지 조사결과 당초계획보다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민의 안전과 편익도모를 위해서 진출입로의 확장이나 부채도로 신설, 통로박스의 배수펌프 시설 등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보완사항을 설계에 반영 연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로사업등과 같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화해서 주민편익 위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음.

■ 질문4 : 전국체전대비 체육회 지원예산액 및 지원 방안

· 체육회 예산에서 재경선수팀 일반선수 및 대학팀, 시·군팀, 고등부팀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2001년 천안 전국체전을 위하여 선수 확보와 경기력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또 고등부팀이 없거나 미약한 팀에 대한 지원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

· 지난해 전국체전 종합 3위의 위업을 금년에도 이어가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된 예산은 60억원으로 작년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선수 확보에 있어서는 도 및 시·군청 선수 159명중 65명을 우수선수로 교체하였고, 관외 선수 243명을 확보하였음. 특히 충청하나은행 핸드볼팀을 비롯한 단체 종목 4개팀을 새로 창단하여 불참 종목 18 세부종목을 줄이는 등, 도와 교육청, 체육회가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전 준비 못지 않게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경기력 향상 전담팀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적극 확보하여 불참종목을 완전 해소토록 하겠으며, 고등부 육성대책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4. 장준섭 의원(당진군, 자민련)

■ 질문1 : 서해안 갯벌 보존 대책

· 갯벌은 어패류의 서식지요, 산란장이고 육지와 바다의 완충지대로 거대한 오염물질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져 보면 농경지의 3배 내지 10배나 되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고, 또 그 땅값으로 따져 본다 하더라도 약 해안 땅의 17배에 가까운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음.

지사께서는 갯벌보호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신지, 갯벌보호를 위한 투자는 현재 우리 도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도에서는 간척대상 갯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보상 계획된 어장별로 한정면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장은 얼마나 되는지, 한정면허 특별대책을 세워서 어민단체에 면허취득을 위한 도의 행정력을 최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갯벌 보전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도 자체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98년에 해안도서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안관리담당을 신설해서 연안지역 갯벌 보전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도의 간척·매립 예정지는 장군공단지구, 서산대호지구, 당진행담도지구 등 모두 17개지구에 31.6㎢입니다마는 민선 이후에 기존의 매립계획지를 제외한 일체의 간척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현재 도내에 면허 가능면적은 당진의 석문지구와 당진화력지구 등 1천ha정도이며 아울러 한정면허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한정 어업면허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2 : 지하수 보존 대책

· 우리 도의 지하수 연간 사용량을 11억1,00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40% 수준인 4억5,000만톤을 실제로 뽑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부존량은 매년 감소되는 현상이고 물의 소비는 급증하는 추세임.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1회 수질검사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우리 도의 수질검사 대상은 얼마이고, 얼마나 검사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 도의 지하수 폐공실적과 규정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착공 중에 채수량이 부족하여 슬그머니 덮어두는 미확인 폐공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조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

· 정부에서는 지난 '97년에 지하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서 지하수 개발시 허가 및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폐공 복구를 위한 복구비 납부제도와 수질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지하수 관리제도를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 작년에 총 1,848건을 수질검사 해서 이중 기준에 부적합한 216건에 대해서는 오염원 방지 조치 등을 취한 후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지하수 개발시 발생되는 폐공은 그간 총 3,291개소가 발견되어서 규정대로 복구조치한 바 있으며, 특히 '98년말 동절기를 이용해서 도내 방치폐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농어촌진흥공사와 시·군 합동으로 99개소를 복구하는 등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음.

■ 질문3 : 노인복지 사업의 투자 확대 방안

· 최근 3년간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도의 예산 규모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가 대폭 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의 무의탁노인 1,750여명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있는 것인지, 치매병원 또는 그 요양시설 건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노인질환자들을 위한 거동불편 노인들 방문치료 사업의 그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등은 도가 앞장서야 할 사업이므로 유료노인시설 투자 유치단 설치와 본격적인 가동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

· 최근 3년간 노인복지사업의 예산규모와 앞으로의 증액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해서 '97년은 1.3%인 155억원, '98년은 1.5%인 194억원, '99년인 1.7%인 205억원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매년 투자비율을 높여 가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 예산을 최대한 늘려 가도록 하겠음.

도내의 무의탁노인 1,750명은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생계비 지원과 각종 공과금 면제 등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또한 치매병원과 요양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홍성의료원 현대화 계획에 맞춰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의료원의 본관 이전이 끝나는 내년 말에 착수해서 2002년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 방문 진료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독거 및 거동불편노인 9,000명을 선정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매주 1회 이상 방문해서 연인원 50만7,000명에게 진료라든지, 물리치료, 투약, 목욕 및 가사지원 등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또한 우리 도내에는 유료양로시설 5개소와 요양시설 1개소 등에 241명이 입소할 수 있으나, 현재는 수용능력의 37%인 89명만이 입소하여 있는 실정으로 아직은 노인들의 선호도가 낮은 편으로 주거시설 보다는 휴양시설이나 일시 체류시설 유치가 현 시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질문4 : 환경보호 민간단체 육성 방안

· 환경문제는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계속 노력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임. 개발에 밀려서 무차별하게 파괴되는 환경을 막고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이에 수반해야 될 기금의 창설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

· 충남 환경기금의 창설은 좋은 제안이나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현실적이고 시급한 환경보전 사업도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을 예산에서 출연해야 하는 기금의 창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5. 강화섭 의원(연기군, 자민련)

■ 질문1 : 충남정신문화 창달 방안

· 우리 도가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도를 만들려면 우선, 치안유지와 미풍양속의 바탕 아래 경제적인 발전과 문화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다 하여도 인심과 치안유지가 되지 않는 곳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인심 좋은 우리 도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와 우리 도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월별로 정신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 하여 말씀 드리니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 동안 충남 5대 정신을 도민들의 정신문화, 의식개혁운동으로 적극 추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과 사회병리 현상의 치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 그리고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규범과 도의를 아는 건전한 생활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고 있음.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의 실천과제인 기초질서 지키기, 환경보호 활동 등과 연계해서 충남의 5대 정신을 지속적으로 발양해 나가면서 21세기 선진도민이 지켜나가야할 새로운 도민운동으로 가정, 이웃, 직장, 나라 등 "5대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충절의 고장인 우리 도를 도덕과 인정이 넘치는 예절의 고장으로 더욱 승화 발전시켜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 질문2 : 국·도유 하천부지 관리방안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 내에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도 있고, 개인 소유인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이 도내에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토지를 관리함에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이 되고 피해의 유형을 보면 개인의 토지가 유실돼 하천으로 된 부분은 그대로 국가에 헌납을 하고, 농민이 하천에 대하여 불하를 신청하면 그것도 3~4년의 점유에 대한 비용을 일시 불입하여야 하며, 또한 불하시 막대한 비용으로 불하를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방·준용하천의 개인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언제, 어떻게 보상을 하실지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개인이 점유한 하천 국유지 불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지방하천토지보상 추진상황으로 총 2,457필지 중 2,395필지는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여 62필지는 미상속, 소송계류 등 토지의 소유주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 준용하천은 현행법상 사유권이 인정됨으로 직할하천이나 지방 하천과 같이 계획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도에서는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준용하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건의중에 있음.

현재 대부사용중인 폐천부지는 총 3,705필지에 4,202㎡로 1년 이상 점유중인 주민이 매수 희망시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매각할 계획임.

■ 질문3 : 그린벨트 개선 방안

· 요즈음 그린벨트 조정을 하면서 이곳 대전은 제3권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도와는 무관한 대전시민을 위한 그린벨트를 우리 도가 주축이 돼서 완화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우리 도 보다 대전시에서 대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 해지를 건의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도가 대전시민을 위하여 계속 희생할 필요없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지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린벨트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 관내에도 4개 시·군 67.7㎢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금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음.

우리 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은 부분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제도개선 후속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개발제한 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앙의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차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4 : 가축위생업무 관할 개선

· 지난해 구조 조정을 하면서 충청남도 사업소인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위생연구부로 개편,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예산편성시의 문제점과 집행에서 연관성,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도내 축산농가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하여 제 위치에 기관이 배속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어 가축위생연구부가 가축위생시험소로 환원하여 농림수산국 축산과와 업무가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개선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 및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에 관한 시험·검사·연구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대상만 다를 뿐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두 개 기관을 통·폐합한 것이며 두 개 기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호간에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장비를 공유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양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림수산국 축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행정계선이 중복된다는 점과 "보건환경연구원" 이라는 기구 명칭으로 축산 농가들이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앞으로 이 통합에 따른 장점을 살리면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 본청과의 연계성, 축산농가의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유관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第12節 第132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32회 임시회는 도와 교육청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99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9. 10. 20(수) ~ 11. 3(수), 1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10. 20(수) 10:30	운 영 위 (제 1 차)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제133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3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99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99. 10. 21(목) 11:00	행 자 위 (제 1 차)	1. '98결산예비심사(기획정보실소관)	
11:00	교 사 위 (제 1 차)	1. '98결산예비심사(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제 1 차)	1. '98결산예비심사(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1 차)	1. '98결산예비심사(건설교통국소관)	
'99. 10. 22(금) 11:00	행 자 위 (제 2 차)	1. '98결산예비심사(자치문화국소관)	
11:00	교 사 위 (제 2 차)	1. '98결산예비심사(복지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00	농 경 위 (제 2 차)	1. '98결산예비심사(농업기술원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건 소 위 (제 2 차)	1. '98결산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소관)	
'99. 10. 23(토) 11:00	운 영 위 (제 2 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타위원회	1. 의정자료수집	
'99. 10. 24(일)		공 휴 일	
'99. 10. 25(월) 11:00	행 자 위 (제 3 차)	1. '98결산예비심사(계룡출장소, 총무과소관) 2. 남호주수상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	
11:00	교 사 위 (제 3 차)	1. '98결산예비심사(여성정책관실, 청양대학소관)	
11:00	농 경 위 (제 3 차)	1. '98결산예비심사(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제 3 차)	1. '98결산예비심사(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99. 10. 26(화) 10:00	운 영 위 (제 3 차)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	
11:00	행 자 위 (제 4 차)	1. '98결산예비심사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제 4 차)	1.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11:00	농 경 위 (제 4 차)	1. '98예비비승인안조정의결 2. '98결산조정의결	
11:00	건 소 위 (제 4 차)	1.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99. 10. 27(수) 11:00	예결특위 (제 1 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결산심사(충청남도소관) 4.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99. 10. 28(목)		1. 의정자료수집	
'99. 10. 29(금) 11:00	예결특위 (제 2 차)	1. '98결산심사(교육청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10. 30(토)		1. 의정자료수집	
'99. 10. 31(일)		공 휴 일	
'99. 11. 1(월) 11:00	행 자 위 (제 5 차)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0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교 사 위	1. 현장방문 - 사랑애육원(홍성광천), 임해수련원	
11:00	농 경 위 (제 5 차)	1.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개정조례안	
11:00	건 소 위 (제 5 차)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99. 11. 2(화) 11:00	행 자 위 (제 6 차)	1.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3. 남호주수상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	
	교 사 위 (제 5 차)	1. 현장방문 - 홍성의료원, 예산군교육청	
11:00	농 경 위 (제 6 차)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2. 농업인과의간담회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99. 11. 3(수)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98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8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0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9. 남호주수상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0.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1.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15.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16. '99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7.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22		
조례안	9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결산안	3	1. 19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8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동의안	3	1. 2000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2. 1999년도 제3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남호주 수상에 대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안	
기 타	7	1. 5분발언 신청(대전·충남 재통합관련 등)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3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99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6. '99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7. '99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9. 10. 20, 11:00) '99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며, '98년도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이진환(천안), 윤석우(공주), 이준우(보령), 허영일(서산), 김용호(논산), 박찬중(금산), 강화섭(연기), 강창구(부여), 박영조(서천), 우지명(청양), 전용설(홍성), 김중한(예산), 최경섭(태안), 정용해(당진), 송민구(비례), 김남호(비례), 김동선(비례)

○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9. 11. 3, 11:00) 도와 교육청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8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3건,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6건, '99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23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9.10.11)	행자위	○지방재정의 이자부담 경감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융자 이율은	11. 3	11. 3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변경된 명칭과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조정 -융자이율 0.5%인하			
12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9.10.11)	행자위	○전국체전 준비에 필요한 체전준비단 총괄에 필요한 정원을 시한부로 책정, -정원 1인을 2001년 12월31까지 증원 -연차별 정원 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정원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함	11. 3	11. 3	원안
12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99.10.11)	행자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체계를 개정된 행정조직에 부합토록 조정하고 -관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사무는 삭제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	11. 3	11. 3	원안
128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도지사(99.10.11)	교사위	○도내에는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도민이 상당수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새희망을 갖고 삶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충청남도 난치병치료 후원기금을 조성 운용 -기금의 재원 : 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등으로 조성	11. 3	11. 3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29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9.10.11)	교사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 -알선신청수수료:10,000원→20,000원 -조정신청기본료:10,000원→20,000원	11. 3	11. 3	원안
130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도지사(99.10.11)	건소위	○운송사업자가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 기피,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근거 마련 -보조금의 지원대상 : 평균승차인원이 손익분기점 이하 및 1일 운행회수가편도 5회 이하인 노선	11. 3	11. 3	원안
131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도지사(99.10.11)	건소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자동차 매매업의 사업장 면적은 330㎡이상이고 너비 8m이상 도로와 접하도록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확보기준면적 : 종합정비업 1,000㎡이상, 소형정비업 400㎡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 300㎡이상으로 하고, 부분정비업은 100㎡이상	11. 3	11. 3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32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 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10.11)	농경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작물재배시기에 맞춰 시험의뢰→수시 신청 -시험계획서 심의시 시험담당자와 의뢰인을 공동참여 의견 반영	11. 3	11. 3	수정
133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10.11)	농경위	○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도행정조직조례에 통합하고자연학습장 폐지로 운영부분 삭제하며 임업시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전문 개정	11. 3	11. 3	수정

ㅇ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134

남호주 수상에 대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1999. 10. 18.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1999.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99. 11. 3)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9. 11. 3.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ㅇ 지난 '97. 11월 심대평 충청남도지사가 죤올슨 남호주 수상의 초청으로 남호주를 방문하여 양 道·州간 관계발전을 위하여 「교류협정 및 관계발전협정서」를 체결하였고

ㅇ 우리도에서는 금년 10.11~13일까지 죤 올슨 남호주 수상을 초청하여 자매결연 조인식('99. 10. 12)을 가진바 있음.

ㅇ 따라서 그동안 남호주 지역과의 교류기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공로가 지대한 죤 올슨 남호주 수상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ㅇ 돈독한 우호관계 증진과 우리도에 대한 관심부여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지속적인 교류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ㅇ 수여대상 : 남호주 수상 죤올슨(John Olsen)

ㅇ 수여내용 :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및 메달

ㅇ 수 여 일 : 의회 의결후 수여방법 별도검토

□ 참고사항

ㅇ 공적조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명예도민메달, 자매결연 협정서

공 적 조 서

□ 인적사항

○ 성　　명 : 죤 올슨 (John Olsen)
○ 생년월일 : 1945. 6. 7(54세)
○ 국　　적 : 호주
○ 직　　위 : 남호주 수상

□ 주요경력

○ 1974 ~ 1976 남호주 상공회의소 회장
○ 1974 ~ 1977 캐디나 시장(최연소)
○ 1976 ~ 1978 남호주 자유당 당수(최연소)
○ 1990 ~ 1992 남호주 상원의원
○ 1996.11 ~ 현재 남호주 수상(재선)

□ 공적내용

○ 상기인은 남호주 수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일찌기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대학, 기업, 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호응으로 남호주의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으며

○ 서 애드랜드 축구클럽, 베어후트 수상스키협회, 카디나 로타리클럽, 전국 회계사협회 등 각종 클럽활동으로 건전하고 밝은 사회 풍토조성에 앞장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

○ 특히 그동안 충청남도와의 교류증진과 신뢰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우리도정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이 크며 주요 공로는 다음과 같음

1. 양도·주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자매결연 체결에 적극 노력

- '97. 11월 심대평 도지사를 초청하여 「교류협정 및 관계발전 협정서」를 체결하고 선린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교류·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도가 남호주와 교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고 충청남도의 국제적 역량과 지위를 높이는데 일조하였으며,
- '98. 2월 남호주 아시아교류국장 등 관계관들을 우리도에 파견하여 경제, 교육, 체육 분야 등에 협의케하고 도내 산업시설시찰과 관광지견학 등으로 충청남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양도·주간교류·협력을 위한 기초를 다졌고
- '98. 6월「그래함 잉거슨」남호주 부수상과 경제인단을 우리도에 파견하여 양지역간 교류·협력방안협의(5개항의 공동성명 채택)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모색케하였으며, 특히 경제인 간의 교류 및 통상에도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한바 있으며,
- '98. 6월 충청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일행의 남호주 방문시 호주산민물가재, 활어 등을 도내 시험양식이 가능하도록 양식기술 및 관련정보, 노하우 등을 적극 제공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 '99. 11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예반(27명)의 남호주 방문시 주정부내 실무연수, 개발현장·산업시설 등을 견학시켜 공무원들의 선진행정 및 국제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데 적극 지원하였음.

2. 지방차원의 국제화 제고와 외교역량 확대에 기여

- 그동안 양도·주간의 내실있는 교류 기반위에 신뢰와 친선을 착실히 쌓아 국제자매결연으로 승화시켜 보다 차원 높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금번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리있는 교류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도·주간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음

〈합의사항〉

- 남호주 소재 화훼전문대와 화훼협의 등과 팀을 구성「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참가
- 남호주 현지에서의 우리도 양식업 관계자의 참가로 양식기술의 충청남도 이전추진
- 도내 대학생을 선발 남호주의 와인대학에 유학 및 연수시켜 와인관련 학위취득
- 금년 겨울 방학기간중 청소년의 상호교환방문(40명)등

- 앞으로 자매결연 합의사항에 대한 착실한 이행과 추진으로 심도있는 교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으며, 남호주와의 자매결연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주민의 국제화 제고 등 기대효과가 많음.

3. 상기와 같이 우리도와 남호주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해오신 죤 올슨 남호주 수상에게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코자 추천합니다.

제 1 호

명 예 도 민 증 서 안

대한민국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존 올슨 남호주 수상님께 충청남도 명예도민이 되시는 영광을 도민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

1999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지사 (인)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the people Chungchongnam-do province, I, Dae-Pyung Sim Governor, take great pleasure in conferring honorary citizenship as granted by resolution of the provincial Council upon the Hon. John Olsen, the Premier of South Australia of Australia on this 일 day of 월, 년

서 명

Governor Dae-Pyung Sim
Chungchongnam-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Ⅳ. 5分 發言 要旨

1.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도청이전 문제관련

· 대전과 충남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역공동체이자 한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임.

지금 각 시·군의 도청이전 유치경쟁 과열로 지역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서서히 증폭되어 화합을 해칠 우려가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음.

도청이전 문제는 국가적으로나 도민을 위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도청이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음.

앞서 지적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인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도청이전의 계속 추진으로 인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우리 모두 불을 보듯 뻔한 이치요, 또한 도민간의 불협화음이 조성되는 점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역사적으로 한뿌리인 대전과 충남을 재통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함.

실제 지난 3월 대전·충남의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충남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10명중 6명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재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60%에 가까운 59%가 재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앞으로 대전·충남 재통합을 이루려면 물론 관계 법령과 양 시·도민의 의견통합절차 이행 등 그리 쉽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그래도 찬란한 백제의 후예들로서 역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를 갖고 대전과 충남을 재통합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함.

■ 충청남도의 금고 지정 관련

· 지금 우리 도내의 각 시·군 농협에서는 충청남도 의원을 상대로 충청남도 금고 농협전담취급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갖고 금고유치 타당성의 서명을 받고 있음.

이 내용에는 제일은행이 자본금 잠식 등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해외매각 되기에 이르렀다느니, 도민의 재산을 외국계 은행에 맡길 수 없다는 등 농협과 같은 초우량 금융기관에 도 금고를 맡기지 않는 이상 도민의 재산보존에 불안은 계속 상존하게 된다며 시중은행을 헐뜯고 자기들 은행이 아니면 도민의 재산보존에 불안은 계속 상존하게 된다는 등 허무맹랑하게 우리 200만 도민의 불안감을 조성케하는 이러한 작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됨.

그리고 제일은행과의 수의계약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음. 문제는 농협에서 우리 충남도의원을 상대로 받는 도금고 농협유치 협조 서명은 충청남도와 농협이 연계하여 모종의 흑막이 깊숙히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음.

또한 재무구조에 있어서 농협중앙회의 경우 자체기준 발표에 9.24%라고 하였으나 '98년말 감사원 감사결과 7.54%로 나왔음.

그리고 최근 계룡출장소의 금고가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차입금 200억원을 농협이 아닌 계룡출장소는 모 시중은행에서 싼이자 8%로 차입 결정한 사실도 있음.

농협은 농민들이 빚투성이에 허덕이는 현실을 직시하여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임.

■ 중국 상해 백제방 개소식 무산에 대하여

· 중국 상해 백제방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심지사께서는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상당히 충남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실추시킨 사안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음.

보도내용을 보면 상해 백제방이 준공이 안된 상태였다고 하나 알면서도 강행한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 실무적 미숙으로 그런 것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第13節 第133回 定期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3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9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 이번 정기회는 도 및 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99. 11. 20(토) ~ 12. 29(수), 4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고
'99. 11. 20(토) 11:00	본회의 (제 1 차)	1. 제133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충청남도예산안제출에대한도정연설 3.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대한 연설 4.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9. 11. 21(일)		공 휴 일	
'99. 11. 22(월) 09:3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연기군)	
	교 사 위	1. 현지확인 - 천안미라초등학교, 아산온양초등학교 - 아산일신원, 예산분뇨처리장	
10:30	농 경 위	1. '99행정사무감사(농림수산국소관 :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사무소 포함)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천안소방서, 천안입장~도계간도로공사현장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고
'99. 11. 23(화) 09:3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공무원교육원, 공주시)	
	교 사 위	1. 현지확인 - 보령청파초등학교 호도·녹도분교	
10:30	농 경 위	1. '99행정사무감사(경제통상국소관 : 서울통상지원사무소 포함)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서산대죽지방산업단지조성현장 - 태안안면우회도로공사현장	
'99. 11. 24(수) 09:4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홍성의료원, 서천군)	
	교 사 위	1. 현지확인 - 홍성교육청, 청양분뇨처리장 - 논산환경사업소	
10:30	농 경 위	1. '99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원소관 : 각특화작물시험장, 농산물원종장, 축산시험장 포함) 2. 현지확인(유성농업기술원시험포장)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충청남도운수종사연수원, 공주소방서	
'99. 11. 25(목) 10:3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계룡출장소)	
10:30	교 사 위	1. '99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환경국소관)	
	농 경 위	1. 현지확인 - 태안대길산B지구인공어초시설 - 태안대야지구용수개발사업장	
	건 소 위	1. 현지확인 - 논산소방서, 서천~장항도로공사현장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11. 26(금) 10:3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총무과, 충청남도체육회)	
10:30	교 사 위	1. '99행정사무감사(청양대학소관)	
	농 경 위	1. 현지확인 - 서산대산상설시장 - 당진송악지구경지정리사업장	
	건 소 위	1. 현지확인 - 부여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공사현장 - 부여왕진교교량공사건설현장	
'99. 11. 27(토) 10:3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감사관실)	
10:30	교 사 위	1. '99행정사무감사(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00	농 경 위	1. 현지확인(충남신용보증조합) 2. '99행정사무감사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09:30	건 소 위	1. 감사자료검토	
'99. 11. 28(일)		공 휴 일	
'99. 11. 29(월) 10:3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충남발전연구원, 공보관실)	
10:30	교 사 위	1. '99행정사무감사(여성정책관실 : 여성정책개발원 포함)	
11:00	농 경 위	1. 감사마무리및총평(농림수산국소관)	
	건 소 위	1. 현지확인 - 대전~금산복수도로공사현장 - 논산양촌~벌곡도로공사현장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고
'99. 11. 30(화) 11:3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자치문화국소관)	
10:30	교 사 위	1. '99행정사무감사(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감사마무리및총평(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1. '99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소관)	
'99. 12. 1(수) 10:3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실 : 정책관리관실 포함)	
10:30	교 사 위	1. '99행정사무감사(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감사마무리및총평(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1. '99행정사무감사(소방안전본부소관)	
'99. 12. 2(목) 10:30	본 회 의 (제 2 차)	1. 김남호의원청가허가의건 2.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9. 12. 3(금) 10:30	본 회 의 (제 3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9. 12. 4(토) 11:00	본 회 의 (제 4 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9. 12. 5(일)		공 휴 일	
'99. 12. 6(월)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기획정보실(정책관리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복지환경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1.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고
'99. 12. 7(화) 11:00	운 영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의회사무처소관)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자치문화국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여성정책관실소관)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건설교통국소관)	
'99. 12. 8(수)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계룡출장소, 공보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소관)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1.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소관)	
'99. 12. 9(목)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경제통상국,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1.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건설교통국소관)	
'99. 12. 10(금)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총무과소관(행자위소관부서예산안계수조정)]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교사위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예산안 및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농경위소관부서예산안예비심사의결)	
11:00	건 소 위	1.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소방안전본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12. 11(토) 11:00	예 결 위 (제 1 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예산안및99제2회추경예산안심사(도본청)	
'99. 12. 12(일)		공 휴 일	
'99. 12. 13(월) 11:00	예 결 위 (제 2 차)	1. 2000년도예산안및'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도본청)	
'99. 12. 14(화) 11:00	예 결 위 (제 3 차)	1. 2000년도예산안및'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도교육청)	
'99. 12. 15(수) 11:00	예 결 위 (제 4 차)	1. 2000년도예산안및'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도본청 및 도교육청)	
'99. 12. 16(목) 10: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공주~논산통과를 위한건의안	
11:00	본 회 의 (제 5 차)	1.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6.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9.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공주~논산통과를 위한건의안	
'99. 12. 17(금)	행 자 위	1. 현지시찰(당진함상공원조성지역)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 2. 충청남도지하수조례안	
11:00	농 경 위	1.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건 소 위	1. 현장방문(연기골재장 2개소)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12. 18(토)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주식회사삽교호함상공원출자에관한조례안	
	교 사 위	1. 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99. 12. 19(일)		공 휴 일	
'99. 12. 20(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 수강료징수조례안	
11:00	농 경 위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검토의건	
11:00	건 소 위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99. 12. 21(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주식회사삽교호함상공원출자에관한조례안	
11:00	교 사 위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검토의건	
11:00	농 경 위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건 소 위	1. 현장방문(유성종합건설사업소, 충남학사)	
'99. 12. 22(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검토의건	
	농 경 위	1. 현장방문(금산삼화산업사, 논산축협식육유통센타)	
	건 소 위	1. 현장방문(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9. 12. 23(목) 09:30	행 자 위	1. 당면현안사항보고(2000년맞이행사준비상황등) - 정책관리관소관	
11:00	교 사 위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농 경 위	1. 현장방문(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	
	건 소 위	1. 현장방문(천안소방학교)	
'99. 12. 24(금) 11:00	행 자 위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교 사 위	1. 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1. 현장방문(서천시장, 서천군장국가산업단지)	
	건 소 위	1. 현장방문(금산한국타이어공장)	
'99. 12. 25(토)		성 탄 절	
'99. 12. 26(일)		공 휴 일	
'99. 12. 27(월)	행 자 위	1. 현장방문(공주문화재보존관리실태파악)	
	교 사 위	1. 현장방문(대천수산고)	
	농 경 위	1. 현장방문(연기월산공단, 공주프러그육묘장)	
	건 소 위	1. 현장방문(공주골재장 2개소)	
'99. 12. 28(화)	행 자 위	1. 현장방문(공주문화재보존관리실태파악)	
	교 사 위	1. 현장방문(홍성가축위생연구부)	
	농 경 위	1. 현장방문(천안서창수경농장, 워크샵)	
	건 소 위	1. 현장방문(예산헬기장)	
'99. 12. 29(화) 10:30	운 영 위	1. 제13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본 회 의 (제 6 차)	1. 충청남도주식회사삽교호함상공원출자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 5. 충청남도지하수조례안 6.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 수강료징수조례안 7.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32		
조례안	1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4	1.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의안	1	1.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공주~논산통과를위한 건의안	
기 타	16	1. 의원선서(아산시 강태봉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33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2000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제출에 대한 도정연설 6. 200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연설 7.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5분발언 신청의 건(임성규 의원) 9. 청가허가의 건(김남호의원) 10.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1일차) 1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2일차)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13.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4.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5. 도정에 관한 발언(질문) 16.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4개위원회)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1999. 11. 20, 11:00) '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재욱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연설을 들었으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 제13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1999. 12. 2, 10:30)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윤석우(공주), 김중한(예산), 한창숙(비례), 박영조(서천)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3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1999. 12. 3, 10:30)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틀째를 맞아 신호균(홍성), 이진환(천안), 김동선(비례), 심정수(금산) 의원 등 4인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3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1999. 12. 4,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도와 교육청의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 제13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1999. 12. 16, 11:00) 도와 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과 충청남도장학회설립 및운영지원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2건,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2건,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공주~논산통과를위한건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3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1999. 12. 29, 11:00) 충청남도주식회사삽교호함상공원출자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5건,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2건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ㅇ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39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교 육 감 (99.11.10)	교사위	ㅇ수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체계 확립,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시간 336시간 이상, 수강료는 교육시간 및 대상 인원수를 감안 교육감과 연수기관장이 협의 결정	12. 29	12. 29	원안
140	충청남도주식회사삽교호함상공원출자에관한조례안	도 지 사 (99.11.20)	행자위	ㅇ안보의식, 바다 이해 등 공익성과 경영수익 추구를 기본개념으로 한 함상박물관의 조성과 관련하여 함상박물관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근거 마련 -현금출자, 출자액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1/2미만,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출자	12. 29	12. 29	원안
141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11.20)	행자위	ㅇ석차에 의한 성적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교육부학업성적 관리제도와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장학생 선발 관리	12. 29	12. 29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42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11.20)	행자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선보완, 주민편익 도모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의 현실화 -소형광고물 허가, 신고시 원색 사진, 설계도 등 첨부서류 폐지 -시각 및 비행장애 예방을 위해 연막 등 기체이용 광고금지 등	12. 29	12. 29	원안
143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도 지 사 (99.11.20)	농경위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노사정 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	12. 29	12. 29	원안
144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	도 지 사 (99.11.20)	교사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구환경 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것임 -지역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별도설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12. 29	12. 29	원안
145	충청남도지하수조례안	도 지 사 (99.11.20)	교사위	○지하수의 보전대책 및 무분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수질오염 예방 -1일 양수능력 300톤이상 시설에 환경영향조사 실시 -지하수 개발 이용의 신고기준 설정	12. 29	12. 29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46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11.20)	건소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 대상 및 시설도 세분화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 점용료 부과 기준중 표시부분의 면적을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완화 -도로의 공익기능 강화	12. 16	12. 16	원안
147	충청남도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도 지 사 (99.11.20)	건소위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등에 연결시 도로관리청에 신청 -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	12. 16	12. 16	원안
149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도 지 사 (99. 12. 6)	행자위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일부경감 시켜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 조성 -충남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임원은 15인 이내 이사와 감사 2인	12. 16	12. 16	원안
150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12.10)	행자위	○소방용 헬기도입에 따른 신규정원책정 -소방항공대 : 6명(조종사 2, 정비사2, 구조요원2) -소방학교 : 3명(간호사1, 운전원1, 난방원1)	12. 16	12. 16	원안

ㅇ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151

호남고속철도건설 노선의 천안~공주~논산통과를 위한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1999. 12. 16.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1999. 12. 16)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1999. 12. 16.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교부,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 주 문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반드시 우리 지방의 천안-공주-논산을 통과 설치하여 줄 것을 별첨내용과 같이 강력히 건의함

□ 주요골자

○ 이미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확정 발표된 노선대로 추진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 충남내륙, 서해안 호남권의 연계가 가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함

○ 그 동안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충남권을 통과시켜 서해안권 및 백제권 개발에 활력소가 되게 함으로써 국토공간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여야함

○ 뿐만 아니라, 장기적·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는

- 21C 통일 후 아시아 대륙 물류기반구축 안목에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함

□ 정부등 관련기관 발표 노선안

① '93. 8. 25 정부에서 발표한 3개 노선안

〈투자소요액 : 1조원〉

제2안	서울~천안(경부고속철도공유), 천안~공주~논산(신설)
제1안	서울~대전(경부고속철도공유), 대전~목포(개량) 논산~목포(개량) 〈투자소요액 : 4조원〉
제3안	서울~천안(경부고속철도공유), 천안~공주~논산~송정리 ~목포(개량) 〈투자소요액 : 7조원〉

②최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추진한 대안 노선안

제1안	서울~천안(공유), 천안~공주~논산(신설), 논산~목포(개량) 〈투자소요액 : 6조6,000억원〉
제2안	서울~천안(공유), 천안~공주~부여~전주~광주(신설), 광주~목포(개량)
제3안	서울~대전(공유), 대전~목포(개량)
제4안	서울~오송(공유), 오송~박정자~논산(신설), 논산~목포(개량) 〈투자소요액 : 7조3,600억원〉

□ 「호남고속철도」가 천안에서 공주-논산을 통과되어야 하는 당위성

첫째, 국가계획의 적합성 측면에서 너무나 타당함

대단위 국책사업은 현실적인 투자경제성도 중요하지만 21세기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는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이 되어야 함

통일 후 아시아대륙 물류기반구축 구상과 국가 장기고속 철도망 계획인 일자형 고속철도망 구축과 일치하여야 함

둘째, 건설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도

고속철도노선은 장거리 고속·대량 수송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건설비용·승객의 운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오송분기시 경부선 공유로 인한 노선용량부족과 노선 곡선화 구배 불량에 따라 운행효율을 저하시키는 반면, 노선 직선화는 승객의 운임·기회비용절감과 안정성 및 운행효율을 높일 것임

셋째, 지역균형발전 기여측면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환황해권은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육성과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이 중요 과제임

과거 경부축 중심의 편중 국토개발은 시정되어야 하며 21세기를 대비하여 서해안 및 백제문화권(공주-부여)에 가장 근접한 노선채택은 「환황해축」 개발방향과 일치하며, 교통량 분산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

넷째, 교통수요측면에서도

교통문제 해결방식은 수요지향의 정책에서 지역균형개발에 의한 수요분산식으로 전환 되어야 함

대전권은 현재 경부·호남고속도로 및 철도 등 국가간선도로망이 집중 통과하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연결시 극심한 혼잡비용 가중으로 역기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천안 직결노선은 경부고속철도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부축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이며, 호남선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여할 것임

다섯째, 이용승객 편의성 측면에서도

철도노선은 주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수혜 대상자의 확대 폭이 최대가 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함

호남선의 주고객은 호남권 여객이 93.5%이며, 대전권 등 기타는 6%의 이용비중이 현실('98년기준)이며, 장차 고속철도의 장거리성으로 볼 때 대전지역 이용승객은 이용비중이 더욱 낮아질 것임

이러한 이유로 호남권 지역에서도 천안직결노선을 주장함

여섯째,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천안직결노선이 오송분기 노선보다 백제문화유적·계룡산 국립공원 보전, 국방중추

시설인 계룡대 보안유지 등에 이점임

공주지역을 통과하므로 문화유적의 훼손을 우려하나 공주 중심부를 5km 이상 벗어나 우려가 없는 반면, 대전 서북부 박정자 통과시 이전 불가능한 사찰 등 매장문화재가 천안직결 노선보다 15개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룡산 관통으로 자연경관훼손 및 생태계가 파괴되고 금남면의 단층지형통과로 지진에 취약하여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됨.

□ 우리도 입장 및 관련 동향

① 정부에서 발표한 제2안 또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제1안

※천안 ~ 공주 ~ 논산 통과

② 최근 호남고속철도건설관련 일련의 움직임

○ '97. 12월 기본계획 용역 완료하였으나 노선 선정문제 등으로 기본계획 미확정 상태이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에는 천안분기 노선으로 표기 상태('99. 7 현재)

○ 지난 11월 3일(광주학생의거 기념일) 대통령께서는 200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준공 하겠다고 선언

○ 한편, 충북 시민단체 등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 관철을 위하여 서명운동 추진과 충북도의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청와대·건교부에 건의서를 제출('99. 11. 30)하였으며, 충북도지사는 국무총리·자민련총재 예방하여 건의('99. 12. 3) 하는 등 오송분기, 박정자~논산노선 관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금후 계획

○ 도의회 의결 후 우리도와 의회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강력 건의

-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새정치국민회의대표, 자유민주연합총재, 한나라당총재 등 관계요로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공주~논산통과를위한건의안

대망의 새 천년 21세기에는 기필코 세계속의 선진국으로 도약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국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무총리님, 관계 부처 장관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는 당초「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할 목표로 그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하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3일, 200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준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모름지기 고속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교통망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토공간의 재편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기간신설 이용의 효율성이 우선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히 지역발전과 청주공항 연계성 등을 이유로 오송기점 및 대전통과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이해적 발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충남도민들은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정부안이 너무나 타당함을 다시 천명하며, 정부의 의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천안에서 분기 공주·논산을 통과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첫째, 국가계획의 적합성 측면에서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대단위 국책사업은 현실적인 투자경제성도 중요하지만 21세기 통일이후 까지 대비하는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 후 아시아대륙 물류기반구축 구상과 국가 장기고속철도망 계획인 일자형 고속철도망 구축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건설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도

고속철도노선은 장거리 고속·대량 수송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건설비용·승객의 운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오송분기시 경부선 공유로 인한 노선용량부족과 노선곡선화 구배 불량에 따라 운행효율을 저하시키는 반면, 노선직선화는 승객의 운임·기회비용절감과 안정성 및 운행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기여측면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환황해권은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육성과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이 중요과제 입니다.

과거 경부축 중심의 편중국토개발은 시정되어야 하며 21세기를 대비하여 서해안 및 백제문화권(공주-부여)에 가장 근접한 노선 채택은 「환황해축」 개발방향과 일치하며, 교통량 분산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교통수요측면에서도

교통문제 해결방식은 수요지향의 정책에서 지역균형개발에 의한 수요 분산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전권은 현재 경부·호남고속도로 및 철도 등 국가간선도로망이 집중통과하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연결시 극심한 혼잡비용 가중으로 역기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천안 직결노선은 경부고속철도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부축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이며, 호남선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용승객 편의성 측면에서도

철도노선은 주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수혜 대상자의 확대 폭이 최대가 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호남선의 주고객은 호남권여객이 93.5%이며, 대전권 등 기타는 6%의 이용비중이 현실('98년 기준)이며, 장차 고속철도의 장거리성으로 볼 때 대전지역 이용승객은 이용비중이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남권 지역에서도 천안직결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천안직결노선이 오송분기 노선보다 백제문화유적·계룡산국립공원보전, 국방중추시설인 계룡대 보안유지 등에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을 통과하므로 문화유적의 훼손을 우려하나 공주중심부를 5km 이상 벗어나 우려가 없는 반면, 대전 서북부 박정자 통과시 이전 불가능한 사찰 등 매장문화재가 천안직결 노선보다 15개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룡산 관통으로 자연경관훼손 및 생태계가 파괴되고 금남면의 단층지형통과로 지진에 취약하여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당초계획 천안직결노선계획은 너무나 타당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일부지역의 주장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우회하는 철도를 건설한다면 철도건설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길 것이며, 도심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전과 청주권에 또다시 호남고속철도 까지 통과시킨다면 도시과밀지역을 더욱 밀집시켜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반드시 천안-공주-논산으로 건설하여 주실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9년 12월 1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원 일 동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윤석우 의원(공주시, 자민련)

■ 질문1 : 상수원·군사보호구역 지정 개선 방안

·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번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는 개인소유라 해도 평생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행위제한 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있음.

이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유지의 면적이 자그마치 20,452㎢에 달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 거리, 즉 물의 흐르는 모양에 따라서 4㎞까지 지정하는 것이 표준으로 돼 있으나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여건과 취수량의 가감 등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획일적인 지정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고, 취수원 하류 쪽은 거의가 제방 밑에까지만 지정하는 것이 보통의 예이며 유역면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 옥룡동 취수원의 경우는 취수원 하류 쪽에서 대각선으로 200m 지점까지 포함 지정돼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m만 벗어나도 식당 또는 러브호텔들이 들어서 있어 각종 오수들이 막바로 취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도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함.

군사보호 구역의 면적은 수 천만 평에 해당이 되며, 한번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이후에는 전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큰 낭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봉암리는 군사보호 구역과 그린벨트가 같이 겹쳐 있고, 하신리의 경우는 그린벨트와 공원지역이 같이 묶여 있고, 원봉1·2리는 군사보호 구역과 산림보전지역이 겹쳐 있는 등 면 전체와 리 단위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그야말로 각종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기도 함.

아울러 우리 지역에 편입돼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유지는 정부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하류지역 쪽은 과감하게 이를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함.

진정한 4천만이 살고 싶은 인본행정의 실현을 원한다면 개별법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 응어리진 가슴을 반드시 풀어 주어야 되며, 해당토지를 매입하는 등 주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도 하고 과감히 풀어 줄 적극적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당장 해제하거나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주변여건의 변동을 감안하여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조정 또는 해제를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한을 받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매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제한구역의 축소 및 추가지정 억제, 편입토지 매입과 보상대책 강구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질문2 :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방안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천안시의 경우 '99년 10월말까지 1만2,285건에 20억2,300만원으로 그 부과액과 비율로 봐서는 3.2%에 해당되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6,585건에 8억9,800만원으로 부과액의 6.5%에 해당이 되며, 공주시 경우는 '99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 초기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납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 그리고 모든 시·군에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신용카드 납부제」는 작년 6월부터 천안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공주시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신용카드 납부제」의 도내 전 지역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부터 여건이 성숙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군 지역은 아직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생각이며,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부담함으로 해서 추가 징세비용 지출 문제가 있어 수수료를 인하해 주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2. 김중한 의원(예산군, 자민련)

■ 질문1 : 폐교된 학교의 재산관리 개선 방안

· 일련의 보도에 의하면 폐교된 학교가 위락시설로 개조되어 부락 주민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충남은 그런 사례는 없는지, 폐교된 학교 수와 매각된 학교 수, 그리고 임대한 학교가 몇 개 있는지, 매각 후의 현재 상태를 유형별로 점검해 봤으면 밝혀 주시고, 매각 기준이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의계약도 있었는지, 계약시 사후 활용목적을 제한할 수는 없는지, 조건을 제시하여 입찰을 할 수는 없는지, 그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매각할 수는 없는지, 현재 매각하는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매각된 학교 수와 총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우리 도내의 폐교학교 중 매각은 20개교, 임대는 72개교이며, 매각한 20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군민회관, 군부대, 주차장, 보령댐, 또는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3개교는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되어 매수자가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위락시설로 사용하는 폐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폐교 매각 시에는 토지 기부자,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폐교 학교의 매각 대금은 지금까지 총 44억6,700만원으로 전액 지역 교육청에 환원하여 통합 학교 등 교육 환경 개선비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매각 재산의 표시, 매매 금액, 대금 납부 기한, 계약보증금 납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행위금지사항, 계약해지사항, 소유권이전 관계 등으로 되어 있음.

앞으로 폐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질문2 : 도청이전 소요예산확보 대책 및 후보지 제안

· 도청이전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번 국정감사시 특위구성 및 기획단 운영의 의지를 밝힌 바, 이제는 도민에게 도의회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96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도청이전 비용 2조6,000억원은 현재 전남도청 이전 비용 1조7,000억원에 비해서 충남의 이전규모가 대단히 큰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도청이전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기타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는지 또한, 도청 이전을 기본으로 할 때 대전시에 있는 각 도 산하 기관별·단체별 제반 자산 평가 및 타 지역 토지시가를 연구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도청이 대전에 위치함으로써 현재 대전에 기여하는 금액이 도 공무원의 자동차세, 공무원의 생활비, 주민세 등 연간 20억, 가계비 약 320억, 도민들이 도청에 업무를 수행하러 왔다 갔다 하는 교통, 숙박, 각종 회의 참석자들의 숙박비로 대전시에 기여한 금액은 연간 수천억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대하여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도청이전 문제는 중앙일각에서 시·도 통합 등 개편 논의가 있다는 점과 재원 조달 가능성의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아직은 본격적으로 도청 이전을 논의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청이전 비용이 전남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해야 하는 신도시의 면적과 개발 형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음.

우리 도의 용역비에 계상된 것은 2조6,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의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계산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의 비용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음. 도청이전 기획단의 구성은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또 도청이전 논의가 재개되면 당연히 이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행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역에 소재한 도 산하 기관의 재산평가와 도청이 대전에 위치해서 대전시에 주는 이익 등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향후 상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내포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청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되어 유치선정이 거론될 때 여러 대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질문3 :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추진 계획

· 2002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국제 꽃 박람회에 대해 현재 국비 108억원을 확보하였고, 2000년 정부예산안에 613억원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됐으면 부족한 부분은 있는지, 있으면 그 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내 도유재산 57만평의 매각분양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 투자자가 있는지, 아울러 많은 소득과 친절이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며, 특위 구성과 기획단 발족에 대한 현재의 추진 사항 및 경제적인 효과로 657억원의 생산 유발, 사회·문화적 효과 화훼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원예 생산업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박람회장 조성에 282억원이 소요되고, SOC사업 등 지원사업에 2,219억원이 소요되어서 모두 2,6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7.8%인 1,505억원임.

올해 투자된 사업비는 477억원으로 국비가 108억원, 지방비 등이 369억원이며, 2000년도에는 계획된 국비 654억원의 80%인 524억원이 반영이 되었음.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비 등 지방비는 2000년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음.

도로·숙박·환경 등 기초 시설 확충은 박람회 준비의 핵심 사업으로 이를 위해 Task-Force 형태의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모두 59개의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2001년말 완료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임.

특히, 화훼의 생산·유통·신품종 개발과 선진 기술 보급으로 우리 나라 화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주민소득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한창숙 의원(비례대표, 자민련)

■ 질문1 :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대책

·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공무원은 3,069명으로 도전체 공무원 1만4,674명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한 실정이나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나 현재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하위직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현재의 불평등한 관행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함.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과 여성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하여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은 11월말 현재 3,042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4명이 재직 중에 있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국 단위급인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기획, 예산, 총무 등 주요 부서에 여성보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여성공무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서 채용목표제를 도입해서 2000년도에는 20%, 2002년도까지는 30%까지 확대 임용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여성이 공직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선의적인 경쟁이 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갈 생각임.

■ 질문2 : 여성발전 방안

· 타 시·도의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112억, 부산 8억, 대구 2억, 인천 5억, 광주 9억, 대전 3억, 울산 1억5,000, 경기 30억, 강원 20억, 충북 3억, 전북 12억, 전남 9억, 경북 4억, 경남 10억, 제주도는 5억원이 조성된 데 비하여 우리 도는 7,000만원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 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7,000만원은 도에서는 한푼도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여성단체에서 판매 수익사업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임.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에 대하여 2002년까지 위촉직 여성을 30% 수준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현재는 12.4%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여성정책관실만이 위촉대상위원 중 69.6%를 여성으로 위촉하였을 뿐 타 실·국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여성 발전 기금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경제난의 영향으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다보니까 기금조성이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목표 년도인 2004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30억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금년에는 23%, 2000년에 25%, 2001년에 28%, 2002년에 30%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 위촉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 각종위원회에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고, 건축·토목·환경 등 특정 기술분야의 전문직 여성 인력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관리대상 51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557명중 여성위원이 12.4%인 69명으로 위촉목표 2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앞으로 신규 위촉과 재위촉시 여성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하여 여성참여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음.

■ 질문3 :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 도내 16개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서 과연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16개소를 설치하여도 24.2%만을 처리한다는 보도내용도 있어 전국 평균 62.2%에 못미치는 아주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

· 우리 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단위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33개 시설에 1조96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음.

현재 천안시 등 5개 시설은 이미 완공되어 가동 중이고 보령시 등 22개 시설이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어 금년말에는 하수처리율이 28.6% 정도로 향상될 예정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5년에는 하수처리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산간이나 오지 등 설치가 사실상 곤란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내 모든 지역의 하수가 전량 차집 처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은 지방양여금 또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확보에 주력하면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도 재정융자 특별회계 알선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

■ 질문4 : 도민건강관리 예방 대책

· 요즈음 환절기를 맞이하여 도내 보건소에서는 감기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도내 보건소에서 준비한 예방 접종약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보된 약으로 도민의 몇 %나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서민을 위하여 추가로 구입 접종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

·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작년 수준보다 17%가 늘어난 37만6,000명분을 확보한 바 있었고, 지난 10월말에 발생된 천안, 당진, 보령, 서산의 일시적인 부족 현상도 추가 구입으로 큰 혼란 없이 대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접종의 경우 시설 수용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및 만성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 13만3,193명에게 실시한 바 있음

현재 독감 예방접종은 완료된 상태로써, 그 실적은 도민의 19.8%에 해당하는 37만6,191명임.

■ 질문5 : 안개지역의 원활한 교통 대책

· 앞으로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물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도에서도 보령댐과 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물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그러나 댐과 저수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빈발하게 사고를 내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실정이 많이 있다는데, 도 차원의 안개지역에 대한 원활한 소통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특히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댐, 저수지, 산간마을 주변도로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안개주의 표지 및 경보등을 설치하는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4. 박영조 의원(서천군, 자민련)

■ 질문1 : 장항 국가공단의 조기착공 촉구

· 장항국가공단은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반면에 군산측은 현재 41.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장이 가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일부를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음.

장·군 국토종합계획은 장항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역의 문제로 충남발전의 관건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청 출신 중앙 정치권과 자치행정권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하여 범도민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함.

그리고 충청지역 출신 중앙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자세와 국가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몰아가는 특정 정치권과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면서 장항국가공단이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관련한 추진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현재 장·군광역권 개발계획의 추진은 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제4차 국토계획에 전주지역 포함과 관련해서 개발축의 이동, 신산업권과 대도시권의 개발성격,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주권 포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건교부에 전주권 포함 반대 논리와 함께 전주지역은 별도의 대도시권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11월 23일 자민련 대책회의시 최고 현안사업으로 보고하고 당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한 바가 있음.

이 문제는 앞으로 전주지역을 별도의 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장항산업단지 조기착공을 병행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서천~대전간 고속도로 신설이라든지 보령~조치원간 철도건설 등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우리 충남권의 개발계획을 4차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에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 질문2 : 충남도와 대전광역시간 통합 방안

· 지난 '89년 1월 1일자로 충남도에서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 중추역할을 담당한 대전권이 없는 충남은 모체를 잃어버린 양 약화일로에 있었으며 충남도민과 대전시민간의 이질감, 예산낭비요인 등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의 해소를 위해 도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지선정과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도청이전 문제보다는 차라리 충남·대전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음.

충청권의 결집을 통한 세를 확장하고 충청권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충남·대전간의 통합문제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충남·대전간의 통합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동등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서 통합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은 없음.

다만 이 문제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또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며 이제 분리가 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함.

■ 질문3 : 기능대학 설립대상지 선정 촉구

· 도내 각 지역에는 대학원을 제외한 전문 또는 정규 대학만도 총 34개가 운영 중이거나 설립 중에 있으며 도내 각 시·군중 서천지역만 대학이 없는 가운데 이 지역은 대학이 없는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지사님께서는 작년도 어느 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해 주도록 노동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기능대학 설립은 당초 도에서도 장·군 공단 개발에 따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8년 6월 노동부에 서천군 지역에 설립을 건의하였고, 노동부에서도 '98년 7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99년 사업비로 9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및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재정형편을 고려, 기능대학의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됨에 따라 전액 삭감된바 있음.

노동부에서는 당초 충남 서남부권의 공장입지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서 서천지역에 기능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방침이 신설은 불가한 것이 기본입장으로 해서 그 대안으로써 현재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충남직업학교를 기능대학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노동부에서 마련하여 지난 '99년 9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강경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서천기능대학 신설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장·군 공단개발과 연계하는 등 서천 기능대학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질문4 : 도내 초등학교 여성교원의 지위향상 방안

· 도내 각 초등학교에는 총 6,672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남자가 3,053명 여자가 3,619명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54.2%를 차지하고 있는 바,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여성 교원에 대하여 승진 임용시와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 우대를 해주고 있으나, 매우 미흡하다고 보면서 교육감님께서는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승진임용을 위해 고가점수제도의 개선과 일정비율을 여성교장·교감으로 임용 할 수 있는 인사관리 특별법 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현행「교원승진규정」상으로 여성교원을 우대하고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순위명부 등재자 중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에 속하는 여교사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교감, 교장 승진 임용시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 중에서 승진인원의 2배수 이내인 여성교원은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임용을 하고 있음.

앞으로의 전망은 승진 규정상의 우대 정책으로 여성 교원들이 승진에 대한 의욕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하고 있어 많은 수의 여성 교원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임용되리라고 생각함.

5. 김재봉 의원(아산시, 자민련)

■ 질문1 : 호남고속철도의 천안 분기 촉구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는 우리 충청남도가 요구하고 건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바대로 천안을 기점으로 공주~논산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으나 충청남도 의견이 전폭적으로 수용된 호남 고속철도 천안을 기점으로 해서 공주~논산을 연결하는 기존노선에 대한 바로 이웃인 충청북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충청남도 내륙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천안을 기점으로 하는 공주~논산을 연결하는 호남 고속철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음.

3개 시·도가 의견이 분분할 때 이것을 조정하고 3개 시·도가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행정을 협의하기 위한 일종의 기구라고도 생각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이 광역 행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서 하나의 실효성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며, 충남의 균형적 발전과 21세기 새로운 서해안 시대의 역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힘을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함.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 案인 천안~공주~논산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확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제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제4차 국토계획 확정 안에 따르면, 우리 도의 노선 의견인 천안~공주~논산으로 변함없이 결정되어 있으나 이 문제도 혹시라도 확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음.

6. 신호균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제4차 국토종합건설계획안의 문제점과 대책

·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건설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의 장항·군산 광역권 개발 계획에 전주 지역을 포함시켜 확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주지역을 포함 편입시킨 것은 충청남도를 소외시키고 전북지역 위주의 개발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앞서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장·군광역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미래지향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이 미 반영된 것이 몇 개 사업이 있음.

그 중에서 보령~조치원간 철도, 서천~대전간 고속도로 등 주요 몇 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리며, 다만 아직 계획대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철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장항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 그리고 현재 미보상에 대한 어업권의 조기보상, 서천~공주간의 고속도로 사업, 그리고 장항측 공단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2 : 도내 실업대책문제 해결 방안

· 대학 졸업자의 취업문제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특히 지방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내의 경제단체, 사회단체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이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우선적으로 젊은이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취업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시에 구직된 실업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도내 실직 노숙자 및 부랑자는 없는지,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우선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민종기 〕

· 그동안 고급인력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BI사업이나 TBI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내 벤처사업의 창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중소기업연수원에 벤처 예비창업자 과정 교육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지방노동관서와 협조하여 지금까지 395개 업체에 860명을 취업시킨 바 있고,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34개 업체에서 1,338명의 원서를 접수하여 249명이 채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 질문3 : 도내 지하수 관리대책 마련 촉구

· 현재 도내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현황을 보면 1일 시설용량 29만2,500톤에 용수 사용량 11만1,750톤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농공단지 및 개별공장 인근 하천수량의 격감과 대형 관정에 의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용수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은 이미 알려진 현실인바 부존자원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하루 속히 지하수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농공단지 용수공급을 위하여 광역 상수도나 공업 용수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부터 착수한 아산 공업용수로 1단계 사업이 금년 11월 12일 준공해서 서북부지역에 1일 35만톤의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2단계 사업은 2001년까지 완공하여 1일 22만톤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아산지역의 주요공단과 당진군에 추가로 공급하게 될 것임.

아울러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은 지난 '96년에 착수하여 2001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업용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도의 수자원 용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4 : 충남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방안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2년에 개통될 경우 서북부지역의 경제·문화권이 경기·서울지역이 일일생활권이 됨에 따라 대도시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서해안 개발의 이익을 충남·대전권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전에서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국도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 공주~예산, 공주~청양~홍성, 그리고 대전에서 당진간 고속도로 설치가 매우 시급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이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도 서북부지역의 경제·문화권이 수도권과 일일생활권이 됨에 따라 서해안 개발이익을 우리 도와 대전권에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내륙과 대전권내에서 서해안으로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간선도로망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도에서는 벌써부터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건설 등 서해안과 연계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질문5 : 교실 붕괴와 교원들의 사기앙양 대책

·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로 교원들에게 체벌금지, 징계·퇴학금지 등 학생들의 통제권을 박탈한 것으로 인하여 이를 잘못 해석한 학부모들의 지나친 자식 사랑의 결과로 교원을 무시하고 폭력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교원들이 부모나 상급기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잠자는 교실" 이라는 말들이 오갈 정도로 교실이 붕괴되고 있으며, 교원들의 정년이 3년이나 감축되어 교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바 교실붕괴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에 교원들의 교권확립을 위한 사기앙양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교실 붕괴 현상은 매스컴의 보도나 국민들의 걱정만큼 전면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용기를 잃은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적극적이고도 역동적인 교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에 의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만족스런 대책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7. 이진환 의원(천안시, 자민련)

■ 질문1 :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5급이상 공무원의 교류는 '97년도에는 31명, '98년도에는 87명, '99년도에는 31명에 그치고 있어 도와 중앙간, 도와 시·군간 점차 단절됨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인사교류 단절의 문제점과 역기능을 먼저 지적하고자 함. 따라서 민선2기 출범 이후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시도한 내용과 그 결과 및 실패한 경우 그 유형은 무엇인지, 또한 민선 이후 인사교류 제도화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제도화하고도 추진이 미흡하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

· 민선자치 이후 지역출신 선호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다 큰 근본적인 원인은 '98년이후 구조 조정에 의한 정원 감축의 영향으로 초과 인원이 발생됨에 따라 인사교류의 제약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동일한 기간 장기 근무자 및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정기교류와 우수인력 수요를 위한 도, 시·군간 교류기준 등을 마련 중에 있음.

앞으로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를 정예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음.

■ 질문2 : 소방직 공무원 인력 확보 대책

· 올해의 2차 구조조정시에 소방공무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으나 전쟁이 안난다고 군인을 감축할 수 없듯이 불이 안난다고 소방공무원을 줄이거나 적정인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함.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맞는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의 소방인력 적정확보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업무 분야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정원확보 및 관리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

· 우리 도의 경우 공무원 총 정원 2,970명 가운데 소방직 공무원은 1,114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98년도 1차 구조 조정시에는 총 정원의 12.6%를 감축하였으나, 소방직은 7.6%만 감축하였으며 금년도 2차 구조조정시에도 소방직 정원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구급 분야의 업무임을 감안해서 소방직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음.

■ 질문3 : 부채상환 대책

· 지방자치단체도 과다한 부채 때문에 자치단체 파산, 또는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바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부채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적정한 부채로 판단하는지, 연도별 적기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부에서도 재정적자 및 채무감축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방안은 없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의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은 '99년도에 912억원, 2000년에 832억원, 2001년에 801억원, 2002년 810억원 등 2014년까지 매년 지방채 상환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분산되어 있고, 상환재원도 전체 7,111억원의 채무중 3,562억원만 지방비로 상환하고, 나머지 3,549억원은 특정재원으로 상환하는 등 채무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채무비율도 도 본청이 7.62%, 시·군이 9.83%로 적정 수준인 적채비율을 대체로 20%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도에 비하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무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채무축소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은 국책사업, 재해대책사업 등 긴급 필요 사업에 국한시키는 등 부채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임.

■ 질문4 : 2000년대 물 부족 해소 대책

· 우리 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49%로 전국 평균 7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공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있는 서북부 지역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는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주민생활이나 지역경제에 큰 불편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장기용수공급계획에 대하여 재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96년도에 수립한 충남장기용수공급계획에는 예상 소요량 과다 추정 및 수요관리 소홀과 그 동안 여건변화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해서 제3차 도 건설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수장 건설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림.

■ 질문5 : 폐교된 학생시설 활용 방안

· 폐교된 학교시설이 지역 주민 및 인근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당장 매각이나 임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청소년 캠프교실, 노인복지시설, 문화공간, 현장체험 학습장, 연구소 사무실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폐교된 학교 중 매각이나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주민들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현재 임대 및 매각추진 중인 39개 학교는 지역여건상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고 활용 희망자가 적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매수 또는 임대 희망자를 찾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함은 물론, 도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이 복지시설,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음.

8. 김동선 의원(비례대표, 국민회의)

■ 질문1 :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촉구

· 정부에서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여성의 능력 발전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라고 볼 때, 우리 도에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새로운 분야까지 추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에서는 여성능력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여성복지와 관련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조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여성정책개발원 설립및운영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현재, 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여성 관련 조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성능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질문2 : 여성 농업인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여성 농업인에 관련하여 여성 농어민 후계자 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정책 전담 부서나 탁아소,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내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여성농업인 후계자 제도 운영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 선정시 남녀가 동일 조건일 경우 여성 농업인을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 연합회를 통해서 각종 교육과 도·농 교류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도내에는 5개소의 산후 조리원이 있고, 687개소의 보육 시설에 2만7,0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우리 도내 고학력의 젊은 여성과 농촌을 지키고자 첨단 농업시설을 갖춘 여성농업경영인 757명을 선발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젊은 여성 농업인을 신지식인으로 추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여성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3 : 방역 소독으로 인한 오염피해 대책

· 방역소독의 경우 사용약품인 살충제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검증한 바가 있는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를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중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의 복개 하수도 체제 아래에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와 수질과 토양에 미치는 오염 피해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

· 살충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할 경우나 피부 접촉을 통해서 독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독성이 낮은 제품으로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며, 연막 소독시 용매제로 사용되는 경유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 여부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조사·연구된 바가 없고, 연막소독 작업자에 대한 피해 사례도 확인된 바 없음. 또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적어서 국가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복개된 하수구 체계에서 연막소독의 효과는 아주 저급으로 모기의 성충 구제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맨홀 소독의 경우 대부분 맨홀 뚜껑을 열고 분사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질문4 : 교육행정에 여성참여 목표제 실시 방안

· 한국여성개발원의 정책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보직 및 근무평정 면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여성공무원이 80%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진취욕구 부족」「가사지향적성향」이라는 이유보다도 남성의 우월감으로

인한 여성의 차별대우에 더 큰 이유가 있음. 따라서 도내 15개 시·군 중 여성 교육장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과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들 중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개선 방안과 교육행정 각 분야에 여성 참여 목표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 초등의 경우 여교사 계열 및 유치원 교사 계열을 별도로 두어 선발하고 있으며,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정 시에는 여성 교원인 경우 연수대상자 종합순위 명부에 연수대상 인원의 1.5배수 이내인 자는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육전문직 전형에서는 응시자 166명중 여자 교원 24명이 응시하여 그중 8명이 합격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11월 현재 여성 교육전문직은 초등 15명, 중등 11명이 임용되어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

여성 교육장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으며, 일반직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체 1,624명중 41%인 66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 행정기관 또는 중요 부서에 적의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5 :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소질개발을 위해서「방과후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이 제도는 공교육기관에서 생활능력이 있는 자녀들만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 일반 학원과 같은 경쟁심리가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대학입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학교내부 강사가 참여할 경우 외래강사와의 차등을 둔 보수문제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일부 학생들은 시내 일반학원에 다시 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교육비 부담이 어려워 수강을 못하고 있는 서민계층, 농어촌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그 동안 적성교육 이수자 현황 및 문제점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특기·적성 교육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학생들의 소질개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1학기에 특기·적성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중학생이 3만 9,417명으로 52%이고, 고등학생이 4만2,913명으로 46%임. 또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직교사의 강사비를 전에 실시하던 보충수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강사에 대해서도 강사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앞으로 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9. 심정수 의원(금산군, 국민회의)

■ 질문1 : 노인복지 정책 확대 촉구

· 농촌에 노인 인구 노령화가 도시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에 대한 노후대책은 거의 준비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 노인 스스로 87.9%가 별다른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통계이기도 함.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사회복지 차원을 떠나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과 소외받던 노인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우리의 고유에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

· 우리 도의 노인현황을 보면 '94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4.7%씩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노인의 인구는 19만 5,613명으로 도민의 10.2%를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도의 기금은 20억원 이상, 시·군을 포함하여 총 87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내실을 기해 신체적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덜어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의 정례적인 지급과 용돈 마련을 위한 일거리 마련, 취로사업에의 참여기회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2 : 금산인삼 세계화를 위한 방안

· 금산은 전국 인삼 유통량의 80%를 차지하는 인삼 유통의 메카임.

지사님께서 진심으로 인삼 세계화를 원하신다면 생산액, 소득, 수출액의 비중이 도내 5개 특화작목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우리 금산 인삼을 지역화 특화작목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과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금산지역을 인삼특구라는 경제특구로 지정되어서 관광과 건강을 위한 명소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인삼 신품종육성, 토양개량 등 재배와 관련된 연구기능은 국가의 연구소인 인삼연초연구원과 협력해서 현행대로 담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으며, 금산 현지에 있으면서, 이런 우리 인삼연초연구원과 연계되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두고 있음.

재배연구 못지 않게 인삼의 상품화 연구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외시장개척 등 유통판매, 신제품 개발, 홍보판매를 위한 연구기능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인삼물류센터에서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음.

아울러, 금산 지역을「인삼특별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농산물 중심의 특별 구역 설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관광진흥법에 관광특구제도가 있으나 인삼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봄.

■ 질문3 : 금산댐 건설반대 촉구

· 매년 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최근에 용담댐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금산에 설상가상으로 금산댐까지 막아 1개면을 완전히 침몰시키면,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해당 주민 대부분은 잠을 못이루고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인 바, 지난 7월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 전문가들의 워크숍이 있었다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건설관련 쟁점과 향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의 진정한 뜻을 생각하는 깊은 의지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림.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서는 금산댐 건설로 예상되는 수몰지 과다로 인한 주민반발과 인삼피해 문제, 그리고 대청댐과 용담댐을 연계한 용수공급의 합리성 분석 등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 검토해 줄 것을 의뢰한 바,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금산댐은 경제성이 낮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용담댐 용수 배분량을 조정하여 여유수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대청댐의 용수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음.

도지사도 금산댐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고, 또 설령 이 문제가 검토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해도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음.

Ⅳ. 5分 發言 要旨

1.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행정이 민생위주가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다고 봄.

이는 도민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부족이니, 인력부족이니 등을 이유로 삼겠지만 결코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우리 충청남도는 2000년도 예산이 1조5,000억원이 넘는 큰 살림을 하고 있음.

각 시·군의 예산확보와 배정을 놓고 연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한 예산 배정을 위한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정확하고도 공정한 예산심의 및 배정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2000년도의 우리 충남 살림은 내실을 기할 수 없으며 지역의 소외감과 반목만이 생겨날 것임.

지난 '96년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제부터 각 시·군에 배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논산은 '96년도에 1,317억원이었던 것이 '99년도에는 1,621억원으로 겨우 300억원이 증가되었음.

그 동안의 논산시의 비약적인 발전의 변화와 전혀 배치되고 있으며, 논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시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산이 감축되고 긴축예산으로 도의 살림을 펼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을 줄 압니다만 혹시 지사의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예산편성이 아닌지 의문이 감.

■ 교육시책의 홍보와 일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

· 충남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교육시책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시책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여야 함.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서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을 없애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홍보는 시책의 추진계획과 문제점·대책 등 주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바를 알게 해 주는 것임.

추진하는 시책의 홍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및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교육감은 충남교육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입안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할 책임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수시로 일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선현장의 실상과 요구사항들을 생생하게 체험 파악하여야 함.

교육감의 충남교육시책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일선현장의 의견수렴 계획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음.

第14節 第134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34회 임시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00년도 신년인사와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경섭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1. 12(수) ~ 1. 15(토), 4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1. 12(수) 10:10	운 영 위	1.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6. 충청남도의회자료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7. 충청남도의회의원상호부조규약중개정규약안 8. 제1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3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충청남도지사신년인사 3. 2000년도충청남도교육감신년인사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1. 13(목)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현장방문(천안소방학교)	
2000. 1. 14(금) 11:00	행 자 위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설명회	
11:00	교 사 위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설명회	
11:00	농 경 위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설명회	
11:00	건 소 위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설명회	
2000. 1. 15(토)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4		
조례안	9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5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3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000년도 충청남도지사 신년인사 4. 2000년도 충청남도교육감 신년인사 5. 5분 발언 신청(박찬중 의원)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1. 12, 11:00) 2000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와 오재욱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인사를 청취하였다.

○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1. 15, 11:00)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9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38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99.11.10)	교사위	○상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 -학원 및 교습소의 시간과 부제 교습회수 등의 폐지	2000. 1. 15	2000. 1. 17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강사의 해임 통보 5일이내→10일이내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신설, 삭제 및 조정			
152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99.12.30)	행자위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 조정 등 -여자공무원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경조사 휴가기간중의 공휴일로 휴가일수 삽입, 남계와 여계친족간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 확대	2000. 1. 15	2000. 1. 17	원안
15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0. 1. 5)	교사위	○2000년 3월 1일자로 신설·폐지 또는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위치를 삽입·변경·삭제	2000. 1. 15	2000. 1. 17	원안
154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 1. 12)	행자위	○지방세법개정으로 지역개발세의 세율이 상향조정되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기능조정 -과세표준심의위원회별로 신설	2000. 1. 15	2000. 1. 17	원안
155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 1. 12)	행자위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코자 성업공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이 대상기업으로부터 재산인수시 한시적으로 세제감면 혜택 부여	2000. 1. 15	2000. 1. 17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현행 감면규정중 수익성이 높고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과 흑자전환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전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156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00. 1. 12)	본회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금액조정 -회의수당→회기수당(6만원→8만원) -의정활동비 500,000원→700,000원 -보조활동비란중 100,000원→200,000원으로	2000. 1. 15	2000. 1. 17	원안
157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00. 1. 12)	본회의	○법령의 개정에 의거 일부규정 개정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	2000. 1. 15	2000. 1. 17	원안
158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00. 1. 12)	본회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	2000. 1. 15	2000. 1. 17	원안
159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00. 1. 12)	본회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정 -조례의 인용법령을 변경 : 제46조→제46조의 2	2000. 1. 15	2000. 1. 17	원안

Ⅳ. 5分 發言 要旨

1.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도금고 선정 관련

· 유감스럽게도 금번 도금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본 의원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될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음.

철저한 확인행정의 외면으로 도금고의 재선정에 대하여 파문을 일으키게 된 궁극적 책임은 바로 우리 충청남도지사를 보필하지 못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의 책임 또한 면치 못하리라 저는 생각이 됨.

도금고 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사관계의 규정,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사결과 평점 기록표, 입찰참여 3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입찰서류 등 일체 공개치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를 즉각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함.

또한 실추된 도의 위상을 시급히 회복해야 된다고 또한 본 의원은 보고 있음.

따라서 책임행정 구현차원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관계관의 문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第15節 第135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35회 임시회는 2000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창구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2. 14(월) ~ 2. 28(월), 1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2. 14(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35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4. 2000년도충청남도교육청업무계획보고	
2000. 2. 15(화)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기획정보실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소관)	
2000. 2. 16(수) 10:00	행 자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감사관실소관)	
09:30	교 사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청양대학소관)	
	농 경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2. 17(목) 10:10	운 영 위	1. 제13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000년도업무계획보고(의회사무처소관)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자치문화국소관) 2.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소관)	
	농 경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11:00	건 소 위	1.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2000년도업무계획보고(소방안전본부소관)	
2000. 2. 18(금)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공무원교육원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포함)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경제통상국소관)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2000. 2. 19(토)	각상임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2000. 2. 20(일)		공 휴 일	
2000. 2. 21(월)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총무과,충남발전연구원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원소관)	
	건 소 위	1. 현장시찰 - 백제역사재현단지건설관련경주보문관광단지답사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2. 22(화)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계룡출장소, 공보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1.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	
	건 소 위	1. 현장시찰 - 백제역사재현단지건설관련경주보문관광단지답사	
2000. 2. 23(수)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2.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사 위	1. 현지확인 - 여성정책개발원, 용남고등학교	
11:00	농 경 위	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2000. 2. 24(목) 10:00	본 회 의 (제 2 차)	1. 제1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2000. 2. 25(금)	각상임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2000. 2. 26(토)	각상임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2000. 2. 27(일)		공 휴 일	
2000. 2. 28(월) 11:00	본 회 의 (제 3 차)	1.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2.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 7.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9.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8		
조례안	9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1	1.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 타	8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3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0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5. 200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보고 6. 제13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7. 제13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8.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2. 14, 11:00) 2000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과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와 오재욱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다.

○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2. 24, 10:00) 제1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의결하였고,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용설(홍성), 박동윤(태안), 임성규(논산) 의원 등 3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2000. 2. 28, 11:00) 충청남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3건,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5건, 충청남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건,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60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 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00. 2. 8)	교사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준용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위원회 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조정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 등	2000. 2. 28	2000. 2. 28	원안
16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00. 2. 8)	교사위	○2000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위치를 삽입하려는 것임 -초등학교신설 : 천안부영초등학교	2000. 2. 28	2000. 2. 28	원안
162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00. 2. 9)	행자위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공인규격이 조정됨에 따라 공인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전자문서시행에 따른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2000. 2. 28	2000. 2. 2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63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도 지 사 (00. 2. 9)	행자위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재정보전금의 구체적 배분기준, 산정방법,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도세(공동시설세 제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조성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60은 당해 시·군의 인구수, 100분의 40은 당해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각 배분	2000. 2. 28	2000. 2. 28	원안
165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	도 지 사 (00. 2. 9)	농경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수리계의 조직기준, 경비부과기준, 해산기준을 규정함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0. 2. 28	2000. 2. 28	원안
166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도 지 사 (00. 2. 9)	농경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외 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외국인 투자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투자유치위원회 설치(11인 이내 구성)	2000. 2. 28	2000. 2. 2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67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 2. 9)	농경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지방중소기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2000. 2. 28	2000. 2. 28	원안
168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 2. 9)	건소위	○하천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중 공유수면과 관련된 조항 및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공유수면 점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삭제 -군사시설,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이익을위한 비영리사업 점용의 경우 점용료 100% 감면	2000. 2. 28	2000. 2. 28	원안
169	충청남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00. 2. 9)	건소위	○하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제사무에 대하여 -규제완화차원에서 하천법 제58조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	2000. 2. 28	2000. 2. 28	원안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전용설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도청 이전 기획단」 운영 여부

· 도청 이전은 전 도민들의 큰 관심 사항이므로 도청이전기획단 운영과 설치시기 등을 확실하게 밝혀서 우리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청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앞으로의 논의에 대비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도청이전기획단을 재가동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도 답변을 통해서 도청이전기획단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재가동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음.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는 의회와 보다 더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협의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도청이전기획단을 최소 인원으로 다시 구성해서 가동해 나갈 생각임.

■ 질문2 : 보령댐 급수 및 수질개선 대책

· 보령댐은 지난 '92년 4,340억을 투자, 댐 조성공사를 98년에 완공하여 충남 서해안 7개 시·군에 하루 22만 6,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당초 계획 급수량의 10%밖에 안되는 2만6,500톤만을 보령시 등 4개 시·군에 겨우 급수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음. 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왜 계속 썩은 물을 그대로 급수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당초 급수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하여 현재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보령댐의 현재 수질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질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는 원인은 시장·군수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는 지선관로 사업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으로 지선관로 사업비는 총 1,61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시·군비 투자가 미흡해서 현재까지 342억원만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10%에 불과한 2만3천톤을 급수중에 있음.

■ 질문3 :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비 국비지원 방안

·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 보령, 서산, 홍성, 태안, 당진, 예산, 서천등 7개 시·군은 댐 조성비를 부담하느라 410억6,100만원의 빚을 지고있는 실정인 바, 식수난을 해소하고 보령댐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광역 상수도 수로 시설비 90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재정이 빈약한 시·군을 도와주실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서는 광역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부터 무려 11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줄 것과 국가지원 송수관로가 읍·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열악한 시·군 재정 형편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4 : 지방세 담세율과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방안

· 도내 시·군별로 지방세 부과 내용을 보면, 당진군은 청양군보다 무려 두 배나 많이 부담하는 등 시·군별로도 지방세 부담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지방세 징수는 과세대상 물건과 관련법에 따라 징수하는데, 이같이 과중하면서도 불평등하게 부과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

· 우리 나라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서 세법에서 정한 세율체계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어 우리 도민이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할 수 없는 바, 도내 지역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나는 것도 같은 이치임.

그리고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대상 현황과 감면규모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중에 있어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법령 개정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는 적용 시한이 끝나는 금년 말에 일제히 정비하여 공정한 과세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질문5 : 국·도비의 불균형 지원 개선 촉구

· 예산의 지원은 자체 재원이 빈약하고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 배분이 원칙인데도 특정 지역에 집중 지원 하는 것은 혹시 정치적인 배후가 작용한 것인 지, 소외된 시·군의 주민들도 도민의 일원이므로 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평등한 국·도비 지원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국·도비 지원은 지역별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수요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관계로 매년 시·군별 국·도비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수해복구 등 특수 여건에 따라서 지원되는 각종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국도비 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다만, 본래의 취지를 명심해서 국·도비 지원이 특정지역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고, 특히 균형개발 측면에서 저개발 지역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

■ 질문6 : 국비지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 촉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보면, 국비지원 사업에 도와 시·군비 의무부담비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가 이 규정을 어기고 금년도 예산중 농업부분인 농산물 규격출하,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규산·석회질 비료 공급예산과 사회복지 부분의 의료보호사업, 경로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의 예산에 도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시·군에 떠넘긴 사실이 있는 바, 도 부담금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떠넘긴 이유와 이들 사업별 예산규모를 밝혀 주시고 금년 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는 정부에서 지역 형편을 고려치 않고 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책정한데 더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 재정 형편상 투자 효과와 주민 수혜 정도 등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의 경우 부득이 도·시·군의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어려운 도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방비 부담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2. 박동윤 의원(태안군, 자민련)

■ 질문1 : 서산 A·B지구 매립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촉구

· 서산 A·B지구는 1980년대 시작한 현대의 4천만평이 넘는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황금 어장인 천수만에 의지하며 살았던 홍성, 보령, 서산, 태안지역의 피해주민 중 아직까지 현대 측과 합의 및 보상이 안된 세대가 3,644세대인 바, 그 동안 보상협상은 결렬된 채 보상해결을 위한 반복된 시위, 진정, 법적소송 등 결국은 힘없는 우리 어민들만 한숨과 실의에 빠져 있는 실정임.

우리 충남도 민원 중 가장 오래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 다시 한번 재삼 관심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 등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현대 측에 천수만 어민보상 문제를 도민의 입장과 처지에서 적극 중재해 주실 것은 물론 관련 부처와 협의 및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가구는 3,644세대로서 그 동안 보상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태안군 고남·남면지역 보상누락 어장 어민 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 그 동안 협상재개를 위해 현대건설 측과 계속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현대건설 측은 모든 보상민원 사항이 소송 계류중에 있다는 이유로 협상재개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피해 어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종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아울러 현대 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 질문2 : 서산 A·B지구내 농지분배 문제의 해결 촉구

· 현대에서는 농림부와 합의 각서와 관련하여 간척을 하면 몇 %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법으로다 안주겠다고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앎. 현대는 현재 농사지어서 생산을 해 이득을 보고 있고, 그 농지분배라도 좀 받아 가지고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 또 한번 다시 현대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현대와 충남도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A·B지구의 농지분배는 총 8,007세대에 4,003.5ha 정도가 되며 제출시기는 '97년 9월, '98년 2월, '99년 8월 3회에 걸쳐서 제출을 했으나, 현대건설 측에서는 이러한 도와 농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현대건설 측에 강제 매각 명령을 하기 위한 법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농림부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피해 어민들에게 농지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3 : 간월·부남호의 철새보호구역지정 문제점과 대책

· 간월호와 부남호 담수지역이 천연기념물 철새 도래지 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전법에 의해 규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큰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여건과 보호법에 대한 법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간월호와 부남호는 지난 '98년과 '99년 상반기에 현지 실태 조사와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이 천연기념물 철새 도래지로 지정 될 경우 관광객 유인 효과와 함께 자연학습장으로서 활용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농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간월호와 부남호의 담수 지역만을 철새 도래지로 지정해 줄 것을 '99년 12월 문화재청에 신청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1월 20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앞으로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역할해 나가겠음.

■ 질문4 : 도유재산의 관리방법 개선

· 그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유재산을 임대 하고 몇 년 지나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고 도의 공고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했습니다만, '87년 이후 도유재산관리를 특별하게 하겠다고 해서 매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제 도에서도 그 지역의 개발 계획이 원만히 끝났으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팔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

· 도유재산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1만㎡이하의 경우에만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농가주택이 있는 대지는 읍·면지역의 대지 700㎡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에 한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은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각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질문5 : 지방도 관리 문제의 개선 방안

· 2002년 국제꽃박람회 예정 지인 안면지역 지방도 신규사업 도로와 기존 도로의 연계점 병목현상은 현실을 외면한 설계대로 착공되어 시속 13km내로 예상되어, 국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급히 교통문제 전문단체에 의뢰해 검토해 보거나 잘못된 지방도 관리문제를 비롯한 제반사항을 과감히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도로의 신설이나 선형개량시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간에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잦은 민원이 있으나 공사 시행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과다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특히, 2002년 꽃 박람회와 관련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용역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교통 통제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으로 지방도 관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요자인 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해소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아갈 계획임.

■ 질문6 : 폐교활용방안 수립 촉구

· 충남교육청 관내 매각한 폐교 수가 23개이나 매각 처분에 따른 문제점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지역주민들이 기탁한 토지와 기금으로 설립된 학교가 있는 곳도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 향토전시관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수의계약에 의한 불하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82년도부터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총 171개교로서 매각된 학교 23개교, 임대중인 학교는 71개교이며, 학교설립 및 자체활용 중인 38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39개교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대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폐교는 우선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남는 폐교는 임대를 실시하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전망이 없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폐교는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 중 지역주민과 독지가 등이 부지를 희사하여 설립된 학교의 경우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할 경우 토지 기부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월에 제정·시행되어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음.

현재 임대 및 매각을 추진중인 39개 학교는 지역 여건상 도서지역,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희망자가 적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매수나 임대희망자를 찾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활용 폐교재산은 별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청소년 비행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3.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질문1 : IMF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상황은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인원은 정확히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 본 청의 시·군에 대한 행정위임사항과 시·군에서 읍·면·동으로의 행정위임사항은 무엇이고, 읍·면·동에서 시·군으로의 행정 통합 사항은 어떠한 것들인지, 그리고 행정사무 위임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는 되었는지와 행정의 홍보가 덜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은 지난 '98년도의 기구 통폐합 및 인력감축 등 조직축소에 중점을 두고 3국 8과 431명을 1단계로 감축한데 이어서 '99년부터는 조직의 합리적 기능배분에 중점을 두고 3과 205명을 3개년에 걸쳐 감축하는 2단계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구조조정 2차년 도인 올해에는 이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된 68명에 대해 감축개편을 마련하여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지방자치법에 의해 현재까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총 917건이며, 시장·군수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평균 90건 정도임.

읍·면·동사무소의 주민 자치센타로의 전환은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되 주민에게 꼭 필요한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계속 수행하면서 여유시설은 지역복지, 문화,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우선 33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에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

■ 질문2 : 119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대책

· 일반 행정기관의 업무현실을 보면 기능직이나 일용직들을 고용해 업무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독 소방공무원들만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

· 소방업무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대부분 시간은 대기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잡무처리를 위한 보조인력의 증원보다는 소방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기 진작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노후 소방청사의 신·개축, 소방직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음.

■ 질문3 : 우시장의 개장시간 조정 및 축산정책 개선

· 도내 대부분의 우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새벽 5시이전으로 되어 있고, 농민들이나 양축가들이 소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우시장 개장시간을 행정기관에서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돈 농가에 대한 지원과 수출 지원책과 관련하여 논산축협에서는 '99년도에 1,000만 불 수출 탑을 받는 등 양돈 사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없어 경쟁력에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웃 경기도는 모돈 한 마리당 10만원씩 지원하여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도축 및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투자 및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현재, 생우 유통의 대부분이 상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새벽수송을 원하는 소 구입 상들의 편의에 맞춰서 우시장이 새벽시간대에 개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상인들의 기존 관행을 바꾸는 데 따른 어려움은 다소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양축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개장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한편, 도축판매업자에 대한 시설투자 및 지원대책으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계열화 된 유통체계 확립 등 유통단계 축소 및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홍성에 186억원을 투자해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소매유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한우 전문판매점 4개소에 8억원, 브랜드육 가맹점 4개소에 8억원 등 모두 16억원, 기존 도축장과 수출 도축장의 도축위생시설 1개소에 10억원, 그리고 부분 육가공시설 1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 질문4 : 폐철도 · 폐도부지의 활용방안 강구

· 구 철도부지를 철도청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유권에 있어서도 충청남도에서 당연히 소유하고 관리해야 할 부지임에도 행정적인 문제로 아직도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철도청과 협조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또한, 국도 및 지방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폐철도 부지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민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철도청도 주민활용이 바람직한 부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각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음.

폐도 부지는 대부분이 마을 및 시가지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는 휴식공간과 가로화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도 부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실태를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5 : 사이버시대의 학생 성교육 대책

·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와 학교에 컴퓨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컴퓨터이용이 보편화되어 음란물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으로 인하여 마수의 손길처럼 음란물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사이버시대의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소년의 음란물 중독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의 기초 위에 음란물 접근기회를 줄이는 한편, 사이버공간 정보이용자들이 윤리와 책임의식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음란물에 중독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오재욱 〕

· 도에서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로 성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학교현장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급별로 성교육 교수-학습 지도서와 CD를 각각 2,000부씩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이버 시대의 농어촌 지역 성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서천고등학교에 성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계획하는 한편, 성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건전한 판단력과 가치관을 길러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관련 교과 교육과 훈화·예화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위한 학부모 교육에도 힘쓰도록 하겠음.

第16節 第136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36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경섭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3. 21(화) ~ 3. 24(금), 4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3. 21(화) 10:10	운 영 위	1.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제13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3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3:30	행 자 위	1.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2000. 3. 22(수)	행 자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농 경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3. 23(목) 11:00	행 자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교 사 위	1.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농 경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2000. 3. 24(금)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4.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5		
조례안	5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1	1.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규칙안	1	1.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기 타	8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3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3. 21, 11:00) 2000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다.

○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3. 24, 11:00)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3건,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2건,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70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 지 사 (00. 3. 10)	교사위	○충청남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통합 -여성의 지위향상 및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충청남도여성발전 복지기금을 설치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위원회는 10인 이내	2000. 3. 24	2000. 3. 25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71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00. 3. 10)	행자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기금 설치 -SOC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융자지원, 통합기금의 재원, 용도, 금융기관 예탁관리, 위원회 설치 운용 등 통합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000. 3. 24	2000. 3. 25	원안
173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00. 3. 10)	교사위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와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통합 운영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설치근거마련,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	2000. 4. 28	2000. 4. 28	원안
174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00. 3. 10)	교사위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조성 및 사용용도를 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	2000. 3. 24	2000. 3. 25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75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0. 3. 15)	교사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규정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용규정의 조문이 변경(제24조→제19조로)	2000. 3. 24	2000. 3. 25	원안
176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0. 3. 15)	교사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4,231명→4,193명(감38명)	2000. 3. 24	2000. 3. 25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172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0. 3. 1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0. 3.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3. 24)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3. 25.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더욱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 수요 등 지방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 '95. 7. 1부터 발행·판매를 시작한 전국단위의 자치복권 발행을 '96~'99년도에 이어 2000년에도 계속 시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 등 지역개발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발 행 주 체 :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1특별시, 6광역시, 9도)
○ 복 권 종 류 : 전국자치복권
○ 발 행 기 간 : 2000. 2 ~ 12월
○ 판 매 지 역 : 전 국
○ 발 행 형 식 : 즉석식 (500원권)
○ 발 행 규 모 : 210억원
○ 1등 당첨금 : 5,000만원(연식 1억원)
○ 예상 수익금 : 판매액의 22%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서

1. 합 계

(단위 : 백만원, 백만매)

지방자치 단 체 명	발 행 액	발행매수	발행기간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비 고
충청남도	21,000	42	2월~12월	15,750 (75%)	3,465	

2.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백만매)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액면금액	발행매수	발행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계				**42**	**21,000**	**15,750**	**3,465**
즉석식	2~12월	6회	500원	42	21,000	15,750	3,465

3. 행사기념복권 발행계획

가. 행사개요

행 사 명	행사기간	소 요 예 산			부족예산 확보계획
		계	확보가능액	부족액	
–	–	–	–	–	–

나. 복권발행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액면금액	발행매수	발행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계	–	–	–	–	–	–	–
	–	–	–	–	–	–	–

4.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 규칙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177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0. 3. 21.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3. 24)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 제안이유

○ 1999년 5월 20일부터 도입하여 본회의에서 행하는 5분발언제가 의사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장이 허가하는 본회의의 5분발언 조항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날은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함.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第17節 第137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37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창구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4. 24(월) ~ 4. 28(금), 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4. 24(월) 09:50	운 영 위	1.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13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본 회 의 (제1차)	1. 제13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비회기중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결과보고 3. 당면도정현안사항보고	
14:00	농 경 위	1.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4. 25(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농 경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4. 26(수)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농 경 위	1. 현장방문 - 2000년고양세계꽃박람회장방문(경기도고양시일산 호수공원)	
	건 소 위	1. 현장방문 - 백제큰길개설공사현장	
2000. 4. 27(목)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사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1. 현장방문 - 충남테크노파크업무현황청취(아산 염티) - 산업기술단지(천안밸리)조성부지현장(천안 직산)	
10:00	건 소 위	1.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	
2000. 4. 28(금)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제역발생과관련하여양축농가회생을위한정책건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4		
조례안	9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의안	1	1.「구제역」발생과관련하여양축농가회생을위한정책 건의안	
기 타	4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3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비회기중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결과보고의 건 4. 당면도정현안사항 보고(농림수산국장)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4. 24. 11:00) 2000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홍성군지역의 구제역발생과 관련된 비회기중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결과와 구제역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및 축산농가 지원책 등에 관한 당면도정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다.

○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4. 28. 11:00)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3건,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6건, 구제역발생과관련하여양축농가회생을위한정책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ㅇ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73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00. 3. 10)	교사위	ㅇ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와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통합 운영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	2000. 4. 28	2000. 4. 28	원안
178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도지사(00. 4. 8)	행자위	ㅇ법령에 의거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이상	2000. 4. 28	2000. 4. 28	수정
179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 4. 8)	행자위	ㅇ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보완 시달되어 시험수당 지급단가를 이에 맞게 조정 -시험감시수당(공일 : 15,000원→30,000원, 평일:10,000원→15,000원)	2000. 4. 28	2000. 4. 28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80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도지사 (00. 4. 8)	행자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밖의 사항만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6항의 규정에의한 당연직 위원은 기획정보실장 등 5인 구성,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2000. 4. 28	2000. 4. 28	원안
181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지사 (00. 4. 8)	농경위	○농림수산국의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서로 유사하여 통합 -기금자금을 도금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기금 금고에 안정적으로 관리 -농림축수산물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또는 농어민들에게도 지원	2000. 4. 28	2000. 4. 28	수정
182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교육감 (00. 4.18)	교사위	○교원연수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연수기관의 명칭을 개정 -교원연수원을 교육연수원, 설립 위치를 산98-3 → 98-3,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등으로 조정	2000. 4. 28	2000. 4. 2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8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0. 4.18)	교사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폐교재산의 대부 요율을 사용목적에 따라 -경작용 농경지의 대부료 개선,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하향 조정 등	2000. 4. 28	2000. 4. 28	원안
184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 4.18)	행자위	○그동안 IMF 등으로 잠정 유보 되었던 도청 이전에 관한 조사·연구·기획 등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담당하는 실무작업반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편하고 명칭도 변경	2000. 4. 28	2000. 4. 28	원안
185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00. 4.24)	본회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차 정례회 : 6월 20일 -제2차 정례회 : 12월 1일	2000. 4. 28	2000. 4. 28	원안

○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186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0. 4. 27.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4. 28)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00. 4. 28.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부, 행정자치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 주 문

○ 전통농업도이면서 선진농업도인 충청남도에 뜻하지 않게도 口蹄疫이라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여 양축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자칫 대대로 이어온 도내 축산업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인 바

○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시름에 빠진 양축농가를 회생시키고 축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중앙정부 등 관계 요로에 강력히 요청코자 함.

□ 제안이유

○ 지난 4월 우리道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의 한우 12두(2농가)를 시발로하여 발생한 口蹄疫은 우리 축산업이 상업화시대에 접어든 이래 초유의 사건이며 이로 인한 우리道 偶蹄類 6만여 축산농가의 깊은 시름과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 口蹄疫 발생직후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힘써 더이상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할 것이며 口蹄疫 발생초기 일부 국민들의 막연한 오해로 급격히 감소되었던 육류소비량도, 최근사회 각계각층의 육류 소비촉진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이해가 확산됨으로써 점차 회복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수년간 愛之重之하던 소·돼지들을 하루아침에 殺處分해 버리고 경계지역내의 통제된 상황하에서 판로를 잃고 나날이 積滯되어가고 있는 가축을 바라보는 偶蹄類 양축 농가의 안타까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며

○ 양축농가의 회생과 축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수립과 그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口蹄疫 발생 피해지역을 준 재난지역으로 지정**
- 축산 주산단지의 축산기반의 재건과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 **특별경영자금의 지원확대 및 현물담보제의 인정**
- 경영자금이 담보부족 등으로 사장우려, 현물담보제 인정, 자금의 확대 지원,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증액

○ **살처분농가에 1년 내외기준의 평균소득 보상 지원**
- 어업보상과 같이 최소 폐업보상 차원에서 지원

○ **적체된 가축의 출하대책 강구**
- 정부수매 및 정부비축물량 확대, 중앙정부단위 육류소비운동 전개

○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 강화와 방역 장비의 현대화**
- 口蹄疫 발생을 계기로 종합적인 방역 대책 수립

※ 수 정 내 용

○ 건의안 넷째번의 적체된 가축의 출하 대책 강구의 내용중 『홍성군』의 경우만으로 되어 있는데 구제역 발생 지역이 보령시도 포함됨으로 『홍성군과 보령시』의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임.

구제역발생과 관련하여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건의안

지난 4월 우리道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의 한우 12두(2농가)를 시발로 하여 발생한 口蹄疫은 우리 축산업이 상업화시대에 접어든 이래 초유의 사건이며 이로 인한 우리道 偶蹄類 6만여 양축농가의 깊은 시름과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口蹄疫 발생직후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힘써 더 이상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고 口蹄疫 발생초기 일부 국민들의 막연한 오해로 급격히 감소되었던 육류소비량도 최근 사회 각계각층의 육류 소비촉진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이해가 확산됨으로써 점차 회복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愛之重之하던 소·돼지들을 하루아침에 殺處分해 버리고 경계지역내의 통제된 상황하에서 판로를 잃고 나날이 積滯되어가고 있는 가축을 바라보는 偶蹄類 양축농가의 안타까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어야 할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6만여 偶蹄類 양축농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며 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口蹄疫 관련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다섯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제역 발생 피해지역을 준 재난지역으로 지정

우리도의 畜産勢는 전국 2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口蹄疫이 발생한 홍성지역은 돼지사육두수가 도 전체의 27%로 우리나라 최대의 축산주산 단지로서 口蹄疫 발생으로 인해 축산업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으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축산업의 재건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볼 때 대형 재난이라고 보아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口蹄疫 피해지역인 홍성지역을 재난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 양축농가가 질병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확대 및 현물 담보제의 인정

피해 양축농가에 지원한다고 하는 특별경영안정 자금이 막상 현장에 내려와서는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자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속히 가축을 담보하는 현물 담보제를 인정하고, 자금의 확대 지원과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증액 등 특별조건을 적용하여 가축 사육에 따른 경영 자금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양축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살처분농가에 1년 내외기준의 평균소득 보상지원

소·돼지를 殺處分 당한 농가는 口蹄疫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엄연한 희생자입니다.

따라서 殺處分된 소·돼지나 사료 등의 현물보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수년간 종사해온 축산업을 폐업한 실정을 감안하고 다시 축산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폐업보상 차원에서 1년 내외의 평균소득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보상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바, 전염병에 의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넷째, 적체된 가축의 출하대책 강구

홍성군과 보령시의 경우 현재 출하가 예정된 돼지가 4만여 두에 이르고 있으나 출하 물량이 날이 갈수록 적체되어 생산비의 부담, 상품성 저하 등 경제적인 압박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양축농가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수매 및 정부 비축물량의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육류 소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 강화와 방역장비의 현대화

사실 가축전염병은 口蹄疫 뿐만 아니라 돈 콜레라 등 우려되는 질병이 많고 이에 대한 방역대책이 이번 口蹄疫 발생을 계기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과 방역장비가 열악한 사실을 중앙정부는 직시하고 보다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위의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농림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받아 들여 우리道 6만여 偶蹄類 양축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0년 4월 28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第18節 第138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38회 임시회는 1999회계년도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경섭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5. 12(금) ~ 5. 18(목), 7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5. 12(금) 09:20	운 영 위	1. 결산검사위원선임및당면현안사항협의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3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회계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00. 5. 13(토)	행 자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교 사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2000. 5. 14(일)		공 휴 일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5. 15(월)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전국체전준비사항보고	
	교 사 위	1. 현장방문 -해운대소각장	
	농 경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2000. 5. 16(화)	행 자 위	1. 현장방문 -전라남도청이전관련 등	
	교 사 위	1. 현장방문 -장애인종합복지관(경남), 치매요양원(마산) -하수처리장(진주)	
11:00	농 경 위	1.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건 소 위	1. 현장방문 -한국수자원공사및대청댐관리사무소	
2000. 5. 17(수)	행 자 위	1. 현장방문 -전라남도청이전관련 등	
	교 사 위	1. 현장방문 -광양매립장	
	농 경 위	1. 현장방문 -광양매립장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2000. 5. 18(목) 10:20	운 영 위	1.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제13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6		
조례안	2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규칙안	1	1.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기 타	3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3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1999회계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5. 12, 11:00) 2000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1999회계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였다.

199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구 분	성 명	연 령	비 고
도 의 원	이 진 환	47	천안시, 건설소방위원회
〃	강 화 섭	51	연기군, 농수산경제위원회
〃	전 영 환	38	서천군, 교육사회위원회
공인회계사	이 상 현	32	공인회계사
〃	정 선 호	32	〃
〃	상 신 규	34	〃
세 무 사	이 찬 호	43	세 무 사
전직공무원	박 홍 순	64	전 의회 전문위원
〃	유 영 준	61	〃

○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5. 18, 11:00)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1건,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1건,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87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도지사 (00. 5. 1)	농경위	○연안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한 연안지역 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심의회는 15명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 위촉직 위원은 2년 연임 가능	2000. 5. 18	2000. 5. 19	원안
188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허영일 의원외 12인 (00. 5. 12)	행자위	※ 행자위 심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대안 제출로 폐기			폐기
189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00. 5. 18)	본회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바뀌어 동법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 -인용조문중 제43조→제36조로, 제41조→제34조로	2000. 5. 18	2000. 5. 19	원안

ㅇ 규칙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190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0. 5. 18.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5. 18)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 제안이유

ㅇ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교육감이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의원이 서면질문 등을 할 경우에, 회의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채 운영되는 등 일부조항에서 미비점이 있고,

ㅇ 지방자치법에 의원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 규칙 제정당시 의원정수가 50인 이상의 시·도(우리 도 61인)는 10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표준안('91. 내무부)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발의 의원수를 「10인이상」으로 정하였으나,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98. 4. 30)으로 의원정수(61인→36인)가 감축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의원수를 5분의 1(현 정원을 기준으로 할 때 8인)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의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ㅇ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관계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
- ㅇ 회기중 의결로 폐회되어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문화.
- ㅇ 지금까지 의사일정 변경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의원 10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으로 완화.
- ㅇ 의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할 때에 의원 10인이상의 찬성자로 하던 것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완화.
- ㅇ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또는 현실적으로 교육감이 행하고 있는 사항중 규칙에 명문화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규정 - "도지사" 다음에 "교육감" 삽입
  1. 교육감이 제출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철회할 경우
  2.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중 본회의에서 의원이 번안동의를 발의하고자 안건을 교육감에게 이송할 경우.
  3.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을 경우.
  4.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할 경우.
  5. 교육 및 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을 출석시켜 질문하고자 질문요지를 교육감에게 송부할 경우.
  6. 의원이 교육감에게 서면질문하고자 할 경우.
- ㅇ 회의록에 대한 자구정정 요구시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 오전 12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시한을 연장(안 제52조 단서신설).
- ㅇ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 출석하는 진술인에 대하여 실비보상할 경우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ㅇ 회의장내에서의 정숙과 질서유지를 위해 휴대전화 및 통신 기기의 사용행위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第19節 第139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39회 임시회는 교육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최경섭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6. 9(금) ~ 6. 15(목), 7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6. 9(금) 10:00	운영위 간담회	1. 제14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운영계획안 2. 기타사항협의	
11:00	본회의 (제 1 차)	1. 제13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000. 6. 10(토)	행자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10:00	교사위	1.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경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11:00	건소위	1.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6. 11(일)		공 휴 일	
2000. 6. 12(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00	농 경 위	1.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	
11:00	건 소 위	1. 당면현안사항보고청취(건설교통국및소방안전본부)	
2000. 6. 13(화) 11:00	예결특위 (제 1 차)	1.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	
2000. 6. 14(수) 10:00	예결특위 (제 2 차)	1.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0. 6. 15(목) 10:20	운 영 위	1. 제14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운영계획안 2. 기타사항협의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5.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 7.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8.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4		
조례안	6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1	1.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 타	7	1. 의원선서(논산 송영철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3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6.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6. 9. 11:00) 2000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논산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영철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였으며, 오재욱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이진환(천안), 김문규(천안), 윤석우(공주), 이준우(보령), 강태봉(아산), 허영일

(서산), 임성규(논산), 박찬중(금산), 강화섭(연기), 강창구(부여), 박영조(서천), 우지명(청양), 전용설 (홍성), 김중한(예산), 최경섭(태안), 정용해(당진), 송민구(비례), 김동선(비례)

○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6. 15, 11:00) 교육청의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3건,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1건,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폐지안 2건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91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00. 5.30)	농경위	○'72. 1.28 SOFA합동위원회 제70차 회의에서 당시 기지촌지역의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던 각종 지역자문위원회를 "한미친선협의회"로 통합 정비키로 합의한 결과에 의하여 73. 7.10 제정된 동 조례는 -도내에 주둔한 미군이 이미 모두 철수한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었으므로 폐지	2000. 6. 15	2000. 6. 15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92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	도 지 사 (00. 5.30)	농경위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사무로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자매결연사업의 자치법규적 보장을 명확히 하며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촉진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	2000. 6. 15	2000. 6. 15	원안
193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 지 사 (00. 5.30)	행자위	○교육 우수 공무원에게 시상하고 있는 시상금의 운영은 지금까지는 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에관한 예규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나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 -교육훈련기간이 2주이상 간부양성과정 중 3개월 이상의 장기교육훈련과정 등의 이수자중 성적우수자 및 우수 연구논문발표자, 우수 분임, 교육 운영 유공자	2000. 6. 15	2000. 6. 15	수정
194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도 지 사 (00. 5.30)	행자위	※ 행자위 심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대안 제출로 폐기			폐기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95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00. 5.30)	건소위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농어촌도로포장 사업은 시행자가 시장·군수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	2000. 6. 15	2000. 6. 15	원안
197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대안)	행자위원장(00. 6.14)	본회의	○허영일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방채 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제명은 다르지만 지방채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같은 내용의 조례안으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심사된 사항을 토대로 종합·보완하여 최적의 대안 제출	2000. 6. 15	2000. 6. 15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98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위원장 (00. 6.15)	본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코자 하며, -결산안 승인의 처리 시기를 고려하여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조정 -정례회 집회일 : 제1차 6월25일, 제2차 11월 20일	2000. 6. 15	2000. 6. 15	원안

第20節 第140回 定例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 이번 정례회는 도와 교육청의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제6대의회 하반기 원 구성을 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6. 26(월) ~ 7. 6(목), 11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6. 26(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40회충청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000. 6. 27(화) 10:3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2000. 6. 28(수) 10:00	운 영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회사무처소관)	
11:00	행 자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기획정보실소관) 2. 충청남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공보관실소관) 4.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감사관실소관) 5.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총무과소관)	
11:00	교 사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복지환경국소관) 2.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여성정책관실소관)	
11:00	농 경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건설교통국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6. 29(목) 11:00	행 자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공무원교육원소관) 2.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계룡출장소소관)	
11:00	교 사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소관)	
2000. 6. 30(금) 11:00	행 자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자치문화국소관)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00	교 사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청양대학소관)	
11:00	농 경 위	1. '99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1. 백제문화권개발사업민속박물관실시설계용역결과 보고청취	
2000. 7. 1(토) 10:00	예결특위 (제 1 차)	1. '99세입세출결산심사(교육청소관)	
2000. 7. 2(일)		공 휴 일	
2000. 7. 3(월) 10:00	예결특위 (제 2 차)	1. '99세입세출결산심사(도본청소관)	
2000. 7. 4(화) 11:00	본 회 의 (제 3 차)	1. 의원(강창구)사직의건 2. 19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9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9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충청남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6대의회후반기의장·부의장선거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7. 5(수) 11:00	본 회 의 (제 4 차)	1. 상임위원회(4개)위원선임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11:40	각상임위	1. 간사선임의건	
2000. 7. 6(목) 11:00	본 회 의 (제 5 차)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3. 제140회충청남도의회제1차정례회폐회의건	
11:40	운 영 위	1. 간사선임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7		
조례안	3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결산안	3	1. 19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1999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 타	11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 의원 사직의 건(강창구의원) 6. 제6대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7. 상임위원회위원(4개) 선임의 건 8. 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 9. 의회 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10.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선거 11.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6. 26, 11:00)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99년도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김문규(천안), 손재탁(공주), 신재원(보령), 김재봉(아산), 허영일(서산), 송영철(논산), 심정수(금산), 강화섭(연기), 강영성(부여), 전영환(서천), 정선홍(청양), 신호균 (홍성), 이한식(예산), 박동윤(태안), 장준섭(당진), 한창숙(비례)

○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6. 27, 10:30) 도지사와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용설(홍성), 이준우(보령), 임성규(논산) 의원 등 3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2000. 7. 4, 11:00) 부여군 출신 강창구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도와 교육청의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3건과 충청남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3건을 의결한 후, 이복구 부의장의 주재로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의장에 아산시 출신 김재봉 의원을, 제1부의장에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을, 제2부의장에 서산시 출신 허영일 의원을 선출하였다.

· 의 장 당선자 : 김재봉(아산시)
· 부의장 당선자 : 박동윤(태안군)
허영일(서산시)

○ 제1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2000. 7. 5, 11:00)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위 원 회 별	성 명	출 신 지 역 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위 원 장	정 순 평	천안시
교 육 사 회 위 원 회 위 원 장	임 성 규	논산시
농 수 산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장	정 용 해	당진군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위 원 장	박 찬 중	금산군

- 4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8명	9명	8명	8명
정순평(천안)	임성규(논산)	정용해(당진)	박찬중(금산)
박영조(서천)	이한식(예산)	송민구(비례)	강태봉(아산)
김중한(예산)	김동선(비례)	강영성(부여)	김문규(천안)
심정수(금산)	손재탁(공주)	강화섭(연기)	박동윤(태안)
윤석우(공주)	이진환(천안)	송영철(논산)	신호균(홍성)
이종수(천안)	전영환(서천)	신재원(보령)	이복구(서산)
장준섭(당진)	최경섭(태안)	우지명(청양)	이준우(보령)
전용설(홍성)	한소환(연기)	허영일(서산)	정선홍(청양)
	한창숙(비례)		

o 제1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2000. 7. 6, 11:00)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교육사회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위원회별	성 명	직 위	출신지역구
건 설 소 방 위 원 회	김 문 규	위원장	천 안 시
농수산경제위원회	송 영 철	간 사	논 산 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강 태 봉	위 원	아 산 시
농수산경제위원회	강 화 섭	〃	연 기 군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박 영 조	〃	서 천 군
농수산경제위원회	송 민 구	〃	비례대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이 복 구	〃	서 산 시
교 육 사 회 위 원 회	이 한 식	〃	예 산 군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장 준 섭	〃	당 진 군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 고
202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 6.20)	행자위	○삭도·궤도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설치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어느 시설보다도 안전검사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사무의 소관 및 위탁사무명에 "도로교통과"와 삭도·궤도사업자의 삭도·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 신설	2000. 7. 4	2000. 7. 5	원안
204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 6.24)	행자위	○지금까지 지방행정조직 개편 사항중 조직운영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 -정책관리관을 기획정보실장의 보좌기관으로 -축산 위생연구소 설치	2000. 7. 4	2000. 7. 5	원안
205	충청남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00. 6.28)	본회의	○현행 조례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입법(제·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 -근거법령에서는 입법예고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	2000. 7. 4	2000. 7. 5	원안

Ⅲ. 道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전용설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2001정부예산 확보 전망 및 대책

· 전국체전과 안면도 꽃 박람회 준비 등 현안사업 338건에 총 2조3,303억원의 국비확보와 관련, 현재 확보된 예산별 사용내역과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한 확보전망을 밝혀 주고, 또한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 천억원씩 투자되는 대형사업을 매년 개최하느라 과중한 자체 지방비 투입으로 각종 주민 숙원사업 등 현안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서 주민 불편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부 도민들의 지적이 있는바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2조3,303억원으로 정하고 연초부터 10개 예산확보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설명회·간담회를 갖는 등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도 목표액의 91.2%에 해당하는 2조1,226억원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어 지난 5월말 기획예산처로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음.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현안 사업비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33억원, 2001년 전국체전 115억원,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35억원 등이며, 나머지 규모가 큰 SOC시설 및 농업기반 시설비 등은 우리 도가 요구한 사업비의 대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질문2 : 가축질병 피해 현황 및 가축예방 대책

· 우리 도에 구제역과 뉴캣슬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 수, 피해 가축 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 동안 정부 및 도의 지원 실적, 앞으로의 정부 지원 전망, 가축방역 대책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홍성군의 경우 155양축농가에서 한우 1,800두가 살 처분되고 무려 5만 마리의 자돈이 폐기되어 총 230억원의 피해를 입어 전국 최대 양축 군의 기반이 무너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난 4월초 홍성·보령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축의 살처분과 원유폐기 등의 불가피한 조치로 총 50억6,0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이동제한에 따른 자금흐름의 중단과 사육기간 공백 등으로 인해 241억원으로 추산되는 간접 피해도 발생했음.

이에 정부에서는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해서 방역 예산 29억7,500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살처분 농가의 직접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7억원을 보상하였고, 발생지역의 일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7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휴업기간 생계비와 가축 입식자금 그리고 이동제한에 따른 젖소 농가의 유량 손실액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한편, 가축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2차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함은 물론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축사주변 소독 강화와 가축전염병 예찰활동에 주력하여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 질문3 : 도의 농림수산관련 예산감소 이유와 대책

· 농업도를 자칭하는 충남도가 농민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농림·수산 관련 예산을 '98년에는 총 예산의 32%인 4,092억 732만원에서 '99년에는 25%인 3,341억 4,400만원, 또 금년에는 23%로 줄어든 2,818억 3,000만원으로 매년 감축되고 있음.

농림·수산 관련 예산을 계속 감축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장기 발전계획은?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농림수산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이유는, '99년도까지 1차 구조개선사업에 약 42조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1차 구조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98년도 보다 줄어들게 되었음.

그러나 2000년에는 풀융자 규모가 오히려 23%가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원예특작, 또는 축산분야의 보조사업 약 1,900억원이 융자로 전환되면서 순수 예산보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로 인한 농가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또한 농업이 산업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쌀 농업과 환경농업의 직접적인 소득보조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촌이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농촌여성 출산도우미 지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복지향상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4 : 농산물 제값 받기 및 수출품 지원 방안

· '95년부터 농·축산물 수입이 개방되었는데 그 동안 정부나 충남도는 이에 대하여 대비한 것이 있는지? 또, 현재 도내 17만4,000 농가에서 총 3조387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농가당 부채가 1,746만4,000원씩이나 되며, 농민들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농가의 빚 탕감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음. 또한 충청남도의 농·축산물 수출이 '98년에 2억4,113만 달러에서 '99년에는 1억 8,996만 달러로, 금년은 현재까지 289만 달러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금년 1월 농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산물가격 폭락시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과채류 등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중부농축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직거래 사업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우리 도의 추진상황은 농수산 신용보증보험으로 보증인을 변경한 부채가 2,119억원이며, 저금리 자금 전환은 중장기정책자금과 경영개선자금등 총 8,944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어서 6월 15일 현재 3,773억원을 전환하여 농가부담을 덜어 주었음.

한편 농·축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KOTRA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울통상지원사무소 등을 통한 바이어 알선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질문5 : 1단계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

· 그동안 도는 431명의 인력과 3국 8개과의 조직 기구를 감축했으나 행정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강화되어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이 떨어졌다는 지적임.

그리고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경상예산이 9.3%나 증액되고 있으며 조직은 감축되었는데 인건비는 2001년에는 701억 100만원, 2002년에는 779억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98년도에 시행한 1단계 구조조정은 국가 경제난극복을 위해서 기구의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 등 조직의 축소에 중점을 두어서 조직개편을 했으며,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2단계 구조 조정은 합리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서 내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활용하고 있으며, 서비스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구조조정이후 경상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도 중기재정계획상의 예산으로서 실제 편성 예산은 예년보다 다소 감소된 수준임.

■ 질문6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

· 그 동안 공직사회 부패취약 8개 분야 42개 단위업무별 종합감사 결과 '98년, '99년 사이에 행정상 문제로는 2,817건에 인사상 1,020명이, 재정상은 '98년에 38억3,000만원에서 '99년에는 무려 다섯배가 늘어난 184억4,8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은?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우리 도에서도 법령 제·개정 없이 자체 실천이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과 사후 체벌 강화 등 6개 분야 22개 사업을 내용으로「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강력 추진 중에 있음. 그 동안 부패방지 기동감찰활동의 전개와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의 폐지 등 제도의 개선과 함께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 강화, 도민 감사청구제 실시, 신고 센터 설치 운영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그 동안 상반기 중에 기동감찰을 4회 나가서 64건에 35명을 적발한 바 있고, 교육도 도·시·군 공무원 1만2,000명에 대해서 모두 교육을 마쳤음.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7 : 국·도비 보조금 배정 부진과 도세징수 대책

· 금년도 국고보조사업비 8,602억원과 도비 보조사업비 2,577억원 가운데 5월말 현재 총 계획 사업비의 24.1%에 해당하는 국비는 2,009억원, 도비 684억원 등 2,693억원으로서 국·도비 배정부진으로 인한 금년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도세 징수목표 2,500억원 가운데 현재 28.3%인 708억원을 징수한 것을 보면 국·도비의 세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

· 금년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세입예산액은 교부세 1,823억원, 양여금 1,511억원, 국고 보조금 5,260억원 등을 합해서 총 8,594억원으로 6월 21일 현재 49.1%에 해당하는 4,22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자금배정은 보조사업 총액 1조 1,179억원 중 30.3%에 해당하는 3,388억원을 사업의 공정에 따라 배정하였음.

앞으로도 의존재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등 세수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 질문8 : 행정자치부의 민선지방자치 종합평가결과

·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16개 시·도별로 공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관리, 재정 역량, 정보화 역량 등 5개 부문별로 종합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도의 성적표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부문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정부에서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향후 평가내용의 보완을 전제로 '99년도는 지방공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안전관리 등 주요 시책분야와 지방재정역량, 정보화역량 등 5개 부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음.

그 결과는 시·도별로 상대적인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책별로 우수한 내용과 미흡한 사항들을 제시하는 진단평가에 그쳤으며, 우리 도는 기구 개편, 규제개혁, 기업애로 해소, 외자유치기반 조성, 공공근로 사업, 재난관리, 구조구급, 투자비확보, 정보인프라 확충 등은 추진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민간위탁, 투자유치활동, 환경관리 목표설정 등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진단된 바 있음.

■ 질문9 : 학교 집단급식에 따른 여름철 질환예방 대책

· 학교 집단급식으로 전국 각지 초·중·고교에서는 세균성 질환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불량식품의 납품과 허술한 위생관리가 지적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집단급식 수혜대상 학교 수와 학생 수, 영양사 수를 말씀해 주시고 식품납품업체 실태와 구입과정, 위생관리 점검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부교육감 김경회 〕

· 우리 도내 학교의 급식실태를 말씀드리면, 전체 학교의 약 80%에 해당되는 580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양사가 370여 명이 배치되어 약 20여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받고 있음. 도내 각급 급식학교에서 약 1,000여개의 업체가 급식품을 납품하고 있으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급식재료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철저히 검수를 하고 있음. 다만 축산물 등급품을 속이거나 불량 급식재료가 납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축산물 구입 시에 등급판정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원본을 확인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학교급식 위생점검은 육안 검사에 의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보다 정밀한 위생점검을 위하여 시·군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 설비를 교체하는 등 위생적인 급식시설 확충을 위하여 약 6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 질문10 : 실업계 고등학교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

·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44개교에 총 정원은 7,913명입니다. 이는 '98년도 11,996명에서 3년 동안 4,083명의 정원을 줄였는데도 금년도 정원모집에 무려 822명이 미달돼 실업계고의 통·폐합의 필요성은 물론 학교 운영에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부교육감 김경회 〕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 변화, 그리고 국민소득 향상,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의 욕구 증대 또 학령인구의 감소추세 등 전반적인 사회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는게 사실임.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이 실업계 진학을 선호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우리 도 교육청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 시책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 기초 소양 교육 강화와 산·학협동과 연계한 취업위주의 교육과 계속교육 차원에서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는 진로교육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질문11 : 교육청의 부채상환과 교원명퇴 문제점 및 대책

· 도교육청 세입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는데 1,328억9,100만원의 부채는 무슨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 자금별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채 중 명예퇴직 수당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려 839억8,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음.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교사가 퇴직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339명을 임시 대체하는 등 우리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 답변 : 부교육감 김경회 〕

·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명예퇴직 수당, 학교신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학교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등을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1,328억9,100만원을 기채로 충당한 바가 있음. 이 중 통폐합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채한 194억5,000만원은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전액 상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학교신설,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기채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이고 또한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재 금년도 1학기에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약 336명으로서 전체 교원의 약 7%에 해당되는 인원임. 이들은 가급적 학급 담임보다는 교과전담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교단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업 지도면에서는 결코 정규교사보다도 뒤지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2. 이준우 의원(보령시, 자민련)

■ 질문1 : 산과 들과 바다를 지키자

· 새 천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보전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우리 도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육성계획과 금년도 숲가꾸기에 투입한 공공근로 사업실적,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 산림생태계 보호관리 계획과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람.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우리 도의 그 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및 폐영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의 농지 훼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쓰레기 및 산업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대책과 이미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담수호가 유입되는 각종 생활하수, 축산폐수로 인하여 담수목적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하는 보령호는 악취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홍보지구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갯벌이 사라지면 해안습지가 파괴되고 해양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아 연근해의 해양오염과 함께 어획고의 급격한 감소가 뒤따르게 마련이며 습지에 퇴적되어야 할 토사는 항구 갯골 수로에 흘러들어 그 기능을 저하시킬 것임.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독일, 영국 그리고 간척사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도 방조제를 허물고 물길을 내어 간척농지를 바다로 되돌리고 있음.

이와 같이 전향적인 보전대책을 수용하여 선진국처럼 방조제를 허물어 갯벌을 살리는 방안과 방조제 수문을 열어 물길을 돌리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갯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잠수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육지에서 4km 정도의 바다 밑은 쓰레기와 불가사리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바다 밑의 쓰레기 청소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난 '73년부터 '87년까지 15년간은 치산 녹화 사업으로 사방 사업과 식수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였고,

'88년부터는 녹화 사업에서 자원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2만9,000ha의 경제수종 조림과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육림사업을 추진해서 약 4배의 산림자원 조성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앞으로도 경제수 위주의 조림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수조림, 지속적인 육림사업 등을 통해서 경제적 균형과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음. 공공근로사업중 숲가꾸기 사업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8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5,770ha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21만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바 있으며, 금년에도 63억원을 투자해서 4,200ha를 실시할 계획임.

산림정책은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함. 앞으로 불법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꼭 보존해야 될 지역은 산림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보령호는 물막이 공사가 '97년 10월 24일 완료되었으나 광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 전까지 배수갑문 개방으로 담수하지 못하고 있어 귀중한 수자원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광천읍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와 비용 분담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비 10억원을 부담하여 현재 사업 시행자인 홍성군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음.

앞으로 금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인가 등 행정절차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하여 2001년부터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호소내 축산폐수 유입을 차단해 나가는 한편, 축산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해서 보령호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확산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마을 등 단위사업별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약·비료사용 억제등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교육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겨울철 영농교육의 전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음.

이어서 폐영농자재 수거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하며 빈농약병과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특용작물 재배로 비닐 사용이 많은 논산, 부여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폐농기계 수거는 '98년부터 우리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등 대형 기종을 대상으로 대당 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앞으로도 농어업인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폐영농자재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도내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지난해 농지전용 면적은 모두 1,188ha로서 '98년도 1,221ha 보다는 2.8%인 약34ha가 감소하는 등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도로 등 공공용에 많이 전용되고 있음. 앞으로 공공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이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여 전용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갯벌을 살릴 수 있는 대책과 바다 밑 쓰레기 수거를 위해 추진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99년도 8월 7일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고 갯벌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난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음.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갯벌과 그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도 지난 '97년 7월에 갯벌의 우선적 관리와 생산적 활용, 그리고 매립의 원천적 억제방침등 갯벌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습지지역 지정 전까지는 관련법을 적용 갯벌 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우리 도에서는 쾌적한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9년도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민간환경단체의 잠수장비를 활용 침전 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국어항협회의 어항 청소선을 이용하여 170톤의 바다 밑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음

금년에도 9개 항·포구에 어항청소선을 45일간 운항하여 청소작업을 할 계획이며,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11월까지 항만과 1종, 3종 어항을 대상으로 수중침체 폐기물을 조사한 후 오염이 심한 10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10억원씩 1,000억원을 투자하여 청소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곽유신 〕

· 우리 도에서는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도내 25개의 산 5,671ha를 산지종합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야생동물 보호와 희귀식물 보존을 위해서는 희귀야생 동식물 서식지나 자생지를 생태계 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관계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리고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희귀식물 불법 채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 실시와 청소년 철새탐조행사, 그리고 야생 조수 먹이주기 행사, 불법 수렵기구 수거활동, 그리고 새집 달아주기 행사 등 교육적인 사업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음.

쓰레기 불법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불법 투기 행위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입체적인 단속도 전개하고 있음. 또한 도민들이 불법행위 근절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는 등 앞으로 쓰레기 불법처리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쓰레기 소각장은 2002년까지 총 11기의 중대형 소각로 건설을 목표로 하는 환경보존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홍성군에 1일 36t 규모의 소각로를 완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천안시에 1일 2,000톤 처리규모의 대형 소각로를 2001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 그리고 금년에는 서산시 50t, 계룡출장소 20t, 예산군 50t과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태안군에 30t 등 4개 시·군에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오는 2002년까지 5~6개소에 소각로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쓰레기 감축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비나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서 동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질문1 : 복지·환경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관리 방안

· 도와 같이 시·군 공무원도 1차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계속 감축되고 있음. 그러나 도와는 달리 시·군에는 실제 사용관리하는 청소년 수련관, 시민회관, 도서관 등 복지시설과 축산, 위생, 쓰레기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됨.

일률적인 공무원 감축은 경영비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데 증가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인력의 재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

· 증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민간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할 시설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소요 인력을 승인 받아 배치토록 하는 등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앞으로도 도출되는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2 : 황산벌 개발 및 견훤왕릉 정비사업 추진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백제권사업에 논산의 백제 유적지가 본 사업에 누락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 논산시에서 계백장군 전승지 정비사업은 조금씩 추진되었으나, 황산벌 전적지 개발사업과 견훤 왕릉 정비사업은 막대한 투자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추진이 극히 미흡한 실정임. 시·군의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또는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사업권역을 공주, 부여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사업 구역을 확대 시행해 달라는 지역이 많았으나, 백제영토의 전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되고 일상적인 계획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백제의 고도권 중심인 공주, 부여지역과 백제의 별궁이 있었던 전북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그러나 논산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백제 문화유적의 정비 복원사업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황산벌 전적지와 견훤왕릉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황산벌 전적지는 아직 정확한 고증이 없어 문화재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논산시에서 고증작업을 위한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선 문화재 지정문제를 검토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그리고 우선 정비가 시급한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는 '90년부터 금년까지 총 38억 8,0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기념관과 관리소를 건립하였으며, 주차장과 광장 정비 및 사당신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동상건립과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견훤왕릉 정비사업은 지난 '81년 우리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후 일부 편의시설만 설치하였으나, 2001년부터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 등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질문3 :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 방안

·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경비부담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행정자치부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483호에서 지방비 부담분 중 도비에 시·군비 부담 비율을 정해 놓고 있음.

그러나 의료보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은 도비부담비율이 1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산시의 경우 도비 50%, 시·군비 50%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토양개량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보조사업 등은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시·군비 100%로 보조내시 되는 등 예를 든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도 내부지침에 의거 시·군비 부담기준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군비 부담이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군이 많은 실정임.

열악한 시·군 재정을 위하여 법에 의한 부담비율을 준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민선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도민들의 투자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세원확보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서 정한 도와 시·군간 비율은 정부가 지역 형편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된 감이 있음.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부득이 투자 효과와 주민 수혜정도 등을 감안해서 일부사업의 경우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질문4 : 정의여중·고 사태 해결 촉구

· 서천군내 소재 학교법인 송죽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정의여중·고의 사태 발생원인이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재단 측으로부터 징계처분 받은 교원과 교원노조가 합세하여 각 시·군별로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지? 옳지 않다면, 정의여중·고 사태의 진실과 소요 과정 및 수습 상황을 일반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부교육감 김경회 〕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분리하는 분산 수업을 실시하고 도 교육청의 장학지도 현장지도를 해서 현재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한편, 설립자인 김옥선 이사장은 지금 이 사태로서는 정의여중·고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자진 폐교의사를 밝혔음.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지역의 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

그러나 송죽학원 측에서는 6월 22일과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명백한 이유나 설명 없이 폐교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송죽학원 측에 폐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유하였고 만약 폐교결정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사태 발생 경위라든지 수습노력을 볼 때, 현 임원으로서는 정의여중·고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 임원을 전원 취임 승인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할 계획임.

정의여중·고 사태와 관련하여 전교조와 분규 가담 교사들이 교육감 퇴진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고 또한,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음.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수 차례 자제요청을 하면서 각급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동 사태의 진상과 우리 도교육청의 불가피한 조치계획을 행정경로 그리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 드린 바가 있으며, 또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 바가 있음.

이후 사태 악화로 불가피하게 임시 이사를 파견하게 될 경우에도 임시 이사 파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도민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림으로 해서 교육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5 : 과외금지 위헌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방안

· 오늘날 도·농간 교육환경의 차이로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상대적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도시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교육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계층간 위화감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임. 그렇다면 충남 도내의 교육 여건은 대부분이 농어촌 학교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외 금지 조치의 위헌 판결 이후 학교 밖의 교육을 학교 내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부교육감 김경회 〕

· 공교육의 활성화는 큰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할 일과 또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특별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제도 운영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외가 학교 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요 교과에 대해서는 수준별로 반편성을 한다든지 또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편성으로 수준별 수업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

■ 질문6 : 평생교육의 기반구축과 대처 방안

· 과거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면서 한 생애에 걸쳐 다양한 내용의 직업으로 거듭나야 하는 현실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부교육감 김경회 〕

·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그 방안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장학지도를 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교육연수기관 등 교육시설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유도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 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평생학습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음.

끝으로 현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마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민과 학생들 전체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사업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第21節 第141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1회 임시회는 도와 교육청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8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8. 10(목) ~ 8. 17(목) 8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8. 10(목)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4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13:00	운 영 위	1. 도청이전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2000. 8. 11(금) 10:00	운 영 위	1.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1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기획정보실소관) 2.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공보관실소관) 3.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감사관실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8. 11(금)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농림수산국소관) 2.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건 소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건설교통국소관)	
8. 12(토) 10:00	행 자 위	1. 의정자료수집	
10:00	교 사 위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11:00	건 소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소방안전본부소관)	
8. 13(일)		공 휴 일	
8. 14(월) 10:00	행 자 위	1. 현장시찰(자연사박물관건립현장 : 공주·반포) -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관련(농업기술원 : 유성)	
14:00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자치문화국) 2.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복지환경국) 2.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여성정책관실)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경제통상국) 2.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건 소 위	1. 현장방문 - 꽃박람회진입도로개설사업(홍성~태안)	
8. 15(화)		광 복 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8. 16(수)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계룡출장소) 2. 〃 (공무원교육원), 3. 〃 (총무과)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 〃 (청양대학)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농업기술원) 2. 〃 (꽃박람회)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아산소방서, 현대자동차공장소방시설(아산)	
8. 17(목)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국립공원계획변경안과관련하여「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변경에대한건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3		
조례안	8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의안	1	1. 국립공원계획변경(안)과관련하여「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대한 건의안	
기 타	4	1. 5분발언(교사위 최경섭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4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002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추진상황보고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0. 8. 10, 11:00) 2000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와 강복환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다. 또한,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으로부터 태안 해안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5분발언이 있었다.

○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0. 8. 17, 11:00)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개정안 6건,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 폐지안 2건, 최경섭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국립공원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대한 건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07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00. 7.28)	농경위	○방조제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심의회운영규정을 삭제 등	2000. 8. 17	2000. 8. 17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08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00. 7.28)	농경위	○지방항만 지정 및 항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목적으로 조례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항만이 우리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어 그동안 지방항만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동조례 제정근거인 항만법시행령 제15조 조항이 삭제되고 동조례의 기능을 상위 항만법에 규정됨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	2000. 8. 17	2000. 8. 17	원안
209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00. 7.28)	농경위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중앙의 세계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지방단위의 동협의회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폐지	2000. 8. 17	2000. 8. 17	원안
210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0. 8. 3)	교사위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일부조항 개정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방법 삭제 -퇴학의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위원의 퇴직사유 추가 등	2000. 8. 17	2000. 8. 17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1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00. 8. 3)	교사위	○2000. 9. 1일자 신설·폐지 및 위치를변경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위치를 삽입·변경·삭제 -신 설 : 천안일봉유치원 등 2개원 -폐 지 : 천안일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3개교 -위치변경(2개교), 주소변경 : 천안부영초등학교	2000. 8. 17	2000. 8. 17	원안
212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00. 8. 3)	교사위	○교육자치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 및 폐지	2000. 8. 17	2000. 8. 17	원안
21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00. 8. 11)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 탄력성 있게 조정 -위원정수 9인을→9~11인으로 ○2000. 7. 20일자 행정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서 정책관리관을 삭제	2000. 8. 17	2000. 8. 17	원안
214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00. 8. 11)	본회의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기간으로,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조사계획서의 통지대상에 도지사 외에 교육감 추가 등	2000. 8. 17	2000. 8. 17	원안

○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15

국립공원계획변경(안)과관련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변경에대한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최경섭의원외 11인
제 안 (제출) 일 자		2000. 8. 16.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8. 1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8. 17.
이 송 기 관		국무총리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해양수산부

□ 주 문

○ 환경부에서 마련한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태안군 소원면, 근흥면 일원의 갯벌을 공원지역으로 추가 편입되도록 계획하고 있어 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반발이 거센 실정으로서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건의코자 함.

□ 제안이유

○ 갯벌지역은 3개읍, 면(근흥, 소원, 안면) 1만 5천여 어민들이 년간 5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면허, 신고(맨손) 어업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는 물론 공원관리상 제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필연적임으로 추가 편입 반대

○ 다른 항포구와 해수욕장은 이미 개발되었으나 국립공원내에 있어 각종개발과 정비,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항포구와 해수욕장은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하는 공원 지역 재조정

○ 국립공원내 각종 인허가와 단속 등이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어 합리적 관리를 위해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주요골자

○ **근흥 소원지구 갯벌(24.10㎢), 안면 신야갯벌(0.79㎢), 남면 몽산(0.09㎢)의 태안 해안국립공원 신규 편입을 전면 백지화**

- 해안갯벌의 보존과 동시에 어업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
-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존권이 달려있는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원 편입 백지화

○ **그 동안 지역주민의 고통이 컸던 항·포구·해수욕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 희망**

- 공원경계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구 불일치 지역을 조정하고 이미 개발된 항포구와 해수욕장은 각종정비와 보수 등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

○ **국립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국립공원내 각종 인허가 및 단속이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립공원계획변경(안)과관련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변경에대한건의안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서해안 최고의 경관을 지난 관광휴양지로 40여개의 항포구와 30여개의 해수욕장이 있는 전국 유일의 해안국립 공원으로 연간 8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휴양지로 개발되어 왔으나, 1978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 행정 편의적인 일방적 공원 지정으로 인해 그 동안 주민들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에 많은 침해와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및 항포구 개발이 공원지역내에 있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으로 공원지역을 재조정해야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으며,

환경부에서 마련한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안에 3개읍면지역 갯벌 약 25㎢를 추가 편입하려는 안에 대하여 이 지역 15,000여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공원지역내의 각종 인허가 및 단속에 공원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이원화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고, 국립공원의 관리권 이양 등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15,000여 어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국립공원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근흥 소원지구 갯벌(24.10㎢), 안면 신야갯벌(0.76㎢)의 태안해안국립공원 신규 편입 전면 백지화

이 지역은 3개 읍면(근흥, 소원, 안면) 15,000여 어민들이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소득으로 생계의 63%가 소득원인 지역으로 향후 면허, 신고(맨손) 어업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되며, 안면 신야 간척지(2.80㎢)와 축제식 양식장(1.30㎢)에 연계된 큰 배수로가 하나뿐으로 공원지역 편입에 따라 준설작업등이 원활치 못할 경우 농경지 침수 등에 따른 강력한 주민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예상되어 공원지역 신규편입을 전면 백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지역주민의 고통이 컸던 항포구 해수욕장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내에는 30여개의 해수욕장과 40여개의 항포구가 있으며 연간 8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임에도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비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자연훼손과 해양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립공원내에 있는 각 해수욕장과 항포구가 각종 법규제약으로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역관광지에 비해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는 현실로 1978년 지정당시와 현저히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지역 재조정으로 항포구와 해수욕장을 공원지역에서 제척 시켜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국립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국립공원은 육지면적중 72%가 사유지로 각종 인허가와 단속 등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복된 행정처리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국립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위의 세가지 요구사항을 환경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여 국립공원 관리구역내 7만여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0 년 8 월 17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원 일 동

Ⅳ. 5分 發言 要旨

1. 최경섭 의원(태안군, 자민련)

■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따른 부당성 관련

·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에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면서 민생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불법건축물이라는 죄명으로 인하여 수 백만원, 수천만원 벌과금을 내야하고 전과자라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이러한 주민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민원을 야기시켰고, 이는 해안국립공원 구역지정이 잘못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음.

항포구 해수욕장 등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없는 곳은 과감히 공원구역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음.

특히 금번 환경부에서 실시되는 공원구역 변경에 있어서 근흥, 소원지구와 안면 신하지역의 갯벌 약 25㎢을 추가 편입시키려 하고 있음.

이 곳에는 어업권이 39건에 양식장 면적이 837ha가 되며, 년 소득 500여억원 이상이 되는 이 곳을 소득원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어민이 1만5,000여명이 넘는 곳임.

공원구역으로 편입된다면 단순 맨손업을 제외한 어업권을 잃게 될지도 모름.

이 바쁜 시기에 일손을 놓고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공원편입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성금을 모아서 환경부와 관계 요로에 부당성을 알리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람.

第22節 第142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2회 임시회는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9. 22(금) ~ 10. 6(금) 1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9. 22(금)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4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00	운 영 위	1. 제1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회사무처소관)	
9. 23(토)		1. 의정자료수집	
9. 24(일)		공 휴 일	
9. 25(월)		1. 의정자료수집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9. 26(화)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자치문화국소관) 2.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복지환경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농림수산국소관) 2.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남도지사제출)	
11:00	건 소 위	1. 2000년도추경예산안예비심사(건설교통국소관)	
9. 27(수)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공보관실소관) 2. 〃 (감사관실소관) 3. 〃 (총무과소관) 4. 〃 (공무원교육원소관) 5. 〃 (계룡출장소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청양대학소관) 3. 〃 (여성정책관실소관)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경제통상국소관) 2.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00	건 소 위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소관)	
9. 28(목)	행 자 위	1. 의정자료수집	
	교 사 위	1. 의정자료수집	
15:00	농 경 위	1. 안면도국제꽃박람회기공식참석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9. 29(금)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기획정보실소관) 2.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10:00	교 사 위	1.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통합을위한정책건의안 2.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교육사회위원회소관)	
11:00	농 경 위	1.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농업기술원소관)	
	건 소 위	1. 현장방문 - 남면~동면간 지방도확포장공사(연기)	
9. 30(토)		1. 의정자료수집	
10. 1(일)		공 휴 일	
10. 2(월) 11:00	예결특위 (1차)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도본청소관)	
10. 3(화)		개 천 절	
10. 4(수) 11:00	예결특위 (2차)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도본청소관)	
10. 5(목)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국 「이벤트자치복권」 발행계획안	
	교 사 위	1. 현장시찰 - 안면도골프장예정지(환경문제관련)	
11:00	농 경 위	1.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남도지사제출) 3.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대안)	
11:00	건 소 위	1.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 10. 6(금) 11:00	본 회 의 (제2차)	1.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전국 「이벤트자치복권」 발행계획안 10.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통합을위한정책건의안 1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5. 신호균의원청가허가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22		
조례안	8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1	1.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2	1.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전국「이벤트 자치복권」 발행계획안	
결의안	1	1.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의안	1	1.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 통합을 위한 정책건의안	
기 타	9	1. 5분 발언(장준섭의원, 박찬중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4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운영위원회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6.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7. 5분 발언(임성규의원) 8. 2000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9. 의원 청가의 건(신호균의원)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0. 9. 22, 11:00) 2000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위원 정수가 1명 늘어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동선 의원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며,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천안시 출신 이종수 의원 등 17인을 선임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이종수(천안), 김문규(천안), 손재탁(공주), 신재원(보령), 강태봉(아산), 이복구(서산), 송영철(논산), 심정수(금산), 한소환(연기), 강영성(부여), 전영환(서천), 정선홍(청양), 신호균(홍성), 이한식(예산), 최경섭(태안), 장준섭(당진), 한창숙(비례)

○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0. 10. 6, 11:00)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개정안 8건,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동의안 2건,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건,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통합을위한정책건의안 1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건, 신호균의원청가허가의건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06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 7.28)	행자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을 기존 상이등급 6급에서 7급까지 확대실시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	2000. 10. 6	2000. 10. 6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18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 9. 14)	행자위	○고문변호사를 2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송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권역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인원을 확대 2인이내→4인이내로	2000. 10. 6	2000. 10. 6	원안
219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 9. 14)	행자위	○민주화운동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에서 관련업무를 관장하게 될 그 소요인원을 한시적으로 책정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2,841명(2명증원)	2000. 10. 6	2000. 10. 6	원안
220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 9. 14)	행자위	○민간위탁방침에 의거 이미 위탁가능사무로 규정된 것과 유사한 사무를 추가 -계룡출장소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업무에 쓰레기매립장 업무를 추가하여 위탁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위탁사무를 환경기초시설로 확대	2000. 10. 6	2000. 10. 6	원안
221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 9. 14)	농경위	※ 행자위 심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대안 제출로 폐기	-	-	폐기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23	충청남도건축조례 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 9. 14)	건소위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동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개정 -도시설계승인에관한사항 심의규정 삭제 -도시설계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의결 및 승인후 시장·군수의 의견반영자료 제출내용 삭제	2000. 10. 6	2000. 10. 6	원안
224	충청남도휴양림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정 용 해 의 원 외 13 인 (00. 9. 22)	농경위	※ 행자위 심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대안 제출로 폐기	-	-	폐기
225	충청남도용역시행 절차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정 순 평 의 원 외 19 인 (00. 9. 23)	행자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의 정비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재정경제원예규 → 재정경제부예규로 -용역보고회 참석범위 규정과 관련 계장을 담당으로, 최종보고회 주재자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2000. 10. 6	2000. 10. 6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26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순평 의원외 19인 (00. 9. 23)	행자위	○법령의 개정으로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중 민간유치사업에 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간사를 공기업담당→투자심사담당	2000. 10. 6	2000. 10. 6	원안
229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대안)	농경위 위원장 (00. 10. 5)	본회의	○정용해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개정내용은 다르나, 같은 제명의 조례로써 현실에 부합되도록 취지와 목적이 내용상 합당한 조례안이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된 사항을 토대로 최적의 대안 제출	2000. 10. 6	2000. 10. 6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17

전국「이벤트복권」 발행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0. 9. 14.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0. 9. 1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10. 6)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0. 6.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전국자치복권이 시장환경 악화와 즉석식 복권 선호도 저하 등으로 수익금 확대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 2000년도 상반기에 발행하여 성공적인 판매수익을 올린 이벤트 복권을 자치복권에서도 발행하여 수익금을 확대 조성코자 함.

□ 제안이유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1특별시, 6광역시, 9도)
○ 복권종류 : 이벤트자치복권(가칭 슈퍼코리아 자치복권) ○ 발행기간 : 2000년 하반기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형식 : 추첨식 (4매 1세트 5개조로 구성)
○ 추첨방법 : TV방송매체 활용 ○ 발행규모 : 400억원
○ 소비자가 : 2,000원/세트 (500원/매)
○ 예상수익금 : 약 80억원 (판매액의 25% 정도)

전국「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서

1. 합계

(단위 : 백만원, 백만매)

자치단체명	발행액	발 행 세 트	발행기간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비고
충청남도 등 16시도(공동)	40,000	20	2000년 하반기	32,000 (80%)	8,000	

2. 2000년도 이벤트자치복권 발행계획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액면금액	발행세트	발행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계				20	40,000	32,000	8,000
추첨식	2000년 하반기	1회	2,000원 (4매1세트)	20	40,000	32,000	8,000

3. 행사기념복권 발행계획

가.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소 요 예 산			부족예산 확보계획
		계	확 보 가능액	부족액	
-	-	-	-	-	-

나. 복권발행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액면금액	발행매수	발행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	-	-	-	-	-	-	-
-	-	-	-	-	-	-	-

4.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ㅇ 건의·결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27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 통합을 위한 정책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손재탁의원외 20인
제 안 (제출) 일 자		2000. 9. 26.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회부(의결)일	2000. 9. 2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10. 6)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0. 6.
이 송 기 관		국무총리실, 국회교육위, 교육부,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

□ 제안이유

우리 충남도에는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와 공주문화대학(전문)이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이 21세기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새시대의 요청에 따라 양대학은 물론, 지역민 공청회를 통하여 성원과 공감속에 지난해 10월 정부에 양대학 통합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국립대학 구조조정 작업중임을 내세워 유보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가 양대학이 통합함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200만 도민과 도의회의 이름으로 양대학의 조속한 통합을 정부와 요로에 건의 ·촉구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

○ **양대학 통합으로 조직·인력감축과 예산절감등 효율 극대화**

- 양대학의 통합시 6개부서, 4개학과, 2개연구소의 감축으로 연간 20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최고의 교육환경조성도 가능해집니다.

○ **전국적으로 볼때 열악한 충남지역의 국립대학 교육기회 확대 필요**

- 국립전문대학(2년제)은 충청권에 집중된 반면, 국립종합대학교는 영·호남권에 편중(24개교중 15개교)되어 있고, 충남도내 국립대학 정원이 사립대학 정원대비 9.7%로 전국최저(전국평균 33.5%)인 점을 감안할 때, 충남지역의 국립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 **충남도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양대학의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설립예정인 한의과대학 등을 통한 보건·복지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으로 충남지역내 우수산업인력 공급**

- 양대학의 BK21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애니메이션 관련학과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21세기 정보통신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하고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에 소요되는) 고급 전문인력 공급 및 영상분야 연구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양대학의 통합은 집권당의 '97대선 공약의 실천**

- 공주대학교와 공주문화대학의 통합은 집권당의 '97대선 공약이며, 각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대학의 통합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불만이 고조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 공주문화대학간통합을위한정책건의안

21세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시대의 조류속에서 새로운 문화가치에 부응하는 고급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충남도 공주지역의 국립공주대학교와 국립공주문화대학이 중복·과잉적 투자에서 탈피하여 충남지역발전과 21세기를 선도할 특성화된 지방의 국립거점 종합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1999. 10. 22일이후 양대학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통합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는 통합을 바라는 지역민의 숙원과 앞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학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시대적 인식에 부응치 못한 것으로서 통합을 바라는 많은 지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당국이 대학경영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책임이 있음을 상기할 때, 정부의 통합승인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원을 비롯한 많은 지역민의 간절한 소망이며 정서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지역민이 염원하는 양대학의 통합당위성을 다음 다섯가지로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여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대학 통합으로 조직·인력감축과 예산절감등 효율 극대화

양대학의 통합시 6개부서, 4개학과, 2개연구소의 감축으로 연간 2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최고의 교육환경조성도 가능해집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볼때 열악한 충남지역의 국립대학 교육기회 확대 필요

국립전문대학(2년제)은 충청권에 집중된 반면, 국립종합대학교는 영·호남권에 편중(24개교중 15개교)되어 있고, 충남도내 국립대학 정원이 사립대학 정원대비 9.7%로 전국최저(전국평균 33.5%)인 점을 감안할 때, 충남지역의 국립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셋째, 충남도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양대학의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설립예정인 한의과대학등을 통한 보건·복지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넷째,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으로 충남지역내 우수산업인력 공급

양대학의 BK21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애니메이션 관련학과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21세기 정보통신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하고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에 소요되는) 고급 전문인력 공급 및 영상분야 연구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양대학의 통합은 집권당의 '97대선 공약의 실천

공주대학교와 공주문화대학의 통합은 집권당의 '97대선 공약이며, 각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대학의 통합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불만이 고조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대학의 통합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공주대학교와 공주문화대학간 통합을 조속히 승인해 주시어 저희 도의원과 지역민의 숙원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0년 10월 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의안번호 228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0. 9. 29.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10. 6)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 주 문

2002년도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일원에서 개최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내에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제안이유

○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얻어 개최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국제적 행사로서 이의 성공적 개최는
- 국내적으로 우리도의 면모를 널리 부각시키면서 화훼 및 관광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 국가적으로는, 충청남도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알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임으로

○ 자치도정의 한축인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 업무가 집행기관의 여러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바

○ 이 행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명칭은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 위원수는 9~11인 이내로 구성하며
- 구성기간은 특위위원 선임일부터 2002년 5월 1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임.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추진배경**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얻어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로서 이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도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위선양은 물론 우리도의 화훼산업발전과 관광개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제6대의회 개원이후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의회내의 공감대도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임.

□ **특별위원회 명칭**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수** : 9~11인이내

□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꽃박람회 종료시한인 2002년 5월 19까지

□ **특별위원회 직무범위**

○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 추진을 위한 소관 및 직무범위

- 홍보사절단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등 꽃박람회 홍보
-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꽃박람회 관련 예산확보 노력
- 꽃박람회 관련 건의안 채택, 서한발송 등

Ⅳ. 5分 發言 要旨

1. 장준섭 의원(당진군, 자민련)

■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 충청남도에서는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과 서부지역의 경제기반 확충을 위해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 일원에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1조 1,197억원을 투입하여 365만평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송기계, 조립금속, 정밀화학, 섬유업종 등의 유치를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기간을 1년 남겨놓은 지금 우리 도의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치실적이 없을 뿐아니라 공단개발도 착수조차 못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단지조성 예정지구로 지정 편입된 후에 편입토지나 건물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해 옴으로써 생활하는데 고통과 함께 재산권의 제약으로 입은 피해 또한 막대함.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편입사유지는 논과 밭이 21만여평, 임야가 27만평, 염전이 26만평, 기타 22만평, 가옥 25동 등 총 986필지에 98만여평이고 이에 소요되는 보상액은 추정가격으로 724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처음 공단개발을 우리 도가 담당한 것은 당시의 여건으로는 아주 적절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9년여동안 많은 변화가 왔음.

공단개발을 우리 도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반납하여야 빠를 것인지도 이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함.

2.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도청이전 관련

·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 제132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청이전 추진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을 재통합하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지적한 바 있음.

앞으로도 본 의원의 이러한 소신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이며, 이는 한 도민으로서의 신중한 견해표명이자 한 의원으로서의 정책적 제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성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

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10일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2년 내에 도청이전 후보지를 확정짓겠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바 있음.

도청이전의 비용은 약 4조원 내지 5조원 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임.

이 돈은 솔직히 자그만치 우리 도 1년 예산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4년 내지 5년 동안을 몽땅 쏟아 부어야 할 천문학적 재정임.

더욱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도가 무려 7,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임.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어느날 갑자기 강제적으로 분리된 대전과 충남, 이제는 다시 합쳐서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하나의 한 뿌리인 그 정신을 되찾는 일은 바로 우리 세대의 엄숙한 해결 과제이기도 한 것임.

국가에서는 이미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시를 제외한 여타 광역시는 지방행정부의 차원에서 재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장기정책 방침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임.

도청 소재지가 지역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그 발상과 논리는 그 의미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생각함.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도청이전에 집착하지 말고 이미 흐트러진 민심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함.

3.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호남고속도로 벌곡 간이 정류장 및 건양대 병원앞 간이 정류장 설치 건의

· 호남고속도로변에 위치한 벌곡 간이정류장은 대전~광주간 일반고속버스가 두 시간에 한 번씩 정차하였으며, 또한 금남여객의 직행버스는 출·퇴근시간을 비롯 1일 수회씩 연무대를 경유하는 논산행과 대전행 버스가 정차하던 정류장이었음.

그러나 언젠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슬그머니 간이정류장 주변에 차단콘크리트와 철조망을 가설하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벌곡면의 주민 2,000여명, 각급기관 및 기업체의 직원 250여명, 대전통학생 100여명과 외지에서 대둔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큰 불편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는 호남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많은 지역주민의 농경지가 편입되었음에도 도로공사가 관리의 편리함을 이유로 간이정류장 승객이 사용하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철조망을 가설하여 1일 왕복 70회를 운행하는 금남여객 직행버스가 단 한 대도 정차하지 못하게 하였음.

서천·대천·부여·논산지역 환자들이 서부터미널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려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됨으로 예약시간을 못 지키는 등 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주민편익 차원에서 대전시 관저동에 위치한 건양대학병원 앞에 하차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및 인본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퇴근 및 주요시간대 만이라도 벌곡의 간이정류장에 직행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한 건의와 함께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第23節 第143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3회 임시회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10. 27(금) ~ 11. 7(화), 12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10.27(금)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5분발언」 2. 제1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28(토)		1. 의정자료수집	
10. 29(일)		공 휴 일	
10. 30(월)		1. 의정자료수집	
10. 31(화) 10:00	운 영 위	1.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2. 제144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의건	
11:00	행 자 위	1.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현장시찰 - 충청남도학생기숙사(대전 유성구)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0. 31(화) 11:00	교 사 위	1.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00	농 경 위	1.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11:00	건 소 위	1.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 1(수)	행 자 위	1. 현장시찰 - 2001전국체전관련시설(천안) - 삽교호함상공원조성지(당진 신평면)	
	교 사 위	1. 현장시찰 - 행담도개발관련갯벌환경문제(당진)	
	농 경 위	1. 현장시찰 - 농촌생활환경시범촌(공주, 천안) - 신기술창업보육센터(천안 안서)	
	건 소 위	1. 현장시찰 - 용담댐건설공사현장	
11. 2(목) 11:00	본 회 의 (제2차)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3. 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설명회 청취	
14:00	꽃박특위 (제 1 차)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 3(금)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발의) 2.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의원발의) 3. 2000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1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5.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4. 충청남도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농 경 위	1. 현장시찰 - 축산시험장이전부지(청양 정산) - 수원지구배수개선사업(부여 양화)	
	건 소 위	1. 현장시찰 - 규암~청남간지방도화·포장공사현장 - 대전~통영간고속도로공사현장	
11. 4(토)		1. 의정자료수집	
11. 5(일)		공 휴 일	
11. 6(월)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9. 제81회전국체육대회결과및제82회전국체육대회준비상황보고	
11:00	교 사 위	1. 교육청당면현안사항청취 - 정의여중고관련사태등	
11:00	농 경 위	1. 영국켄트주와자매결연및러시아레닌그라드주와교류협정체결안 2.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건 소 위	1.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7(화) 11:00	본 회 의 (제 3 차)	1.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6.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7. 2000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1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9.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10.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 11.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13. 충청남도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4.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15. 영국켄트주와자매결연및러시아레닌그라드주와교류 협정체결안 16.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 17.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8.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19.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20.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30		
조례안	16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4	1. 2001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0년도 제3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4. 영국켄트주와 자매결연 및 러시아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체결안	
결의안	1	1.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결의문	
기 타	9	1. 5분발언(박영조의원) 2.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4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6.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10. 27, 11:00) 2000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에 김문규·유병기 의원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에 강영성 의원을 보임하였으며,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기군 출신 강화섭 의원 등 10인을 선임하였고 2000년 10월 27일부터 2002년 5월 19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강화섭(위원장, 연기), 이진환(간사, 천안), 신재원(보령), 송영철(논산), 강영성(부여), 박영조(서천), 신호균(홍성), 최경섭(태안), 송민구(비례), 김동선(비례)

○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11. 2, 11:00)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의결하였고,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설명회를 청취하였다.

○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2000. 11. 7, 11:00)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등 조례 제정안 4건,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 개정안 9건,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3건, 2000년도 제3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동의안 4건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22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00. 9. 14)	농경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충남신용보증조합을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령이 제정되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	2000. 11. 7	2000. 11. 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34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 순 평 의 원 외 17인 (00.10.27)	행자위	○상위법령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정비, 도의 행정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반영 등 -위원장의 표결과 관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관광과장으로	2000. 11. 7	2000. 11. 8	원안
235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 순 평 의 원 외 17인 (00.10.27)	행자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규정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을 관광진흥법 제35조로 -징수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을 관광진흥법 제35조로	2000. 11. 7	2000. 11. 8	원안
236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정 용 해 의 원 외 18인 (00.10.27)	농경위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해 주는 도지사 추천 으뜸Q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등록예규인 충청남도지사농특산물품질추천제 운영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임대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반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2000. 11. 7	2000. 11. 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37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10.28)	행자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한시적으로 책정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2,842인으로 1명 증원	2000. 11. 7	2000. 11. 8	원안
238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10.28)	행자위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업무 등을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 증진	2000. 11. 7	2000. 11. 8	원안
241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00.10.28)	행자위	○'91. 5월부터 동협의회 기능을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각 분담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문화관광부에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내지 제2항이 '98. 12. 31일자로 삭제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폐지	2000. 11. 7	2000. 11. 8	원안
242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00.10.28)	행자위	○'88. 10. 18 제정된 동조례는 도가 시행하는 88올림픽대비환경정비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여 왔으나, -원금 및 이자상환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	2000. 11. 7	2000. 11. 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43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10.28)	농경위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을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생략 대상사업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중 점포시설 개선사업을 추가	2000. 11. 7	2000. 11. 8	원안
244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10.28)	교사위	○기금의 재원중 포괄적인 규정인 기타재원을 기타 수입금으로 구체화, 통합관리기금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기금계좌설치조항 및 기금예치 조항 삭제 등	2000. 11. 7	2000. 11. 8	원안
245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10.28)	교사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오존층 파괴 등을 해결하고자 국가별 의제21과 자치단체별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2000. 11. 7	2000. 11. 8	원안
246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도지사(00.10.28)	교사위	○1996년도 작성 공포한 푸른충남21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 -협의회 운영경비, 푸른충남 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함.	2000. 11. 7	2000. 11. 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47	충청남도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도지사(00.10.28)	교사위	○전국체전과 꽃박람회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 낙후된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과 체계적 유지·관리를 제도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용자에게 편익 제공 -관리인 및 책임공무원 지정, 편의용품 비치·제공 등	2000. 11. 7	2000. 11. 8	수정
248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도지사(00.10.28)	건소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 -개발촉진지구를 주거개발 촉진지구·상업개발촉진지구 등으로 세분	2000. 11. 7	2000. 11. 8	원안
249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10.28)	건소위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사의 범위 명정 등	2000. 11. 7	2000. 11. 8	원안
250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10.28)	건소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지불함. -거래가액의 구분을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을 9단계에서 3단계로, 중개수수료 요율과 한도액 조정	2000. 11. 7	2000. 11. 8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30

2001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0. 10. 19.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0. 10.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0. 11. 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1. 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재산의 처분에 관한 2001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 관리계획 내용

o 일반회계소관 재산

구 분	재 산 종 류	사 업 명	위 치	필지수 (건 수)	수 량 (㎡)	가 액 (천 원)	비 고
처 분	계					4,665,338	
	토 지	안 면 도 관광지개발	안면읍 중장리	37	975,731	4,344,693	골프장 부 지
	선 박	폐병원선 매 각		1	1척	320,645	

o 특별회계소관 재산

구 분	재 산 종 류	사 업 명	위 치	필지수 (건 수)	수 량 (㎡)	가 액 (천 원)	비 고
처 분	토 지	안 면 도 관광지개발	안면읍 중장리	103	423,548	1,953,693	골프장 부 지

의안번호 231

2000년도 제3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0. 10. 19.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0. 10.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0. 11. 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1. 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00년도 제3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 관리계획 내용

ㅇ 일반회계소관 재산

구 분	재산 종류	사 업 명	위 치	필지수 (건수)	수 량 (㎡)	가 액 (천 원)	비고
취 득	선박	병 원 선 대체건조		1	1척	2,670,015	
처 분	토지	소 계		116	1,116,187	13,713,257	
		① 안 면 도 관광지개발	태안군안면읍 중장 · 승언리	114	1,111,907	13,681,585	
		②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대전시 동구 세천동	2	4,280	31,672	

ㅇ 특별회계소관 재산

구 분	재산 종류	사 업 명	위 치	필지수	수 량 (㎡)	가 액 (천원)	비고
처 분	토 지	안면도관광지 개발	태안군안면읍 중장 · 승언리	71	90,067	1,158,316	

의안번호 232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0. 10. 19.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0. 10.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0. 11. 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1. 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재산의 무상대부·사용허가에 관한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동의를 요청함.

□ 무상대부·사용허가 내역

○ 재산의 표시(총괄)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가액 : 천원)
계	52	318,986	5,920,207
무 상 대 부(잡종재산)	44	254,552	4,864,725
무상사용허가(행정재산)	8	64,434	1,055,482

○ 대부(사용)기간 : 대부계약(사용허가)일 ~ 2002. 6. 30

○ 대부(사용)목적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주전시장

○ 대부(사용허가)받는자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의안번호 233

영국켄트주와 자매결연 및 러시아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체결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0. 10. 19.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회부(의결)일	2000. 10.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0. 11. 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1. 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5대양 6대주를 향한 도정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동북아·미주위주의 국지적 교류를 유럽지역으로 확대 증진하고

○ Euro貨 출범 등 유럽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되어 통상 및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방차원의 교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 그 동안 우리도와 글로벌 파트너쉽 가입과 활발한 인적교류 등으로 관계발전 분위기가 성숙된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여 홍보와 대학간 학술교류, 문화·예술분야의 교류 증진을 위해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와는 일반교류협정을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 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체결코자 함.

□ 주요내용

○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식품 및 농업기술, 투자 및 통상, 대학간 학술교류, 지식경영 및 기술혁신 분야에서 상호 협력 추진

○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와는 일반교류협정을 체결하여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여, 투자 및 통상 확대, 문화교류, 헤르젠 대학과 도내 대학간 교류지원 방안등 모색

※ 현재 우리도는 러시아의 아무르주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레닌그라드주와는 일반교류협정에 의거 내실있는 교류추진

○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서 문안은 대상지역 주정부와 상호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협정체결은 금년 12월 계획중인 도지사 유럽순방시 양 지역 정상간 서명

○ 결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51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결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0. 10. 31.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 11. 2)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1. 3.
이 송 기 관		청와대, 건교부, 환경부, 충남출신 국회의원 13명

□ 제안이유

○ 2001년 용담댐완공과 담수시 평소에 대청호로 유입되던 유수량이 초당 15.6톤의 물을 전주권으로 역류시키고 25%인 초당 5톤만 방류하게 되면 유수량부족으로 자정능력 상실과 유입수량 부족으로 대청호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 자명하므로

○ 전주권 필요 수량이외의 하천수는 용담댐하류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요수량인 초당 12톤 이상으로 용수배분을 재조정하고

○ 금산등 인근지역은 유수량 감소로 자정능력 저하에 따른 취수원 확보와 수질개선 비용으로 용담댐 발전 수입금을 재투자 하여야 함.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결의문안

국가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관리로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 공공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호로 흐르던 물의 75%인 초당 15.6톤의 물을 전주권으로 역류시키고 25%인 초당 5톤 정도만 댐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으로 있어 하천유지 용수부족에 따른 자정능력 상실과 유입수량 부족으로 대청호가 심각하게 오염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충남도의회에서는 담수전 선결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용담댐 완공후 대청호에 영향이 미치지 않토록 사전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한 후 담수가 되도록 요구한다.
2. 전주권 필요수량을 제외한 하천수는 용담댐 하류의 생태계보호를 위한 필요수량인 초당 12톤이상으로 용수배분을 재조정하고
3. 금산 등 댐 인근지역은 유수량 감소로 자정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수원으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수원이 고갈되므로 이에대한 대책으로 취수원 확보와 수질개선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해 용담댐 발전수익금을 재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충청남도 의회는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11월 2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Ⅳ. 5分 發言 要旨

1. 박영조 의원(서천군, 자민련)

■ 자연사박물관 건립, 충남발전연구원 운영,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관련

· 사회의 건강한 가치 체계를 지켜주고 버팀목이 되는 것은 바로 신뢰와 도덕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 진다고 생각되며, 최근 도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도정을 걱정하고 도민들의 근심을 같이하는 많은 동료의원들의 생각을 대신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

먼저 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는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집행부의 대답은 참으로 명쾌했으며, 또한 언론과 지역사회단체의 문제 제기에도 사업의 당위성과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꼭 필요한 사업임을 부각시켜 왔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비리가 드러나고 급기야 사업취소라는 결과를 야기시켰으며 행정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말았음.

둘째, 충남발전연구원의 내부갈등 문제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의 「Think Tank」이며, 연구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그토록 성원과 격려를 보냈건만 내부갈등으로 파행을 치닫고 있음.

셋째,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충남신보는 발족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원칙도 없이 인사규정을 마음대로 개정하여 불신과 분열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도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과연 도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곧 공직기강과 관련 산하단체에 대한 도의 통제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함.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적인 감독기능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인지하면서도 방관한 것인지 그 판단에 납득할 수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한 후 본질을 왜곡·호도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음.

모든 정책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공개행정이 이루어져 공직자들의 의견이 집약됐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업적과 실적 위주만의 겉치레식 행정 보다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됨. 이런 위기가 내일의 기회로 삼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람.

第24節 第144回 定例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 이번 정례회는 도 및 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11. 20(월) ~ 12. 18(월), 29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11.20(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44회충청남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충청남도예산안제출에대한도지사연설 3.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대한 교육감연설 4.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00	꽃박특위	1.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추진상황보고 2. 꽃박특위운영계획안	
11. 21(화) 10:30	행 자 위	1. 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실소관)	
	교 사 위	1. 현지확인 - 기독성심원, 천안공고(천안) - 일신원(아산)	
11:00	농 경 위	1. 행정사무감사(농림수산국소관) -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사무소, 축산위생연구소 포함	
	건 소 위	1. 현지확인(보령소방서)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 22(수) 11:00	행 자 위	1. 행정사무감사(아산시)	
	교 사 위	1. 현지확인(아산교육청)	
11:00	농 경 위	1. 행정사무감사(경제통상국소관) - 서울통상지원사무소 포함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안면도우회도로확·포장공사현장(태안) - 안면도관광지남측진입도로개설공사현장(태안) 2. 행정사무감사(서산소방서) 3. 안면도우회도로개설공사감리책임자증인채택의건	
11. 23(목) 10:00	행 자 위	1. 현지확인 -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 행정사무감사(태안군)	
	교 사 위	1. 현지확인 - 금강미호천(공주 반포, 연기 남면, 동면)	
	농 경 위	1. 현지확인 - 산림훼손지역(천안 목천·성남)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물류센터회의실)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장기~남면간도로공사현장(공주) - 달산~대학간도로공사현장(공주)	
11. 24(금) 10:30	행 자 위	1. 행정사무감사(공무원교육원) 2. 행정사무감사(공주의료원)	
14:00	교 사 위	1.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소관)	
	농 경 위	1. 현지확인 - 영인산산불발생지역(아산 인주) - 충남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회의실)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제2병천교개량사업현장(천안) - 입장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현장(천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 25(토) 10:30	행 자 위	1. 행정사무감사(공보관실소관) 2. 행정사무감사(감사관실소관)	
10:30	교 사 위	1. 행정사무감사(여성정책관실소관) - 여성정책개발원 포함	
10:00	농 경 위	1.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원) - 각특화작물시험장, 농산물원종장 포함	
	건 소 위	1. 휴 회(감사자료검토)	
11. 26(일)		공 휴 일	
11. 27(월) 10:30 14:00	행 자 위	1. 행정사무감사(계룡출장소) 2. 행정사무감사(충남발전연구원)	
10:30	교 사 위	1. 행정사무감사(보건환경연구원소관)	
	농 경 위	1. 충청남도축산위생연구소(홍성 금마) 2. 현지확인 - 홍성구항 구제역발생농가	
10:30	건 소 위	1. 행정사무감사(아산소방서)	
11. 28(화) 10:30 14:00	행 자 위	1. 행정사무감사(총무과소관) 2. 행정사무감사(충청남도체육회소관)	
10:30	교 사 위	2. 행정사무감사(청양대학소관)	
	농 경 위	1. 현지확인 - 은하농공단지(홍성 은하) - 보령75상가(보령 대천)	
	건 소 위	1. 현지확인 -봉황천정비사업현장(금산)	
11. 29(수) 10:30	행 자 위	1. 행정사무감사 - 자치문화국(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10:30	교 사 위	1. 행정사무감사(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행정사무감사 총평(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1.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 30(목) 10:30	행 자 위	1. 행정사무감사 - 기획정보실(충청남도장학회)	
10:30	교 사 위	1. 행정사무감사(교육청소관)	
11:00 14:00	농 경 위	1. 행정사무감사총평(농림수산국소관) 2. 행정사무감사총평(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1. 행정사무감사(소방안전본부소관)	
12. 1(금) 10:30	본 회 의 (제2차)	1. 도정및교육행정질문	
12. 2(토) 10:30	본 회 의 (제3차)	1. 도정및교육행정질문	
12. 3(일)		공 휴 일	
12. 4(월) 11:00	본 회 의 (제4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00	운 영 위	1.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 2.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 의회사무처소관	
12. 5(화)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1년도예산안심사 - 기획정보실소관 2.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1년도예산안심사 - 공보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2.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복지환경국)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2.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건설교통국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2. 6(수)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1년도예산안심사 - 자치문화국소관 2.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1년도예산안심사 - 감사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2.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2.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소관)	
12. 7(목)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1년도예산안심사 - 계룡출장소소관 2.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1년도예산안심사 - 총무과소관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3.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 2.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 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 건설교통국, 소방안전본부소관	
12. 8(금) 11:00	행 자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1년도예산안심사 - 공무원교육원소관 2.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1년도예산안심사 - 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서예산안계수조정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2.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 - 교육사회위원회소관부서예산안계수조정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소관)	
	건 소 위	1. 현장방문(공주골재채취현장4개소)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2. 9(토)	행 자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교 사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휴회(의정자료수집)	
12. 10(일)		공 휴 일	
12. 11(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00	교 사 위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의결의건	
11:00	농 경 위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의결의건 2. 「목우촌유가공공장」의타지역조합이관반대건의안	
11:00	건 소 위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의결의건	
12. 12(화) 11:00	예결특위 (제1차)	1.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12. 13(수) 11:00	예결특위 (제2차)	1.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12. 14(목) 11:00	예결특위 (제3차)	1.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12. 15(금) 11:00	예결특위 (제4차)	1.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3.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4.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2. 16(토) 11:00	본 회 의 (제 5 차)	1.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50	농 경 위	1.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및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	
12. 17(일)		공 휴 일	
12. 18(월) 11:00	본 회 의 (제 6 차)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2.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5.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및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 7.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의건 8. 도지사유럽순방귀국인사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23		
조례안	3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4	1. 200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0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1	1.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건의안	3	1.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문 2. 「목우촌유가공공장」의 타지역조합이관반대건의안 3.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및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 건의안	
기 타	12	1.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01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제출에 대한 도지사 연설 4. 200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대한 교육감 연설 5.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윤석우·한창숙·박찬중·강태봉·임성규의원) 7.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최경섭·이진환·심정수의원)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9.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 의원 공무국외연수결과 보고의 건 12. 도지사 유럽순방 귀국인사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11. 20, 11:00)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4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연설을 들었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12. 1, 10:30)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윤석우(공주), 한창숙(비례), 박찬중(금산), 강태봉(아산), 임성규(논산) 의원등 5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2000. 12. 2, 10:30)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틀째를 맞아 최경섭(태안), 이진환(천안), 심정수(금산) 의원등 3인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2000. 12. 4,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고, 도와 교육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 제1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2000. 12. 16, 11:00) 도와 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4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2000. 12. 18, 11:00)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을 의결하였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건,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및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 1건,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의건, 도지사유럽순방귀국인사의건 등 총 8건을 처리하였다.

2. 委員會 活動

ㅇ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39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10.28)	행자위	ㅇ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사용시 충청남도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ㅇ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규정을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하여 개정	2000. 12. 18	2000. 12. 18	수정
240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00.10.28)	행자위	ㅇ'99.12.30일자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업무이관된 근로청소년 장학금 및 영재육성장학금 지급관련 조항을 삭제, ㅇ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불우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지원 범위를 정함	2000. 12. 18	2000. 12. 18	수정
255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00.11.15)	교사위	ㅇ2000. 3. 1일자로 교명 또는 주소 변경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주소변경 - 교명변경 : 유구공업고등학교 등 3개교 - 주소변경 : 대천고등학교	2000. 12. 18	2000. 12. 18	원안

ㅇ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56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0. 11. 2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0. 11.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00. 12. 18)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2. 1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ㅇ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여 자치단체의 공익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코자함.

□ 주요내용

ㅇ 발 행 주 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1특별시, 6광역시, 9도)
ㅇ 복 권 종 류 : 전국자치복권
ㅇ 발 행 기 간 : 2001년 2월 ~ 12월
ㅇ 판 매 지 역 : 전국
ㅇ 발 행 형 식 : 즉석식, 추첨식
ㅇ 발 행 규 모 : 600억원 (즉석식 200억원, 추첨식 400억원)
ㅇ 소 비 자 가 : 즉석식 500원/매, 추첨식 2,000원/세트
ㅇ 예상 수익금 : 약 90억원 (판매액의 20%)

의안번호 258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문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0. 12. 4.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00. 12. 16)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2. 16.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회, 국회 건교위, 건교부,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

□ 제안이유

○ 공장총량제 폐지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야기
-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5%, 제조업 55%, 금융 65%, 공공 82%, 대학 42%가 집중
- 수도권의 비효율 증대(혼잡비용의 67%가 수도권에서 발생)

○ 공장총량제 폐지는 지방의 산업입지 차단으로 지방산업 위축과 왜곡현상심화
- 지역간 불균형 격차가 더 커지고, 지방재정 악화로 엄청난 손실 예상

○ 공장총량제 폐지는 일관성 없는 수도권 정책으로 정부의 불신 풍조 만연 예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지역간 위화감 조성과 국민통합 저해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본래 목적 미달성
-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 불가능
- 수도권 난개발로 환경파괴 가중

○ 공장총량제를 과밀부담금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
- 표준건축비의 5/100에 해당하는 소액의 부담금부과와 5,000㎡이하의 공장건축 제외 등으로 수도권 입지제한을 받는 공장은 극히 희소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문

최근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공장총량제 폐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대해 우리 충청남도의회의원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국토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5%, 제조업 55%, 금융 65%, 공공 82%, 대학 42%가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투자 되고 있어, 이로 인해 국토의 만성적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극심함은 물론 지역갈등마저 초래하고 있는바,

수도권 과밀해소대책의 근본이 되고있는 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현재에도 심각한 수도권 과밀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발상자체 부터가 잘못되었으므로 백지화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장총량제의 폐지는 수도권의 공장건축 증대 및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의 공장(제조업)집중화로 인하여 난개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환경, 교통, 주택, 에너지 등의 사회적 비용증가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심화시켜 결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일반 국민모두의 부담으로 전가하게 될 것이고,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인해 생산의 효율성이 90년대 이후 계속 감소되는 불경제 현상의 발생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고,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어,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증가로 지방의 산업기반이 붕괴되어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집중억제 정책의 골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무기력증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일관성 없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불신풍조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국민대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 입니다.

넷째,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의 공장건축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표준건축비의 5/100에 해당하는 소액의 부담금 부과와 5,000㎡이하의 공장건축에 대한 부담금 제외, 그리고 조례에 의한 부담금 감면대상지역 지정 등을 고려할 때 과밀부담금으로 수도권에 입지제한을 받는 공장은 극히 희소할 것이며,

징수금액의 60%를 수도권 자치단체에 배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만 가속화시킬 뿐이고,

다섯째,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사회비용의 증가와 정부의 재정이 수도권에 편중투입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자원배분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과 균형개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현실에 비추어 시장경제 원리상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출발되어야 하므로 지역간 균형적 개발전략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발상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실패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총량제를 더욱 강화운영하여 수도권의 제조업 집중을 방지하고, 제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금년 9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공장총량제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금번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하게 반대하오니 본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12월 1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의안번호 259

「목우촌유가공공장」의 타지역조합이관반대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0. 12. 11.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00. 12. 16)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2. 16.
이 송 기 관		농림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제안이유

○ 우유 시장구조 불균형 심화
- 목우촌 유가공공장을 타지역 조합으로 이관시 심각한 우유 시장구조 불균형 초래

○ 지역 낙농산업 위축 및 지역간 위화감 조성
- 충남지역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격차 심화

○ 목우촌 유가공공장은 우리지역 축·낙협 및 낙농가에게 이관하여야 함.
- 그동안 우리도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5개 조합에서 집유하여 동 공장에 안정적으로 납유하여 왔고
- 도내 9개 집유조합이 22억원을 출자하는 등
- 목우촌 유가공공장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지역 축·낙협 및 낙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또한, 지역 낙농가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우리지역 축·낙협 및 낙농가에 이관하여야 함

『목우촌 유가공공장 』의 타지역조합이관반대건의안

최근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 구조조정 차원에서 청양소재「목우촌 유가공공장」을 타지역 조합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충남도의회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의 표시와 유감의 뜻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우촌 우유는 축협중앙회에서 이 지역 낙농가를 위해 충남 청양군에 건설한 유가공 공장으로 그동안 도내 낙농가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농축협의 통합으로 인하여 농협중앙회에서 다른 지역조합으로 이관하려하는것에 대해 우리 낙농가의 입장을 호소하오니 충남 관내 축·낙협, 낙농가에 이관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첫째 : 우리지역 낙협, 축협, 낙농가에 이관하여할 이유

충남지역 낙농가의 생산원유를 안정적으로 납유하기 위해 그동안 8개 협동조합(보령, 예산, 전주, 군산, 홍성, 서해, 천안, 경북)이 1일 175t씩 납유하여 왔으며, 유가공 공장 건립시 도내 9개 조합이(보령 3억, 아산 3억, 서산 5억, 예산 2억, 천안낙협 4억, 백제낙협 1억, 공주낙협 1억, 당진낙협 1억, 홍성낙협 2억) 22억원을 출자한 바 있으며, 타지역 낙협에서 (전주축협, 강원낙협, 경북중앙낙협, 청주우유, 경북낙협) 공동사업 추진으로 학교급식과 군급식을 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의 낙농가에 사활을 건 유가공 공장이므로 우리지역 축·낙협, 낙농가에게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 협동조합 정신과 영세 낙농가 보호차원 위배

충남 및 인근(전북, 충북)지역 낙농가들의 보호 및 이익 극대화와 이지역의 협동조합(낙협·축협)에 적극적인 이관을 원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타지역 조합에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낙농가를 외면한 처사로 이해 할 수 없으며

셋째 : 지역경제 위축 우려

충남지역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하므로 지역 낙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유가공 공장 가동으로 인한 무원자재의 구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넷째 : 유가공 공장 인수자금 확보 가능

기 22억원을 출자한 축·낙협 중심으로 출자금을 증액하고 많은 낙농가들이 목적 출자를 할 각오가 있으므로 무슨일이 있어도 목우촌 유가공 공장은 우리 지역에 있는 축·낙협, 낙농가에게 이관되어야 하며 지역 낙농가의 의사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지역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가공 판매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충남 청양의 목우촌 유가공 공장은 반드시 충남의 축·낙협, 낙농가에 이관하여 주실 것을 충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12월 1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의안번호 269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 및 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0. 12. 16.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00. 12. 18)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0. 12. 18.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 농어가부채로 인한 농업경쟁력 저하로 영농포기 및 이농자 속출
- 농어민 사기저하와 이농자 발생으로 농촌공동화 초래
- 연체이자 계속발생으로 매년 부채증가하는 악순환 계속

○ 연대보증으로 인한 농어가상호간 불신팽배로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인데도 아직도 농림부에 환원되지 않고 있음.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 및 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 건의안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들은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추진,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유통시설 확충,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농산물의 대외신인도를 넓혀나가는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했던 자금이 WTO로 인한 농산물수입개방과 IMF체제로 인한 경제불안 등으로 대량의 농어가부채가 발생되었으며 농어민들이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농어가부채 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면서 매년 호당 농어가의 부채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업인 부채경감을 위한 각종 대책를 발표하고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는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들은 정부의 생색내기 대책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었으며 농어업인의 요구수준에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시중은행 및 부실기업 정리와 정상화를 위하여 150조원이라는 재원을 지원하면서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인색한데 대해 농어촌현장의 농어업인들은 현정부에서도 여전히 농어업은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허탈감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0년 농림부에서 체육청소년부(현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마사회는 종마육성 등 농업관련 업무임에도 당시 정치적 상황속에서 이관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로서 대통령의 농정최대 공약사업으로 농림부에 환원을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나라 농어촌의 회생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의 안정된 식량공급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 농어업인의 의지를 모아 조속한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 제정 및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모든 정책자금은 5년간 상환유예후 10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전환하고 정책 자금의 금리를 3%로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상환도래하는 상호금융부채에 대하여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농어업인이 대출받는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5%로 인하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조치법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정상거래자로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고 모든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되 적색거래자의 경우 연체해결 즉시 자격을 회복 시켜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마사회는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므로 반드시 농림부에 환원되어야 하며 마사회 운영이익금을 기금으로 출연, 농업발전기금등 농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농어민단체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정부 국회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충청남도 농어업인의 의지를 모아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 제정 및 마사회를 농림부에 조속히 환원해 줄것을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12월 18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Ⅲ. 道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윤석우 의원(공주시, 자민련)

■ 질문1 : 호남고속철도의 공주 통과 대책

·호남고속철도의 공주 내륙통과는 충남지역의 균형발전과 각종 물류비용 및 기회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교역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으로 해서 충남이 명실상부한 환 황해권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기필코 관철이 되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실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충남도민이 강력히 저지하려고 했던 용담댐 담수가 얼마 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모두를 당혹케 했음. 이것은 바로 충남도의 안일한 상황대처가 호남고속철도 공주 통과건의 경우도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겠음.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태세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 추진해 온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난 '93년 당시 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우리 도에서는 천안을 분기점으로 하는 공주~논산 노선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꾸준한 관철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97년 사업이 중단되고 우리 도와 대전, 충청북도간 통과 노선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면서 양측 안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음.

첫째로, 우리 도는 지금까지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연한 논리하에서 대응을 하고 있음.

두 번째 원칙은 충청권이 하나로 서로 필요한 이해로 조정해 가면서 함께 협의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 가고 있음.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결정이 공주 내륙지역의 통과가 아니라 우선 첫째적으로 경제성에 있어서 최단거리와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그리고 앞으로 관리비용 면에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관리될 수 있는 노선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두번째는 이용의 효율성에 있어 호남인과 충청인이 어느 노선을 선정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며, 경제성이나 이용효율 측면에서 또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공주, 논산, 부여를 연결하는 백제권 관광객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노선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또 세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오송분기점을 통해서 박정자를 통과해서 호남선으로 가는 노선은 박정자에 역사를 세울만한 공간이 없으며, 안보 시설이 우리 계룡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노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네 번째는 환경문제로서 계룡산을 훼손하며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확실한 논리를 도의 논리로 정립해 가지고 있음.

2. 한창숙 의원(비례대표, 자민련)

■ 질문1 : 노인성질환과 치매환자 관리 대책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문제는 미래에 닥칠 바로 우리들의 문제임.

특히, 치매환자가 증가하여 가족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치매전문요양시설과 치매병원 설립 등으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과 치매환자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내 65세이상 어르신 인구는 '99년말 현재 20만4,000명으로 도내 인구의 10.6%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가족의 보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한 재가복지사업과 여가활동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해 나가겠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특히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병 등 퇴행성 질환자가 현재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도의 치매환자 등록인구 수도 1,340명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문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전문치료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논산과 부여, 공주 등에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방, 재활의학, 요양시설을 갖춘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아산과 연기, 부여에 현재 건립 중에 있음. 그리고 치매전문병원을 홍성의료원에 90병상 규모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200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질문2 : 공원묘지 조성방법 개선 대책

· 우리 도의 묘지면적도 도 면적 8,586㎢의 약 0.4%인 30.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도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이 바뀌지 않아 묘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도의 묘지정책은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사설집단 묘지를 지양하고 공설묘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의 장묘에 관한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데 매장을 하는 공설묘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오히려 화장장과 납골당을 확장하고 주민의 의식전환과 함께 화장과 납골을 유도하는 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에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국토가 「묘지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사용하는 「묘지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지난 '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 설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사설집단묘지의 허가를 억제하여 왔음. 아울러 장묘 관행의 인식 전환 노력과 함께 화장 장려시책으로 화장장의 처리능력과 납골당의 봉안 능력을 확충시켜 나가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도 관계법을 전면 개정하여 묘지면적의 축소, 매장묘지 설치기간 제한, 무연분묘 개장시 의무적인 화장·납골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묘지법령을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장묘문제는 종교, 관습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법률적 강제나 일시적인 홍보만으로는 실효성 있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장묘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공감대형성 노력과 함께 화장시설 현대화와 납골당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 대책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치대상 8,403개소의 62.5%인 5,250개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60%선대를 밑도는 것은 장애인들의 도내 각종 시설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임. 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먼저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문제는 '98년 4월 1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공공시설내에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계기로 우리 도에서도 금년 7월 25일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을 발족한 바 있고, 시각 장애인용 음양신호기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과 설치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설치율은 62.5% 수준으로 지금까지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설치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3.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질문1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중앙차원의 재정 보전

· 한해 동안 도에서 감면하는 지방세는 약 1,000억여원 이라고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 모두가 지방의 자율적인 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재정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

비록 지방적인 면에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일지라도 감면되는 세액만큼 중앙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땅히 지방예산에 보전해 주어야 함. 따라서 현재 보전되고 있는 형태와 그렇지 않을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세액은 보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정책상 꼭 필요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음. 정부에서는 금년말 비과세 감면의 적용 시한 만료를 앞두고 지방세법과 감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감면 대상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군사보호구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종토세·재산세 등 감소분 보전대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세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방안은 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해나가겠음.

■ 질문2 : 초등학교의 주5일 수업의 도입실시 촉구

· 학생 스스로가 소질을 개발해 나아가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율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여겨짐. 물론 찬반 양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5일 수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마침 시민단체 일각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직장의 주5일 근무제를 결정하는 등 고무적인 사회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슴. 따라서 본 의원은 초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이를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교육법에 보면 법령상 연간 수업일수가 220일 이상으로 묶여 있어 주 5일제 수업을 하다 보면 220일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쉬운 것이 아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원칙적으로 5일제 수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체험학습의 날이라든지 전일제 특활수업 확대라든지 가정학습의 날 등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있을 것임.

그러나 법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협의회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하겠고, 또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음.

4. 강태봉 의원(아산시, 자민련)

■ 질문1 : 부채상환 등 경감 대책

· 2000년 6월말 현재 15개 시·군의 일반회계 부채 4,339억원을 제외하고 충청남도의 부채는 일반회계 2,370억원과 특별회계 1,416억원 도합 3,786억원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 1조6,933억원의 22%에 해당하고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데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음.

2001년도에도 지방세 수입의 12%인 30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1조3,312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팽창 편성하였는 바, 빚을 줄여 보려고 감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현재의 재정상태는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빚 갚을 여유 재원이 없어 조례를 제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빚갚을 재원을 염출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다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임.

첫째, 그 동안 도에서 직접 개발한 6개소의 택지 및 공업단지 1,294만㎡와 계룡출장소에서 개발한 5개소의 택지 및 공업단지 100만㎡중 미분양된 1,171만㎡에 대한 분양 예정금액이 1조3,434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분양가격이 인근 전·답 가격보다 대지의 경우는 약 3배, 상업용지는 무려 10배 이상 비싸니 분양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 부동산 전문기관인 토지공사 등과 적정한 협의가격에 따라 매각조치 하셔야 심각한 재정상태를 회생시킬 유일한 방법임

둘째,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등 당장 급하지 않은 대형 시책사업을 충청남도 재정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며, 셋째 백제권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60% 이상의 민자를 과감하게 국비로 전환, 신라문화권개발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가가 추진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지난 '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수해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도민생활 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지방채를 차입 활용하였으며, IMF이후인 '98년에 약 600억원이 증가된 2,914억원, 그 다음해 700억원 정도가 늘어난 3,673억원으로 그리고 금년 6월에는 거의 크게 늘어나지 않은 3,786억원 정도로 채무가 증가되어 왔음.

통상적으로 채무액에 대한 비율은 연간 예산액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4년에 걸쳐서 순 지방비로 상환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채무위험 수준으로 보는 비율이 약 20% 수준입니다 마는 우리 도의 현재 채무비율은 8% 수준으로 채무위험 수준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재정상태로 봐서 상환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사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여건이 대단히 취약한 반면에 세출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각종 경상 경비를 최소화하고 계속 사업이나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행하고자 노력 중임.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을 기조로 채무증가를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해 나갈 계획임.

또한 지난 6월에 제정된 감채기금적립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감채기금으로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매년 일정액을 채무상환을 위해서 적립해서 지방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힘쓰겠음.

우리 도의 미분양 면적이 총 354만평 정도가 되며, 이 중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중인 당진 석문단지와 서산 대죽지구를 제외한 공영개발사업 미분양 토지는 16만평 정도로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급물량 증가 등 사회적 요인이 발생되어서 분양율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임.

앞으로 분양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판매마케팅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구매욕구 유발을 위한 여러 가지 분양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대형시책 사업의 유보 지적과 관련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로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와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총 1조4,42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그 동안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고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사업비가 2조1,400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이 중에 국비가 6,444억원, 지방비가 6,051억원, 민자부분이 8,940억원임. 이 중에 민자사업은 관광휴양시설 사업과 계룡 신도시 건설사업이 되겠는데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반시설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질문2 : 농·축산사업의 개선 방안

·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서울과 대전 등 소비도시와 연계가 미흡한 위치선정의 잘못과 조직과 종사자의 비효율과 비전문성 등 투자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운영상 잡음까지 발생하고 있어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축산분야도 마리당 20만원 하던 돼지값이 1년만에 10만원대로 폭락했는데도 정육점의 판매가는 요지부동인 현상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는 농업진흥공사 출신 외지인을 순환 보직시키는 조직 통폐합으로 어떻게 원활한 농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먼저 충청남도의 재정도 몹시 어려운데 하드웨어(hardware) 격인 농업유통시설 투자와 같은 대규모 사업과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작목에 대한 무리한 직접투자를 지양하고 소프트웨어(software) 방식으로, 즉 획기적인 물류 유통방식인 전자상거래를 위해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지원하고 과학영농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농림부와 공동으로 조속히 구축하여 농업기술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을 지도하고 농어민들의 소득도 이제 1만불 시대에 걸맞게 끌어올려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공업소득과 3차산업 소득에 근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한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패리티(parity)지수 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이를 대비하여 농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과 함께 농업인 PC 정보화 교육장에 중고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하는 농촌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농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와 과학영농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농산물 가격의 패리티(parity)지수 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농림부, 통계청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내실있는 추진과 함께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음.

다음에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품목별 관측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림부 등 중앙 단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매 비축의 확대, 최저 보장가격 예시제를 실시하는 등 가격안정에 노력하고, 축산물은 육류표준소비자가격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 가격이 자율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농촌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능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조나 농조연, 그리고 농진공등 3개 기관이 금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를 발족시킨 바 있음.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3개 기관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인원배분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물관리 농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현지 실정에 밝은 농지개량조합 출신 직원들이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겠음.

■ 질문3 : 백년대계의 교육정책 추진 촉구

· 최근 충청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도 퇴직하는 분들이 많아 교사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히 걱정되는 바 차질없는 교사 충원계획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학교 급식에 있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품질 좋은 신토불이 한우고기를 먹도록 해 주시고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한우고기를 제공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현재 대다수의 농촌 지역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도시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 도시지역 학교는 매년 몇 학급씩 증축하는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은 우수학생들의 타 지역으로 유출방지를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를 특성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교원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 등으로 작년과 금년도에 1,440여명의 교원이 우리 교단을 떠났으며, 이에 따른 신규임용 자원의 부족으로 현재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는 614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음. 그러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데도 정말 힘이 듦.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교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대학을 직접 방문·홍보와 기간제 교사 인력풀(POOL)제를 운영하고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을 억제하는 등 교원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학교 급식 문제에 있어 학교급식실시 지침과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물품은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것은 선거 공약이기도 함. 그리고 내년에는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식단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유관기관과의 지역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우수학생들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우수한 인재양성은 물론이고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 아산 지역, 연기 지역, 금산 지역에는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제가 취하고 있음. 그 하나가 교장선생님들에게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사 채용권을 일부 드리고 모든 시설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음. 또 아산에서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나 특수한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최대로 노력하고 있음.

도내 15개 시·군을 중학교는 6개 권역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9개 권역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각 1교씩 「특성화 중심학교」를 선정해서 연간 3~4,000만원을 2~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함.

5.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질문1 : 환경시설 확충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개선

· 환경보전대책사업인 대형쓰레기매립장, 축산분뇨정화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형환경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지방채를 얻어 쓰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징수부대비용으로 징수금액의 10%를, 도에는 1%, 시·군에는 9%만 교부하고 90%를 정부가 귀속하므로 대형환경사업을 제외한 자체적인 환경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 부담금에 대한 징수부대비용을 제외한 징수액의 50% 이상이 시·군에 귀속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곽유신 〕

·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따라서 국비 등 의존재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환경기초시설의 국비 지원율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 30%, 하수종말처리장은 53%, 분뇨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70%를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아주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질문2 : 노인보건의료사업 지원 확대

·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9년말 현재 20만4,000명으로 도내 인구의 10.6%를 차지하고 있음. 노령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관절염, 요통 등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아 이에 대한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을 늘리고 도립병원, 보건소 등을 이용한 노인전문치료시설을 갖추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병 등 퇴행성 질환자가 현재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도의 치매환자 등록인구 수도 1,340명에 이르고 있음. 이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농번기 치매환자에 대해서 입원진료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전문치료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논산과 부여, 공주 등에 3개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442개 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한방, 재활의학, 요양시설을 갖춘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아산과 연기, 부여에 현재 건립 중에 있음. 그리고 치매전문병원을 홍성의료원에 90병상 규모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200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질문3 :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시설확충 대책

·장애인의 복지증가의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전체 근로자의 2% 이상 의무적 고용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점자 블럭, 승강기, 유도 안내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 비율을 행정기관부터 솔선 하여 지켜야 할 법인데도 우리 도의 경우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시·군에서는 아직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바 도와 각 시·군의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위 내용이 미진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시·군을 포함하여 우리 도의 전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은 의무 비율 2%보다 약간 미달된 1.44%의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의무 채용률을 높이고 공채시 장애인 신규채용률 5%이상을 준수하며, 시험공고시 장애인단체 등에 홍보하여 응시율을 높여 나갈 계획임. 특별임용시에도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애인협회, 장애인 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장애인 고용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음.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는 도 본청의 경우 장애인 승강기 등 총 6종, 23건에 대해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법이 정한 기준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법정시설 이외에도 의회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와 기존 일반 화장실에 장애인용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음. 또한 아직까지 일부시설이 완료가 안된 도 산하 각 사업소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 질문4 : 권한이양과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문제점

· 권한이양시 이양받는 단체의 논리보다는 이양하는 쪽의 논리에 의거 특정 기능의 일괄이양이 아닌 단위사무 위주로 이양되고 있으며 현장위주의 지도·단속 사무의 이양으로 인력증가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위임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무만 위임하므로 도와 시·군 업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권한 이양된 사무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인력과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중앙에 건의하셨는지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 추진일정은 언제까지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건수 위주의 단편적 접근과 그 동안 인력 및 재정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관련법에는 실질적 권한이양과 행·재정적 지원의 병행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이양 행정·재정지원단"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게 됨. 따라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의 조정으로 그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계획이며,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민방위, 재난관리, 사회복지 등의 업무는 그대로 남게 되며, 읍·면사무소에는 여기에 더하여 선거, 청소, 농정관련 사무가 기존대로 계속 추진하게 됨.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률 저조와 소요 운영비 추가 부담,자원 봉사자 및 민간단체 참여 미흡 등도 예상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읍·면·동 기능전환 예상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기능전환 실시의 보완 검토를 건의한 바가 있음.

6. 최경섭 의원(태안군, 자민련)

■ 질문1 : 서산 A·B지구 간척농지 매각관련 대책

· 서산 A·B지구 피해농어민들은 피해 보상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의 일반 매각이 발표되자 매우 분개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림부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매립지의 일부를 1인당 0.5ha, 약 1,500평까지는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는 면허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현대에서는 1,006만평을 매각 유보지로 발표하였음.

충남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희망농가가 7,870가구인 반면, 현대측에서 조사한 것은 3,754가구로서 현저히 차이가 나고 현대에서 유보한 1,006만평의 유보지역은 대부분 농사짓기가 어려운 땅일뿐만 아니라 농지가격도 평당 2만원 내외의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현대가 전반적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A·B지구 일반매각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견해와 피해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과 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 A·B지구 어업피해보상 민원문제는 지금까지 현대건설이 방조제 내·외측 피해 농어민에게 약 2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보령, 서산, 홍성,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3,500여 세대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진행 상황으로 내측 C급 미합의자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 11월 28일 현대건설측에서 제소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 외측 김 양식장 추가 보상 요구와 누락 어장 보상요구 민원은 서울지법에 두 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한 건이 계류중에 있음. 앞으로 어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법원판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 피해 농어민에 대한 간척농지 분양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에 매각계획에서 유보된 토지 대부분이 거주자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농수로 등 기반 시설이 미흡해서 개인이 영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가급적 영농조건이 양호한 농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질문2 : 청양대학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 200만 도민을 위해 설립된 도립대학이라면 명실상부한 공립대학의 면모와 발전계획이 있어야 함으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오니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먼저 교원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청양대학 교수 확보율은 21명으로 52%이며 교육부의 기본방침인 최저 교수 확보율 60%에도 미달된 대학으로 학과 증설, 학생 증원, 재정지원 등 일체의 증과, 증원 및 모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도 교수 확보율은 최하위로 알고 있음.

심지어 피부미용과, 산업디자인과, 전자과는 과별당 단 한 명의 교수가 1·2학년 모두를 지도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 학생과 교수는 물론 교육수혜자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 하겠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청양대학이 현재 10개과에 800여명의 학생으로 정상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실험실습실 운영 및 제반 특별활동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증과 증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충남도립대학의 입지조건과 제반 교육여건으로 볼 때, 청양대학이 대학간 생존경쟁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발전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고 있는데, 청양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청양대학은 '98년 3월에 개교해서 유능한 교수의 확보와 학생증원, 교육환경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래서 현재는 개교당시 13명이었던 교원이 30명으로 증원되었고, 정원도 당초 400명에서 1,120명으로 증원되었음. 앞으로도 부족교원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서 교원과 학생 수를 증원해 나갈 계획으로 2001년은 교원을 6명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에 교원 확보율은 63.8% 정도가 되는데 현재 담양대학이 60%, 강원 전문대학이 58%, 남해대학이 57.4%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도립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되겠음.

이제는 대학도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음. 이에 우리 도에서는 대입정원이 입시 지원생보다 많아지는 2003년 이후에 원활한 학생확보를 위한 청양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교수협의회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실시하여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인력, 조직 등 최적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과 청양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4년제 또는 국립대학으로의 개편문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 있는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200만 도민의 성원으로 건립된 도립대학 임을 감안할 때,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사항으로 여건변동 등 필요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음.

■ 질문3 : 꽃박람회장의 환경보전 대책

· 충청남도와 태안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태안 해안관광도로 개설 지역에 생태학적으로 세계적인 해안사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안관광도로 노선변경과 해안사구에 대한 정밀 조사는 물론 종합적인 보전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나 도지사께서는 사구보존을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 있는 반면, 현지에서는 공사가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가 하면 꽃박람회 일정을 고려하여 공사를 그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꽃박람회를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를 그대로 강행하여 세계적인 해안사구를 훼손하실 것인가, 아니면 꽃박람회에 다소 차질이 생기더라도 노선변경 등 환경보전을 우선하여 시행하실 계획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우리 도에서는 사구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구간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우리 도, 태안군,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금강환경관리청이 함께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현재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구 보전대책과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노선의 조정안을 제시하여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의견조정을 거쳐 조만간 합의된 도로노선이 도출될 전망임. 금년내에 노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꽃박람회 전에 해안 관광도로를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질문4 : 구제역의 재발방지 대책

· 지난 4월에 뜻하지 않은 공포의 구제역이 홍성을 시작으로 보령지역에도 확산되어 양축농가에 엄청난 재산피해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게 하였으며,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 또한 구제역의 후유증으로 돼지고기 수출중단과 가격하락 등 최악의 사태가 계속되며 축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지사님께서는 우리도 축산업회생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돈육수출재개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고 청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선 발생지역은 월 두 차례, 비발생 지역은 월 한 차례씩 일제 소독의날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한 예방접종 가축의 도축출하 또는 매매 시에는 읍·면에 신고 등록하고 혈청검사 또는 임상확인, 주1회 이상 예찰활동 등 농가와 수의사 그리고 관련단체 등이 총동원되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 청정화를 조기 선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수출 재개를 대비해서 수출 전업 농가 1,000호를 선정해서 고급육 생산 기술을 지도하고 있으며, 축산물 종합 처리장 및 중부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현행, 다섯 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 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여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질문5 : 화훼산업발전 대책

· 도에서는 화훼산업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9월 화훼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까지 20개 사업에 141억원을 투·융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투융자 실적은 얼마나 되며, 내년 예산에서는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국비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의 꽃박람회 행사가 국내 다른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안면도에서 국제 꽃 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총 여섯개 분야에 20개 사업에 141억원을 투자하는 화훼산업 육성계획을 '99년 9월에 이미 마련하여 금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음.

1차년도인 금년의 경우에는 18개 사업에 54억원을 투·융자계획에 의거해서 화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신품종 입식비, 그리고 생산 및 유통 시설 지원, 모범농가 육성 등에 13억원을 지원했고, 화훼류 유통 개선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격 출하 사업비 6억원과 화훼박람회 참가 사업비 두 차례에 2억원, 이 밖에 꽃 박람회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 꽃길 조성 3km에 2억원, 안면도 자생식물원 조성 6ha에 20억원, 그밖에 국토공원화사업에 108억원 등을 투자하고 있음.

또한 당초 계획된 18개 사업에 계획보다 100억원이 많은 156억7,1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밖에도 화훼 신품종 및 꽃음식 개발 등 시험연구 사업과 국화육묘센타 보강, 농업인 기술교육실시 등 제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
내년에도 15개 사업에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필요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여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꽃박람회를 계기로 한 우리 도의 화훼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질문6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

· 도에서는 지난 6월 단국대학교와 용역을 통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단지 보고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됨. 보고서 내용 중에 실제 실천된 것은 무엇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적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역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난 3월 단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개발전략」을 마련한 바 있음.
지금은 관련 시·군별로 이러한 개발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수립되면 금년 말 확정 목표인 「제3차 도종합계획」과 2001년에 수립하는 「시·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법정계획」화 함으로써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이 입안 및 초기 착수 단계에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없음.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우리 지역에서 전국 시·군간에 통행거리가 6.8%, 통행시간은 17.4%가 단축되는 등 교통체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또한, IC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해양형 레져·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주변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문제, 지역의 교통문제 등 부작용도 예상됨.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겠음.

■ 질문7 : 운전자보수교육 및 충남운수연수원 보조금 폐지

· 과연 연 1회 8시간 운전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운전자 부족으로 운휴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교육 불참자에 대한 30만원 과징금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규제정책이 아닌지.

또한, 운수종사자 연수원에 2001년도에도 도비 5억8,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00년 8월 23일 건설교통부령 제215호로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의 폐지로 운전자 보수교육제도가 삭제되었는데도 늘어나는 재정적자 속에 과연 연수원에 대한 도비 지원이 타당한 것이며, 이를 삭감하여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교육제도가 임의 규정으로 개정은 되었지만, 아직도 여객이용자로부터 연간 500여건의 교통불편 신고가 접수 처리되고 있고, 도내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간 만4,000여건이 발생되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음. 따라서, 도는 앞으로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큰 행사인 전국체전과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코자 도내 운송사업자 및 조합에 2002년까지의 교육계획을 시달한 바 있으며, 신규 채용시의 교육은 해당 사업자가 자체 실시토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5,500명과 여객자동차 운전자 8,800명의 보수교육을 연간 6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와 조합을 통하여 위탁교육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사업자와 조합에서는 교육장소, 교재 및 강사 등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2002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인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7. 이진환 의원(천안시, 자민련)

■ 질문1 : 소극적인 충남도정의 대책

· 최근 도정에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문제, 충남신용보증재단 문제, 충남발전연구원의 문제, 그 외에도 태안 국립공원 환경문제라든지 중부물류센터 적자운영 문제, 계룡신도시 문제 등 당면한 큰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도민에게는 갈등과 비리로 비춰지고 있어 잘된 도정도 금의야행 식으로 묻혀지고 있는 현실임.

뇌물을 받았다 하여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하여 도민에게 누가 사과한 번 한 적 있습니까? 환경단체가 아우성치고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비리를 부끄러워하며,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터지면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공직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도정의 문제들이 내 책임이라는 분위기가 충남도 공직사회에 충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도정을 종합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획정보실장인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을 촉구하신 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림.

■ 질문2 : 과시적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과시적 행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행정 무결점 운동을 펼쳐 인증서를 받았으나 무결점 운동을 한다고 전직원이 오·탈자 찾는데 온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11개에 달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고, 도정의 국제화·세계화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영국과의 자매결연은 어떻게 추진했기에 무산되는 것입니까? 속이 비면 아무리 과시해도 일시적인 허세일 뿐 결국 도민은 허무감에 빠질 우려가 있음. 이제 도정도 외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 박람회에서도 시·도, 시·군·구 전 자치단체 중 32건이 선정된 우수사례 중에 행정무결점운동이 선정되어서 개혁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입증 받기도 했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결과로 도민과 직결되는 법령 11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성과도 거뒀고, 앞으로 우리 도정운영의 하나의 모델로 이 운동이 계속 적용될 것임.

다음에 각종 위원회는 다소 그 동안 정비가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말까지 80개 위원회 중에 25개를 정비해서 폐지를 9개, 통·폐합을 16개 위원회를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서, 영국 켄트주와의 자매결연은 무산된 것이 아니고 내년 5월에 주지사 선거가 있어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현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잠시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다소 연기를 시킨 것임.

■ 질문3 : 폐쇄적인 도정 개선 방안

· 도정이 너무 폐쇄적이서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시책들이 구상되어 발표되고 신문 방송에서는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의원들은 고작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도정시책을 보고 듣는 것이 현실임.

충남도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도민의 느낌 또한 살펴야 하며, 충남 도정속에 사는 소박한 주민들이 왜 충남도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청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도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앞으로 도정시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 질문4 : 공직기강과 도정의 분위기 쇄신 대책

· 모든 공무원들이 공정한 상과 벌을 받으며 신분불안 없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충남도정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분위기 쇄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최근 공직사회는 정년단축, 그리고 계속되는 구조조정, 승진적체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앞으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가 없도록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진력하겠으며, 승진적체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표창 등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한편으로 공직내부에 잔존해 있는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으며, 무엇보다도 처벌위주 보다는 취약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면서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구성해서 지탄을 받는 공직자나 무사안일한 공직자, 복지부동하는 공직자가 설 땅이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음.

■ 질문5 : 도 산하 단체의 임직원 문제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장학회, 여성정책개발원, 충남테크노파크의 유급 간부 다수가 도 출신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음. 30여 년의 공직을 고위직으로 명예롭게 마친 분들에게 과연 노후보장 성격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음.

차라리 공무원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면 정년을 5년 내지 10년 남긴 현직자 중에서 적격자, 희망자를 선발하여 배치한다면 적체된 인사의 숨통도 틀 수 있고,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도 갖게 해 주며, 인력의 감축문제도 다소나마 풀어지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인건비 문제에서도 감사자료에 있는 연봉을 기준으로 보면 테크노파크 이사장은 6,584만원,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은 연간 4,709만원, 총무부장 4,397만원,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실장은 연간 3,855만원이 되고 있는 등 이들 기관의 일반 사무직이나 기능직 직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력의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이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 과연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도 출연기관 임직원 채용기준은 각 기관별 내부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일부 출연 기관의 경우, 개원 초기에는 도와 관련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일찍 용퇴한 도 공무원 중에서 추천, 채용을 해 온 사례도 있음.

앞으로 각 출연기관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본 궤도에 정착되면 이러한 관행은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아울러 이들 기관 임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은 타 시·도와 유사한 기관의 보수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마련된 정관과 내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충발연을 비롯한 도 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이것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문6 : 천안·아산권에 대한 발전 대책

· 천안·아산지역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도권의 기능분담과 충남의 도세 유지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도세 중 천안·아산지역이 거두어들인 비중이 45%로 전체 도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순 도비를 들여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도정에서 교통, 택지, 물, 환경, 도로, 문화, 교육 등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제시와 재정적인 투자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천안·아산 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다만, 그 동안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가시적인 순도비 투자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94년 12월 아산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산업단지와 도로 등 SOC 사업에 꾸준한 국비와 민간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탕정·음봉면 일대의 아산만권배후신도시는 민자를 유치하여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 천안·아산 양 지역의 도시공간 구조와 기능의 상호연계와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양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광역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8. 심정수 의원(금산군, 민주당)

■ 질문1 : 충남발전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문제점과 대책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충남발전연구원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충남도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음. 그렇다면 도청의 유사관련 기구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인근 대전에 지금 준비중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곳의 연구소와 같이 통합을 하든지, 그러한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연봉 7,000만원이 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이런 분들이 초과근무수당까지도 문제를 만들어 놓고 아래 사람들과 쟁탈전 같은 비열한 사태가 발생된 점을, 이런 분들의 보수체제를 재검토하시든지 뭔가 수습대책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람. 도청 산하기관 여러 곳에서 업무수행을 확실히 못하고 고급 인건비만 축내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교체할 생각이 없는지, 이것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충남발전연구원을 인근지역과 통·폐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통·폐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이 어려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이러한 연봉과 관련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도 산하기관의 연봉과 봉급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연봉의 책정은 당초에 전국 연구기관들의 연봉을 감안해서 책정했던 것임.

■ 질문2 : 관사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 대부분 관사라고 하면, 일제하에 집 없는 관리들이 부임할 때 관료적인 사고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던 관사임. 이제는 민선시대요, 봉사자치도정을 이룩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현실에 걸맞지 않는 관사는 단호히 폐지하고, 그래도 한두곳이라도 정히 필요하시다면 공관이나 호화관사 차원이 아닌 권위적 배경을 떠난 평범한 생활을 터득하겠다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보통 관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단체장들과 기관에서 관사들을 폐지하고 있으며,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단체장들이 우선해서 지금 관사를 반납하고 있음. 하루속히 도에 필요한 경비절약을 위하고, 어려운 도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우선 먼저 관사를 폐지하고 매각 또는 주민복지 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보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6·25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에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 회의를 했던 그런 역사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공관의 문제는 도청이전과 함께 전체적으로 검토하는게 좋다고 판단함. 지금 공관을 팔고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질문3 : 시·군의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의 문제점과 대책

· 국민의 피와 땀이요, 도민의 혈세인 국·도비가 일부 단체장들의 이기적인 발상 때문에 상당히 사장되고 있음.

그럼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남도에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반납 받아야 함에도 전혀 내용마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 감사부서에서도 종합감사를 여러 날 실시했습니다만, 권위남용을 한 건도 확인을 못하고 있음. 이렇게 업무태만과 탁상행정이 근절되지 않은 채 예산남용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으며, 사장되는 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일부 시·군에 미부담사례나 보조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 시·군비를 미부담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음. 무엇보다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착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량과 투자비의 증감 등을 이유로 사업변경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라도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第25節 第145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5회 임시회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0년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0. 12. 26(화) ~ 12. 27(수), 2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0.12.26(화) 11:00	본 회 의 (제 1 차)	〈개 회 식〉 1. 제14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20	행 자 위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20	교 사 위	1.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4.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농 경 위	1. 휴 회(의정자료수집)	
11:30	건 소 위	1.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2. 27(수)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8		
조례안	5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3	1.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5분발언 신청(임성규의원)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0. 12. 26, 11:00) 2000년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다.

○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0. 12. 27, 11:00)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조례 제정안 1건과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4건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6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12.15)	행자위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관련 사무가 산업자원부장관 권한에서 도지사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무위임규칙으로 재위임 처리되던 관련사무를 조례로 규정	2000. 12. 27	2000. 12. 28	원안
262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12.15)	행자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국세인 교육세중에서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2000. 12. 27	2000. 12. 28	원안
26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0.12.15)	행자위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 연장 -중복분야 및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2000. 12. 27	2000. 12. 28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70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 (00.12.20)	교사위	○20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장위원회, 보장기금 설치·운용취지 및 용어에 맞도록 하고, -노인복지분야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시킴으로써 명확하고 효율적인 기금집행이 되도록 함.	2000. 12. 27	2000. 12. 28	원안
272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도지사 (00.12.20)	건소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위원회 구성인원 : 15인 이내	2000. 12. 27	2000. 12. 28	원안

Ⅲ. 5分 發言 要旨

1.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논산축협 식육 유통센터 관련

· 본 유통센터는 대전, 전주 등 인근지역 육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를 전량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여 지역 양돈농가에서는 안정적인 가축 사육기반을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겐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음.

또한 우리 농촌도 수출을 해야만 살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일본에 돼지 38만두를 수출, 3,030만불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99년도에는 일천만불 수출탑과 산업포장을 수상한 어느 도 조합보다도 우월한 조합입니다만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구제역 사태로 우리가 걱정할 때 1만9,000여두를 도축하여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였으나 수출길이 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임.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의 진입로는 1일 100여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나 진입로 폭이 매우 협소하여 보행자의 사고위험과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 돈육수송을 위한 대형 컨테이너 차량 운행시 통행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해결을 위해 도로 확·포장 사업비 약 4억원이 소요되나 논산시의 재정형편상 5,000만원 밖에 지원하지 못하였고 둘째, 본 유통센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강화된 기준에 맞게 2001년 6월말까지 시설이 완료되지 못하면 임도축 업체의 수출용 원료육을 도축할 수 없어 향후 수출길은 막히게 되고 수출로 인한 농가의 소득증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됨.

이에 강화된 기준에 맞게 도축시설, 가공시설, 비축시설 등을 하려면 약 40억원의 시설자금이 소요되는데 1개 조합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논산시에서도 4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논산시의회에서 의결하였음.

1개 조합과 논산시의 문제라 생각지 마시고 농촌을 살리고 충남 양돈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의 진입로 확·포장과 시설투자비 부족 분에 대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와 특별한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람.

第26節 第146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6회 임시회는 도와 교육청의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2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2001년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2. 12(월) ~ 2. 24(토), 13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2. 12(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4. 2001년도충청남도교육청업무계획보고 ※ 「디지털 충남도정」 설명회(도청대회의실)	
14:00	운 영 위	1. 제1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회사무처소관)	
2. 13(화)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기획정보실소관) 2.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교 사 위	1. 현지확인 - 태안군 원북면(사구) - 서산시 해미읍(서산고등학교)	
	농 경 위	1. 현장방문 - 화훼농가방문(아산시 음봉, 소동리) - 방울토마토단지, 화훼단지, 축산농가(당진)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 14(수)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계룡출장소소관) 2. 의원정보화교육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소관)	
	농 경 위	1. 현장방문 - 축산피해농가(홍성군)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종합건설사업소소관) 2. 의원정보화교육	
2. 15(목)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자치문화국소관) 2.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청양대학소관) 2. 의원정보화교육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원소관) 2. 의원정보화교육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2. 16(금)	행 자 위	1. 현장방문 - 2001년도전국체전대비동계훈련장방문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소방안전본부소관)	
2. 17(토)		의 정 자 료 수 집	
2. 18(일)		공 휴 일	
2. 19(월)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공무원교육원소관) 2.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감사관실소관)	
10:30	교 사 위	1.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 19(월) 10:30	교 사 위	3.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꽃박람회조직위원회소관) 2. 대설피해에따른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건의안채택의건	
	건 소 위	1. 현장방문 - 대전~통영간고속도로건설현장	
2. 20(화)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충청남도체육회소관) 2.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전국체전준비기획단소관)	
10:30	교 사 위	1.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2.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경제통상국소관)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소방장비생산공장방문(당진, 신평) - 서해안고속도로건설현장	
2. 21(수)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총무과소관) 2.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공보관실소관)	
10:30	교 사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중부농축산물류센터소관)	
11:00	건 소 위	1. 대한전문건설협회충청남도회임원과의간담회	
2. 22(목) 10:30	본 회 의 (제2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 23(금)	행 자 위	1. 의정자료수집	
	교 사 위	1. 현지확인 - 정의여중고및철새도래지(서천)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2. 24(토) 11:00	본 회 의 (제3차)	1.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3.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8.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설피해에따른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건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8		
조례안	8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1	1.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건의안	1	1. 대설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 건의안	
기 타	8	1. 5분발언 신청(이한식의원) 2. 제146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01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6. 200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보고 7.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8.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2. 12, 11:00) 2001년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충남도정」 설명회를 청취하였다.

○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2. 24, 11:00) 충청남도공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건,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6건,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1건,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1건, 대설피해에따른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건의안 1건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64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00.12.16)	교사위	○천안공업고등학교부설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 제2기계공동실습소가 2001년 9월 1일 개소 예정으로 공사중임. -개소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2001. 2. 24	2001. 2. 26	원안
265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교육감(00.12.16)	교사위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산업교육심의회 설치규정이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	2001. 2. 24	2001. 2. 26	원안
268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00.12.16)	교사위	○교육정보화종합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을 규정하여 정보화 우수인력 및 전문인력을 보강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 한시정원 15인으로,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1. 2. 24	2001. 2. 26	원안
271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0.12.20)	교사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중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요금을 받은 사람 조항을 삭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001. 2. 24	2001. 2. 26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73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교 육 감 (01. 1. 20)	교사위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	2001. 2. 24	2001. 2. 26	원안
275	충청남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중개정 조례안	도 지 사 (01. 1. 30)	행자위	○도지정문화재 관리단체가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도지정문화재의 징수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우선 사용 ○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건설 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인·허가 전에 검토	2001. 2. 24	2001. 2. 26	원안
276	충청남도공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	교 육 감 (01. 2. 9)	교사위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 관련 분쟁안을 심의·조정·권고함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힌 사안은 학교장에게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과 교원의 인사조치를 요청 권고	2001. 2. 24	2001. 2. 26	수정
277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교 육 감 (01. 2. 9)	교사위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으로 폐지되는 학교 (1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에 의거 통합되는 학교 위치 변경(4교), 학교명 변경 (3교)	2001. 2. 24	2001. 2. 26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74

지역정보화협의회 규약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1. 1. 3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1. 2.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1. 2. 24)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2. 26.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의 정보공유 확대와 공동사업의 추진 등 시대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지역정보화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시·도간 협의를 거쳐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분산투자를 최소화하여 정보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칭은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하고,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둠.

○ 목적은 시·도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

○ 시·도 지역정보화 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은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 구성
- 협의회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CIO) 또는 정보화 관련 실국장으로 조직
-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전문가로 위촉

○ 지역정보화 협의회의 주요기능(제9조)
-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공동S/W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개발 우수S/W 확산 보급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ASP(공동서비스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 정보교류 및 정부에 대한 개선·건의 등

○ 회의운영(제10조, 제11조)
-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
-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
- 상정 안건이 2회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 사무위탁 및 비용부담(제13조, 제14조)
- 협의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사무위탁 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자치단체 부담분은 수혜의 정도를 고려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78

대설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2. 19.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1. 2. 24)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2. 26.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행자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 제안이유

o 이번 피해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사상 유래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해지원기준은 현실과 차이가 심하여 호당평균 1,000만원 상당의 피해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지원기준의 현실화 필요

o 재해복구 지원기준이 융자중심(65%)으로 되어있어 피해농가의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획기적인 보조율 상향조정 필요

o 경작 및 시설규모에 따라 차별지원되는 기준 때문에 상대적 피해의식이 가중되고 불신의 원인이 되므로 형평에 맞는 지원기준 필요

『大雪被害에 따른 災害復舊費 支援 改善 促求』를 위한 建議案

지난 1월 7일 폭설로 인하여 축사 및 비닐하우스등 피해 농어업인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보상과 빠른 시일내에 원상 복구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름에 빠져 있는 농어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현재의 시름을 딛고 피해농어민의 영농이 조기에 재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의 표시와 함께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현 복구비 지원계획은 또 다른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시설 복구시 면적축소 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미복구 농가도 당초 「계획된 보조금 35%」는 피해농민 보상차원에서 전액지원

둘째, 자동화 온실복구는 유자격 시공업체로 한정되어 업체선정, 설계 및 검토, 감리 선정 등 절차이행시 상당기간 복구지연 예상되어 작목반 등에서 자체 공동작업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셋째, 철거비 미지원으로 복구비(보조, 융자, 자담)외에 추가 부담이 발생되므로 피해 시설물 철거비 지원(철거비 300평당 1,200천원 소요)

넷째, 시설물 복구설계시 인건비 비율(30% 이하)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 자연재해 복구에 한하여 인건비 비율 상향조정(40% 이상)

다섯째, 복구시 신규 구입자재에 한하여(세금계산서등 구입과정이 입증되는 경우) 복구비가 지원되고 기존 자재 재활용(30%가능)시에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여 복구하는 부분(30%이상)도 전체 복구 소요금액에 포함·인정하여 지원(증빙서류 간소화 대책 마련)

여섯째, 600㎡미만 피해축사에 대하여만 복구비 보조 지원되는 것을 보조 지원범위를 1,200㎡까지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일곱째, 축사와 가축만 지원되고 축산부대시설과 장비, 파손축사 철거비 등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축산 분뇨처리시설 등 부대시설과 장비, 파손축사 철거비 등을 지원범위에 포함

여덟째, 성축 폐사시에도 육성축입식비를 적용하고 있는바 성축 폐사시 현싯가로 지원

아홉째, 융자금 상환기간중 거치 기간동안의 이자를 정부에서 이차보전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및 기숙사 우선 입사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지원 및 보상확대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농어업인에게 피해복구에 큰 부담과 걱정만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정부의 특별 지원대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1년 2월 24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전용설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운영 촉구

· 도민에 대한 약속인 도청이전 약속을 IMF 유보, 도정질문,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분명치 않은 인접 대전시와 통합도 당초부터 대전분리를 반대했다면서 선거의 표를 의식한 빌공자 공약을 한 것이 아닌지요? 더이상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밝혀 주시기 바람.

그 동안 간판만 걸고 있는 우리 도청이전기획단 조직을 재편성하여 도청이전을 국비지원이 가능한 시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건의드림.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선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회 질문·답변 기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일관성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는 2002년까지는 입지기준설정과 후보지평가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도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서 도청이전기획단에서 관련자료 수집과 용역발주 준비 등 실무작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림.

특별히 제안해 주신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시범도시지정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과업지시에 이를 포함해서 도청이전사업추진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추진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도 다각적으로 협의하겠음. 그리고 기획단 운영도 도청이전작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겠음.

■ 질문2 :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개발계획 방안

· 그 동안 낙후된 서해안권 개발계획은 도가 수차 말로만 발표한 바 있음. 그 예로 서해안권종합개발, 환황해권 개발, 내포문화권개발, 홍성·대산·당진·서천 등 신도시 개발임.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한 개발계획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추진, 환황해권 관광벨트 조성 등 서해안권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2000년 1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4차 국토 종합계획에 내포 문화권과 서해안 연안관광벨트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와 효과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 내포문화권특정지역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지난해 8월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현재 조사 중에 있음. 금년 3월말 경에는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에 특정지역 지정을 신청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또, 안면도를 국제적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서해안연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비롯해서 중앙에 여섯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전북·전남도와 공조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21세기 환황해권시대에 대비하여 서산공항 물류기지를 비롯해서 대산 또는 보령항 건설, 보령~조치원~청주를 연계하는 육로 등 도내에 3 Port를 건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음.

2. 박영조 의원(서천군, 자민련)

■ 질문1 : 민선자치시대의 3대 병폐 해결 방안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행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연구·심의 제도를 제정하여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연구·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문화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한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봄. 그리고 도와 각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도 행정을 일선 자치단체에 접목시키고 고위 공무원들이 일선 행정을 경험함과 동시에 일선 공무원은 도의 고급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창의력과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도와 각 시·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의무적이고 제도적인 인사개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그리고 무차별적인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앞으로 선심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평가제를 실시 재정 인센티브제나 패널티제를 도입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지금까지 언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먼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문화행사 축소와 관련하여, 금산인삼제,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축제 등 문화이벤트는 성공적인 향토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일부지역의 향토문화축제는 전통성과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문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전문가를 초빙해서 향토문화 축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론회 결과를 구체화하고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소모성이 강한 축제성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지방채 발행증가 지적과 관련 채무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지방채 발행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보다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케 함으로써 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매년 일정분의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 감채기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우리 도와 6개 시·군에서 제정을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33억원의 감채기금을 편성을 해놓고 있음. 아울러 제안해 주신 재정 인센티브제나 패널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건전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더욱 보완·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 확대와 관련해서 동일기관 장기근무 인사교류제 도입과, 부모 봉양을 위한 공무원 연고지 배치 확대 등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2 : 장항항과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 대책

· 장항항과 장항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해상도시건설 움직임이 있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장항·군산 항로에 퇴적토사를 준설, 해상도시건설 예정지에 투기키로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음. 이는 '98년 6월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신도시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금강하구의 항로 폭이 좁아져 침수피해 등 각종 재해발생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와 적조발생 등 해양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장·군항로 퇴적에 따른 어선의 입·출항 지연과 어획물의 신선도 및 가격하락으로 수산경제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이러한 군산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충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우리 도에서는 지난 15일 군산에서의 주민 설명회 때, 지역 주민과 함께 관계관이 참석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운동연합 등 각종 단체와 전문가와 그리고 중앙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이를 적극 저지하겠으며, 오히려 준설토를 장항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지구내 준설토로 이용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

■ 질문3 : 초등학교 교사의 과다한 수업시간문제 해소방안

·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시간 수가 중등교사에 비해 크게 많아 형평성을 잃고 있음.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는 영어와 음악, 체육 등 교과 전담교사가 배치돼 있어 실제 수업시간 수는 다소 적으나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는 전담교사 마저 없어 모든 수업을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교육개발원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원의 주간 평균 수업시간 수는 초등학교 26.6시간, 중학교 17.3시간, 고등학교 15.8시간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등학교 교사에 비해 수업시간이 평균 10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과 전담교사를 늘리고 최고와 최저 수업시수제를 마련하여 초과 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교원배치기준은 예를 들어서 6학급의 학교라면 초등학교는 교사 7명, 중학교는 13명, 고등학교는 15명 이렇게 배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초등학교에 수업시간 수가 많을 수밖에 없음.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족한 초등교사 해결을 위하여 계속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음.

3. 임성규 의원(논산시, 자민련)

■ 질문1 : 천수만 철새보호 대책

·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서산 천수만 일대에서 지난해에는 많은 철새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과 함께 천수만 지역의 조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마련하고 계신 철새보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난해 천수만에서 "철새 떼죽음" 사고가 발생된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금콜레라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과밀현상과 먹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이 복합 작용하여 발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철새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완충지역 확보, 충분한 먹이 등 서식환경 보호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서산시 잠홍저수지를 백조공원으로 조성하고 금강하구언에 철새전망대를 설치하여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밀렵행위단속, 부상조수 치료,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대형호소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식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환경단체, NGO등과 공동대응하는 가운데 철새도래지에 대한 서식실태를 조사한 후 공한지에 보리 등을 식재하여 먹이농장을 조성하는 등 철새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질문2 : 전염병 예방대책

· 최근 들어 '70년대 사라졌던 결핵, 말라리아 등 후진국 전염병이 재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신종질환자가 발생하고 소득수준의 향상 및 해외교역량의 증가 등으로 해외여행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염병의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 전염병 발생현황과 그리고 전염병 관리 체계, 금년도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난해에는 수인성 전염병인 세균성이질과 호흡기 질환인 홍역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5만1,280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염병 관리를 사후관리 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질병정보제공 중심으로 전환해서 유행 예측 조사, 모니터링 강화로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고 실험실 검사예측, 전자보고, 표본감시기관 지정운영 등 새로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4. 김동선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 질문1 : 전문직 공무원 우대하는 인사행정

·앞으로 우리 도에도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선진 도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 이때까지 행정직이 주도하는 도정의 틀이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도정의 틀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인사이동, 전문가의 대우, 전문가가 되어야 할 전문가의 위상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많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디지털 시대에는 지식과 인적자원이 조직생존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스스로 부단한 자기계발과 혁신을 통해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며, 인사제도도 계급과 연공중심에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런 일련의 공직사회 변화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을 이미 검토 중에 있음. 아울러 그 동안 행정직이 하였던 건설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보건행정담당, 이와 같은 직위에 모두 기술직을 보임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원칙 하에 전문가가 대우받는 인사관행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정무부지사 임용시 도의회 임명동의제 도입과 여성 임명

· 정무부지사 임명은 지사가 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 모든 여성이 살고싶은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획기적인 여성에 대한 시각조정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무부지사는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한다면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또한, 양성 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정무부지사 의회 동의제 도입과 여성으로 임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정무부지사 임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

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사항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언론·의회·정당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중 우리 도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용하고 있으며,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의원님의 여성에 대한 깊은 배려로 생각되며, 충청남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성 우대에 대한 건의로 받아들여서 참고하도록 하겠음.

■ 질문3 : 공무원 다면평가제 시행의 문제점과 대책

· 아무리 공평한 인사를 했다하더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기 마련인 것이 인사이며, 제도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근무수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한다해도 하나의 형식적인 수단임을 공무원 사회가 다 아는 사실임. 공무원 하급자 평점제는 관리자의 인사권을 하위직 직원들에게 내 줌으로서 관리자의 조직통솔권을 저해하는 역기능은 있겠지만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시책임. 겸해서 말씀드리면 하급공무원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승진기대감 상실, 공정치 못한 인사로 인해서 근무의욕을 잃고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급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공무원 사기진작대책과 관련해서 승진적체 해소문제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현시점에서도 소방직과 꽃박람회 관련 정원증원, 4급이상 공무원 교육시 별도정원 확보 등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앞으로 복수직급제의 도입, 근속승진기간의 단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에 지속 건의를 하겠음.

두 번째,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디지털 도정실현을 통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외래강사 초빙 어학 스터디그룹 운영 및 지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공무원 임대주택과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취미클럽의 육성, 지원, 각종 휴가제도의 적극 이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세 번째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성과 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아울러 공무원 하급자 평정제는 타 시·도의 운영상황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입하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질문4 :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대책

· 지방선거와 월드컵 행사의 중복으로 인하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계획의 단계별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 한가지는 꽃박람회 개최계획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박람회 개최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 즉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자칫하면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쉽고 비용만 많이 들이고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음. 꽃박람회를 준비하느라 지금까지 들인 예산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꽃박람회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꽃박람회와 연계하여 다른 행사 등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4월로 지방선거가 앞당겨진다면 이에 따른 홍보대책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박람회는 월드컵 행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성격이 다른 두 행사를 접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외국인 유치에 있어서는 월드컵과 박람회를 연계해서 패키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투자예산은 회장조성 및 조직위 운영비로 283억원의 직접경비가 투입되고, 주진입도로 확포장, 영목항 개발 등의 지원사업비 1,839억원 등 총 2,122억원이 소요됨. 금년까지 투자할 예산은 회장 조성 및 조직위 운영비 211억원과 지원사업비 945억원이며, 앞으로 966억원이 더 투자될 계획임.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657억원,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1,400명, 안면도 관광객이 연 4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서해안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조성되고, 안면도 개발을 10년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질문5 : 학교 소각로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

· 학교 소각로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므로 측정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소각로 설치 실태와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언론보도와 같이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요. 현재 가동중인 소각로는 몇 개소이며, 미가동중인 학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학교 쓰레기소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소각로는 현재 185개가 가동 중이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조와 24조의 규정에 부적절한 156개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음.

이것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한 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아직 소각로 시설이 없는 곳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분리수거를 의무화도록 지도를 하고 있음.

■ 질문6 : 유치원 자원봉사제 실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립유치원은 1명의 교사가 20명 이상을 지도해 나가고 있어 보조교사 없이 1명의 교사가 환경정리, 간식지도, 행사지도, 교통지도 등까지 지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자원봉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들 자원봉사자들도 개인사정으로 자기 자식도 돌보기 어려워 유치원에 맡겨 논 학부모가 대부분이어서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로 현장에 활동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까운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함.

유치원 자원봉사제의 운영실태와 시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자원봉사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마다 3월에 500명 규모로 유치원 원아의 어머니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그 어머니들을 자원봉사자로 쓰는 것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에만 보조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훈련을 받고도 교통비 등의 소요로 나오지 않는 분이 많음. 따라서 교통비 지급 등 기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예산확보에도 진력을 다하겠음.

5. 정용해 의원(당진군, 자민련)

■ 질문1 : 경기도와 충청남도간 해상도계 분쟁 해소 방안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계획서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항만시설 중 일부 준공된 3만2,835㎡를 '98년 3월 23일 평택시에서 종전의 도간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충남측으로 남하하여 신규 등록 함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음. 이러한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정책실에 해상경계 특별대책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 충남도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 마치 경기도와 당진군의 분쟁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움. 그 동안 도간 해상 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도 차원에서 전담 대책반 구성 대응 등 추진 실적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 양 도·시간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측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여 지난 1월 3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 건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월 12일 서해대교 건설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우리 도에서는 총력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논리 개발은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논리를 설명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5일에는 해양관련 전문가를 초청, 워크샵을 개최, 9월 24일에는 대전방송에서 방영된 「충남비전21, 충남-경기도간 해상도계 분쟁」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홍보한 바 있음.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양전문가의 참고인 선임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연구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당진군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질문2 : 중소기업 경쟁력 확대 방안

·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지원은 하드웨어적인 나열식 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임. 그러나 앞으로는 산·학·연 협동 방식의 시스템화된 밀착 지도로

새로운 경영이론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대외 신용도 증대를 위해 품질인증획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음.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민종기 〕

·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신뢰도 향상과 해외시장 개척 및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8년부터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도비 1억1,000만원을 75개 업체에 지원하여 해외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학·연 협동방식의 시스템화 된 밀착지도를 위해 호서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를 도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질문3 : 서북부권 도시가스 공급의 개선 방안

· 서산시를 비롯한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서북부권 5개 시·군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5년 8월 29일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득한 주식회사 한보에너지가 '97년도 한보철강의 부도 및 IMF로 인한 산업체, 공동주택 등의 건설계획 취소와 변경으로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재 부도상태로 회사를 매각코자 함에도 불구하고 성사가 되지 않아 공급계획 가구수 3만 4,934호 중 7%에 해당되는 2,479호만 공급함으로, 계획 차질로 인해 유가와 LNG 차등 가격으로 호당 연간 23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총 3만 2,455호가 연간 74억원의 비용을 더 추가 부담하게 되는 등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의 허가취소 등 도에서는 서북부권 도시가스 공급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민종기 〕

· 사업여건의 변화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부도로 계획대비 차질을 빚게 되어 도에서는 허가취소 후 신규 사업자 선정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허가취소 요건의 불충족과 공급중단에 따른 기존 수요처의 피해 등으로 사실상 허가취소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 동안 법정관리 관할 법원 등에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건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여 현재 계획대로 원활한 투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앞으로 경제 여건이 호전되어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채산성 확보로 정상화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신규 자본 참여 또는 M&A등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 감독을 통하여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과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북부권 주민들의 생활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4 : 제11대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 추진 방안

· 학교 교육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현실 속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여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선거공약 중 「만족하는 학부모」를 위한 공약 추진 방침과 그 동안 추진 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는 현실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시설투자강화 및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보충수업 관리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반응과 폐지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또는 예산상의 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당진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공사립 교원 교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수업이외의 잡무로 학생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기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 교원 수업 시간 수와 잡무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제를 도입했으며, 또 특성화 중심학교를 집중 지원해서 학력 신장과 더불어 교육 환경 개선에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리고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뜻이 아니면 절대 통·폐합을 안 시키겠음. 그래서 지금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법으로 행정직을 배치했고 또 버스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등 최대로 지원을 하겠음.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대하여는 행정구역이 통합된다면 교육감으로서 교사충원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음.

다음에 당진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과 관련하여 합덕여중과 합덕여고는 1999학년도에, 합덕중학교, 합덕 농·공고는 2000학년도에 이미 중·고 통합 운영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음. 저의 지금 소신은 남녀 중학교나 남녀 고등학교가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공사립 교원 교류와 관련하여 공립과 사립이 구분 없이 지원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립과 공립을 1:1로 교류해 보고자 했으나 공립에서는 신청자가 있는데 사립에서는 없음.

사립학교의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하는 방안에는 폐교가 되었다든지 폐과가 되었다든지 학생이 줄어서 과원이 되었다든지 이런 때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 사립에서 공립으로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험을 치름.

앞으로 과원된 교사들에게는 누구든지 기회를 똑같이 드리도록 해 나가겠으며, 그러면 사립학교에 있는 교원도 공립으로 자연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림.

다음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 수업시간 수 감축방안과 잡무경감방안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교원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안으로 올해에 30개교를 선정해서 일·숙직 용역을 주고 그것이 타당하면 내년부터 충청남도에 있는 교원들은 일·숙직에서 해방을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음.

또 학기 중에는 연수를 될 수 있으면 시키지 아니하고, 소규모 학교의 복식 수업을 해소해야겠다 해서 9월 1일부터 3복식을 완전히 해소했고 2003년까지는 2복식도 해소하겠음. 그리고 환경 개선을 위해 수거식 화장실을 전부 수세식으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잡무경감을 위하여 소규모학교에 행정직을 배치하는 등 잡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음.

6. 송영철 의원(논산시, 민주당)

■ 질문1 : 쓰레기 소각행위 증가에 따른 방지 대책

· 1995년부터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최근 들어 비규격봉투의 대량배출과 드럼통을 이용한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 도로를 비롯한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는 아직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단속요원 및 청원경찰 등 단속전담반 운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근절시켜 충남도 만큼은 깨끗한 도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쓰레기 불법처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익근무요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성숙된 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역 민간단체를 통한 홍보 및 계도에 역점을 두는 한편 공한지 등 쓰레기투기 취약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결유지 명령제」 등을 도입 적용해서 토지 소유자들도 투기방지에 합심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 질문2 : 견훤왕릉 국가문화재 지정 촉구

· 견훤왕릉 국가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올 3월에 중앙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후 추진 단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견훤왕릉과 관련 지난해 첫 시행된 견훤왕릉제를 논산시 자체 행사로 그치기보다는 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키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견훤왕릉은 '81년도에 도지정기념물 제26호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출향인사, 종중대표, 지역유지 등 130여명으로 견훤왕릉보존위원회를 결성하여 학술세미나와 제향행사를 개최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음.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비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1월에 지방문화재를 국가 문화재로 승격,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와 정밀 고증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견훤왕릉제는 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좀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경우 도단위 행사는 물론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업비 확보 노력 등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갈 계획임.

■ 질문3 : 내수면의 불법 어로행위 특별대책

·도내 저수지에서 여전히 불법 어로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각 시·군에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단속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막연한 상태에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 차원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000년 불법 어로 단속 및 적발 조치실적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우리 도에서는 수시로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지난해에는 32건을 사법조치한 바 있으나, 일부 내륙 시·군에서는 단속이 소홀한 점도 있음.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 매년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언론 매체와 이미 위촉된 185명의 수산자원 명예감시관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5~6월 산란기와 9~10월 성어기에는 합동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내수면 내에 불법 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4 : 학교급식의 위탁운영 방안

· 학교급식 조리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자체급식을 할 경우 업무가 늘어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총체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일부 학교 급식시설 위생상태 조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철저한 감독행정으로 100% 청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내에도 발생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학교급식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위탁급식을 할 때의 문제점으로서는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하는 것 보다 성의가 없으며, 위생관리가 떨어짐.

앞으로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질문5 : 2001년도 실업계 고교의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

· 2001년도 도내 실업계 지원 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산업 사회의 중간 계층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2001년도 실업계 고교의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계 고교간에도 상대적으로 첨단 교육과정을 개설한 고교 지원이 높고 기존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지원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실업 고교 정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실업계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인문계고등학교에 개설된 실업반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함.

그래서 실업교육은 실업학교에서 맡게 하고, 그리고 실업반에 있는 학생수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과목별 특성학교로 육성할 계획임.

Ⅳ. 5分 發言 要旨

1. 이한식 의원(예산군, 자민련)

■ 중소기업청 충남지방사무소 설치 건의

· 지방중소기업청은 그 관할구역 내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육성·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전에 중소기업청 본청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중소기업청 본청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행하는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서가 없다는 사실임.

중앙부처에서는 각 시·도에 협력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5개 부처에서 다섯 명의 협력관이 나와 있고 부산, 강원, 전남의 경우 역시 4개 부처에서 네 명의 협력관이, 대전광역시만 해도 3개 부처에서 세 명의 협력관이 나와 있으나, 우리 충청남도에는 재경부와 건교부에서 한 명씩 두 명의 협력관이 나와 있음.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재정을 육성하고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 충청남도도 주민생활이나 인간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야 됨.

우리 의회와 도가 힘을 합하여 중소기업청을 유치하고 협력관을 더 요청해서 중앙부처와의 유대관계, 업무연락 등을 활성화하여 우리 충남의 부족된 재정을 보충하고,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화하는데 힘을 합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드림.

■ 학교 사회체육 확대육성 건의

· 그동안 우리는 청소년 사회체육육성시책에 있어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도대회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등 순위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엘리트선수 육성시책으로 치달아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얼마전 보도에 독일의 뮌헨시 한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보다도 많다는 보도를 접했음.

이제 우리 학교체육도 엘리트선수 육성시책에서 사회체육, 학생·학교체육시설로 돌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체육을 통하여 국민 기초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육교육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림.

第27節 第147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7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3. 14(수) ~ 3. 20(화), 7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3. 14(수)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소방행정력강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13:00	운 영 위	1. 제14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	
10:30	건 소 위	1. 소방행정력강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3. 15(목)	행 자 위	1. 현장방문 - 「2001한국방문의해」 관련관광지개발현장시찰 - 마량리해돋이마을,춘장대해수욕장(서천군 서면) - 무창포해수욕장석대도(보령시)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2.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의원정보화교육실시	
11:00 14:00	농 경 위	1. 의원정보화교육실시 2. 농업관련기관단체간담회	
	건 소 위	1. 현장방문 - 현대식소방시설견학(보령화력발전소)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3. 16(금)	행 자 위	1. 현장방문 - 도서종합개발(원산도등개발현장 : 보령시오천면)	
	교 사 위	1. 현장방문 - 아우내중학교(천안시병천면)	
	농 경 위	1. 현장방문 - 예산국화시험장(예산군오가면) - 충남농업테크노파크조성공사기공식(예산군신암면)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왕진교가설공사현장(청양군청남면)	
3. 17(토)	행 자 위	1. 의정자료수집	
11:00	교 사 위	1. 업무보고청취(교육청소관) 2.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3. 18(일)		공 휴 일	
3. 19(월)	꽃박특위	1. 현장방문 -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성공사현장(태안군안면읍)	
11:00	행 자 위	1. 「디지털충남」 세부실천계획보고(기획정보실) 2. 의원정보화교육실시	
	교 사 위	1. 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11:00	건 소 위	1. 화재및해빙기안전대책보고청취 2. 의원정보화교육실시	
3. 20(화) 11:00	농 경 위	1. 장항국가산업단지활성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11:00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4.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 5. 장항국가산업단지활성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0		
조례안	3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의안	3	1. 소방행정력강화를 위한 건의안 2.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따른 시정촉구건의안 3.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기 타	4	1. 5분발언 신청(이한식·정용해의원) 2. 제147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5분발언 신청(장준섭의원)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3. 14, 11:00) 2001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소방행정력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3. 20, 11:00)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 등 조례 제정안 3건을 의결하였으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따른 시정 촉구 건의안과 장항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66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교 육 감 (00.12.16)	교사위	○2000. 3. 1부터 평생교육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2001. 3. 20	2001. 3. 20	수정
267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교 육 감 (00.12.16)	교사위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합의·조정과 지원근거 마련 -협의회 구성은 15인이내, 기능은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등	2001. 3. 20	2001. 3. 20	수정
280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01.3.14)	본회의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심의범위를 외국 중앙정부의 공식행사에 정식초청, 3개국 이상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체결·교류행사 출장,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함.	2001. 3. 20	2001. 3. 20	원안

○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79

소방행정력강화를 위한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3. 14.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1. 3. 14)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3. 14.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안이유

○ 격증하는 소방수요에 대한 소방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필수 소방인력 확보 및「의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공사상 피해가 심각한데도 전문치료 기관이 없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므로「국립소방병원」을 설치하고「공상보험제」를 도입

○ 노후된 소방장비를 최첨단장비로 교체하고, 개인보호장비 및 첨단구조장비를 신속히 보강

○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구출하는 소방공무원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획기적인 사기진작을 도모하여야 함.

소방행정력 강화를 위한 건의안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화재진압도중 발생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부족한 인력과 안전성이 미흡하고 노후된 장비, 불충분한 예산지원 및 제도적 미비점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명감 하나만으로 위험에 뛰어들어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희생이 더욱 가중되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화재진압을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와 안전성이 강화된 현대식 장비로의 신속한 교체는 물론, 공사·상자에 대한 완벽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여 소방행정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격증하는 소방수요에 대한 소방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필수 소방인력 확보 및 「의무소방대」를 설치 하여야 하며,

둘째,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공사·상 피해가 심각한데도 전문 치료기관이 없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므로「국립소방병원」을 설치하고 「공상보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노후된 소방장비를 최첨단장비로 교체하고, 개인보호장비 및 첨단구조장비를 신속히 보강하여야 하며,

넷째,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구출하는 소방공무원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획기적인 사기진작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보다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충청남도 의회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3월 14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의안번호 281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따른 시정촉구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3. 17.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3. 20)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3. 20.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 제안이유

○ 일본의 2002년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중 한일합방, 대동아전쟁, 한국의 일본동조, 각종 가해사실 등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왜곡기술하여 침략전행을 미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국가의 외교적 쟁점이 되고 있음

○ 일본의 왜곡된 새역사교과서를 일본정부가 인정하려는 자세는 民官이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으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가 국민들과 동반자적인 관계형성이 어렵고, 그 동안의 우호적인 한일 양국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임.

○ 양국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하여 진정한 과거청산과 21세기 공동이익을 실현하는데 기여코자 함.

『日本 歷史敎科書 歪曲記述에 따른 是正 促求』 建議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2002년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중 일제의 침략행위(36년간)와 가해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왜곡기술한 것을 일본 정부가 이를 승인하려는 움직임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금 한일 양국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현실에서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은 양국의 우호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으며

더구나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인정하려는 자세는 民官이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심히 우려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다음세대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이후 우리나라도 차세대에 대한 역사적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왜곡된 일본역사가 세계적으로 오용될 경우 당해 국가의 위상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의 표시와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저해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시정하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 정부가 정직한 자기반성과 회개로 참된 화해를 이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의 왜곡된 역사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전 교육기관에 전파하고, 우리 학생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넷째,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민족정신을 더욱 함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올바른 역사인식이 항상 살아 숨쉬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각부처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 한다.

2001년 3월 2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의안번호 282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3. 2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3. 20)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3. 20.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국회 건설교통·산업자원위원회

□ 제안이유

○ '89년 8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12년째 착공되지 않고 어업권 일부보상에 그쳐 있는 상태에서

○ 인접 군산지역은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장항지역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99년 12월 정부의 장항단지 조기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빠른 시일내에 정부의 활성화 대책을 이행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長項國家産業團地 活性化를 爲한』 建議案

장항국가산업단지는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12년째 착공이 되지 않고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의 낙후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많은 지역민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현실에 있습니다.

장항단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임과 아울러 '99년 12월 국무총리의 장항지구 조기 활성화대책 발표와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의 충청도 방문시 호안공사비 1,000억원의 국비지원 약속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부차원의 후속 조치가 없는 반면,

같은 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군산지구는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민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상대적 낙후 상황을 바로 근거리에서 매일 접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장항지역 주민의 소외 의식이 팽배한 와중에서 장군항로의 준설토가 장항국가 산업단지 조기착공을 통해 단지조성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천군민과 충남도에서 강력한 반대로 중단되었으나 또다시 군산해상도시 예정지역에 투입하려 함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의회의원 일동은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신뢰성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99년 12월 국무총리가 발표한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착실한 이행으로 조기 착공 되도록 하고

둘째, 분양가 인하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단지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속 개정으로 호안공사비 국비지원 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소요되는 국비 전액이 특별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철도·항만 등 지역간 교통연결 기능이 양호하므로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업유치여건 개선과 단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특별지원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조기 활성화 되도록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1년 3월 2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Ⅲ. 5分 發言 要旨

1. 이한식 의원(예산군, 자민련)

■ 디지털 충남선언 관련

· 지난 1월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먼저 디지털화 시대를 맞아 보다 살기 좋은 복지충남을 건설하기 위한 디지털 충남선언을 하신데 대하여 지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림.

문제는 디지털시대가 단순한 전자매체 기술이 진공관에서 아나로그로,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되었다는 그 상황만은 아닐 것이며, 공무원들이 저마다 책상위에 컴퓨터를 놓고, PC주변기기를 놓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고 해서 디지털 시대는 결코 아닐 것임.

우리 사회가 처한 오늘의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공직자 모두의 자세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세로 의식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동안에 공권력 통치시대나 물리적 통치시대에는 관이나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이 인가권, 허가권, 지도·감독·단속·조정·통제권으로 관리하던 행정에서 이제 디지털시대라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경영추세로 돌아가야 될 것이며, 우리가 서있는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다면 디지털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임.

우리가 힘을 합하여 살기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하는 바임.

2. 정용해 의원(당진군, 자민련)

■ 당진항 지정관리 건의

· 오늘, 760m에 이르는 충남 유일의 공용, 일반 부두 및 120m의 사설, 일반 부두와 240m의 화력발전소 부두가 위치해 있는 국제적인 무역항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부는 불개항으로 나머지는 평택항으로 소속되어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당진군 지역의 항만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코자함.

첫째, 당진군에는 현재 3개 선좌의 공용, 일반부두 길이 760m, 깊이 14m와 1개 선좌의 사설, 일반부두 길이 120m, 깊이 6m, 그리고 1개 선좌 길이 226m, 깊이 15m의 당진화력 부두가 있어 여기를 통하여 수·출입 되는 물동량이 연 650만톤 이상이며 여기에 입항하는 선박척수는 연 700척 이상으로서 이는 충남도내의 3개 국제 무역항 장항, 보령, 태안에 입항하는 총 선박의 2.5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내 28개 무역항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규모임에도 당진의 항만시설물은 그 명칭 및 관할 기관이 제 각각 나뉘어져 해양수산청의 경우 당진화력부두는 충남 대산에 위치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2개 부두 및 연관 항계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평택시에 위치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어 1개 군의 항만시설물을 두 곳의 해양수산청이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역시 일부는 불개항,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의 명칭을 딴 평택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에서 그 유례가 없는 이상한 형태의 항만이 되어 버리고 있는 실정임.

충남도내 당진군의 3개면 신평, 송악, 송산의 항만시설물 및 해역이 평택항으로 둔갑한지 16년이 지나도록 우리 충청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에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한바 없으며 이는 충청남도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와의 마찰을 두려워하여 일부러 방관하고 있다는 많은 당진군민의 여론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임.

둘째, 항만의 경제적 창출효과에 대한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항만의 성격은 국가의 주요 기간 시설물로서 수·출입을 지원하고 그 소유 및 운영 역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였으나 이제는 개인이라도 항만을

건설하고 그 소유 및 운영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수·출입 지원은 물론 항만건설 및 운영을 통한 직접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이제 우리나라 항만은 항만자체의 운영수익과 항만을 통한 지역내 제조, 물류업체의 유치, 즉 공단의 원활한 분양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충청남도의 책임하에 분양이 이루어져야 할 당진의 석문국가공단이 전혀 분양되고 있지 않은 사실과 석문국가공단 주변의 항만시설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음.

특수화물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장항, 보령, 태안항과 군산항에 비해, 그 항세가 상당히 뒤져 있는 장항항에 비해 이미 충남 유일의 공용, 일반부두가 조성되어 있고 추가의 갯벌 매립 없이 기 조성된 미분양 공단 주변에 부두를 조성하기만 하면 되는 당진군의 경우 별도의 비용과 환경파괴 없이 충청남도 및 경기지역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서해안의 물류 최적지임을 인식하는 충청남도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셋째, 1986년 평택항 개항 이래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0년도부터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에 대하여 전폭적이고도 획기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청에는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를 신설하여 관세자유항 지정 및 항만공사 설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항만경제국 산하에 항만물류과를 신설하여 항만개발 및 선주, 화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이제 1년반 남짓한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평택항은 그 역사의 일천함에 비하여 정기 콘테이너선이 월 12항차 이상 기항하고 올해 9월부터는 정기 카페리선이 월 12항차 이상 기항하게 되는 국내 항만 최고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 북부지역 신흥공업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실현된 결과로 현재 경기도, 평택시가 강력히 추진중인 평택항의 관세자유항이 성공할 경우 평택항 주변의 경기, 평택 주변의 공단 분양은 엄청난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며, 이는 반대로 같은 아산만 권역의 당진과 아산시 일원의 공단 분양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경기도 평택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부두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두를 최대한 이용하거나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국가예산을 타 항구에 비하여 많이 배정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임을 인정하면서도 말 그대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우리 충청남도가 지역내의 항만 및 국제협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심각하게 반성하지 아니할 수 없음.

우리는 흔히 대중국 교역의 중심이니 서해안 시대의 중추니 하는 말들을 거의 관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진정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분쟁중에 있는 해역에 시설된 소위 평택항 서부두의 건설비는 약 650억원 이상이며 이 부두를 통하여 창출될 수 있는 가치는 값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이 부두의 행정지번이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에 속하는 문제가 단지 정서상의 문제일까요?

현재 우리도내의 제조업체 및 수출·입 업체가 부두가 없어 인천항, 부산항, 군산항을 이용함에 따라 증가되는 물류비를 계산할 때 부두, 항만을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 더 이상의 신규 공장이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진항 지정을 위한 범 군민운동이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진항을 지정 받고자 하는 당진군민들의 힘겨운 군민운동이 단순한 이름을 찾기 위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평택항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기도, 평택시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당진군의 태도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당진군민들의 정서를 계속하여 방치하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항만은 곧 경제이며 항만이 위치한 우리 충청남도는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하여 혜택 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항만은 이를 활용하는 이들의 몫이며,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림.

3. 장준섭 의원(당진군, 자민련)

■ 한보철강 분리매각 결정 관련

· 한보철강은 부도 후 4년여 동안 매각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10월 그것이 무산된 이후 지난 1월 29일 주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보철강 A·B지구를 분리매각 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바 있음.

A단지는 철근을 주로 생산하는 시설이고 B단지는 코렉스, 열연, 냉연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이를 분리매각 한다는 것은 A단지 철근 생산공장만 남기고 B단지는 해체한다는 뜻이며, 분리매각을 저지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 먼저 종합제철이 영남에 포항종합제철이 있고 호남에 광양이 있음.

분리매각을 하게 되면 B지구에 투자한 3조4,693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를 그대로 버려야 하는 국가적인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됨.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종합제철의 지원설비가 A지구에 있어 분리매각 했을 때 B지구는 추가로 이런 모든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은 전혀 없는 것임.

다음은 지금 분리매각을 할 경우 여기에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강판을 이용해서 우리 수도권지역의 공업지 대에 공급을 해야 될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도 현대자동차가 일본으로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강판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임.

지금 당진의 1,200억원 그리고 우리 충남 전체에서 2,800억원을 부도이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분리매각이 당연 논리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되지를 않음.

따라서 A·B지구가 함께 매각되고 이것이 함께 가동될 때만이 이 막대한 우리의 채권을 회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임.

다음은 한보철강 분리매각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정부가, 자산공사가 추진하니까 당진군민은 매우 격분에 차있으며, 이미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늘 현재 5만명 이상 당진군민의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기구를 가동시켜 주셔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충남에 반드시 종합제철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드림.

第28節 第148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8회 임시회는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사회위원장 보궐선거,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4. 18(수) ~ 4. 27(금),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4. 18(수) 11:00	본회의 (제1차)	1. 제14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14:00	운영위	1.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제14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의회사무처)	
4. 19(목) 11:00	행자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기획정보실) 2.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총무과)	
11:00	교사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복지환경국) 2.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여성정책관실)	
11:00	농경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농림수산국)	
11:00	건소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4. 20(금)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계룡출장소) 2.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자치문화국)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 (보건환경연구원,청양대학)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농업기술원)	
10:00	건 소 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 (건설교통국,사업소포함)	
4. 21(토)		의 정 자 료 수 집	
4. 22(일)		공 휴 일	
4. 23(월)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공무원교육원) 2.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감사관실)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행자위-계수조절)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교사위-계수조정) 2. 금강수질보전과관련한건의안채택 3.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경제통상국) 2.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제1회추경안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 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4(화) 11:00	예결특위 (제1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예비심사	
4. 25(수) 11:00	예결특위 (제2차)	1.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예비심사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4. 26(목)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2.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사 위	1. 현지확인(청양군,보령시) - 폐교재산관리현황및교육행정재산관리실태점검	
11:00	농 경 위	1.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상환기간연장을위한청원심사	
	건 소 위	1. 현지확인(서산시대산읍) - 석유화학단지소방시설점검 : (주)삼성	
4. 27(금) 10: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11:00	본 회 의 (제2차)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5.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안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8.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9.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 충청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 14.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금강수질보전과관련한건의안 16.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상환기간연장을위한건의안 17.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24		
조례안	1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1	1.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칙안	1	1.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동의안	1	1.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의 교류협정체결안	
건의안	2	1. 금강수질보전과 관련한 건의안 2.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 상환기간연장을 위한 건의안	
기 타	8	1. 5분발언 신청(박찬중의원) 2.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7. 의원선서(송중빈의원) 8.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4. 18, 11:00)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심대평 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임성규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중인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천안시 출신 이진환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이종수(천안), 김문규(천안), 손재탁(공주), 신재원(보령), 강태봉(아산), 이복구(서산), 송영철(논산), 심정수(금산), 한소환(연기), 강영성(부여), 전영환(서천), 정선홍(청양), 전용설(홍성), 이한식(예산), 최경섭(태안), 장준섭(당진), 한창숙(비례)

○ 제148회 임시회에서는(2001. 4. 27. 11:00) 논산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중빈의원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제정안 2건,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5건,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폐지안 4건,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 1건, 금강수질보전과관련한건의안 등 건의안 2건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60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정순평의원외 20인 (00.12.12)	행자위	○'97년 11월에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회사설립 후 개발실적도 없고 개발방식도 당초 일괄개발방식에서 개별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존립의 이유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001. 4. 27	2001. 4. 2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83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도지사(01. 4. 9)	행자위	○충청남도 홍보관 및 충남지역 특산물전시판매장의 설치·관리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홍보관의 기능을 충남의 역사, 문화, 관광, 경제, 대단위 추진사업 등의 홍보와 안내를 목적으로 함.	2001. 4. 27	2001. 4. 28	수정
285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도지사(01. 4. 9)	행자위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와 충청남도 청소년대상조례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업무 효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함.	2001. 4. 27	2001. 4. 28	수정
287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 4. 9)	농경위	○"2001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 지침" 및 "제도개선 내용"을 수용·반영하고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 등 달라진 육성기금 운용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 결정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2001. 4. 27	2001. 4. 28	원안
288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01. 4. 9)	교사위	○200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보호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되어 폐지함.	2001. 4. 27	2001. 4. 2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89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01. 4. 9)	교사위	○2000년 2월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가" 설립됨에 따라 이미 조성된 기금 전액을 장학회에 출연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	2001. 4. 27	2001. 4. 28	원안
290	충청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01. 4. 9)	교사위	○시·군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전문개정(2000.1.12)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2001. 4. 27	2001. 4. 28	원안
29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 4. 9)	건소위	○성차별적 용어인 "부녀"를 "여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용어인 "위안"을 "지원"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경함.	2001. 4. 27	2001. 4. 28	원안
293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01. 4. 10)	교사위	○"논산도서관"을 교육감 직속기관인 "충청남도논산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 ○충청남도 학생회관과 천안도서관을 통합 운영함. ○충청남도 논산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 ○충청남도 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남도학생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2001. 4. 27	2001. 4. 28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95	충청남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정순평 의원외 18인 (01.4.19)	행자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충청남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인용한 일부의 조항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상위 법령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 조문내용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2001. 4. 27	2001. 4. 28	원안
296	충청남도계룡출장소 소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	정순평 의원외 18인 (01.4.19)	행자위	○계룡출장소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 소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인용한 상위 법령이 제·개정,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2001. 4. 27	2001. 4. 28	원안

○ 규칙안 처리내역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94	충청남도의회회의 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 원 장 (01.4.18)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하여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 변상하던 것을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기준을 명백히하고 실비변상을 현실화시킴. - 본회의에서 의원이 도지사 등에게 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는 그 근거가 현행 제도상 불충분함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의장에게 제출하는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시기를 충분한 시간전까지로 정하여 도지사 등의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함. - 회의의 질서유지 및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중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실용화된 용어로 개정 - 방청의 제한규정중 객관적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내용보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2001. 4. 27	2001. 4. 28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86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의 교류협정체결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1. 4. 9.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회부(의결)일	2001. 4.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4. 2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4. 2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도정의 세계화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5대양 6대주로의 교류확대를 위해 동북아, 유럽, 대양주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 중에 있음

○ 시장성에 대한 발전 잠재력이 많고 투자 및 교역증진이 크게 확대 되어야할 남미지역과의 교류증진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교류대상 파트너를 의뢰한바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를 공식 추천을 받았음

○ 이에 따라 이 지역과의 교류여건을 검토한 바
- 아르헨티나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으며 관광 · 펄프 · 제지산업과 농업이 발달하고
- 아열대 기후로 다양한 동식물, 이구아수 · 모코나 폭포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 남미의 산업경제 대국인 브라질, 파라과이와 접경을 하고 있어, 남미 시장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여건을 상호 접목시켜 실리위주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남미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도정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협정서를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 체결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체결하고자 함.

○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97

금강수질보전과 관련한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4. 23.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4. 2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4. 28.
이 송 기 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 제안이유

○ 금강은 반만년 역사와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어 왔으며 우리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고 특히 충남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왔으나

○ 최근 수자원공사의 금강상류 용담댐 건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금강하구 담수호의 간척지 희석수 이용계획 등은

○ 충청의 젖줄인 금강의 수자원과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변화등 환경파괴가 심히 우려됨.

『금강 수질보전과 관련한』 건의안

금강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 천리물길을 굽이쳐 내려오면서 우리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고 특히 충남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해 나가는데 금강의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수질관리 그리고 하천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은 충청지역 주민의 생명수로서 그 어느 자원에 비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오염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댐건설로 인한 수량이 고갈되어가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 큽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농업기반공사가 금강하구 담수호의 새만금 간척지 회석수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금강과 함께 살아온 우리 300만 금강권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충청의 젖줄인 금강수질 악화와 생태계 변화 등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면서 20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자연그대로의 깨끗한 금강을 보전, 후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자원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금강하구 담수호의 간척지 회석수 이용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강상류에 설치되고 있는 용담댐과 함께 금강하구 담수호의 간척지 회석수 사용은 금강 수계의 물 부족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며 수질악화, 생태계변화, 연안어장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농림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동 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금강하구 담수호에 대한 수자원확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재, 금강하구 담수호 수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4.4㎎/ℓ 수준으로 농업용수 기준을 위협하고 있어 상류 유입쓰레기 처리, 퇴적물 준설 등 보다 강력한 수질 및 수자원보전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장·군 국가산업단지 등 금강권 주민의 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설교통부는 장래 물수요 예측 등 비상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표명이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의 소모적 분쟁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 백년대계의 시각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되기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1년 4월 2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의안번호 298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 상환기간연장을 위한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4. 26.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4. 2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4. 28.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부, 기획예산처

□ 제안이유

○ '98년 3월 대호지구 간척농지를 분양받아 경작하여 오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물가상승, 수입농산물의 범람 등으로 농업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매년 적자영농에 농가부채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며,

○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키로 약정한 토지매각대금 상환기간 또한 3년거치 기간이 끝나고 7년 분할상환의 첫해가 되었으나, 현실적인 농업 여건으로 볼 때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음.

○ 따라서 대호지구 간척지에 속한 4,000여명의 농어업인들은 당초 약정한 대호지구 매각 대금의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하여

○ 7년 분할상환을 17년으로 연장하여 분할상환하게 하고 연리 5%를 3%로 인하하여 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의 관계부처, 국회에 건의함.

『大湖地區造成土地賣却貸金償還期間延長을爲한』 建議案

지난 '81~'97년까지 16년간 당진과 서산을 연계한 대규모 농업종합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호지구 간척농지는 '98년도에 인근 피해 농어민 4,000여명에게 농지를 분양해 주므로써 자기 토지를 소유했다는 자부심과 농토에 대한 애착심으로 4년 연속 전국 제일의 풍년농사에 동참하며 영농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 모든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농민들이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에 따른 영농비 상승 등은 농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대호지구 간척지 농지를 분양 받은 4,000여 농어업인들은 지난 '98년 당시 3년거치 7년 분활상환에 연리 5% 조건으로 분양 받았던 농지가 3년거치 기간이 끝나고 금년부터 7년 분할상환의 첫해가 되므로써 설상가상 농가부채와 더불어 부채아닌 부채로 대호지구 간척농지 농어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농업 여건으로 볼 때 농사를 지어 영농비와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는 대호지구 농어민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바, 당초 약정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5%의 상환 조건을 완화하여 농민들이 원리금 상환의 압박에서 벗어나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대호지구 농어민들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당초 약정한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을 『쌀 전업농 농지 구입자금』 조건과 같은 20년 분할 상환(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방법으로 완화해 주되, 3년거치 기간이 끝났으므로, 금년부터 17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환 이율 연리 5%는 현재의 농업생산 소득으로는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관계법령을 개정 연리 3%로 인하해 주므로써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이 법령 개정을 통하여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2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Ⅲ. 5分 發言 要旨

1.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홀대받는 충청도 관련

· 전라북도에 편중된 용담댐 물 배분으로 인한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권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담수를 강행하여 현재 매일 10㎝씩 수위가 높아지고 150㎜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위험수위 239m까지 일시에 차 올라 배수로가 터져 금산군 지역은 꼼짝없이 물 속에 수장되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방송보도가 있어 이는 심히 우려되는 중대한 일로서 안전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함.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편파적인 충청 소외 정책이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며 약화된 도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틀 속에 휩싸여 매우 안타까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여기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아산만권종합개발사업비 중 국고 2조원 모두가 경기도에 투입하기로 결정되었는가 하면, 장항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한 대통령이 약속한 1천억원 조차도 온데 간데가 없으며, 또한 올해에 국가 주요사업인 기존 고속도로와 SOC사업의 예산도 거의 영·호남에서 모조리 차지했음.

국가차원의 안면도꽃박람회 개최 건의의 묵살, 또 석문산업단지 개발이 10년째 표류하는 등 시급한 현안들이 하염없이 그늘 속으로 묻혀져 가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들은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열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며, 말로는 지방을 우선하는 정치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중앙 정치인들의 아주 치졸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릇된 지역 편가르기 놀음에 우리 충청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는 힘에 의한 중앙정치 논리를 앞세워 지방을 무시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음.

이제는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단연코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앙의 이러한 편파정책에 얼마나 과연 대응해 왔는지 심각하게 반성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홀대의 큰 원인은 대전과 충남이 둘로 쪼개져 정치적 역량이 추락된데 있다고 생각함.

이에 저는 재통합하여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일 뿐만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통합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밖으로 과감하게 선언할 때가 왔다고 생각함.

우리는 지금 과거를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를 방관하고 있음.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를 무시하면 비애요, 현실을 외면하면 분노이며, 미래를 방관하면 죄인이라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발언을 마침.

第29節 第149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49회 임시회는 200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조례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5. 10(목) ~ 5. 16(수), 7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5. 10(목)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4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조기확정을위한건의안	
13:30	운 영 위	1. 제1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00	행 자 위	1.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조기확정을위한건의안	
5. 11(금) 11:00	행 자 위	1. 청소년시책업무보고(자치문화국)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농 경 위	〈현장방문〉 ○ 축산위생연구소공주지소(공주 금흥)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부여 세도)	
11:00	건 소 위	1.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	
13:00	건 소 위	○ 의원정보화교육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5. 12(토)		의 정 자 료 수 집	
5. 13(일)		공 휴 일	
5. 14(월)	행 자 위	〈현장방문〉 ○ 문화재보존관리실태파악(천안, 아산)	
	교 사 위	〈현장방문〉 ○ 금강수질검사(공주~서천)	
	농 경 위	〈현장방문〉 ○ 정산재래시장현대화사업장(청양 정산) ○ 친환경농업시범마을(홍성 홍동)	
	건 소 위	〈현장방문〉 ○ 꽃박람회진입도로사업현장(홍성, 서산, 태안)	
5. 15(화)	행 자 위	〈현장방문〉 ○ 문화재보존관리실태파악(서산, 예산)	
	교 사 위	〈현장방문〉 ○ 오지초등학교방문(보령)	
	농 경 위	〈현장방문〉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업무보고(태안 안면) ○ 신품종꽃예비전시장	
	건 소 위	〈현장방문〉 ○ 전국체전관련도로사업현장(천안)	
5. 16(수) 11:00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7		
조례안	2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의안	1	1.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조기확정을 위한 건의안	
기 타	4	1. 5분발언 신청(강태봉의원) 2.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000회계년도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5. 10, 11:00)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2000회계연도 예산집행결과인 결산을 심사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 조기확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 2000 회계년도 결산 검사 위원 〉

구 분	성 명	연 령	비 고
도 의 원	이 복 구	56	서산시, 건설소방위원회
〃	김 중 한	67	예산군, 행정자치위원회
〃	송 민 구	44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공 인 회 계 사	유 용 철	30	공인회계사
〃	정 구 열	34	〃
세 무 사	고 태 수	42	세 무 사
〃	이 찬 호	44	〃
전 직 공 무 원	김 남 작	63	전 세정과장
〃	우 영 일	60	전 공무원교육원 교수

○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5. 16, 11:00)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ㅇ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91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	도 지 사 (01. 4. 9)	건소위	ㅇ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주민공청회 개최지 선정 -개발구역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 관련 읍면동 -10만 제곱미터 이상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선정함. ㅇ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ㅇ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와 재원확보를 위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001. 5. 16	2001. 5. 16	수정
300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이 진 환 의 원 외 8 인 (01.5.10)	교사위	ㅇ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자립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 함. -입주대상자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아동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함. -공동생활가정의 입주자 수(4인~12인)와 공동생활가정별 전임 생활 지도원을 두도록 규정함.	2001. 5. 16	2001. 5. 16	원안

o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299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조기확정을 위한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5. 1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1. 5. 10)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5. 10.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신한국당, 희망의 신한국당

□ 제안이유

o 이미 수차례 걸친 교통전문기관의 조사·연구검토 과정을 통하여 공정·타당하게 선정된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결정」의 당위성은

-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계획과의 적합성 및 경제성 측면, 국토의 종합발전과 지역 균형 개발, 교통수요의 효율적 처리, 이용승객의 편의성, 환경적 측면, 분기 입지 조건에서 볼 때 오성은 천안보다 부적합한 입지임.
- 이러한 당위성·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와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노선을 결정하거나 PIMFY 현상에 의해 국가정책이 흔들려 노선이 변경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도민의 입장이며
- 전 교통부시절부터 현재의 건설교통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지역 적인 영향없이 진행되어 온 각급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일관되게 제기된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결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임.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 조기확정을 위한 건의안

대망의 새 천년 21세기에는 기필코 세계속의 선진국으로 도약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국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무총리님, 관계부처 장관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는『제3차·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거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할 목표로 그 동안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설추진을 준비하여 왔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1999년 11월 3일, 200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준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으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확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고속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교통망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토공간의 재편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基幹施設 이용의 효율성이 우선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히 지역발전과 청주공항 연계성 등을 이유로 오송기점 및 대전통과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이해적 발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 충남도민들은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정부안이 너무나 타당함을 거듭 천명하면서, 정부의 의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천안에서 분기 공주·논산을 통과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첫째, 국가계획의 적합성 측면에서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대단위 국책사업은 현실적인 투자경제성도 중요하지만 21세기 통일이후까지 대비하는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 후 아시아대륙 물류기반구축 구상과 국가 장기고속철도망 계획인 日字型 고속철도망 구축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건설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도

고속철도노선은 장거리 고속·대량 수송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건설비용·승객의 운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五松分岐」時 경부선 공유로 인한 노선용량부족과 노선곡선화·구배 불량에 따라 운행효율을 저하시키는 반면, 노선직선화는 승객의 운임·기회비용 절감과 안전성 및 운행효율을 높일 것 입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기여 측면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환황해권은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新산업벨트의 육성과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이 주요 과제입니다.

과거 경부축 중심의 편중국토개발은 시정되어야 하며 21세기를 대비하여 서해안 및 백제문화권(공주, 부여)에 가장 근접한 노선채택은 「환황해축」 개발방향과 일치하며, 교통량 분산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교통수요 측면에서도

교통문제 해결방식은 수요지향의 정책에서 지역균형개발에 의한 수요분산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전권은 현재 경부·호남고속도로 및 철도 등 국가간선도로망이 집중 통과하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연결시 극심한 혼잡비용 가중으로 역기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천안 직결노선은 경부고속철도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부축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이며, 호남선 교통흐름의 원활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용승객 편의성 측면에서도

철도노선은 주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수혜 대상자의 확대폭이 최대가 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호남선의 주고객은 호남권여객이 93.5%이며, 대전권 등 기타는 6%의 이용비중이 현실('98년기준)이며, 장차 고속철도의 장거리성으로 볼 때 대전지역 이용승객은 이용비중이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남권 지역에서도 천안직결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천안직결노선이 오송분기 노선보다 백제문화유적·계룡산국립공원보전, 국방중추시설인 계룡대의 보안유지 등에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을 통과하므로 문화유적의 훼손을 우려하나 공주중심부를 5㎞이상 벗어나 우려가 없는 반면, 대전 서북부 박정자 통과시 이전 불가능한 사찰 등 매장문화재가 천안직결 노선보다 15개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룡산 관통으로 자연경관훼손 및 생태계가 파괴되고 연기군 금남면의 단층지형 통과로 지진에 취약하여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당초계획 천안직결노선계획은 너무나 타당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발주 계약체결 할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1990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현지조사·연구·여론·수렴·검증 등 십 수년간에 걸쳐 연구 Know-How가 축적된 교통개발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성과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忠南道民들은 물론 호남권 주민모두가 異見없이 확정되어 신뢰해온 노선으로서 일부 특정지역의 발전논리나 정치논리에 따라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지역의 주장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우회하는 철도를 건설한다면 철도건설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길 것이며
도심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전과 청주권에 또다시 호남고속철도까지 통과시킨다면 도시과밀지역을 더욱 밀집시켜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반드시 천안~공주~논산으로 건설하여 주실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1년 5월 1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Ⅲ. 5分 發言 要旨

1. 강태봉 의원(아산시, 자민련)

■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 지연에 따른 특별대책 강구

·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확정한지 7년 동안 지지부진한 시민의 재산권 제약은 물론 부동산투기 등 지역안정을 해치는 여론이 비등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함.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당초 '94년도에 아산시 탕정면, 배방면, 음봉면과 천안시 백석동, 불당동 일원에 걸쳐 970만평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이후 2차에 걸쳐 면적을 변경하고 지난 2000년 9월 30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고시를 한바 있음에도 '98년 5월 15일부터 2000년 5월 14일까지 2년간 건축규제를 해왔고, 다시 1년을 연장하여 오는 5월 13일이면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임.

이와 같이 '94년 신도시계획 발표이후 배방, 탕정지역은 엄청난 개발 회오리에 휘말리게 되었고 주민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으나 부동산 업자들의 투기행위만 난무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각종규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해온지 7년이나 되었는데도 신도시계획이 아무 진전이 없어 해당 기관인 충청남도와 중앙의 건교부에 수 차례 건의하고 질문하였으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 기다려 달라는 막연하고도 허공에 뜬 답변만 있으니 도대체 충청남도와 이 나라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충남도의 답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지부진한 당초 발표된 법률만을 고집하는 저의를 알 수 없으며, IMF가 지난 '97년 말에 왔는데 이후에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민자유치를 계속 추진한 배경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함.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은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촉진지구로 고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민자유치방식에 의한 개발에 중점을 두는 법령체계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개발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민자유치에 의한 신도시 개발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특히 수도권기능을 분담하고 아산만권 배후 도시를 육성한다고 하면 상당규모의 복합 신도시개발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개발촉진지구개발은 민간자본의 속성상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춘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차원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민자유치개발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폐하고 관련법 적용을 재검토하여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개발되도록 하여야 함.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에 따라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주민협의체와 공청회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하향식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상향식 개발방식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것을 촉구함.

第30節 第150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0회 임시회는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6. 8(금) ~ 6. 15(금), 8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6. 8(금)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00	운 영 위	1. 제1차정례회(제151회)운영계획협의의건	
13:30		※ 지방의회부활10주년기념「대토론회」	
6. 9(토)		의 정 자 료 수 집	
6. 10(일)		공 휴 일	
6. 11(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청추경예산안예비심사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농 경 위	1. 가뭄극복대책추진현황보고 2. 연안쌍끌이선인망어업허가건의안	
	건 소 위	〈현장방문〉 ○ 담상천수해복구추진사업(홍성 광천)	
6. 12(화) 11:00	행 자 위	1.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	
11:00	농 경 위	1. 공장총량제완화에따른대책보고 ※ 꽃박지원특위국외시찰결과보고	
	건 소 위	〈현장방문〉 ○ 도서지역교통여건조사(보령 오천)	
6. 13(수) 11:00	예결특위 (제 1 차)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6. 14(목) 11:00	예결특위 (제 2 차)	1.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6. 15(금)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3		
조례안	6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1	1.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1	1.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 타	5	1.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공무국외 시찰결과 보고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6. 8, 11:00) 2001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강복환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이종수(천안), 김문규(천안), 손재탁(공주), 신재원(보령), 강태봉(아산), 이복구(서산), 송영철(논산), 심정수(금산), 한소환(연기), 강영성(부여), 전영환(서천), 정선홍(청양), 전용설(홍성), 이한식(예산), 최경섭(태안), 장준섭(당진), 한창숙(비례)

○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6. 15, 11:00) 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과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의건 등 총 9건을 처리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01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및지역 교육청소속기관운영 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교 육 감 (01.5.30)	교사위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충청남도 학생회관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학생회관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명시	2001. 6. 15	2001. 6. 15	원안
303	충청남도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도 지 사 (01.5.30)	행자위	○별정직 공무원중 읍장, 면장 및 시의 동장을 "지방별정직공무원"에서 제외함. ○별정직 공무원은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임용이 가능하던 것을, 단위 기관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할 수 있도록 강화 ○의회사무처소속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조례로 위임	2001. 6. 15	2001. 6. 15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04	충청남도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5.30)	행자위	○불용품 발생시 관계기관 소요조회 및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법인 의뢰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함.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미만인 불용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함 -2천만원 미만인 불용품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	2001. 6. 15	2001. 6. 15	원안
305	충남발전연구원육성 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5.30)	행자위	○조례제명 변경 :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선임직 이사의 추천기준 및 근거를 마련함. ○출연기금 설치·운용관리 및 출연·보조금 교부근거를 마련함. ○기본재산 취득처분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고,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함. ○도 소속공무원 파견근거를 신설함. ○연구원 운영규정 제·개정시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2001. 6. 15	2001. 6. 15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06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01.5.30)	행자위	○통합기금에서 감채기금 보유자금을 관리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을 폐지하여 통합관리기금 자금출납원이 대행함. ○감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과 절차 등은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준용함	2001. 6. 15	2001. 6. 15	원안
307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5.30)	행자위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사유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시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받지 않도록 완화함.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내용 중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삭제	2001. 6. 15	2001. 6. 15	수정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08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1. 5. 3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1. 5. 3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6. 15)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01. 6. 15.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2001년도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 관리계획내역

○ 일반회계소관 재산

구 분	재 산 종 류	사 업 명	위 치	필지	수 량 (㎡)	가 액 (천 원)	비고
합 계				44	432,518	3,981,558	
처 분	토 지	① 안 면 도 관광지개발	· 태안 안면 중장 (승언)	27	389,544	3,663,823	
		②농업기술원 시험포장매각	· 예산 오가 원평 · 논산 부적 아호 (마구평)	17	42,974	317,735	

○ 특별회계소관 재산

구 분	재 산 종 류	사 업 명	위 치	필지	수 량 (㎡)	가 액 (천원)	비 고
처 분	토 지	안면도관광지 개 발	· 태안 안면 중장(승언)	15	43,495	579,875	

第31節 第151回 定例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 이번 정례회는 도와 교육청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6. 25(월) ~ 7. 4(수),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6. 25(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1회충청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30	운 영 위	1. 제15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회사무처)	
6. 26(화) 11:00	행 자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기획정보실)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총 무 과)	
11:00	교 사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복지환경국)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여성정책관실)	
11:00	농 경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농림수산국)	
11:00	건 소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건설교통국)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6. 27(수) 11:00	행 자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계룡출장소)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공보관실)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감사관실)	
11:00 14:00	교 사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보건환경연구원)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청양대학) ※ 의원정보화 교육(전산교육장)	
11:00 14:00	농 경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농업기술원) ※ 의원정보화 교육(전산교육장)	
11:00 14:00	건 소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소방안전본부) ※ 의원정보화 교육(전산교육장)	
6. 28(목) 11:00	행 자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공무원교육원)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자치문화국)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행자위소관)	
11:00	교 사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교육청)	
11:00	농 경 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경제통상국)	
	건 소 위	〈현장방문〉 ○ 소방파출소 신축사업(금산군 금산읍)	
6. 29(금) 10:30	본 회 의 (제2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6. 30(토) 10:30	본 회 의 (제3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7. 1(일)		공 휴 일	
7. 2(월) 10:00	예결특위 (제1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교육청)	
7. 3(화) 10:30	예결특위 (제2차)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도청)	
7. 4(수) 11:00	본 회 의 (제4차)	1. 2000회계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회계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회계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9		
결산안	3	1. 2000회계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0회계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0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 타	6	1.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윤석우·전용설·박찬중·이준우의원) 6.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강태봉·한창숙·최경섭의원)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6. 25, 11:00)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2000회계연도 결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이진환(천안), 윤석우(공주), 이준우(보령), 강태봉(아산), 이복구(서산), 송중빈(논산), 박찬중(금산), 강화섭(연기), 유병기(부여), 박영조(서천),

우지명(청양), 전용설(홍성), 김중한(예산), 최경섭(태안), 정용해(당진), 송민구(비례), 김동선(비례)

○ 제1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6. 29, 10:30) 도지사와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윤석우(공주), 전용설(홍성), 박찬중(금산), 이준우(보령)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2001. 6. 30, 10:30)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틀째를 맞아 강태봉(아산), 한창숙(비례), 최경섭(태안) 의원 등 3인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2001. 7. 4, 11:00) 도와 교육청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3건을 의결하였다.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윤석우 의원(공주시, 자민련)

■ 질문1 : 자연사박물관사업 추진 촉구

·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의 재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환경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중요사안 중에서 잠시 개발과 보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음.

개발과 보전은 양면성이 있다 하겠으나 연구도 개발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보존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조금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함.

물론 개발의 수요가 없다면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하겠으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식물, 동물, 광물 등 모든 자연물은 인류생존과 복지를 위해 이용돼 왔으며, 개발을 통해서 그 가치가 더욱더 넓어진다 하겠음. 이에 따라 잘 보존된 환경 속에서 자연의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이 발휘 되도록 자연사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은 더욱더 크다 하겠음.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은 2000년 3월부터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져 그해 9월경에 뇌물수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잠시 공사가 중단됐고, 환경단체 등의 적극적인 사업중단 요구에 충남도에서도 공사중지 명령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중대 사안을 구두로 전달을 해도 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와 같은 말썽이 생기자 이후 위 사업자 청운재단 이사장은 동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타의에 의해서 공사포기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이며 이후 강력한 공사 재개의 뜻을 피력을 한 바 있으나 지금껏 충청남도에서는 여러 정황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또한 원상 복구시키라는 말만을 강조를 하고 있음. 그렇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한 구체적인 내용과 도에서 원상복구 시키라고 발송한 공문 내용대로 소요경비는 파악을 했는지와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또한 청운 문화재단에서 투입한 수십억원의 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 복원을 위해서는 5만톤 이상의 흙이나 돌이 필요한데, 이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야산이든, 동산이든 파괴를 해서 환경파괴의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며, 또한 그 양은 5톤 트럭 1만대 분에 해당됨.

이것을 다시 옮길 때 엄청난 공해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우기철에 접어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산사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하겠는데 만일 복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인 가도 검토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음. 또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책임회피와 환경단체의 걱정과 지적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잠시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했는지와 환경단체 쪽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번이라도 했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묻고 싶음.

또한 위 사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충청북도와 대전시의 권유를 뿌리치고 충남으로의 사업 선택을 할 때는 충청남도의 강력한 민자 유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임. 전반적인 큰 틀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사사로운 뇌물스캔들과 환경단체의 걱정에 의해서 위 사업이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위 사업을 끌어들인 충청남도에서도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음. 또한 이 사업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며, 중단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면서 공사재개에 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총 부지 면적 1만6,000평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7,000평에 대해서 훼손 협의를 받아서, 이 중에서 본관 부지 2,200평을 비롯해서 약 3,800여평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중에서 주차장 면적이 약 900평정도 되고, 진입도로 700평을 제외하면 실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훼손된 실면적은 2,200평이라는 말씀을 드림. 동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하에 암반매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질조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최소한의 면적만을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필요 부분 이상이 벌채되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사책임자에게 구두로 훼손면적을 확대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은 서류가 아닌 사항으로도, 구두지적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 청운문화재단측에서는 지질조사후 기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환경훼손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부터 사직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행하게도 관계 공무원 두 명이 부도덕한 행위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사업시행자인 청운문화재단으로부터 2000년 10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물관 건립사업을 포기하고 법인의 재산과 소장유물을 우리 도에 기증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음.

이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고 토사유출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훼손부지를 복구하도록 청운문화재단에 촉구해 오고 있음.

우선 현재까지 복구는 토사유출 방지 등 응급조치만을 취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조경을 포함해서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됨.

현 위치에 다시 자연사박물관을 건축하는데 따른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찬반양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좀 더 심도있게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착공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음. 우선 청운문화재단측에서 응급복구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치를 한 연후에 폭넓은 의견과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충청남도에 건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합의 도출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음.

2. 전용설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IMF 환란이후 농촌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농산물 100% 수입으로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농촌을 등지는 농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현 정부는 국고지원을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하는가 하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 해제에 중앙부처, 공기업, 대기업의 지방 이전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뚜렷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75건의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반영된 것이 없음. 이제는 지방분권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나 행정기관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조사 발굴하여 도에서 자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법령 등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 부처에 건의해 왔으며, 그리고 중앙 부처에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 중 주민세 징수방법 개선 등과 같이 관련부처와 법규가 1개에 해당되는 사항은 대부분 수용이 되었음.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거나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된 사항은 부처별 입장이 달라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비록 우리가 IMF 경제난을 극복했다고는 하나, 수출 여건과 산업생산 지수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지원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물가와 고용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국비확보와 시행 방안

·지난 3년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국고지원 내역을 보면, 전남이 6,815억원, 경기도가 5,395억원, 경남은 4,861억원, 경북은 4,514억원인 반면, 충남도는

2,575억원으로 전남의 25%선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치적으로 특정지역 편중 지원이 계속되는가 하면, 충남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사업시행 우선 순위에 잇어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지난 '93년에 착공, 일부구간 공사만 시행한 채 5년째 중단되어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며, 용봉산, 덕산온천, 수덕사 등을 연계하여 찾는 관광객의 급증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안면도 꽃 박람회 등을 대비한 확포장 공사 재개가 시급한데 시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지방도 사업에 투자되는 양여금은 지방도의 미포장 도로연장을 토대로 현재의 도로개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서 우리 도의 지방도를 포함한 시·군도, 농어촌 도로의 총 연장은 1만1,828km이며, 포장률은 46.8%로 전국 4위 수준임.

전남도의 예를 들면 전남도는 지방도로의 포장률이 40.3%이며, 미포장도 연장을 비교해 보면, 저희 도의 미포장 도로는 6,493km, 전라남도는 1만44km임. 따라서 전체 국비예산이 전남도가 우리보다 다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람.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 609호선으로서 총 연장 12.6km중에 홍성읍내에서 덕산방면으로 3.1km 구간은 지난 '98년에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 9.5km도 현재 1일 교통량이 2만 대로 4차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

■ 질문3 : 홍성 화장장 현대화 및 도 사업소 추진 방안

· 화장사업은 혐오시설로 집단민원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광역자치 단체가 운영하면서 수요 증가에 대비, 시설의 대형화,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충남도도 홍성 화장장을 도 사업소로 지정해서 도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대화 할 것을 건의함.

홍성군은 빈약한 재정과 집단민원으로 고심 끝에 수용자 원칙에 따른 시·군의 기금을 출연,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이 반대하고 있음. 그래서 화장장 사업은 도민을 위해서는 도가 직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장묘문화 관행의 인식전환과 함께 화장률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도에서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화장의 처리 능력과 함께 납골당의 봉안능력을 확충시켜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첨단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족 대기실 및 분향소, 첨단 화장장비를 갖춘 현대시설로 갖춰나갈 계획이며, 1차적으로 내년도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82억원 중에서 국비 5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아울러, 추가로 주신 도 사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도와 전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참여하는 공동이용방안과 함께 민간위탁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질문1 : 현안 타개를 위한 "별동단" 설치

· 현재 아시다시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그리고 수도권 정비법개정과 장항개발사업, 또 호남고속철 분기점 갈등과 도계관련 문제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 이러한 지역현안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예컨대 주민과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하면서 기동임무를 수행하는 "별동단"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임. 현 평상의 체제로서는 늘어나는 현안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수도권 집중과밀화와 관련한 공장총량제 완화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문제 등은 우리 도의 최대 현안 과제이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동성 있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지난 '96년도에 기획정보실에 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이와 같은 정책 과제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은 물론, 총괄적인 업무 조정 등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따라서 조직의 구조 조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별도로 T/F(테스크포스) 형태의 기구를 신설 운영하기에는 인력 배분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의 정책담당관실의 조직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구조조정에 따른 중·하위직의 사기진작 방안

· 국민 정부 4년 동안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직제축소와 공무원 감원이 매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위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현재 국장급이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젊은 층으로 보임 되는 등 인사 적체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음. 따라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아주 정말로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인사상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총 정원 3,475명의 18.3%인 63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사적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직급의 승진인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 복수직급제 도입과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연한 단축을 건의하여 지난 6월 18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 기능직 근속 승진연한을 1년 단축한 바 있음.

앞으로 복수직급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장기교육과 해외연수 파견기회 확대 등의 시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서 외국어와 정보화 등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강자 경비 지급, 취미클럽 육성, 각종 휴가제도의 적극 권장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3 : 금산군 금산초등학교 교실증축 대책

· 금산군 금산초등학교에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학군조정으로 학생수의 조정이 가능하여 별도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교실을 증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배적 여론임.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소재지에서 학군조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한 학교는 교실이 남아 돌아가고 한 학교는 증축하는 등 비효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교실 증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학군의 조정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초등학교의 학구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학교의 위치, 학교의 균형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하고 있음.

금산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목적은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특별교실의 확충이 주목적임.

앞으로 금산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구도 향후 도시 발전 전망과 해당 지역 주민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으로 이 학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음.

4. 이준우 의원(보령시, 자민련)

■ 질문1 : 가뭄극복을 위한 하천 개·보수 공사 촉구

· 우리의 크고 작은 하천 바닥은 토사가 계속 높아진 관계로 홍수가 나면 제방이 범람하고 유실되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음. 그런데도 하천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쌓인 토사를 제대로 파내지 않고 뚝만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음. 작은 일 같지만 하천 개·보수 공사시 토사제거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준용하천의 개보수공사 내역과 토사제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우리 도의 현재 하천개수사업대상은 42개 재해위험지구와 38개 수해상습지 등 80개 지구로 총 3,4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동안 1,378억원을 투자하여 31개 지구를 개수하였고, 금년에도 226억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 10개소와 수해 상습지 5개소 등 총 15개 하천에 226억원을 투자해서 개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수사업시에는 퇴적토사의 제거 등 하상정리도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이미 개수한 하천의 홍수 범람원인이 되는 퇴적토사 제거대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총 57개 대상 하천 중 21개 하천에 대해서 78억원을 투자해서 하도정비 및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6개 지구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저수지 준설 공사 대책

· 지난 최악의 가뭄에 저수지에 쌓인 토사를 걷어 내는 준설작업을 제때에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계획적인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함.

도내 저수지 중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몇 곳이며, 준설이 필요한 곳 중 준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며, 예산 확보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준설대상 저수지 중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대형저수지 현황과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형저수지 현황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내 저수지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747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15개소 등 모두 962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 준설대상은 472개소로 파악되고 있음. 저수지 준설은 지난해까지 194개소에 178억원을 투입해서 472만6,000㎥의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당초예산 12억원과 한해 대책비 54억원 등 66억원을 투입해서 236개소 163만4,000㎥의 준설을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 앞으로 39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예당저수지, 탑정저수지, 청천저수지 등 대형 저수지를 중심으로 준설을 계속 추진해서 한해뿐만 아니라 수해 대비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경지정리와 물 대책

· 앞으로 경지정리를 시행해야 할 논이 대부분 산간지역이나 천수답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있어 올해처럼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소규모 저수지건설, 대형관정 등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경지정리 전에 소규모 저수지나 대형 관정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의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지정리율은 전체 논면적 대비 약 80%수준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잔여지역은 대부분 개발여건이 열악한 중산간 지역임.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형관정 개발 등을 통해서 80% 이상 수원을 확보한 후에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선행하겠음.

■ 질문4 :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 계획

· 앞으로 더 극심한 기상이변과 가뭄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가뭄이 닥쳤을 때만 뒤늦게 관정개발에 나서지 말고 사전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농한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고 믿어 관정 개발사업비를 미리 배정 받도록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람. 또한, 지난 가뭄시 지원된 관정개발 사업은 총 몇 개소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관정 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우리 도에서는 당초 예산 150억원과 긴급 한해대책비 131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4,565공의 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1,981공은 완료되었고, 잔여 물량은 항구적인 한해대책용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특히 관정개발 사업은 매년 10월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후 연초에 착수하여 영농철 이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정용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를 통해서 우선 공급하고 있음.

■ 질문5 : 가뭄극복을 위한 댐건설 계획

·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지, 후보지 20곳을 정하여, 중소형 댐을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을 보면서 댐 건설이 근본처방이라는 건교부의 계획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함.
물은 더 이상 물쓰듯하는 자원이 아님을 절감하며, 되풀이되는 가뭄을 해소하고, 근본적이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도의 댐 건설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현재 물부족현상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댐 건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은 없음.
참고적으로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도내 청양 지천댐 등 3개소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발표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6 :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촉구

· 현재 국회에서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농산물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앎. 우리 도에도 학교급식에 재료 또는 완제품을 우리 농수축산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우리농수축산물사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농수축산물 납품실명제 실시도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우리농산물사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국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실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음을 주셨던 납품실명제 도입문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겠음.

5. 강태봉 의원(아산시, 자민련)

■ 질문1 : 아산만권 배후도시개발방식 변경 추진

·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하여 현행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채권발행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2000년 9월에 고시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개발내용은 국가차원에서 제시된 수도권 기능분담 및 아산만권 배후도시 기능과 시설입지 계획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보완하는 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고속철도 역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산만권의 산업 입지적 중요성과 장항노선이 충남권 발전의 중심축임을 감안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천안~홍성간 고속도로 신설계획도 국토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고속철도 역사와 신도시 온양과 아산지역의 발전연계성에 따른 도시 연담화 등을 고려하여 곡교천 남쪽을 따라 도고까지 8차선의 메인 간선도로망을 확보할 것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고속철도 역세권 신도시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청을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신도시 개발 58만평을 구획정리 개발 방식으로 충청남도에서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신시가지 개발에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한 것은 민자유치가 가능한 공공개발일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을 고려하였던 것입니다만, 지난 해 1월 28일 기존의 「지역균형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그리고 최근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의 미비점을 보완·발전시킨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구단위 개발시에는 개발여건에 따라 「도시개발법」과 개별법을 병행 추진토록 할 계획임.

지난 해 9월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국가 차원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참여해서 공공개발 해 줄 것과 도로 등 간선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초에도 건설교통부를 제가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도에서도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광역간선교통망」 확보계획과 관련하여 천안~홍성간 고속도로는 국가기간 교통망이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된 현재로서는 반영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림.

고속철도 역사와 신시가지, 아산지역의 도시 연담화 등을 고려한 곡교천 남쪽을 따라 도고까지의 8차로 간선도로망을 건설하는 것은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신시가지 내 도청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금년 7월중에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늦어도 2002년 말까지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느 특정지역으로 이전 입지를 고려한다거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질문2 : 고속철도 역사명칭 결정 촉구

· 경부고속철도는 2003년 12월 개통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 건설교통부에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역사명 결정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2000년 10월 17일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 「장재역」으로 결정하여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음.

그런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장재역」이라는 역사명이 지명도가 낮고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다가 아산시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하게 되었음.

고속철도공단에서 장재역 명칭이 지명도가 낮고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라면 해당되는 기초단체인 아산시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인터넷 설문조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역사명칭을 지정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도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음. 비록 역사명칭 결정이 건설교통부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결정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도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질문3 : 논 농업 직불제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식량안보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 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농촌 여건을 면밀히 조사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농지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현행 농지법과 법률적인 모순이 대두되고 있으며,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 적법하지 않게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에 농지 소유자와 위탁 경영자간의 신청과 지급시 예산이 위법 부당하게 지출될 소지가 많고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과의 계약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등 영세농민 소득지원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중앙에 신속한 제도보완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보조금을 지급하는 10월말까지 실제 경작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특히, '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의 불법임대차 문제는 사실상 논농업 직불제와는 다소 다릅니다마는 이 문제도 실제 경작자의 농지 취득을 유도하면서 매년 한차례 이상 사실 경작조사를 실시해서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4 : 밴형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문란행위 단속

· 밴형 화물자동차 등은 화물의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쇼핑백, 장바구니 등을 소지한 사람들을 운송하고 있으며, 휴대품이 전혀 없는 시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직접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단속할 수 없고, 6인승 밴형을 용달화물차로 등록을 한 후 화물 대신 편법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으나,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조항이 미약하여 단속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법규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 영업행위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택시 및 버스업계의 경영 환경 악화로 경영난이 가중됨은 물론 도산하는 업계가 속출할 것이 자명하므로 조속한 법규 보완과 강력한 단속을 건의하는 바임.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의 구별을 확실히 규정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10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또한 마련하여서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음. 불법영업 행위단속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전 시·군이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전면 차단하고 있고 도와 시·군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등록기준에 맞도록 구조변경을 해야 함으로 현재와 같은 불법행위는 근본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에서도, 시·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음.

■ 질문5 : 고교입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서북부 지역의 천안, 아산의 경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간 과열경쟁으로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교육여건이 좋은 천안시로 위장 전입까지 하여 천안시에서 75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천안시에서 탈락한 중학생들이 온양지역으로 오고, 온양지역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여타 지역으로 밀리는 도미노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충청남도만이라도 현행 입시제도를 고입 평준화제도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천안의 고등학교 입시는 1980년부터 '94년까지 15년간은 평준화 제도 시행 중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별 전형에 의한 경쟁입시 제도로 바뀌어졌음.

천안시의 평준화제도 도입 문제는 평준화 지역의 범위와 학구설정 등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에 따른 민원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음. 그래서 평준화를 하다가 입시를 부활시킨 이유도 이러한 이유이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음.

또 이 지역의 학교 육성책과 관련하여 지역에 육성하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고등학교 육성하는 학교를 특성화 중심학교로 해서 17학교에 6억원을 특별히 지원했음.

그리고 천안으로 유입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온양지역의 명문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온양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또 연기나 금산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사를 이런 교사를 달라고 요청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사를 주고 있으며,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도 교장에게 주면서 학교를 살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음.

또한 농촌의 거점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50개교에 32억4,0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로 지정을 올해 대폭 늘렸음.

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화장실을 우선 현대식으로 모두 고쳐 주었고, 또 시골학교에 교감도 없고 행정실도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행정실 직원은 교육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이미 배정을 해 주었고, 교감은 교육부에서 T/O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T/O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임.

■ 질문6 : 사립학교 지원 대책

·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 대부분의 법인이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전·답·임야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수익성이 적어 교원의 연금 의료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사학운영 소요액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대로 방치할 경우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전·답·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법인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사립학교 전입금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사립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그렇게 한 결과 지난해에는 천안경영정보고, 천일학원 등 2개 법인에서 수입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대체한 후 1,800여만원 상당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저금리 시대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전입금을 아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또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6. 한창숙 의원(비례대표, 자민련)

■ 질문1 : 가출청소년 보호 시스템 구축

· 가출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가출문제 발생시 귀가조치나 일시보호시설 수용 정도의 단순한 조치 외에는 가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단순 귀가조치에 따른 재가출 발생과 대규모 수용시설 보호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탈시설화와 사례 관리, 통합적 접근 방법에 의한 개입을 지향함으로써 해체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하고 나아가서 일탈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호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하겠음.

따라서 우리 충남에도 가출 청소년 통합지원기능을 가진 시스템 구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하여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신고, 접수를 돕고, 가출청소년과 가출청소년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 외에 현재 추진 또는 시행 계획으로 있는 청소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의 2001년 6월 현재 가출청소년은 남자 77명, 여자 166명, 합계 243명이고 이것은 전국에 비해서 1% 수준이며, 보호시스템의 구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계획중인 「청소년보호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임.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천안지역에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 운영중인 도의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 상담실을 연계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역간 정보의 공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시설을 중소도시까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현재, 운영 중인 "충남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의 「아산청소년 쉼터」와 선도보호시설인 공주에 「충남 여성 직업 보도원」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해서 가출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음.

앞으로 도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스템 구축 등 사후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는 예방적인 시책에도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2 : 인성교육 실시를 위한 방안

· 우리 충청남도 초등학생의 학력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력경진대회를 실시하면 상위권으로 돋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극소수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부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서천군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의 직위해제와 관련 직위해제가 교권침해인지 아니면, 교육당국의 정당한 처사라면 교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 또는 이해시킬 만한 논리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1세기는 열린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당국의 일거수 일투족이 공개될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년지대계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학력경진대회는 언어 사용능력, 수리탐구, 사회탐구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려고 하며, 그것은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해서 영재교육의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겠다 이러한 취지임.

또 하나 교육청에서는 부진아의 완전 해소와 학년별, 교과별 필수 학습 요소의 학업성취를 위하여 부진아를 지도하고 지도실명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한 교사에게는 당연한 대우를 해 드려서 도내 학생들의 학력을 올려야겠는 생각을 하고 있음.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 사진 게재와 관련하여 그것이 예술이냐, 아니냐이기 이전에 김인규는 교사이며,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함은 안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술가이기 이전에 교사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서 김인규 교사를 직위해제 시켰음.

직위해제 시킨 것에 대해서는 추호라도 후회는 없으며,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마땅히 직위해제를 당해야 하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이와 같은 일로 앞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교사에 대해서는 똑같은 적용을 시켜서 직위를 해제할 것임.

7. 최경섭 의원(태안군, 자민련)

■ 질문1 : 2002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방안

· 꽃박람회까지 불과 300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준비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며, 도로,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걱정임. 홍성 인터체인지에서 박람회장까지의 주 진입로 확장공사는 아직도 평균 공정율이 65%를 초과하지 못했음. 특히, 해안관광도로의 경우 사구보전 문제로 제때 착공하지 못해 공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참가유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제행사에 걸맞는 해외 및 국내업체의 참가도 조속히 결정하여야 함. 이러한 제반문제가 사전에 치밀한 검토아래 완벽하게 추진될 때 비로소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임. 지금까지의 꽃박람회 준비상황과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또한 영종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 인천항과 영목항을 운행하는 해상운송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와 함께 안면도 국제관광지 외자유치로 당초 계획했던 꽃박람회장의 사후 활용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할텐데 그렇다면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행사가 될 것임. 박람회 종료 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현재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총 공정 35%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토목공사는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는 유리하우스 건축을 완료하고 운영본부와 실내 전시관을 건축 중에 있음.

조경 공사와 박람회장 운영, 이벤트 행사, 참여 기업 협찬과 휘장 사업, 실내 전시관 연출 등도 세부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으며, 전시참가 유치는 국내외 111개 기관, 단체가 참가신청을 하거나 참가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69개 기관 단체와 협의 중에 있어, 목표로 하고 있는 30개 국 170여개 업체의 유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홍성IC에서 박람회장까지 주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다소 문제가 되었던 해안관광도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박람회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박람회 기간중 숙박 예상인원은 총 16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태안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 2만2,000여개의 객실을 활용할 계획임.

그리고, 인천항과 영목항간의 해상 수송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육상교통 보다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검토결과가 나와 영목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

박람회 이후의 활용계획은 주전시장인 꽃지지구는 대부분 임시시설로서 박람회 이후에는 철거할 예정이고, 부전시장인 수목원 지구는 꽃지지구와는 달리 영구시설 위주로 구성해서 유리하우스와 정원, 식물원 등은 산림휴양지와 자연교육장으로서 휴양림사업소에 편입하여 관리할 예정임.

기타 숙박시설과 도로, 편익시설은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안면도 관광휴양지로서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질문2 : 한서대학교의 항공대학 유치 방안

· 한서대학교에서는 항공대학을 설립키로 하고 항공대 활주로를 활용하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경비행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활주로가 들어서는 부지는 환경부의 사구지정 관심 지역으로서 지역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대다수 주민이 사구 보전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여론에 떠밀려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음. 이렇게 되면 꽃박람회시 경비행장 활용도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음.

본 의원은 한서대학교 항공대학 유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사구와 관련이 없는 인근 도유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한서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대 활주로 예정부지는 과거 사구 지역이었다가 유리원료인 규사를 채취하고 되메우기 작업을 한 지역임. 현재 환경부에서도 활주로 위치변경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해안사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환경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 마련되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3 : 서북부지역의 가뭄 대책

· 가뭄대책을 물으면 항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또한 수해 대책을 물으면 이번의 아픔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수 없이 들었음.

특히, 서산, 태안, 당진 등 서북부 지역은 상습 가뭄 지역으로 해마다 가뭄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서북부 지역의 항구적 가뭄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서북부 지역의 상습적인 가뭄극복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87년부터 석문, 이원, 중장, 대하 등 4개 지구 2,813ha의 농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 4,626억원의 75%에 달하는 3,457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4년 이후에는 인근지역의 가뭄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95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수리시설 개·보수, 그리고 저수지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이와 함께 2004년 완료 예정인 농촌용수개발 10개년 사업을 앞당겨 완료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수 차례 건의한 바도 있음. 앞으로 양수장비 확충, 저수지 준설사업, 암반관정 개발 등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가뭄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4 : 동서산업철도 추진 촉구

· 천안 성환에서 태안 안흥을 연결하는 120km의 동서산업철도는 지난 1994년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음. 이것이 곧 행정낭비 사례임.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이며, 거기에 소요된 시간은 얼마입니까? 충청남도에서 자랑하는 전국 제일의 시간관리 도라면 적어도 수립된 계획은 결실을 맺거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계획은 수립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동서산업철도 건설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본 사업은 성환에서 당진~서산~태안간 총 연장 98.4㎞ 추정 사업비가 1조 2,250억원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는 '99년 2월부터 8월까지 본 구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IMF이후 침체된 산업경기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음.

건설교통부에서도 '99년 12월 18일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해 6월에는 예산 삽교에서 분기하여 서산~안흥간 54㎞ 구간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제4차 국토 종합계획에 동서철도망 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추진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철도건설 당위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에 걸 맞는 국가 철도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논리기반을 통한 정책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질문5 : 도내 수출 대책

· 공산품의 경우 우리 지역의 수출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몇몇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것은 역으로 수출증진을 위한 도의 역할이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출 지원으로 작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출 구조가 지역경제에 보다 바람직한 모습일 것임.

대기업에서 수출한 금액을 도의 수출실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끼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임. 우리 도가 수출지원을 한다고 하면 자력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산품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것임.

수출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우리 도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이 170억 달러에 이르고, 전국의 4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수출은 7.6%에 불과한 12억5,000만불에 머무는 상황이었음.

항상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효과를 단기간 내에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지난해의 경우 국제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등 총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2,470만 3,000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도가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였음.

이 중소기업 수출증진은 12억5,000만불 중에 비록 2,470만불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를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통한 균형적인 수출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출지원시책과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그 동안 우리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서 지역기업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발굴하여 성과가 예측되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음.

가장 핵심적인 시책들은 역시 국제 유명 전시박람회에 참가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도내기업의 수출을 유도하는 그런 시책들을 펴 나가고 있음. 또한 지역 농특산물 수출을 위해서 올해 테스크포스 형태의 수출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10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 주는 「수출안정기금 제도」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제도」 등을 도입해서 적극 추진할 생각으로 있음.

이와 함께 중부 농축산물류센타의 수출 기능 강화를 통해서 수출물류 비용을 대폭 개선하고 농수산물 수출단지 확대와 국제인삼교역전, 통신판매, 유관기관 수출협의회 운영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질문6 :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장기 공석에 대한 대책

·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월 5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공석이 된 후 6개월이 지났음. 비록, 기구는 작을지라도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어떤 기관보다 크다고 할 것임 전염병, 수인성 병원균, 먹는 물, 수질오염, 대기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

아직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도지사께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기 때문인지, 아니면 도청에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인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지난 1월초부터 원장이 결원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이 연구원의 연구부장이 직무를 대리하면서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지금까지 원장을 임용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개방형 직위」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음.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임용시기와 방법 등 제도와 관련된 시행령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정비되는 대로 업무의 전문성과 경쟁력있는 적임자를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 모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음.

■ 질문7 : 유·소년 체육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 지난 5월 소년체전에서 우리 충남은 14위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두었음. 이는 단지 소년체전의 부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충남체육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으며, 도민들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음.

특히 전국체전 개최지로서 체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말았음.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참가한 이번 소년체전은 대표적 고비용 저효율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유소년 체육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한 육성종목을 단지화 하겠으며, 육성종목을 발굴해서 매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겠음.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사기진작책을 마련 하겠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국체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도 남은 100일 기간동안, 7월 1일이 D-100일입니다 마는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 육성하는 학교에 정말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第32節 第152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2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7. 5(목) ~ 7. 7(토), 3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7. 5(목)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	
11:30	행 자 위	1.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 자 위	〈현장방문〉 ○ 자연사박물관건립(공주 반포)	
7. 6(금) 11:00	행 자 위	1. 자연사박물관건립추진현황보고	
11:00	교 사 위	1.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 2.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농 경 위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현장방문〉 ○ 강경고수부지조성공사(논산 강경)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7. 7(토)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 4.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9		
조례안	6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3	1. 제1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의원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교육사회위원회)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7. 5, 11:00)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이한식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로부터 일본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 방문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7. 7, 11:00)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 1건과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5건을 포함,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09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	도지사 (01. 6. 1)	교사위	○유관순열사의 애국·애족정신을 현대 여성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 그 얼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은 유관순상위원회에 위탁관리하며 위탁에 따른 사업비를 道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001. 7. 7	2001. 7. 9	수정
31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01. 6. 30)	행자위	○정원 총수를 2,895인으로 함(53명 증원) -소방직 52명 : 6개 소방서 소방차, 구급차 운영 -지방위생원 10급 1명 : 충청소방학교 교육생 급식 관리 ○한시 정원 4인을 삭제함 -민주화 보상업무 : 2명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추진 : 1명 -전국체전기획단장 : 1명	2001. 7. 7	2001. 7. 9	원안
314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01. 6. 30)	행자위	○기존의 수수료중 원가보상율 및 수수료율이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종목을 현실화하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요율 조정 및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의 수수료 기준과 감면사항을 정함.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대상의 요율 조정 및 신설	2001. 7. 7	2001. 7. 9	수정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16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6. 30)	교사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2001. 7. 7	2001. 7. 9	원안
317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6. 30)	교사위	○船名 변경 -병원선 : 「충남호」→「충남501호」 -쾌속후송선 : 「충남호」→「충남506호」 ○정박항 변경 -병원선 : 「대천시」→「보령시」 -쾌속후송선 : 「보령군」→「보령시」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관련 조례로 따로 정하는 조항을 삭제	2001. 7. 7	2001. 7. 9	원안
318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6. 30)	교사위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법률명칭을 변경함.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대상자인 일반환자의 정의를 현재의 관련 법령 조문과 조례 조문과 일치시킴	2001. 7. 7	2001. 7. 9	원안

第33節 第153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3회 임시회는 2001년도 도와 교육청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8. 8(수) ~ 8. 17(금),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8. 8(수)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	
13:30	운 영 위	1. 제15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8. 9(목) 11:00	행 자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정보실소관) 2.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교 사 위	〈현장방문〉 ○ 대건고등학교, 성지원(논산)	
11:00	농 경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소방안전본부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8. 10(금) 11:00	행 자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계룡출장소소관) 2.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공보관실소관) 3.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감사관실소관)	
	교 사 위	〈현장방문〉 ○ 금산산업고등학교, 향림원(금산) ○ 부여공립유치원, 노인전문요양원(부여)	
11:00	농 경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농업기술원소관)	
	건 소 위	〈현장방문〉 ○ 경부고속전철건설현장(연기)	
8. 11(토)		의 정 자 료 수 집	
8. 12(일)		휴 회(공 휴 일)	
8. 13(월) 11:00	행 자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체전준비기획단소관) 2.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충청남도체육회소관)	
11:00	교 사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복지환경국소관) 2.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여성정책관실소관)	
11:00	농 경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경제통상국소관) 2.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 소 위	〈현장방문〉 ○ 지방도유지보수사업및지방도확·포장사업현장 (청양, 서산, 태안)	
8. 14(화) 11:00	행 자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공무원교육원소관) 2.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총무과소관)	
11:00	교 사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교육청소관) 2.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농 경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소관)	
	건 소 위	〈현장방문〉 ○ 지방도유지보수사업현장(아산)	
8. 15(수)		휴 회(광 복 절)	
8. 16(목) 11:00	행 자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자치문화국소관)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양대학소관)	
	농 경 위	의 정 자 료 수 집	
11:00	건 소 위	1.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교통국소관)	
8. 17(금) 11:00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3.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7		
조례안	12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1	1.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기 타	4	1. 5분발언 신청(이한식의원) 2.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001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추진상황보고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8. 8, 11:00) 2001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다.

○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8. 17, 11:00)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12건,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15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 6. 30)	행자위	○수도권내 인구집중시설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도유재산을 대부하여 공장을 건설할 경우 대부요율 대폭 인하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시 청문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대부료를 연체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2001. 8. 17	2001. 8. 18	원안
319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 7. 30)	행자위	○여성 및 IT분야 전공 교수를 폭 넓게 위촉하기 위해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상한 인원을 늘림 -정책자문단 전체 구성인원 : 50인내외 → 60인 이내로 확대 -분과위원회 구성인원 : 3~6인 내외 →10인 이내로 확대	2001. 8. 17	2001. 8. 18	원안
321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 7. 30)	행자위	○2단계 3차년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함 -자치문화국장의 분장사무 : "행정능률 향상" 업무를 기획정보실장 분장사무로 조정함	2001. 8. 17	2001. 8. 18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22	충청남도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7. 30)	행자위	○상위 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 및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삭제,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함.	2001. 8. 17	2001. 8. 18	원안
323	충청남도도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7. 30)	행자위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감면대상에 추가함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감면범위를 확대함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원활한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세제를 지원함	2001. 8. 17	2001. 8. 18	원안
324	충청남도소비자 보호조례중개정 조례안	도 지 사 (01. 7. 30)	농경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정책기획정보실장에서 기획정보실장으로 변경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매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함.	2001. 8. 17	2001. 8. 18	수정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25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 7. 30)	농경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시 현지실사를 생략함 ○서류심사만으로 자금지원 결정이 곤란하여 현지실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자금지원 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만 현지실사를 하는 단서조항 신설	2001. 8. 17	2001. 8. 18	원안
326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 7. 30)	교사위	○자연공원 관련업무가 당초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道의 담당부서도 건설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함	2001. 8. 17	2001. 8. 18	원안
327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 7. 30)	교사위	○위원회 위원수를 관계 법령 개정으로 당연직을 2인 → 5인으로, 위촉직을 7인 → 15인으로 확대함 ○국토·도시계획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로 추가함 ○ 환경보전대상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해 오던 환경보전 대상 심사기능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에 흡수함	2001. 8. 17	2001. 8. 18	수정
328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1. 7. 30)	교사위	○환경보전대상 심사위원회에서 하던 환경보전대상 심사기능을 법령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토록 함	2001. 8. 17	2001. 8. 1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29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7. 30)	교사위	○자연공원 관련 업무가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를 법령 개정으로 바뀐 사항에 맞게 변경함 -국민학교→초등학교, 방위병→공익근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자연공원관련업무 이관에 따라 내무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2001. 8. 17	2001. 8. 18	원안
33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1. 7. 30)	교사위	○신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폐지, 현대화시범학교 건립을 위한 위치변경에 따른 학교명을 신설·삽입·삭제함 -학교 신설 : 2개교(유치원 1, 초등 1) -학교폐지 : 4개교(유치원2, 초등2) -학교위치 변경 : 2개교(유치원 1, 초등 1)	2001. 8. 17	2001. 8. 18	수정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20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 추가발행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1. 7. 30.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1. 7. 3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8. 17)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8. 18.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2001년 즉석식복권 발행승인액 200억원을 8월까지 전액 발행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중 발행할 전국자치복권을 추가로 승인 받아 적립금 조성 목표를 조기 달성코자 함.

□ 주요내용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1특별시, 6광역시, 9도)
○ 복권종류 : 전국자치복권 (즉석식)
○ 추가발행규모 : 300억원
※ 2001년 즉석식 총발행규모 500억원 (기발행승인 200억원)
○ 발행기간 : 2001. 8 ~ 12월
○ 발행조건 : 액면금액(매당) 500원, 1등당첨금 50백만원(연식 1억원)
○ 예상수익금 : 약 40억원 (발행액의 13%)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 추가발행계획서

1. 합 계

(단위:백만원)

자치단체명	발행액	발행매수 (백만매)	발행기간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비고
충청남도 등 16시도(공동)	30,000	60	2001. 8 ~ 12월	24,000	4,056	

2.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액면금액	발행매수 (백만매)	발행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계				60	30,000	24,000	4,056
즉석식	8 ~ 12월	5회	500원	60	30,000	24,000	4,056

3. 행사기념복권 발행계획

가.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소 요 예 산			부족예산확보계획
		계	확보가능액	부족액	
-	-	-	-	-	-

나. 복권발행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액면금액	발행매수	발행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	-	-	-	-	-	-	-
-	-	-	-	-	-	-	-

4.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Ⅲ. 5分 發言 要旨

1. 이한식 의원(예산군, 자민련)

■ 도립 의료원 운영 및 발전방향 관련

· 도내 4개 의료원에서 작년도 경영실적에 많게는 15억원에서부터 적게는 5억원에 이르기까지 총 4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도가 된 바도 있음.

45억원의 손실이라는 것이 도 의료원의 특성상 진정으로 도민과 환자, 고객들에게 봉사된 금액이라면 아까울 것 없는 금액임.

(의료기관에서의 손실이란 반대로 이익을 받는다면 환자들이기 때문)

도내 의료원 중에서 전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경영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원장제를 도입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병원운영관리체제가 의료진과 관리체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 면에서 소홀한 점도 많았음. 경영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원장제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도립병원이 일반 병·의원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일반 병·의원에서는 기피하는 수술 면에서, 수지 면에서, 관리 면에서 어려운 것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바 이러한 부분을 도립병원이 담당을 해야 함.

일반 병원이 기피하는 부분, 일반 병원이 투자를 기피하는 부분, 진료를 기피하는 부분을 도립병원이 담당해서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예방과 진료를 겸해서 병·의원과 차별된 보건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함.

지금까지 생각해 본 여러 가지 문제의 정황을 볼 때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4개 도립병원의 운영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며, 그 구조나 조직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병원이라는 경영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영진단을 세밀하게 받아봐야 할 것임.

병상 수에 필요한 의료진은 적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병상 수에 비해서 경영관리직의 수는 정당한가를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경영을 해야 될 것임. 앞으로 도립병원과 시·군 보건소는 이러한 차원에서 도의 수익사업을, 도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립병원이 아니고, 진실로 도민들의 건강과 진료를 위해서 설립된 도립병원이라면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경영관리에 임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림.

第34節 第154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4회 임시회는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9. 12(수) ~ 9. 20(목), 9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9. 12(수)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3:30	운 영 위	1.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제15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4:00	교 사 위	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00	건 소 위	1.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 13(목)	행 자 위	1. 현장방문 - 제82회전국체전준비상황점검(천안)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상반기사업추진상황보고(꽃박람회조직위원회소관) 2.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보고	
	건 소 위	의 정 자 료 수 집	
9. 14(금)	행 자 위	의 정 자 료 수 집	
	교 사 위	의 정 자 료 수 집	
	농 경 위	의 정 자 료 수 집	
	건 소 위	의 정 자 료 수 집	
9. 15(토)		의 정 자 료 수 집	
9. 16(일)		공 휴 일	
9. 17(월) 11:00	예결특위 (제 1 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교육청)	
9. 18(화) 10:00	행 자 위	1.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예결특위 (제 2 차)	1.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교육청)	
9. 19(수)	각상임위	※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참관(이천)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 20(목) 10:00	본 회 의 (제 2 차)	1.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 7. 미합중국에대한테러공격규탄결의안 8.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3		
조례안	4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1	1.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결의안	1	1. 미합중국에 대한 테러공격규탄 결의안	
건의안	1	1.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기 타	6	1. 5분발언 신청(강태봉·박찬중의원) 2.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9. 12, 11:00) 2001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강복환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이진환(천안), 윤석우(공주), 이준우(보령), 강태봉(아산), 이복구(서산), 송중빈(논산), 박찬중(금산), 강화섭(연기), 유병기(부여), 박영조(서천), 우지명(청양), 전용설(홍성), 김중한(예산), 최경섭(태안), 정용해(당진), 송민구(비례), 김동선(비례)

○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9. 20, 10:00) 교육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3건,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1건과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 1건, 미합중국에대한테러공격규탄결의안 1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3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1. 9. 5)	교사위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함 -지방자치단체이외 者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2001. 9. 20	2001. 9. 20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공유재산심의 범위 확대 : 공정 50% 이상의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확정 -공유재산심의 생략 : 최소 분할 면적 미달 토지 및 대장가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 폐지 및 용도 변경의 경우			
335	충청남도민봉사실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9. 8)	행자위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업무재편 사항을 반영하고 임기를 정하지 않은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하여 위원의 위·해촉 근거를 명확히 함. -도민봉사실장을 "민원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함.	2001. 9. 20	2001. 9. 20	원안
339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01. 9. 8)	농경위	○2종어항의 지정·변경, 해제 및 어항시설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어항정책심의회 설치 근거인 어항법 제5조의 삭제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	2001. 9. 20	2001. 9. 20	원안
341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01. 9. 12)	본회의	○도의회의장 직인 규격를 1변이 3.0㎝로 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규정을 명확히 정하며, 의회사무처장의 직인을 현행 사무관리규정에 맞도록 함	2001. 9. 20	2001. 9. 20	원안

o 결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42

미합중국에 대한 테러공격규탄 결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9. 18.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9. 20)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9. 20.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 제안이유

2001년 9월 11일 미합중국 뉴욕과 워싱턴 D.C의 주요시설 테러공격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존엄한 인명피해와 귀중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우리 의회는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앙정부는 우리나라의 안보체제와 국민경제 및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미합중국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

우리의회는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합중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의 국방성 건물 등에 대한 反인륜적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무차별 인류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이제 국제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시대로서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고 서로 공존 공영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명심하여 어떠한 형태의 테러행위도 강력히 반대한다.

셋째, 이번 테러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재외국민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 우방인 미합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넷째, 중앙정부는 우리나라의 굳건한 안보체제와 완벽한 테러대비책 확립은 물론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여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1년 9월 2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43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9. 2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9. 20)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9. 20.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기획예산처, 국회

□ 제안이유

○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쌀값대책에 대한 농촌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 최근의 농촌 분위기는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됨에도 자칫 쌀 농사 포기 등 양정의 틀을 훼손시킬 염려가 있으며

○ 쌀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농촌경제의 붕괴가 우려되어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우리 농민들은 90년만의 극심한 봄 가뭄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5년연속 풍년농사를 이루었으나 과잉공급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연히 풍년농사를 기뻐해야 하나 지금의 현실은 농민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숨 죽이며 울분을 속으로 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 작년과 비슷한 쌀 생산량 650만석이 예상되고 있고 작년도 재고량 140만석과 합쳐지면 과다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과다 보유상태가 990만석에 이르러서 FAO권장량에 390만석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초과 공급상태에서는 쌀가격이 하락되면서 농민의 수입원이 고갈되어 농촌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도 예상되는 한편, 쌀산업이란 것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8. 28일 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농협 수매량 확대, 정부미 공매 최소화, RPC 지원강화, 수탁판매제도 도입 등 가격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농촌현장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미 재고처리, 쌀소비촉진,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RPC조합의 경우 계절진폭(1.3%)이 지원이자율(3%)을 밑돌아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농업현장에 농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정부대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RPC 경영개선을 위해 정부산물벼 수매보관료 지급방안 마련과 현행 산업용으로 된 전기요금을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30억원까지 지원해야 하며

둘째, 수매·건조·가공·보관·판매방식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수분율을 16%로 상향 조정하고 RPC의 시설보완을 위해 개소당 1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쌀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식품용 쌀 공급 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고

넷째, 중앙정부는 원원종만 관리하고 기타 종자생산·보급은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양정제도의 보완과

다섯째, 고품질 기능성 쌀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여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을 지키고, 농민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여 농촌이 발전 할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1년 9월 2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Ⅲ. 5分 發言 要旨

1. 강태봉 의원(아산시, 자민련)

■ 온양 민속박물관 운영비 지원

·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1,000여회의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세계사속에 5천년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며 단일민족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세 교육에 힘써 온 조상들의 지혜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함.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며 민족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더욱 갈고 닦아 이를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또한 당연한 순리이며 의무임.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조상의 숨결이 면면히 살아 숨쉬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고장 아산의 온양민속박물관임.

지난 1978년 건립된 온양민속박물관은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현재까지 총 2천만명이 다녀간 관광문화의 산실이며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 역사와 조상의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왔음.

이곳에는 조상의 숨결이 배어나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비롯하여 선조들의 생활사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2만5,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으며 이중 400여 점이 넘는 유물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중요 민속자료이기도 함.

2만7,000여 평의 대지에는 귀중한 자연 조경수와 석물, 민속신앙을 이룬 장승과 너와집, 방앗간 등이 세워져 귀중한 역사의 현장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며, 잊혀져 가는 전통혼례의 모습을 재현하고 직접 혼례를 거행할 수 있는 곳으로 이미 3,000여 쌍이 전통혼례를 치뤄 민족의 숨결을 느끼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의 보고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온양민속박물관이 최근들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으며, 모기업인 계몽문화재단의 부도로 인해 연간 1억원 상당의 지원이 중단돼 박물관마저 부도 직전에 처해있는 실정이라 그동안 애지중지 보관해 온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 빛을 보지 못하고 창고에서 먼지에 뒤덮혀 있는가 하면 관리도 소홀해져 유물에서 곰팡이가 돋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물은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그야말로 돈으로 살 수도, 다시 이룰 수도 없는 귀중한 것이며 조상의 얼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로 5천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선조들에 대한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인근의 지자체는 유물 보관의 심각성에 안타까움을 동감하며 각종 지원약속을 하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바 "자식 끼니 굶기면 도둑질 하지 않는 부모 없다" 라고 했는데 유물이 썩어가는데 지원약속에 유혹당하지 않을 박물관은 아마도 없을 것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조상의 맥박이 뛰노는 우리 문화의 보고인 온양민속박물관의 장·단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강구

· 지난 9월 4일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와 휴경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대책도 있었음.

이에 농민단체에서는 쌀농업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또한 현실성이 없는 미봉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남북통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시에 쌀은 식량안보의 주된 무기가 되는 것임.

작금의 쌀 과잉이 5년 연속 풍년농사를 계속 장려해 오면서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쌀 대책이 없었던 정부의 무능함과 무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또한 농민이 정부의 정책 실험대상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던 일은 농민 홀대의 농정실패에 그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농어가 부채 탕감이라는 감언이설의 기만정책으로 농민을 우롱하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농가의 유일한 소득원인 쌀 생산마저 포기하라니 이는 말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살농정책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때마침 집권 여당의 최고 의원이 남한의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인바 이는 참으로 농민의 희생을 볼모로 하는 현정부의 속마음이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음.

우리 모두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건데 끼니도 해결 못하는 결식아동이 무려 16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과 정부 지원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그 저소득층들이 우리 도내에는 9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임.

만약 정부가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는 4천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임.

반 농민적인 현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농업도로서의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쌀 소득의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임.

이에 따라 소득감소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생산기반의 붕괴로 식량안보에 위험이 초래되며 농민이 살아갈 터전마저 없어진다는 최악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60만 우리 도 농민들과 함께 쌀 증산포기 정책과 추곡수매 가격의 동결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살농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함.

第35節 第155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5회 임시회는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10. 22(월) ~ 10. 31(수),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10.22(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3:30	운 영 위	1. 제15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10:30	농 경 위	1. 쌀수매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	
10. 23(화)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정보실소관)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00	교 사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환경국소관)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여성정책관실소관) 3.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농림수산국소관)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1.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10. 24(수)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공무원교육원소관)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룡출장소소관)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경제통상국소관)	
10:00	건 소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 25(목)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관실소관)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소관)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00	교 사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청양대학소관) 3.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소관)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10. 26(금)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문화국소관)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행자위소관)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교 사 위	1. 현지방문 - 연기군 하수종말처리장	
11:00	농 경 위	1. 2002년도안면도국제꽃박람회추진상황보고 (꽃박람회조직위원회)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방안전본부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0. 27(토)		의 정 자 료 수 집	
10. 28(일)		공 휴 일	
10. 29(월) 11:00	예결특위 (제 1 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 30(화)		휴 회	
10. 31(수)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10.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1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1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7		
조례안	9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1	1.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의안	1	1. 쌀수매가격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기 타	6	1.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6.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10. 22, 11:00) 2001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심대평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이진환(천안), 윤석우(공주), 이준우(보령), 강태봉(아산), 이복구(서산), 송중빈(논산), 박찬중(금산), 강화섭(연기), 유병기(부여), 박영조(서천), 우지명(청양), 전용설(홍성), 김중한(예산), 최경섭(태안), 정용해(당진), 송민구(비례), 김동선(비례)

○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10. 31, 11:00) 충청남도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2건,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30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1. 7. 30)	교사위	○과외교습의 금지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처벌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률의 제명 및 개인과외교습 관련사항을 반영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조례제명 변경 :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2001. 10. 31	2001. 10. 31	원안
336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9. 8)	교사위	○조례 제정근거「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도록 개정 보완함 -선임직 이사 추천대상을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	2001. 10. 31	2001. 10. 31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도지사는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함.			
337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9. 8)	교사위	ㅇ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내용중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주체, 입주인원 등이 관계 법령과 상충되어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함.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함.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인원수를 관계 법령에 맞게 조정함	2001. 10. 31	2001. 10. 31	수정
338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9. 8)	교사위	ㅇ호소수질관리법이 수질환경보전법에 흡수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의 개정된 내용과 일치시킴. -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의 근거 법령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함. -합병정화조, 간이오수정화조설치사업을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 통합함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사업을 축산 폐수처리시설로 통합함.	2001. 10. 31	2001. 10. 31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40	충청남도재해영향 평가조례안	도 지 사 (01. 9. 8)	건소위	○지방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심의절차 등을 조례로 정함 -재해영향 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하고, 중앙 재해영향평가 대상규모의 50/100이상으로 함 -변경 사업계획의 면적이 협의결과 통보시 면적보다 3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및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 협의함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결과대로 이행 않는 경우 공사중지를 명함.	2001. 10. 31	2001. 10. 31	원안
344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10. 9)	행자위	○일반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근로자와 공무원간 형평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001. 10. 31	2001. 10. 31	원안
345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10. 9)	행자위	○현행 금리인하에 맞추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이자율을 인하함 -상·하수도사업 : 연리 6.5% → 4.5% -여타 사업 : 연리 7.5% → 5.5%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	2001. 10. 31	2001. 10. 31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46	충청남도지방공사 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10. 9)	행자위	○공기업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민간위탁 근거 신설 -병원운영 수탁자격을 의료법 또는 사립학교법, 대학 설립 운영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법인 및 단체로 함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2001. 10. 31	2001. 10. 31	원안
348	충청남도자연환경 보전조례안	도 지 사 (01. 10. 9)	교사위	○자연환경보전법령에서 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등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조례를 제정함.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매 5년마다, 매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함. -멸종위기에 있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동·식물을 『道 관리야생동·식물』로 지정·보호함. -생태계보전 지역에서의 훼손한 자는 5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2001. 10. 31	2001. 10. 31	원안

ㅇ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49

쌀 수매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10. 22.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1. 10. 22)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10. 22.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기획예산처, 국회

□ 제안이유

ㅇ 그동안 정부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임시 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농촌현장의 반발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ㅇ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쌀농사의 포기와 농민들의 아픔은 더욱 가중 될 것이며,

ㅇ 정부에서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의 뜻을 모아 제안함.

쌀 수매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5년연속 대풍속에 한창 수확기를 맞이하면서, 금년산 쌀 수매가 하락으로 일선 농민들은 풍년농사의 큰 기쁨도 잊은 채 과잉생산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을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할 때, 농민들의 아픈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절망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쌀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산지 쌀 가격이 계속 하락되는 상태에서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과 희망이 일시에 무너지고, 농촌경제가 붕괴될 위협마져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쌀 산업 육성대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있는 결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몇차례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 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 및 소비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농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농업도로서 농민들과 항상 함께해 왔으며,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일동은 정부가 조속히 쌀 산업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쌀값 안정기금을 신설하고, 농협 시가 수매 400만석과 관련 수매가격을 최소 57,760원(정부수매가 2등급 수준)으로 반드시 책임지고 수매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쌀값 대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작년 수매가 수준의 쌀값 보장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셋째, RPC 금융 비용절감 및 경영 합리화 대책을 긴급 마련하고, 쌀값 계절진폭 8%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쌀 산업 안전 중장기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섯째, 농협 RPC 자체수매가를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정부가 상기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여 농촌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 소득원인 쌀값 안정대책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1년 10월 22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第36節 第156回 定例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 이번 정례회는 도와 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11. 20(화) ~ 12. 19(수), 3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1. 11. 20(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충청남도예산안제출에대한도지사연설 3. 200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대한 교육감연설 4.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00	운 영 위	1.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13:0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	
11. 21(수) 10:3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실)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청양대학) 2. 현지확인 - 홍성교육청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13:00	농 경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충남테크노파크. 아산)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산)	
	건 소 위	1. 현지확인 - 갈산서부국지도확포장공사현장(홍성) - 와룡천정비사업현장(홍성) - 부석서부국지도확포장공사현장	
11. 22(목)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천안의료원)	
	교 사 위	1. 현지확인 - 화장장(홍성) - 위생쓰레기매립장(보령)	
	농 경 위	1. 현지확인 - 당진고대RPC(당진) - 석문국가산업단지(당진)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천안소방서) 2. 현지확인 - 꿈의궁전화재현장(천안)	
11. 23(금) 10:30 14:0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홍성의료원)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홍성군)	
	교 사 위	1. 현지확인 - 행담도오폐수방수관련(당진) - 충남예술고등학교(천안)	
10:00	농 경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 태안)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왕진교가설공사현장(부여)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현장(부여)	
11. 24(토) 10:0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공보관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감사관실)	
10:30	교 사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	
10:00 12:00	농 경 위	1. 200년도행정사무감사(충남농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 25(일)		1. 의정자료수집	
11. 26(월) 10:30 14:0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총무과)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체전기획단, 충남체육회)	
10:30	교 사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 천안)	
11:00 14:00	건 소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운수연수원)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공주소방서) 3. 현지확인 - 칠갑산광장터널조성사업현장(청양)	
11. 27(화) 10:30 14:0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충남발전연구원)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룡출장소)	
10:00 14:00	교 사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여성정책개발원)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여성정책관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보건환경연구원)	
09:00	농 경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부여토마토시험장)	
14:00	건 소 위	1. 현지확인 - 장항서천국지도확포장공사현장(서천)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논산소방서)	
11. 28(수) 10:0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공무원교육원)	
10:00	교 사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교육청)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농림수산국)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충남신용보증재단(아산)〕	
	건 소 위	1. 현지확인 - 봉황천정비사업현장(금산) - 음대교가설공사현장(금산)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 29(목) 10:3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치문화국)	
10:00	교 사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교육청)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원)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	
11. 30(금) 10:3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충청남도장학회)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실)	
10:00	교 사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교육청)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경제통상국)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소방안전본부)	
12. 1(토) 10:30	운 영 위	1. 대한민국충청남도의회와호주연방남호주주의회간교류협정체결안 2.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11:00	본 회 의 (제2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2.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대한민국충청남도의회와호주연방남호주주의회간교류협정체결안	
12. 2(일)		공 휴 일	
12. 3(월) 10:30	본 회 의 (제3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2. 4(화) 10:30	본 회 의 (제4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2. 5(수) 11:00	행 자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기획정보실소관) 2.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공보관실소관)	
10:30	교 사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복지환경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2년도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12. 6(목) 11:00	행 자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자치문화국소관)	
10:30	교 사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 (여성정책관실, 청양대학소관)	
11:00	농 경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1. 2002년도예산안(소방안전본부소관)	
12. 7(금) 11:00	행 자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전국체전기획단소관) 2.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총무과소관)	
10:30	교 사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1.제3회추경예산안(건설교통국,소방안전본부소관)	
12. 8(토)	행 자 위	1. 의정자료수집	
	교 사 위	1. 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11:00	건 소 위	1. 2002년도예산안(건소위소관 계수조정)	
12. 9(일)		공 휴 일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2. 10(월) 11:00	행 자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소관) 2.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 (행자위소관계수조정)	
10:00	교 사 위	1.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 (교사위소관계수조정)	
11:00	농 경 위	1. 당진항분리지정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2. 2001.제3회추경및2002년도예산안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2년도예산안(건소위소관계수조정)	
12. 11(화) 11:00	예결특위 (제 1 차)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도청)	
12. 12(수) 11:00	예결특위 (제 2 차)	1. 2002년도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도청)	
12. 13(목) 11:00	예결특위 (제 3 차)	1. 2002년도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교육청)	
12. 14(금) 11:00	예결특위 (제 4 차)	1. 2002년도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도청 및 교육청)	
12. 15(토) 10:30	농 경 위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 채택의건	
11:00	본 회 의 (제 5 차)	1.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당진항분리지정을위한건의안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	
13:00	건 소 위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2. 16(일)		공 휴 일	
12. 17(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1:00	교 사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CB)발행지급보증동의안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12. 18(화) 11:00	행 자 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현지방문 - 대전~진주간고속도로현장	
12. 19(수) 10:30	운 영 위	1. 제15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본 회 의 (제6차)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3.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22		
조례안	2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4	1. 200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2	1.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대한민국충청남도의회와 호주연방남호주주의회간교류협정체결안	
건의안	2	1. 당진항분리지정을 위한 건의안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철회 건의안	
의견 청취안	1	1. 대전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기 타	11	1.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02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대한 도지사 연설 4. 200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대한 교육감 연설 5.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7.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및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8.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손재탁·박영조·이준우·강태봉·박찬중·윤석우의원) 10.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정순평·송중빈·정선홍·최경섭·유병기의원) 11. 5분발언 신청(전영환의원)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11. 20, 11:00) 2001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연설을 들었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 제1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1. 12. 1,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도와 교육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대한민국 충청남도의회와 호주연방 남호주주 의회간 교류협정 체결안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이진환(천안), 윤석우(공주), 이준우(보령), 강태봉(아산), 이복구(서산), 송중빈(논산), 박찬중(금산), 한소환(연기), 유병기(부여), 박영조(서천), 우지명(청양), 전용설(홍성), 김중한(예산), 최경섭(태안), 정용해(당진), 송민구(비례), 김동선(비례)

○ 제1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2001. 12. 3, 10:30)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손재탁(공주), 박영조(서천), 이준우(보령), 강태봉(아산), 박찬중(금산), 윤석유(공주)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2001. 12. 4, 10:30)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틀째를 맞아 정순평(천안), 송중빈(논산), 정선홍(청양), 최경섭(태안), 유병기(부여) 의원 등 5인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2001. 12. 15, 11:00) 도와 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과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한 건의안 등 2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5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2001. 12. 19, 11:00)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1건, 대전광역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5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1.11.26)	교사위	○여성공무원의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 등을 조정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90일간의 출산 휴가를 허가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함 -임신기간중 매월 1일 여성 보건휴가 허가하고,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허가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춰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조정함.	2001. 12. 19	2001. 12. 19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57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도 지 사 (01.11.29)	행자위	○주민의 교육시설 이용편의 제공과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원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조례를 제정함 -시설 사용허가 대상을 교육원 교육과정 이외의 시설이용 희망자 등으로 정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하되, 임차목적이 국가 또는 도의 시책에 반하는 사항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에 위해되는 단체·기관·기업 등의 행사 및 교육, 시설물의 개·보수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 함.	2001. 12. 19	2001. 12. 19	수정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58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1. 11. 29.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01. 12. 19)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12. 19.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우리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판매하여 자치단체의 공익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코자함.

□ 주요내용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1특별시, 6광역시, 9도)
○ 복권종류 : 전국자치복권
○ 발행기간 : 2002. 1 ~ 12월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형식 : 3종 (즉석식, 추첨식, 인터넷)
○ 발행규모 : 1,050억원 (즉석식 500, 추첨식 400, 인터넷 150억원)
○ 액면금액 : 즉석식·인터넷 500원/매, 추첨식 2,000원/세트
○ 예상수익금 : 약 135억원 (판매액의 18%)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서

1. 합 계

(단위:백만원)

자치단체명	발행액	발행매수 (백만매)	발행기간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비 고
충청남도 등 16시도(공동)	105,000	150	1 ~ 12월	74,500	13,454	

2.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발행형태	발 행 기 간	발 행 회 차	액면금액	발행매수 (백만매)	발 행 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계				150	105,000	74,500	13,454
즉석식	1 ~ 12월	7회	500원	100	50,000	40,000	5,320
추첨식	1 ~ 12월	1회	2,000원	20	40,000	24,000	5,352
인터넷	4 ~ 12월	5회	500원	30	15,000	10,500	2,782

3. 행사기념복권 발행계획

가.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소 요 예 산			부족예산확보계획
		계	확보가능액	부 족 액	
-	-	-	-	-	-

나. 복권발행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액면금액	발행매수	발행액	예 상 판매액	예 상 수익금
-	-	-	-	-	-	-	-
-	-	-	-	-	-	-	-

4.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의안번호 360

대한민국충청남도의회와 호주연방남호주주의회간 교류협정체결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12. 1.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1. 12. 1)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 제안이유

○ 호주연방 南호주州의회는 우리도의회와 교류협력증진을 위하여 2001. 7. 18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교류협정체결의향서에 서명한바 있으며,

○ 금번 동 州의회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우리 도의회 대표단이 州의회 방문시 양의회간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양 道·州가 보다 더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주간 각 분야의 교류를 적극 지원

○ 양 의회의 정기적인 교류 실시

○ 지역정보 및 자료의 정기적인 교환

대한민국충청남도의회와 호주연방남호주주의회간 교류협정서안

대한민국 충청남도의회와 호주연방 남호주주의회(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양 道와 州가 자매결연 관계를 바탕으로, 2001년 7월 18일 체결한 의향서의 제3조에 의거하여, 상호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1. 양 당사자는 상호 지역간 자매결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 문화, 교육, 경제, 통상 등의 분야에서 상호간 교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양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인력교류를 실행하며 인력교류를 실행함에 있어 시기, 인원수, 경비부담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양 당사자는 상호간 이익추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 지역에 관한 정보교환을 실행하도록 노력한다.

본 협정서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2통을 작성하여 2001년 12월 10일 남호주 의사당에서 서명되고 시행된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의회　　호주연방 남호주 의회
의장 김재봉_____　　하원의장 존 오스왈드_____

○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62

당진항분리지정을 위한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12. 1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01. 12. 15)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12. 15.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국회

□ 제안이유

○ 예로부터 대중국교역 관문의 해상중심지로 『唐津』『漢津』지명 사용

○ 국내 28개 무역항에 비해 입지조건이 충분하나 지역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아 200만 도민의 자존심 문제로 대두

○ 입·출항선박으로 발생되는 직·간접비용의 타지역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큰 실정으로

○ 「당진항」이라는 브랜드 효과와 경제적가치 제고는 물론 항만업체 불편해소와 낙후된 지역 관련 산업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당진항분리 지정을 위한 건의안

역사적으로 통일신라시대부터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 라는 지역과 위치가 바로 이곳 지명인 당진(唐津)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당진항」은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대중국 무역과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항구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여 제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당진지역은 서해안의 신산업지대 개발과 더불어 한보철강, 고대공단, 당진화력 등 3~5만톤급 7선석의 항만이 개발 완공되어 연 1,18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국제규모의 무역항으로써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 33선석을 개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같이 훌륭한 항만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내 28개 무역항중 지역이름「당진항」을 쓰지 못하고 「평택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며, 지역이름을 사용치 못하는 유일한 항만으로써 200만 충남도민의 자존심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보철강, 고대공단부두는 평택항, 당진화력부두는 대산항으로 분리되어 관리권 이원화로 인천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4개 자치단체를 오가며 업무처리의 불편함과 항만 운송사업, 선박입항시 발생되는 직·간접비용의 흐름을 차단한 것으로 1척당 17,535천원(3천톤급)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써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진항 분리지정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집단시위 등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 접근으로 일관해온 이유는「당진항」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인 지역간 균형개발을 중앙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으며, 자칫 이기주의의 발로나 지역간 대결로 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 입니다.

이에 우리도 의회의원 일동은 국가경쟁력은 어느 한지역의 희생을 통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주시하며, 당진항 분리지정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삼국시대부터 해상을 통한 대중국교역의 관문인『唐津』 지명, 특히 漢津은 조선시대 내포와 한양을 잇는 해상 운송의 중심지 이었으며,

둘째, 국내 28개무역항중 유일하게 타도의 지명 사용은「주민, 관할지역, 자치권」지방자치의 필수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으로, 당진군 수역과 항만시설을 타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자치권 침해입니다

셋째, 당진지역은 수심, 접근성, 항로 거리, 안전성, 공단면적, 개발비용 등 선진항만 조성의 유리한 여건임에 틀림없으므로, 분리지정시 항만 운영의 효율성에 전혀 지장없다는 중앙의견과 국내·외적으로 같은 수역내 분리 성공적 운영사례를 보면 국내는「군산-장항항」, 국외로는 미국「뉴욕-뉴저지항」, 일본 동경만내에「도쿄항-가와사키항-요코하마항-지바항」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넷째,「당진항」이라는 브랜드 효과의 경제적 가치 제고는 물론 미지정으로 항만업체 불편과 지역내 관련산업 육성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으므로, 당진항 분리지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진항지정은 평택쪽 수역의 항만시설을 떼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당진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수역과 항만시설의 분리는 당연한 것이며,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판단할 때 당진항 분리지정이 절대적으로 당연함을 주장하며,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당진항」 지정결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의안번호 36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철회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1. 12. 15.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01. 12. 15)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1. 12. 15.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등 21개부처(국무위원)

□ 제안이유

○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공장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추진을 위하여 입법예고 함에 따라

○ 개정안 내용은 수도권 과도한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여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으로

○ 관련법령 개정저지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뜻을 모아 붙임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

수도권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되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완화 개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어 비수도권에 속해있는 우리 충남 200만 도민과 함께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철회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의합니다.

첫째,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비 수도권 지방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 교통, 환경, 교육문제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분명하므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성장 관리지역에 투자 연장 및 확대 등은 국내기업의 반발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둘째, 대규모기업집단(30대그룹)에 대해서도 다른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 지역에서 성장관리 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각 자치단체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개발한 기존 산업단지 및 신규로 조성 중이거나 계획중인 단지의 미분양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경제를 더욱 침체화 시킬 것입니다

셋째, 지난 6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공장총량규제의 대폭 완화결정 이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입지 문의 등 투자수요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경우, 지방경제는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입법예고된 관련법 개정을 반드시 철회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200만 도민과 함께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ㅇ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359

대전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1. 11. 29.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회부(의결)일	2001. 11. 29.
	심 사 결 과	의견채택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01. 12. 19)
	결 과	의견채택
이 송 일 자		2001. 12. 19.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은 '99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건설교통부와 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가 공동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 목 표 연 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4,633.87㎢(2000. 10. 9 대전광역도시권 지정)

시·도별	행 정 구 역	면적(㎢)
합 계	3광역시도 2시6군	4,633.49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 전역	2,493.3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역	539.79
충청북도	옥천군·영동군전역, 청원군·보은군일부	1,600.70

○ 계 획 인 구 : 2,700천명(현재 1,948천명)

○ 내용적 범위

-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 구상
- 광역도시권의 부문별계획
  (광역토지이용, 녹지 및 경관관리, 광역교통, 방재, 환경보존 등)
- 생활권 설정 및 정비계획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 추진경위

○ 1998. 4.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발표
- 환경평가 실시후 조정

○ 1999. 7.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조정

○ 1999. 12.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 건교부, 충남·북, 대전광역시 공동 수립
- 국토연구원, 각 지방연구원 연구용역 참여

○ 2000. 10. 대전권 광역도시권역 지정(건교부장관)

○ 2001. 11.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 완료

○ 2001. 11. 지역 자문위원회 개최

○ 2001. 11.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건교부)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손재탁 의원(공주시, 자민련)

■ 질문1 :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

· 쓰레기 매립장은 법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내 15개 시군에는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매립장이 '95년 이후 현재까지 몇 곳이나 있으며, 불법매립장의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 도내 보령시의 신흑동 해망산 매립장은 수년간에 걸쳐 당해 시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가 경고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만 끝났다면 관은 트럭으로 수십, 수백대 분을 수년에 걸쳐 불법매립해도 경고로 끝나고, 민은 쓰레기 한 봉지만 버려도 범칙금이라면 누가 봐도 법의 취지와 형평에 맞지를 않는데 과연 우리 충남도가 환경보전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도내의 관계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해서 사용했던 쓰레기 매립장은 총 230개소이고, 이중 '95년 이후에 사용한 쓰레기 매립장은 107개소임. 이들 매립장 중에서 이미 안정화, 대지화 되어서 정비가 불필요한 105개소를 제외한 125개소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국 도비를 지원 받아 정비에 임하고 있음. 그간 1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4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17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

또한, 보령시 해망산매립장도 허가 절차 없이 '70년도부터 사용했던 매립장으로 금년부터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정비 중에 있음.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위생매립장이 미확보된 4개 군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다시는 이런 임시 매립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2 : 금강오염문제의 해결 방안

· 조선일보 10월 31일자 5대 강이 썩어 간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에는 전국의 5개 대학이 전국 5대 강을 6개월여에 걸쳐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강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고 그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환경 호르몬이란 산업활동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생물체에 흡수되면 정자감소, 기형유발 등 대단히 유해하다는 것임.

이런 물을 공주, 부여지역에서는 수만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

어째서 다섯 개 대학의 5대 강 조사에서는 환경호르몬의 과다함유로 인체에 위해하다고 하는데, 본 도에서는 몇 ppm의 산소 함유량만 가지고 몇 급수만 따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 동안 우리 도는 금강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와 합동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작년 10월에 확정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강수계특별법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금강상류 특히, 대청호 상류 구역의 수질오염 행위제한, 수질기초시설 확충, 그리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강수질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정 협의 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는 별도로 금강 상·하류 전역에 걸쳐 수질 및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을 2004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

앞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 시도간의 협의,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로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강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면서 금강수질 및 생태계의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금강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장애인 고용문제의 해결 대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24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주와 공공기관은 적어도 2/100이상을 의무적으로 취업시키도록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 충남도청은 의무고용 몇 명에 몇 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하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도내 업체들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완전고용이 이루어질지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우리 도와 시군에 채용된 장애인은 도가 22명, 시군이 147명으로 총 169명을 채용해서 의무고용비율 보다 다소 낮은 0.95% 수준이며,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은 것은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이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됨. 도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41개 대상기업에서 179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보다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됨. 앞으로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협회 및 기업체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도에서는 많은 장애인이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서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배정해서 선발토록 하겠음.

■ 질문4 : 계룡산 국립공원 문제의 해결 대책

· 계룡산을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고 수입과 관리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행정구역에 연관된 공주시와 논산시는 쓰레기와 오물만 처리하는 현실임. 계룡산은 산 자체도 명산이려니와 개발만 제대로 하면 참으로 좋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동학사, 서쪽으로는 갑사, 남쪽으로는 신원사가 있어 삼각으로 위치한 사찰이 불교의 극락으로 계룡산을 떠받들고 있음.

계룡산의 관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충남으로 이관이나 이양을 받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천봉이나 삼불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정상에서 영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방금 거명한 3개 사찰과 마곡사를 연계 개발하면 충남관광은 루트가 되어 자고 먹고 쉬어 가는 또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임.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먼저 계룡산의 관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도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94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이익단체의 개발압력에 대한 대응능력 한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공원관리의 부실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지방이양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공원 구역내의 주민생활 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관리권의 지방이양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루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탐방객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삭도 등 각종 시설물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영산 보존에 대한 지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계룡산과 현재 개발중인 마곡사, 마곡온천 관광지, 그리고 공주의 각종 문화유적지를 연계하여 관광루트화 하는 방안은 현재 수립중인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의 상징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인 계룡산을 보다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 질문5 : 도시계획 등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대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 등 갖가지 이름으로 공원녹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시설녹지, 공공시설지 등으로 개인의 재산을 수년 수십 년씩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한다 해도 사리에 맞지를 않음.

예산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예산이 허용할 때 사서 쓰면 될 것인데 이것은 분명 관이 민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재산권행사침해에 관해서는 지난해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시행될 계획으로 있음.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 군에서는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재정비 계획과 존치되는 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재정비 계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앞으로 도에서는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사항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도시계획 기본권자인 시장 군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사유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6 : 백제대교의 교통체증문제 해소 대책

· 지금 공주의 농고 앞에는 백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제대교가 놓여지고 있음.

본 의원은 백제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대란이 예상되니 백제대교의 체계를 입체교차로로 설계 변경할 것을 건의 촉구한바 있음. 그러나 시정되지 않았고, 준공단계에 이르러 금년 추석 이틀 전인 9월 28일 임시 개통했으나, 교통 대란으로 개통 두 시간만에 통행을 중단하고 말았음. 지금이라도 발주청과 협의해서 입체교차로로 변경 하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다리가 다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임.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그 동안 도에서는 백제대교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토관리청과 입체교차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점은 정안천과 금강, 공주농고 등 도시계획구역 내로 지역 여건상 입체교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주~종촌간 국도36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04년에 준공 예정이며, 우성에서 목천교차로간 노선이 금년 말 임시개통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이 구간이 개통되면, 천안~조치원~대전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모두 우회하여 통행이 가능함으로써 교통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공주농고에서 연미터널을 거쳐 도천교차로 구간은 연약지반 처리 관계로 다소 공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내년 추석 전에는 개통될 계획으로 있어 이 3개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소통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제대교 교차로의 교통량 분산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신호의 연동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7 : 공주~종촌간 국도 36호선의 확 · 포장 대책

· 발주는 국토관리청이 하고 공사는 SK등 일곱개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데, 신설도로가 기존도로보다 7m정도 낮게 설계되어 완공되면, 기존 도로에 연결된 마을 진입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진입도로를 신설해야 되니 너무 낮게 공사를 하지 말고 기존 도로로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인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충남도에서는 하루빨리 발주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청에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국토관리청에서 신설 4차로 도로계획을 기존도로 높이로 변경할 경우 6%의 높은 오르막 경사로 인해 차량속도가 저하되고 지형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으로 당암리 마을과의 연계는 남양주요소 앞, 현재 버스승강장 위치에 고가차도를 설치해서 평면 교차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문8 : 교원 인사정책의 개선 방안

·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정치, 경제, 시장의 논리로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65세의 정년을 62세로 하루아침에 단축시켜 놓고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기간제, 초빙제라는 이름으로 우선 방패의 땜질식 인사 정책은 이 나라의 교육을 망가트린 정책이라고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충남에는 기간제 교사가 몇 명이나 있고, 명년도 교원 충원에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2002학년도 충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이 5,663명이 필요함. 현재 4,880명의 기존 정규 교사와 300여명의 신규 교사를 임용하면 480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앞으로 초등교사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신규교사 임용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교육감이 추천해 가지고 교육대학에 편입해서 3학년으로 해보자, 그래서 공주교육대학교 3학년에 편입시켜 2004학년도에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질문9 : 교원성과급 지급의 개선 방안

· 선생님은 능력에 따라 우열은 있을 수 있으나, 우열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생님들을 등급을 두어 등급별로 성과급이라는 명목의 후생비를 지급하려다 선생님들의 반발, 반납으로 진퇴양란에 빠진 것으로 아는데,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 것이며, 그 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교원을 물리적으로 등급화 한다는 것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함. 따라서 능력과 실적이 있는 교원을 우대하고 교육계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2000년도 성과급은 금액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등을 아주 소폭으로 조정을 했으며, 모든 교원들이 성과급을 받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질문10 : 학급당 학생수 조정에 따른 교실부족 해소방안

· 일부에서는 선생님이 모자라 아우성을 치는데 근자에 교육부는 느닷없이 OECD선진국 학급 정원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라는 착란적인 정책 발상으로 또 한번 교육현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학급증설로 2002년에 몇 개 학급이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자라는 교실증축은 몇 교실이며, 3월까지 준공하자면 공기가 부족하여 부실공사가 예상되며 동절기에는 하던 공사도 중단하는데 혹한기에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각급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유지하고자 지난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른 자체 수용계획에 의거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년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유지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33학급이 증가하여 여유교실 23실을 제외한 110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조속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입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긴급으로 하고 기존건물 위에 증축하여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였으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동절기 전에 준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며,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공사 준공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의 학생수용은 기존 여유시설이 있는 학교는 여유교실 등을 대체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정규 교실 크기의 콘테이너 교실을 설치하여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11 : 청소년들의 활용공간 확보 방안

· 우리 충남에도 1년이면 수십 수백 건씩의 크고 작은 청소년 탈선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각 시·군에 공부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올바른 써클활동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학생회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천안에 2004년 준공을 예정으로 4,712평 규모의 가칭 "충청남도 평생 교육회관" 을 신설하기 위해 이미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논산도서관도 "논산평생학습관" 으로 확대 개편하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공간을 확대하였고, 아울러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도에 19억5,5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2002년까지 증축할 예정임.

또한, 서산도서관도 평생학습관으로 확대 신축하기 위해 19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학생 및 주민의 활용공간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평생학습관이 각 시군에 하나씩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박영조 의원(서천군, 자민련)

■ 질문1 : 도청이전에 대한 소신과 계획

· 본 의원은 도청이전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도내 15개 시·군 지역의 기초의원을 비롯 읍·면·동장, 새마을지도자, 리·통장, 농업인 단체와 사회단체 대표 등 지도급 인사 각 150명씩 선정, 총 2,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도청 이전과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한 문제" 와 "충남도청을 이전할 경우 어느 지역이 적합한가" 라는 두 가지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대상자 2,250명 중 45.2%인 1,017명이 응답에 참여, 도청이전과 시도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충남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52.9%인 538명이 찬성했으며, 「충남과 대전을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46.6%인 474명, 「현재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0.5%인 5명만이 찬성했음. 충남도청을 이전할 경우 「어느 지역이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24.9%인 253명이 공주 지역을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홍성이 15.5%인 158명, 청양이 13.3%인 135명, 아산이 12.9%인 131명, 그리고 천안 8.9% 91명 순으로 집계되었음.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전체조사 대상자 중 응답자가 50%선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도청이전에 관련한 도민의 관심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응답자 수로 평가해 볼 때 아산과 서천, 부여지역이 도청이전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청양, 천안, 당진 지역이 비교적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도청이전과 시·도 통합에 있어서는 천안, 공주, 아산, 서천, 홍성, 예산, 당진 등 7개 지역이 도청이전을 희망하는 쪽이 많은 반면 보령, 논산, 금산, 연기, 부여, 태안 등 6개 지역은 시도 통합을, 서산과 청양 두 지역은 찬반 동수로 집계되었음. 또한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찬반 비율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여론이 양분화된 현상과 함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됨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일부 지역간의 반목과 대립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었음.

이러한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는 의도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함으로써 지역간 대립을 부추기는 등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도민들은 도청이전 여부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조기에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음.

심 지사께서는 금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청 이전 여부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청이전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후보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추진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도민여론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외국의 선진사례 수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라도 재원의 조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다만, 도민과의 약속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고, 또 도청 이전 후보지에 대한 논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의 용역을 하게 맡기고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임.

■ 질문2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실태

· 요즈음은 농산물이 연중 생산되고 현대화된 유통시설로 인하여 딸기, 상추, 방울토마토 등 신선도 농산물의 수출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충남도의 농·수·축산물 수출 추이를 보면 '98년 수출액 2억4,100만불에서 2000년도 1억3,900만불로 42.3%가 감소된 반면 이중 신선도 농산물은 23.3%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핵심 품목으로 성장, 전체 수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맞춰 충남도를 제외한 경기, 강원, 충북 등 8개 도는 수출금액의 4~10%를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충남도만 지금까지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의 수입업자들이 농산물 수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충남도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내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예산 내역과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우리 도는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태스크포스 형태의 수출지원단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면서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입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수출농산물 재배 기술지도 등을 전담 추진하고 있어 신선 농산물 수출규모는 예년보다 늘어가고 있음

금년에 우리 도는 타 시도에 우선해서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 보다 일정 비율 이상 낮아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해 수출안정기금 15억원을 조성해 운영해 나가고 있음.

또한,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작목에 따라 타·도와 같이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해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상태에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산지도매형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의 수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출단지 확대, 국제인삼전과 세계화 전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3 : 수학능력시험장소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 지난 11월 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도내 6개 지역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도내 6개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에 가서 시험을 치룸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각 시군 지역별로 공정한 가운데 수능시험이 치뤄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시험 지구내 고등학교 수가 10개 이상이고, 수험생 수가 2,000명 이상이며, 기존 시험 장소와 버스로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3개 이상이 있는 곳으로 선정 기준이 있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당연히 시군에서 수학능력 고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국적인 중앙의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 그러나 앞으로 충남도민들의 여망이 실현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수능시험지구 확대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3. 이준우 의원(보령시, 자민련)

■ 질문1 :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소득증대 방안

·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여야 할 것임.

우선, 꽃박람회에 참여한 원예농가가 전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수출로 연결지어 주는 기능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것과 꽃박람회장 접근을 위해 대규모로 투자한 SOC사업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환 황해권 관광개발과 연계하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나라의 여건상 오밀조밀하게 펼쳐진 서해안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의 국립공원과 백제유적이 집중된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연육교시설 등 관광진흥대책이 시급한데 조기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특히 국도로 승격된 보령 원산도 안면 도간 연육사업의 추진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꽃박람회에 참여한 원예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도에서는 그 동안 화훼산업육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총 6개 분야 20개 사업에 14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화훼 모범농가와 법인에는 에너지 절감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화훼농가 육성을 위해서 신품종개발과 함께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 해 나가겠으며 수출전문 경영체를 중심으로 선별, 규격 포장, 저온 저장 운송 등 물류 체계 지원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와 옥스날드에 조성 중인 화훼수출 전진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양란류의 대미 수출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임.

그리고 해안국립공원과 백제유적을 비롯한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꽃박람회장에서 내포문화권의 해안지역을 배후 해양관광지로 육성토록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시킨 바가 있음.

또한, 보령 안면도간 연육교 가설 문제는 중앙 정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 동안 대천과 안면도 고남을 연결하는 연육교 사업은 이 구간을 국도로 승격시킨 연후에 앞으로 민간자본 유치와 국가예산지원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질문2 : 보령신항 건설 본격적인 추진 방안

· 21세기는 중국의 개방화가 결실을 맺으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여 중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4년도 2%에 불과 하던 것이 30년 후 2025년에는 10%에 이를 것으로 정부에서도 판단하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동북아의 교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방형 통합 국토 축의 「황해축」을 구성하여 집중 개발하고 있으나, 인천과 부산은 이미 포화상태임을 감안할 때, 보령신항개발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정부의 유보적 태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중 다행스럽게도 지사님께서 미주 순방시 미국의 필드스톤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한 보령 시민들은 매우 고무되어 있음. 본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여 항만개발을 본격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난 '98년 실시 설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보령 신항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가 아닌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난 5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필드스톤사와 보령 신항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현재는 우리 도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착수 가능성에 대해 검토중에 있고 국내 대리 일을 맡고 있는 MK인터내셔널사의 사장이 12월 5일날뉴욕에 출장 가서 최종적인 점검 결과를 협의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필드스톤사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한편,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민간사업 승인절차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2002년 본 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도 자체적으로 보령 신항개발 사업에 타당성 입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민자유치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질문3 : 대우 부도사태로 인한 공단개발의 특단 대책

· 보령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광산촌이 몰락하여 어렵던 차에 대우의 공단조성과 대학교 신설로 활로를 찾는가 했더니 IMF를 맞아 대우와 지역 대표 기업들의 부도 발생으로 지역경제는 혼미를 거듭하는 실정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입지여건이 개선되어 공단분양에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였습니다만 입주계열사의 운영 전망도 불투명하고 대천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전망도 불투명하게 되는 등 체감경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모쪼록 관창공단 분양 등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민종기 〕

·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한 침체된 보령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보령 폐광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개 분야 18개 사업에 총 8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금년에 도로 확포장 등 3개 분야 5개 사업에 75억원, 내년도에는 56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관창공단은 당초 입주하기로 했던 공동개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등 3개 계열사의 부도로 인하여 직접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임. 사업시행자의 분양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도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입지여건이 이전 보다 훨씬 개선됨에 따라 보령시 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외자 유치 및 수도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하여 보령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4 : 종축장 이전 및 명천택지개발 추진 대책

· 종축장 이전은 '95년도에 확정하여 '9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9년도에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에 25만1천평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유보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축장의 중앙에 보령시청이 입주하여 외관상은 물론, 많은 민원인 왕래로 종축개량사업의 특성상 전염병 발생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임에도, 경기침체로 택지분양수요가 감소하여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도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이나 정부의 무주택자 지원정책인 임대주택건설 등 택지수요 유인대책 등을 다양하게 검토 할 것과 이미 청양 주민들에게 약속한 종축장 이전의 실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종축장 이전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택지분양 감소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일시 유보된 상태이나 내년부터는 시설 부지 정리와 도로포장 등 기반 시설 사업을 추진해서 목표 연도인 2005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음. 한편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IMF등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수요 조사를 더 실시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대행개발 재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종축장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5 : 보령시 진입 국도 40호와 36호의 확·포장

· 대전에서 공주, 청양, 보령을 연결하는 36호 국도는 청양 보령간 국도 확·포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전·논산·부여·보령을 연결하는 40호 국도는 부여에서 서천간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도 확·포장되는데 반해 부여 보령간 국도는 물동량이 부여, 서천간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확·포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다음은 보령시로 진입하는 일반국도 36호와 40호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이 구간 중에 청라면 우회도로와 화성우회도로 4차로 구간은 이미 완공되어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그 외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확장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부여에서 보령을 연결하는 국도 40호선은 조기에 4차로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6 : 충청선 철도신설 촉구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환 황해권" 대중국 무역의 거점항구로 개발하는 보령신항과 내륙 철도선인 충북선과 태백선을 연계하면 청주공항 및 컨테이너 기지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용할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권 개발의 활성화를 기해 충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장기 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도 타당성조사 조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임.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충청선 철도신설은 환 황해권 대중국무역의 거점항구로 개발하는 보령신항과 백제문화권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충청권은 '99년 12월에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따라 중장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도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쉽게도 금년에는 중앙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었음.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 질문7 : 학생지도 교육방법개선 및 교권확립 방안

· 첫째, 학생이 거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둘째, 교사들이 교권확립은 물론 교육전문가로서 대접받으며 가르치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신명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도 밝혀 주시기 바람.

셋째, 2001년 10월말 현재 기간제 교사현황이 73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근무를 꺼려 발생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계획충원 현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넷째, 국회 교육위원회 여론조사는 우리 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교육을 위하여 조기유학이나 이민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 교육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음. 자녀교육을 위해 조국을 떠나는 교육이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된 내용과 조치가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사회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건전한 학생문화 공간이 부족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시책으로 설정하고, 농어촌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다양한 전용 학습장을 운영하고,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특기와 적성 교육과 특별활동을 편성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서실, 컴퓨터실, 음악실, 과학실 등 교내의 모든 특별실을 연중 개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두 번째로 교권 확립과 사기 진작은 교원의 교육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원대상으로 각종 연수와 학부모 연찬회 등에서 의식 변화에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일·숙직 용역을 주어서 일·숙직에서 해방을 시켜 드릴 것임.

또한 3복식을 이미 해결했고 복식수업도 2004년까지는 완전히 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사이동을 안 시키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음.

또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서 부진학생을 구제하는 선생님에게는 수당을 드리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과 선생 30명을 캐나다 필교육청과 연계를 맺어서 연수를 시킨 바도 있음.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도서·벽지 지역의 기간제 교사 충원계획과 관련 앞으로 정규교사를 도서 벽지에 우선 배치를 하고, 기간제 교사를 뽑아 쓸 수 있는 도시 지역에는 다소 여유 있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첫째, 도서 벽지학교 근무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상향조정해서 교육감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승진 가산점을 최대 3점으로 늘려 도서벽지에 선생들이 많이 희망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대상학교를 확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함.

또한, 오지 학교 전보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려고 함.

끝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이민에 대한 대책과 관련 학부모, 학생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인성교육으로 효 교육을 통하고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

앞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고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이민이 필요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4. 강태봉 의원(아산시, 자민련)

■ 질문1 :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계획은 '94년도에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IMF가 발생한 '97년 8월에 완성한 개발용역계획이 민자유치가 불가능한데도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한 개발계획을 검토 수정 없이 추진하였음.

지난번 지사님 답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 공사가 참여해서 공공개발을 해 줄 것과 도로 등 간선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했는데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2000년 1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채권발행을 통한 개발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완·시행한다 했는데, 그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음.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개발계획은 도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도시계획적 접근체계가 미약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신시가지 개발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화방안이 미흡하므로 실수요자 측면에서 민자유치 유인책과 현실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여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간선시설 설치에 대한 선 투자 후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여부, 천안, 아산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심점이 결여되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수립, 현재 아산지역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므로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여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산만권 광역개발은 환 황해권 거점확보와 수도권 기능분담은 물론 아산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서 뒤진 우리 충남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차대한 충청남도 역점 사업으로서 2003년 말 고속전철 개통을 앞두고 최소한 58만평만이라도 우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수부 도시인 천안 발전세를 내륙과 서해안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능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서해안시대를 맞아 이전비용의 획기적인 절약은 물론 개발촉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후도시로 도청이전을 건의하는 바임.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조기개발을 수 차례 건의한 바가 있으며, 현재 역세권 58만평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택공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음. 신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개발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신시가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개발지를 제외한 구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으로 지정관리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

첨단산업유치는 신시가지 배후지역에 2006년까지 33만평 규모의 전자정보 산업단지를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임. 또한 인접지역에 61만평 규모에 삼성테크노단지가 개발되고 있어 신시가지 배후지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첨단전자 정보산업 집적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는 경제회복과 고속철도 개통이 이루어지는 200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역세권의 공공개발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신시가지 개발촉진 차원에서 말씀하신 배후도시로의 도청이전 문제는 현 단계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적적치 않다고 봄.

■ 질문2 : 황폐해져 가는 농촌 살리기 방안

· 재고량 때문에 추곡수매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기준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ha당 7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논농업직불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추곡수매가를 대폭 내려야 하는데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으로 농업진흥지역은 ha당 35만원, 비진흥지역은 25만원임. 추곡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는지와 그 동안 농업보조금 지급시 마다 도출되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실경작자 파악, 농약사용량 조사기준 등의 모호성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개발에 접근해야 할텐데도 농어촌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는 것을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개발과 잘못된 정책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함.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논농업직불금은 우리 도의 경우 논농사 수도작 농가에 15만5000호의 약 97%에 해당하는 14만6,000호에 302억원을 지급하도록 확정했음. 내년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ha당 지원 규모는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올해보다 10만원이 인상된 35만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서 35만원보다는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논농업 직불제의 실시로 인한 쌀가격 지지 효과는 ha당 25만원 지급시에 수매가의 약 2.2%, 그리고 ha당 40만원을 지급해 줬을 때는 3.5%의 소득보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예산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금년에 주민협의체 구성,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반공사 등과 함께 분야별로 점검하여 지원에 부작용이 없도록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특화와 쌀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농외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지방비 1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가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차원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음.

■ 질문3 : 학생의 인성함양 프로그램 수준과 비전

· 충남의 모 중학교 선생이 예술이란 미명 아래 자신의 홈페이지에 불건전한 그림을 올린 일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과열을 부추기면서 돈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례 등 실로 교육자로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도 저지르고 있음. 과연 우리의 2세 교육을 부도덕한 선생님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인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며, 그 동안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수준이었으며, 충남의 인성 교육 비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및 인명 경시풍조가 만연된 오늘날 참다운 가치 추구를 위해 효 정신복원과 효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함. 효에 대한 인지와 내면화 행동화를 위하여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사랑과 공경과 믿음의 3대 덕목을 실천하여 추진하고 있음.

효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효 교육의 이론과 실제」「효 교육 길잡이」「어버이 날 낳으시고」 등 장학자료를 발간하고 있음. 또한 효 실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중등학교에서는 학생자치 활동의 내실화 건전한 동아리 활동의 적극 육성, 진로상담 활동 추진, 교육공동체 연수, 테마식 충남의 5대 얼 체험, 충남정신발양, 특별활동 운영 등을 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도 인성교육을 효 교육을 실천 중심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고 가정과 학교·사회의 삼위일체가 연계되는 추진으로 건전한 가정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 조성에 노력을 다 해 나가겠음.

■ 질문4 : 근절되지 않는 교육공무원 비리 대책

· 충남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이라는 설명으로 교실 신축, 전산망 구축 등 실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학교 전산망 구축은 누가 뭐래도 최신의 장비를 구입 활용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그러나 작금의 경제사정이나 우리 나라의 기술력으로 볼 때, 전산망구축에 꼭 외국제품을 써야 하는지, 2세들을 위하는 20만 교육가족들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하시는 건지 궁금함.

지난 봄, 신문에 학교전산망 구축에 업자와 손을 잡고 외국 제품을 구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사례로 볼 때 과연 애국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문임.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2만여 가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 가족처럼 공무원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셨는지,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 비리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함.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작년도 학교 전산망 구축과 관련하여 값비싼 외제용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 공무원의 비리 문제에 대하여 지상에 잠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해 다 조사를 해 본 후 무혐의로 풀려났음. 그 때 우리 교육청에는 우리 교육청 2만 2,000명의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자 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음.

요즘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계에 그런 불상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는 한 건의 그런 불상사도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림.

■ 질문5 : 전원형 작은 학교 지원대책 및 활성화 방안

· 교육감 취임사에서 교육감님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더 이상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근무하는 교직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불안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천명하였음. 교육감님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자연 친화적인 전원 학교이며, 열악한 농어촌 학교인 거산분교를 작은 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고자 지역 인사, 그리고 천안, 아산 지역 학부모와 교사가 의지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음.

내년에 전원형 작은 학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지난해부터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 초등 거점 학교 사업을 초등교육의 역점과제로 정하고 읍면 이하 초등학교 중에서 2000년도 48개교를 선정하여 30억원을 지원했음. 금년도에도 41개교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음. 또한 농어촌 폐교를 이용하여 지역의 인문적 지리적 특성을 살린 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지역별로 특색과 전통 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에는 5개 지역에 5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4개 지역에 5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어촌 학교 살리기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음.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그 작은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단 한 명의 학생이 남아도 절대로 폐교나 통폐합을 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림.

5.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질문1 : 「인감증명제도」의 폐지 건의

·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증명 이외에는 별다른 사회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함. 관공서에 가서 일일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필요한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규제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인감이 없다고 해서 인감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삶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인 수치요 잔재이기도 한 현실적으로 존재가치가 없는 바, 보다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음.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폐지할 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유상곤 〕

· 인감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경비 절감,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적 경제생활의 자율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 복사본을 제출하는 방법, 공인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으나 이 또한 본인이 요구기간까지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진위여부 확인에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특히 신용사회 정착 등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또한 인감증명제 폐지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의 최대 수요처인 부동산 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 행정처와 금전 담보 대출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에서의 관계 법령의 개정, 업무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인감증명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현행 제도운영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질문2 : 노인질환 확산에 대응한 건강증진 대책 강구

· 1996년부터 2000년 9월까지 5년 동안, 어느 종합병원에서 농촌 주민 9,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혈압이 33.%요, 소화기 장애가 12.7%이며, 관절염이 17.1%이고, 당뇨병이 8.5%로 분석되었다는 것임. 또한 계속되는 농정의 실패로 농촌은 갈수록 피폐화 되는 동시에, 게다가 고령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어서 더욱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농촌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성인병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여겨짐. 타도에 비해서 비교적 농업지역인 우리 도로서는 이들의 건강 증진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주민의 성인병 확산에 대응한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도에서는 지난 '90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35세 이상 도민 8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당뇨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자 5만 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그리고 '96년부터는 농촌노인 체형변화 원인분석을 토대로 해서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주1회 이상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혜택이 미진한 농촌지역 233개소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건강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암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 '90년부터 농촌여성의 자궁암, 유방암과 함께 '96년부터는 위암 등 5종과 성인병 질환 6종 검진을 실시해서 자궁암 등 407명이 암을 조기발견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한 바도 있음.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충남건강비전 21」을 수립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3 : 농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 강구

· 우루과이라운드(UR)를 거쳐 얼마 전에 타결된 뉴라운드(New-Round)가 새로이 출범하여 앞으로, 몇 년내에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치게 될 것임.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쌓인 농가부채를 안고 있는 등 취약한 우리 농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임.

지금 우리 농촌의 소득 구조를 보면, 전체 소득 중 농업 소득이 47.3%이고, 농업외소득은 고작 52.7%로서 이웃 일본이 86.5%이고 또한, 대만의 81.8% 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앞으로 농촌의 살길은 농업외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대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동안 도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와 농특산물의 유통, 가공산업의 육성,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해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도내 55개 농공단지 626개 업체에 1만7,000여 명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0개 단지가 추가로 조성되어서 농촌인력의 취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가공품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연간 약 4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 3개소에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아울러, 지역 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업경영인 판매장 14개소를 신축 운영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장도 2곳을 운영하고 있음.

이밖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주말관광의 활성화와 연계한 농촌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도·농 교류 활성화와 지역탐방 페키지 관광으로 도시민이 농촌을 휴식공간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여 녹색관광 시범사업으로 2곳을 실시한 뒤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6. 윤석우 의원(공주시, 자민련)

■ 질문1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황과 충남의 등재 방안

· 현재, 국내에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가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 석굴암,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 유적 지구, 고창·화성·강화의 고인돌 유적 등 총 7건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백제권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가 한 건도 없어 중요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미래의 가장 확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음. 우리 지역에 위치한 훌륭한 백제유적과 계룡산 등은 다른 지역의 문화재보다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그 가치가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하고 그 역사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다소 게을리 한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고대 극동아시아에서의 백제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도 백제의 역할 등을 학술적으로 파악해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계의 인사들과 힘을 모아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여기서 본 의원은 충남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사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임.

또한, 계룡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근린 공원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공원구역 내에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민간토속 신앙의 일번지로 여겨져 민족의 영산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아울러 계룡산 내에는 해발 845.1m의 천황봉을 정상으로 하는 11개의 산봉우리와 자작바위를 포함하는 4개의 기암, 7개의 계곡, 2개의 폭포 등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생물자원으로는 관속식물 729종과 식물군락지 2곳의 식물자원과 포유류 25종, 양서파충류 16종, 조류 52종, 담수어류 24종, 곤충류 1,184종과 사향노루를 포함하는 6종의 천연기념물 등 동식물 자원도 아주 풍부한 상태임.

또한 계룡산내에 위치한 문화자원으로는 중악단과 갑사 철당간 등 6종의 문화재, 구룡사지 유적지와 동학사, 갑사 및 신원사 등의 전통사찰이 있음. 계룡산이 다른 국립공원과 차별성이 있는 특징으로는 우리 나라 민족 토속신앙의 중심지로서 현재에도 여러 종류의 무속 신앙이 행해지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계룡산 산신제 보존회를 결성하여 계룡산 산신을 모신 중악단을 중심으로 해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계룡산 산신제를 지내고 있음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바로 위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비해서 우리 충남권에 속해 있는 백제문화 유산도 세계 문화유산과 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임. 이런 훌륭한 문화재가 하루빨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세계유산 등록의 중요성은 197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서 세계 각 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2개국에 690건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어 우리 나라는 지적해 주신대로 7건이 등록되어 있음.

또한 백제문화 유산인 무령왕릉을 비롯하여 안동 하회마을, 설악산 등 6건의 국내 문화유산은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잠정 목록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조선시대 3악 중 하나이며, 충남의 영산인 계룡산을 잠정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관계 전문가가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앞으로 도에서는 지난 9월 공주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 차원의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도 단위의 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유도하겠음. 아울러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관계 기관 단체와도 적극 협력하는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7. 정순평 의원(천안시, 자민련)

■ 질문1 : 2002년 선거시 도지사 출마 여부

·정치인은 개혁과 경장에 능하고 관료는 수성과 현상유지에 능하다는 말이 있으며, 바람직한 국가 발전을 위한 지도자는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추진 능력까지 갖추어야 할 것임. 지사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오래 도정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음. 지금 200만 도민들은 내년에 지사께서 다시 출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저의 입장은 이 문제가 단지 제 개인적인 입지만을 생각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국내 정치, 사회적 입장 등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도정발전이나 충청권,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지금까지와 같이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국가와 충청남도와 또 제가 속해 있는 당과 개인적인 의지와 신념을 함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질문2 : 여성공무원의 우대 방안

· 도지사께서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은 항상 입 서비스로만 끝나고 있음. 여성공무원의 채용 확대나 승진, 처우부분에 대한 우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

· 도내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21.2%인 2,955명으로 민선 초기인 지난 '95년도의 19.2% 보다는 2%정도 증가되었으며, 그 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금년도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총 30명 모집에 여성이 50%인 15명이 합격하는 등 군 가점제 폐지 이후 여성들의 공무원 합격률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말씀드림.

앞으로 도에서는 여성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95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는 여성채용 목표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이 승진서열 배수내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 승진시키고, 도에 전입을 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할당제를 실시하는 이러한 시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탁아시설의 확대운영, 육아휴직제와 출산 휴가기간의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여성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처우 개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서울사무소와 해외사무소의 폐지 용의

· 서울사무소와 해외사무소들의 설치 후 현재까지의 운영비 현황을 밝혀 주시고 구조조정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민종기 〕

·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그 동안 운영에 투자한 예산은 '96년 이후 지금까지 총 운영비가 47억9,700만원임. 이렇게 운영에 따라 나타난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총 8,870건의 무역실무를 지원하고 217개 업체에 대하여 2,700만불, 즉 351억원의 수출을 직접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2,500여명의 해외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여 도정홍보와 국제정보 교류의 역할도 해 왔으며, 104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좀더 해외사무소의 조직을 효율성 있고 경쟁력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이나 사무소 운영에 따른 수혜자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 또는 지원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최소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따라서 현 시점에서 조직의 존폐를 검토하기보다는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좀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질문4 :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 건설을 위해 추진한 시책

· 우리 도에서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시범마을 조성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4천만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떠오르지 않음. 지사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 건설을 위해 그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주민을 위해 봉사하여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 것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함. 어찌 보면 인본 행정과 경영 행정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한 수단이며 절차인 것이며, 인본·경영행정은 도민들이 불편 없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곳, 국민 누구 나가 마음으로부터 동경하고 살고 싶어하는 고장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일 것임. 그 동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인본행정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제정과 미국의 슈라이너병원과 선천성 장애아동 무료시술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13명이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음. 앞으로 내년 1월까지 13명을 포함해서 23명이 더 치료를 받게 될 것임. 그리고 난치병 후원기금 조성은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환경 분야 ISO 14001인증 등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여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경영행정 분야에서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SOC확충과 행정혁신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총생산 분야는 '95년에 14조 5,000억원이던 것이 2000년에 21조3,000억원으로 18%가 증가되었음. 또 국도 4차선화 사업으로 '95년도에 138km가 4차선화 되었던 것이 392km로 4차선화율이 전국 2위가 되었으며, 농어촌 도로포장은 33km에서 2,367km로 72배가 증가되었고 수출은 71억불에서 170억불로 2.4배가 증가했음.

이밖에도 디지털 충남 선언과 일하는 방식 개선, 재정 운영 건전화 등 각종 전국 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성적을 거두어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물론 전반적으로 지역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더 많고 지금 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 단순히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고,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겠음.

■ 질문5 : 결식학생 지원 대책

· 한창 자라야 할 학창시절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해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우리 도내에도 9,5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음. 결식 학생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현재 우리 도내에 9,523명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54억1,800원을 확보하여 학기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물론이고 방학중이라도 365일 차질없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 배고픔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상담 등을 통하여 물질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교육적 배려까지 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위화감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결식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6 :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방안

·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이웃사랑의 기본으로서 학창시절의 생활화와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봄.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는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임. 그 현황과 시설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또, 교육청의 신설학교 설립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까지 초·중·고 44개교에 이르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설계 때부터 반영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도에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 공립학교가 3개교, 사립이 2개교 등 5개교가 있으며 244개교의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장애학생이 재직을 하고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경사로가 159개소, 승강기 11개소, 화장실 88개소 등을 갖추고 있으나 아주 부족한 형편임.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학급 편성 시에도 장애 학생을 1층에 배정을 해서 편의를 배려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대책은 기존 학교는 교실의 증·개축등 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으며, 신설 학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음.

■ 질문7 : 금년도 고교입시 전망과 대책

· 지난해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각 학교의 진학지도로 아무런 문제없이 끝났던 천안지역 고교입시 문제가 최근 학교별 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점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 금년 입시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지역별로 내고장 학교를 육성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천안의 고등학교 입시문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음. 우선 천안지역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거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2002학년도 적용으로 우리 도의 신입생에 대하여는 천안, 아산지역에 한하여 35학급을 증설, 확정한 바가 있음. 2003학년도 이후에는 증가하는 학급에 대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등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입시공동창구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음.

■ 질문8 : 천안 신용초등학교 2부제 수업 실태와 대책

· 학생 수가 3,000명이 넘는 천안 신용초등학교의 문제가 심각하여 그 동안 2부제 수업을 하다가 컨테이너교실 덕분에 2부제는 면했는데도 학생 수가 학급당 평균 46명이고, 1·2학년은 12학급, 13학급에 49명씩임.

운동장도 비좁아서 체육시간과 운동회는 오래 전부터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또, 내년에는 다시 2부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소문이 나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대책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천안 신용초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난해 9월 1일자로 천안 신촌초등학교를 개교한 바가 있음. 천안 신용초등학교를 분리하여 2부제 수업을 해소하였으나, 일부지역 학부모의 신설학교 학급편입 기피로 여전히 과대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천안 신용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도에 천안 용곡초등학교를 신설하여 과밀 현상을 해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음. 건축 설계를 조기 완료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로 내년 3월중에 공사착공하여 2003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나가고 있음.

8. 송중빈 의원(논산시, 민주당)

■ 질문1 : 어려운 가정 지원 방안

· IMF 이후 무너진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실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임. 이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우리 다함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002년도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복지증진 분야에 전체예산의 14.8%인 2,296억원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안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 중에도 법적요건 미비로 신고를 하지 못하여 혜택을 덜 받고 있는 복지시설이 도내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음. 현재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미신고로 인하여 정부나 자치단체의 혜택을 부분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시설 수와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지원 대책은 없는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우리 도내에는 42개의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있고, 679명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지도 감독권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입소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도에서는 미신고 시설의 입소자 보호를 위해서 시설 입소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점검과 함께 보건 위생 지도도 함께 하고 있음. 직접적으로보다는 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것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방 차원에서 수급자의 책정보호라든지 지도점검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양성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음.

■ 질문2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결원 대책과 사기 앙양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현재 읍 면 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결원이 생겨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결원된 사회복지전담 요원에 대한 결원보충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전년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변경 임용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직급이 하향되고 그에 따른 보수가 적어짐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타 도에서는 사기앙양책으로 하향된 직급에 대하여 우선 승진시켜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도에서는 부족한 사회복지직 충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65명이 증원되어 12월중에 34명을 채용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31명을 충원해 나갈 계획임.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매년 연찬회를 개최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고충사항 청취를 위한 대화의 시간도 운영을 하고 있음.

또한, 앞서 말씀해 주신 직급 상향 조정과 우수 공무원의 시·군 본청 발탁 근무 등 합리적인 조직정비가 되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의 뜻을 살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기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음.

■ 질문3 : 농업과 농촌 발전 대책

·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WTO등 체제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구조 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집중투자와 다각적인 지원 등으로 농촌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쌀값과 채소값의 하락 등으로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으므로 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으며, 늘어만 가는 농촌부채에 대하여 언제까지 이대로만 방치할 것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앙 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본 도에서 자체 시행할 것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농정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종합적인 농정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차원의 시책을 발굴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대설피해에 따른 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기준 개정을 우리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2001년 3월에 중앙에서 확대 근거를 마련한 바도 있음.

앞으로도 농가부채경감대책 등 중앙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건의를 하는 등 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으며, 특히 쌀값하락에 따른 논농업 직접 직불제 등의 일부 시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휴경논 보상제 생산조정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건의하겠음.

그리고 도에서는 지난 '93년에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98년까지 4조 8,000억원을 투자해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한 바 있으며 현재는 2단계로 농업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6조18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음.

■ 질문4 :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방법 개선

·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이 우리 도에서는 총 1,190동에 238억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요구한 것은 2,891동으로 농어민이 요구한 수의 41%수준밖에 되지 않음.

그리고, 융자금도 최고 2,000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에 연리 5.5%이지만, 현재 신축하고 있는 농촌주택 대부분이 25평에서 30평으로 설계되고 평당 건축비도 200만원이 웃돌아 실제 건축비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융자금이 건축비의 40%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농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농어민들에게 쾌적한 주거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정주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물량과 융자금 증액, 현금이자도 인하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자율 문제와 융자지원액이 적어 농가에 부담이 되고, 지원물량이 부족해서 개량 희망농가가 적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 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안고 있는 공통 사안으로써 그 동안 도에서는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중앙정부의 융자금의 증액 상향조정과 물량의 확대 등을 공동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음.

■ 질문5 : 체납세금 징수대책 및 과오납금 줄일 방안

·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 세입운영에 있어서 징수 결정된 금액은 차질 없이 수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4.3%가 증가한 2001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953억9,200만원임.

이같이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한 징수대책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또한 모든 세입의 징수결정과 수납과정에서는 정확한 근거자료와 부합되는 법규 적용으로 과오납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피해가 없도록 감소시켜야 함에도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년 동안 시·군의 과오납 건수는 무려 7,302건에 116억4,000만원이나 되며, 금년도에도 9월말 현재 3,211건에 26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도의 세무행정 누수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정말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음. 지사님께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유상곤 〕

· 그 동안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등 재산권 압류로 1만4,000건에 894억원,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로 5,300건에 30억원, 그리고 관허사업 등에 대한 행정제재로 2,500건에 135억원 등을 조치했고, 금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도 55억 원을 징수했음.

앞으로, 금년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를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지방세 과오납금은 '99년 67억원, 2000년 49억원에서 금년은 9월까지 27억원이 발생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금년도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가 모르고 납부한 경우가 1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쟁송제기에 따른 인용 등으로 12억원, 과세자료 정비소홀 등으로 2억원이 발생했음. 그 동안 과세자료 D/B화 구축 등 전산화로 부과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자질향상과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시군 평가시 패널티적용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질문6 : 전통예절 교육의 강화와 교육정책 방향

· 우리의 학교교육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생존경쟁의 장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임. 우리 민족은 과거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바른 민족으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민족임.

한때, 전통 민족예절과 도덕교육을 고리타분한 유물로 매도한 시절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서구의 많은 교육자들도 우리의 선조가 행했던 교육사상을 연구하고 현대 서구식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전통민족예절 교육과 도덕교육의 부활을 제안하고자 함.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경로효친과 올바른 존칭 호칭 사용, 효 실천 중심의 전통예절 교육과 충남 5대 정신 함양 교육을 중심으로 한 예절 생활을 실천하고 인사, 언어, 복장, 공공 등 4대 기초 예절을 통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국제 에티켓 교육과 효의 생활화를 위한 효친존사의 미풍을 구현하고 사제간, 교우간, 선·후배간의 친절 3운동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충무교육원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절과 전통예절, 다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도덕과 예절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1학교 1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도 전통예절 교육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7 : 창의력 있는 인재교육 방안

· 다가 오는 21세기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국경 없는 경제 전쟁 시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라 할 것임.

잘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은 초등학교 때 입시위주의 암기교육보다는 창의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음.

이제 우리의 교육도 첨단과학을 바탕으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교육감께서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창의성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21세기를 대비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학·과학의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창의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학과 과학 영재 주말학교, 중·고등학생 수학·과학영재 겨울학교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수학·과학 경시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학생을 표창, 격려하고, 전국 수학·과학 경시 대회에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이 입상하는 실적을 거둔 바도 있음. 또한 각급 지역 교육청 단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탐구 과학교실을 운영하여 미래 사회를 대비한 창의성 있는 영재교육에 진력하고 있는바 90개반에 3,600명, 예산지원액으로 9,00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음.

9. 정선흥 의원(청양군, 자민련)

■ 질문1 : 청양 지천댐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 지난 여름 건설교통부에서 청양군 장평면 일대에 9,300만㎥를 담수할 수 있는 대형 지천댐 건설계획을 금년 말까지 확정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는데, 정부가 지역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과의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결정하여 발표한데에 대하여 전 군민들은 절규하고, 정부의 댐 건설 방침을 저지하며, 댐 건설 결사반대라는 강한 저항을 하고 있는 현실에 있음. 지천댐을 건설할 경우 23%에 불과한 청양군의 많은 농경지가 수몰됨은 물론 이로 인한 많은 이주민이 생겨 가뜩이나 인구감소 문제로 고민하는 군세가 더욱 악화 될 것은 물론 타 지역에서 겪지 못했던 많은 피해들이 우려됨.

또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칠갑산이 노무현상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청양의 특산물인 고추, 구기자, 메론 등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곳의 댐 건설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물 부족의 빌미를 잡아 지천댐 건설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서산의 간월도, 부남호 등에 담수되어 있는 많은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금강의 양수계획 등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사항이 본 도와 협의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정부에서는 21세기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안에 지천댐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댐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 도와 공식적인 협의사항은 없었음.

앞으로, 도에서는 정부의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주시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평가, 넓게 수렴하여 적극 대응 해 나갈 계획임.

■ 질문2 : 청양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

· 청양대학이 처한 오늘의 여건은 해마다 줄어드는 고교 졸업생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개편 및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성 있는 운영체제를 갖춰야 하며 학생과 교직원, 보직 교수와 학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 발전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청양대학 발전에 어떠한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서는 청양대의 특성화를 위해서 학사촌 조성과 기숙사 건립 등 자립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성화 된 학과 운영과 100% 취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특히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이 용역결과는 내년 2월에 제출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청양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대학여건과 취업환경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

■ 질문3 :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

· 우리 도에서는 금년 천안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의 준비를 위하여 1999년도에 교육청에 대하여 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금년 체전 준비를 위하여 첫째, 지도자의 정예화와 선수 신인발굴의 육성 둘째, 엘리트 체육강화를 위하여 교육청 내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계획을 도 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으나, 도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이를 묵살하고 안일무사한 체육행정을 해 온 결과 금년 부산에서 개최한 소년체전에서 전국 14위라는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어 전 도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음.

그러나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도가 우승을 하는데 각 학교 체육이 많은 기여를 하여 전국체전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음. 모든 것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체육은 장기간 동안 반복된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정상을 정복할 수 없음.

내년 5월 천안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전에 임하여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며, 장기적인 학교 체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내년에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소년체육대회를 주관해서 실시해야 하며, 이때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초·중·고 연계를 위한 육성종목을 단지화를 해서 필요한 육성종목을 최대로 지원을 하려고 함. 특히, 부진했던 초등학교의 선수 지도방법을 개선하며 유능한 지도교사와 코치를 유치하고, 실적을 거양한 지도 교사의 사기를 올해와 같이 코치와 감독을 따로 교육감이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훈련비와 각종 장비를 대폭 교체해 줄 생각을 하고 있음. 획기적인 강화방안의 마련과 강도 높은 훈련을 병행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아울러 생활체육에도 관심을 갖고 도내 모든 학교에 1교 1운동을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특색사업으로『줄넘기 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각급 학교 전체 학생들이 지금 급수를 정해서 줄넘기를 실시하고 있음. 그 밖에도 방과 후 자율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학교 체육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10. 최경섭 의원(태안군, 자민련)

■ 질문1 : 안면도 도유지내 장기 거주자 생활안정 대책

· 안면도 도유지에는 약 400여가구의 주민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300여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 특히 꽃박람회장 주변 주민들이 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보면서 하루 하루가 불안하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으며, 도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나가야 한다는 불안이 그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는 것임. 국유지와 군유지는 경작자들에게 매각되었지만 유독 도유지만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임.

도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서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되어야 마땅하나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 하겠음. 본 의원은 선량하게 농토를 지켜온 도유지 거주민들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매각해 줄 것을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건의를 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도유지 거주자 보호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도에서는 그 동안 도유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하게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로개설과 같은 공용시설도 주거지역을 피해 주고 있으며, 도유재산 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목적외 사용도 배려하고 있음.

또한, 이주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지난 번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대토를 해준 바도 있습니다마는 인근지역의 도유 토지를 제공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거주 주민에 대한 도유지 매각은 안면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조기에 매듭짓기는 어려움이 있음.

■ 질문2 : 행담도 홍보관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

· 서해안 고속도로는 그 동안 교통의 사각지대인 서부지역의 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특히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접근의 어려움으로 침체되었던 서해안 관광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서해안 고속도로 관문이자 명물인 서해 대교를 연결하는 행담도에 홍보관을 세운 것은 잘한 일이며, 운영만 잘 한다면 우리 도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면서 이미지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초기 운영과정에서 방문객들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로 인한 역기능은 우리의 홍보 노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임. 도지사께서는 홍보관 개관 이후 운영 성과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서는 지난 5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담도휴게소에 디지털홍보관을 설치하여 충남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충남의 역사, 문화, 관광, 지리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음.

그 동안 운영 성과를 보면 홍보관 내에 인터넷, 팩스, 복사기 등을 설치해서 내방객 16만8,000명에게 충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도 제공했음. 그리고 우수 공예품 전시회를 7번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역 관광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앞으로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홍보에 주력하면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관광지를 소개하고 홍보내용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내방객에게 홍보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인 민원 자동발급기 설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국도 32호선과 지방도 연결 필요성

· 태안읍을 중심으로 외곽에 32호선 국도 4차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그런데 태안읍 장산리 부분에서 만리포 방면으로도 가고, 안흥방면으로도 가는데 원북면과 이원면 방면으로 가는 지방도와는 연결이 되지 않아 갈 수 없고 복잡한 시내를 거쳐야만 함.

3㎞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 32호선에서 원북과 이원으로 가는 지방도와 연결시킨다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체계가 잘 된 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리라 확신함. 언젠가는 꼭 개설해야 할 부분으로 조속히 착수해 주셔서 지역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지사님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함.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먼저,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태안군 근흥면 방면에서 국도 32호로 연결된 지방도 603호선으로서 국도와 연결을 희망하는 도로구간의 도로로서 노선이 결정되지 않는 구간임. 앞으로 지방도 노선조정시 지방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음.

11. 류병기 의원(부여군, 자민련)

■ 질문1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도의 대책

· 그동안 공장 총량제 배정 완화 저지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5일 국회 남궁 석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입법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기업유치 활동을 위하여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여 왔으나,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방침이 변경·확정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도내의 대형 산업단지 등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기업유치 활동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방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개발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데도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와 국회방문 그리고, 간담회 참석 등의 대처에 불과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못하도록 비 수도권과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산업기반이 확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 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 수도권 전체 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느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와 같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 비수도권 시·도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함. 12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건의문을 만들어서 청와대와 국회의장 등 관계 요로에 지난 6월 18일 제출한 바도 있고 또 우리 도 출신인 김학원 의원이 대응 법안을 만들어서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균형개발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계류중에 있기도 함. 따라서, 이와 같은 노력들이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이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에 지난 10월에 개최된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여론조성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현재 심포지움 개최, 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또한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단순히 우리 충청 지역의 발전과 연계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국가의 먼 미래를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논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사업의 민자유치 전망

·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에 총 100만평의 단지를 조성하여 역사 재현촌내에 개국촌 등 7개 기능촌과 연구 교육촌 내에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축 등 사업에 총 4,528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금년부터는 백제민속박물관과 일부 기능촌이 착공되어 다소 활력 있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사업의 미진으로 사업비가 이월됨으로써 다음 연도 사업비 확보에 많은 제한이 따를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음.

금년도에 약 157억원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됨으로써 공사 진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람.

또한 본 사업은 국비 32%, 지방비 30%, 민자 38%의 부담 비율로 추진되어 있는데 특히, 민자부문 참여조건의 프리미엄으로 역사재현촌 건축공사를 맡게 된 S토건이 민자 부문에 대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채권확보 및 제재조치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동안 민자유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류 의원님께서 걱정 해 주신 사업비 이월액이 많이 발행한 이유는 이주대상자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기반조성공사를 정상 추진할 수 없었으며, 사업의 성질상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고증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금년 상반기 중에 이러한 제반문제가 해결되어 하반기부터는 본격 추진되고 있어 내년에는 이월사업비가 아주 적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은 민자유치 상황과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채권확보와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산업교육청과 풍속 종교촌에 대해서는 삼부토건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건립비 440억원에 대한 민자투자 의양서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보험증권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 44억원을 납부 받아 보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종 입찰 참가자에게 제한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할 계획임. 앞으로 도에서는 내년 10월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하는 등 2005년까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질문3 : 구드래 고수부지 정비사업 추진 촉구

· 당초 60여억원을 투자하여 구드래 고수부지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고수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하여 문화재청의 반대에 부딪치고, 인공적인 시설을 제외하도록 협의되어 호안 및 산책로 포장을 제외함으로써 사업비가 27억원으로 대폭 축소 된 걸로 알고 있음.

현재, 사업추진은 농작물 보상관계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현장 사무실만 덜렁 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음.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어 자연과 문화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색 있는 관광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수백년 동안 밀려온 토사로 퇴적된 고수부지가 공주시 공산성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부여군의 구드래 고수부지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사유와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지를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 보았거나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유상곤 〕

· '84년도에 구드래 일원 273만㎡를 국가문화재인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어 사업비 60억원을 지원해 호안정비와 산책로 개설, 수목 등을 식재해 부여 군민과 외래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상 인위적인 시설 설치는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하여 지난해 12월 사업을 착수했음.

그러나 하천점용 주민들과의 영농보상 문제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머지 않아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구드래 일원은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백제의 명승지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역사 문화 환경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백제고도 이미지에 걸맞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존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문4 : 금강 수질오염문제 및 대책

·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와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청댐 상류의 물이 일부 용담댐으로 유입됨으로써 대청댐 방류량이 극히 적어져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우리 도민의 젖줄인 금강이 썩어 가고 있음. 더구나 공주시에 라버댐이 건설되면 금강 광역상수도 급수권인 부여군과 논산시 일원의 도민 등은 썩은 물만 먹고살아야 할 형편임. 앞으로 금강을 살리고 지역도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라버 댐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먼저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담댐 담수시에는 하천유지 용수량이 감소되어서 대청호와 금강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대전 충북과 공동으로 용담댐 용수 배분량 재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

또 라버댐은 '93년 8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금강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인가 시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금강의 하천수위 유지를 위해서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의회라든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제시로 현재는 유보된 상태임.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금강수계 물 관리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강 수질을 2005년까지는 2급수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5 : 홍성화장장 운영상 문제점과 도 직영화 방안

· 홍성 화장장은 홍성군에서 수요자 원칙을 주장, 각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공동투자 방식으로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분담금을 출연하지 않는 시·군도 문제는 있거니와 이를 빌미로 해서 화장을 거부하는 것은 충절의 고장인 우리 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특히 화장장은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신을 안고 이곳저곳 他道의 화장장을 전전해야 한다는 비참함은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함. 이 화장장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홍성 화장장은 지난 '97년부터 화장로의 증설, 주차장 정비, 진입로 개설 등 약 25억원을 투자해서 홍성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음. 또한, 홍성 화장장 개선사업으로 화장장의 신축이라든지 화장로의 신설, 납골당 신축 등 화장장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라든지 기본설계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음.

화장 거부에 대해서는 화장로가 현대화되어서 새롭게 화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도와 시 군의 출연비율이라든지 이용문제 등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 주민 모두가 불편 없이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6 : 교원 인사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이제 교육도 지방화시대에 맞춰 학부모들의 민의를 반영하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며, 시·군 교육장만큼은 그 지역에서 덕망있고 교육행정에 밝은 교육자로 임명되어야 된다고 생각됨

그러나 현재의 인사행태를 보면 인사권자의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음. 교육에 민의를 반영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교육장을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지역 인사와 학부모 등 민의를 최대로 반영하여 교육장 등을 임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 시 군이 15개인데 15개 교육장 중에서 열 명이 자기 고장을 잘 알고 고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림.

■ 질문7 : 교원 출퇴근으로 인한 방과후 생활지도 대책

· 도내 교원들의 주소지를 보면 50% 이상이 대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소요되어 퇴근과 함께 방과후 교외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생들의 탈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지도관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방과후 교외지도 활동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교육감께서는 주민 한사람이 지방교부세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교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교외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야간 교외 생활지도를 위하여 예산을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 교육청별 학생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 합동하여 월 1회 이상 우범 지역의 순찰과 유해 업소 출입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음.

교원이 야간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사들에게는 전보 시에 가산점을 주어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생활 지도에 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가능한 희망하는 거주지로 전보하여 관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Ⅳ. 5分 發言 要旨

1. 전영환 의원(서천군, 자민련)

■ 장군단지 활성화 방안

· 그 동안 서천군 지역의 장항국가공단에 2002년도 실시설계비가 15억원 계상이 되었지만 똑같은 15억원을 부담해 줘야 될 토지공사에서 아직도 확실하게 부담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잦아지고 있음.

앞으로도 국가공단 조기착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지난번 200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사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연수여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고려해서 예비심사시에 삭감을 하였음.

200만 도민께서 도의회에 살림을 맡겨주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잘 감안해서 살림을 이끌어 달라고 맡겨준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예산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였던 것을 예결위원회에서(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수정결의를 하셨는바, 최종 심의에 앞서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당초에 예비심사 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최종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림.

第37節 第157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7회 임시회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1. 12. 27(목) ~ 12. 29(토), 3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2. 27(목)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3. 호주연방남호주주의회방문결과보고의건	
12. 28(금)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1.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발행지급보증동의안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2. 29(토) 11:00	운 영 위	1. 제15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발행지급보증동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6		
조례안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1	1.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주식전환사채(CB) 발행지급보증 동의안	
기 타	4	1. 제1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4. 호주연방남호주주의회 방문결과 보고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1. 12. 27, 11:00) 200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 남호주주의회를 방문한 우리도의회 대표단으로부터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발행지급보증동의안 등 총 2건을 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34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1. 9. 8)	행자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 선임요건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보완함.	2001. 12. 29	2001. 12. 29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61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주식전환사채(CB) 발행지급보증 동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1. 12. 7.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회부(의결)일	2001. 12.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조건제시)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12. 29)
	결 과	원안가결(조건제시)
이 송 일 자		2001. 12. 29.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99년 9월 개장하여 2년 3개월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농림부의 농안기금 및 충청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차입경영하였으나, 아직도 운영자금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적자발생의 주요원인이 되어왔음.

○ 2기 경영진은 조직업무의 전반적인 관리강화로 경영실적을 다소 호전시켜가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당초 구상된 사업을 제대로 실행치 못하고 있어 자금의 흐름이 용이한 소매중심사업으로 경영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

○ 국내 유일의 도매형 산지물류센터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만 충남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활성화를 시켜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의 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물류센터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조건임.

○ 이번 외자유치는 단순 차입이 아니라 상장후 주식으로 전환해 주면 상환이 완료되는 주식전환사채(CB)로서 5년내 상장 성공시 자금문제는 해소가 가능함.

○ 충청남도가 지급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보증채무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주식전환사채(CB) 발행지급보증 동의안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2001. 12. 4일 주식전환사채발행에 따른 지급보증을 신청한 바, 다음과 같이 보증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115조및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충청남도보증 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1. 지급보증의 내용

- ㅇ 주채무자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 ㅇ 보 증 자 : 충청남도지사
- ㅇ 사 업 명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자금 외자유치
- ㅇ 채 권 자 : 프랑스, CREDIT LYONNAIS(크레딧 리오네스) 은행
- ㅇ 채 무 액 : US$ 15,000,000(한화 190억원 정도)
- ㅇ 이 자 율 : 5년간 년리 2%
  단, 조기상환시는 6개월 LIBOR금리(2.5%) 부가
- ㅇ 상환기간 : 5년
- ㅇ 상환계획 : 5년째 상장을 통해 주식으로 전환(상환완료)

2. 보증사유

- ㅇ 주채무발생사유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자금 외자유치
- ㅇ 도보증이 필요한사유 : 도가 대주주로서 보증필요
- ㅇ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충청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3. 보증에 따른 준수사항

- ㅇ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ㅇ 채무자의 사업내용 및 보증내용 변경시 도지사의 승인 필요
- ㅇ 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본 채무를 상환함

第38節 第158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8회 임시회는 도와 교육청의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2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2. 1. 25(금) ~ 2. 5(화), 12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2. 1. 25(금)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3. 2002년도충청남도교육청업무계획보고	
13:30	운 영 위	1. 제15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회사무처소관)	
1. 26(토) 11:00	행 자 위	1. 의정자료수집	
	교 사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양대학소관)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1. 27(일)		공 휴 일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 28(월) 11:00	행 자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기획정보실소관)	
	교 사 위	1. 현장방문	
10:30	농 경 위	1. 농업인대토론회참석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1. 29(화) 11:00	행 자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총무과소관)	
	교 사 위	1. 현장방문	
	농 경 위	1. 현장방문 - 준설사업장(예산) - 배수개선병행경지정리사업장(예산)	
11:00	건 소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2.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종합건설사업소소관)	
1. 30(수) 11:00	행 자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공보관실소관) 2.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감사관실소관)	
11:00	교 사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여성정책관실소관) 2. 2002년도업무계획보고(보건환경연구원소관)	
	농 경 위	1. 현장방문 - 아산화훼생산영농조합(아산)	
11:00	건 소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소관)	
1. 31(목) 11:00	행 자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자치문화국소관)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교육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소방안전본부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 1(금) 11:00	행 자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공무원교육원소관)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농 경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원소관)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2. 2(토)		1. 의정자료수집	
2. 3(일)		공 휴 일	
2. 4(월) 11:00	행 자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계룡출장소소관)	
11:00	교 사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경제통상국소관)	
11:00	건 소 위	1. 대한건설협회충청남도회임원과의간담회	
2. 5(화) 11:00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지급보증변경동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1		
조례안	6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1	1.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지급보증변경 동의안	
기 타	4	1.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002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 보고 4. 200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보고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2. 1. 25, 11:00) 2002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다.

○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2. 2. 5, 11:00)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6건과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지급보증 변경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52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교 육 감 (01.11.26)	교사위	○2002. 3. 1자 신설 학교 명칭 삽입,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지되는 학교명칭 삭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 명칭 변경, 교명과 학교 주소를 변경함 -학교신설 : 4교(유치원1, 초등1, 중등2) -학교폐지 : 6교(유치원3, 초등3) -분교장개편 : 1교(초등1) -학교명 변경 : 2교(초등1, 고등1) -위치변경 : 2교(유치원1, 초등1) -주소변경 : 1교(중등1)	2002. 2. 5	2002. 2. 6	원안
354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육 감 (01.11.26)	교사위	○교육청, 소속기관, 관할 각급 학교에 배정된 관용차량의 차종변경, 차형 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승인과 재해 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사립유치원 연금대상기관 지정, 관할 각급 학교의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장에 추가로 위임함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직속기관장 및 고등학교장에 위임	2002. 2. 5	2002. 2. 6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64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2. 1. 19)	행자위	○홍성소방서 신설에 따라 기존의 보령소방서와 신설되는 홍성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함. -천안소방서 : 천안시 일원 -공주소방서 : 공주시,연기군 일원 -보령소방서 : 보령시,서천군 일원 -아산소방서 : 아산시,예산군 일원 -서산소방서 : 서산시,태안군, 당진군 일원 -논산소방서 : 논산시(계룡출장소 관할구역 포함), 금산군, 부여군 일원 -홍성소방서 : 청양시,홍성군 일원	2002. 2. 5	2002. 2. 6	원안
365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02. 1. 19)	행자위	○홍성소방서 등 소방관서 신설 및 도소방안전본부의 화재조사·통신기능보강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규승인 정원 88인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 투자심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정원 1인,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에 따른 시군의 분배소 축소로 감축된 정원 3인을 도정원으로 조정·책정함.	2002. 2. 5	2002. 2. 6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66	충청남도도세조례 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2.1.19)	행자위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추가함. 주민의 교육시설 이용편의 제공과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원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조례를 제정함.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각각 1개월 늦추어짐에 따라 재산세에 병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맞게함. ○군납업 및 건설업자 등록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폐지되어 등록세율을 삭제함.	2002. 2. 5	2002. 2. 6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67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2. 1. 19)	행자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기존의 용어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함. ○신규임대사업자 대부분이 토지 취득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	2002. 2. 5	2002. 2. 6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68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지급보증변경 동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2. 1. 31.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회부(의결)일	2002. 1. 3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조건제시)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2. 2. 5)
	결 과	원안가결(조건제시)
이 송 일 자		2002. 2. 6.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99년 9월 개장하여 2년 3개월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농림부의 농안기금 및 충청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차입경영하였으나, 아직도 운영자금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적자발생의 주요원인이 되어왔음.

○ 2기 경영진은 조직업무의 전반적인 관리강화로 경영실적을 다소 호전시켜가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당초 구상된 사업을 제대로 실행치 못하고 있어 자금의 흐름이 용이한 소매중심사업으로 경영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

○ 국내 유일의 도매형 산지물류센터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만 충남농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활성화를 시켜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의 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물류센터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조건임.

○ 이번 외자유치는 단순 차입이 아니라 상장후 주식으로 전환해 주면 상환이 완료되는 주식전환사채(CB)로서 5년내 상장 성공시 자금문제는 해소가 가능함.

○ 충청남도가 지급보증을 하기 위해서는「충청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지급보증변경 동의안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2001. 12. 4일 주식전환사채발행에 따른지급보증을 신청한 바, 다음과 같이 보증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115조및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충청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1. 지급보증의 내용
   - o 주채무자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 o 보 증 자 : 충청남도지사
   - o 사 업 명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자금 외자유치
   - o 채 권 자 : 프랑스, CREDIT LYONNAIS(크레딧 리오네스) 은행
   - o 채 무 액 : US$ 15,000,000(한화 190억원 정도)
   - o 이 자 율 : 5년간 년리 2%
     단, 조기상환시는 6개월 LIBOR금리(2.5%) 부가
   - o 상환기간 : 5년
   - o 상환계획 : 5년째 상장을 통해 주식으로 전환(상환완료)

2. 보증사유
   - o 주채무발생사유 :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자금 외자유치
   - o 도보증이 필요한사유 : 도가 대주주로서 보증필요
   - o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충청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3. 보증에 따른 준수사항
   - o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o 채무자의 사업내용 및 보증내용 변경시 도지사의 승인 필요
   - o 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본 채무를 상환함

第39節 第159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59회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2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2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2. 3. 4(월) ~ 3. 15(금), 12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2. 3. 4(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5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30	운 영 위	1. 제16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5(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교 사 위	1. 현장방문 - 당진군 분뇨처리장, 당진교육청, 호서고등학교	
11:00	농 경 위	1. 농림수산국 현안사항보고 - 봄가뭄대책 등	
	건 소 위	1. 현장방문 - 서해안 고속도로(당진~장항)	
3. 6(수)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교 사 위	1. 현장방문 - 예산 효창초등학교, 예산공설묘지, 예산교육청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00	농 경 위	1. 경제통상국 현안사항보고 - 신나게기업하는충남만들기 등	
	건 소 위	1. 현장방문 - 현대식소방시설견학 (주)삼성전자아산공장(아산)	
3. 7(목)	행 자 위	1. 현장방문 - 주민자치센타운영실태와함상공원조성현장확인 (아산, 당진)	
	교 사 위	1. 의정자료수집	
11:00	농 경 위	1. 농업기술원 현안사항보고 - 고품질 쌀생산계획 등	
11:00	건 소 위	1.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3. 8(금)	행 자 위	1. 현장방문 - 왜목마을 관광지개발 현장확인(당진)	
	교 사 위	1. 의정자료수집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현장방문 - 남면동면간 국지도확·포장공사(연기)	
11:00	꽃박특위	1.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사업추진상황보고(태안)	
3. 9(토)		의 정 자 료 수 집	
3. 10(일)		공 휴 일	
3. 11(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11:00	교 사 위	1.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농 경 위	1. 의정자료수집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3. 12(화) 10:3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3. 13(수) 10:30	본 회 의 (제 3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3. 14(목) 10:30	본 회 의 (제 4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3. 15(금) 11:00	본 회 의 (제 5 차)	1.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5. 2002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6.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계룡특례시설치를위한건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4		
조례안	6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안	1	1. 2002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건의안	1	1. 계룡출장소 설치를 위한 건의안	
기 타	6	1.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강화섭·송민구·강영성·전용설·윤석우의원)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전영환·박찬중·강태봉·송영철·한소환의원) 6.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심정수·이복구·신재원·송중빈의원)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2. 3. 4, 11:00) 2002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2. 3. 12, 10:30)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화섭(연기), 송민구(비례), 강영성(부여), 전용설(홍성), 윤석우(공주)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2002. 3. 13, 10:30)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틀째를 맞아 전영환(서천), 박찬중(금산), 강태봉(아산), 송영철(논산), 한소환(연기) 의원 등 5인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2002. 3. 14, 10:30)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사흘째를 맞아 심정수(금산), 이복구(서산), 신재원(보령), 송중빈(논산) 의원 등 4인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3002. 3. 15, 11:00)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 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 제정안 3건,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2건,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2002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계룡특례시설치를위한건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委員會 活動

o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69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2. 2. 28)	행자위	o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던 출제수당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출제 위원의 자긍심 고취 및 양질의 시험문제를 확보하려는 것임. - 객관식(문제당)시험문제 출제수당을 현행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지급 단가를 인상함.	2002. 3. 15	2002. 3. 15	원안
370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도 지 사 (02. 2. 28)	행자위	o지금까지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고 고객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공무원의 의무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함. -서비스헌장 제정부서를 모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도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도 이 조례를 준용토록 함.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 공표하도록 함.	2002. 3. 15	2002. 3. 15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헌장에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보상할 범위와 보상금품의 지급방법을 정함.			
37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2. 2. 28)	행자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신규 증원된 2인을 道 정원으로 책정함. -집행기관의 정원을 2인이 증원된 1,605인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89인으로 함. ※책정정원(도 본청 2명) -지방사회복지주사 1명,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명	2002. 3. 15	2002. 3. 15	원안
372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도 지 사 (02. 2. 28)	행자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대체·지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지원·육성에 관하여 정하며, 그동안 운영	2002. 3. 15	2002. 3. 15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위원중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관련국장으로 교체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지원방법을 신설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통합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 수입금 출납원, 총괄기금지출원이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함.			
374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도 지 사 (02. 2. 28)	교사위	○정신질환발생 예방과 치료, 사회복귀 유도로 정신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조례로 정한 내용이 관련 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폐지함.	2002. 3. 15	2002. 3. 15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75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	도지사 (02. 2. 28)	건소위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함. -부담금의 부과율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함.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업계획의 허가·인가·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함.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등으로 함.	2002. 3. 15	2002. 3. 15	원안

ㅇ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73

2002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2. 2. 28.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2. 2. 28.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02. 3. 15)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2. 3. 15.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2002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 관리계획 내역

o 일반회계소관 재산

구 분	재 산 종 류	관련사업	위 치	건 수	수 량	가 액 (천원)	비고
처 분	토 지	안면도 관광지개발	태안 안면 승언(중장)	137필지	2,151,349㎡	16,771,184	

o 특별회계소관 재산

구 분	재 산 종 류	관련사업	재산별	건 수	수 량	가 액 (천원)	비고
합 계						6,134,084	
처 분	토 지	안면도 관광지개발	태안 안면 승언(중장)	182필지	531,334㎡	3,379,396	
	콘 도 회원권			132구좌		2,754,688	

ㅇ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76

계룡특례시 설치를 위한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2. 3. 13.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02. 3. 15)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2. 3. 15.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 제안이유

ㅇ 정부에서는 1983년 국가보위에 필요한 중요시설 구역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신도안지역을 선정하여 계룡대(3군 본부)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도시 건설과 시설치를 약속하였으며

ㅇ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1. 9. 20 충남도청 방문과 2001. 9. 28 국군의 날 행사시 계룡대에서 "계룡지역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특례시」를 설치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임.

ㅇ 3군 본부의 계룡대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민욕구가 요구되는 한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현 면단위 체제에서는 그 충족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ㅇ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계룡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市체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

ㅇ 이에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은 정부의 약속사항인 계룡특례시 설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임.

계룡특례시 설치를 위한 건의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와 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총재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는 1983년 국가보위에 필요한 중요시설 구역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신도안 지역을 선정하여 계룡대(3군본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新都市 建設과 市 설치를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조상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田畓을 모두 내주었고 1989년 3군본부가 이전되면서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13년째 오늘날까지 살아왔으나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1년 9월 20일 충남도청 방문과 9월 28일 국군의 날 행사시 계룡대를 방문하시어 "계룡지역은 여타 지역과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특례시」를 설치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정부의 약속사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서 계룡지역주민 모두는 커다란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국방의 중추시설인 3군본부가 계룡대 이전과 함께 도시기반이 확충되면서 최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다양한 주민욕구가 요구되는 한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현 면단위 체제로서는 그 총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계룡신도시 종합발전계획」도 성공리에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市체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약속사항인 계룡특례시 설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방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계룡지역을 특례시로 승격하여 軍의 위상을 확립해야합니다.

둘째, 행정과 재정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례시로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까지 추진해온 신도시 건설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마무리하여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新都市 建設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 중요시설이 위치한 계룡지역을 대한민국의 상징적인「국방 모델 도시」로 육성하여 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공동번영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방적 가치 창출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국방의 특화가 요구되는 계룡지역에 대해 관계법을 정비하여「특례시」로 설치해 줄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2년 3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Ⅲ. 道政 및 敎育行政에 관한 質問·答辯要旨

1. 강화섭 의원(연기군, 자민련)

■ 질문1 : 그린벨트관련 민원 해소 방안

·현재, 충청남도내 그린벨트는 행정구역이 다른 대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보존하고 행정구역상 모든 분야에서 대전광역시와 무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취지와 유독 그린벨트와 연계하여 우리 충남도민만 재산권 행사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전시장과 협의하여 우리 도민이 매년 산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협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림.

다음은 그린벨트내 묘지로 산림이 많이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 허가해 주시던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기회에 도내 모든 납골묘 설치기준과 모델을 우리 도만이라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대전시와의 보상협상 관계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을 확정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부분 해제를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충청북도, 대전시와 공동으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중 우선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담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공동묘지와 사찰 경내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으며, 납골당 설치기준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납골당의 모델은 개별업체가 의장등록을 취득하여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특정한 모델을 제정하는 일은 어렵다고 판단이 됨.

■ 질문2 : 대전시 지하철을 금남면까지 연장시공 방안

· 대전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을 연기군 금남면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그린벨트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건설교통부나 대전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지하철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이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대전시의 위성도시는 물론 연기군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대단위 주택단지를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지하철 등 도시교통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교통상황과 장래 교통수요 예측, 그리고 경제성, 타당성 평가를 반영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사업임. 현재 연기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하철 연장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나 여건이 성숙되면 지하철 연장방안을 포함해서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방안 등을 관련기관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국립경찰의 지방경찰화

· 국립경찰 지방화 문제와 관련 본 의원이 도의원에 당선돼 제125회 2차 본회의 때 질문을 하였는데 금방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그 후 진행과정과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자치경찰제 논의는 우리 도만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주도되어야 할 전국적인 사안으로 그동안 국회을 비롯한 학계나 언론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를 하는데 지방경찰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지 자치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지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함.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제반 준비를 해 주도록 요청할 것을 약속 드림.

■ 질문4 : 차별화된 상표관리 및 향후 방향

· 시군은 물론이고, 도마저 상표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품질 좋은 농산물이나 제품을 생산하고도 타 지역 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임.

한동안 우리 도에서 쓰던 청풍명월도 이웃 충청북도한테 빼앗긴 상태가 되었고 유명상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임. 도내 산재해 있는 상표들을 모아 정말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상표관리를 하실 의향과 앞으로의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광역브랜드로 상표등록한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에 사용하는 「으뜸Q」와 농협지역본부에서 개발하는 충남쌀 「청풍명월」 그리고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해뜰」이 있으며 개별 브랜드의 경우에는 규모화 되고 조직화 된 생산자단체별로 약 806개의 고유상표를 사용하고 있음.

이 「으뜸Q」는 도지사 추천 53개 농·축산물에 한정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청풍명월 브랜드에 대해서는 당초 21개농협 RPC에서 생산된 쌀에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현재는 미질관리가 부족한 RPC는 제외하고 17개 RPC에서만 사용하고 있음.

다만, 인접도인 충청북도의 일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청풍명월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농협충남지역본부를 통해서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였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도 강구해서 상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임.

또한 시·군별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브랜드 개발과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사용중인 브랜드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확대하는 등 브랜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5 :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방안

· 중국의 WTO 가입과 자유무역 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특화하는 작업이 정착됐어야 함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아직도 말로만 특화하고 행정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만이라도 몇 개 품목을 특화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매년 지역별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으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다년간 집중투자가 필요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지난해부터는 시군별로 2개 작목씩을 선정해서 3년간 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난해에 예를 들면, 천안시에 포도, 배 등 29개 작목에 대해서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설 개선 등 모두 5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50억원씩을 계속 투자해 나갈 것임. 아울러 3년이 경과된 후에도 기술개발과 홍보, 판매 등 농업인들이 직접 해 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지역의 대표 농축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6 : 금강종합개발의 구체적인 계획

· 금강에서 많은 골재를 매각하여 많은 수익을 낸 도나 시·군에서 아무런 사후관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연기지역 금강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지난 '95년 5월부터 하천공사 시행 허가를 받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고수부지 조성, 하상유지공사와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 약 3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이익금에 대한 투자가 지역별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임.

앞으로 금강 환경친화적 하천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과 개발효과 등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임. 금년도 연기군지역에 대한 투자는 동면지역의 미호천에 하상유지공과 대평리 지역에 저수호안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

■ 질문7 : 용도지역내 사유지의 행위제한 대책

· 도시계획이나 공원지역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우리 도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 만이라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도시계획 구역내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10년이상 미집행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자에 한해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현재 시·군에서는 매수청구신청서를 접수중에 있으며, 시장·군수는 2년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보상하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도에서는 도내 전체 도시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 재검토 중에 있어 불합리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 도시계획내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계획적인 개발 유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8 : 붕괴되는 공교육의 대책

·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하여 공교육은 무너져 과열 과외문제, 학력저하로 교육경쟁력 악화, 학교간·지역간 격차, 학교선택권, 사학자율권등 수많은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교육감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떠한 정책적 건의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떠한 건의를 했는지 자세한 답변과 일선 교사들이 학교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학부모들이 믿고 따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공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있음.

충남교육의 중점 시책사항도 제가 취임 이후 일관되게 『효 교육』과 『학력신장』을 축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시책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

■ 질문9 : 학교의 난방용 석유의 면세화 방안

·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월동용 석유를 일반 시중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면세화 해서 농가에 이익을 주듯이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을 한다면서 교육에 쓰는 기름마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충청남도내 각급 학교에서 동절기 난방 수단으로 유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면세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재정의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됨. 앞으로 각급 학교의 월동용 유류에 대한 면세문제는 관계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여 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2. 송민구 의원(비례대표, 자민련)

■ 질문1 : 호남고속철도의 노선선정 대응 방안

·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계획되었던 정부의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이 당초 안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특정지역의 말도 안되는 개발논리와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어 재용역이라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음.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천안분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자세로 일관하여 왔으며, 더욱이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이 미흡하여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의 중간 연구결과에서 제안한 3개 노선에 대해 대전과 충북의 주요 주장이 무엇인지,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송지역 개발사업이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오는 5월 교통개발연구원이 분기노선최적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전에 대전과 충북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논리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마련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모름지기 국책사업은 특정지역의 이해나 정치적 논리를 떠나 21세기를 이끌어 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기본 계획으로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충북에서 주장하는 오송을 분기점으로 해서 박정자를 통과하게 되면 대전에 역사를 하나 더 신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인 계룡산의 아름다운 경관파괴와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대전시에서 주장하는 대전을 분기점으로 해서 벌곡을 거쳐 통과하게 되면 현재 대전은 경부 호남고속 철도 연결시 극심한 혼잡비용 가중과 도시의 과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이용객인 호남주민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인 낭비요인으로 대두되어 더 많은 역기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계획의 신뢰성과 타당성, 국토의 균형발전, 교통수요의 분산관리, 이용객의 편의성, 그리고 환경보전 측면 또한 우리 충남도민과 호남권 주민 모두가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천안분기 공주 경유 논산 통과 노선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임.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호남고속철도 노선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97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천안분기 직결노선이 최적 안으로 제시된 바 있음.

그러나 충북의 오송분기노선 주장 등으로 확정을 미루어 오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해 5월 "기본계획재수립용역" 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음.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2월 천안분기 노선의 조기 확정을 정부에 건의한 이래 광주, 전남·북 등 호남권과의 협조하에 내실있는 대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에서는 지역발전 잠재력 호전에 따른 오송분기 주장을, 대전에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통과 논리로 대전분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화합이나 또는 지역의 복합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선정 문제는 지역차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며, 천안 분기의 직결 노선을 두고 우회 노선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적 장래를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을 통해 중앙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천안분기의 당위성을 입증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질문2 : 금강 라버댐 설치 촉구

· 금강 라버댐 설치는 '93년 8월 30일 건교부로부터 금강종합개발사업 계획 인가를 받았고 '95년 5월 17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 계획 인가를 관리청으로부터 받았으며, '96년 5월 16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2001년 1월 18일 종합건설사업소에 사업추진 지시를 내렸던 금강 라버댐 건설사업의 예산이 2001년 마무리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음.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가와 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된 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의견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음. 전국에 약 80여 개의 라버댐이 아무런 문제없이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 있으며 라버댐 효과 또한 아주 좋음.

14만 공주시민의 숙원인 라버댐은 빠른 기간내에 원래의 계획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공주 곰나루에 설치하려는 라버댐은 지난해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했으나 금강 생태 환경과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관, 단체간의 이견이 제기되어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자 유보하였습니다만, 금년에 발주할 금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본 용역에 라버댐 설치와 관련된 타 지역의 시공사례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조사한 후 적절한 시행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질문3 : 도청 이전 추진 상황

· 200만 도민의 관심사인 도청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서는 지난해 7월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까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

도청이전의 입지기준은 지역편의성, 발전성, 균형성 등에 사회·경제적 기준과 자연환경성, 수자원과 토지확보의 용이성 등에 물리·환경적 기준, 그리고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합의 실천성, 이전 절차의 합법성 등 정치·행정적 기준과 함께 국내외 선행 연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입지 기준을 마련한 후에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도의회의 결의를 받아 입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것임. 이러한 기준이 설정이 되면 먼저 1단계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2단계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설문조사, 또 전문가의 견해 등을 합쳐서 한 세 개 정도의 후보지로 압축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하려고 함. 이러한 세 개 정도의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최종 후보지는 도의회에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 드림.

■ 질문4 : 고품질 쌀생산 등 농업정책 추진

· 본 의원은 왜 우리 충남쌀이 경기미와 비교해 싼값을 받아야 하는지,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좌절과 실망할 때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사하고 검토해 봤음.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충남도의 쌀은 생산기술이나 환경 등 여타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인근의 경기미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것이 결론임. 그 동안 일반적인 증산시책에 의해 다수확 품종만을 고집해 왔으며 충남지역 쌀이 경기미와 비교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오명을 쓰고 있으면서도 브랜드개발과 적극적인 홍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함. 따라서, 다수확 고품질 시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충남의 쌀이 경기미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릇된 편견에 대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지난 해 쌀값 하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쌀산업 정책이 양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의 양적 성과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고 품질의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올해를 「고품질 쌀 생산의 원년」으로 정하는 한편,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한 비료공급에 15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음.

또한 고품질 벼 재배면적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사녹비 재배권장 등 고품질 쌀생산 기반에 노력해 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RPC를 대상으로 한 품종별 또는 지역별, 개인별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고품질쌀계열화」 사업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2만5,000ha까지 확대하고 생산부터 매입, 가공, 판매까지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임. 또한 RPC 계약재배 품종도 2~3개 품종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면서 투입구 증설지원을 통해 혼합도정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면서 볏짚환원과 질소시비량 감축 등 품질향상과 관련된 시책도 함께 시행해 나가겠음.

■ 질문5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 이미 복지 선진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십년 전부터 농어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를 뛰어넘어 국가차원에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왔음. 본 의원은 농어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도시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420만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의료·교육·문화·행정의 서비스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준하는 농어촌 복지공단의 설치는 열악한 복지여건 속에 있는 농촌지역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함. 지사님께서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복지공단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심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그동안 우리 나라 농업정책은 농업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생산기반정비와 유통시설 확충, 농업기계화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여 농어촌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어촌 복지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져서 이농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들어서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기초생활시설 정비를 위해서 101개 면을 대상으로 한 정주권개발사업과 마흔 여섯 곳의 문화마을 조성, 또 농촌 지역의 식수해결을 위한 대형 생활용수 공급에 182억원을 투입, 농업인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만7,000명에 175억원의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 복지확충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등이 새롭게 추진되어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이미 지난 '98년부터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별로 전통적 특성을 살리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준높은 삶의 공간을 지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주권개발과 문화마을 조성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 이번에 송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복지공단 설립 문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음.

■ 질문6 :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

· 충청남도에서 글로벌시대 조류에 걸맞게 금년부터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조성에 적극 나선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시책이며,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공무원들이 먼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은 박봉에다 격무에시달리고 승진 적체, 사회적 인식의 평가절하 등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보여 신나게 일하는 공무원 만들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기업 및 외자유치를 통해 충남 경제활성화에 큰 업적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 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의 우대뿐만 아니라 물질적 보상도 필요하다 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조직에 있어서 사기저하는 곧 업무의 비효율로 직결되는 만큼 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사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직급에 승진인사를 실시한 바 있음.

또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 54명에 대해서는 전직과 특채를 시킨 바가 있으며, 정부의 복수직급제 도입,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연한 단축과 범위확대 등을 건의해서 지난해 6월 18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기능직 근속승진 연한을 1년 단축한 바도 있음. 아울러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와 보육시설의 확충 운영 등 보완적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과 취미클럽 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분위기 쇄신을 통한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 외자도입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유치라든지 충남 발전에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 점수의 가점을 준다든지,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음.

■ 질문7 : 21세기에 맞는 여성정책 수립 방안

· 단순노동으로 여성을 대변했던 구시대의 유물인 "부엌" 이 사라져 가고, 남성 우위 힘이 상징하던 20세기를 지나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의 4차원적 공간속에서 이제는 남녀 모두가 상호 동등한 삶의 동반자로서 새 물결, 새 문명의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갈 때라고 생각함.

그러나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며 농촌의 52%가 여성인 현실에서 이들의 복지와 능력발휘 기회는 매우 부족한 현실임. 따라서, 여성정책이 상징성이나 일회성이 아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여권신장, 양성평등, 가정과 사회에서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와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21세기 여성시대에 걸 맞는 시책마련을 위한 지사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림.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 동안 도에서는 지방차원의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98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국단위 보좌기관인 「여성정책관실」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또한 '99년에 2010년을 목표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복지증진, 양성평등 등 총 4대 분야 103개 과제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음.

그리고 지난해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도정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충남여성포럼 발족,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여성정책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봄.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도정의 모든 분야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입안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이미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한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3. 강영성 의원(부여군, 자민련)

■ 질문1 : 선거관련 지역안정과 통합 방안

· 금년은 선거의 해로서 6월의 4대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본 의원은 조용하고 인심 좋은 양반의 고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판에 농락 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리 도민이 안정속에 생업에 전념하며 소신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그동안 도민들에게 보여준 노력에 대한 평가가 되고, 미래를 위탁할 믿음의 정치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속에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선거의 계절에 도민생활의 안정과 지역통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서는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지 않고, 도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행정 누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공명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간, 지역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행정과 생활치안에 역점을 두는 도정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도의 전 공무원들이 선거시기에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음.

■ 질문2 : 농어촌 활성화 대책

· 우르과이라운드를 거쳐 지난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 회의를 통해 뉴-라운드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 내에 우리 농작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으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서로 손을 맞잡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온 정열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림. 특히, 이웃 나라인 중국마저 WTO에 가입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렇다면 우리의 농어촌은 어떻습니까?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빈약한 농업기반과 고령화된 농가인력 등을 감안해 보면, 농어촌은 붕괴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그렇다면 도지사께서는 농업도인 우리 도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동안 많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제 봄이 되어 씨앗을 뿌리는 시점에서 무너져 가는 우리 농어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농업전문가와 농업인이 함께 모여서 「농업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역 농정방향을 모색하였고 토론결과를 중앙과 지방,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해야 할 일로 구분하여 건의하고 추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우선 지역 농산물의 시장우위 확보를 위해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매년 50억원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방안으로 방울토마토 등 10대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 육성하는 한편 10억원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10억원의 수출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해외농업 진출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접 지불제의 확대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공산업과 그린투어리즘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특히, 이달 중으로는 도지사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 정부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지역 차원의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해서 농업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3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추진 대책

· 부진한 백제권개발사업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민자유치는 불투명하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사업을 이월하는 등 2005년 완공을 위해서는 시기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음. 지사님께서는 백제권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예산확보에서부터 집행까지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민자사업은 지난 '97년도에 삼부토건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에 440억원을 투자하는 민간투자 의향서를 제출 받아 승인하였고, 작년 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중에 착공할 계획임.
다만, 호텔과 컨벤션센타 등은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민간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 사업은 지금까지 용지매입·보상, 전문가의 자문, 고증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사업비 이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용지매입관련 민원이 해결되었고 제반 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중에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까지 박물관을 준공할 예정이며, 2005년까지 5개 기능촌 건축공사 등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4 : 금강수질오염 대책

· 그 동안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우리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청댐 상류의 물이 일부 용담댐으로 유입됨으로서 대청댐의 방류량이 줄어들고 앞으로 수질악화는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봄. 또한 대전, 공주시의 폐수가 전량 정수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고 설상가상으로 공주시에서 라버댐을 건설한다면 금강 광역상수도 급수원인 부여와 논산일원의 주민들은 심각한 상수원 오염에 시달리게 될 것임. 빠른 시일 내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질오염 대책을 수립하여 주셨으면 함.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용담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하천 유지 용수량이 감소하여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대전·충북과 함께 용수배분량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금강의 수질은 2000년에 2급수에서 작년에는 3급수로 악화가 되었으며, 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수량이 급격히 감소된 상태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된 결과임. 금강수질보전을 위해서 2005년까지 9,700억원을 투자해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이것은 정부의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 대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함. 따라서 목표 년도로 잡고 있는 2005년까지는 부여지점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5 : 고교입시 부활의 문제점 및 해소 대책

·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고교입시 부활이라는 과거의 입학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래 여러 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진적인 평준화 정책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동기로 고교입시 부활이라는 대책을 수정 발표했는지, 그리고 시책이 추진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떠한 혜택과 성과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그 후 입시부활 문제를 유보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유보한다면 입시부활 시책은 포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몇 년쯤 유보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무시험 전형 시행 이후에 중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해이해지고, 교실 수업의 질이 하향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농어촌 고등학교의 미달사태 등 부작용이 나타나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적절한 현상을 막고 학력신장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염원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선발고사를 내신과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고 발표를 했음.

그러나 각 시군 운영위원 협의회장님과 교장, 단체장, 각 시군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올 중학교 3학년부터 시험을 내신과 병행하게 되면 혹한기인 1월중에 선발고사를 실시해야 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선발고사 시행을 1년간 유보해서 2004학년부터 적용하도록 요청이 있었음. 이를 우리 도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득이 1년을 연기했음.

고입전형시 선발고사를 병행하여 실시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점으로는 기초·기본 학력의 신장으로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인간을 육성할 수가 있고, 각 교과별 필수학습 요소의 성취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에 연계하여 수능고사에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으며,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로부터 학교교육의 신뢰를 확보하여 타 지역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과 생활지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장점을 기대하고 있음. 그래서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음.

■ 질문6 : 도·농간 학생 실력격차 해소 방안

· 시도별 학교 학력평가 발표를 접할 때마다 충청남도의 학생과 광역시 학생간의 실력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도·농간의 실력격차는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음.

교육감께서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그 동안의 교육행정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신 것을 바탕으로 도·농 학생간 실력 격차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대책이 수립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교육청은 도·농 학생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농어촌 거점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 중심학교와 지역육성 고등학교를 지정해 놓고 있음. 학생들의 기초, 기본 교육을 위해 교과별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실명제 부진아 책임지도제, 그리고 이렇게 책임있게 지도한 교사에게는 수당을 드리고 있음.

또한,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강화로 과외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우리 도교육청의 학력향상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본 학력을 향상시켜 도시와 농촌간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음.

4. 전용설 의원(홍성군, 자민련)

■ 질문1 :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

· 충남 서부지역 주민들은 심대평 지사님의 민선 7년 동안 도정 추진과 관련 각종개발사업이 공주를 비롯한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졌음. 고속도로는 고사하고 국도의 한 부분 확·포장이 안된 군이 있는가하면, 서해안 고속도로는 개통되었는데도 연결되어야 할 국도와 지방도로 확·포장이 안 되어 병목현상이 일어나 이번 설연휴 심한 교통체증을 실감했음.

공주가 동부지역의 중심지는 될지 모르지만 도 전체의 중심은 안 되는데 왜, 도로 중심축이 공주로 개발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간 균형발전방향과 서부지역 교통망 구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리적으로 호남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공주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림.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는 천안~논산간 80.9㎞ 고속도로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전~당진간 91.5㎞, 공주~서천간 61.3㎞의 고속도로도 지난 해 착공을 해서 2006년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음. 또한 지난 해 서해안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서해안과 중부내륙간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서해안 지역 주변의 광천에서부터 광천 인터체인지까지의 국지도 40호선, 장항과 서천간 국도 4차로 확충노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 도에서는 도 전역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철도, 도로 등 SOC 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음.

■ 질문2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폐지 및 외자유치 계획

· 동 회계는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설치되어 8년간 총 세입 794억9,800만원 가운데 일반회계 전출 213억9,300만원, 도유재산 매각 등

132억7,200만원 지방채 355억원 등 총701억6,500만원이고 보조금 등은 겨우 94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과 땅 팔고 빚 얻어 운영돼 왔고, 이번 회기에 또 땅 200억원을 팔겠다고 의회에 제출, 많은 예산낭비 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한 후 투명한 경영과 심도있는 개발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갈리아노사 아드날드카쇼기회장과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그 후 세계적 수준의 국제관광지 개발과 외국인 투자신고 및 법인을 설립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투자회사가 알라스로사로 바뀌는 등 지난 3년간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국제 사기단에게 도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과 카지노, 골프장, 테마공원 등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대책을 솔직하게 밝혀 주십시오.

〔 답변 : 자치문화국장 유상곤 〕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면도 개발 특별회계는 그 동안 편입용지 보상과 공공기반 시설조성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지방채 355억원을 차입 운영하였으나, 민자유치 지연으로 세입 재원이 확충되지 않아 부득이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지원 받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질문3 :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의료시설 확충 방안

· 우리 도의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 이제는 30만 명이 넘어 노령시대로 가고 있음. 그래서 노인치매, 만성질병으로 장기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정부가 중산층 노인치매 시설을 금년부터 1,500억원을 투자, 전국에 100개를 신설하여 월 40만원의 실비로 간병과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우리 도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요양시설을 하나라도 더 우리 지역에 유치 시켜 노인치매 및 중증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별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도내 노인 인구가 전남 다음으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22만5,000명이 됨.

이에 따라서 약 2.7%인 6,000여명이 치매와 중풍 등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으며,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병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무료 양로시설 7개소, 요양시설 5개소를 포함한 전체 노인요양시설이 31개소가 있으며, 금년에 완공되는 홍성의료원내 도립 치매요양병원을 포함해서 3개소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숫자에는 치료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2005년까지 노인 의료, 주거복지시설을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문요양 시설로 기존의 양로시설을 확충 개편하고자 함. 아울러 노인시설이 없는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투자여력이 있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의료시설이 확충되어서 도민의 노인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설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4 :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 홍성~덕산간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은 지사님의 선거공약 사업으로서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해 사전에 포장할 것을 제의하자 지사님께서는 기본설계를 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했음.

공약사업에 1일 교통량, 계속공사 등을 우선 순위로 보아도 금년 예산에 필히 반영시켜 계속공사를 시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사업비가 반영 안 되었는지요? 공약사업인 만큼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비라도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함.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지방도 609호 구간은 지방도 정비계획서상 금년부터 4차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고, 이 노선은 인근 덕산온천과 수덕사, 용봉산 등 유명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교통량이 많은 노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난 '99년까지 홍성읍에서 덕산방면으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3.1㎞ 구간에 대해서는 4차로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잔여구간인 9.3㎞ 구간에 대해서 4차로 확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음. 기본설계가 끝나는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겠으나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부터도, 그 다음에는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 다음에 감정평가 등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실제 예산투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짐.

5. 윤석우 의원(공주시, 자민련)

■ 질문1 :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 대책

· 현재 도내에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밤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동네, 내 집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자율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는 방범대원이 7,946명에 이름. 이들은 누구보다 솔선해서 사회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헌신봉사하면서 각종 행사시에 주민 지도계몽과 거리질서 유지, 심지어는 산불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개인적 이익이나 영광보다는 어렵고 소외 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음.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규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음.

두 번째는, 야간 근무활동 중에 상해나 각종 사고 발생시 보장대책으로 대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봄.

세 번째,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좀더 폭넓게 지원해야 된다고 봄.

넷째는, 자녀들에게 학자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임,

다섯째, 야간 방범활동시 순찰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원과 범죄 신고요원에 대해서도 민방위 기본교육을 면제해야 된다고 생각함.

지금 충남지역 자율방범대의 총 조직 숫자는 251개이며, 총 지원액은 3억2,644만원임.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한 개의 조직에 평균적으로 적게는 2만4,000원, 많게는 16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이 돈들은 1년간 야식비와 전기료, 차량 연료비, 난방비, 임대료,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비용 등이고 또한 잠바 구입비 등으로 쓰여짐. 하지만 이 금액은 실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모쪼록 성심성의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충남도의 적극적인 배려를 촉구하면서 위의 질문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 동안 도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대원 포상과 민방위 기본교육면제, 범죄신고 요원에 대한 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야간 급식비와 순찰장비 구입비 약 3억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활동에 비해서 지원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음.

도에서는 지난해 7월 자율방범대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율방범대지원 근거법을 제정해 줄 것을 중앙에 정책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음.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6. 전영환 의원(서천군, 자민련)

■ 질문1 : 농어촌의 문제점 및 대책

· 외환 위기 이후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한계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지방경제가 더 주저앉으면서 돈도 문화도 인재도 모두 서울로만 집중되고 있어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수도권 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식탁의 대부분 음식물이 수입농산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임. 과연 농어촌 몰락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에서 우리 농어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지역 농산물의 시장우위 확보를 위해서 안전하고 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그밖에 지역별 특화 작목 육성에 매년 5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으로 방울토마토 등 10대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억원의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와 또 다른 10억원의 수출안정화 기금조성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과 함께 해외농업 진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밖에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접지불제 확대시행과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가공산업 육성과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도 지원할 계획임. 지난 1월에도 농업전문가와 우리 농어민 단체들이 대토론의 장을 통해서 이 어려운 농어촌의 돌파구 마련 대책을 숙의한 바가 있고 특히, 내일 모레 3월 15일에는 도지사 직속에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지역차원의 발전계획도 수립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2 :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및 대책

· 가장 훌륭한 쓰레기 처리 방법은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일 것임. 그러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한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수조원 어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이미 각 시·군의 매립장 12개소 건설에 약 8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것이고,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 건설에 약 75억원, 추진 중인 7개소 시설비용에 약 6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 비위생 매립장 처리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주민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각 시·군의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을 3~4개 시·군을 한 단위로 광역화해서 건설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지난 해 우리 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1,628톤으로서 이중 음식물 쓰레기가 423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매립이 830톤으로 51%, 소각이 130톤으로 8%, 재활용이 668톤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도 재활용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절실한 상황에 있음.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솔선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천안시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따라 전 시·군에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광역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 반입에 대한 주민반발이 심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이 문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광역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도내 의료원 운영의 개선 방안

· 최근에 도내 의료원 운영상황을 보면, 4개 의료원 모두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물론 민간 의료기관과 달라서 경영수지 측면만을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적자 운영의 여러 가지 이유 중 각 의료원의 인력현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전체 인력 551명 중 의사·약사·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3명에 불과하고 사무직이나 기능직 인력이 너무 방만하게 채용되어 있는 실정임.

이미 타 시도는 각 의료원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경영 수익면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보건 향상의 문제점들을 다같이 해결해 나가는 추세인데, 우리 도내의 의료원의 인력구조가 과연 경영측면에서 올바른 인력구조 현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현실에 맞는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는 천안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이 있으며, 총 5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중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직과 보건직은 57%인 316명입니다마는 기능직 중에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보조요원 76명을 합치면 사실상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체 인력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그간 우리 도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처음으로 4개 의료원장을 모두 공개채용 했으며, 제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인력의 19%인 129명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가 있음. 금년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료원이 진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영수익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의회, 지역주민, 의료원노조 등과 협의해 나가겠음. 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수익성 쪽에 어느정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냐, 또 영세민 진료라든지 의료진료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냐 하는 쪽에서 양쪽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질문4 : 농어촌학교 살리기 대책

· 우리 도내의 농어촌지역 초·중학교들은 대부분 벽지학교 및 과소규모 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음.

아직도 학교시설 투자가 미흡한 것은 말할 것 없고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경우 도시지역의 초등학교들은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체결정으로 영어 전담교사를 자체 선발하여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러나, 반면에 농어촌 지역 아이들은 학교교육 외에 대부분은 겨우 학습지 교습을 통한 교육을 받는 실정이며, 초등학교에서 처음 영어 교육을 실시할 때는 관심이

많았지만 벌써 그 열기가 식어서 아이들이나 부모도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중학교에 가서는 큰 문제가 아닐는지요? 이제라도 이러한 실정의 농어촌학교 살리기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과소규모 학교는 늘어만 가고 자녀교육문제로 농어촌을 등지는 주민들이 늘어만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이하 지역에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점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거점학교로 지정이 된 2000년도에는 13개 과제 48개교에 30억원을 교당 평균 6,25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한 학교당, 2001년도에는 13개 과제 41개교에 30억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6개교를 지정하여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거점학교로 지정이 되면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이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면 읍면 이하의 초등학교가 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지원육성을 해 나가고 있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각 학교의 여건이 비슷한 두 개 이상의 단위학교끼리 교육과정편성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어나 예체능과 교과의 운영과 협동교육체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농어촌학교를 살리느냐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음.

■ 질문5 : 학교체육의 발전 방안

· 도내의 학교체육은 무슨 대회의 성적을 위해서만 애쓰지 일반학생들의 생활체육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학생 수가 몇 십명 되지도 않는 학교에 특정종목을 지정하여 팀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이런 학교체육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시·군별로 특기종목 선수를 선발하여 각 종목별로 팀을 운영하게 하고 학교별로는 엘리트 체육이 아닌 각자 학생들의 특기에 맞는 일반 생활체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지요? 이러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답변을 부탁드림.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교육청은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곧 충남체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음.

체육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로 실천하게 하고 체육 교과의 전 영역의 고른 지도와 타 교과로의 대체 수업을 일체 금지시키며, 실기와 이론을 겸한 수업과 수행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며, 학교체육 연구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수용하여 실천을 해 나가고 있음. 또한 방과후에 자율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체육교구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교육과정에 나오는 체육과정을 모든 학교가 하나도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음. 도내 모든 학교에서 1교 1인 1운동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교육감기 쟁탈 줄넘기운동 생활화를 초·중·고학생 전체가 실천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림. 또한 균형있는 학교운동부의 육성이 되도록 선수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보결보충수업으로 학생의 학습결손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음.

6학급 이하의 적은 우리 학생들에게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소규모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럭비 그리고 하키 등 단체종목의 운동부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소규모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단체종목은 규모가 큰 학교로 옮겨 육성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소규모학교에서는 개인경기를 권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7. 박찬중 의원(금산군, 무소속)

■ 질문1 : 도정현안 돌파를 위한 대응 방안

· 첫째는 대내외적으로 불어닥치는 도정의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10년 이상 우리 도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천안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전도 경유지로서 적합하다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느닷없이 대전광역시도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유치하겠다고 의회를 선두로 하여 시민단체는 물론 시 당국에서도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실정에 있음.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허용하려는 개정법령안이 지난 2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니만, 급기야는 아예 「규제완화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11 비전 연구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에 있음. 또한, 경인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도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음.

대내적으로는 6년만에 처음으로 도의 인구가 감소한 사실입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2,000여명이 감소했다는 도의 발표가 있었음.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도정의 환경이 도정의 목적을 성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감히 진단해 봄.

현재의 정책기능은 집행성격의 업무까지 다루고 있어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때문에 급박한 도전현상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 기능에 맡기는 것보다는 태스크포스(Task Force) 형태의 사안별, 다시 말해서 특별자문위원회라든가, 즉 "현안 대응팀"의 설치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호남고속철도 분기와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허용과 규제완화지역 지정 등은 우리 도와 관련된 최대의 현안이면서 시도간 직·간접적으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함.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현안과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기획정보실에 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총괄적인 업무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다만, 박 의원님 지적대로 정책담당관실이 정책개발 업무와 함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주요 현안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역세권개발팀이라든지 인삼의세계화추진팀, 전국체전준비팀, 장·군국가공단개발팀" 등 여러 가지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오고 있고, 특히 IMF 이후에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2개의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한 바도 있음.

또한, 엊그제 금산에서 한국타이어에 화재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즉각적으로 화재복구를 위한 행정 지원을 위해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림.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조직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현안업무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2 :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로당 운영비 전액 지원

· 민선자치 이후 노인복지 시책으로서 너도나도 경로당을 제일 먼저 신·증축을 추진해 왔으나, 문제는 난방비 등 운영비를 노인들이 각출하여 충당하고 있다는 점임. 우리 도내에는 약 4,000여 개소의 경로당에서 16만2,000여 어르신네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다진 역군의 세대이고 우리의 할아버지요 또한 아버지이기도 한 경로당의 어르신네들에게 이제는 경제력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따라서, 도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2001년말 현재 저희 도내에는 4,287개소의 경로당을 약 17만5,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충분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경로당에는 매월 4만4,000원의 운영비와 연간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중에서 난방비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다행스럽게 약 5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한 것이 사실임.

저희 도에서는 이 30만원의 내역이 국비가 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인상건의를 계속적으로 함과 함께 우선 저희 도에서는 절감노력을 같이 하고자 함. 우선 오래된 '90년 이전에 설치된 1,418개소에 대해서는 기름 보일러에서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면 약 1/3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418개소에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가 지원기준의 인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경로당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8. 강태봉 의원(아산시, 자민련)

■ 질문1 : 아산만권개발 촉구 및 도청이전 연구용역 이유

· 아산만권 개발 계획 '94년도에 민자유치를 근간으로 한 개발 계획의 실현 불가능성 등 근본적인 계획수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에 고속전철이 개통되어 충남의 관문인 장재역이 열리게 되므로 늦었지만 우선 역사주변 개발을 서둘러야 하겠으며, 또한 졸속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첫째, 지역실정을 알지 못하는 중앙에서 충남발전의 초석이 되는 계획입안과 추진을 전적으로 맡게 되면 그 결과는 자명하므로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주축이 되어 지원할 전문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지사님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고속철도 명칭에 현지 의견을 반영하는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임. 아울러, 현재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청이전에 대해서도 아산 신도시 내로 이전을 확정하여 서울의 캠퍼스 이전과 중앙정부 부처 및 정부투자 기관의 이전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도청이전 계획은 없는지?

셋째, '96년도 도청이전에 대하여 연구용역과 본 의회내에 '92년도에 도청이전 특위까지 구성하였으나, 지사님의 임기 말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넷째, 아산 신도시는 도청이 없어도 자력발전으로 가속화 될 지역이라고 밝혀 도청이전 후보지로 아산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다섯째, 내포문화권 민간단체는 처음부터 도청이전 후보지를 사전에 지정해 놓고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각 지역으로 자료를 접수한 후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하고 있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우선 역세권 100만평에 대해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택지개발계획을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현재 도와 아산시에서는 "신도시 개발팀" 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조직체계로 대응해 나가되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또한 강 의원님께서는 역사 명칭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음.

천안시는 천안시 대로 아산시는 아산시 대로 천안역사, 아산역사의 문제를 역명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도차원에서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최종적인 역사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양 지역을 어우를 수 있는 "장재역"이라는 명칭을 도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음.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산을 후보지에서 배제한다는 문제가 벌써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아는 바가 없음. 도지사가 "아산은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도청사가 이전되어 가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아니면 도청이전을 절실하게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그러한 기사가 게재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음.

도청이전은 지난해에 IMF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도청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여 지난 해 7월 달에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었음. 그것을 왜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었느냐면, 다른 연구기관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과 관련된 용역은 지역간의 유치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용역을 희망하는 그런 기관이 없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음.

앞으로도 도청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음.

■ 질문2 : 성공적인 꽃박람회 개최 및 사후관리 대책

· 성공적인 꽃박람회 개최결과로 거둬야 할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담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음.

첫째, 꽃 생산농가 소득보장 대책으로 꽃묘 생산 및 식재로 직접 지원되는 33호 농가 12억4,000만원 이외에 해외 바이어 13명을 초청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너무나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둘째, 박람회 장소는 물론 인접 시·군도 관광명소가 많아 관광벨트화 하는 홍보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박람회 기간 동안은 물론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에서는 꽃박람회 개최가 결정된 후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훼산업 육성계획" 을 수립하고 지난 2000년부터 6개 분야 20개 사업에 141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음. 특히, 생산분야에서 화훼전업농 육성을 위해 64억원을 투자했고, 안면도 자생식물원 조성 등 9건에 55억원을 투자하는 등 획기적인 화훼산업 육성시책을 전개해 오고 있음. 앞으로도 이번 꽃박람회를 계기로 꽃 생활화운동을 확산시켜 우리 도가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화훼농가의 소득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리고 도에서는 꽃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해안 연안 관광벨트화 계획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과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에 반영시킨 바가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용역비 10억원이 국비에 반영되어 있음. 또한 외자유치에 의한 국제관광지개발 방안과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건설을 통해 대단위 사업도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것처럼 빨리 추진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림. 앞으로, 서해안 5개 시·도와 협조해서 서해안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코스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극심한 봄가뭄 대책

· 본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금년 2월 14일 현재 도내 평균 저수율은 71.3%로 전년대비 2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는 규모가 큰 댐일 수록 물이 적어 대청호는 41%, 예당저수지는 51%, 탑정호도 67%로서 현재의 물 부족 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며, 장기 일기예보 또한 3~4월에는 건조한 날이 많고 5월 이후에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년 농사가 심히 걱정되는데도 정부에서는 겨우 대형관정 사업비 11억8,000만원으로

시·군당 2공씩 지원하여 가뭄극복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을 때 준설을 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군부대에서 일부 저수지만 준설하는데 그치고 있는 한심스런 실정에 농민들은 개탄해 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봄 가뭄 대책비로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서산 A·B지구 담수호 주변 배후지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장기사업이므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담수된 물을 양수하여 인근지역에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도내 저수지 963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지적하신 대로 현재 72% 수준으로 지난해 겨울부터 저수지 용수확보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진 대호간척지 담수호는 인근 삽교호에서 50여일간 양수를 실시하여 저수율 54%에서 85%로 이미 끌어 올렸고, 저수율이 낮은 청양 신대저수지, 보령 수부저수지 등 4개의 저수지는 암반관정과 하천수를 이용하여 담수 저류중임을 보고드림.

이와 함께 예당저수지와 서천 서부저수지 15만㎥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준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체경영사업으로 탑정저수지 22만㎥ 등 모두 37만㎥의 준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올해 계획된 용수확보사업도 상반기중에 완료를 목표로 앞당겨 시행하여 저수지 준설의 경우는 15억원을 투입하여 16지구에 37만5,000㎥를 완료하고 일반 대형관정과 생활용수 관정개발 사업으로 193억원을 투입하여 135공을 개발하고 있음.

앞으로 가뭄진행상황에 따라서 이미 내시된 한해대책사업비 41억2,500만원을 단계별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가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와 함께 서산, 태안, 서천 등 상습 한해 지역은 근본적인 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산 A·B지구 담수호와 판교지구의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중앙에 이미 건의해 놓고 있고, 이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질문4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환경개선 지원 대책

· IMF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취업모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돕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에 공립유치원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종일반 교육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1인 교사가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감으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도시 및 농촌 취업모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하여 종일반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공립유치원의 오전, 오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 교구 및 정보화 기자재가 부족하여 실제 혜택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은 유아전용 교실 일부와 초등학교 교실을 사용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과 중소도시나 농촌의 유아에게도 충분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첫째, 종일반 담임교사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습보조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해 나가고 있음.

둘째, 교육환경과 교재·교구 및 정보화 기자재 확보를 위해 투자우선 지역을 선정하여 매년 1개 지역교육청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음.

셋째, 중소도시와 농촌의 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도시와 농촌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만5세 아동 저소득층 자녀 856명에게 4억500만원의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음.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공립은 수업료를 면제하여 주고, 사립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연차적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음.

■ 질문5 : 학교폭력 근절 대책

· 지난달 19일 천안역에서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묻겠음. 피어나는 꽃봉우리 같은 나이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살까지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과연 학부모들은 학교에 어떻게 자식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학교생활지도를 어떻게 하여 학생이 괴롭힘 당하도록 방치하여 두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재작년도와 비교하여 학교폭력 20%를 줄인 바가 있으며, 일선 학교에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 시달하고 당해 학부모를 방문하여 위로를 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음. 지난 3월 8일 도내 생활지도 담당장학사와 학생부장을 충무교육원에 소집하여 재발방지에 적극 대처하도록 교육을 했음.

또한 금년에 우리 교육청은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를 내걸고 집단 괴롭힘과 학교폭력 신고 전용전화를 24시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음.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다시는 우리 도내에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6 : 전원형 작은 학교 육성 방안

·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적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전원형 작은 학교" 의 육성을 약속했음.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표방하신 "전원형 작은 학교" 육성정책에 고무 받아, 아산의 거산분교와 송남중학교, 청양의 청송초등학교, 그리고 당진의 당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전원형 작은 학교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현재 거산분교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학급 담임교사 2명만 증원되었을 뿐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양호교사, 유치원 보조 교사, 행정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교사들이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제공하겠다던 통학버스도 아직 제공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통학불편과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거산분교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산시 소재 거산분교의 전원형 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현재 작은학교 살리기추진협의회와 지역주민, 학부모님들의 노력으로 6학급 109명이 편성되어 금번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음.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교사 6명을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 부탁한 6명을 모두 배치했음. 또 양호교사, 유치원 보조교사, 전용버스 구입 등은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

9. 송영철 의원(논산시, 민주당)

■ 질문1 : 계룡특례시 승격 추진 촉구

· 계룡출장소 설치와 함께 지난 10여년간 신도시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해 왔지만 실상은 뚜렷한 성과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음.

민·관·군은 이에 따라 계룡신도시 승격을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적으로 동반자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한마음으로 전체적인 붐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고, 중앙에 대해서는 특례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지역 주민들은 계룡신도시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엄사 지구 시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관내 전 세대 서명운동 전개, 퇴역장교 등 초청설명회, 언론인 방문 설명회, 주민교양강좌 개강 등을 통해 특례시 설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붐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대통령도 지적할 만큼 계룡신도시 지역은 위치만 지역에 놓여 있을 뿐 도시의 기능은 사실상 국가차원의 중추적 역할을 떠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계룡신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할 당위성은 여기에 기인된다고 사료됨.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중앙정부는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주민들의 여망인 계룡신도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함.

이처럼 민·관·군이 계룡특례시 승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행자부에 특례시 승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혹 행정으로 승격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여·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입법추진 동의을 얻어 추진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계룡특례시 추진은 지난해 9월 대통령께서 특례시 설치에 대한 의지 표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시화된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임. 그 동안 도에서는 특례시 설치에 대한 당위성 홍보와 공감대 확산, 도와 계룡대, 주민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특례시 설치에 필요한 입법화 활동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음.

특히, 지난 2월 19일 지역 협의체인 계룡신도시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계룡특례시 설치 촉구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국회, 행자부 등을 대상으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앞으로 도차원에서 특례시 설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택지분양을 촉진시키고 계룡대와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나가면서 국회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례시 설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충남 도내에는 크고 작은 재래시장이 많이 있으며,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이 많이 들어섬에 따라 서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있음.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그냥 방치하여 파산 후 많은 예산을 들여 생계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현명하신 지사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리라 믿고 본 의원이 몇 곳의 재래시장을 돌며 확인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

첫째, 재래시장 주변에 백화점 주차시설에 버금가는 공공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여야 함.

둘째, 재래시장 통행과 환경에 큰 문제점이 없는 한 차광망 설치 등 가설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재래시장내 노면포장, 하수시설, 청소시설 등 완벽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대안이 필요함.

넷째, 재래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간판을 설치해 활성화를 위한 지도 및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기구를 상설 전담케 해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안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현명하신 지사님의 답변과 실천을 부탁드림.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특화시장 조성사업 추진 등 재래시장 기능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

특화시장 조성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4개소에 71억원을 투자해서 특화시장화 하고자 함. 공공주차장과 차광막 설치등은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포함되어서 금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8억2,600만원을 지원 받아 7개 시장에 총 27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우선 예산시장 등 4개 시장을 대상으로 부지포장, 소방도로개설, 차광막 설치, 화장실 건립 등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부여시장과 안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강경 젓갈시장에는 대형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전 재래시장에 확대 설치토록 할 계획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실한 것인 만큼 앞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시설현대화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음.

특별히 제안해 주신 특별 지원 전담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 조직에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또는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타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음.

■ 질문3 : 농업부문 예산 지원 확대 촉구

· 충남도의 경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편성돼 농민들의 원성이 큼. 한 사례로 2002년도 축산부서에서의 예산요구 내용 중 방역비 예산 4억원은 2002년에 발생했던 구제역 방역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여건을 배제하고 고작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특히 오는 4월이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방역을 위하여 더욱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음.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농업부분에 대한 순수한 도비를 타 시도와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우리 도의 농업 세력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에 이르며, 지난해 농업분야 예산비율은 전체예산 대비 25.5% 수준으로 전남 29.1%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자체재원 대비 순도비 비율도 35% 정도로 전국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음.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구제역 방역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우리 도에서는 스물일곱 차례의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방역약품 구입비 15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 있음.

소규모 농가는 방역약품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중규모 이상 농가는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자율방역을 실시하는 소 100두, 돼지 1,000두 미만의 중규모 농가는 대규모 농가와 달리 방역에 취약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군비를 확보해서 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구제역 발생 전례와 대규모 국제행사인 꽃박람회 개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과 꽃박람회 관람객 이동이 많은 취약지역 중규모 농가의 방역 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토록 할 계획임.

이와 함께 가축방역 사업비로 모두 32억5,100만원을 이미 확보하여 방역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질문4 :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오염 대책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봄과 여름에는 1세기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도내 전역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하수가 개발되었으나 이에 따른 지하수 폐공의 오염 예방조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대형 및 소형관정 폐공이 얼마만큼인지, 미등록 개발업체가 몇개 사나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군, 읍·면별로 착정 개소수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음.

지하수 오염은 1년에 1m씩 지하로 내려가면서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오·폐수도 걱정이지만 관정 폐공의 후속적인 사후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더욱 빠른 속도로 오염시킬 우려가 큰 것임. 관련 부서에서는 지하수 개발업체 현황과 개발실패 폐공 개소수, 그리고 지금까지의 후속조치 실적 및 향후의 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먼저, 등록 시공업체는 124개소가 되며, 형사상의 불법착공 이외의 미등록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22만9,000여 개소의 지하수공이 개발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0%인 2만3,000개를 폐공으로 추정을 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난해까지 4,700개소를 찾아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만, 특성상 폐공발견이 상당히 어렵고 신고 자체를 기피하고 있음. 93% 이하가 30톤 미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그간에 안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금년부터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전 지하수공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착정단계부터 관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공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은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하는 조치를 우선하고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도비 1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특히 대형관정을 중심으로 해서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5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

· 학교운영위원회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학교측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고 각종 기금 모금을 위한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구성된 운영위원 대부분이 학교측의 계획된 의도에 따라 선출되고 있는가 하면 운영위원 또한 자녀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교문제에 대해 말 한마디 한번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운영위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운영위원 선출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의 선출공고, 후보자에게 소견발표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둘째, 교육청 직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진출에 대한 지적임. 국립학교를 제외하고 2000년도에는 25명, 2001년도에는 20명이 학교운영위원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금년에 있을 교육위원 선거와 향후 교육감 선거의 사전정비작업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셋째,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충남도 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를 지도·감독할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음. 운영위원들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현재 파장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관리할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적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위원이 선출된 후에도 운영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나가겠음. 많은 학교에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군별, 학교별로 점검을 하겠음.

둘째, 직원들의 학교운영위원 진출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음.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며, 배제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음. 다만,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편파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전담부서로는 1999년 1월 1일자로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청은 서기관 과장과 담당 사무관 1명, 그리고 6급이하 직원들 수명이 담당부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서무 또는 관리담당자와 관계 직원이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별도의 전담부서는 심도있게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겠음.

■ 질문6 : 단위학교 회계제도운영의 문제점과 보완 대책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위학교 회계제도가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문제점과 모순성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각급 학교의 업무경감과 행정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예산회계 관련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학교별 회계예산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가 4월 1일부터 운영되어 당해연도 예산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 제출 시기상의 문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예산과 결산 심의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어서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단위학교 회계제도 운영에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각 학교별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모범적인 학교가 있다면 그러한 사례들을 취합해서 충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델로 제시했으면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학교 회계제도 시행에서 발생되는 업무경감과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10월에 보급 예정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각 학교별 회계예산의 심의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학교예산은 회계연도가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회계연도 개시 전인 2월중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4월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어 새로 선출된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는 운영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감 회의 때에도 제가 이것을 건의한 바가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수집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질문7 : 수학여행 및 업체선정의 개선 방안

· 대다수의 학교가 수학여행 경비와 프로그램, 숙박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학교의 관행대로 예전의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얘기하고 있음. 따라서 도교육청은 책임을 지고 학교내 운영위원회 또는 수학여행선정위원회 등 기구를 지정해서 이 기구에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함.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공문 발송 등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 두개 학년이 한꺼번에 차량이동을 하면서 떠나던 30~40년 간의 수학여행 문화가 지금도 여전한데 이는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두 세개 학급이 주제중심의 수학여행 코스를 정해서 떠나는 정말로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되도록 지도할 의사는 없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학생 수학여행과 같이 수요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현장학습은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동의하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부분의 학교가 업체 선정을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음.

그래서 종합감사를 내려보낼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역할만 잘하면 이런 것은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관행 중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본인도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앞으로 해 나가겠음.

10. 한소환 의원(연기군, 자민련)

■ 질문1 : 충북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누수방지 대책

·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 도계 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500여m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강외면과 청주시 동막동 일원에 2,000여 만평 규모의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일명 「오송 신도시」 개발을 201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동일구역내에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키 위하여 총면적 141여만평 규모의 「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200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함.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기군 조치원읍 근접지역의충청북도 오송 지역에 인구 30만 수용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하여 우리 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임.

연기군 조치원읍의 경우는 인구 3만3,000여명의 읍지역으로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문화, 교육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음.

그러나 「오송 신도시」와「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가 개발 완공될 경우, 현재에도 조치원읍 실제 거주자가 청주학군으로 위장 전출하여 청주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가 하면, 대학의 경우 연기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충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충남지역으로 1일 1,000여명의 학생인구 이동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임. 또한 여건이 좋은 문화생활과 주거환경을 위하여 기존 조치원읍 주민은 물론 연기군내에 거주하는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의 수많은 재학생들마저도 충청남도에서 충청북도로 인구이동 유출현상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

특히 조치원읍의 경우 인구 감소현상의 초래로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반면 충북의 경제는 그만큼 활성화 될 것임.

따라서 본 의원은 연기군의 경제와 충청남도의 발전, 그리고 경제의 원동력인 인구의 유출과 지역경제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신도시 개발에 대응력 있는 대책으로 현재 연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촌 개발 조성 차원을 넘어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연기군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계획된 대규모 학원도시」 개발을 포함한「거도적 연기권 종합발전개발 계획」을 조기에 수립,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충청남도 행정 수장으로서 심대평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충북 오송 신도시 개발사업은 인접한 연기군 지역에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갖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며, 다만, 조치원읍이 자족기능을 잃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데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지난해 확정된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기지역이 대덕밸리와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교량적 위치에 있는 이점을 살려서 첨단벤처산업 집적화 단지와 산학 공동벤처 산업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조치원읍에 쾌적한 도시 정주공간과 대학촌을 조성하여 대도시 근교 배후의 전원형 연구학원 도시로 육성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한 바 있음.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군 종합발전계획인 도시기본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특히 아까 말씀하신 홍익대학과 고려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원촌, 학사촌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주 적은 규모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군 행정과 도 행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질문2 : 지하수의 방사성물질 검출의 문제점 및 대책

· 그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수 즉, 흐르는 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수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봄.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1년 국립환경보건원 주관으로 전국 150개 지역의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그 동안 대전시에서만 문제시되었던 우라늄 검출이 이젠 대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공주, 부여, 당진 3곳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경우, 지하수이용 현황 중 도 전체 13만여 개소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도민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에서는 지하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곳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검사장비를 금년에 확보하여 도내 전 공공지역의 지하수 음용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도에서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먹는물 이용을 자제토록 고지하고 적정하게 음용토록 홍보를 했음.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WTO에서도 방사성 물질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장비가 있는 곳이 7개소이고 방사성 물질 검사장비 하나에 15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 그리고 환경부 차원에서 종합 관리 대책이 마련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청양대학의 특성화 등 학사운영 개선 방안

· 최근 매년 초·중·고등학생 수의 감소현상과 수도권 지역대학지원의 집중화 현상에 따라 신생대학이며, 지리적인 여건을 따져볼 때, 타 대학에 비하여 매우 불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청양대학의 그 동안 운영상황과 그리고 특성화 전략 및 발전방안연구 중간보고서 등에서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묻고자 함.

첫째, 2002년도 청양대학의 운영예산을 보면 총 41억7,000만원 중 자체 수입은 19억7,000만원으로 47.3%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미흡한 상태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대학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학운영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둘째, 기존 산업디자인과 등 일부 학과는 특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용역중간보고서에서 거론됐는데 이들 대상학과와 전공자격증 취득이 애매모호한 행정학과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학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와, 셋째, 도립 청양대학의 경우 21세기가 요구하는 산업기술과 문화 등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 분야를 찾아 학과를 조기 신설하여 근본적인 운영재정자립도 향상과 타 대학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위한 호텔관리과, 정보통신응용과, 컴퓨터 응용설계과 등을 조기신설 경쟁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학과를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와 만약 학과신설 계획이 있다면 어느 학과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대학 재정자립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등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저소득 도민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라는 도립대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서 수업료 현실화 방안을 포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유치확대 등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그 동안은 청양대학의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런 취지에 따라서 부득이 수업료를 5% 인상하고 기성회비를 8% 인상을 했음. 아울러 청양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학사촌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졸업생 100% 취업을 위해서도 학교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와 함께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학과 전환과 신설문제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4 : OECD수준의 학급편성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

· 2002년도 즉, 금년 3월부터 고등학교 학급당 35명 편성 운영 실시함에 따라 총36개교에 110실 교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겨우 5실만 완료하고 105실은 동절기로 공사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당한 물량이 공기부족으로 금년도 3월 이전에 준공이 어렵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대부분 새학기 이전에 교실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업대책으로 실험실이나 컴퓨터실, 그리고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을 설치, 임시교실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됨. 이들 컴퓨터실, 실험실 등을 임시교실로 활용할 경우 이로 인한 관련 교과목 교육의 차질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OECD수준에 맞게 한글 미해득자 발생에 대한 대책과 우리 도의 학력평가 수준을 공개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특별지도 대책을 수립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실증축 후 컨테이너 등의 일시적 사용 가건물의 사후처리 대책과 필요 이상의 재원손실에 따른 교육감의 손실보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금년도 공립고등학교 35명 수준 학급 편성에 따른 추가 수요 교사 총 79명 중 19명을 우선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간제교원을 언제까지 정식 교원으로 대체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끝으로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외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도 굳이 금년도 3월부터 OECD수준 35명선 학급반을 편성 운영해야 했었는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학교별 교실증축 완공 시기에 맞추어 새로이 반 편성을 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하였는지, 만약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협의하여 교실 증축 완료 후 학급당 인원수를 35명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현재 공사중인 학교 29교 94실은 특별 교실, 기타 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2년 3월 1일자 동절기 공사시공 중지를 해제시켜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음.

두 번째로, 새 학기 이전에 교실 증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특별교실을 임시 교실로 활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해당 교과 교육의 차질에 대한 보완으로는 특별 교실 중 컴퓨터실이나 과학실과 같이 교재 교구 등의 비품이 비치되어 있는 특별교실의 보통 교실로 사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음.

세 번째로, 건물이 준공 될 때까지 컨테이너 교실 17실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특별교실로 활용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은 총 2억1,300만원이며, 수업분위기를 고려하여 심한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은 될 수 있는 한 방과후 또는 휴일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음.

컨테이너 교실은 교실 개축 시 학생 수용 대책 등으로 임시교실로 사용되어 왔으며 외부는 미관이 그리 좋지 않으나 내부시설만은 기존 정규교실과 다름이 없이 최대로 수업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구입한 10교실의 컨테이너는 개축하는 다른 학교의 학생수용에 사용하고자 앞으로 이전을 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없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음.

네 번째로, 2001학년도 초기에 파악된 도내 한글 미해득자는 초등학교 342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96명 등 총 573명이었음. 미해득자 구제를 위하여 지도교사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을 미해득한 학생이 누구냐, 어떤 교사가 몇 명을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음.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53%인 307명이 구제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은 정신지체아 등 특수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한글 해득을 위해서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금학년도에는 한글 미해득자 구제에 공이 많은 교사들에게 획기적인 우대책을 마련하고, 특별지도 교사들의 지도비 5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사들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우리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학력진단평가를 3월중에 실시하려고 함.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학력진단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별로 지도를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임. 학교 단위로는 진로 지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학교와 학부모가 학력 신장의 방향과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음.

다섯 번째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2003학년도에 이수 단위 수의 감소와 자연계열의 선택 학생수 감소 등으로 수학, 영어, 윤리, 과학 등의 교과 교사의 수요감소가 예측되고 있음.

금년도에 기간제 교사를 임용한 것은 이러한 감소되는 교과 교사의 수급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을 조절하는데서 온 것으로 복직이나 앞으로 복귀 등으로 충원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2003학년도 교원 수급계획에 의거 충원을 할 계획임.

여섯 번째로, 학급 편성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상 학년도 중간에 재편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3월부터 편성, 운영을 하게 되었음. 다만 학교의 시설이나 기타 제반여건등을 감안하여 학급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천안지역 4개 고등학교(천안고, 천안북일고, 천안북일여고, 복자여고)등 17학급에 대하여는 학급당 학생 수를 당초대로 완화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림.

11. 심정수 의원(금산군, 민주당)

■ 질문1 : 에이즈환자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 미확보 대책

· 전세계의 에이즈 환자 감염자가 3,600만명으로 확산되었고, 이것이 바로 심각한 새로운 재앙거리로 예견되면서 대전·충청권에서도 100여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30명이 넘게 우리 충남에서 발생해서 많은 숫자가 생명을 잃고 있음.

강원도에서는 건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3년 동안 2,000만원씩 예산을 사용했고, 대전의 경우에도 역시 지난해 2,000만원 예산으로 홍보 강사에게 수당 5만원과 교통비 2만원씩을 골고루 지급하면서 고교생들에게 약 100여회 교육해 온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함. 우리 충남도 주변에서 앞으로 금년에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또 꽃박람회가 개최되면 외국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게 되는데도 홍보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실정인 것 같아서 지사님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자 함.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저희 도에서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에이즈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5,451만원을 투자해서 감염자 진료라든지 외국인의 에이즈검진 그리고 예방, 홍보사업을 하고 있음. 금년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염자 진료비에 3,000만원, 예방홍보비에 2,140만원을 투자해서 6만7,000명을 교육하고 검진도 1만2,771명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림. 또한, 보건소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감염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서 에이즈 전파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기능이 떨어진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을 통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음.

■ 질문2 : 공장총량제 확대이후의 기업유치 감소 대책

·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도내에 입주하는 기업이 155개 업체에서 131개 업체로 감소되는 추세로 보아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악화될 염려가 되고 있음. 그러나 충남도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진고속도로 영향을 입으면서 앞으로는 좀더 활발한 유치작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함. 지방이전을 꺼리는 업체들에게 마음놓고 이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특화작목을 다소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업체선정을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우리 도의 실질적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람.

〔 답변 : 경제통상국장 민종기 〕

· 금년도는 우리 도 행정의 큰 목표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으로 정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시책 등 5대 과제를 선정해 분야별로 총 118개의 실천계획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2월 20일에는 이러한 도의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환경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 시·군정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음.

기업유치 업무를 성공적으로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에 16개의 기업유치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활동하고 있으며 공장입지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3개 지방산업단지에 42만평과 10개의 농공단지 50만평을 신규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가 도내 입주시에 진입도로,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며 기업체 유치에 공이 많은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앞으로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업유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림.

■ 질문3 : 인삼관광특구 지정 촉구

· 3년전 도정질문에서 도에서 직영하는 특화시험장 설치를 안하시려면 인삼특구라도 지정되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을 한 바가 있으며, 지사님께서 깊이 연구하면서 어렵지만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음.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 베스트 10」 그 중에 하나인 인삼산업지역을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으로 해 달라며 건의도 한 바가 있음. 이렇게 인삼약초 지명도와 홍보효과를 충분하게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와 노력으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관심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유상곤 〕

· 그동안 도에서는 한국의 문화 상징 인 「베스트 10」 중에 하나인 인삼의 고장 금산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 관련 규정상 장애가 되어 온 시도별로 이미 지정된 특구의 총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토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현재 총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

그러나 특구지역 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동 규정의 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는 인삼교역전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아울러 국내의 관광관련 업체 등과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삼을 매개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금산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4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전략

· 안면도에서 열리는 꽃박람회가 성공을 하려면 우선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주어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만족을 주어야 될 것임. 이천도자기 축제에 찾아온 관광객이 200만 명이고, 인삼축제가 약 60만 명을 넘었다면 많은 예산 속에 국제공인 꽃박람회 예상관광객이 6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음.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막바지 홍보전략과 기대효과와 만족을 위한 각종 이벤트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관람객 유치가 꽃박람회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임.

도에서는 관람객 유치의 관건은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홍보, 그리고 친절하고 청결한 손님맞이 준비라고 보고 분야별로 세심하게 챙겨 나가고 있음.

볼거리 제공과 관련해서는 우선, 꽃지 지구에 꽃 중심의 서양적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주전시관 등 8개의 전시관과 13개의 야외정원을 조성 중에 있음. 그리고, 부전시장인 수목원 지구는 전통 정원을 중심으로 동양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는 명예홍보위원으로 지금까지 991명을 위촉했으며, 그리고 TV 및 라디오 CF광고로 3월 15일부터 총 1,200회에 걸쳐서 광고방송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전국 초·중·고교 대상으로 1만500개의 학교에 홍보물을 발송을 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전국노래자랑, 한마음 음악회 개최, 그리고 4월 21일에는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전국 마스터스 마라톤 대회를 준비중에 있음.

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기억에 남을 추억 거리를 선사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준비중에 있음. 전 세계 네티즌에게 꽃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이버 플라워 개막식과 National Day를 준비중에 있고, 시·도의 날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을 특별 이벤트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음.

꽃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를 분석을 해 보면, 약 1,400명의 직접 고용창출 효과와 460억원의 관광수익을 포함해서 총 1,11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있음. 화훼 수출은 현재 2,000만 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을 5,000만불로 확대를 하고, 도의 화훼산업 수준도 전국 5위 수준에서 3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

그리고 접근 도로 확충과 관광휴양시설 개발로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도 연간 6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증가가 예상됨. 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 유치 목표는 총 72만명으로 24일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

■ 질문5 : 오션캐슬 콘도회원권의 강매 배경 및 대책

· 안면도 꽃박람회 성공을 위한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그런 미명하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사기업에 이익을 주도록 도가 시·군에게 콘도회원권을 강매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와 아울러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함. 가뜩이나 어려운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 권유에 못 이겨서 2억원이라는 무리한 예산을 세워야 했고 강요를 받았다는 오해를 하면서도 매각을 하려 했던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유상곤 〕

· 꽃박람회 및 직원 후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77구좌 67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청약한 바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 매입규모를 최소화 하고자 청약금 중 일부 평형에 대해서 매입을 취소하고 천안시 등 7개 시·군과 하나은행 등 유관기관에 대한 매입 알선을 통하여 이를 당초 청약분에서 공제하여 도에서 실지 구입한 회원권은 243구좌 52억4,800만원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콘도회원권을 강매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시·군에서 직원후생 복지용으로 콘도를 매입할 경우 값이 싼 우리 도 매입 청약분을 구입해 주기를 협조 당부한 바가 있음.

시·군에서 콘도회원권을 매입한다면 이는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시군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림.

■ 질문6 : 자연사박물관 부지 미복구 대책 및 장학재단 관리방법과 운영계획

· 국립공원이 온천 개발 명목으로 폐허처럼 방치되고, 이어서 또다시 인근 지역 자연사박물관 설립 부지마저도 갖가지 의혹사건으로 인하여 포기하게 되었고, 또다시 약 2만여평이 파헤쳐진 상태로 해가 바뀌었는데도 전혀 복구가 안되어서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수해가 염려되고 있음. 환경을 중요시해야 할 도에서 나몰라라 방치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람. 아울러 지난해 지사님께서 투기하셨다는 땅을 장학재단에 기증한 일이 있었는데 조속히 매각해서 뜻에 맞게 관리되고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장학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현재 관리방법과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는지 궁금함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자연사박물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0년 9월 시민·환경단체로부터 환경 훼손 문제가 제기되자, 그 해 10월 청운문화재단 이기석 이사장의 박물관 건립사업 포기 발표후 공사가 중단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도 더 이상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훼손부지를 복구하도록 재단측에 촉구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3일 재단측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도에 제출하고 사업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임.

건립위치를 놓고 찬반 양론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15일 환경단체와 주민 대표, 관계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하는 부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재단측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 줄 것으로 요청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림.

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12월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2001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음. 그래서 하반기부터 장학금 지급사업 등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2. 이복구 의원(서산시, 자민련)

■ 질문1 : A·B지구 피해농어민 보상 대책

·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은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1980년 5월에 착공하여 1995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측과 외측의 보상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이 남아있는 충청남도에서 최장기의 민원사항임. 매립면허 허가시에 매립면허 허가조건 제15항에 "피 면허자는 공공간척의 매립지 분배관례에 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매립지 일부를 인근 피해어민에게 준공과 동시에 매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각방법은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면허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를 했음.

그러나 피해농어민들의 요구는 거주지에서 10km이내 지역의 농지로서 가치가 있는 농지를 분배하고 농지의 매매가격은 준공과 동시 분양하지 않고 5년간 임의 경작하여 얻은 부당이익금을 뺀 공시지가의 66%선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과 피해농어민들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농지구입자금을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 3%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기 배정된 농지 1,006만평이 우량농지가 아니므로 1,448만평으로 확대하고 인근지역으로 분배할 것을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피해 농어민들이 매수를 거부하면 일반인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을 현대측은 가지고 있음.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 농어민들은 안면도 꽃박람회장 진입로를 막고, 6월 지방선거에 불참한다는 강경대응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그 동안 피해 농어민들이 재벌기업으로부터 농락당하고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은 영세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남의 일처럼 무사안일하게 처다 본 결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됨. 피해 농어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깊은 관심과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매각된 내용과 3월 9일까지 신청 접수 내용을 밝혀, 민원해결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서산 간척농지는 현대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년 11월 29일부터 일반매각 중에 있으며, 피해농어민에게는 지난달 25일 매각공고 이후 분양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측과 피해농어민간의 분양가격과 상환조건 등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매수 신청한 피해농어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도에서는 피해 농어민, 농림부, 현대와 여러 차례 협의·중재를 거쳐서 합의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양면적과 위치는 합의를 보았습니다마는, 대금 납부 조건과 분양 가격 등의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농지분양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에서는 2000년 11월 14일 농지매각방침 발표 이후 그 다음날 도에 태스크 포스트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피해 농어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지휘보고, 도지사방문 또 협의·건의 등을 수 차례 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노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함께 보탬이 되어서 농민들이 요구했던 1,448만평으로 확대하고 매각을 유보시킨 바가 있음. 그리고 피해 농어민 분양자격 기준과 분양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분양가격과 대금납부 조건이 합의가 안됐음.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총액은 1만 4,310세대에 55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방조제 내측에 1만15세대 215억원, 외측에 4,295세대에 338억원 중에서 '82년부터 2001년까지 1만967세대에 28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보상과 관련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은 3,343세대에 약 273억원이 되어 있음.

이 중에서 내측 2,450세대에 73억원은 현대측이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에서 승소를 했고, 외측의 893세대에 200억원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음.

그래서 현대나 농림부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서 규모화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 규모화 사업 자금을 농업기반공사가 받아서 농지를 분양받고 피해 농어민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분배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을 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그런 건의가 농림부에 가 있음.

■ 질문2 : A·B지구 담수호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

· 서산 A·B지구내 간월호와 부남호는 그 동안 현대에서 농사용으로 관리를 하였으나, 일반인에게 농지를 매각하여 관리주체가 불분명한데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하며 담수호 유역에 위치한 농·축산 농가 및 다른 오염원으로부터 수질악화는 점점 심해지고, 농업용으로도 부적합한 상태인데 일반인에게 매각이 완료되면 농약, 비료 등의 과다사용으로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서산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간월·부남호는 그 동안 수혜자가 현대건설에 국한되어 있어 국가소유인 담수호, 방조제, 용배수로 등의 농업기반시설을 현대건설이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농지매각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농업기반시설 전문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아울러 경지매각에 따른 비료·농약 등의 과다사용에 대해서는 경작자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앞으로 861억원을 투자하여 태안·음암 하수처리장 건설과 서산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지속적으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간월·부남호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3 : 대산 3사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대책

· 대산 3사 가동이후 공장악취 및 농작물 감수피해와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93년도 환경영향평가조사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인접 부락은 피해를 인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나, 대산읍 화곡리 주민 317세대는 피해 기여율이 미미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대산공단관리협회 지역대표로 포함시켜 줄 것과 재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3사측 주장은 '93년도보다 설비개선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도 무시한 채 가해자로 인식함은 부당하고, 화곡리 지역은 피해지역으로 인정은 불가하며 법률에 의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에서 수차례 협의조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림.

〔 답변 :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착공부터 공사완료 후 5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산공단의 경우는 당초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93년도에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바가 있음.

현재는 환경조사를 실시하게 된 법적 의무기간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경우에는 대상지역 범위설정 문제라든지 막대한 용역비 부담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초래될 소지가 많음.

따라서, 이 의원님이 계속 걱정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 것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저희들도 당사자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으며 원만하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원만히 타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음.

■ 질문4 : 공군 제 20전투 비행단 주변 소음공해 대책

· 군사 보안상 지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전투기의 소음공해로 시달려 오고 있으며, 인근주민들은 소음으로 가축을 기르지도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전화마저 사용할 수 없고 텔레비전도 볼 수 없는 현실임.

더욱이 두 번씩이나 추락사고가 빈번한데 이 지역주민은 언제 또다시 위험한 상황이 주거지역에 발생할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주민이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되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이 문제는 우리 서산 비행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군의 사격장이라든지 공군의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전체가 걸려 있어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특별법제정 등의 정부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아직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군사시설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법 제정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그리고 군용 비행장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패소가 이어지고 있어 이주 등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질문5 : 서해안지역 주민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

· 전국토의 고속도로중 충남에 속해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 최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있으나 남한의 중심부인 서산·태안에서 울진까지는 전무한 상태이고, 충남만 보았을 때도 동서고속도로는 전무한데 서산·태안에서 서울간은 1시간 40분 소요되는데 비해 도청소재지인 대전까지는 3시간이 걸리는 현실임. 태안·서산에서 대전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서해안 지역의 홍성, 청양, 예산, 보령 도민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내륙 물동량을 서해항구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내 동서간 도로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국을 1일 생활권화 하기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의거해서 동서로 9개축의 고속도로망 확충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음. 이 계획에 의거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작년말 착공되어서 2006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참고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서태안 지역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권 이내로 다닐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아울러서 태안에서 당진을 거쳐 울진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보령에서 공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6 : 축산시설에 대한 학교보건법의 적용 완화

· 학교보건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정화구역 내에서의 환경법상 축산 폐수시설 등은 절대 금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농사와 축산을 생업으로 살아온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중됨으로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여 보건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함. 이는 인구 증가요인의 변화에 의해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유치원과 신설학교를 증설해야 하나, 학교환경위생지역 설정 관계로 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본 의원은 정화시설을 완비한 농촌 축산시설 기준을 농촌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축산시설은 학교보건법 적용을 하향 조정하거나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교육관련기관의 설립이나 농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원활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심의 절차 없이 축산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는 깨끗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축산업은 농민들은 생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써 이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보다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하여 타 시도 교육청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타 지역과 차별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13. 신재원 의원(보령시, 한나라)

■ 질문1 : 안면도 연육교와 보령 신항 건설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안면도와 원산도 대천어항을 잇는 연육교의 건설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보령신항 건설계획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령신항 예정지 밖에 연육교가 건설되었을 경우 보령신항을 출입하는 대형선박의 출입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령신항이 건설되면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뒤따르고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해야 할 대천해수욕장이 오염될 개연성이 상존하는데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았는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동안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은 지난 해 8월 해당 도로가 국도 77호로 승격되어 국가가 연육교 가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2003년도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음. 아울러 연육교 건설시 보령 신항에 대형 선박이 진·출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시행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보령신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97년 해양수산부에서 중국을 겨냥한 수출전진기지 기능을 분담토록 신항만으로 지정을 해서 '98년 12월 1단계로 2만톤급 11선석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음.

그러나 IMF 등 경제난으로 착수를 2006년 이후로 하기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나 도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외자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음.

보령신항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98년 실시설계 시에 일부가 시행되었습니다만 개발이 2006년 이후로 유보되면서 초안평가 이후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음. 앞으로 공사 착수시점에 맞추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2 :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민피해와 해양오염 방지 대책

· 현재 충남의 서해안에는 보령, 당진, 태안,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온·배수에 의한 바다의 온도상승으로 어장의 황폐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민피해와 해양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역협력 기금의 운영범위가 5㎞이내로 한정되어 풍향의 변화에 따라 대기로 이동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의 확산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5㎞반경 이외 지역에 피해정도에 대한 과학적 측정을 통해 지역협력 기금의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도내 보령, 서천, 태안, 당진 등 4개 화력발전소는 장기간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배출 영향이 누적되어서 어업 피해와 해양오염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함.

따라서 도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도 법정조사항목 이외에 온·배수 방류에 의한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매 분기 1회 이상 발전소별로 해양수질 오염도 변화를 측정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 중에 지역여건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과 발전소가 환경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해양환경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협력기금의 지원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 질문3 : 수산업 진흥과 관광 개발을 위한 서해안 관광벨트내 공군사격장 등의 이전 방안

· 대천해수욕장~무창포~춘장대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에 대공포기지와 웅천 공군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어 수산업의 진흥과 관광개발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됨. 관광개발과 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이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

· 보령 대공포기지나 웅천 사격장과 같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설정한 지역으로 개인의 재산권 제약과 소음 공해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 동안 도에서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편입토지 매수와 관계법령 개정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군사시설의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안보 특성상 도 차원의 해결 노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앞으로도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질문4 : 석탄산업화 조치에 따른 폐광촌 정비 대책

·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폐광된 보령의 성주면과 청라면 일대국유지, 사유지, 도유림에 방치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광부들의 폐광촌 정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고, 도유림내에 정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산촌휴양지로 개발 추진하려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 도유림의 불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유림내의 주택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도에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침체된 보령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0년 10월 성주면과 청라면 일대를 「폐광지구 진흥지역개발지구」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오는 2005년도까지 4개 분야 18개 사업에 모두 87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우선 지난해에 도로 확·포장 등
3개 분야 5개 사업에 75억원을 투입한 바 있고, 올해에는 56억원을 투자하는 등 연차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현재 도유림내 주택은 329동이 있습니다만, 실제 대부 사용중인 주택은 317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매각은 지양해야 하고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에 합치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음.

■ 질문5 : 충남 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대책

·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충남 쌀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가격 면에서 타 시·도와 비교하면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품질 면에서도 다품종 혼합 도정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반품되는 사례도 있어 충남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대책과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충남에서 경기, 전라도 지역으로 다량의 벼가 원료곡으로 방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충남쌀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

· 쌀생산 방향은 이미 달성한 양적 기반 위에서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로부터 사랑 받는 최고의 쌀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이를 위해서 올해를 고품질 쌀 생산의 원년으로 정하고 친환경 쌀 비료공급에 153억원을 지원하면서 금년 1, 2월에는 9만3,000여 전업농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고품질재배면적을 올해 지난해 50%~60%로 확대하는 한편 토양개량제 공급과 사녹비 재배 권장 등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또한, RPC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 계열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재배관리와 품종별, 지역별, 개인별, 브랜드화를 육성할 계획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품종 혼합도정으로 인한 품질 저하방지를 위해서도 RPC별로 계약재배 품종을 2~3개 품종으로 제한하는 한편, 투입 후 증설 희망시에는 단계별로 시설자금을 지원해 도정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와 함께 도내에서 생산된 벼는 전량 쌀로 가공해서 판매하도록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문제의 원료곡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토록 하면서 우리 지역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광역 브랜화와 함께 지역별 개별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미질이 좋은 쌀 생산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6 : OECD 수준의 학급편성의 문제점 및 대책

· 작년 7월 OECD수준인 학급 당 35명, 반 편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거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격」으로 무리하게 추진,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연도별, 시·군별 교실 증설계획과 학급 수의 증가에 따른 교원수급 대책 및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 내용과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계획이 과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전시 행정의 표본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먼저, 교실증축계획으로는 지난해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우리 도의 경우 2002년도에 고등학교 110실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 104실, 중학교 115실 총 219실의 교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음.

다음은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원수급 대책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감축이 되고, 학급 증설과 교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규 교사의 채용과 순회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 활용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음.

향후, 학급 증설에 따라 예측되는 교사 수요에 대하여 정규교사 신규 임용과 부전공 연수교사,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법과 교원 수급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

정부에서 우선 고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고자 지난해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일시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이나 기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급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토록 했음.

■ 질문7 : 대명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 보령시 소재 대명중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학생교육 활동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건물안전 진단결과 다시 D등급으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함.

2002년도에는 현 학교 부지에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 중 각종 법규에 저촉되어 증·개축 추진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 그 해결 방안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융자를 통한 학교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융자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전사업 이외의 부족시설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향후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보령시에 위치한 대명중학교는 학교법인 대명학원에서 1996년에 보령시 명천동에 2만897㎡의 이전부지를 마련하고 학교이전을 추진을 했음.

그러나 시공회사의 부도 등으로 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며, 건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어 현 학교부지에 교실 증·개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 학교 부지에는 도시계획법상 시설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대명학원에서는 할 수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현 학교 부지를 담보로 하고 재정융자를 받아 이전부지에 기본시설인 교실 15실, 관리실 5실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학교 이전에는 기본 시설 이외에 부대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음. 따라서 법인측에서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시설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대명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림.

14. 송중빈 의원(논산시, 민주당)

■ 질문1 :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방안

· 공무원의 부정비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공무원들의 사고의 문제, 보수문제, 그리고 민원인들의 유혹 등 사회적·제도적 요인과 함께 무엇보다도 같은 시·군, 같은 부서에서 장기 근속함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 등 제 요인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인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2000년도에는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이 53명이고, 시·군에서 도 전입은 54명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도에서 시 군으로 전출이 26명이고, 시·군에서 도 전입은 24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도와 시·군은 4급이상 부시장·부군수의 교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시·군간의 교류는 전무한 현실임.

이에 따라 도 본청 6~7급 승진 인사는 심한 침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4급 이상 간부들만 승진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하위직의 사기진작 대책 마련과 5급이상 간부들에 대한 도와 시·군간의 활발한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자치단체가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확대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음. 다만, 시 군과 도가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인사교류에 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군과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봄.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도지사의 설득 노력, 또 시·군과 교류가 도 행정과 시·군 행정을 위해서 모두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보직과 승진 적체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된 하위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시킨다든지 또는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질문2 : 산림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 산은 우리에게 목재를 공급해 주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을 막아 주고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해 주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맑은 물을 얻게 해주는 등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이 더욱 크다고 하겠음.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근본이념이 되어 왔듯이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귀중함에는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임. 우리 충남은 국유림 2만3,711ha, 공유림 2만1,555ha, 사유림 39만8,227ha등 총 44만3,493ha의 산림의 상태를 보면 지사님의 노력에 의하여 녹화는 그런대로 되었습니다만,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리끼다소나무, 잡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산림의 자원화 측면에서 볼 때에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앞으로 경제수로 수종 갱신을 함으로써, 산지를 자원화 하여 미래의 훌륭한 목재를 생산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공익적 기능도 아울러 제고시킴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조림계획은 없으신지 지사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도지사 심대평 〕

· 그 동안 도에서는 '73년도에 제1차 치산녹화 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27만 6,000ha의 조림을 실시한 바 있으며, '80년대 말까지는 헐벗은 산의 녹화위주로 조림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리끼다 소나무 등 조기녹화 수종 위주로 식재를 하였음. 그렇지만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이 시작된 지난 '88년부터 경제수 위주의 조림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낮은 수종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음.

올해에도 1,433ha의 임야에 잣나무, 고로쇠, 참죽나무, 밤나무 등 12종에 모두 322만1,000본의 경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음.

앞으로, 산지 자원화를 위해서 우리 도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경제성과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수 조림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현재 산림조림과 관련해서 토양에 대한 특성을 지구별로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함께 하면서 어떤 수종이 어느 지역에 가장 적합한 수종인지도 검토 계획해 나가고 있음.

■ 질문3 : 도내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현황과 보존 대책

· 도내에는 202건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325건의 도지정 문화재, 그리고 290건의 문화재 자료 등 총 817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외에 650여건의 비지정 문화재가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개인 및 사찰, 문중 등에 많은 비지정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자치문화국장 유상곤 〕

· 비지정 문화재관리는 특별히 보존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적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별도로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금년도에는 보수가 시급한 비지정 문화재의 유적을 중심으로 6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비지정 문화재의 지정 문화재로 승격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문화재적 가치가 크면서 보수 정비가 시급하거나 고증이 재확인된 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4 : 농어촌학교의 양호교사 미배치에 대한 대책

· 도내에는 현재 631개교의 초등학교에 321명이고, 중학교는 131개교 중 29명이며, 고등학교는 69개교 중 34명으로 총 831개교 중 384개교에만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 미배치된 학교중 일부 학교는 교과 담당교사가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농어촌 학교에 대한 보건행정이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음. 우선 미배치된 초등학교만이라도 양호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농어촌 보건소와 면 지역 소재 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정기검진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양호교사가 미배치된 108개 초등학교와 137개 중·고등학교는 이미 배치된 이웃학교의 양호교사를 학교별로 순회근무하도록 하고, 양호업무를 담당한 초·중등교사의 연수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보건교육에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음.

한편,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진료원의 지원을 받아 학교보건 위생관리 양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의 유대를 하고 있음.

앞으로, 양호교사의 정원을 증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T/O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더 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최대로 건의를 하고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을 쓰겠음.

■ 질문5 :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방안

·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학습량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도·농간 학력 차를 더욱 벌려 놓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하교 후 PC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있어 농어촌학교의 황폐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도·농간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학교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방과후 취미클럽육성, 스터디그룹, 각종 자격시험 대비 등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낙후되고 소외된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발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농어촌 거점학교를 운영해서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초 기본학력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학교 근무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책임지도제를 이용해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지도를 한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특히, 2004학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고입전형시에 선발고사를 내신과 병행을 해서 도입하기로 한 것도 바로 어떻게 하면 농어촌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따른 시책임을 말씀을 드림.

의원님께서 농어촌 학교의 학력신장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방과후 취미클럽 육성과 스터디그룹 조직 운영, 각종 자격시험 대비 등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학교현장에서 특별활동 시간과 특기·적성교육·학교재량 활동 시간 등을 통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

■ 질문6 : 올바른 인성교육 실시 방안

· 교육의 근본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있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은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성숙을 위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올바르게 확립시켜 주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핵가족과 더불어 적게 낳아서 풍요롭게 길러 보자는 생각으로 과보호된 어린이들이 이기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사람됨됨이 교육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임.

이러한 교육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 우리 교육은 지적인 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나 바르게 사는 방법,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임.

이에 따라 무너져 가는 가정과 학교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운 심성과 바른 지식을 심어 주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효행심이 깊어지고 자주적인 생활태도를 갖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교육감 강복환 〕

· 저는 취임이후 백행의 근본인 효를 바탕으로 사랑·공경·믿음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온정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오고 있음.

특히, 「부모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정성과 바른 예법을 다하여 어른을 섬깁시다.」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을 다 합시다」등 효 실천 3대 다짐을 정하여 효도의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음.

효를 머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장학자료 활용, 효 실천 우수학교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가슴으로 느끼게 하기 위하여 효 소식지 발간, 시범학교 운영, 효도휴가 운영, 효 백일장 등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실천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부모 직업을 체험하고, 내 고장 효행 유적지 체험활동을 시키고, 효자·효녀 발굴 표창 등을 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도 효 교육은 실천위주로, 학교·가정·사회의 연계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 실천 확산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음.

第40節 第160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160회 임시회는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문규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會期 : 2002. 4. 2(화) ~ 4. 12(금), 11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02. 4. 2(화) 11: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16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수) 10:00	운 영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11:00	행 자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문화국소관) 2.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00	교 사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여성정책관실소관)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00	농 경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림수산국소관)	
11:00	건 소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4. 4(목) 11:00	행 자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정보실소관) 2.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환경국소관)	
11:00	농 경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11:00	건 소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방안전본부소관)	
4. 5(금)		의 정 자 료 수 집	
4. 6(토)		의 정 자 료 수 집	
4. 7(일)		공 휴 일	
4. 8(월) 11:00	행 자 위	1.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소관)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교 사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청양대학소관)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사위소관)	
11:00	농 경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경제통상국소관) 2.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 3.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건 소 위	1. 의정자료수집	
4. 9(화) 11:00	행 자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무원교육원소관)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룡출장소소관)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자위소관)	
	교 사 위	1. 의정자료수집	
11:00	농 경 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경위소관)	
11:00	건 소 위	1.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4. 10(수) 11:00	예결특위 (제 1 차)	1.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도본청소관)	
4. 11(목) 11:00	예결특위 (제 2 차)	1.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도본청소관)	
4. 12(금) 11:00	본 회 의 (제 2 차)	1. 2001회계연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안 6.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 1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충청남도지방중소기업청」설치건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9		
조례안	8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산안	1	1.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2	1.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자매결연체결안 2.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건의안	1	1.「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 건의안	
기 타	7	1. 5분발언 신청(강태봉・한창숙의원) 2. 제160회 충청남도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2002년도 제1회 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5분발언 신청(송중빈의원) 7.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Ⅱ. 議會 活動

1. 本會議

○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2002. 4. 2, 11:00)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심대평 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정순평(천안), 이진환(천안), 윤석우(공주), 이준우(보령), 강태봉(아산), 이복구(서산), 송중빈(논산), 강화섭(연기), 유병기(부여), 박영조(서천), 우지명(청양), 전용설(홍성), 김중한(예산), 최경섭(태안), 정용해(당진), 송민구(비례), 김동선(비례)

○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2002. 4. 12, 11:00) 2001년도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안을 심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안과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7건,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 자매결연협정체결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1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구 분	성 명	연 령	비 고
도 의 원	우 지 명	59	청양군, 교육사회위원회
〃	한 소 환	60	연기군, 교육사회위원회
〃	송 영 철	42	논산시, 농수산경제위원회
공인회계사	유 용 철	31	공인회계사
〃	상 신 규	36	〃
세 무 사	한 상 기	40	세 무 사
〃	박 삼 현	35	〃
전직공무원	김 남 작	64	전 세정과장
〃	우 영 일	61	전 공무원교육원 교수

2. 委員會 活動

○ 조례안 처리내역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77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2. 3. 22)	행자위	○주민감사청구제의 감사청구연서 주민수가 과다 책정되어 그 활용실적이 미미하여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를 완화함.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이상" 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 로 변경함.	2002. 4. 12	2002. 4. 12	원안
378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안	도 지 사 (02. 3. 22)	행자위	○미래의 첨단문화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산업을 지난해 10월 열린 사이버 게임체전을 계기로 우리도의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회사명칭은 정관으로 정함. -도의 출자방법은 현금으로 하고, 그 한도는 설립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증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 가능토록 함.	2002. 4. 12	2002. 4. 12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사이버게임체전사업 등 사업의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79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02. 3. 22)	행자위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행정영역에 대한 주민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됨과 동시 쟁송사건이 급증하여 소송내용이 복잡 다양해지고,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고등법원 전속관할제도 폐지로 행정소송 및 2심소송 관할법원이 대전지역에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쟁송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여 법무법인 변호사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위촉범위를 확대 -행정자문과 소송을 통해 습득한 행정경험을 충분히 도정업무에 접목이 가능하도록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위임가능	2002. 4. 12	2002. 4. 12	원안
380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02. 3. 22)	행자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6천 미만의 동을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이상의 읍과 인구5만이상의 동의 의원을 증원(선거구 구분)하는 등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2002. 4. 12	2002. 4. 12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시에서 행정구역 개편(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에 따라 선거구 명칭을 변경함.			
381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도 지 사 (02. 3. 22)	행자위	○도지사가 관리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시장, 군수에게 완전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되어 ○위임된 사항을 도조례에 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002. 4. 12	2002. 4. 12	원안
38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2. 3. 22)	건소위	○현장 활동능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연령정년제를 신설하며, 부상자의 요양보상 등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작업복 색상을 변경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2002. 4. 12	2002. 4. 12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연령 정년제를 신설, 대장(지역대장 포함) 65세, 대원 63세로 규정함. -대장임기 제한규정을 대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연임토록 변경함. -정당한 사유없이 연 4회이상 교육·훈련에 불참시 해임조항 신설함. -요양보상, 장애보상 등 재해보상비와 장애등급 기준을 현실화함. -대원 작업복 색상을 국방색에서 연한 회색으로 변경함.			
385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2. 3. 30)	행자위	ㅇ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토요일휴무제 도입) ㅇ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연가 수혜범위 확대)함.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2002. 4. 12	2002. 4. 12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당해년도 금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 토록 함.			
386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지 사 (02. 3. 30)	농경위	○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조정하며,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구성원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부위원장을 기획정보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상향 조정함	2002. 4. 12	2002. 4. 12	원안

○ 동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84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 자매결연체결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2. 3. 22.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회부(의결)일	2002. 3.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2. 4. 12)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2. 4. 12.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 파트너의 확보와 동북아·미주 위주의 국제교류를 유럽지역으로 확대 증진하고

○ Euro貨 출범 등 유럽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되어 통상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방차원의 교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 지난 2000. 12. 11. 우리도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관계발전 분위기가 성숙된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 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함

□ 주요내용

○ 자매결연체결 장소와 시기는

-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맞추어 개최되는 해외교류협력 자치단체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스테판 미코와이착」주지사와 2002. 4. 26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체결할 예정이며

○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내용은

- 투자 및 통상, 원예 및 농업기술, 보건 및 사회복지, 환경보호, 문화 및 교육, 관광 및 스포츠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자매결연 협정서 문안은 양 지역간 협의를 거쳐 실무안을 작성하여, 비엘코폴스카주는 폴란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도는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음.(협정서안 별첨)

자 매 결 연 협 정 서

충청남도지사가 대표하는 충청남도와 비엘코폴스카주지사가 대표하는 비엘코폴스카주(이하 "양 도·주" 라 한다)는

- 지역간의 국제협력을 양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 현재까지 진행된 양 지역의 교류 결과를 존중하고,
- 양 도·주 교류에서 평등 및 상호 교류원칙을 인정하면서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양 도·주는 상호협력이 양측의 동일한 공공 행정적 지원 아래 이해 관계자들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양 지역 발전에 있어 효과적이고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

제 2 조

1. 양 도·주는 다음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가. 무역교류 증진 및 상호 투자실현 지원 등 경제분야
   나. 농업 및 원예분야의 경험교환 및 기술이전
   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라. 환경보호분야의 경험교환 및 전문가교류
   마. 공동문화사업 조직, 대학간의 협력, 실습생 및 학생교환 등 문화 및 교육분야
   바. 관광활동지원 및 청소년·스포츠교류 등 관광 및 스포츠 분야
2. 양 도·주는 자국내 법규를 준수하며 협력증진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1. 충청남도 및 비엘코폴스카주 정부의 해당 부서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력분야를 실현 시키기 위해 공동사업을 기획한다.
2. 제2조 1항에 관련한 업무조정을 위해 양 지역의 해당 부서는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
3. 제1항과 관련된 해당 부서는 공동 기획사업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제 4 조

본 협정서에 규정된 사업실천과 관련하여 양측은 각각의 국내법규를 준수한다.

제 5 조

본 협정서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된 모든 분쟁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한다.

제 6 조

본 협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조

본 협정서는 무기한 유효하다. 다만 협정의 파기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8 조

본 협정서는 모두 동일한 효력의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작성하여 2002. 4. 26. 충청남도에서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폴란드공화국 비엘코폴스카주
지사 심 대 평	지사 스테판 미코와이착

의안번호 387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 안 (제출) 일 자		2002. 3. 30.
위원회 심 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의결)일	2002. 4. 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2. 4. 12)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2. 4. 12.
이 송 기 관		충청남도지사

□ 제안이유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2002년도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 관리계획 내역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 종류	사 업 명 (재산명)	위 치	필 지 (동수)	수량 (㎡)	가 액 (천원)	비고
취득	건물	소 계		2동	2,521	2,533,333	
		①홍성소방서 신축	· 홍성 홍성 구룡	1	1,652	1,500,000	일반 회계
		②남부장애인 복지관 증축	· 공주 계룡 기산	1	869	1,033,333	
처분	토지	소 계		29	225,869	2,528,240	
		①충남대연구시설용지매각	· 청양 정산 학암	25	211,897	356,755	일반 회계
		②구가축위생시험소매각	· 대전 중구 문화동	1	6,094	2,148,135	
		③불용 잡종 재산매각	· 태안 소원 법산 (원북면 방갈리)	3	7,878	23,350	
	건물	소 계		17	2,696.24	316,993	
		①구가축위생시험소매각	· 대전 중구 문화동	16	779.58	50,578	
		②구여성회관 매각	· 대전 중구 은행동	1	1,916.66	266,415	
	임목	③구가축위생시험소 임목 매각	· 대전 중구 문화동		65주	3,360	

○ 건의안 처리내역

의안번호 388

「충남지방중소기업청」 설치 건의안

□ 처리개요

제 안 (제출) 자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제 안 (제출) 일 자		2002. 4. 9.
위원회 심 사	소 관 위 원 회	
	회부(의결)일	
	심 사 결 과	
본회의 의 결	회 차 (일자)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2. 4. 12)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02. 4. 12.
이 송 기 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 제안이유

○ '98. 8월 중소기업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되면서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폐지되어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바

○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뜻을 모아 강력하게 붙임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충남지방중소기업청』 설치 건의안

충남지역 4,735 제조업체중 약 63%인 2,988개 업체가 도내 서북부지역에 입주 가동중에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고속전철 역세권 신도시 개발 등 서북부 지역은 서해안 개발의 중핵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98년 중소기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이 폐지되어 현재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담 지원할 행정조직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중소기업인들은 행정서비스면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대신하고는 있으나 정책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현장 밀착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자금·기술·창업·판로 등 지역중소 기업인 들의 불편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지방중소기업청 설치를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도 중요하지만 현장 밀착형 지원업무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지역기업인들의 여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히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002년 4월 12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Ⅲ. 5分 發言 要旨

1. 강태봉 의원(아산시, 자민련)

■ 온양 민속박물관 운영비 지원 장단기 대책

· 충남의 유일한 온양민속박물관이 경영난으로 휴관하여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차에 금년 3월 5일 개관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운영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함.

그동안 우리 도는 인본행정 구현의 기치아래 도민의 정신적 안정은 물론, 충청인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충효의 얼을 다시 일구는데 많은 정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2001년도 제82회 전국체전의 역사적인 우승과 더불어 2002년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은 우리 충남의 위상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제고된 위상을 바탕 삼아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로서, 서해안 관광휴양지 개발과 내륙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및 3대 명산인 계룡산을 관광벨트화 하는 것이 산업화와 더불어 도민이 잘살 수 있는 시급한 관광사업이라고 판단함.

온양 민속박물관에 대한 재 개관과 향후 운영은 관광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장기적 과제로 다루어야 하는데, 모 기업부도 이후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여론에 떠밀려 개관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23명의 종사원 중 6명을 감원한 구조조정과, 도와 아산시가 2002년도에 각각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치면 이후 또다시 경영압박과 휴관으로 이어질 것이며, 타지역 이전이 다시 검토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박물관이란 단순한 전시물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유물에 대한 간단없는 연구활동과 더불어 끊임없는 시설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단순한 일회성 지원만으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후세들에게 민족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본질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양민속박물관이 당장의 경영압박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인원감축을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문화재적 가치보존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단편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점에서 충남의 대표적인 온양민속박물관의 장·단기적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시설비 일부의 지원으로 충절과 효의고장 충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민속박물관에 대한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관광인프라 구축차원의 온양민속박물관의 장·단기적 활성화 방안과 도민의 대표 박물관에 걸맞는 교육적, 문화적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2. 한창숙 의원(비례대표, 자민련)

■ 여성국 설치 관련

· 21세기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시대이며, 정보화 사회의 대두와 개인중시 경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인바,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부를 지난 2001년도에 신설하였음.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업무 담당부서는 1998년 8월 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여성환경국내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복지와 여성교육 업무를 담당, 추진하여 왔고 정책기획정보실내 정책담당관실에서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충청남도의 사업소로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1999년 구조조정시 도의 여성회관은 폐지되었고 여성복지과와 정책담당관실의 여성정책담당이 통합되어 여성업무 전담조직으로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관실로 승격되었으며 여성부서의 독립과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의 승격은 여성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둔 매우 고무적인 일로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100만 충남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긍심과 희망을 준 조치였다고 생각함.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복지 증진,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서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운영, 충남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시행, 충남여성헌장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2001년에는 도정 역점시책의 하나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하여 충남여성포럼 발족 운영, 국제 여성정책 심포지엄 개최, 여성자치대학 등을 운영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복지시설 운영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여성 보호와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지원 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

현재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정책관을 주축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할 뿐만아니라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부서의 확대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임.

현재 과 단위인 여성정책관실을 여성국으로 승격시키고 2~3개 과를 설치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성업무 추진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2천만 여성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전국 제일의 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성국을 설치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함.

3. 송중빈 의원(논산시, 민주당)

■ 계백장군묘 성역화 사업 관련

· 논산시는 옛부터 군사적 요충지로서 주변에는 많은 군사유적지가 있으며, 현재에도 계룡에 3군본부를 비롯한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논산훈련소가 있어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논산지역의 군사유적지로는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개국의 정표로 창건했다는 개태사를 비롯하여 견훤왕릉이 소재하고 있고, 또한 전쟁사에 길이 빛낼 계백장군의 황산벌전투 유적지와 계백장군 묘소가 위치하며, 이 외에도 많은 군사유적지가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많은 군사유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근 이러한 역사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백제의 얼이 깃든 견훤왕릉과 계백장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유적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현재 계백장군묘소 성역화 및 군사박물관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적인 사업의 예산은 기 확보되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역내에는 사유지와 개인묘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성역화사업에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성역화 구역내 사유지 매입 사업비와 개인묘지 이장 추진사업비 지원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함. 또한, 군사박물관이 2003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한 체험장이 없어 체험장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도 함께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함.

특히, 계백장군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처와 자식을 죽이고 황산벌에서 오백의 군사로 오천의 신라군사를 세 번씩이나 물리쳤던 황산벌을 성역화시켜 주시고, 백제문화권 지역을 계룡지역 뿐만 아니라 논산을 백제문화권에 포함시켜 논산이 군사요충지로써 군사문화와 역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람. 또한, 군사문화 역사탐방 관광을 유도하고 강경 젓갈 축제와 딸기축제 등을 연계하여 지역행사를 이끌어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람.

第4章 第6代 議會 議政活動 決算

第1節 議 政 決 算
第2節 會 期 運 營
第3節 豫·決算 審議
第4節 案件 接受·處理
第5節 行政事務監査 實施結果
第6節 道政·敎育行政 質問
第7節 5分 發言 運營
第8節 請願·陳情等 民願處理
第9節 特別委員會 構成運營
第10節 議政硏鑽會 實施
第11節 議政活動의 國際交流
第12節 其他 特記事項

第4章 第6代 議會 議政活動 決算

第1節 議政 決算

□ 主要 議政活動 總括

<table>
<tr><th>區 分</th><th>成 果</th></tr>
<tr><td>회기운영</td><td>○ 총 40 회 480 일
○ 정기(정례)회 6 회 160 일
○ 임 시 회 34 회 320 일</td></tr>
<tr><td>안건처리</td><td>
<table>
<tr><th>계</th><th>조례안</th><th>예산·결산안</th><th>동의·승인안</th><th>건의·결의안</th><th>규칙안</th><th>기타</th></tr>
<tr><td>640건</td><td>286</td><td>38</td><td>31</td><td>26</td><td>6</td><td>253</td></tr>
</table>
</td></tr>
<tr><td>행정사무감사</td><td>○ 4회 40일간(4개 상임위), 99기관, 86사업장
○ 총 472건 조치요구(시정 120, 처리233, 건의 119)</td></tr>
<tr><td>도정·교육 행정질문</td><td>○ 12회 82명(21일간)
○ 총 556건의 정책 질문</td></tr>
<tr><td>5分 발언</td><td>○ 20회 24명 실시</td></tr>
<tr><td>청원·진정 민원처리</td><td>○ 182건 접수, 처리완료(청원3, 진정179)</td></tr>
<tr><td>현장의정활동</td><td>○ 196일 361개소('98: 35일 91개소, '99: 60일 111개소, '00: 41일 65개소, '01: 49일 73개소, '02: 11일 21개소)</td></tr>
<tr><td>의장단·상임위원장회의</td><td>○ 48회('98: 10회, '99: 13회, '00: 9회, '01: 13회, '02: 3회)</td></tr>
<tr><td>당면의·도정 현안협의회</td><td>○ 28회('98: 3회, '99: 10회, '00: 6회, '01: 8회, '02: 1회)</td></tr>
<tr><td>의정 연찬회</td><td>○ 국내연수 : 13회, 24일 378명(의원182, 공무원196)
○ 국외연수 : 7회 21개국 72명(의원 50, 공무원 22)</td></tr>
</table>

第2節 會期 運營

1. 會期運營

계		회의유형별			회의체별	
회	일	정기회	정례회	임시회	본회의	위원회
40	480	2회 80일	4회 80일	34회 320일	114일	751일

2.本會議 및 常任委員會 開催

구 분	본회의	위 원 회						
		계	운영	행자	교사	농경	건소	특별
계	114일	751	51	198	166	161	127	48
1998년	17일	156	8	38	33	37	31	9
1999년	24일	190	13	54	44	38	32	9
2000년	33일	171	14	45	39	36	25	12
2001년	31일	186	12	48	41	39	31	15
2002년	9일	48	4	13	9	11	8	3

3. 現場 議政活動

(일수/개소수)

회 차	합 계	위 원 회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경제	건설소방	특 별
계	196 / 361	27 / 37	47 / 96	46 / 90	72 / 109	4 / 29
1998년	35 / 91	4 / 6	9 / 24	9 / 17	10 / 16	3 / 28
1999년	60 / 111	8 / 11	13 / 27	17 / 37	22 / 36	/
2000년	41 / 65	5 / 6	9 / 16	10 / 19	17 / 24	/
2001년	49 / 73	8 / 11	12 / 18	8 / 14	20 / 29	1 / 1
2002년	11 / 21	2 / 3	4 / 11	2 / 3	3 / 4	/

第3節 豫算·決算 審議

豫算 承認

〈道廳 所管〉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삭 감 율(%)	비 고
계	9,467,714	9,901	0.10	
1998 예산	1,360,248	500	0.04	
1999 예산	1,840,768	1,800	0.10	
2000 예산	1,946,312	3,389	0.17	
2001 예산	2,267,148	1,712	0.08	
2002 예산	2,053,238	2,500	0.12	

〈教育廳 所管〉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삭 감 율(%)	비 고
계	4,688,141	29,830	0.64	
1998 예산	800,354	-	-	
1999 예산	1,187,727	572	0.05	
2000 예산	1,291,711	24,613	1.91	
2001 예산	1,408,349	4,645	0.33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

〈道廳 所管〉

① 세입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입잉여금	의결일자
계	6,430,190	6,485,498	5,636,946	686,337	4회
'97회계년도	1,673,743	1,624,594	1,440,802	183,792	'98. 10. 28
'98회계년도	1,571,544	1,664,161	1,424,639	239,522	'99. 11. 3
'99회계년도	1,562,206	1,569,256	1,369,881	199,375	'00. 7. 4
'00회계년도	1,622,697	1,627,487	1,401,624	63,648	'01. 7. 4

②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26,343	33,699	32,496	304	87,652
'97회계년도	31,723	9,575	8,897	-	22,826
'98회계년도	79,441	14,868	14,868	-	64,605
'99회계년도	9,476	7,295	7,031	215	49
'00회계년도	5,703	1,961	1,700	89	172

〈教育廳 所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입잉여금	의결일자
계	4,035,347	4,156,157	3,782,782	373,375	4회
'97회계년도	946,705	960,726	905,582	55,144	'98. 10. 28
'98회계년도	909,054	965,089	875,785	89,304	'99. 11. 3
'99회계년도	1,015,208	1,066,158	973,561	92,597	'00. 7. 4
'00회계년도	1,164,380	1,164,184	1,027,854	136,330	'01. 7. 4

第4節 案件 接受 및 處理

〈總 括〉

(단위 : 건수)

구 분		접수				처리					
		계	의회	도지사	교육감	계	가결			폐기	철회
							소계	원안	수정		
계		640	317	258	65	640	635	572	63	4	1
예산·결산안		38	-	22	16	38	38	26	12	-	-
조례안	소 계	286	32	205	49	286	281	233	48	4	1
	제 정	68	7	50	11	68	66	48	18	2	-
	개 정	197	24	137	36	197	194	164	30	2	1
	폐 지	21	1	18	2	21	21	21	-	-	-
동의·승인안		31	1	30	-	31	31	29	2	-	-
건의·결의안		26	26	-	-	26	26	25	1	-	-
규 칙 안		6	6	-	-	6	6	6	-	-	-
기 타		253	252	1	-	253	253	253	-	-	-

〈年度別 案件 處理〉

구 분	계	예산·결산안	조례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규칙안	기타
계	640	38	286	31	26	6	253
1998년도	106	8	51	5	3	2	37
1999년도	136	9	65	6	1	1	54
2000년도	196	9	93	9	8	2	75
2001년도	160	11	59	7	12	1	70
2002년도	42	1	18	4	2	-	17

〈委員會別 案件 處理〉

구 분	계	예산·결산안	조례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규칙안	기타	비고
계	640	38	286	31	26	6	253	폐기4 철회1
의회운영위	27	-	18	1	2	6	-	
행정자치위	144	-	118	23	3	-	-	폐기2 철회1
교육사회위	89	-	85	1	3	-	-	
농수산경제	55	-	38	6	11	-	-	폐기2
건설소방위	30	-	27	-	2	-	1	
예결특위	39	38	-	-	1	-	-	
본회의	256	-	-	-	4	-	252	

第5節 行政事務監査 實施結果

〈監査概要〉

- ㅇ 실시회수 : 4회
- ㅇ 시 기 : 매년 정기(정례)회중 10일 이내
- ㅇ 대상기관 : 99개 부서(기관 포함)
- ㅇ 현지확인 : 86개소
- ㅇ 자료요구 : 4,248건('98: 1,089, '99: 951, '00: 1,086, '01: 1,122)
- ㅇ 증인출석 : 682명('98: 146, '99: 147 '00: 183, '01: 206)
- ㅇ 감사반편성 : 16반 223명(상임위원회별 4회)

〈監事結果〉

(단위 : 건)

구 분	계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경제	건설소방	비고
계	472	114	111	142	105	
시정요구	120	16	24	50	30	
처리요구	233	76	33	75	49	
건의사항	119	22	54	17	26	

〈措置結果〉

(단위 : 건)

구 분	계	완료	추진중	조치불가	장기검토
계	472	322	147	-	3
시정요구	120	86	33	-	1
처리요구	233	161	72	-	-
건의사항	119	75	42	-	2

第6節 道政 및 教育行政 質問現況

질 문 시 기				질 문 의 원
계	12회 21일 82명			
제123회 (임시회)	5명	제2차	'98. 9.21	박찬중, 전용설, 전영환, 임성규, 윤석우
제125회 (정기회)	6명	제2차	'98.12. 1	강화섭, 이한식, 임성규
		제3차	'98.12. 2	김문규, 김중한, 송민구
제127회 (임시회)	6명	제2차	'99. 3.24	전용설, 최경섭, 한창숙
		제3차	'99. 3.25	강창구, 심정수, 신호균
제131회 (임시회)	5명	제2차	'99. 9. 2	전용설, 전영환, 임성규
		제3차	'99. 9. 3	장준섭, 강화섭
제133회 (정기회)	8명	제2차	'99.12. 2	윤석우, 김중한, 한창숙, 박영조
		제3차	'99.12. 3	신호균, 이진환, 김동선, 심정수
제135회 (임시회)	3명	제2차	'00. 2.24	전용설, 박동윤, 임성규
제140회 (정례회)	3명	제2차	'00. 6.27	전용설, 이준우, 임성규
제144회 (정례회)	8명	제2차	'00.12. 1	윤석우, 한창숙, 박찬중, 강태봉,임성규
		제3차	'00.12. 2	최경섭, 이진환, 심정수
제146회 (임시회)	6명	제2차	'01. 2.22	전용설, 박영조, 임성규, 김동선, 정용해, 송영철
제151회 (정례회)	7명	제2차	'01. 6.29	윤석우, 전용설, 박찬중, 이준우
		제3차	'01. 6.30	강태봉, 한창숙, 최경섭
제156회 (정례회)	11명	제3차	'01.12. 3	손재탁, 박영조, 이준우, 강태봉, 박찬중, 윤석우
		제4차	'01.12. 4	정순평, 송중빈, 정선홍, 최경섭, 류병기
제159회 (임시회)	14명	제2차	'02. 3.12	강화섭, 송민구, 강영성, 전용설, 윤석우
		제3차	'02. 3.13	전영환, 박찬중, 강태봉, 송영철, 한소환
		제4차	'02. 3.14	심정수, 이복구, 신재원, 송중빈

第7節 5分發言 運營現況

연도별	5분 발언 운영현황				비고
	회기별	발언일자	발언의원	주요 내용	
1999년도 (4회 4명)	제129회 제 1 차	'99. 5.24	김 중 한 (예산군)	○제2차 구조조정 관련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 ○학교 통폐합 및 급식 관련	
	제130회 제 2 차	'99. 7.27	정 용 해 (당진군)	○뉴욕 및 구마모토사무소 운영 관련(인력 및 주거환경)	
	제132회 제 1 차	'99.10.20	박 찬 중 (금산군)	○대전·충남 재통합 관련 ○도금고 지정관련 농협의 서명 문제	
	제133회 제 2 차	'99.12. 2	임 성 규 (논산시)	○시·군 예산배정의 불합리 ○교육시책 홍보 관련	
2000년도 (6회 7명)	제134회 제 1 차	2000. 1.15	박 찬 중 (금산군)	○도금고 선정의 난맥상관련 책임행정 강화촉구	
	제141회 제 1 차	2000. 8.10	최 경 섭 (태안군)	○태안 해안국립공원구역 조정 관련	
	제142회 제 1 차	2000. 9.22	장 준 섭 (당진군)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편입 토지 보상대책 관련	
	〃	〃	박 찬 중 (금산군)	○도청이전 추진 전면백지화 및 대전·충남 재통합 촉구	
	제142회 제 2 차	2000.10. 6	임 성 규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벌곡 간이정류장 및 건양대학병원앞 간이정류장 설치 건의	
	제143회 제 1 차	2000.10.27	박 영 조 (서천군)	○자연사박물관 건립, 충남발전연구원 운영,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관련	
	제145회 제 2 차	2000.12.27	임 성 규 (논산시)	○논산축협식육유통센터 진입도로포장 및 시설자금 지원	

연도별	5분 발언 운영현황				비고
	회기별	발언일자	발언의원	주요 내용	
2001년도 (8회 10명)	제146회 제 1 차	2001. 2.12	이 한 식 (예산군)	○중소기업청 충남지방사무소 설치건의 ○학교 사회체육 육성 확대	
	제147회 제 1 차	2001. 3.14	이 한 식 (예산군)	○디지털 충남선언 관련 농어촌 및 노인대책 추진	
	〃	〃	정 용 해 (당진군)	○당진항 지정관련 건의 -항만시설물 이용, 항만의 경제적 효과 창출, 경기도 및 평택시와 추진비교 등	
	제147회 제 2 차	2001. 3.20	장 준 섭 (당진군)	○한보철강 분리매각 결정 관련 도지사의 대응촉구	
	제148회 제 1 차	2001. 4.18	박 찬 중 (금산군)	○홀대 받는 충청도 관련	
	제149회 제 1 차	2001. 5.10	강 태 봉 (아산시)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 지연에 따른 특별대책강구	
	제153회 제 1 차	2001. 8. 8	이 한 식 (예산군)	○도립의료원 운영 및 발전방향 관련	
	제154회 제 1 차	2001. 9.12	강 태 봉 (아산시)	○온양민속박물관 운영비 지원	
	〃	〃	박 찬 중 (금산군)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강구	
	제156회 제 5 차	2001.12.15	전 영 환 (서천군)	○장군단지 활성화 방안	
2002년도 (2회 3명)	제160회 제 1 차	2002. 4. 2	강 태 봉 (아산시)	○온양 민속박물관 운영비 지원 장단기 대책	
	〃	〃	한 창 숙 (비례대표)	○여성국 설치 관련	
	제160회 제 2 차	2002. 4.12	송 중 빈 (논산시)	○계백장군묘 성역화사업 관련	

第8節 請願 및 陳情等 民願處理

〈請願書 處理現況〉

구분 / 위원회	접수	처리						처리방안		
		소계	본회의		위원회 처리	철회	계류	의회 처리	도지사 처리	타기관 이송
			채택	불채택						
계	3	3			3			2		1
의회운영										
행정자치										
교육사회	2	2			2			2		
농수경제	1	1			1					1
건설소방										
기 타										

〈陳情書 處理現況〉

(단위 : 건수)

구분 / 위원회	접수	처리					처리중
		소계	처리	이첩	불수리	폐기	
합 계	179	179	165	9	5	-	-
의회운영위	-	-	-	-	-	-	-
행정자치위	18	18	17	-	1	-	-
교육사회위	51	51	49	2	-	-	-
농수산경제위	50	50	49	1	-	-	-
건설소방위	40	40	32	6	2	-	-
기 타	20	20	18	-	2	-	-

第9節 特別委員會 構成運營

1 水害確認 및 復舊 支援 特別委員會

〈設置目的〉

○ 수해의 조속한 복구와 항구 방재대책 강구를 위한 의정활동 자료수집

○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 예산확보 및 지원건의 등 활동 전개

□ **구성시기** : 제122회 임시회('98. 8. 10)

□ **인　　원** : 9명(각 상임위원장 추천)

□ **활동기간** : '98. 8. 11 ~ 8. 31(21일간)

□ **활동대상** : 7개 시·군 수해우심지역
(천안, 아산,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활동방향**

○ 수해현황 파악 및 복구대책 점검

○ 수해복구 관련 중앙예산 지원활동

○ 피해주민 위로 및 복구관계 공무원 격려 등

□ **활동실적**

○ 현장점검 및 위문 ┌ 8. 11 ~ 8. 15(5일간)
└ 7개 시·군 28개소

○ 수해복구지원에 관한 건의안 채택, 각계 요로 건의

- 건의안 채택 : 제123회 임시회('98. 9. 15)
- 건의기관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농림부 등 9개 기관
- 건의내용 : 수해사망실종자 위로금 상향조정 등 8개항

2 2002安眠島國際꽃博覽會 支援 特別委員會

〈設置目的〉

-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얻어 개최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홍보사절단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중앙부처대상 예산확보 노력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 추진

□ **구성시기** : 제143회 임시회(2000. 10. 27)

□ **인 원** : 9명(각 상임위원장 추천)

□ **활동기간** : 2000. 10. 27 ~ 2002. 5. 19

□ **활동방향**

- 홍보사절단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꽃박람회 홍보
-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꽃박람회 관련 예산확보 노력
- 꽃박람회 관련 건의안 채택, 서한발송 등

□ **활동실적**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추진상황 보고청취(2000.11.20)
- 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작성(2000.11.20)
-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업무보고 청취(2001. 3.19)
- 2002꽃박람회지원특위 위원 해외시찰(2001. 4.29~5. 4)
  ⇒ 이탈리아, 독일 꽃박람회장 시찰 후 우수사례 도정시책에 반영
- 「꽃박지원특위」 시·도의회 순회홍보활동 전개(2002. 3.19~4. 2)
  ⇒ 입장권 판매(3천매, 24백만원), 팜프렛 및 포스터 배부 홍보실시
- 해외자매결연의회 꽃박람회 초청 안내 및 접견(남호주주, 구마모토현)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회 수	운영기간	인원	주요 처리안건
계 17회	44일간	293명	
제122회 임시회	'98. 8.11 ~ 8.12 (2일간)	17명	1998년 제2회 도청 추경예산
제124회 임시회	'98.10.21 ~ 10.22 (2일간)	17명	1997년 결산심사(도청,교육청)
제125회 정기회	'98.12.10 ~ 12.15 (5일간)	17명	1999년 본예산(도청, 교육청) 1998년 제3회 추경예산(도청) 1998년 제2회 추경예산(교육청)
제129회 임시회	'99. 6. 2 ~ 6. 4 (3일간)	17명	1999년 제1회 추경예산(도청,교육청)
제132회 임시회	'99.10.27 ~ 10.29 (2일간)	17명	1998년 결산심사(도청,교육청)
제133회 정기회	'99.12.11 ~ 12.15 (4일간)	17명	2000년 본예산(도청, 교육청) 1999년 제2회 추경예산(도청,교육청)
제139회 임시회	'00. 6.13 ~ 6.15 (2일간)	17명	2000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
제140회 정례회	'00. 7. 1 ~ 7. 3 (2일간)	17명	1999년 결산심사(도청,교육청)
제142회 임시회	'00.10. 2 ~ 10. 4 (2일간)	17명	2000년 제1회 도청 추경예산
제144회 정례회	'00.12.12 ~ 12.15 (4일간)	17명	2001년 본예산(도청, 교육청) 2000년 제2회 추경예산(도청,교육청)
제148회 임시회	'01. 4.24 ~ 4.25 (2일간)	17명	2001년 제1회 도청 추경예산
제150회 임시회	'01. 6.13 ~ 6.14 (2일간)	17명	2001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
제151회 정례회	'01. 7. 2 ~ 7. 3 (2일간)	18명	2000년 결산심사(도청,교육청)
제154회 임시회	'01. 9.17 ~ 9.18 (2일간)	18명	2001년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
제155회 임시회	'01.10.29 ~ 10.30 (2일간)	17명	2001년 제2회 도청 추경예산
제156회 정례회	'01.12.11 ~ 12.14 (4일간)	18명	2002년 본예산(도청, 교육청) 2001년 제3회 추경예산(도청,교육청)
제160회 임시회	'02. 4.10 ~ 4.11 (2일간)	18명	2002년 제1회 도청 추경예산

第10節 議政研鑽會 實施

〈國內研修〉

일시 · 방법	장소 · 인원	주 제	강 사
계 13 회	378명		
'98. 9. 9 ~9. 10 (한국지방 자치학회)	천안상록리조트 50명 (의원35, 공무원15)	예산결산심사기법 도시계획법 해설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사무감사 · 조사기법 건강관리기법 국악의 이해	국회사무처 신해룡 심의관 중앙대학교 이규환 교수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박사 충남국악단
'99. 10. 13 ~10. 15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강원낙산관광호텔 43명 (의원31, 공무원12)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대응 조례입안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지방예산심의및결산심사기법 미래정보화 사회의 전망 강원관광EXPO시찰(속초시)	중앙대학교 박 승 교수 법 제 처 조정찬 법제관 국회사무처 최민수 국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재성 한국정보문화 김정흠 박사
'99. 12. 17 ~12. 18 자 체	아산온양관광호텔 15명 (운영위원8, 공무원7)	의회운영활성화방안 토론	
'99. 12. 28 ~12. 29 자 체	유성고려파크호텔 30명 (농경위원9, 공무원21)	WTO 농산물협상전망 및 지역산업육성대책 토론	

일시 · 방법	장소 · 인원	주 제	강 사
2000. 10. 24 ~10. 25 (한국산업기술원)	경주교육문화회관 55명 (의원21, 공무원3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예산결산심사기법 건강관리 경주 세계문화EXPO 관람 꽃박람회 홍보활동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 국 회 연 수 국 김인철 교수 세브란스병원 정남식 박사
2000. 12. 18 ~12. 19 자 체	대천 한화콘도 18명 (운영위원, 공무원)	의회운영 활성화 방안토론	
2000. 7. 20 2000. 12. 20 ~12. 21 자 체	온양그랜드호텔 홍성화신프라자 25명 (행자위원, 공무원)	2000년 의정활동 평가 및 2001년 의정활동방향 모색 전국체전 동계훈련선수단 격려 소관업무연찬 및 의원입법 활성화 방안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토의	
2000. 12. 27 ~12 .28 자 체	유성스파피아호텔 36명 (농경위원, 공무원)	2000년 의정활동 상황과 2001년 의정활동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일시 · 방법	장소 · 인원	주 제	강 사
2001. 11. 13 ~11. 15 자 체	제 주 도 크라운프라자호텔 50명 (의원34, 공무원16)	행정사무감사 · 조사제도와 운영 지방의회의 예산 · 결산심의 사례 분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해설 산업 및 관광시설 시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주희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박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기영 지도과장
2001. 8. 1 2001. 12. 24 자 체	온양그랜드호텔 보령시천수만회관 20명 (행자위원, 공무원)	2001년도 의정활동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2002년도 의정활동방향 토론 의원입법 활성화방안 토론 및 사례중심 강의 청취 후반기 상임위활동계획 협의	
2001. 12. 17 자 체	농경위 회의실 36명 (농경위원, 공무원)	WTO 새로운 협상과 우리도 대응방안 쌀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방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대응방안	

〈國外研修〉

구 분	연수일정		인원	주 요 연 수 내 용
	기 간	방 문 국		
계	9회	27개국	89명 (의원64, 공무원25)	
행정자치 위 원 회	'99. 6.22 ~7. 6 (15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일본 (4개국)	13명 (의원9, 공무원4)	· 캘리포니아 주정부의회 방문 · 부차드가든과 국제꽃박람회 연계방안 · 벤프 자연자원 보호 및 개발 · 재해방지와 관광자원화 된 후버댐 등
교육사회 위 원 회	'99. 6.29 ~7.13 (15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일본 (4개국)	9명 (의원7, 공무원2)	· 벤쿠버 양로원 방문 · 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기념관 견학 · 워싱턴 몽고메리카운티의회, 하수처리장 방문 · 멕시코시티 초등학교 방문 · 동경 하까라가오까 소각장 방문
농수산경제 위 원 회	'99. 6.15 ~6.28 (14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일본 (4개국)	9명 (의원7, 공무원2)	· 뉴욕시의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 폴턴어 시장, 토론토 포도농장 방문 · 멕시코시티 농수산물 중앙시장 견학 · FARMERS MARKET 견학 · 구마모토 우봉원 관광농원 방문
건설소방 위 원 회	'99. 2.21 ~3. 3 (11일)	러시아, 스위스, 영국, 스페인, 프랑스(5개국)	8명 (의원5, 공무원3)	· 영국 리치먼드의회 방문 · 스위스 사르넨소방서 방문 · 러시아 교통시설 견학 · 프랑스 하수도시설 견학

구 분	연 수 일 정		인원	주 요 연 수 내 용
	기 간	방문국		
꽃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2001.4.29 ~5. 4 (6일)	이탈리아 제네바, 독일 포츠담 꽃박람회장 (2개국)	10명 (의원8, 공무원2)	· 꽃박람회 준비 및 운영상황 · 주민, 기관, 단체등의 박람회 참여 방안 · 시설물 배치 및 운영인력 배치상황 · 각종 이벤트 및 홍보유치 활동
교육사회 위 원 회	2001.5.21 ~5.25 (5일)	일본구마모토, 오이타현(1개국)	11명 (의원7, 의회2, 교육청2)	· 양도·현간 교류협력방안 협의 · 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교재 불채택 건의 · 교육행정 실태조사 및 복지시설 견학 · 선진 수질관리지역 및 시책 견학
의 회 대 표 단	'99.11.10 ~11.12 (3일)	일본구마모토현 (1개국)	13명 (의원10, 공무원 3)	· 県의회와 교류 · 県지사 예방 · 県전국체전 및 쓰레기소각시설 시찰 · 道사무소 방문
의 회 대 표 단	2000.10. 9 ~10.20 (12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5개국)	7명 (의원 5, 공무원 2)	· 영국 런던 리치몬드의회 및 파리 국회 방문 · 런던 및 파리 장애인 시설 · 독일 쓰레기 소각장 및 세계서적 박람회 관람
의 회 대 표 단	2001.12.7 ~12.13 (7일)	남호주주 애들레이드 (1개국)	9명 (의원6, 공무원3)	· 남호주 하원의장 예방 · 남호주 박물관, 모슨레익스 첨단 기술파크 방문 · 남호주주의회와 교류협정 체결 · BRL하디 포도주 회사, 州물여과 처리시설 방문 등

第11節 議政活動의 國際交流

325

〈趣　　旨〉

○ 21세기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자치단체 의회와 교류협력 추진, 선진 외국 의회제도 및 의정운영 사례 적극 도입
⇒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에 국제적 안목을 넓히는 계기 마련

1 日本國 구마모토縣

① 縣의원 道의회 방문교류

○ 기　간 : 1999. 8. 25(수) ~ 8.26(목)

○ 방문단 : 10명(의원 6, 수행공무원 4)
- 시마즈 유텐(島津勇典)　의장
- 야츠나미 치코(八浪知行)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
- 다케구치 히로키(竹口博己) 일한우호의원연맹 부회장
- 후나다 쵸쿠다이(船田直大) 건설위 부위원장
- 시노사기 데쓰오(篠崎鐵男) 일한우호의원연맹 감사
- 시로시다 코우사쿠(城下廣作) 농정위 의원
- 쿠사카베 다츠로(日下部龍郎) 의회사무국 국민체육대책특위담당
- 토모오카 히로우키(塘岡弘幸) 의장비서
- 나카야마 히로우미(中山廣海) 국제과 교류추진 담당
- 韓相姬 국제과 촉탁(통역)

○ 일　정
- 8. 25(수) 의장 주최 만찬(유성호텔)
- 8. 26(목) 의회방문 교류방안 협의, 기념사진 촬영, 본회의장 방문, 도지사 예방

② 道의원 縣방문 교류

○ 기　간 : 1999. 11. 10(수) ~ 11.12(금)

○ 방문단 : 13명(의원 10, 수행공무원 3)

- 의장 이종수, 의회운영위원장 최경섭, 행정자치위원장 윤석우, 교육사회위원장 이준우, 농수산경제위원장 강창구, 강영성·김중한·전영환 ·강화섭 ·이진환 의원(간사)
- 총무담당관 이사영외 수행원 2명

○ 일 정

- 11.10(수) 구마모토(熊本)성 시찰, 縣의회 초청만찬
  ※ 시바즈유텐(島津勇典) 의장등 縣의원 11명
  시오따니 요시코(潮谷義子) 縣부지사 및 縣의회공무원 8명
- 11.11(목) 후쿠시마 죠지 縣지사 예방, 縣의회방문 및 교류방안 협의, 縣지사 초청 오찬, 水前寺공원·縣종합경기장·동부환경공장 시찰
- 11.12(금) 기쿠치(菊池城)시찰, ※ 백제와 연관

③ 전국체전 개회식 방문 縣의원과 교류

○ 일　시 : 2001. 10. 8(월)

○ 방문자 : 6명(縣의원 1, 부지사, 縣공무원 4)

- 쿠로다 부이치로(黑田武一郎) 부지사
- 다께구찌 히로끼(竹口博己) 의원
- 후루타 카쓰토(古田勝人) 생활환경부장
- 하시모토 히로유키(橋本博之) 국제과장보좌
- 야마나미 타모쯔(山並保) 비서과 주간
- 韓相姬 국제과 촉탁(통역)

○ 일 정

- 의장 예방 교류방안등 협의
- 의장초청 만찬(유성호텔 금잔디홀)

④ 縣의원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막식 참관연계 교류

○ 일　　시 : 2002. 4. 25(목)

○ 장　　소 :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등

○ 縣방문단 : 20명

〈縣의회〉 - 10명(의원 8, 수행원 2)

- 다까노 세이찌(高野誠一) 부의장
- 야츠나미 치코(八浪知行)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
- 다케구치 히로키(竹口博己) 일한우호의원연맹 부회장
- 시노자끼 데츠오(篠崎鐵男) 일한의원연맹 회원
- 코타니 쿠니하루(小谷邦治) 일한의원연맹 회원
- 이데 노부우(井手順雄) 일한의원연맹 회원
- 나까하라 다카히로(中原陸博)일한의원연맹 회원
- 카마다 사토로(鎌田聰) 일한의원연맹 회원
- 츠루모토 토시하키(鶴本敏章) 부의장 비서
- 히라타 히로히코(平田裕彦) 정무조사과 주간

〈縣知事部局〉 - 8명

- 코노 노부오(河野延夫) 출납장
- 오무라 유지(大村裕司) 출납장 비서
- 야수다 히로마사(安田廣正) 농정부장
- 미시마 카즈다카(三島和隆) 원예생산유통과장
- 다나까 데츠지(田中哲治) 국제과장 보좌
- 쿠보 신지(久保信治) 국제과 주간
- 요시무라 슈이치(吉村修一) 국제과 참사
- 韓相姬 국제과 촉탁(통역)

〈民間人〉 - 2명

- 메카다 토기오(米个田研男) 꽃박람회참가실행위원회 부회장
- 야노 수이치(矢野秀一) 經濟連 원예생산 부장

○ 일 정
- 박동윤 부의장 주최 오찬 및 교류(롯데오션캐슬 비너스홀)
- 꽃박람회 개막식 참관

⑤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구마모토Day 연계방문 縣의원과 교류

○ 일 시 : 2002. 5. 10(금)

○ 장 소 :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아이리스홀(2F)

○ 방문단 : 11명(의원 8, 수행공무원 3)
- 니스오까 까쓰나리(西岡勝成)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원
- 카와바타 토시오(河端俊夫)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원
- 하야시다 히로미치(林田博達)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원(간사장)
- 코수기 나오(小彬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원
- 바바 세이시(馬場成志)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원
- 쯔시야 토시아끼(土屋歲明)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원
- 히므로 유이치로(氷室雄一郎)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원
- 히라로 미도리(平野 みどり) 현의회 의원 ※ 女, 장애자
- 히라타 히로히코(平田裕彦) 정무조사과 주간
- 노리코시 유지꼬(乘越裕こ) 총무과 주임주사
- 미조쿠치 카요(溝口佳世) 平野의원 공무집행 보조자

○ 일 정
- 의장 초청 오찬 및 교류
- 온양민속박물관 시찰

2 러시아 이르쿠츠크州

① 州 부의장 의회방문

○ 일 시 : 2000. 10. 17(화)

○ 장　　소 : 의장실

○ 방 문 자 : 9명

- 『쉬시킨 세르게이』 이르쿠츠크州의회 부의장
- 『스미스노프 알렉산드로』 이르쿠츠크대학교 총장
- 『하마뜨지노프 라파엘』 同대학 국제교류과장
- 『보가토바 나탈리아』 同대학 시베리아센터 한국소장
- 이길주 배재대학교 연구교류처장 등 5명

○ 방문일정

- 의장 예방 및 교류방안 협의
  · 의장의 州방문시 환영의사 표명
  · 꽃박참가요청 및 도·주간 교류권장

3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州

① 州지사 및 하원의원 일행 道의회 방문

○ 일　시 : 2001. 4. 9(월), 4.10(화)

○ 장　소 : 道의회 의장실 및 온양그랜드호텔

○ 방문자 : 의장방문 6명, 의장초청 만찬 13명

- 카를로스 에드아드로 로비라(Carios Eduardo ROVIRA) 주지사 부부
- 로돌프 로드리게스(Sr. Rodolfo RODRIGVEZ)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 라모라 에디쓰 발렐주엘라(Sra. Ramora Edith VALENZVELA) 州하원의원(女)등

○ 일　정 : 의장방문 및 교류방안 협의, 의장 초청 만찬

○ 道 방문목적 : 자매결연의향서 협정 체결차

② 道의원 州의회 방문

○ 일 시 : 2001. 5. 28(월) 12:30~12:50

○ 장 소 : 주의회 의장실

○ 방문자 : 3명

- 도지사, 김문규 운영위원장, 박찬중 건설소방위원장

○ 내 용

- 세자르 라울 휴마다(Cesar Raul Humada) 하원의장에게 도의장 친서 전달.
- ※ 양 의회간 교류방안 협의희망, 2001 전국체전 및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초청
- 양 지역간 의회 차원의 교류증진 협의

○ 방문목적 : 도와 주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을 위한 도지사 방문시 동행

4 호주聯邦 남호주州

① 南호주 州의회 대표단 道의회 방문

○ 기 간 : 2001. 7. 16(월)~ 7.18(수)

○ 방문단 : 8명

- 존 오스왈드(John Oswald) 하원의장
- 폴 홀로웨이(Poul Holloway) 상원야당 원내 副당수
- 랄프 클라크(Ralph Clarke) 하원의원
- 데이비드 워튼(David Watton) 하원의원
- 머레이 드 레인(Murray De Laine) 하원야당 원내총무
- 피터 루이스(Peter Lewis) 하원의원
- 제프 미첼(Geof Mitchell) 하원행정관
- 정경옥(Kerry Lewis) 피터루이스의원 부인(비공식)

○ 일 정
- 교류협정의향서 체결, 의회방문 교류
- 도정현황 청취 및 도지사 예방
- 안면도 꽃박현장시찰, 수덕사, 국립공주박물관, 인삼종합전시장, 삼성전자 견학

② 道의회 대표단 州방문

○ 기 간 : 2001. 12. 19(월) ~ 12. 12(수)
○ 방 문 단 : 9명(의원 6, 공무원 3)
- 의장 김재봉, 의회운영위원장 김문규,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 특별위원장 강화섭,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송중빈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복구의원
- 총무담당관 홍용표, 수행 공무원 2명

○ 목 적
- 남호주주의회와 교류협정 체결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참가에 따른 의회차원의 지원요청
- 양 도·주간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협의

○ 주요일정
- 하원의장 및 남호주 총독 예방
- 남호주박물관, 모슨 레익스개발 첨단기술 파크
- 하원의장주최 만찬 및 교류협정체결
- 세계정보기술대회 브리핑 청취
- 남호주 연구개발원, BRL하디 포도주회사, 州해피밸리 물여과처리시설등 방문

③ 하원의장과 오찬 교류

○ 일 시 : 2002. 4. 2(수)
○ 장 소 : 롯데오션캐슬 양식당『뮤즈』
○ 참 석 : 의장 부부, 피터 루이스(Peter Lewis)하원의장 부부
○ 일 정 : 교류방안 논의(※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전시관 전시작업관련 來道)

第12節 其他 特記事項

1 道議會 發展 大討論會 開催

〈趣　旨〉

○ 지방의회 부활 10주년을 맞아 도의회의 10년간 운영상황을 뒤돌아보고 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부활 10주년 기념 도의회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함.

⇒ **각계의 폭넓은 참여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하여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상호 공감대 형성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마련**

〈大討論會 槪要〉

○ 때·곳 : 2001. 6. 8(금), 도청 대강당
○ 참　석 : 310명(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NGO대표, 공무원, 대학생 등)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 후　원 : 한국의회발전연구원, 대전·충남행정학회
○ 주요 내용
- 기조연설 : **오연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서울대 행정대학원장)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 사　　회 : **이승철**(한남대 기획조정처장)
- 주제발표 : **이준원**(공주대 교수)
  → **충청남도의회 10년의 성과와 반성**
  이창기(대전·충남행정학회장)
  → **주민이 본 지난 10년간의 도의회 평가**
  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파트너십 구축방안**
  김학민(순천향대 교수)
  → **충청남도의회의 장기발전 과제와 방향**
- 토　　론 : **안정선**(공주대 교수), **정순평**(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윤성국(중도일보 사회부장), **금홍섭**(대전참여연대 기획국장)

⇒ **토론내용을 주제발표 논문에 합본 배부하여 활용토록 조치**

2 議員 公務國外出張 등에 관한 條例制定 運營

〈制定趣旨〉

○ 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적합성, 출장국가·출장기간·출장경비 등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심의토록 함.

⇒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로 공무국외출장의 실효성 제고**

〈主要 骨子〉

○ 외국 중앙정부의 공식행사에 정식초청, 3개국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교류행사 출장,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등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제2조)

○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위하여 도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제4조)

○ 심의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적합성, 출장국가·기간·경비 등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5조)

○ 국외출장계획서는 출국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제8조)

○ 국외출장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제9조)

○ 국외출장시 안내공무원의 수는 최소한으로 하며, 안내공무원은 계획수립·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도록 함.(제11조)

○ 조례공포일 : 2001. 3. 30(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그동안 운영실적 : 2회 2건

3 「議會 硏究모임 構成 運營」 根據規程의 制定

〈趣　旨〉

○ 지방자치발전과 주요 관심사항 등에 대한 연구 및 아이디어 개발을 위하여 도의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발령(제29호, 11.10) 하여,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상 구현

⇒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활력화가 될 것으로 기대

〈主要 骨子〉

○ 명칭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 구성 : 도의원과 다음 각호 해당자(10인 내외)

-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 충청남도지사가 설립·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자
- 기타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연구대상분야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과제
- 특정사안이나 주요 관심사항 등 필요성이 있는 과제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관련 사항 제외

○ 활동범위 등

- 각종 형식이나 규정을 탈피, 자유로운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 연구결과물을 본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자료로 제공
  - 도의회에서 제기된 사항의 실천방안 모색
  -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토론·연구
  -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또는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議員 倫理綱領 및 實踐規範 마련

〈取旨 및 推進經過〉

○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 올바르고 참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자는 뜻이 담긴 의원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마련하여, '98. 12. 29, 제125회 정기회에서 의원전원 만장일치로 제정

⇒ **도민신뢰확보 및 민주지향적인 의정좌표 설정**

〈主要骨子〉

○ 의원윤리강령 - 총5개 강령

-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
-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의회풍토조성
- 직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배제 및 특정인 수혜금지
-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역발전을 구현하는데 노력

○ 의원실천규범 - 총12개 실천조항

- 윤리강령준수
- 직무관련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 직권남용금지
- 기밀누설, 사례금, 겸직금지
- 회피의무, 재산등록이행, 기부행위금지
- 회의출석의무 등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충청남도의회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민의수렴의 터전으로서 올바르고 참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항상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며 검소한 생활에 솔선한다.

3. 우리는 의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4.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거나 특정인의 수혜를 위한 알선 등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항상 연구·노력하는 자세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구현하는데 온 힘을 모은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사생활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공무상의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련규정이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산등록)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의 제공이나 허례허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와 공무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선거구 활동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나 활동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범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　　錄

第1節　忠淸南道 現況

第2節　第7代 道議員 現況

충청남도 도민헌장

우리 충청남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인심이 온후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꼽혀왔다.

찬란한 백제문화와 충절의 정신이 깃든 충청남도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충청남도 도민임을 긍지로 여긴다.

1. 우리는 성실과 근면 봉사를 생활화 한다.

1.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로 돕고 함께 일한다.

1. 우리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보호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창조정신으로 세계와 미래를 개척해 나아간다.

충남의 5大 정신

충남정신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새겨 보는 일과 같습니다.

조상의 사상속에 배어 내려오는 충남정신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마음속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신이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충 효 정 신

1. 절 의 정 신

1. 선 비 정 신

1. 예 의 정 신

1. 개 척 정 신

충남을 대표하는 상징들

1. C·I·P

○ 심벌마크



'충남' 의 한글 첫글자인 ㅊ·ㄴ과 영문의 이니셜 C·N을 조합하여 시각화하였으며 자연·인간·미래가 함께하는 진취적인 충남과 21세기를 향해 도약하는 충남인을 상징



금강과 서해바다의 풍요



계룡산과 깨끗한 자연환경



21세기를 향해 도약하는 충남인

○ 마스코트 : 귀도리 (KWIDORI)



[21세기에 충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고 착실히 추진하는 귀한 거북]의
이미지를 표현

2. 새·나무·꽃



새 : 원앙새

기품있고 화목한 금실좋은 부부애는 충남인의 장점인 화합을 상징



나무 : 능수버들

은유 자적하며 편협하지 않고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격조 높은 충남인의 성격 표현



꽃 : 국화

은근과 꾸밈새가 없는 강인하고 소박한 모습은 굳센 지조와 고고한 성품을 자랑으로 여기는 충남인의 모습 표현

第1節 忠淸南道 現況

연 대	연 혁
1896. 8. 4	○ 전국을 8도제에서 13도제로 개편 충청남도 설치
1932. 10. 1	○ 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1938. 10. 1	○ 논산군 논산면, 서천군 장항면을 읍 승격 설치(1부 14군 6읍)
1940. 11. 1	○ 예산군 예산면을 읍 승격 설치(1부 14군 7읍)
1941. 10. 1	○ 아산군 온양면, 홍성군 홍성면을 읍 승격 설치(1부 14군 9읍)
1949. 8. 15	○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대전부를 대전시로 개칭 (1시 14군, 11읍, 161면)
1960. 1. 1	○ 부여군 부여면을 읍 승격 설치(1시 14군 12읍 161면)
1963. 1. 1	○ 전북 금산군을 충남에 편입 ○ 논산군 연무면을 읍 승격 설치 ○ 천안군 천안읍을 천안시로 승격 설치(2시 15군 15읍 164면)
1973. 7. 1	○ 예산군 삽교면, 당진군 합덕면, 서산군 태안면, 천원군 성환면을 읍 승격 설치
1979. 5. 1	○ 서천군 서천면, 청양군 청양면을 읍 승격 설치 (2시 2구 15군 23읍 156면)
1980. 12. 1	○ 서산군 안면면을 읍 승격 설치(2시 2구 15군 24읍 155면)
1985. 10. 1	○ 천안군 성거면을 읍 승격 설치(2시 2구 15군 24읍 153면)
1986. 1. 1	○ 공주, 대천, 온양읍을 시로 승격 설치
1989. 1. 1	○ 대전시와 대덕군을 대전직할시로 승격 분리 ○ 서산읍을 시로 승격 설치 ○ 서산군에서 분리 태안군 설치
1990. 2. 2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
1995. 1. 1	○ 공주시·군, 대천시·보령군, 온양시·아산군, 서산시·군등 8시군을 4개 시로 통합(5시, 11군)
1995. 5. 10	○ 천안시·군을 천안시로 통합(5시, 10군)
1996. 3. 1	○ 논산군을 시로 승격(6시 9군 1출장소 22읍 147면 42동)
2002. 1. 1	○ 천안시의 직산면과 목산면을 읍으로 승격(6시 9군 1출장소 24읍, 145면, 37동)

1 自 然 與 件

1. 위 치

남한의 서부에 위치하여 북쪽은 동북부 일부가 경기도의 평택시, 안성군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충청북도의 진천·청원·옥천의 각 군과 남쪽은 전라북도의 완주·익산·옥구의 각 군과 각각 접경하고 서쪽은 황해에 면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 위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도상으로는 북위 35° 58′ 에서 37° 03′ 간을 차지하는 약 2° 에 걸치고 경도상으로는 동경 125° 32′ 에서 127° 38′ 간을 차지하며 약 2° 를 차지하나 본 도의 대부분이 역시 동경 126° 30′ 에서 127° 30′ 의 약 1° 간에 포함된다.

서울 동부를 통과하는 동경 127° 자오선(子午線)은 대략 본도의 중앙부를 관통하고, 남한의 표준시 자오선 127° 30′ 은 대전광역시 동쪽 근방을 지나고 있다.

도청소재지인 대전광역시는 북위 36° 16′ 동경(東經) 127° 16′ 지점에 자리잡고 대전광역시와 위도(緯度)가 비슷한 지역은 우리도의 부여, 경상북도의 의성 등이고, 일본의 송본(松本), 중국본토의 청도와 란주, 중동지방의 알레프, 유럽남단의 지부랄타르 등도 대체로 대전광역시와 비슷한 위도상에 자리잡고 있다.

충 남 의 위 치

소 재 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 명	극 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동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북위 36° 01′ 47″ 동경 127° 38′ 31″	동서간 187.7㎞
	서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북위 36° 36′ 37″ 동경 125° 32′ 21″	남북간 120.8㎞
	남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북위 35° 58′ 30″ 동경 127° 29′ 15″	
	북단	당진군 석문면 난지리	북위 37° 03′ 44″ 동경 126° 25′ 46″	

2. 지 형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어느지역으로든 갈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한 동고서저의 지형 지세로서 해발 100m이하의 평야와 구릉지가 전체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산으로는 서대산(904m), 계룡산(845m), 대둔산(878m)등이 있다.

큰 하천으로는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 등이 있으며, 금강주변과 하천중심으로 평야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길이는 953km이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가로림만·천수만 등 만이 잘 발달되어 있다.

3. 기 후

가. 기후의 변동

대체로 온화하나 전체적으로는 대륙성 기후이다.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을 만한 지형적 장애물이 적어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보다 추우며, 서북부 해안지대는 적설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나. 기 온

우리도는 대륙성 기후로 1월 평균 기온이 도서지방이 -1℃, 내륙지방이 -3℃이며, 8월 평균 기온은 도서지방이 24℃, 내륙지방이 26℃로서, 도서지방과 내륙지방의 기온의 차는 2℃이다.

1년 쾌청일수는 60~70일이며, 북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일조일수는 58~60%로 해안지방이 200~220일이며, 내륙지방은 180~200일이다.

다. 강수량

강우량도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해안의 도서지방(연 강우량 800㎜)을 제외하면 1,150㎜~1,350㎜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많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금강유역과 태안반도 지방이 가장 많다.

1년 강우일수는 해안지방이 약 90일이며, 내륙지방이 약 110일인데 7월에 많고 1월에 가장 적다.

2 人口 및 家口

2001년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1,928,088명(남 970,476, 여 957,612)으로 전국 48,289,173의 4%를 차지하며, 1997말의 1,919,308명보다 0.45%(8,780) 증가하였다.

인구 분포면에서 보면 시지역 인구는 1,196,189명으로 전체인구의 62.1%를 차지하고 군지역은 731,899명으로 37.9%를 차지하며,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총세대는 653,610세대로 전국 16,080,992세대의 4.06%를 차지하고 1997년 도내 600,344세대 보다 8.8%(53,266세대) 증가하였다. 계속적인 세대증가 원인은 핵가족화와 직장 및 취학등에 따른 단독세대의 증가로 보이며, 세대당 인구는 2.9명이다.

연도별 도내인구 및 세대현황

구 분	인 구 (명)			세 대 수 (세 대)
	계	남	여	
'92	1,872,095	938,873	933,222	511,843
'93	1,875,911	932,962	924,949	524,727
'94	1,844,692	926,294	918,398	533,852
'95	1,855,346	931,357	923,989	552,450
'96	1,878,130	943,668	934,462	575,236
'97	1,903,171	956,875	946,296	600,344
'98	1,919,308	965,689	953,619	614,309
'99	1,926,243	969,985	956,258	626,723
'00	1,930,234	971,691	958,543	641,499
'01	1,928,088	970,476	957,612	653,610

시·군별 인구 및 세대현황

(단위 : 세대, 명, %)

구분 / 시군별	세 대	인구			인구증가율 (전년대비)	인구밀도 (명/㎢)	세대당인구 (명)
		계	남	여			
계	653,610	1,928,088	970,476	957,612	△0.1%	224.3	2.9
천 안 시	146,412	436,708	220,628	216,080	2.7	686.2	3.0
공 주 시	44,785	134,383	67,450	66,933	△1.1	142.8	3.0
보 령 시	39,281	116,546	58,992	57,554	△1.8	205.2	3.0
아 산 시	65,226	188,372	95,637	92,735	1.4	347.4	2.9
서 산 시	49,906	150,504	76,011	74,493	0.1	203.5	3.0
논 산 시	48,229	140,793	70,479	70,314	△1.4	253.8	2.9
계룡출장소	9,097	28,883	14,298	14,585	4.7	475.9	3.2
금 산 군	22,556	63,345	32,184	31,161	△2.2	110.0	2.8
연 기 군	27,638	81,821	41,341	40,480	1.2	226.3	3.0
부 여 군	31,419	90,587	45,196	45,391	△2.4	145.1	2.9
서 천 군	26,123	72,903	36,165	36,738	△3.3	203.8	2.8
청 양 군	13,997	40,086	20,090	19,996	△2.5	83.6	2.9
홍 성 군	31,577	93,790	46,781	47,009	△1.9	211.5	3.0
예 산 군	33,628	100,602	50,361	50,241	△1.1	185.2	3.0
태 안 군	23,586	67,947	34,097	33,850	△1.2	134.6	2.9
당 진 군	40,150	120,818	60,766	60,052	△1.6	181.9	3.0

자료 : 기획관실(2001. 12. 31)

3 行 政 區 域

충청남도는 상고시대에는 마한땅이었으나 삼국시대 백제의 중심지로써 왕도가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에서 185년간 찬란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구주중 웅주(공주)에 속하고 후삼국시대에는 후백제, 고려시대에는 하남도(河南道)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때에 충청도(忠淸道)라 불리다가 고종 33년 1895년 8월 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37개 군을 둔「충청남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후, 1932년 10월 도청 소재지를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였고, 1963년 1월 전북 금산군이 충남에 편입되었고, 천안읍이 시로 승격, 1986년 1월 공주·대천·온양읍이 시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1월에는 대전시와 대덕군이 통합하여 대전직할시로 승격·분리되고 서산군에서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 승격됨으로써 모두 5시 15군을 두게 되었다.

1995년 1월에는 공주·보령·아산·서산시가 5월에는 천안시가 기존의 승격·분리되었던 시군을 다시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로 발족하였고 1996년 3월에는 논산군이 시로 승격되었다.

2002년 1월에는 천안시의 직산면과 목천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현재 6시, 9군, 1출장소, 24읍, 145면, 37동을 두고 있다.

행정구역 현황

구분 / 시군별	읍·면·동				읍·면 출장소	법정 동·리	행정리·통		자연 부락	반
	계	읍	면	동			리	통		
계	206	24	145	37	2	2,221	4,399	853	9,984	22,882
천안시	25	4	8	13		178	384	404	540	3,765
공주시	17	1	10	6		209	279	110	966	1,925
보령시	16	1	10	5	2	111	234	97	700	1,130
아산시	17	1	10	6		162	335	111	593	1,923
서산시	15	1	9	5		139	258	81	658	1,489
논산시	15	2	11	2		185	409	50	1,033	2,286
계룡출장소	1		1			15	64		67	341
금산군	10	1	9			106	249		474	1,112
연기군	8	1	7			106	203		305	982
부여군	16	1	15			191	429		858	1,666
서천군	13	2	11			172	315		631	1,284
청양군	10	1	9			115	182		501	763
홍성군	11	2	9			141	333		622	939
예산군	12	2	10			177	297		790	1,172
태안군	8	2	6			65	178		585	792
당진군	12	2	10			149	250		661	1,313

자료 : 자치행정과(2002. 3. 1현재)

시·군별 면적 현황

구분 / 시군별	계	전	구성비	답	구성비	과수원	구성비	임야	구성비	대	구성비	기타	구성비
계	8,597.20	832.04	9.7	1,847.16	21.5	57.44	0.6	4,507.55	52.4	211.40	2.5	1,141.61	13.3
천안시	636.43	62.00	9.7	111.43	17.5	17.07	2.7	333.43	52.4	24.27	3.8	88.23	13.9
공주시	940.81	62.72	6.7	120.19	12.8	1.44	0.2	660.35	70.2	17.61	1.8	78.5	8.3
보령시	567.97	44.77	7.9	107.98	19.0	1.15	0.2	339.45	59.8	13.31	2.3	61.31	10.8
아산시	542.29	62.31	11.5	140.87	26.0	8.66	1.6	223.68	41.2	17.14	3.2	89.63	16.5
서산시	739.46	79.31	10.7	200.49	27.1	0.42	0.1	315.97	42.7	13.44	1.8	129.83	17.6
논산시	554.82	57.70	10.4	155.77	28.1	3.39	0.6	242.42	43.7	19.77	3.5	75.77	13.7
계룡출장소	60.69	4.16	6.9	6.40	10.5	0.07	0.1	40.88	67.4	1.99	3.3	7.19	11.8
금산군	575.98	52.00	9.0	59.47	10.3	2.35	0.4	409.32	71.1	8.13	1.4	44.71	7.7
연기군	361.53	33.20	9.2	62.93	17.4	4.99	1.4	197.96	54.8	9.67	2.7	52.78	14.5
부여군	624.51	47.19	7.6	152.66	24.4	0.86	0.1	322.62	51.7	15.26	2.4	85.92	13.8
서천군	357.75	33.52	9.4	108.97	30.4	0.26	0.1	150.10	42.0	11.60	3.2	53.30	14.9
청양군	479.57	35.90	7.5	73.76	15.4	0.34	0.1	320.28	66.8	8.16	1.7	41.13	8.5
홍성군	443.55	61.96	14.0	103.27	23.3	3.15	0.7	207.10	46.7	12.81	2.9	55.26	12.4
예산군	543.09	60.02	11.1	128.64	23.7	11.64	2.1	253.09	46.6	14.68	2.7	75.02	13.8
태안군	504.62	63.98	12.7	108.82	21.5	0.18	0.1	243.28	48.2	8.14	1.6	80.22	15.9
당진군	664.13	71.30	10.8	205.51	30.9	1.47	0.2	247.62	37.3	15.42	2.3	122.81	18.5

자료 : 지적과　　주) 구성비는 해당지역 전체의 점유비임

4 年度別 財政規模 現況

(단위 : 억원)

연도별	합 계			도			시·군		
	계	일 반	특 별	계	일 반	특 별	계	일 반	특 별
1958	12	11	1	9	8	1	3	3	
1960	18	15	3	13	11	2	5	4	1
1965	34	32	2	16	16		18	16	2
1970	147	130	17	52	50	2	95	80	15
1975	476	410	66	171	159	12	305	251	54
1980	2,119	1,830	289	826	760	66	1,293	1,070	223
1985	5,194	4,080	1,114	1,805	1,597	208	3,389	2,483	906
1990	1조5,304	1조 116	5,188	5,352	3,856	1,496	9,952	6,260	3,692
1995	3조6,000	2조7,734	8,266	1조3,796	1조 617	3,179	2조2,204	1조7,117	5,087
1996	3조5,482	2조7,206	8,276	1조3,129	1조 23	3,106	2조2,353	1조7,183	5,170
1997	4조2,795	3조1,798	1조 997	1조6,737	1조1,958	4,779	2조6,058	1조9,840	6,218
1998	4조2,243	3조2,857	9,386	1조5,715	1조2,679	3,036	2조6,528	2조 178	6,350
1999	4조2,370	3조3,453	8,917	1조6,812	1조3,280	3,532	2조5,558	2조 173	5,385
2000	4조6,441	3조6,056	1조 385	1조7,400	1조3,583	3,817	2조9,041	2조2,473	6,568
2001	5조6,354	4조5,061	1조 1,293	2조 997	1조6,557	4,440	3조5,357	2조8,504	6,853

주 요 통 계

(2001.12.31현재)

항 목 별			단 위	실적(내용)		증감율 (%)	비 고
				2000	2001		
일반행정	1. 인 구 수		천명	1,930	1,928	△0.1	
	2. 세 대 수		천세대	642	654	1.9	
	3. 면 적		㎢	8,586.4	8,597.2	0.1	
	4. 경제활동인구		천명	918	919	0.5	
	5. 공 무 원 수		명	13,894	13,587	△2.2	
	6. 공무원1인당인구		명	139	142	2.2	
	7. 산업별 취업 구조	농림어업	%	35.3	33.2	△2.1p	
		광 공 업	%	14.6	14.9	0.3p	
		사회간접,기타	%	50.1	51.9	1.8p	
지방행정	8. 예산총규모(도+시군)		억원	41,448	46,170	11.4	
	9. 재정자립도		%	30.5	30.5	-	
	10. 지방세징수		억	6,340	8,022	26.5	
	11. 1인당지방세부담		천원	330	350	6.0	
	12. 세외수입(도)		억원	1,971	2,231	13.2	
	13. 주택보급율		%	96.2	96.9	0.7p	
	14. 상수도보급율		%	51.0	54.6	3.6p	
	15. 1인1일당급수량		ℓ	319	349	9.4	
	16. 자동차등록		천대	489	527	7.8	
	17. 학 교 수		개소	1,375	1,414	2.8	
문화	18. 문화재	국 가	점	196	196	0.0	
		도	점	312	321	2.9	
		자 료	점	283	286	1.1	
	19. 전화가입자		천대	823	848	3.0	

항 목 별			단 위	실적(내용)		증감율 (%)	비 고
				2000	2001		
복지	20. 의 료 기 관		개소	1,701	1,787	5.1	
	21. 의 사 1인 당 인 구		명	746	737	△1.2	
	22. 사 회 복 지 시 설		개소	58	58	-	
	23. 생 활 보 호 대 상 자		천명	93	87	△6.5	
	24. 의 료 인		명	8,542	8,786	2.9	
	25. 의약품제조·판매소		개소	1,398	1,408	0.7	
	26. 공 중 위 생 업 소		개소	8,404	8,505	1.2	
	27. 식 품 위 생 업 소		개소	38,018	39,276	3.3	
	28. 간 이 급 수	시 설 수	개소	652	748	14.7	
		인 구	명	139.419	152,700	9.5	
	29. 청 소 년 수 련 시 설		개소	27	30	11.1	
생활환경	30. 생활쓰레기발생량		t/일	1,601	1,656	3.4	
	31. 교 통 사 고 발 생		건	13,830	19,328	39.8	
	32. 교 통 사 고 사 망 자		명	1,024	947	△7.2	
	33. 쓰레기 처 리	배 출 량	t/일	1,601	1,656	3.4	
		수 거 량	t/일	1,601	1,656	3.4	
		수 거 율	%	100	100	-	
농림수산	34. 경 지 정 리 율		%	89.8	91.0	1.2p	
	35. 수 리 안 전 답 율		%	77.0	77.2	0.2p	
	36. 쌀 생 산 량		정곡(천t)	935	955	2.1	
	37. 농어민후계자육성		명	12,564	12,828	2.1	
	38. 농 어 촌 진 흥 기 금		억원	159	160	0.6	
	39. 농 업 가 구		가구	179,550	-	-	
	40. 농 업 인 구		명	538,718	-	-	

항 목 별			단 위	실적(내용)		증감율 (%)	비 고
				2000	2001		
농림수산	41. 경 지 면 적		ha	256,838	255,082	△0.7	
	42. 추곡수매실적		천석	1,067	2,375	122.6	
	43. 어 업 가 구		가구	9,454	9,454	-	
	44. 어 업 인 구		명	27,600	27,600	-	
	45. 어선보유척수		척	6,643	6,643	-	
	46. 어선보유톤수		톤	19,666	19,666	-	
	47. 산 림 면 적		ha	444,443	442,887	△0.4	
지역경제	48. 수 출 실 적		백만$	17,030	11,646	△31.3	
	49. 공업(산업)단지		개소	89	90	1.1	
	50. 농 공 단 지		개소	58	60	3.4	
	51. 관 광 객 수		천명	56,796	55,285	△2.7	
	52. 사 업 체 수		천개	119	119	0.0	
	53. 금 융 기 관 수		개소	144	148	2.8	
	54. 농공단지지정면적		천㎡	9,130	9,508	4.1	
	55. 주 차 장 수		개	9,703	11,633	19.9	
	56. 주 차 장 면 적		면수	174,004	187,037	19.9	
	57. 자 동 차 등 록		대	488,961	527,522	7.9	
지역개발	58. 도로포장율(전체)		%	73.3	71.0	△2.3p	
	59. 도로포장율(국도)		%	95.2	94.5	△0.7p	
	60. 도로포장율(지방도)		%	77.6	77.0	△0.6p	
	61. 도로포장율(시군도)		%	62.0	59.1	△0.9p	
	62. 도 로 연 장		㎞	6,351.1	6,330.1	△0.3	
	63. 하천개수율		%	73.7	75.4	1.7p	
	64. 도시계획면적		㎢	697	769	10.3	
	65. 도시공원	개 소	개	659	689	4.6	
		면 적	㎢	52.9	55.8	5.5	

歷代 道知事 名單

역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이 영 진 (李寧鎭)	'48. 10. 18~'51. 12. 17 (3년 3월)
2	진 헌 식 (陣憲植)	'51. 12. 17~'52. 8. 29 (9월)
3	성 낙 서 (成樂緖)	'52. 9. 9~'54. 9. 27 (2년 1월)
4	이 기 세 (李琦世)	'54. 9. 27~'56. 9. 24 (2년 1월)
5	민 병 기 (閔丙棋)	'56. 9. 24~'58. 6. 17 (1년 10월)
6	김 학 응 (金鶴應)	'58. 7. 29~'60. 4. 30 (1년 9월)
7	김 홍 식 (金弘植)	'60. 5. 2~'60. 10. 7 (6월)
8	김 양 현 (金亮鉉)	'60. 10. 7~'60. 12. 3 (2월)
9	이 기 세 (李琦世)	'61. 1. 5~'61. 5. 24 (4월)
10	윤 태 호 (尹泰皓)	'61. 5. 24~'63. 12. 17 (2년 7월)
11	노 명 우 (盧明愚)	'63. 12. 19~'66. 3. 19 (2년 3월)
12	김 의 창 (金義昌)	'66. 3. 19~'67. 10. 10 (1년 7월)
13	김 윤 환 (金玧煥)	'67. 10. 10~'71. 6. 12 (3년 8월)
14	민 유 동 (閔有東)	'61. 6. 12~'73. 10. 20 (2년 4월)
15	정 석 모 (鄭石謨)	'73. 10. 20~'73. 12. 10 (2월)
16	김 수 학 (金壽鶴)	'73. 12. 10~'74. 9. 2 (9월)
17	서 정 화 (徐廷和)	'74. 9. 2~'76. 1. 12 (1년 4월)
18	정 석 모 (鄭石謨)	'76. 1. 12~'78. 13. 11 (2년 8월)
19	손 수 익 (孫守益)	'78. 9. 11~'80. 4. 27 (1년 7월)
20	이 계 완 (李啓完)	'80. 4. 28~'82. 1. 4 (1년 8월)
21	유 홍 수 (柳興洙)	'82. 1. 5~'84. 3. 27 (2년 3월)
22	안 응 모 (安應模)	'84. 3. 28~'87. 1. 4 (2년 9월)
23	한 양 수 (韓陽洙)	'87. 1. 5~'88. 5. 19 (1년 4월)
24	심 대 평 (沈大平)	'88. 5. 20~'90. 12. 27 (2년 7월)
25	한 청 수 (韓淸洙)	'90. 12. 28~'92. 1. 8 (1년 1월)
26	이 종 국 (李鐘國)	'92. 1. 9~'92. 9. 17 (8월)
27	홍 선 기 (洪善基)	'92. 9. 18~'93. 3. 3 (6월)
28	이 동 우 (李東雨)	'93. 3. 4~'93. 12. 27 (7월)
29	박 태 권 (朴泰權)	'93. 12. 28~'94. 4. 11 (4월)
30	박 중 배 (朴重培)	'94. 4. 16~'95. 3. 29 (11월)
31	김 한 곤 (金漢坤)	'95. 3. 30~'95. 6. 30 (3월)
32	심 대 평 (沈大平)	'95. 7. 1~'98. 6. 30 (3년)
33	심 대 평 (沈大平)	'98. 7. 1~'02. 6. 30 (4년)
34	심 대 평 (沈大平)	'02. 7. 1~현재

第2節 第7代 道議員 現況

〈정 당 별〉

구분	합 계				지 역 구					비 례 대 표			
계	한나라	민주	자민련	무소속	소계	한나라	민주	자민련	무소속	소계	한나라	민주	자민련
36명	8	4	22	2	32	7	3	20	2	4	1	1	2

〈연령별 및 선수별〉

계	연 령 별					선 수 별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초 선	2선	3선	4선
36명	2	11	18	5		20	9	3	4

▶ 최고령 명귀진 의원 66세(태안군 제1선거구)
최연소 최민기 의원 37세(천안시 제1선거구)

〈학 력 별〉

계	초졸 이하	중 졸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 졸	대학원 졸
36명	5	3	7	5	11	5

주) 본 자료는 6·13 선거결과에 따른 통계임.

제7대 도의원 명단

선거구 (정 당)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주 요 경 력	전 화 번 호
천안 1 (한나라)	최 민 기 崔 民 基 / 65. 5. 10	구성동 273-34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천안市의회의원 (2~3대)	宅 563-5958 事 551-9989 H 011-421-2151
천안 2 (한나라)	엄 금 자 嚴 今 子 / 54. 4. 9	신부동 465-4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통일건국민족회 여성정책위원장	宅 551-7462 事 554-6255 H 011-449-3435
천안 3 (자민련)	김 문 규 金 文 圭 / 50. 9. 23	성환읍 성환리 449-48	• 도의원(4, 6대) • 도의회 운영위원장 (6대)	宅 581-2310 事 581-2415 H 017-421-4488
천안 4 (한나라)	정 종 학 鄭 鍾 學 / 54. 9. 1	쌍용2동 용암동아 벽산A 110-1002	• 천안고 천안동창회장 • ROTC 천안지회회장	宅 574-2857 H 011-409-0998
공주 1 (자민련)	송 민 구 宋 敏 求 / 57. 10. 3	탄천면 대학리 109-2	• 도의원(6대) • 자민련 공주연기 지구당 부위원장	宅 857-1999 事 855-5008 H 011-450-2008
공주 2 (자민련)	최 운 용 崔 運 鏞 / 48. 9. 25	공주시 봉황동 15	• 제2대 공주시의회 의원 • 공주시의회 의장 (3대)	宅 854-2042 事 853-6600 H 016-406-7001
보령 1 (자민련)	이 준 우 李 峻 雨 / 46. 7. 17	주포면 봉당리 234	• 보령시의회 의원 (초대) • 도의원(5 ~ 6대)	宅 932-7319 事 933-4518 H 011-899-7319

선거구 (정 당)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요 경 력	전 화 번 호
보령 2 (자민련)	오 찬 규 吳 瓚 圭 49. 3. 26	남포면 창동리 586-1	• 도의원(4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장	宅 933-8900 事 933-2662 H 011-9007-0373
아산 1 (자민련)	김 재 봉 金 載 鳳 39. 8. 14	풍기동 231 인정 프린스A 101-1305	• 도의원(4~6대) • 도의회 의장(6대)	宅 545-3488 H 011-422-3379
아산 2 (자민련)	강 태 봉 姜 泰 鳳 46. 2. 20	온천동 145-5	• 도의원(6대) • 정우새마을금고 이사장	宅 545-4885 事 542-8770 H 011-401-9844
서산 1 (자민련)	이 복 구 李 福 求 45. 10. 17	읍내동 212	• 도의원(4~6대) • 민주평통 자문위원 • 도의회 부의장(6대)	宅 665-2692 事 665-4469 H 011-401-9500
서산 2 (자민련)	차 성 남 車 聖 男 49. 7. 26	석림동 주공A 201-1202	• 서산교육청 관리과장 • 충청남도교육청 서기관	宅 667-2879 事 668-2057 H 011-9403-2058
논산 1 (자민련)	박 태 진 朴 台 鎭 44. 9. 30	부창2동 199-36	•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장 • 논산시 체육회 부회장	宅 732-1919 事 735-5577 H 016-406-3848
논산 2 (자민련)	송 영 철 宋 榮 哲 60. 5. 9	연무읍 동산리 기산ⓐ 101-1102	• 도의원(6대) • 계룡신도시 발전협의회 고문	宅 742-9971 事 741-6464 H 011-409-3930
금산 1 (민주당)	심 정 수 沈 貞 洙 52. 6. 1	금산읍 상리 306-8 삼호ⓐ 101-1406	• 도의원(6대) • 한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宅 752-0412 事 753-4905 H 011-451-0412

선거구 (정 당)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요 경 력	전 화 번 호
금산 2 (무소속)	유 태 식 兪 泰 植 47. 5. 12	복수면 곡남리 150-4	• 금산군의회의원 (3대) • 금산군체육회부회장	宅 752-8025 事 753-3106 H 011-424-8025
연기 1 (한나라)	유 환 준 兪 歡 浚 45. 10. 5	조치원읍 교리 261	• 충청남도 교육위원 (초대) • 충청남도 4-H후원회 이사	宅 865-7001 事 865-2243 H 016-401-0606
연기 2 (자민련)	임 상 전 林 相 田 43. 1. 17	금남면 축산리 31	• 연기군의회의원 (1,2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 회장	宅 866-7265 事 866-8855 H 011-452-7265
부여 1 (자민련)	조 길 연 趙 吉 衍 51. 9. 6	부여읍 구아리 374	• 도의원(4대) • 충남체육회 이사 • 부여군 개발위원회 위원장	宅 835-4212 事 834-6255 H 011-425-6255
부여 2 (자민련)	류 병 기 柳 炳 基 50. 1. 15	충화면 만지리 398	• 도의원(6대) •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자문위원장	宅 833-2775 事 832-7333 H 011-425-2775
서천1 (자민련)	전 영 환 全 英 煥 62. 8. 7	장항읍 창선리 611	• 도의원(6대) • 서천군 발전협의 회장	宅 956-8933 事 956-3800 H 011-550-6600
서천 2 (자민련)	박 영 조 朴 泳 祚 52. 10. 15	서천읍 군사리 563-19	• 도의원(6대) • 국회의원 보좌관	宅 952-2929 事 952-8003 H 011-455-8001
청양 1 (자민련)	정 선 흥 鄭 善 興 38. 10. 12	청양읍 읍내리 161	• 도의원(4~6대) • 도의회 부의장(5대)	宅 943-4747 H 016-412-2611

선거구 (정 당)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요 경 력	전 화 번 호
청양 2 (자민련)	유 영 호 劉 永 鎬 46. 10. 19	정산면 덕성리 17	• 충남발전협의회 지역부회장 • 정산농협장	宅 942-0545 H 011-9816-0545
홍성 1 (한나라)	이 종 건 李 鍾 乾 42. 5. 5	홍성읍 대교리 224-3	• 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홍성군 부군수	宅 (042)634-7069 事 634-1541 H 011-9808-7227
홍성 2 (한나라)	이 은 태 李 殷 泰 58. 12. 23	광천읍 신진리 511-3 우주ⓐ 1107	• 광천농협 감사 • 홍성문화원 이사	宅 641-5238 事 642-7762 H 011-432-5238
예산 1 (한나라)	이 용 면 李 鎔 勉 49. 11. 19	예산읍 주교리 122 연흥연립 B-206	• 예산농전 총동창회장 • 예산군 재향군인회 이사	宅 333-9296 H 011-719-9296
예산 2 (한나라)	김 기 영 金 奇 泳 54. 3. 5	삽교읍 목리 673	• 예산축협조합장 • 충청남도 도정평가 위원	宅 337-4848 事 338-0300 H 011-452-1699
태안 1 (한나라)	명 귀 진 明 貴 鎭 36. 6. 16	태안읍 평천리 683	• 귀문장학회장 • 새마을운동 태안군 지회장	宅 674-3276 事 675-6282 H 017-406-0031
태안 2 (자민련)	박 동 윤 朴 東 允 50. 3. 5	안면읍 승언리 1142	• 도의원(4~6대) • 도의회 부의장(6대)	宅 673-5158 事 673-3507 H 011-432-3501
당진 1 (자민련)	성 기 문 成 耆 文 47. 2. 16	당진읍 읍내리 172-4	• 당진군의회의원 (1~3대) • 당진군의회의장 (3대)	宅 355-2558 事 356-2556 H 018-453-2558

선거구 (정 당)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주 요 경 력	전 화 번 호
당진 2 (자민련)	정 용 해 鄭 龍 海 / 50. 7. 1	합덕읍 운산리 273-1	• 도의원(5~6대) • 당진군체육회부회장	宅 363-2776 事 362-2776 H 011-432-2776
比 例 (자민련)	조 남 계 趙 南 季 / 41. 8. 26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98	• 한국부인회충남 지부장 • 충청남도여성정책 개발원이사장	宅 833-8282 事 836-9898 H 011-428-0230
比 例 (자민련)	이 종 웅 李 鍾 雄 / 59. 4. 7	천안시 성정동 697-12	• 농업경영인충남도 연합회회장 • 충청남도지사 상담역	宅 576-5450 事 576-5450 H 011-9412-7449
比 例 (한나라)	이 제 남 李 濟 南 / 54. 1. 15	공주시 교동 115-2	• 한나라당 도지부 여성위원장 • 충남적십자사여성 봉사특별자문위원	宅 854-5555 事 856-5555 H 011-408-5295
比 例 (민주당)	홍 표 근 洪 杓 根 / 53. 12. 24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50	• 새천년민주당 도지부 여성특별위원장 • 한국주택관리학회 상임이사	宅 835-4285 事 835-4286 H 019-9419-1754

제7대의회 전반기 院구성 현황

의 장



서산1(자민련)
李 福 求
(1945. 10. 17)

제 1 부 의 장



보령1(자민련)
李 峻 雨
(1946. 7. 17)

제 2 부 의 장



당진2(자민련)
鄭 龍 海
(1950. 7. 1)

의회운영위원회



서천1(자민련)
全 英 燦
(1962. 8. 7)



보령2(자민련)
吳 瓚 圭
(1949. 3. 26)



천안3(자민련)
金 文 圭
(1950. 9. 23)



논산1(자민련)
朴 台 鎭
(1944. 9. 30)



천안2(한나라당)
嚴 今 子
(1954. 4. 9)



청양2(자민련)
劉 永 鎬
(1946. 10. 19)



홍성2(한나라당)
李 殷 泰
(1958. 12. 23)



비례대표(자민련)
趙 南 季
(1941. 8. 26)



서산2(자민련)
車 聖 男
(1949. 7. 26)

행정자치위원회



서천2(한나라)
朴 泳 祚
(1952. 10. 15)



논산1(자민련)
朴 台 鎭
(1944. 9. 30)



아산1(자민련)
金 載 鳳
(1939. 8. 14)



금산1(민주당)
沈 貞 洙
(1952. 6. 1)



보령2(자민련)
吳 瓚 圭
(1949. 3. 26)



비례대표(한나라당)
李 濟 南
(1954. 1. 15)



홍성1(한나라당)
李 鍾 乾
(1942. 5. 5)



당진2(자민련)
鄭 龍 海
(1950. 7. 1)



천안4(한나라당)
鄭 鍾 學
(1954. 9. 1)

교육사회위원회



부여2(자민련)
柳 炳 基
(1950. 1. 15)



서산2(자민련)
車 聖 男
(1949. 7. 26)



연기1(한나라당)
兪 歡 浚
(1945. 10. 5)



예산1(한나라당)
李 鎔 勉
(1949. 11. 19)



서천1(자민련)
全 英 燦
(1962. 8. 7)



청양1(자민련)
鄭 善 興
(1938. 10. 12)



비례대표(자민련)
趙 南 季
(1941. 8. 26)



천안1(한나라당)
崔 民 基
(1965. 5. 10)



공주2(자민련)
崔 運 鏞
(1948. 9. 25)

농수산경제위원회



공주1(자민련)
宋 敏 求
(1957. 10. 3)



청양2(자민련)
劉 永 鎬
(1946. 10. 19)



예산2(한나라당)
金 奇 泳
(1954. 3. 5)



천안3(자민련)
金 文 圭
(1950. 9. 23)



태안1(한나라당)
明 貴 鎭
(1936. 6. 16)



당진1(자민련)
成 善 文
(1947. 2. 16)



논산2(자민련)
宋 榮 哲
(1960. 5. 9)



비례대표(자민련)
李 鍾 雄
(1959. 4. 7)



보령1(자민련)
李 峻 雨
(1946. 7. 17)

건설소방위원회



아산2(자민련)
姜 泰 鳳
(1946. 2. 20)

홍성2(한나라당)
李 殷 泰
(1958. 12. 23)

태안2(자민련)
朴 東 允
(1950. 3. 5)

천안2(한나라당)
嚴 今 子
(1954. 4. 9)

금산2(무소속)
兪 泰 植
(1947. 5. 12)

연기2(자민련)
林 相 田
(1943. 1. 17)

부여1(자민련)
趙 吉 衍
(1951. 9. 6)

비례대표(민주당)
洪 杓 根
(1953. 12. 24)

위 원 장
간 사

第6代 議會

議 政 白 書

2002년 12월 일 인쇄
2002년 12월 일 발행

발 행 : 충 청 남 도 의 회
편 집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Tel. (042) 606-5045
디자인 · 인쇄 : 일 신 인 쇄 사
Tel. (042) 624-5995

CHUNG CHEONG NAM – DO
AM011810